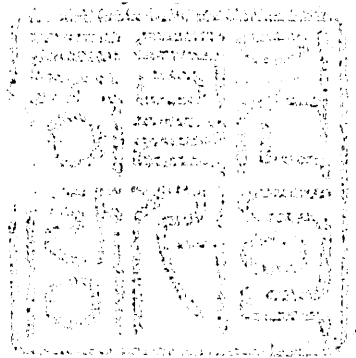


# 북한 · 통일관련 자료 모음집

(1996. 1. ~ 12.)



통일원 정보분석실

(조사관리과)



# 해 외 시 사 자 료



SAPIO

北韓 武裝難民 北·中 國境 脫出에서 본  
北韓崩壞 시나리오

落合信彦(정치평론가)

1996. 1.

본 자료는 일본의 時事 週刊誌 SAPIO  
(1/24-2/7일자)에 게재된 북한 군인의 중국  
으로의 집단 탈출 사건관련 보도 기사의  
전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北韓 武裝難民 北·中 國境 脫出에서 본 北韓崩壞 시나리오

북한은 심각한 식량위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대홍수까지 겹쳐 드디어 북한 대붕괴를 예고하는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즉, 무장한 북한 군인그룹 16명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 요녕성으로 망명했다는 심각한 정보가 북경으로 부터 날아왔다. 드디어 출현한 북한의 무장난민! 이것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북한 망명자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그리고 한국으로 결사적인 각오로 망명해 왔지만, 그 대부분은 농민, 학생 등 일반인들이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국가경제가 피폐한 상황에서 맨먼저 고통받는 사회 저변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사이에 정부의 관료, 군인 등 북한내에서 우대받던 사람들의 망명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의 무장 군인의 망명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현재 요녕성 丹東市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것도 중국의 정보에 의하면, 하층 병사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고급장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에 침입한 후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밤이 되는 것을 기다려 농가로 들어갔다. 놀란 농민이 당국에 통보하자 그들은 쏠살같이 도망쳤다. 하지만 지리에 어두운 나머지 불빛도 없는 마을을 정처없이 방황하다가 하나 둘 붙잡혀서 전부 16명이 연행되었다.

중국 당국에 발견되었을때 그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망명자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식량을

강탈하기 위해 북한병사가 중국영토에 침입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총격전이 있었고 그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더이상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조국을 버리고 만것이다.

이번에 연행된 사람은 16명인데, 그밖에 재빠르게 도망친 자도 상당하게 있었다고 하니, 실제로는 50명 이상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중국으로부터 이 망명극에 관해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파견된 3명의 담당관이 단동시를 방문하여 망명자들과의 면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 **북한 · 중국 국경 연변에서 거적 만들어 북한에 판매**

그러면, 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무장한 병사가 망명을 결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라고는 하지만, 군인은 대우 받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준전시체제이며 『남조선해방』을 내세운 남침을 국시로 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군인이 굶주림에 못이겨 “이젠 끝장이다”라고 하며 조국을 버린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드디어 군용 비축 식량마저도 바닥이 났다는 증거일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군인의 망명이 빈번한 것은 군부자체의 규율이 상당히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95년 10월에 지금까지

망명한 북한군 중에서도 최고위자인 상좌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도 있다. 이는 북한 군부내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악화일로에 있고 정부의 배급은 격감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벼뿌리까지 찾아다니는 상황으로 변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홍수로 집을 잃은 사람은 10만세대, 50만명에 달하는데 영하20도 가까이까지 내려가는 추위를 어떻게 견뎌나갈 것인가?

이러한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보다못한 중국은 최근에 인도적 원조로 면화 1,800톤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1,800톤만으로는 필요한 이불의 반도 만들지 못한다.

최근 북한에 접해있는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주민들은 짚으로 짠 거적을 북한에 내다 팔아서 큰벌이를 하고 있다. 짚으로 만든 거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 벗짚으로 거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북한에는 벗짚, 즉 벼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내에서는 당국에 의한 철저한 단속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쌀 500Kg이상을 훔친자는 즉각 사형에 처하고, 또한 지금까지 외화획득을 위해 관대하게 처리해왔던 매춘부는 초범이라도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고, 그 중의 반은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 **최후의 동맹국인 중국도 포기한 북한**

이러한 이웃나라의 참상에 대하여 최후의 동맹국인 중국의



자세도 최근 변화되고 있다. 예를들면, 내가 94년 5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취재했을 때 현지 사람들로 부터,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해 온 일가족 3명이 있었는데 어느날 북한에서 보내온 자들에 의해서 코를 꿰어 북한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당국은 동맹국에 대한 배려때문인지 보고도 못 본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도 이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망명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북한이 중국에 암살부대를 내보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스파이 소설같이 생각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 이상 망명자가 속출하여 국가의 규율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망명을 저지하는데 필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대의 국가주권의 침해이다.

이러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 북·중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중국군이나 공안당국으로 부터의 불만이 속출했다. 중국당국도 태도를 경화시켜 철저하게 조사를 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던 북한의 마약 운반트럭에 실린 마약은 홍콩에서 입국한 일본인 및 홍콩인 마피아를 거쳐 홍콩, 일본,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북한에 통고할 정도이다.

또한 95년 12월에는 중국의 당, 군부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남침을 감행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으로 부터의 난민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중국 국경경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당국의 공식견해로는 “북한은 동맹국”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본심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95년 11월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동지인 북한을 제쳐두고 한국을 공식방문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회견한 것에서도 알수있다. 중국이 귀찮은 북한보다는 돈이 있는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게는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평양방송은 “우리들은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북쪽에도 양가죽을 덮어쓴 늑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흘려보냈다. 북쪽이란 역시 중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일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측도 지금까지는 군부 원로들의 “혁명을 위해서 함께 싸워온 동지”라는 의견에 의해 친북한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 **북한 인민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

이제는 「최후의 동맹국」에게도 버림받고 궁지에 몰린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먼저, 북한 인민군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주목해야 될 것이다. 95년 10월말, 북한은 한국과의 군사경계선 부근에서 약 440대의 공군기를 동원한 동계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훈련이며, 이번에는 다소 규모가 큰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묘한 움직임이 있었다. 훈련을 실시한 미그17, 19등의 약 100대 정도가 군사경계선에서 40Km이내의 3개 기지에 착륙한 채로 잔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예년에 없었던 이상한 움직임이었다. 북한군은 이러한 배치전환에 의해 지금까지 한국의 서울에 진격하는데 8분 걸렸던 것을 6분으로 단축한 결과가 된다. 더구나 육군도 군사경계선 부근에 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포, 합계 140문을 증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것들은 궁지에 몰린 북한 군부는 언제라도 운을 하늘에 맡기고 남침을 감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있는 북한에는 무기를 보전하는 것도 어렵고 부품을 수입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한차례의 기습공격뿐이다. 이를 수행하기위해서 최단시간내에 서울로 진공하여 승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도 무기가 완전하게 쓸모없이 되기전에 앞으로 2-3년 사이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2-3개월인 이 겨울이 매우 위험하다. 식량난에다 연료부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술책도 없다. 민중의 불만이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꺼번에 진격한다는 시나리오도 결코 허망한 이야기는 아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은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등 정치적 혼란상태에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침밖에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의 가능성에 운명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무장난민의 출현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북한의 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인 것이다.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다면, 물론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가을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뉴욕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만났을 때, 양국 사이에 『핫라인』 개설이 논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만일 미국이 북한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손을 쓰지 않는다는 암묵의 양해가 있었다고 중국 정보기관이 나에게 전해 주었다.

## 북한 동해안에 배치된 30만척의 보트

그러한 경우에 이번 중국으로 탈출한 것과 같은 무장난민들이 일본으로 한꺼번에 밀려올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중국에서는 격증하는 북한으로부터의 越境者에 대해서 국경 연변의 군대를 증강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군사경계선을 뚫고 한국으로 도망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제일교포가 있는 일본을 목적지로 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 북한은 동해안에 실제로 25만에서 30만척에 이르는 10인승 보트를 대기하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긴박한 북한이 왜 그렇게 대량의 보트를 대기시키고 있는 것일까? 만일의 경우에 해로로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하면 1970년대 동해 해변에서 데이트하던 일본인 남녀가 북한 공작부대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몇차례나 있었다. 이것은 북한 공작부대원이 쉽게 일본 영해내로 침입하고 상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무장한 북한난민이 동해 연안부의 일본도시를 습격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확실하게 높아지고 있다.

SAPIO

# 南·北韓의 軍事的 危機 可能性

邊眞一(코리아리포트 편집장)

1996. 1.

본 자료는 일본의 時事 週刊誌 SAPIO  
(1/24-2/7일자)에 게재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예측한 기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남북한의 군사적 위기 가능성

'53년의 휴전 이래 43년간 38도선(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한 힘의 균형을 유지해 온 한국과 북한은 지금까지 긴장과 데탕트(긴장완화)가 교차되어 왔다. 대립과 대화가 시계의 진자처럼 흔들리며 기묘한 균형을 유지해 왔다.

실제로 2년전까지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북·미 대립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또한 남북 관계에서도 '95년말 대북 경수로 제공 합의과정에서 본 것 처럼 지난 해는 대화와 긴장이 교차하는 한 해였다.

'96년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가? 또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예측하기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북·미 간에는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라고 하는 밝은 일정표가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김영삼정권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남북한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뿐만 아니라 금년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긴장이 격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미 그러한 위험한 징후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측은 지난해 10월 북한군이 200여대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대규모훈련을 실시하고, 그 중에 미그 17,19, IL28 등 80여대를 원대 복귀시키지 않고 휴전선에서 30-40Km 떨어진 3개소에

전진 배치한 사실과 서울을 사정권내에 둔 240밀리방사포를 작년과 비교해서 50대 증강하고, 170밀리 곡사포도 360대에서 450대로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들어 한미연합정보감시체제를 평상시의 [데프콘 4(DEFCON:Defense Condition)]에서 전투준비체제인 『데프콘 3』로 올렸다. 또한, 주한 미공군정찰기 U2에 의한 24시간 정찰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측이 북한에 대해 이와같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9월말 동남아시아를 경유 한국에 망명한 북한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소속 최주활 상좌의 증언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주활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의 전쟁준비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김정일은 현재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인 곤란으로 야기된 혼란스러운 민심을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80년에는 [훈련소]라고 불리우는 [기계화군단]을 대폭 증강하고,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일대에는 한국침투를 목적으로 새로이 3개군단 병력을 편성했다”

“평양등 주요 도시에서도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경보병 병력을 동원한 방공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부대에서는 훈련의 60-70% 이상이 야간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군사력의 70%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전진배치되어 있다.”

“전쟁 발발은 기아로 인해 죽는 것 보다는 싸우다 죽는편이 낫다고 하는 주민들의 민심을 이용하는 경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남침하는 경우, 그리고 미군등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공격할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의 상층부는 한국의 무기개발등 전력증강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승산

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쟁발발과 동시에 미군을 주된 『타겟』로 하여 초반에 수천명을 살해하면, 미국내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 한미군사동맹체제가 마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부유층이나 국회의원, 군장교들이 도망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을 간단하게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현재 식량난으로 인해 유발된 북한의 내부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데 UN 인도원조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지금상태를 방치하면 기아자가 속출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만일 식량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김일성 사망 3주기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김정일의 당총서기 취임이 연기될 뿐만 아니라 군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대통령은 95년 12월 1일, 국방부에서 주요지휘관들이 참석한 통합방위 중앙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에 의한 납침 가능성을 지적했다.

통상 매년 1월에 개최되는 통합방위 중앙회의는 김영삼대통령 스스로가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방위중앙회의에 대통령이 출석한 것도 89년이래 6년만의 일이며, 회의를 1개월 빨리 개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시로 12월 7일에는 이양호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금년 4월까지 동계작전체제로 돌입할 것을 결정하였다.



## 불투명한 김정일의 군부장악

한편, 북한 보도에 의하면, 북한측도 한국측의 군사행동에는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에는 북한 중앙방송을 통해 한국 군함이 10월 6일 아침, 황해남도 웅진 앞바다에서 북한어선을 포획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우성호」의 불법 침입에 이은 또 하나의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극렬히 비난하였다.

또한 12월 7일자 로동신문은 “남조선은 오늘날의 정치적인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할지도 모르며, 미국이 이에 협력하여 북한 압살을 기도할지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측은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개월동안 실시한 합동군사연습이 한미연합군을 포함하여 3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훈련으로 상륙작전 등 북한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김정일이 군을 장악하고는 있지만, 군의 발언권은 김일성 정권시대보다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군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을 써왔다. 김일성 사망후, 일련의 군부대 시찰을 통해 군의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군수뇌를 우대, 배려하는 것으로 군장악에 노력해 왔으며, 그 전형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10일 로동당 창건 50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군수뇌의 인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군의 인사는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과 오진우 3사람이 결정하고 있었다. 두사람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김정일이 혼자서 결정하는 최초의 인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불

균형이 북한군의 결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한국도 금년은 파란이 예상된다.*

한국군 수뇌는 표면적으로는 김영삼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만, 육군 등에서는 김영삼정권의 성급한 군개혁이나 정세를 무시한 인사에 반발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12.12사건」 「5.18사건」을 둘러싼 재판과정에서 군부가 피고석에 서게 되었다고 하여 일부 골수분자들에 의한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 다같이 군부가 「38도선」을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존재 의의와 기득권이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북한에서는 군부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역으로 한국에서는 군부의 지위가 저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식량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한국의 정치불안이라는 틈을 이용하여 남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남조선이 정정 불안을 판곳으로 돌리기 위해 군사도발을 할지도 모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소한 문제가 남북한 군사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

요컨대 남북한이 정치불안, 경제불안에 빠져 있는 것이 한반도의 장래를 위협하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DIMENSIONS OF GERMAN UNIFICATION

*German Unification :*  
*Comparative Legal Issues*

By A. Bradley Shingleton

1996. 2.

본 자료(Westview Press, 1995)는  
독일 통일에 따른 법적 제반 문제를  
분석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동서독 통일에 따른 법적인 제반 문제

1990년 9월 21일 통일조약의 비준으로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사이에서 서로 상충되던 법적 체계가 공식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통일 독일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통일과는 달리 양독 사이의 법적인 통일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즉시 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법적 통일의 달성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구 동독이 서독으로 통합됨으로써 헌법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법을 지배 정당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주의적 법 개념에 기초하고 있던 새로운 5개 췌의 기존 법 체계까지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sup>1)</sup> 헌법적 통합은 법적 조화를 위한 기초이지, 그 자체로 법적 조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통일 독일에 필요한 통일된 법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엄밀한 규정들이 필요하였지만, 조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문제들이 입법에 의해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법적 조화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고, 정치적 포용을 상징하는 법령 역할을 하였다.<sup>2)</sup>

통일은 세가지 법적 영역 즉, (1) 국제법, (2) 헌법, 그리고 (3) 국내법 등에 영향을 미쳤다. 통일조약은 기본적으로 국내법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이 세가지 영역 모두와 관련된

---

1) 이것은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기본법 제23조의 두 번째 문장(통일조약에서는 삭제되었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통합으로 인하여 법적으로도 통일시키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그러나 한계가 있다. 서독의 협상 대표는 두 개의 동등한 국가 사이의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했다.

규정을 하고 있다.

## 국 제 법

통일은 국제법과 관련하여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통일은 오랫동안 문제거리로 남아있던 독일의 법적 정통성을 서독에 넘겨주었다. 구 동독에 속해있던 다섯 개 주가 서독으로 헌법적 통합을 하게됨으로써 1867-1871년에 확립된 독일의 영토에 대한 서독의 권리 주장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3)

둘째, 통일로 인해 동독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제법에 따른 양독의 권리와 의무는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졌다. 통일 당시 서독이 당사자였던 조약들은 계속 유효성을 가졌고, 국제기구에 대한 서독의 지위도 유지되었다. 통일조약의 제11조에 따라 서독이 가입해있던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성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예외 없이 새로운 켈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동독이 당사자였던 조약들에 대해서는 통일 조약 제12조에서 서독에 의해서 채택여부를 사안별로 재검토될 것이라고만 규정되었다. 재검토의 결과는 동독이 당사자였던 조약들 중 대부분이 폐기되었다.<sup>4)</sup> 동독의 국가재산, 국제적 의무, 그리고 국내적 채무은 국제법과 관계 없이 서독에 의해서 인수되었다. <sup>5)</sup>

전쟁 배상금에 대한 통일독일의 책임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배상금은 평화조약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러나

---

3) Jochen Frowei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6 (1992); pp.152, 157, n.30.

4) 동독은 약 1,800개 조약의 당사국이었다. 그중 약 80%는 통일후에 폐기되었다. 1994년 2월 4일에 연방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독일통일보고서에 대한 자료 p.36을 보라.

5) 통일조약 23-24조.

1990년 9월 12일에 연합국 4개국과 양독 사이에 체결된 조약(2 플러스 4 조약)은 “제2의 베르사이유 조약”과 같은 것을 피하고자 하는 독일의 뜻을 존중하여 베를린과 전체로서의 독일과 관련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최종적 타결”을 확립하는 수단일 뿐, 평화조약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았다. 물론, 배상금은 1945-1949년 사이 4개의 점령지역 모두에서 지불되었으며, 또한 서독은 제3제국의 침략에 대한 배상금으로 수 백억 마르크를 지불하였다. 동독은 배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도 거부해왔으며, 따라서 이는 통일 독일이 이어 받은 도덕적, 법적 의무가 되었다.<sup>6)</sup>

또한 「2플러스 4」 조약에 의한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명확한 국경선 인정과 통일후 서독과 폴란드사이에 체결한 조약으로 인하여 전후시기부터 이어져오던 법적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었다.<sup>7)</sup> 통일독일이 NATO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세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독일통일은 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sup>8)</sup> 독일통일은 전후 국제법 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의존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독일 주권의 불완전성과 여타 오랫동안 끌어오던 독일문제가 해결되었다.

## 헌 법

기본법에 정해진 통합 절차에 의해서 독일통일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애초에 기본법은 전 독일인에 의해서 채택될 헌법에 의해 대체되는 잠정적이고 준 헌법적인 것으로 구상되었다. 또한 기본법은 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에 대비

6) 1992년 5월 서독은 동독에 의해서 몰수된 미국 시민의 재산에 대한 권리(1억 6백달러)에 대하여 미국정부와 합의했다.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4년 3월 16일자.

7) 2 플러스 4 조약의 제1조 1항은 통일된 독일의 경계는 통일이전의 서독과 동독이라고 확인했다.

8) 2 플러스 4 조약의 제5조는 연합국에 속하는 독일의 권리를 확인했다.

한 것이었다. 1949년에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통합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전 단계로 보았다. 그러나 1990년에 결국 기본법에 의한 통합과 기본법의 유지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보다 선호되었다. 훨씬 빨리 통합이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의 정치적 실체를 보다 정확히 반영했다. 통일조약의 서독측 협상 책임자였던 Wolfgang Schäuble이 동독과의 협상과정에서 언급한 것 처럼 통일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일 뿐이었던 것이다.<sup>9)</sup>

결국 조약은 통일의 완성을 반영하는 기본법의 6개 조항만을 수정했다. 2개 조항은 통일과 직접 관련된 헌법적 규정이었다. 기본법 전문의 “통일 명제”와 독일이 더 이상 영토적 주장 혹은 야망이 없음을 보여 주기위하여 제23조에서 규정한 통합을 위한 절차를 삭제하였다. 다른 4가지 수정은 통일조약의 취지와 관련하여 필요했다.<sup>10)</sup> 기본법의 수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쟁은 고용의 권리와 같은 특정한 사회적 목표와 같은 것이었다.

결국 헌법 조항 중 2가지를 2년 이내에 통일 의회에 의해서 고려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헌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94년 7월 1일 연방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환경보호, 그리고 남녀평등의 확장 등 3가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가결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일부에서 열망하던 사회보장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기본법은 독일통일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었고, 최소한의 수정으로 통일독일의 법적 기초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법의 지속성, 유연성 그리고

9) Konrad Jarausch, *The Rush to German U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170에서 인용.

10) 제143조 (새로운 주에 대한 과도적 법), 135조 (a) (2), 그리고 51조 (II) (상원에서의 투표권리)와 146조 (기본법의 의미) 등이 있었다.

건전성의 결과였다.

## 국 내 법

통합 절차에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통일조약은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역할을 하였다. 통일의 방대한 법적 문제를 규정함과 동시에 통일이 헌법적 통합 이상의 것이며,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2개의 정치적 실체를 융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통일조약의 대부분은 법적 조화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과제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45개 조항의 대부분과 부칙의 3개 조항은 통일의 법적 측면과 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일조약의 여러가지 측면과 세부적인 내용은 현존하는 법, 규정과 관련된 양독사이의 이익을 균형 잡으면서도,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적 체계를 조응시키는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적 조화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은 단순하다. 통일조약의 제8조는 서독의 연방법이 서독의 특정한 주 혹은 일부지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리고 “이 조약 특히 부칙 1조에서 언급되지 않는 한 새로운 주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처음에 일부에서 불만을 가진 이러한 접근은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모든 것을 열거하게 되었고, 예외의 경우가 조약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게 되었다.<sup>12)</sup>

경우에 따라서는 동독법이 특수한 지리적, 사회적, 법적 혹은 경제 환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되어

---

11) 통일조약 제8조.

12) 예를 들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을 열정적으로 지지한 Klaus Kinkel(당시 법무상, 현재 외무상)의 연설을 보라. Klaus Kinkel, “Deutsche Rechtseinheit - Eine Standortbestimmung,”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6 (1991), p.341.



야 했다. 낙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종종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법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점차적으로 서독의 법을 도입하는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낙태와 같은 법적 영역은 쉰독일의회가 해결하도록 남겨질 정도로 정치적으로 조화시키기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따라 사소해보이는 고속도로 속도 제한과 같은 문제도 정치적으로 민감했으며, 명확한 정치적 해결을 필요로 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직종에서의 여성의 취업 권리와 같은 문제는 독일의 완전한 법적 통일을 실현하면서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어려운 법적 문제는 동독에 의해서 몰수된 재산권 문제였다. 이에는 2가지 해결방안이 고려되었다. 하나는 실제적인 소유자에게 재산을 환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상복구 대신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었다. 이는 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도덕적, 재정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다. 서독의 정당들도 어떤 것이 좋은 안인지 의견통일을 보지 못했다. 지루한 협상 끝에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로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sup>14)</sup>

또 다른 과제도 산적해 있었다. 동독에서는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었기 때문에 서독 법에 맞는 새로운 사법체계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동독은 독립적이고 능력있는 법관과 법률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독일에게 커다란 행정

13) 최초의 전 독일의회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거친 끝에 통합된 낙태법을 시행했지만, 1993년 5월 28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BVerfG E 88, 203).

14) Bradley Shingleton, Volker Ahrens, and Peter Ries, "Property Rights in Eastern Germany: An Overview of the Amended Property Law,"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1 (1991): p.345를 보라.

적 어려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서독의 관리들이 옮겨와서 새롭게 정부, 행정기구들을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구 동독의 대학에 법학교수를 새로 뽑는 일은 통일 이전 교수로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독일통일은 동독의 관리에 의해서 자행된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국가의 범죄에 대한 구 동독 관리 (판사를 포함하여) 의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 소추는 독일 사법체계에 어려운 도덕적 문제를 던져주었다. 일부에서는 1945년 뉴럼버그(Nuremberg)재판과 같은 것 즉, 독일인이 독일인에 대하여 심판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서독의 하원은 통일조약이 조인될 때 그 당시까지 사면되지 않았거나 최고 3년형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구 비밀경찰요원에 대하여 사면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조약 그 자체는 동독에서 통일이전에 행해진 범법에 대한 소추권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국가행위에 대한 구 동독 관리들의 형사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sup>15)</sup>

1991년에 처음으로 동서독 국경지역에서 탈출자들을 사살한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기소가 시작되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경미한 형을 선고 하거나 방면이었다. 특히 호네커와 같은 전직 고위관리의 재판은 기소를 가로막는 무수한 절차적 장애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sup>16)</sup>

전후 독일 사법부는 전범과 나찌당원들에 대한 재판을 어

15) Guy Christiansen, "American Influence on the Law Governing the Prosecution of Former East German Border Guards," *German American Law Journal* 3 (1993); p.71.

16) 장벽이 붕괴하기 직전까지 동독의 지도자였던 에리히 호네커에 대한 재판 절차는 그의 건강악화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다.

는 정도 경험한 바 있었다. 대부분의 재판은 「뉴럼버그」 재판이후 1940년대에 독일법정에서 열렸고, 이후의 재판은 연합국에 의해서 열렸다. 전범에 대한 독일법정에서의 재판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뒤죽박죽이었다.<sup>17)</sup> 전범에 대한 재판은 서독의 역사에서 간헐적으로 이어졌지만, 피고의 고령화, 증거와 증인의 객관성은 이러한 노력을 어렵게 만들었다.

동독의 정치적 범죄문제에 대한 법적 처리는 나찌 간재를 처리하는 데에서 보여준 독일 사법체계의 실패로 인한 오랜 불신을 자극했다. 나찌 범죄에 대한 조사는 점차 시들해져 갔다.<sup>18)</sup> 나찌시대의 법관들은 뛰어난 법적, 학문적, 그리고 정치적 지위를 가졌고, 전후 서독의 사법부는 총통에 대하여 충성서약을 했거나 정권이 잔인한 방향으로 가는 데 일조한 많은 법관(이제는 대부분 죽었거나 은퇴했지만) 으로 인해 오염되었다.

역설적이게도 1995년 독일은 최고의 관리들이 참가한 가운데 1944년 7월 20일의 반히틀러 쿠데타 사건 50주년을 기념했다. 하지만, 쿠데타 참가자에 대한 무자비한 판결을 내린 악명높은 인민법정의 1944년 재판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sup>19)</sup> 독일통일과 함께 동독이나 서독이나 할 것 없이 독일인의 양심은 다시 한 번 과거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

법은 독일인들이 정치적 외교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 독일통일의 수단이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법적 통일은 50년 이상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독일의 한 부분에 법의 지배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17) Matthew Lippman, "The Other Nuremberg: American Prosecutions of Nazi War Criminals in Occupied Germany," *Indiana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3 (1992); p.1와 Ingo Müller, *Hitler's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을 보라.

18) Müller, *Hitler's justice*, pp.240-260을 보라.

19) Decision of 12 March 1971 of the Landgericht (Regional Court) Berlin.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s  
of Regional Powers(1)*

1996. 5.

이 자료는 최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펴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강대국의  
역할에 관한 국제 세미나자료 중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관한 내용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l. 1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미국의 위치와 입장

David G. Brown(Director, EAP-Korean Desk, Department of State,USA)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미국의 입장은 일관되어 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적인 문제는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인들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다. 한국과 북한이 평화를 정착시킬 때까지 현재의 정전체제는 준수되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은 실용주의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 문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은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연착륙(soft landing)”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

## 현재의 상황과 도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분열적이고, 적대적이며 깊은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 중무장된 비무장지대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전진 배치되어 있고, 공격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이 오판하여 모험주의로 나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유엔사령부의 억지(抑止) 능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 동안 미국과 한국은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왔으며,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였다.

북한의 고립과 군사화는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협 요소이다. 북한의 고립과 군사화는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예측가능성을 낮추게 된다. 한

반도에서의 상황변화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예측하지 못했던 북한의 붕괴와 한국으로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논외로 한다면, 평화로의 진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북한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다고 믿는 안정적인 정치적 지도부가 있는 경우일 것이다. 국제 사회는 김정일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찾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전환기에 놓여있다. 자신에 대하여 뚜렷한 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정부와 당의 핵심적인 직책에 취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김정일이 외국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꺼려한 것도 불확실성을 더했다. 모순적인 북한의 행동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혼란을 가중시켰다. 오직 북한만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사회이지만, 완전히 응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공개적 성명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뉘앙스와 모순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고도로 구획화되어 있는 조직계통 사이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북측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도의 한 부분으로 미국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기본합의서는 단순히 북한의 핵개발만을 동결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경제·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은 남북대화 문제,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과 미사일 개발 위협의 완화를 위한 조치, 테러리즘의 부정과 미군 유해송환 문제 등을 담고 있는 기본합의서의 실행을 요구한다.

이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의 구체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평화와 통일의 길**

미국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폭력과 분열이 없는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한국의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 지도부가 남한과의 화해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개혁·개방과 국제규범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북한에서 변화는 기본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화해와 통합을 위한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진화적인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를 위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도 이와 병행해서 진전되어야만 한다.

### **군사적 긴장의 감소**

여전히 위협스러운 한반도 상황에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문점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지난 2년여 동안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중립국 감시단을 추방시킨 조치는 정전협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본적인 수단마저 침해한 것이다. 중국이 판문점에 파견했던 대표단을 소환시킨 결정도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강택민 주석이 최근 서울을 방문하기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전체제는 한국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새로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정전체제를 침해하는 끊임 없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은 판문점에 북한군 대표단을 유지시키고, 대령급 수준의 회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새로운 “장성급” 수준의 회담을 위한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수준에서의 잦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으며 판문점에서의 회담은 거의 결실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 간의 장성급 수준의 회담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다. 이는 안보문제에 대하여 북한군 고위급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정전문제를 다루는 수단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통하여 비무장지대에서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수단을 모색하는 새로운 포럼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를 무시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兩者만으로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들자는 북한의 제안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장성급 회의를 열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형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평화의 촉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적 신뢰구축 수단을 실행에 옮기는 문제 외에도, 화해와 평화라는 보다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 합의된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합의서를 실행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몇 주 동안에 한국과 북한은 기본합의서와 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군사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군사분과위원회를 가동하자는 합의와 기본합의서의 규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은 긴장을 감소시키는 건설적인 길이 될 것이다.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2 플러스 1”, “2 플러스 2” 그리고 “2 플러스 4”와 같은 형식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에서든지 핵심적인 요소는 2, 즉 남북한이다. 평화 메카니즘이 공평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사이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으로서, 한국이 평화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37,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도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공평하고 현실적인 평화 메커니즘을 찾는 데 지원자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의 성명에서 북한은 2가지 병행적인 통로(tracks), 즉 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한 사이의 협상통로와 새로운 평화 메카니즘을 만들기 위한 미-북한간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공평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데 실패했을 때, 그들은 미국과 북한의 양자 접촉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으로부터 한국을 배제하려고 했던 낡은 시도를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 **상호 경제적 이익을 찾아서**

경제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장의 힘은 상호 경제적 이익을 쫓아서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경제적 영역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남북한 관계에 대하여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 정책에 의한 정치적 긴장이 이를 억눌렀던 것이다.

“제국주의의 평화와 자유 공세”에 대하여 경고있는 북한의 선전은, 그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절박하게 요구되는 경제개혁의 필요성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북한사회에 미칠 충격을 두려워하여 매우 유보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인 힘을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남북한 사이의 교역확대는 바람직하다. 최근 몇 달 동안에 성장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성장해온 대북투자는 환영할만 하다. 투자와 경영참여를 하는 대우의 남포지역 프로젝트는 희망적이기까지 하다. 이처럼 호혜의 원칙에 기반한 남북한 사이의 연계 확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연계는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홍수피해 복구를 위하여 유엔과 그 산하기구 인사들을 초청한 북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이것이 “주체” 이데올로기를 재해석하는 중요한 시도인지는 커다란 관심사이다. 북한의 태도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북한에 적은 양이나마 재난구호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의 중요한 걸음을 취한 이 때에, 북한이 실제적인 수확을 올리는 것은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은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고 IMF, World Bank 혹은 ADB 등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주요 강대국 관계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주요 강대국의 역할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의 주요 강대국 사이의 경쟁은 한국의 내분에 개입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역으로, 주요 강대국사이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는 한국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지난 1세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다. 주요 강대국의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자신들의 기본이익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강대국 사이에 안정적인 다극균형을 형성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남북한 사이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 개선이 주요 강대국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던 1972년과 1991년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안정적인 다극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었던 미일안보동맹은 냉전의 종식으로 약화되었다. 지난 1년동안 미국과 일본은 탈냉전 시대에 맞게 안보조약을 철저히 재검토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재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천안문사태 이후 깨어진 군사적 관계를 복원하는 일은 ~~매~~ 놓을 수 없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양자적 안보회담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대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새로운 아세안 지역포럼의 창립 회원국이 되는 것을 보장하였다. 우리는 APEC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관계가 증진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환영한다.

미국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양자적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협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다자안보회담의 기초를 닦는데 기여했다. 동북아시아는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번째 통로 (track II)”를 통하여 대화를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되었다.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국제 갈등 및 협력 연구소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주도로 지난 2년 동안 3번의 민관합동 회의가 열려 안보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포용적이고 생산적인 동북아시아 안보회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는 4개의 주요 강대국과 남북한을 한데 묶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지금까지 열린 세 번의 회의에 매번 불참하였다. 그 동안 이 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은 북한의 참여가 매우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동북아시아 안보회의가 상호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 결 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왕도는 없다. 남북한을 분열시키는 깊은 불신과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공평하고 실리적인 선택은 평화와 통일의 핵심적인 문제가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다. 왕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길을 창조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에겐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법에 대한 북한군과의 접촉, 1992년의 기본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남북한 대화,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강대국들은 남북한 접촉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다극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 2.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구축에 대한 일본의 위치와 입장

**Oshima Kenzo** (Deputy Director-General for Asia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Japan)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은 주로 무역, 투자, 그리고 기술·경제적 협력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최근에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북한은 타협적으로 나왔고,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한 진전이 있었다. 참여국들 사이에 여전히 커다란 견해차이가 있지만, 일본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의 무라야마 수상과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 사이에 열린 회담에서 2가지 문제가 거론되었다. 첫째는 1945년 이전의 역사에 대한 인식차이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이 한국의 이익에 반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재확인시켜 주었다. 일본은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500,000만 톤의 쌀을 제공했다. 그러나 향후의 쌀 지원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그 효용성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일본은 동맹국들 사이에 각료와 실무자 수준의 긴밀한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에 미국, 한국과 보조를 함께 했다.

악화되던 북한의 경제와 식량상황이 최근의 흉수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붕괴

로 이끌 수도 있다. 남북한 사이의 정치·외교적 경쟁은,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 북한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중국 강택민 주석의 서울 방문은 북한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의 곤경은 국내사정에서도 기인한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연기 이유중 하나는 김일성이 생존시에 김정일에게 충분한 권력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일-미방위동맹을 고수하는 것이다. 최근 벌어진 3명의 미군에 의한 강간사건으로 인하여 동맹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재론되었으며, 많은 일본인들은 동경-워싱턴관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인들은 여전히 일-미 안보관계가 일본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일-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를 해치는 어떠한 조치도 동맹국들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도움이 될 뿐이다.

셋째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1991-93년 사이에 열린 8번의 회담 이후 북한은 갑작스럽게 회담을 중단시켰으며,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기본적인 목표는 관계 정상화 그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다. 북한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의 원조를 원하고 있다. 최근에 일본이 제공

한 쌀과 재정지원은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인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경제 협력은 일본-북한 관계가 충분히 정상화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넷째, 일본은 한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예를 들면 그 형태가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제안한 것처럼 “일국가, 이 체제” 형태를 통하여 될 것인지, 아니면 독일통일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 없다. 독일통일 형태는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아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정한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다. 남북한 문제가 “연착륙 (soft landing)”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파멸”은 역내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1) 북한을 극단적으로 고립시키지 않는 것,
- 2) 북한이 스스로 외부세계에 문을 열도록 북돋워 주는 것,
- 3) 남북한 대화를 지원하는 것. 역내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강대국들이 따를 수 있는 합의된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 청사진은 기본합의서와 KEDO에 기초하여야 한다.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s  
of Regional Powers(2)*

1996. 5.

이 자료는 최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펴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강대국의  
역할에 관한 국제 세미나자료 중 중국의  
입장에 관한 내용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  
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와 입장

Zhou Xingbao (Vice President, Chi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china)

냉전이 종식된 지금 세계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경제적 세계화·지역주의화와 정치적 다극화는 세계의 양대 추세이다. 전체적 흐름은 긴장 완화로 가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안정적이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 완전한 평온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I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것은 남북한 쌍방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의 이익과 합치된다. 한반도의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화 「레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40여년이 흘렀다. 관련국들의 노력으로 40여년 동안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유지되었으며, 평화와 안정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평화는 매우 유약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적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세계의 긴장완화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남북한 모두의 목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기 위

해서는 한반도에 견고한 평화가 유지되고, 신뢰성 있는 평화 「레짐」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상황 변화는 남북한 사이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레짐」의 구축에 매우 바람직한 국제적 환경을 창출하였다.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이후 40여년 동안 이어진 남북한 사이의 충돌은 무엇보다 세계의 동서갈등과 냉전체제로 인한 결과이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남북한 양측의 국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은 서서히 접촉을 시작했고, 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오랫동안 남북한 사이의 대화는 중단되었다. 냉전의 종식은 남북한 화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하였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건은 1992년 2월에 발효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새로운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1994년 중반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7천만 한국인과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에 커다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김일성 주석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남북한 사이의 접촉은 중단되었고 남북대화는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에 남북한 접촉이 다시 시작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15만 톤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양측 사이의 교역과 경제협력도 새롭게 진전되었다.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교역과 투자,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한국과 외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1995년 5월 한국정부는 대우그룹의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승인했다. 이것은 남한기업이 북한 지역에 직접 투자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는 대외관계에서도 일어났다. 이 역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한국은 1990년에 러시아와 1992년에 중국과 각각 국교를 수립하였다. 1994년 10월에는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995년 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과 미국은 기본합의서의 실행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작업도 진전을 보았다. 게다가 북한과 미국은 상대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50만 톤의 쌀을 제공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제 북한과 일본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적 환경의 개선은 분명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바람직한 요소가 될 것이다.

## II

중국은 남북한 양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평화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양측과의 밀접한 이웃으로서 항상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이익이 되며,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양측과 선린관계를 유지해왔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원로 지도자들 사이에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는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정

부와 인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또한 그들이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김일성은 1994년 7월에 사망했다. 중국의 덩소핑과 지도자들은 깊은 조의를 표시하는 서한과 화환을 보냈다. 1995년 10월 조선노동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북한 대사관이 마련한 연회에 강택민 주석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강택민 주석이 베이징에 있는 외국 대사관의 이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과 북한 정부는 항상 긴밀한 접촉과 협의를 해왔다. 양국은 많은 사절을 상호 방문시켜왔다. 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능력껏 경제적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양국 사이의 경제적 협력은 계속 발전해왔다. 문화, 스포츠, 예술,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적 분야에서도 매우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해왔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의 접촉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함께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외교관계의 수립 이후 중국과 한국 사이의 우호와 협력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양국의 원수와 총리의 상호방문은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시켜 주었다. 경제와 무역관계는 눈부실 정도로 발전하였다. 외교관계 수립 이후 3년동안 양국간의 무역량은 매년 40% 정도 성장하였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제3위의 무역 상대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6위의 무역상대국이다. 또한 한국의 해외투자 중에서 중국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4년 6월 양국은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이후 자동차 제작, 중형 승용 항공기와 고화질 TV, 그리고 핵에너지 산업 분야 등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다. 양국 사이의 문화와 과학·기술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강택민 주석의 성공적인 한국 방문으로 인하여

양국 사이의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다.

중국의 현대화 계획은 에너지와 광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중국 정부와 인민들의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건설에 바람직한 국제환경을 도출하기 위하여 평화공존 5원칙에 따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남북한 양측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에 도움이 된다.

중국은 항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국제무대에서 적절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왔다. 1991년에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순조롭게 동시 가입한 것, 1994년 핵문제의 잠정적 타결 등은 모두 중국의 노력과 떼 놓을 수 없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 III

정전협정은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여러 관련 국가들 사이에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1994년 8월 중국 정부는 북한측의 요구를 고려하여, 그리고 북한측이 군사정전위원회(MAC)로부터 대표단을 이미 철수시키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중국측 대표단을 소환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협정은 유효할 것이며, 관련국들은 정전협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관련국들 사이의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전협정은 1953년에 북한의 인민군과 중국의 인민지원군을 한 당사자로 하고, 유엔 사령부를 한 당사자로 하여 공식적으로 조인되었다.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전협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도 정전협정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한 두 당사국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전협정은 40년이 넘도록 효력을 유지해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한반도와 세계의 상황은 크게 변화하였다. 여러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관계도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일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존의 평화 「레짐」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 일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세밀한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남북한 정부와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남북한이 합의한 선택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당사국들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지원하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갈등을 협력으로, 충돌을 대화로 바꾸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와 현재의 어떠한 국제적 문제와 분쟁도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옹호하고 지지해왔다. 우리는 여러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가 치유되고 새로운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며,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진작될 것으로 믿는다.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달성된 한반도가 마침내 세계인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North Korea's Economic Relations  
with Russia, China and Japan*

By Tae, Hyong Chol(북한측 경제전문가,직책미상)

1996. 5.

이 자료는 지난 4월 22-23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개최된 북한 경제관련세미나에서 북한측 발표자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일본등과의 경제관계”란 제목으로 제출한 논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pl.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러시아·일본·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

지역적으로 인접한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어느 나라나 대외경제관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 세 나라는 경제력 뿐만 아니라 영토와 인구 면에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과 적절한 경제관계를 맺는 것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일본과도 교류를 촉진하는데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막 접어들었던 해방 직후의 북한이 당면한 특별한 상황과 조건에 기인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세계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과 철저한 경제봉쇄를 한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해외 시장을 제공해주었다. 사회주의 체제, 우호,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장기 협정 혹은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가격과 청산결제 형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갖고 있었으며, 화물수송 조건 또한 비할 바 없이 좋은 것이었다. 사회주의국가인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거래에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외국시장에 접근하고자 했던 북한으로서는 적절한 해결책이었다.

### 1)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경제관계

러시아는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1949년 3월에 북한과 구 소련 정부 사이에 맺은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어 양국 사이에 구상무역이 시작되

었으며, 1961년에는 장기무역협정인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 1969년 12월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 1990년까지 매 5년마다 연장되었다. 1990년 이전에 북한은 러시아에 압연강재, 마그네샤 크링커, 시멘트, 그리고 의류 등을 수출하였고, 러시아는 북한에 원유, 코크스 탄, 코크스, 그리고 직물 등을 수출하였다. 한편, 1992년까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제철공장과 화력발전소를 차관형식으로 지원받았다.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장비와 시설은 중공업을 비롯한 북한경제의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러시아가 장기계획으로 극동지역을 개방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벌목, 건설, 농업, 어업, 그리고 광업과 같은 부문에서 협작이 이루어져 북한의 노동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양국 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최고점에 이른 1988년에는 극동지역의 경제·기술협력과 공장 설비품 수입을 포함한 무역총량이 10억 7천9백만 루블, 미화로는 약 24억 달러에 이르렀다.

장기간 유지된 양국의 경제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경제체제의 개혁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적 불안정과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하향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0년 11월 구 소련이 경화결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양국사이의 협정은 종료되었다. 그 이후 구상무역은 사기업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갑작스러운 무역체계의 변화는 양국 사이의 무역량을 급감시켰다.

그러나 최근에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과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올해 4월 정부간 기구인 조-러 무역·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위원회가 열려 진지하게 양국 사이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인 수출입 구조의 복원, 화물운송료 인하와 수출입 관세의 면제와 같은 대외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극동지역 국간들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러시아가 과거에 구 소련이 지원하여 건립한 공장에 사용될 원료와 부속품을 제공하

고, 이를 이용하여 북한이 정상적인 생산을 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러시아에 되갚는 식의 방법 등을 가능한 한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위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양국 정부가 정부구조와 경제체제의 차이점을 뛰어넘어 유리한 지리-경제적 조건을 이용하여 과거와 같은 활발한 경제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 2) 북한과 중국사이의 경제·무역관계

북한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이후 1990년까지 양국 정부는 협정을 맺어 구상무역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와 무이자 차관을 제공하는 등의 경제협력을 진행하였다. 양국 정부는 5년 단위의 장기무역협정, 1년 단위의 정부간 구상무역 의정서, 그리고 국영 무역은행 사이의 계정 설치 등을 통하여 무역을 하였다.

지난 40년동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강철 제품, 광석, 무연탄, 시멘트, 기계류, 농수산물 등이었으며,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원유, 코크스 탄, 정유, 기계류, 화학제품, 농산물 등이었다. 1990년대의 양국 사이의 년 평균 무역량은 1950년대에 비하여 10배나 증가하였다. 북한은 공장 건설, 장비, 곡물, 그리고 원료 등을 무상 혹은 차관형식으로 지원받았다. 북한과 중국사이의 구상무역이 종결된 1991년 이후 양국간의 무역은 무역 회사들 간에 경화 혹은 구상무역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 150개의 북한 기업이 중국에서 합작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이 중국과의 경제·무역에서 계속 많은 이윤을 올리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기반 위에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수출입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코크스 탄을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북한의 수출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철금속, 비철금속, 마그네샤 크링커 등의 생산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수많은 생산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양국 사이의 경제·무역관계가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리적 인접성과 보완성은 양국사이의 경제교류를 발전시키는 필요조건이 된다. 북한은 양국이 주요 수출입품의 거래에 대한 협정, 이중과세 철폐와 투자보호에 대한 협정 등을 비롯하여 경제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3)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무역관계

주지하다시피 북한과 일본사이에는 외교적 관계가 없다. 북한은 정치적 요소가 양국 사이의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전에라도 가능한 한 폭넓은 경제교류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항상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적대 정책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아직도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56년에 양국의 민간 기업들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간접무역이 시작되었고, 1963년에 북한의 무역위원회와 일본의 일-조 무역협회 사이에 조인된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직접무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양국간의 무역은 사기업들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1995년 양측의 무역량은 미화로 5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기업인과의 합영과 주문자 생산방식(OEM processing)을 통한 교역량은 매년 증가하여 1994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 총량 중에서 31%, 1995년에는 41%에 이르렀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총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 40%, 1995년에는 30%에 이르렀다. 양국의 경제관계가 발전하였지만, 전통적인 대일 수출품의 양과 비율은 줄었다. 이것은 아연, 비철금속, 철 생산물, 광산물, 원건, 견사, 그리고 원

료와 같은 전통적인 대일 수출품의 거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50여 년간의 경제·무역거래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기대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의 주된 이유는 일본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은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할 때까지 40년동안 엄청난 제국주의적 착취와 약탈에 탐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고수하였다. 일본 당국은 북한산에 대하여 “차별 (discrimination)”, “규제 (regulation)”, “제한 (restriction)”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인위적으로 방해하였다. 그들은 양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없다는 구실 하에 북한에 대하여 가장 불리한 세율인 “법정관세 (statutory tariff rates)”를 적용하고 있다. 북한은 합영과 주문자 생산방식의 주요 품목이자 대 일본 수출의 주요 품목을 구성하는 철강제품, 수산물, 그리고 섬유와 같은 품목에 대하여 법정세율을 적용받는 관세차별로 인하여 7-10억 엔에 달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유독 북한산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북한으로의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과 수출보험의 적용을 금하였다. 더구나 과거에 일본정부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규제 대상국에 속하는 북한에 대하여 전략물질의 수출을 금해왔다. COCOM이 해체된 이후에도 일본은 북한에 대한 수출을 더욱 “규제”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새로운 수출통제체계를 마련하였다. 북한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쪽으로 기울어져 북한에 대하여 적대 정책을 취함으로써 아직 양국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아직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이다. 북한과 일본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은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이다. 북한은 일본정부가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할 의도가 있다면, 3당합동성명과 4당합의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진실한 태도로 북-일관계에 접근해야 한다고 믿는다.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s of  
Regional Powers(3)*

1996. 5.

이 자료는 최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펴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강대국의  
역할에 관한 국제 세미나자료 중 러시아의  
입장에 관한 내용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  
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러시아의 위치와 입장

**Valentin I. Moiseyev**(Director, Division of Korea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ussia)

지난 50년동안 한반도의 긴장은 매우 고조되어 있었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양대 진영사이의 갈등은, “냉전”과 “열전” 사이를 오고 간 남북한의 갈등을 통하여 극명히 표출되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비롯하여 그들의 동맹국이나 우호국 모두에게 군사적 방법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많은 나라가 관련되어 있어 복잡미묘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실제적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한 결과,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문제가 세계적 수준에서의 냉전과 정치·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지만, 이제 이 문제는 세계의 변화와는 거의 상관없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관련 국가들의 역할은 점차 보조적인 것이 되고, 남북한의 역할이 핵심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관련국가들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위한 우호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한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진 권위(authority)를 통하여 남북한 사이의 합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국경선에서의 “선린지역(zone of good neighborhood)”을 창출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호혜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황이 러시아에게 이론적 혹은 지정학적 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협력함으로써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이웃을 기대하고 있다.

## 러시아의 대 남북한 관계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은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과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에는 한반도의 안전, 생산적인 남북한 대화, 한국과의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우호관계 등이 포함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러시아는 통일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외교적 관계를 맺은 이후 지난 5년 동안 러시아와 한국은 상호적대 관계로부터 벗어나 자유, 민주, 법치, 인권,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19세기말부터 계속 러시아는 한반도에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지, 북한정권의 비정통성을 암시하는 정치논리학자들의 말처럼 외교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884년에 양국은 우호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는 한국과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회 민주화, 개혁, 부패와 독재 잔재를 척결함으로써 “신 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김영삼 정부의 구상은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 민주주의의 목표와 이상(理想)에 맞는다.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이 체결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된 1992년과 1994년에 열린 정상회담의 결과는 양국간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두 가지 문서는 양국관계의 발전에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러시아와 북한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우호적이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약화되었다. 주된 이유는 러시아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의 지도부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장

기간의 우호·동맹관계를 새로운 현실에 맞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9월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 사절을 보낸 이후 양국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양국은 내정에 대한 불간섭과 주권의 존중, 그리고 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 자유 등을 원칙으로하여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 러시아-북한 조약

1991년 7월 6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은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은, 이 문서가 양국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남북한 양국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의존적이며, 결과적으로 이 조약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한 부분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조약은 역사적으로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체결되었고, 이제는 그 효용성이 다하게 되었다. 조약의 여러 조항은 현재의 러시아 상황과 러-한반도 관계, 그리고 동북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1995년 8월 러시아 측은 우호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을 초안하고 이를 북한 측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 '군사조항'이라고 하는 제1조에 대한 러시아 측의 현재 입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 러시아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북한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북한 편에 가담할 것이다. 러시아의 결정은 러시아 자신의 정보와 상황분석에 기반하여, 또한 러시아의 법절차를 완전히 거친 다음에,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적인 의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소련-북한간의 조약은 한반도 평화유지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953년에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안보조약에 대응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한-미조약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 한반도의 통일과 러시아의 접근방법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열망은 러시아에서 깊이 이해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더불어 러시아는 남북한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

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에게 유리하다. 무엇보다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긴장이 사라질 것이고, 동북아 전역의 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거대한 경제적·인적 자원을 가진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상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과거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갈등이 없었으며, 현재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래에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에게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파트너를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언제, 어떻게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통일은 이론적 전제와 남북한이 취하는 실제적인 조치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 시나리오의 이름은 편의적으로 붙인 것이다).

진화(Evolution) 시나리오: 남북한 사이의 점진적인 인적·물적 교류과정을 통하여 상호침투가 이루어짐으로써 통일이 달성되는 것을 말한다. 상호침투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하여 기존의 사회체제를 해체하고, 군사분계선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경제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제도와 체제를 자동적으로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이 개선되면, 북한은 다른 나라와의 정치·경제적 접촉을 확대하고 다양화시키게 됨으로써, 자발적 혹은 강제적인 자극에 의해 “개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북한의 필요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화적인 방법을 통한 통일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한 세대 이상의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약(Treaty) 시나리오: 남북한 당국자가 특정한 통일형식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된 형식은 “한민족공동체”, “고려연방공화국” 혹은 상호 합의한 제3의 것이 될 지도 모른다.

남북한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선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상호 신뢰성의 부족과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의 결핍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분단이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체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합쳐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독일식 (German)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남북한이 서로 자신이 가진 경제적 우위, 사회체제의 매력과 우월성을 통하여 상대방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국자간의 정치적 합의하에 경제, 문화, 여행, 스포츠 등을 교류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럴 경우 통일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거나, 주민들의 불만 폭발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보다 큰 힘을 가진 상대방의 보호에 의해서 점진적인 형태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에 반전되어 북한은 한국의 경제협력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강력한 경제와 2배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한국 측에 의해서만 수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한국은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집착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이다. KEDO가 사용하는 자금은 북한의 흑연감속로가 갖고 있는 위협을 제거하거나 전력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대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 대북한 접근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면, 마치 독일통일이

동서독사이에 기본조약이 조인된 1972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북한이 한국의 원자료를 받아들인 1995년에 한반도의 통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혁명(Revolution) 시나리오:** 소련의 분열과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은 전통적인 경제협력 파트너를 상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양의 원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 북한의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낙심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고,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들은 주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남한과의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폭동을 일으킨 북한 주민들이 대거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무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를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웃 나라로 탈출할 수도 있다).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극도로 열악한 주민의 생활수준, 미래의 약속에 대한 피로와 불신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조짐이 전혀 없으며, 주민들이 사회-정치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쟁(Military) 시나리오:** 남북한의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필요로 하는 정권을 세우고, 상대방을 흡수하기 위하여 전쟁을 감행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도 그렇지만,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국가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러시아는 국경선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 시나리오'와 '조약 시나리오'를 환영하고, 폭력을 배제한 '독일식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며, '혁명 시나리오'와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

50년간의 갈등을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을 거쳐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한은 한반도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 1953년의 정전협정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평화구조가 무용지물이 되었고, 한반도와 그 주변의 현실에 들어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작업은, 아직 국제적으로 승인된 한반도의 평화보장 방법이 달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평화구조가 작동할 때까지, 관련국들이 정전협정의 정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크게 나누어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은 일정한 단계에서 일부 관련국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남북한 사이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평화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유지체제 문제를 분리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래의 구조, 예를 들면 현재의 구조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관리들은 이러한 협상을 통하여 위협스러운 우발사태를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며,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방지하는 방법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미국과의 평화조약이 한반도의 평화유지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양국간의 관계가 “충분히 성숙”될 때 “확실한 정치적 수준”에서 조인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의 외무부 부부장 최수현은 UN창립 50주년 기념연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미-북한 사이의 평화적 관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양국 사이의 “법적, 정부

적 메커니즘”을 주장했지만, 평화유지체제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평화 조약을 들지는 않았다. 그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유지 메커니즘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은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 구조를 구축하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수현은 UN이 북한과 관련된 “불행한 과거의 청산”과 한반도의 평화유지 체제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어떠한 구상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다만, 이 구상이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국가들의 위치와 이익, 그리고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과 실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94년에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평화유지체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회의를 통하여 한반도의 신뢰구축 방법과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정치적 갈등의 제거,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의 실행, 우발적 무력충돌의 방지, 병력 및 군비(軍備) 감축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행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을 통하여,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신하여 화해협정에 기반한 새로운 한반도평화유지구조가 남북한과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관련 국가들 사이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의는 어느 국가의 이익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평화유지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와 관련 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합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제1단계: 북한과 미국은 우발적 군사충돌 사태의 방지, 군사행동에 대한 통제, 전쟁 방지를 비롯한 한반도의 안전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조약을 조인할 것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할 경우, 이 조약이 한반도의 안전구조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수용할 수 있다.)

제2단계: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유지 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 수준의 협상을 하고, 협정에 가조인 한다.

제3단계: 남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 회의를 연다. UN 대표단과 관심 있는 다른 국가는 옵서버로서 참여할 수 있다. 회의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협정을 마련하여 남북한이 조인하고 다른 직접 참여국이 이를 보장한다.

## UN의 역할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한국으로부터 UN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새로운 한반도 평화유지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1953년에 조인된 정전협정은 모든 관련국들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국제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문서이다.

- UN은 한국과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상의 틀을 작동시킬 것을 요구한다. 남북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유지체제와 안전보장체제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화해와 군사문제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재개되어야 한다.

- UN은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나라들 사이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양자 혹은 다자간 접촉도 환영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남북대화, 북미협상, 북일협상 등등).

- UN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유지 체제가 구체화된 이후에 한반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철수할 의무를 진다.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이라도 남북한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諸君

# 日米安保が 消滅する日

니카니시 테루마사(교토대 교수)

1996. 6.

본 자료는 일본 월간지 諸君 6월호에 게재된  
駐日 미군기지의 반환문제에 따른 향후 동북  
아시아 지역 정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미·일 안보체제가 소멸되는 날

## 1. 미국의 전방전개전략 변질의 배경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의해서 미국은 일본방위의 의무를 지고, 그것과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일본은 미군의 활동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군기지와 미군에 의해서 일본을 방위하고, 극동의 안정화를 도모하므로써 현행 미·일안보체제는 정당성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안보의 근간인 미군기지가 축소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미·일안보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는 거의 하지 않았다.

더구나, 후텐마기지에 있는 즉응성이 높은 미해병대의 카테나기지(喜手納基地)로의 이전, 혹은 공중급유기의 이와쿠니기지(岩國基地)로의 전환마저도 주일미군기지강화에 연결된다는 식으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이익만을 고려해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명하게 미군 기지주변주민의 복지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과의 차원이 다른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분명히 미군기지가 줄어드는 것은 보다 기본적인 안보적인 의미에서는 미군에 의한 방위공약의 본질적 저하를 의미한다. 그것은 미·일방위협력의 긴밀화나 집단적 자위권의 돌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쇄될수 없는 구조적 변질을 내포하는 것이다.

일본의 오키나와현 반환계획에서는 2,010년에 해병대의 중핵기지인 Camp Hansen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2,010년에 캠프한센이 존재하고 있을까? 그 즈음에는 일본정부가 계속해서 주둔해 달라고 부탁해도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오키나와에서 철수하는 사태마저 상당한 확률로 상정할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앞으로 21세기를 향해 착수할 육상병력의 전방전개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동아시아지역에 미국의 육상병력이 현재처럼 [해병원정군]이라고 하

는 전략단위로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 미국의 전방전개전략 변질의 배경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다.

우선 첫째로 코스트 문제이다. 다음에 있을 2000년의 미국 대통령선거에는 유럽에 10만명, 아시아에 10만명이라는 병력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재정상의 부담문제가 반드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미국정치는 역사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2대 정당제가 숨이막혀 제 3의 정당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의회는 복지예산의 삭감에 일치감치 숨통이 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예산의 [성역화]는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모든 예산의 삭감]이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삭감의 마무리작업으로써 국방예산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국방예산의 삭감이외에도 또하나의 미국방정책의 선택이 얽혀있다. 그것은 [보다 경비가 적게 드는 안전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때에는 먼 극동지역에 기지를 가진다는 것에 대한 비용효과는 당연히 엄격하게 점검될 것이다. 일본 등의 미군 주둔상대국의 배려예산이 더 이상 대폭적으로는 증액되지 않는 흐름을 보고, 수많은 인원이 필요한 대규모적인 전방전개전략은 수정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 2. 군사기술을 혁신하는 미국

둘째로 군사기술의 혁신이다. 걸프전쟁에서 하이테크 무기가 화제에 올랐지만, 그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는 기본적으로는 70년대에 개발된 기술에 의한 것이었다. 걸프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현행 기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상태로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뿐만 아니라 미국 군사기술의 우위는 날마다 체감되어 갈 것이라는 강한 위기감을 안고 있다. 21세기를 염두에 둔 군사우위를 생각해서 코스트적으로도 인원적으로도 보다 말끔하고 동시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기술혁신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필요

하게 된다. 미의회에서는 방위문제 전문가인 공화당의 맥케인의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식을 초월한 대량병력수송시스템을 비롯해서 혁신적인 병력의 긴급전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혁신체계는 2000년전후에는 확실한 윤곽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에는 아시아에 병력 10만명이라는 것과 같은 대규모적인 전방전개전략은 군사합리상의 면에서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외교전략상의 관점이다. 종래의 전방전개전략을 계속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항상 아시아정세의 주역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아시아정세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Power Balance가 이대로 계속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미국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선 자세로 중일양국을 균형시키거나 혹은 대러시아정책에는 중일양국을 함께 담당하게 한다는 것과 같이 균형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적은 코스트로 아시아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19세기 영국이 유럽대륙에 대해서 취했던 것과 같은 자세이다.

현재의 미·중관계는 대만 총통선거 시점의 무력시위로 인해 상당히 냉각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장래의 동향에 따라서는 이러한 구도가 한꺼번에 변할 가능성도 있다. 금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3% 달성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중국이 안을 문제를 생각해서 러시아의 잠재적인 능력을 보면, 다음세기 초에는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흐름속에서 부상하는 것은 대국 러시아의 부활이다.

냉전 이후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목되고 있는 대중전략보다도 대러시아전략쪽이 항상 우선되는 최중요과제인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라시아대륙에 걸쳐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이 민주화를 향해 전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러시아정세여하에 따라서는 미·중관계는 一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러시아와 균형시킬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전방전개전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유연한 외교전략을 취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을 미국의 전략 기획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국제전략을 큰 시야에서 분석하면 기지가 반환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기지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후텐마기지(普天間基地)를 반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전방전개전략의 전환도 선택에 넣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방위협력을 긴밀화하는 방향으로 가져갔다. 냉전하의 소련봉쇄형에서 냉전후의 지역분쟁대응형으로 안보체제를 전환해가는 말하자면 실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 **3. 미국의 북한·중국 회유 및 봉쇄정책으로서의 한미·일체제**

한반도유사사태 혹은 대만유사사태등 현재의 동아시아정세에는 다양한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위기 가능성을 현재화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가장 부심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미·일의 정치적·전략적 결속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 등의 주변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클린턴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기전에 한국측의 강한 요구에 응하여 한미제주도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미국이 이에 응한 것에는 중국의 미사일연습때에 보인 미·일과는 다른 한국의 친중국적인 경향에 위기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결같이 중국과 북한을 회유하는 한편, 한미·일이라는 진영을 공고히 하여 언제라도 대중 봉쇄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태세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나 대만해협에서 무력분쟁이 정말로 임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아니라 미·일의 군사적인 긴밀성을 과시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정치적으로 誘導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위한 체제구축이 [미·일 안보체제의 재

정의]이며 [유사사태]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면 동아시아는 [유사]가 아니라 [融解]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본과의 군사협력의 강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지반환에 착수한다. 도쿄에서는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조인했지만, 그 전날 한국에서는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남북한 미·중의 4자회담을 무조건적으로 제안했다. 미국은 그 사이에 미·일수뇌회담 2일후에 있는 미·중외무장관회담에서 대중국 최혜국대우(MFN)의 계속을 약속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를 비롯한 미·일의 방위긴밀화가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상황이 변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게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 “극동유사시에 우리들은 창을 선택할 것이니 당신들은 방패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역할 분담으로 대세를 공고히 해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지를 희생하더라도 미·일방위협력이라는 실리를 택한다는 다이나믹한 미국의 외교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 4.ACSA의 체결의 의미

ACSA는 80년대부터 미·일간의 현안이였다. 특히 나카소네내각(中曾根内閣)시대에는 이협정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거듭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서는 연료와 자료의 유통은 공동연습이나 PKO혹은 인도적인 원조 등에 한정되어 있다. 미군의 단독연습에 대해서는 물자공급은 할 수가 없다.

유럽의 NATO 제국이 미국과 체결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본래 ACSA는 유사시의 물자의 지원, 보급면에서의 후방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일간의 ACSA체결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걸프전쟁 때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전시내지 위기시에 출동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연료와 탄약을 공급하면 무력행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운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본 법체제의 입장이다.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는 [무력행사와의 일체성]이라는 개념이 더한층 논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맹국에 있어서의 "Give and Take"라고 하는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사고의 필요성일 것이다.

유럽의 NATO와 미국처럼 서로가 상대방이 공격을 받으면 함께 방위한다는 상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관계에서조차도 ACSA를 확실하게 기능시키고 있다.

더구나 미·일안보는 편무조약이며 기지제공만으로는 더 이상 [이익의 균형]은 성립하기가 어렵고 더구나 지금은 그 기지마저도 반환해 달라고 하고 있는 일본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점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균형]이 성립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스스로의 국가이익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한반도나 대만 해협 등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이 위기대처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아픔것도 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의 원칙이 결여된다. 말하자면 동맹으로서의 논리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ACSA가 일종의 국제상식으로서 앞으로 일본이 어느 정도까지 파고들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이다. 지금 미·일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일안보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는 [모순]이 보인다. 미국측이 자주 사용하는 "Collective Defense(공동방위)라고 하는 사고는 기본적으로는 "Shoulder to Shoulder" 즉 서로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투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헌법상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미국측도 알고 있고 거기에서 미국측으로서도 이익을 도출하고 있다.

페리 미국방장관이 4월1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상의 제약의 상황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협력을 "어디까지나 일본 헌법틀내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에 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헌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그 행사가 금지되어 있다. 이것을 이른바 [해석개헌]에 의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도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논의가 종래부터 있었으며, 지금 그것이 확대될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령 현행 일본헌법하에서 일본이 완전하게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행의 미·일안보조약에 즉각 중대한 모순이 생기게 된다. 안보조약에 있어서는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서 일본을 도와준다. 그러나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도와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에게 집단적 자위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일본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안보조약의 즉각 개정 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는 처지가 되어 이는 [동맹]의 논리에 반하게 된다.

더구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서 당연히 UN이 하는 무력행사를 동반하는 평화회복활동에 전면적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정말로 일본의 국익에 합치할 것인가이다. 지구 뒤쪽에서 발생한 분쟁에 자위대가 출동하여 땀뿐이 아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 경찰관을 자인하는 미국까지도 논의가 나뉘어져 있다.

NATO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미국의 결정적인 국익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불가결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en-Hercegovina)분쟁에 대한 개입마저도 미국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령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할터이니 대신 거주겠느냐고 하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말리아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일본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집단적 자위권과 UN의 집단안전보장의 연결점은 미국이다. 동맹에



있어서 [이익의 균형]은 항상 지도이념이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제 아무리 인도적이라 하더라도 국익상의 설명을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점이 개인의 인도적인 활동과 다른 점이다.

또한 오늘날은 냉전후라고는 하지만 지극히 불투명한 과도기이며 더구나 개별적 자위권마저도 완전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변칙적 상황에 있다는 것은 [자위대]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사고를 180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은 헌법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개정이라는 왕도를 거쳐 가야 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헌법개정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일본사회에 있어서 군대의 위상을 비롯하여 개별적 자위권의 명확한 위치부여, 나아가 그위에 위치할 집단적 자위권적인 것을 어떻게 정식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깊은 신뢰관계, 아시아와의 화해, 일본정치의 합리화, 투명화 등의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되어 정말로 미국에게 버림당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안보에 매달리게 된다. 안보라고 하는 테가 벗겨지면, 일본은 한꺼번에 군국주의로 뛰어들게 된다. 그러나, 그 안보의 [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책에 관해서 주저하지 않을수 없다.

후텐마기지 반환은 정말 일본에게는 바람직하나, 미군이 대량 철수해도 곤란하다. 평시에 한정되는 ACSA라면 미·일안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중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것만 먹을려고 한다. 이러한 탈냉전적 안보파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안보지지파의 전략론이 결여된 안보견지론은 지극히 모순되고 있다. 그들이 안보견지를 강조함으로써 도리어 안보의 수명을 단축시킬지도 모른다. 냉전후의 안보는 미·일에 공통되는 이익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5.미·일안보체제의 장래-변화의 3단계

아마 냉전후의 미·일동맹관계는 완만하게 3단계정도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미·일안보의 강화를 확인한 지난 4월의 미·일수뇌회담이었다. 냉전이 끝났는데 무엇 때문에 안보의 강화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련의 위협이 소멸하고 미·일안보의 장래상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이의 강화를 드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현상 유지만으로는 미·일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미·일양국이 인식하고서 서로 손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5-10년사이에 동아시아정세가 변함에 따라 이 미·일동맹에도 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어 주한미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혹은 러시아의 대두나 중국의 민주화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미·중관계가 양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요인에 의해 미·일안보가 지닌 위협대처의 의미가 대폭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아마 미·일안보체제는 계속될 것이다. 적극적인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독자방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병마개]론적인 소극적인 요소에 의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일안보해소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세계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핵무기의 역할이 후퇴하여 일본의 방위에 대해서는 일본 자체의 재래식무기가 주역이 될 것이다.

혹은 미·일안보가 존속하더라도 아시아에는 미·일안보 뿐만 아니라 미·호주 안보, 미·필리핀 안보, 게다가 미·중방위협정이라는 등의 다양한 2국간협정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묶는 형태로 아시아의 지역적인 새로운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中央公論

# 한반도 유사사태는 없다

시게무라 토시미스(마이니찌신문 논설위원)

1996. 6.

이 자료는 月刊 中央公論(日誌) 7월호에 게재된 것으로써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붕괴를 비롯한 한반도의 유사사태 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측면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한반도 유사사태는 없다

## 한반도 유사사태란?

한반도에서의 『유사사태의 발생』, 『북한체제의 붕괴』란 다음과 같은 사태의 발생이라고 생각된다.

1)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2) 북한의 핵무기개발 완료 3) 일본으로 북한 미사일의 발사 4) 북한 난민의 일본유입 5) 북한에서의 쿠데타 발생 6) 김정일의 암살 7) 김정일의 망명이나 퇴진 8) 북한에서의 대폭동 발생 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유사사태란 일본의 안전이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유사사태는 국제사회와 한국에 대한 유사사태와 일본에 대한 유사사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유사사태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와 일본과 북한이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일본까지 도달할 미사일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유사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북한으로부터 대량난민이 발생하여 일본으로 밀려올 것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간접적인 유사사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미군에게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냐는 논의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그러나 일본자위대가 한반도에 단 한발자국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한국 국민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게 또다시 한국을 침략할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고 한국 국민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본자위대는 결코 전투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로 수송업무 등을 지게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민간시설의 이용 등의 후방지원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를 찬성, 반대를 포함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논의하는 것이 의미없는 일이 아닌 민주적인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그 보다는 실은 이러한 간접적 유사사태는 일본 국민에게는 유사사태가 아니라 「有利」와 「협조」의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직·간접의 유사사태는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가까운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가령 북한에서 대량난민이 유출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으로 국가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처럼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 난민은 도망치게 하는 것이 북한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식량난으로 국가가 붕괴되어 흡수된 예는 최근의 국제정치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아자가 나올 정도의 식량난이라면, UN기구가 구제에 착수하여 각 나라들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국마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실시한다고 분명하게 언명하고 있다.

### 북한붕괴설의 허구

북한붕괴설에 대해서는 미국정부의 고관이나,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잇달았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 3일, 미하원 안전보장위원회 세출소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붕괴에 관해서 “이제부터는 붕괴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붕괴시기가 언제인가라는 문제이다”라고 언급하여 북한의 붕괴가 가까운 시일내에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보다 앞서, 페리 미국방장관과 도이치 미 CIA국장도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이 주목되었다. 또한 5월초에는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원단에게 칸벨 미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은 앞으로 6-7개월을 견딜수 있을런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북한붕괴설에 관해서 크리스토퍼 미국무부장관은 “조기붕괴할 징조는 없다”고 말해 북한 붕괴설을 부정했다. 말하자면, 북한 붕괴설은 미국정부의 판단이 아닌 것이다. 미국 정부 고관들 사이에서도 판단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미국에서는 매년 1월부터 4월경까지는 북한위협론과 핵개발위협론이 뉴스가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다음 회계년도(10월-9월)의 예산심의가 미의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미국방성이나 CIA는 냉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삭감이 요구되고 있다. CIA에 관해서는 그 기관의 존재의의마저 문제가 된다. 그 예산심의 시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리 렉 주한미군사령관이 증언한 곳은 세출소위원회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산소위원회」을 말하는 것이다. 결산심의에 관련된 위원회에서의 증언이었던 것이다. 칸벨 부차관보의 발언도 이러한 미국방성의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칸벨 부차관보는 미국방성 소속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관인 것이다. 일본의 국회의원에게 한반도 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왜 “북한 붕괴의 징조가 없다”고 발언한 것일까. 실은 북한 외교부는 미 국방장관이나 CIA국장,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의 붕괴발언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항의의 의사를 전했다. 미국의 국방관계자가 북한의 붕괴를 입에 담으면, 북한내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킬려고 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특히 북한군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북한 외교관의 입장이 곤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무부는 크리스토퍼 장관에게 “북한 붕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마라”고 못을 박았던 것이다. 미 국무부의 북한문제담당자는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하지만, “금년내에 붕괴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전쟁은 없고 미사일도 도달하지 않는다**

군사전문가 중의 대부분은 북한의 장비와 병력수준에서 언제나 전쟁가능성과 위협성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무기를 국산화하고 미사일까지 개량한 실적을 보면, 전쟁의 위협성을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탄약도 필요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석유가 불가결하다. 실로 한반도 연구자와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얼마나 석유부족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석유량을 알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95년 북한이 수입한 석유량은 겨우 100만톤에 불과하다. 이 숫자와 사정을 미루어 보고, 석유관계자라면, “북한의 석유부족은 매우 심각하다”고 바로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중국 석유의 경우는 가솔린과 경유, 제트연료 등 군사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경질분을 20%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다. 그 아무리 정제해도, 100만톤의 원유에서 생산되는 경질분은 30만톤이하이다. 나머지는 중유이다. 중국원유는 세계에서 이 중질분이 많고, 질이 나쁜 원유인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중에는 북한이 최고로 150만톤 정도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정도의 석유가 있으면, 전차의 연료탱크를 꽂쳐워서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에는 150만톤의 석유도 군사용은 없다. 더구나 이것은 원유로 연간 150만톤이라는 숫자이며, 군사용 석유는 연간 30만톤 미만밖에 없다. 이것은 북한은 상시 30만톤의 군사용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훈련도 하지 않고, 통상의 수송트럭과 연락용 자동차 연료를 한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석유를 저장하면, 1년에 30만톤은 저장된다는 숫자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30만톤은 북한 정부고관은 물론, 수송트럭, 버스와 비행기의 연료로 사용해 버리면 즉시 없어져 버리는 양이다.

북한의 병력은 100만명, 일본의 자위대는 24만명, 북한의 병력의 약 4분의 1인 자위대가 년간에 소비하는 석유량은 130만톤이다. 전쟁을 예상하고 있지 않는 일본자위대가 평상시의 훈련과 활동에만 130만톤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100만명의 북한군대가 소비할 수 있는 석유가 30만톤이라면 이는 너무나도 적은 양인 것이다.

그 밖에도 제품으로써 수입하고 있는 분량도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것도 북한의 하역시설과 석유탱크, 외화사정을 고려하면, 많이 보아야 연간 50만톤 이상은 수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훈련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훈련용에 소비되는 석유까지 계산하면, 북한이 비축하는 양은 소량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까지 긴시간에 걸쳐서 석유의 비축수준은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그 비축량도 다소 높게 책정한 한국의 계산에서도 70만톤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축시설은 아무리 계산해도 70만톤의 석유를 상시 비축해 둘 수 있는 석유탱크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몇년간의 북한의 석유수입량을 고려하면, 비축량도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생각된다.

근대전에서는 석유를 더운 물마냥 사용하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이미 공격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에서 망명한 전 북한외교관 출신의 고영환도 일본신문에서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사일은 일본으로 날아오지 않을 것인가? 실은 사정거리 1,000킬로미터인 노동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발표는 미국방성의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지상에서의 엔진테스트하는 위성사진과 93년 5월에 동해안에서 실시한 발사실험에서 사정거리

1,000Km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추측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겨우 1회실험으로 사정거리 1,000Km미사일이 개발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노동미사일의 내용은 전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벌써 북한의 노동미사일의 존재가 추측된지가 3년 이상을 경과했지만, 그것이 다단식 미사일인지 1단식 미사일인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찰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보망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 와서야 미국의 정보관계자도 노동미사일은 아직 개발 단계이며,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본에 도달할 미사일을 북한은 개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난민은 오지 않는다

북한 붕괴설에서는 일본으로 북한에서 다량의 난민이 들어온다고 지적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일본으로는 도망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는 망명자가 적지 않다. 망명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의하면 “북한사람들은 일본인을 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으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그 말 그대로 일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알고 있다. 그와 같은 감정이 북한 주민에게는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인가? 북한사람에게 일본인은 제일조선인을 차별하고, 조선인을 괴롭히는 나쁜사람들이며, 일제시대의 일본관헌의 무도한 행동을 한 사실을 반드시 교육시킨다. 또한 최근의 일본은 미국과 한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괴롭혀서 붕괴시킬려고 하는 존재이다. 그러한 일본에 북한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전자제품과 일본제 카메라 등을 보고 북한사람들도 일본이 선진적이고 풍부한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일본으로 다량의 북한 난민이 들어온다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일본중심사상이다. 일본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소수파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하거나 식량난 사태가 심각화할 경우에, 북한 난민이 도망치는 곳은 중국인 것이다. 일본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온다는 의견도 있다. 이것도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기나라를 잃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몸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북한이 남침한 경우에는 도망치기보다는 총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이것이 한국인의 애국심이다. 1950년 한국전쟁때에 한국은 멸망의 일보직전까지 밀렸지만,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대량의 한국인이 난민으로서 일본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김정일이 정권장악

96년 5월 제주도에서 한미일 3국 외무차관보급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세 나라의 견해가 유일하게 일치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김정일이 북한의 당과 군과 정부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이 인식은 북한 붕괴 등의 유사사태가 당분간 없다는 이해에 연결된다.

그렇다면 김정일에 대한 쿠데타는 없을 것인가?

가능성은 부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쿠데타와 암살방지를 위해서 모든 방법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결국 불가능하다. 김정일에게 회견할 때에는 엄격한 신체검사를 받고 필기용구마저 휴대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메모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죽은 후에 2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왜 후계자에 취임하지 않는 것일까? 역시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3년상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전통에서는 3년의 상복기간중에는 큰일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이 김정일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효자로 보이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흥미있는 증언은 김일성이 일본재단의 사사가와이 사장에게 말한 “왜 김정일을 후계자로 책봉하는가”의 이유이다. 김일성은 “북한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노인대책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김정일은 그러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언명한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발언권이 있는 압력집단은 노인그룹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항일투쟁을 한 노인들이 가장 시끄러운 그룹인 것이다. 이사람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 노인그룹을 납득시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정일 측근의 젊은 그룹이 제아무리 노인들을 추방하려고 마음먹어도

노인들쪽이 당서열에서는 훨씬 위에 있다.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사실은 삼성그룹의 이진희회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는 부친이 사망한 후 거의 3년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칩거해 있었다. 3년이 지나서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삼성그룹을 더더욱 비약시켰다. 김정일의 주석취임이 늦어진 것과 관련하여 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것이 북한 외교부가 수해피해에 대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한차례 거부했을때 “군이 반대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었고, UN주재 북한대사도 그와 같은 발언이 있는 다음에 「국제기구 지원 거부발언」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적 의미를 가진 현상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만일 군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면, “군이 반대하고 있다”는 발언이 북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화인 것이다. 말하자면 군의 힘이 그만큼 저하되었다는 증거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 외교부는 다시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군의 주장이 철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붕괴시키려하지 않는 이유**

실제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는 북한을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붕괴시키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만큼 강한 존재는 없다. 한국도 중국도 일본도 미국마저도 북한을 붕괴시켜 수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것일까? 독일통일로, 서독은 매년 20조엔의 자금을 동독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국가예산은 약 8조엔이다. 도무지 독일과 같은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만약 몇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한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고, 북한지역에서 경제력을 회복하는 自助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통일한국은 한국에게 재기할 수 없을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악몽인 것이다. 중국도 또한 대량의 기아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한의 식량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중국 외교부 고관에 의하면, 중국

은 작년 북한에 곡물 70만톤과 석유 130만톤의 공급을 약속했다고 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약 200만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한 양인 것이다. 식량의 경우는 반은 우호가격으로 나머지는 국제가격이다. 석유는 50만톤까지는 무상이고, 나머지는 국제가격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석유는 100만톤 밖에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으로의 곡물공급방법에 관해서 중국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로부터의 공급을 지켜본 다음 마지막으로 공급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중국은 부족분을 알아본 다음에 조절이라는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붕괴되면, 주변나라들이 북한주민을 돌본다든가, 난민을 보호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붕괴는 즉각 한반도 통일을 의미한다. 북한의 주민들은 그 시점부터 『한국국민』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은 즉각 식량과 치안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한국 국민인 이상 그들을 난민으로 취급할 수 없고, 국제적으로도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본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냐는 협조의 문제이다. 일본은 남북한 통일경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한편, 만의 하나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본에게 유리한 현상이 발생한다. 전쟁이 발생해도 일본으로 난민이 올 염려는 없다. 오히려 일본경제는 다시금 『한반도 특수』을 맞이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웃나라의 최대의 불행은 일본경제의 『특수』를 가져오게 된다. 일본에서의 한반도 유사사태 논쟁은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은 자기들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국민으로 비치기 쉬울 것이다. 만일 전쟁이나 북한붕괴 등의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시아의 대국이 갖게되는 숙명적인 것으로 아시아와의 경제거래로 일본이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 **북한붕괴의 진짜 원인은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제이다**

북한 붕괴설을 둘러싸고 식량난이나 경제혼란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북한체제를 실제로 붕괴로 이끄는 문제는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제』이다. 하지만 이 사상과 체제를 지키고 있는한 단기적인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고한 사상적 통제와 당을 중

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리는 정치의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경제의 혼란과 피해를 가속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방·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윽고 그 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개방·개혁정책을 실시하면, 김일성을 비판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같은 문제는 중국에서도 일어났다. 중국은 모택동의 개인책임을 문제시켰지만, 모택동 사상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과 「김일정주의·주체사상」을 구별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개혁·개방노선이 김일성비판으로 향하면, 김정일을 배제하는 「대외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개혁」, 「개방」이라는 말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진보」나 「전진」이라는 말밖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어쩌면 겨우 「개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북한이 경제적인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원인을 다음과 같은 4개의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사회주의의 모순 2)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제 3)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4) 냉해와 수해에 의한 농업부진 등이나 이 중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주체사상과 유일영도제이다. 이것은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이다. 예를 들면, 외국과의 합영기업을 설립해도 노동자의 채용에서 임금이나 상품가격의 결정에는 물론, 외국인의 주거나 기술지도의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당이 간섭하고 결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체제로는 시장경제는 생성되지 않는다. 북한이 제아무리 외자를 도입하여 합영기업을 증가시켜도 그것을 활용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되어있지 않다.

결국 북한경제의 침체에서 피하는 길은 김정일의 결단과 정치적 수완, 그리고 한국의 경제면에서의 전면적인 협력밖에 없다.

世界

冷戰後 中國의 世界認識과 地域戰略

駱印石(중국 인민해방군 국제관계대학 교수)

1996. 7.

본 자료는 일본의 月刊 時事雜誌 『世界』  
7월호에 게재된 기사로서 냉전후의 중국의  
역할 증대와 그로인한 세계적인 역학구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냉전후 중국의 세계인식과 지역전략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대립구조가 소멸되고나서부터 몇 년사이에 다극화의 경향은 날이 갈수록 분명하게 되고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극구조가 안정될 때까지의 과도기에는 국제적인 힘의 균형 상태가 무너져, [一超 多強]이라는 국제정세가 출현된다. 말하자면, 미국은 유일한 초대국이기는 하지만, 이미 한나라만으로 세계를 도맡아 관리할 힘은 없다. 러시아, 일본, 독일, 중국은 대국으로서 널리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종합적인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의 면에서는 초대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을 견제할만한 힘은 있다. 이 때문에 다극화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신구세력간에 힘의 術策이나 충돌이 발생한다. 미국은 세계의 리더적인 지위를 단호하게 지켜 나갈려고 할 것이다.

다극화의 과정은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며, 이러한 힘의 술책은 앞으로 수년간 국제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된다. 세계다극화구조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구조에도, 다양한 세력의 병존상태가 출현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예로 들면, 현재 이미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ASEAN이라고하는 5개의 세력으로 구성된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ASEAN은 신흥 지역세력이지만,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대국으로부터도 주목받고 있다. ASEAN 7개국은 인구 3억명이 넘는다. 더구나 동남아시아로 확대하여 [대아시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ASEAN자유무역구]가 형성될 예정이다. 과거 몇 년간 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경제협력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다. ASEAN내부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으로서의 역량과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극구조속에서 영향력은 경시할 수 없다.

대국에 의해서 형성된 전세계규모의 다극구조외에 각지역에도

대국과 중소국가집단에 의해서 형성되는 다극구조가 있는데, 이 두개가 연결되어 중층적이며 복잡한 세력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세계에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면, 대국의 행동은 제약되어 중소국가가 국제적인 발언권을 증가시켜 나간다. 다극화는 결코 대국정치를 조장하지 않고, 역으로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연결된다. 새로운 세계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많은 발전도상국이 공동으로 평화유지와 발전에 공헌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정치와 경제의 신 질서를 국제간에 수립할 것이다.

### **국력의 경합과 발전도상국의 비중 증대**

냉전종결후, 그때까지 양대 대국의 대립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던 각 나라의 국력의 경합이 격렬하게 되고, 군비경쟁은 경제경쟁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21세기는 [경제제일]의 세기라 불리울 것이다. 많은 나라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연동시켜 국가의 장래를 건 이 [힘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경제발전은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지역적인 경제블럭이 다수 실현될 것이다. 현재 이미 세계에는 24개의 경제블럭이 존재하고, 참가국은 140개국 이상에 이른다.

경제협력에 있어서의 지역화, 블럭화의 경향은 국제경제의 일체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나라의 경제가 상호의존하고 침투하여 제약하는 정도는 강화되어 간다. 그러나 경쟁과 협력은 동시에 존재하고, 역시 경쟁이 주가 된다. 경제의 일체화가 진행되어도 국가이익을 제일로 하는 기본원칙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국가의 진흥, 국력의 발전, 그리고 [경제와 안전이 제일]이라는 것이 국가전략상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 점은 초대국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경향은 21세기의 특징으로서 앞으로 점점 강화되어 보다 많은 나라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세계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선진국은 다들 2,000년까지 년 2-3%의 성장 혹은 1%이하의 성장을 유지한다. 동유럽 각나라의 성장은 아마 년 4%에 이를 것이다. 러시아의 마이너스성장은 상승일로를 걸어, 96년에는 년 2%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을 보면, GNP의 남북격차는 축소될 것이다. 발전도상국은 2,000년에는 전세계의 GNP의 25%를 차지하고, 2,020년에는 선진제국의 GNP를 상회할 것이다.

### 전략적 조정의 시대

냉전종결후, 그전의 미국과 소련에 의해 확정되어 있던 진영의 경계선은 소멸되었다. 세계는 커다란 동요와 분열, 개편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대국관계에는 불확정 요소와 새로운 대립이 초래되어 정세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황도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의 관계는 소련과의 대항이라는 구심력을 상실하여 분리해 간다. 일본과 독일은 다같이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의 길로 매진하고, 세계의 대국다운 힘을 발휘하려고 한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과 좀더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자하여 미국의 주도적인 지위에 도전한다. 각지역에서의 주도권다툼은 점차 격렬하게 되어, 경제경쟁의 격화와 함께, 서방대국사이의 경제적 대립은 심화된다. 앞으로 이 서방제국 상호간의 대립은 더욱 더 격화될 것이다.

미국 및 서방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변함없이 상당한 불확실성이 강하다. 서방의 NATO확대구상은 실질적으로는 일부 동유럽국가들을 가입시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측의 강한 반발과 대항조치에 의해서 NATO의 확대속도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로서는 서방과의 우호관계의 발전은 앞으로 외교의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경제상황의 호전과 함께 대국



의 자리에 되돌아 오고싶은 기분도 있어 러시아 국내의 민족주의와 서방측과의 대립감정은 앞으로 점점 강력해질 것이다.

중국이 경제력을 증강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와중에 미국과 서방제국에 의한 중국제지의 움직임도 강화된다. 대만이나 티벳문제로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남사군도나 홍콩문제에 개입한 것과 같은 것은 앞으로도 자주 있을 것이다. 미국은 더우기 인권, 무기확산, WTO 가맹문제등에서 중국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격렬한 기복을 되풀이하여 상당히 위험한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한편 전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미중관계 쌍방의 이익이 된다. 중국이 이성을 가지고 계속 대항해 나가면, 미국 국내의 냉정파가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중국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 때문에 미중관계는 완전한 결렬 혹은 직접 대결에는 이르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 유일한 초대국으로서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걸프전, 중동평화, 보스니아 문제등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은 자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 패권주의가 다른 대국과의 사이에 대립과 긴장을 유발시키지만, 실제의 국력이 저하하고 있는 것과 세계구조의 다극화에 의해 미국의 행동은 대폭적으로 제약당한다. 흥미하는 미국경제는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많은 나라와 경제협력관계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미국과 각 대국과의 대립은 계속되지만, 미국, 유럽, 일본이라는 서방사회는 안전협력 등의 면에서 기본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상호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대립은 조화가 가능한 수준에 머문다. 앞으로도 각 나라는 복잡한 대립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의 길을 탐색해 갈 것이다. 대국간의 상호 관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직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앞으로의 대국관계의 기본적인 특징이 될 것이다.

### **세계적인 긴장완화와 지역적인 충돌**

세계의 안전보장환경은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는데, 세계대전을 일으킬 요소는 출현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비교적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적인 무력충돌은 역시 발생되지만, 냉전종결의 충격은 소멸되고 있으며, 냉전이 남긴 일부 지역의 분쟁은 정치적인 해결로 나아가고 있다.

UN 평화유지활동은 전진하고 또한 각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에서 지역분쟁의 발생빈도는 저하하고, 분쟁과 분쟁사이에 평정한 시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냉전종결이후 세계에는 군비삭감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군은 21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러시아군은 28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삭감되었다. 핵미사일도 군축 회담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그러나 군사력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지역의 안정에 불안을 느낀 일부나라는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군비만은 확보하려고 한다.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는 군사적 우세를 보유하고 군사개입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이테크무기의 장비나 국외로 파견하는 기동부대의 설치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제4세대 전투기 F-22이나 퍼밋트급 원자력잠수함, Stalth 전차 등의 신형무기를 준비하고, 동시에 전투구역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을 확립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 100개소이상의 나라와 지역을 향하여 무기와 군사기술을 계속 수출하여 세계 최대의 무기공급국이 되려고 하고 있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둔 군비증강의 기세가 높아질 것이다.

군비관리는 냉전종결전후부터 진전되고 있는데, 관계 각 나라가 군비협의를 하고 있지만, 금세기 중에는 더한층 축소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군비관리의 목표는 세계대전 방지에서 국지전쟁의 방지로, 억제 대상도 초대국에서 세계 각 나라로 옮겨졌다. 군비협이는 서방대 동방이 아니라 다국간에서 이루어져 보다 많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어 있다.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군비관리의 특매품으로 하고 있지만, 확산방지를 위한 일부 규정이 지닌 불공평과 실시할 때의 이중기준은 때때로 발전도상국의 정당방위나 신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한다. 또한 미국과 일부 핵보유국은 핵억지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약에 먼저 조인하자고 하는 중국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사이에 안전과 군비에 관련된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군비관리와 군축은 중대한 책무이지만 실현되기까지의 여정은 멀고, 이는 앞으로의 국제무대의 초점이 될 것이다.

## 중국의 역할 증대

동아시아의 대두는 금세기 후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2,000년까지 동아시아경제는 년 7%의 성장경제를 유지하고, 전세계 GNP에 차지하는 점유율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증대하고, 역으로 서유럽의 시장점유율은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감소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 정치회담이나 안전보장협의로 밀접하게 행해 질 것이다. [동아시아 모델]은 세계적으로 주목되어 동아시아의 전략적 지위는 유럽에 이은 중요한 것이 된다.

중국의 급성장은 동아시아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2,000년에는 중국의 인구는 1980년에 비해 3억명이 증가되지만, 1인당 GNP는 1980년의 4배로 되어 국민생활수준은 향상될 것이지만, 중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2,050년경일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하는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GNP 계산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GNP는 현재 미국의 11.6%, 일본의 20.9%에 상당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세계 경제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최대의 역할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외자유치국이라는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부터 중국에 투자된 금액은 이미 1,354억달러에 달하며 앞으로도 증가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외자총액은 95년에 2,8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거대한 상품시장, 투자시장으로서 중국의 존재는 경시될 수 없다. 또한, 일관해서 자주독립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취해온 중국은 강대해져도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은 일부국가간에 영토주권, 해양권익, 민족종교분쟁 등의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외에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고, 일부 나라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앞으로의 안전보장환경에 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의견이 있다. 중국을 포함하는 일부 나라는 동아시아지역에는 충돌발생의 위기가 있으므로 진지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긴장완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근거는 이 지역에는 중,미,일,러, ASEAN이라고 하는 복잡한 세력이 상호 제약하는 구조이며, 또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염원에서 충돌회피능력이 강력해져서, 평화와 발전을 상호촉진하는 양성적 순환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의 일부에는 전쟁발생의 위협을 과대시하는 사람들

이 있어, [중국위협론]이 제창되고 있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일부 나라와 지역을 동원하려는 [중국봉쇄]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은 격화될 것이다.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사회주의 중국의 위협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정세하에서도, [냉전사상]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은 종결되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2대 대국간의 분쟁에서 생겨난 대항의식이나 억지전략 등의 구관념은 변함없이 [힘의 공백을 매운다]든지 또는 [군사적 존재] 등의 낡은 전략관념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전략과 병력배치는 지금까지 냉전시대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다.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을 유지강화하고, 그 세력에 의존하여 지역의 주도권을 잡아 일부 나라에 공격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냉전사상]에 의해 채택된 안전모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역효과가 될 것이다. 중국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나라는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1) 이 지역은 정치는 비교적 안정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긴박한 위기는 없다.
- 2)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입국의 길을 가는 것은 이 지역 각 국가의 기본 목표이다.
- 3) 국제분쟁의 불씨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용이한 제재와 무력행사에 반대한다.
- 4) 각나라가 평등하며, 특정한 나라에 대항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안전협력체제의 설립을 점차 실현한다.
- 5) 대동단결의 정신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의 안전과 협력을 추진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것은 역사의 조류에 따라 21세기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적인 이치이다.



世界

『Power Politics』로부터의 탈피

카모 다케히코(도쿄대 교수)

1996. 7.

본 자료는 일본의 月刊 時事雜誌 『世界』 7월호에 게재된 기사로서 美·日 안보체제와 관련한 세계사의 새로운 역학구조를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한 기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Power Politics』로 부터의 탈피

### 1. 역사의 전환-안보체제의 변질

1990년대의 세계정치는 지역적인 수준이나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항구적인 평화가 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것은 냉전의 종결이 한편으로는 핵대국 상호간의 전면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데는 거의 성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배제주의나 민족주의의 급격한 대두 및 분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각한 국내 및 국가간의 대립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냉전의 종언은 분쟁이나 민족주의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냉전후의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역사적 조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 조류란 냉전 이데올로기 대결의 소멸로 인해 한층 촉발되어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제사회를 중심으로 한 상호침투나 상호의존이 급속하게 높아져 그것을 배경으로 국제사회는 상호공존과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다국간의 국제적인 틀이나 기구창설이 장려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다이내미즘을 의미한다.

이 조류는 세계 정치에 있어서 여전히 다양한 민족배제주의나 민족주의의 저항이나 반발을 받고있으나 또한 이것이 주류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흐름은 [군사력과 외교의 통합]이라는 고전적 “Power Politics”에 대한 새로운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와 같은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관계에서는 오늘날 마치 “Power Politics”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한꺼번에 열린 감을 준다.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그러한 국제적 환경이나 토양을 변혁해 나가는 외교사상이나 행동, 그리고 정책이 각 나라 정부나 시민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외교는 과연 이러한 시점에서서 정책과 행동을 착실하게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美·日안보체제가 지금 거대하고 중요한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을 정면으로부터 응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요한 변화는 특히 두가지 점에서 현저히 나타나 있다.

즉, 첫째로 美·日안보체제의 [아시아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변화이다. 그것은 美·日안보체제를 양국의 안보문제나 극동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안전보장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냉전후의 美·日안보체제에 보다 장대한 전략 목표를 제공한 점이다. 이것은 안보체제가 작동하는 영역의 사정, 즉 틀(Framework)의 현저한 변화이다.

둘째는 美·日안보체제에 있어서 군사동맹화를 추진하는 즉, [동맹의 군사화]를 도모하는 변화이다. 美·日의 안전보장의 구조는 이미 60년대부터 군사동맹화를 촉진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번은 그것이 냉전시대의 동맹화 수준을 넘어 美·日의 긴밀한 군사협력을 한층 제도화하는 것에 변화의 새로움이 있다.

이상의 두 가지 변화는 하시모토·클린턴 美·日수뇌회담에서 서명된 [美·日안전보장공동선언]속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일본의 시점에서 보아 중요한 것은 이상의 변화를 [美·日안보체제를 재정의]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종래의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을 기본적으로 개정하여, [極東의 有事事態]를 포함하여 미군지원의 구체적인 입장에 관한 안전보장정책의 체계화와 정책의 집행과제를 새로이 짚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제하에서 일본정부는 『유사』 법제의 기본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말할 필요도 없이, 美·日관계는 1990년대에 들어와 무역, 금융, 투자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의 많은 영역에서 점점 더 상호의존해가는 국제안전보장 공동체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를 위한 공통적인 외교의 행동규범을 경제에서 정치의 방향에까지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동시에 美·日쌍방도 민주주의나 인권존중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제가치를 공유하고, 쌍방 시민의 제휴가 가능한 “Transnational”한 틀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미나 반일, 또한 廉美나 廉日이라고하는 국민감정이나 국민정서는 철저히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문제삼고 싶은 것은 美·日안보체제의 질적 전환이 과연 21세기의 2,020년대지 2,030년대까지의 장기적인 역사의 시점에 섰을 경우, 美·日 양국정부뿐만이 아니라 널리 양국시민사회에서도 최적의 [정책적 선택]이며, 동시에 최적의 [역사의 선택]인가의 여부이다. 美·日안보체제의 질적 전환에 관해서 적어도 이하 5가지 점을 비판적으로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논의할 때, 더 이상 美·日만의 2국간의 틀이나 시야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동아시아나 아시아·태평양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역유사사태]에 대해 어디까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하면서, 그 영역에 정책대응을 해 나갈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극동 유사사태]나 [중국위협]의 문제에 관해서 그러한 위기의 인정과 대응이 아니라 위기방지 방법을 둘러싼 정책구상 자체가 문제시 되어야 된다.

셋째로, 위의 두 가지 논점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나 아시아태평양의 국제시스템의 구조적 특색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문제이다. 그

구조는 예를 들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Power Politics”수법만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의 여부이다. 또한 그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군사화하고 아시아화하는 美·日동맹이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것인지의 여부이다. 그와 함께 다국간 국제 안전보장의 틀이나 조직화만이 양국간 동맹보다는 지역의 안정이나 평화, 경제의 번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넷째로 UN 평화유지활동을 이 국제지역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그리고 다섯째로 美·日안보체제의 아시아화나 군사동맹화가 과연 美·日 양국 국민의 의사나 주장을 어디까지 반영했는가이다.

미국측의 동아시아전략구상의 중심적인 인물중의 한 사람이었던 Ezra Vogel 하버드대교수는 “안보의 재정의는 일반 미국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普天間)의 반환에 관한 미국의 결정으로, 안보체제의 전환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거기에는 일본국민의 논의나 여론적인 의사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다. 즉 안전보장정책이 국내의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서 분리된 곳에서 중요한 변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 동맹의 한계- 전략의 비대칭성

美·日안보체제의 재정의의 시도는 분명하게 일본의 무라야마전 정권이나 하시모토정권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클린턴 미정권이 처음부터 리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인지, 일본이 중장기적인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정책마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정책적 대응 입안에 있어서도 비대칭성 즉,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대칭성은 전후 美·日관계의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 [보호자, 피보호자]의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대응·입안을 둘러싼 전략 스타일의 비대칭성보다는 정책의 내용 그 자체를 둘러싼 비대칭성이 아닌가?

“Nye Initiative”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공약에 아시아태평양 주둔미군의 10만명 전방전개작전을 단중기적으로 결정하고, 더구나 美·日을 포함하여 다국간이 아니라 양국간 동맹체제를 전략정책의 골격으로 하는 구상이다. 실로 이러한 구상은 냉전종결직후의 미국에서는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클린턴정권 초기에도 명백하지 않았다. 클린턴정권의 [외교평가]에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냉엄한 것이 있었다.

“Nye Initiative”는 미국의 시점에서 보면, 클린턴외교의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평가를 한꺼번에 뒤집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美·日안보체제의 아시아화 및 군사동맹화를 양측으로 하는 “Nye Initiative”는 클린턴정권에 의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전략이며, 일본은 이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만 것이 아닌가?

나이(Nye)가 이 구상을 발표한 후에, 쓴 최신의 논문은 미국이 신전략을 채택하기에 이른 이치를 알기 쉽게 묘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선택폭은 1)아태 지역에서 철회하여 서반구 내지 대서양전략만을 추구하는 것, 2) 냉전이 종결된 것에서 이 지역의 동맹체제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세력 균형정책을 관계제국이 채택하게 하는 것, 3)지역의 동맹체제를 대신하여 유연한 지역제기구를 창설하는 것, 4)NATO형 지역집단동맹체제를 만드는 것, 그리고 5) 미국이 이 지역에서 리더십을 여전히 발휘하는 것 이라는 5개 항목이었다. 거기에서 Nye는 최후의 5번째의 전략 즉, 미국의 리더십 전략을 최량의 전략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Nye는 미국이 첫째로 기존의 동맹 체제를 강화하면서, 그것에 냉전후의 새로운 기반을 부여하는 것, 둘째로 이 지역에 미군의 전방전개 전력을 유지하는 것, 셋째 지역 제기구를 가령 발전시키는 경우에도, 지역 제기구를 미국의 리더쉽 전략에 대체시키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그 보완적 역할에 머물 것 등을 주장했다. 더구나 Nye는 클린턴정권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다국간이 아니라, 양국간에 의한 안보대화의 항목을 넓혀갈 필요성을 강조한 다음, 냉전후의 세계에서 동맹을 재구축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최량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Nye의 미국 리더쉽전략은 철저하게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다국간 안전보장체제구축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2국간 주의라는 틀속에서 동맹국을 동반자로 부르면서 미국의 리더쉽을 발휘해 가고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Nye Initiative”에 보이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관해서 미국의 대일전문가인 Chalmers. Johnson 일본정책연구소장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방성이 일본을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더구나 美·日상호의 이익은 양국의 경제적 긴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美·日안전보장조약의 평화적인 해소를 주장했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미군의 존재가 일본의 군사화를 억제하는 유력한 도구(병마개론)로 변함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일본에게 전면적으로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에 있어서의 APEC과 같은 다국간기구를 구축해 갈 때, 오히려 미국의 외교노력을 축소하게 된다는 염려에서 였다.

기이한 것은 “Nye Initiative”는 20세기말의 아마 앞으로 몇년간이라는 단기간에 한해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생각되는데도, 일본측은 美·日 2국간주의에 의한 군사동맹체제가 다른 선택보다 타당하며 적절한 것으로 솔직하게 수용하고 만 것이다. 그것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역사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美·日 양국간의 틀을 넘은 국제안전보장구상과 정책의 구체적인 마무리가 없는 것이다.

### 3.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구조적 특성

美·日안보 체제의 재정의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극동 유사시를 포함한 지역 유사사태]의 논점에 관해서, 이것을 아시아태평양지역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시점에 서서, 우선 첫 번째로 논의할 것은 [중국위협론]의 적합성이다. Nye의 구상은 중국에 대하여 미국은 냉전시대인 40년대말부터 70년대초까지는 봉쇄정책을 취하지 않고 국제사회로 유도하여, 새로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의 위험을 억제하고 또한 중국의 군사정책이나 행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클린턴정권이 대중봉쇄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바른 생각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고 유의할 것은 중국의 대외정책이나 행동에 관해서 그것이 동아시아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Power Politics”의 대두에 크게 연결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비판하고, 중국위협론에 연결되지 않도록 용의주도한 외교상의 요청을 도모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위협론]은 냉전후 세계에서 그 실태가 실현 가능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중국이 아시아의 나라들, 특히 동아시아의 나라들중에서 인구, 영토, 국력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큰

나라로 비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보아 동아시아 국제지역전체의 68%에 상당하는 영토를 차지하고, 또한 동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민총생산(GNP)는 IMF 계산 방식에 의하면, 일본의 GNP보다는 아직 적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GNP보다는 크고, 게다가 21세기의 10년대경에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하지 않을까라고도 추측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핵보유국이며, 또한 중국의 무기수출은 1993년 현재 미·영·러·불에 이어 세계 제5위이며, 아시아에서는 단연 제1위의 무기수출 대국이 되어 있다.

중국은 장래에 분열되지 않는 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아 이미 [준초대국]이 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중국위협론]이 중국의 거대성이라는 단순명쾌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유감스럽게도, 다국간 국제안전보장 규범 구축이나 틀 그 자체, 예를 들면,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등의 핵군축, 군비관리체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외교자세나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96년에 들어와서 대만의 총통선거를 견제할 목적으로 대만해협에서 미사일발사의 군사연습을 거듭한 이례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군사력에 의한 위협정책으로서 대만은 물론, 아시아 주변국가들에게 “Power Politics”형의 거친 행동양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할수 없는 것은 중국과 대만간의 긴장이 대만 총통선거후에 한꺼번에 수습된 것이며, 중국 스스로의 위협론이 아시아나 세계에서 고조되었다가 스스로 고립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외정책적 배려를 그후에 시도해 보고 있는 것이다. 금년 4월 19일, 헤이그에서 미중외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중국은 분명하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4월 26일에는 중러수뇌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의 전략적 관계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강택민주석은 한미수뇌회담에서 제안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4자회담구상과 관련하여, 중국이 그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을 단순히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위협이라고 경솔하게 단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지역국가들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고, 다국간 국제질서로 유도하여 안전보장에 있어서 공존과 상호의존의 「룰」을 다른 지역국가들과 함께 구축해가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중국의 거대성이라는 특성만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세계 제지역과 비교해서 냉전종결후의 세계에서는 힘의 다극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국중심형의 더구나 이데올로기나 심정을 달리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지역에서 고전적인 “Power Politics” 예를 들어 힘의 균형정책을 유효한 목표로 삼을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힘의 균형정책]은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안고 있는 대국간의 생생한 권력투쟁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세계정치사가 보여주는 바 그대로이다. 국제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보증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대국중심형의 구조적 특성을 상대화하고, 민주화하면서 상호의존적 사상을 근거로 하여 다국간 협조체제를 무엇보다도 제도화해가는 것이 아닌가?

#### **4. 미래의 선택 - 평화창출의 시점**

美·日안보체제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된다. 그런 것은 결코 일본에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21세기초까지는 국제적인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다국간 안전보장기구의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할 수 있도록 끈기있게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의 정책당국자는 흥미롭게도, 이번의 美·日안보공동선언에 대하여 원래부터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그 반응은 억제적인 것이었다. 중국은 [美·日위협]을 표면에 내세워, 美·日과의 긴장이나 위기를 고조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화와 군사동맹화를 강화하는 美·日안보체제를 축으로 [중국위협]을 부추켜서 [위기 시나리오]를 써서는 않된다. 미국도 대만해협위기가 수습된 후에 일련의 대중외교에 있어서 대중국 제재에 매우 신중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클린턴정권은 5월에 들어와 대중 최혜국대우(MFN)의 갱신을 결정했다. 일본이 변질하는 美·日안보를 방패로 [중국 위협]에 준비성없이 대응하려고 하면, 그것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의도하는 것과 크게 다른 바가 될 것이다. 앞으로 美·日양국정부가 美·日안보체제에 바탕을 둔 유사상정 시나리오를 협의하고, 美·日군사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것은 [극동유사]라고 표현하지만, [한반도유사]가 아닌가.

일본정부는 [극동유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미 1)시설.구역의 이용(미군에 의한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의 일시적 이용), 2)미군에 대한 후방지원(방위시설청이 미군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보급품, 역무의 조달, 또는 해상에서의 급유 등을 포함한 자위대에 의한 물품의 대여, 미군병사, 장비품 등의 자위대항공기에 의한 수송, 조난한 미군병사 등의 수색, 구난 그리고 미군병사의 진료, 미군으로의 정보제공), 3)그밖에 해외 일본인등의 구출, 연안경비, 주요 시설 등의 테러대책, 또한 대량 난민대책 등의 항목을 들어 제각각의 내용의 검토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美·日에 의한

유사시에 대비한 협력을 상징하여 美·日양국정부는 [美·日방위 협력의 지침]개정협의를 개시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자위대와 미군과의 사이에, [美·日물품역무상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본에서는 유사시에 대응한 법제정의 문제가 중요 정치과제로서 주목받고 있다.

「유사」란 이것을 크게 [평시=폭력적 분쟁이 없는 평화상태]가 아닌 국제환경, 즉, [위기에서 전쟁까지 넓게 변동하는 국가간의 긴장대립상태]를 [유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든 [전쟁]이든 국제정치학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고, 국가간에서 [위기]가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끝났는가, 또한 [위기]가 국가간에 현실적으로 공연하게 무력충돌으로서 [전쟁]상황으로 연결되는가, [위기]나 [전쟁]의 구체적인 인정이나 판단도 제각각의 국제분쟁의 역사적 사례에 의해서 상이하다. 게다가 전통국제정치학에서는 특히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외교]와 [내정]을 구별해 온 것에서 [위기]도 [전쟁]도 종래, 주권국가 서로간의 국제위기, 국제전쟁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90년대의 세계정치에서는 더 이상 옳은 것이 아니다. 외교와 내정은 선진 공업국에서도 도상국에서도 점차 상호간에 교차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위기]는 국가간의 영토 등 명백한 분쟁의 쟁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기성국가들의 內發的인 쟁점이 원인이 되어 국내위기로 서 일어나고 그것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위기로 발전하는 사례(구 유고의 보스니아 헬체고비나분쟁등)이 현저하게 되어, 오히려 그러한 사례가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냉전종결후 세계에서 놓쳐서는 안되는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다. 이 시점은 美·日안보 체제가 상징하는 [극동유사] 그것도 [한반도 유사]의 사례에 있어서 상황 대응여부에 따라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의 [유사] 및 [유사법제] 논의에서는 국내의 내발적 제요

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위기의 발생]에 관해서 이것을 외부에서 어떻게 사후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지나치게 선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위기의 사전방지를 위해서 일본정부나 일본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되는가라는 사례의 발상이 눈에 띄게 결여되어 있다.

둘째로, [유사]논의나 정책대응은 위기의 인정에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정책담당자가 이것을 담당하여 [집단사고]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집단사고]란 강한 적의 이미지나 편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집단의 의사와 결속을 끊임없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경직된 위기정책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역사적 經驗則에 근거한 위험성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로, [유사]논의나 [유사법제]논의가 대미관계 뿐만 아니라 대 한반도, 대중국, 대러시아, 대동남아시아와의 국제관계에 널리 충격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유사] 및 [유사법제] 논의는 [유사]를 사전에 회피하는 방법이 크게 결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美·日안보체제의 2국간틀에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넷째로, [유사] 및 [유사법제] 논의는 일본의 헌법과의 정합성 및 모순적 쟁점을 분명히 하여, 헌법의 틀속에서 인정된 정책과 그렇지않는 정책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헌법의 틀이 일본의 국제공헌의 저해요인이라고 하는 유력한 반대의견이 있는데, 나는 헌법의 틀을 준수하면서 오히려 [유사의 평시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대외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우선 아시아태평양에 있어서 평화창출정책구상을 내세우는 것이다.



中央公論

미·일·중 3각 위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테라시마지쓰로(미쓰이물산 워싱턴 사무소장)

1996. 8.

본 자료는 일본의 月刊誌 『中央公論』 8월호에 게재된 기사로서 미·일·중 3각관계의 역사적 위상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국면에 대한 일본의 대외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미·일·중 3각 위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미·일·중 3각관계의 역사적 위상

### 1. 냉정하게 인식해야 될 미·중관계의 심오함

미국의 본격적인 아시아진출은 유럽에 비해 훨씬 늦었다. 1853년 페리제독이 일본에 진출한 시기를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고조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남북전쟁(1861-1865년)의 후유증으로 생각되고, 1889년 미·소전쟁에 승리하여 본격화되었다. 말하자면, 아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뒤늦게 온 식민지주의 제국이었다. 뒤늦게 침입한 미국은 중국정책에 관해서 1899년 존헤이 국무장관의 [문호개방·기회균등]과 같은 이상주의적 메시지를 발신하였는데, 중국도 유럽열강의 중국침략 및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대륙으로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일본을 억제하는 카드로써, 미국에 대한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미·중외교를 개시하게 되었다.

덜붙여서 말하면, 미·일관계의 역사적인 불행은 미국의 본격적인 아시아 진출과 일본이 청일·러일전쟁을 거쳐, 대륙으로 진출해 가는 시기가 일치하여, [競合]관계로 아시아를 논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해군성은 1906년에는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한 시뮬레이션인 오렌지계획에 착수하였다. 또 하나 미·중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在美華僑의 존재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대만에서도 國父로 평가되는 孫文은 화와이에서 고교 대학에 이르는 약 5년간의 면학을 통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손문이 청조 타도와 민주공화제의 수립을 목표로 한 [興中會]를 1894년에 하와이에서 결성했다. 결국 손문의 辛亥혁명운동을 지지한 것이 在美華僑였다.

현재 미국에는 140만명의 화교가 있다고 하는데, 미·중관계의 파이프로서 화교가 수행해 온 역할은 무시하기가 어렵다. 손문의 부인, 宋慶齡, 그 여동생으로 蔣介石의 부인이 된 宋美齡,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중진으로 워싱턴에서 활동한 宋子文일족도 말하자면 [핫카(客家)로

블리우는 북방 한족출신의 일족인데, 손문의 혁명을 지지한 재미화교 중에서도 특히, 이 『객가』 네트워크의 의미가 상당히 컸다고 한다. 장개석도 현재의 李登輝도 싱가포르의 李光耀도, 중국의 등소평, 李朋도 『객가』 출신이다. 단순하게 대륙계와 대만계 화교로 분류하기가 쉽지만, 예를 들면, 고 닉슨미대통령의 중국방문 배후의 입안자인 미국 군인 크레아. 쉐노트 부인, 그리고 陣香梅처럼 대만 로비의 대표격으로 블리우면서 중국과도 네트워크를 가진 인물도 적지 않다.

그리고 현재 AT&T의 일본지사에서 활약하는 르렌. 후쿠시마가 쓴 [미국인이 중국에 매력을 느끼는 9가지 이유]에 의하면,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을 “세계사에 중요한 의미를 준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로 생각하고, 아시아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존경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원리원칙과 철학에 집착하는 중국적인 행동양식은 미국인에게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는 균일적이며 획일화된 일본의 [섬나라 근성]보다도 중국의 스케일이 큰 [대륙의식]쪽이 미국인에게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게다가 일본인의 애매하며 원칙에 집착하는 경향보다도 중국인의 본심적인 태도가 정직하며 성실하게 비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중화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중국인의 자존심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념성에 대한 집착은 질이 다르지만, 자기중심적 가치를 내세우는 대국의식이 [상호경애]와 같은 감정을 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 점은 미·일관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요소이다.

## 2. 불가사이한 『Biorythem』

100년간의 미·일·중 3각관계의 역사를 대국적으로 관찰해 보면, 불가사이한 바이오리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미·일관계가 좋을 때에는 미·중관계가 나쁘고, 그 반대로 미·일관계가 나쁠 때에는 미·중관계가 양호하다는 상관 『바이오리듬』이 있다. 미국을 축으로 생각해 보면,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는 명치 유신후에 강력하게 근대화할 추진하는 일본과 유럽 열강에게 침식되어 몰락을 계속하는 淸朝와 비교해 볼 때 일본에 대한 호감이 우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 아나폴리스 미 해군학교에 10여명의 일본인 해군사관생도까지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러·일전쟁시 일본의 커다란 힘이 되었다. 러·일전쟁후에는 일본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어, 근대화가 지체된 중국에 대한 동정과 중국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으로서의 공감이라는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 주기는 태평양전쟁까지 계속되고,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에는 공산 중국에 대한 긴장감을 지렛대로 한 관대하고 지원적인 對日중시정책이 계속되고, 그 흐름에 의해 일본 경제는 강대화하고, 철강과 자동차생산이 미국을 능가하는 1980년대에는 다시금 反轉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 미·일·중 3각관계의 새로운 국면

[21세기의 경제대국 중국의 매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강대화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이중적인 의미에 있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은 경이적이다. 95년까지의 5년간의 년평균 실질성장률은 11%로,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다. GDP의 세계랭킹에서는 94년 현재 제8위이다. 하나의 지표로서 철강생산량에 주목하면, 95년의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9,339만톤으로, 미국의 9,357만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본의 1억164만톤 다음에 이른 곳까지 와 있으며, 계획에서는 2,000년까지 1억 2,000만톤에 이르며, 세계 제1의 철강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1. 미·중대립의 새로운 국면

5월 20일 PBEC(태평양경제위원회)의 제29회 워싱턴회담에 있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850명의 환태평양제국 17개국에서 온 기업경영자들 앞에서 금년의 對中 최혜국(MFN)대우의 무조건 연장방침을 발표했다. 클린턴은 92년의 대통령선거 때, 『부시』정권의 천안문사건이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고, [인권외교]를 내세웠다. 하지만, 4년뒤인 지금 공화당 우위의 의회가 對中강경노선을 강화시키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클린턴이 가장 친중국적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좌표축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파키스탄에로의 핵관련기술수출문제,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압력, 변함없이 존재하는 중국내의 인권문제등,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분명하게 고조되어 있다. 또한 과열된 미국기업의 對中투자붐도 주춤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많은 미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법체계의 미정비에 의한 분쟁에 직면함에 따라 당혹과 실망을 맛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하여 무조건적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심화이다.

천안문사건이 일어난 1989년의 미·중무역은 177억달러(미국의 수출 58억달러, 수입 119억달러)였다. 그것이 95년에는 573억달러(미국의 수출 117억달러, 수입 456억달러)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것에 홍콩과의 수출입을 더하면, 95년의 對中國무역은 총액 818억달러(수출 260억달러, 수입 558억달러)가 된다. 이 액수는 미국의 대러시아 무역이 68억달러(수출 28억달러, 수입 40억달러)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덧붙여서, 95년의 일본의 對中國무역은 578억달러(수출 219억달러, 수입 359억달러)였다.

논자에 따라서는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가 339억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몇년사이에 미국의 對日적자(95년 593억달러)를 능가하고, 중국이 최대의 무역불균형상대가 된다”는 시각에서 미·중간의 경제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對日무역적자와 對中무역적자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對中무역의 적자는 미국기업이 중국에 대하여 실시해 온 투자, 말하자면, 누적 2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기업의 투자사업이 가동하고, 그 생산품이 부메랑효과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이 물류에 개재하고 있는 미국기업에 이익이 계상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적자이다. 추정으로는 미국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456억달러의 6할이상은 이러한 성격의 수입으로되어 있고, 이점이 미국의 對日적자와는 다른 점이다. 미국의 800개를 넘는 경제단체가 워싱턴에서 對中 최혜국대우연장을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러한 利害가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미의회 및 여론의 對中강경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클린턴정권도 핵기

술 수출의혹에 대한 미국수출입은행의 對中國 차관(Loan)의 1개월 집행정지(2월 27일)나 지적소유권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가지고, 30억달러의 제재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리스트의 발표(5월 15일)등에서 보면, 얼마나 저자세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중국정부도 미국의 제재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복조치를 발표하여, 미·중경제관계도 결코 용이하지 않는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히 작년 가을의 지적소유권 교섭, 여름의 이등회 대만총통의 방미허가가 이루어진 시기부터 미·중관계가 긴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미·중관계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자기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만만치 않음에 쓴 웃음을 지우고, 중국은 미국의 원칙론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얼굴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전개가 보이고 있어 사실 미·일교섭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 그런데 표층관찰을 하는 한, 미·중관계는 [제2차 냉전시대]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의 긴장이 도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인 미·중관계의 심오함과 더불어 미·중 양국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를 요구하는 기본적 의사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만해협으로의 미사일 발사문제만해도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의식한 메시지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Global” 경제시대에 있어서 고립해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봉쇄]를 회피하고, 강대국인 미국과의 교섭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시위행위로서 이해해야 될 것이다.

## 2. 미·일관계의 심층에 흐르는 본심과 새로운 국면

96년 5월에 발표된 일본의무성 여론조사결과에서는 95년 6월 자동차협상의 결렬을 다시 수용함으로써 그다지 심각한 현안사항이 없다는 것, 95년의 미국의 對日적자는 593억달러로 전년도비 약 1할이 감소되고, 96년에 들어와서도 적자축소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미국의 對日감정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호전되고 있으며, 일반여론에서는 [일본은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4%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일관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미 일본대사관이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D. 도이취가 중심이 되어 95년에 조사한 [미국인의 對日심층의식조사]이다. 이 조사는全美 6개도시에 있어서 표층여론조사가 아니라 면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 미국인의 심층의식속에 있는 일본의 이미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놀라운 것은 수많은 미국인의 심층심리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은 불공정하고, 폐쇄적이며 교활하여 모든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는 존재]라고하는 이미지이다. 흥미깊은 것은 일본에 대한 프러스적인 이미지 즉, [근면, 정확한 규율, 효율, 전통, 집단적 조화]가 심층에서는 反轉한 마이너스적 이미지인 [로봇과 같은 비인간적이며, 폐쇄적 공격적인 민족주의]에 연결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일본인의 미국에 대한 심층심리는 어떤한가?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은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전후 50년 미국문화에 영향을 받아 온 일본인에게는 생활양식에서 영화, 음악, 패션까지 미국이 여전히 [동경의 대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이 경제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미국도 별 것 아니다]라는 오만한 기분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80년대말부터 90년대초에 걸쳐서 [미·일逆轉]이라든가, [미국 시대의 종언], [일본적 경영의 우위성]등이 유행어처럼 논의되어 왔다.

미·일관계의 현재를 논하는 경우에 있어서 불행한 것은 인식기반에 시각 차가 생겨서 지금도 일본경제의 우위성을 믿고, 논의를 조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시아전체의 평균 7%성장이라는 직격포에 숨겨져, 일본도 [동아시아의 기적]속에 논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만이 과거 4년간 ZERO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미·일의 위치관계도 내실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현실적으로 직면하지 않으면 앓되는 상황은 오히려 [미국 헤게모니의 부활]이며, 새로운 의미에서의 미국 우위성으로의 대응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셉. 나이』가 『W. 오엔즈 존』 통합참모본부부의 장과 공동 집필한 [정보혁명과 신안전보장혁명(America's Information Edge)]이 주목되는 데, 이것은 말하자면 정보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정보기술면에서의 압도적인 우위에 대한 승리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논문이며, 냉전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핵우산에 대체되는 정보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 기술 우위를 살려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하는 미국의 "Soft Power"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논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정보기술 우위를 군사면에서도 북한, 대만해협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오히려 크게 향상되고 있다. 또한 경제면에서도 미국식의 자유경쟁을 지상으로 하는 [자유화]노선을 APEC 등을 무대로 내세우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에서 [미국패권의 부활]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를 향해서 자신을 심화시키고 있는 중국과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러한 상관계수로서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일본의 전략에 직면하게 된다.

## 일본의 전략

### 1. 일본의 對中國 4원칙의 확립

일본외교의 기축으로서 중국에 대한 4개의 원칙을 명시하고자 한다. 이 4원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상황을 전개하면서 적어도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취해야 하는 정책요건이라는 점이며,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제1의 원칙은 [과거의 청산]에 대한 자세의 선명화이다. 중국과의 100년 역사중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있으며, 일본인이 역사의 교훈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만의 사과를 반복하는 것이나 돈으로 해결하는 [배상]형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후에 출생한 세대가 총인구의 7할을 넘을려고 하는 현재, 전후세대로서 [과거 청산]의 책임을 계속해서 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래를 향해 일본이

근린제국에 대해서 다시금 위협한 침략자가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하에서도 힘으로의 유혹과 결별하고 절대평화주의 이념을 관철함으로써 [과거청산의 기등]으로 하는 것이다.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라는 일본헌법의 정신에 서서, 공격을 당했을 때에 자기방위 이외에 지역분쟁이 일어나도 해외으로의 무력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내외에 끊임없이 명시하는 것이다.

[과거의 청산]에 관해서 일본인은 서서히 [자학]도 [오만]도 아닌 역사관을 확립해야 하며, 이것없이는 對中전략도 대아시아 전략도 없다. 그를 위해서 일본 근대사가 안고 왔던 숙명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이중성]에 직시하여, 일본인이 걸었던 역사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야될 것이다. 일본 근대사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일본 자신이 구미열강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속에서 개국·명치유신을 단행하여, 위로부터의 부국강병형 근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이 구미에 대한 아시아 민족주의의 선구자인 동시에, 구미열강을 모방하는 후발 식민지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딜레마를 의미한다. 이 이중성을 자기제어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對中전쟁, 태평양전쟁으로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일본인으로서의 솔직한 심경으로 근린제국에서 [과거 청산]을 끄집어 내면, [일본만 나뻐던 것이 아니다. 아편전쟁을 보라]라는 기분이 고조되고, 남경대학살 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30만명이나 죽였을 리가 없다] 라는 논의를 제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일본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잘못했는가”라고하는 사실만은 엄격하게 자기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1915년의 對中 21개조 요구, 1919년의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의 산동성 利權에 대한 집념, 이 즈음부터 열강을 모방하는 식민지주의으로의 경사를 강화하고, 1921년의 워싱턴 군축회의부터 구미열강에게 서로간의 파워게임에 휘싸여 마침내 1933년의 [국제연맹탈퇴]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원칙은 중국과의 우호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중국 근대화에 협력함과 동시에 중국의 국제사회로의 참가를 지지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을 국제사회로의 건설적인 참가주체로서 받아들여 중국을 고립시키거나 봉쇄시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 하버드대학의 S. Huntington 교수는 미·소 냉전구조 대신에, 미국과 중국사이에 [제2차 냉전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아마코스트 전 주일 미국대사등도 중국이 군사패권의 길을 실현, 국제규범을 파괴하지 않도록 중국문제의 미·일공동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도 경제평론가 하세가와(長谷川慶太郎)처럼, [최후의 공산주의 대국이며,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을 미·일 협력으로 봉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계중에 5,000만명의 화교를 가진 12억명의“Global Network”민족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중국봉쇄 논의에 개입되는 순간, 아시아에서의 신뢰와 발언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삼스럽게 [중일우호]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미국식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이해를 가진 입장에서 일본은 중국의 자세에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좋다. 과연 중국인이 제창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어휘모순이라도 말할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일본도 중앙통제와 관리형의 독특한 자본주의를 실현해왔는데, 중국의 실험을 유연한 눈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중국도 국제경제사회에서 고립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다만 1971년의 UN가입, 80년의 IMF가입, 92년의 개혁개방노선으로의 전환등, 국제화의 역사는 짧고, 특히 경제면에서의 국제사회와의 接點이라는 문제에서는, 중국이 참가하고 있는 포럼로서는 APEC정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WTO가입에 관해서는 일본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것을 교섭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이다.

제3의 원칙은 핵정책에 대한 일본 입장의 명시이다. [모든 나라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핵폐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많은 일본인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 원칙을 관철해 나갈 것인가라

는 문제는 의문이 있다. 미국 핵우산하에 있는 입장에서인지 전후 1,033회나 이루어진 미국의 핵실험에는 저자세이며, 작년말의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에는 당연하게 항의했다. 또한 작년 8월 이후의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무상자금협력의 동결이라는 형태로 항의표시는 했지만, 중국의 外相으로부터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는 일본의 핵 그 자체가 중국에게는 위협]이라는 말을 듣고야 말았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세계 대다수의 나라측에 서서 핵무기의 금지, 全廢를 향해서 독자적인 비핵화 외교를 정열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세계 5대 핵무기 보유국은 핵불확산조약(NPT)의 연장을 계속 주장하는 한편, 기득권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의무를 거부하고, 조약에 명기된 군축노력의무(6조)를 이행하지 않는다. 게다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 NPT마저 가입하지 않는 핵보유국이 증가하고 인도, 이라크등 국가적인 야심에서 핵보유의 유혹에 휘말린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92년에 NPT에 가입하고, 제네바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참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으면서, 평화적인 이용부문에 한해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나 플루토늄 이용을 포함한 독자적인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입장을 소중히 하여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비핵화 외교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나의 가설로서, 가까운 장래 핵을 가진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출현했을 때 또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보다 군사적인 압력을 동아시아에서 강화했을 때 커다란 유혹으로서 일본자신의 핵보유가 논의되게 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일본의 비핵화 정책이 시련을 맞이하는 때이며, 그 어떤 국면에 있어서도 일본이야말로 [비핵]을 관철해야 될 것이다. 철저한 [비핵정책]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핵억지가 되는 시대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억지력은 냉전기의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유효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게는 우호국인 한

국의 핵이나 확산되고 있는 중소국의 핵에 대해서도 유효라고는 생각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국간 외교시대야말로, 많은 나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외교이념]이 요구되고, 피폭체험을 가진 일본으로서 [비핵]이야말로 외교이념의 기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마 일본이 말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비핵』일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과도 일정한 거리를두고 핵정책에 논리적 이치를 관철시킨 다음에, 중국의 핵실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하고 6월 8일의 핵실험처럼 일본의 경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자금협력 뿐만 아니라 엔차관을 단계적으로 동결하는 등, 일정한 기준에서 실행해야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일체 경제원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79년부터 제3차 엔차관까지 1.68조엔에 달하는 對中 엔차관을 제공해 왔다. 개발원조위원회(DAC)가맹제국의 對中 ODA(정부간 개발원조)의 약 60%는 일본으로부터 제공한 것이다. ODA대강의 운용원칙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본외교 수단이다.

제4의 원칙은 대만문제 불개입의 원칙이다. 중국도 대만의 정권담당자도 중국은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국내문제이며 일본이 일체 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국연합]이든지 [연방제]이든지, [완전통일]이든지간에 중국인다운 지혜를 가지고 평화적인 해답을 내리도록 바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일 것이다. 만일, 대만 총통선거에 대한 공선제 도입이라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이행해 온 대만이 국민의 합의로서 [대만독립]을 선언하여, [하나의 중국]을 요구하는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이념을 내세워 결코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으로 움직여서는 않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만 자신이 일본의 군사적인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령 미군이 대만지원에서 군사행동을 일으켜도 그것은 미국과 대만간의 역사적인 관계에서 공약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 있



기 때문에 생긴 행동이며, 일본의 입장과는 다르다. 미국은 중국승인에 따라 80년 1월부터의 미국과 대만간의 상호방위조약 實效에 대비하여 79년 4월에 [대만관계법]을 성립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만관계법에 의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무기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대만의 안전, 사회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그어떤 강제나 압력에 대해서도 대항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F16전투기 150대 등의 최신에 무기의 발주·납품도 시작되고 있다. 현재 미의회에서의 대만의 로비 영향력을 생각하면, 중국의 대만침공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이념이 高揚되어 미국이 군사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대만문제로서 일본은 움직여서는 않된다. 내년 7월에 홍콩이 중국으로 복귀하고, 홍콩에 대해서 [1국 2제도]를 약속한 중국의 대응을 지켜 보면서 대만문제는 우선 대만인들이 진로를 결정하여 중국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해답을 내야 할 것이다. 대만문제 불개입원칙을 관철해 나가면서 [중·대만 당사자]가 통일로의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일본이 너무 과민하게 중국에 배려하고,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대만과의 관계를 너무 제약할 필요도 없다.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나 대만독립을 지지할 의사가 없는 일본이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목적으로 대만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대만 要人の 입국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중국의 개입을 받을 필요는 일체 없는 것이다.

## 2. 일본의 對美종합전략의 심화

안보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주체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미군기지축소이며, [기지없는 안보]로의 단계적 이행이다. 미국인의 對日 심층의식속에 부정적인 감정-약간의 멸시가 존재하지만, 불공정하고 교활하다는 미국인의 對日감정 속에는 [방위 무임승차(FreeRider)]적인 일본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사회에서 경의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국 영토내에 외국의 군대가 4만 7천명이나 계속 주둔하고 있다는 것에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않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유연한

“Globalism”, 그리고 국제상식이다. 독일에서도 미군기지가 있으며, 기지의 존재가 반드시 일본의 자립, 자존문제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후 50년간 항상 기지문제를 수정하고, NATO라는 조직, 나아가 유럽안보협력회의(OSCE)라고 하는 집단 안전보장에 관해서 미군에 대한 의존에 익숙해져 민족의 체면을 걸고 기지문제를 교섭테이블에 끌고가지 않았다.

기지를 축소하는 것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책임을 높이는 것인 동시에 기지가 존재하는 것에 의해서 미국의 전쟁에 말려들 위험을 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이 기지축소를 요구하기 이전에 극동정세의 심화나 미국내의 [고립주의 경향]을 배경으로, 미국 자신이 아시아정책을 전환하고, 기지축소 철회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지축소]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하면서, 안보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준비해야 될 합리성이 높은 접근방법이다.

기지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미·일의 군사협력에 관해서는 공평하고 쌍무적인 협력체제로 파고들어, 일본이 주체적으로 지원해야만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관해서는 미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미·일안보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 분명히 미·일의 군사협력강화가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연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 손쉬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단하게 [해석개헌]으로, 협력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때의 일본국민이 주체성을 가지고 일본 헌법상의 제약을 고려하면서, 협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과도하게 미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내에서 강력한 방위력을 정비해야 될 것이다.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미사일 방위망을 정비하는 것등, 자조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주체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일본은 결국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으며, 미·일안보라는 틀내에서는 주체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핵억지력]이라는 개념도 변질되고 있다. 소련의 핵에 대한 [억지력]의 시대와는 달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아시아의 복잡한 핵개발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에 대비하여, 단지 미국의 핵우산하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핵을 둘러싼 게임이 복잡화 될수록 비핵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일본에게는 유리한 핵억지력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미·일의 2국간 관계, 말하자면, 경제·군사양면에 있어서 동맹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국간의 새로운 질서창조를 요청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외교는 불안정하며, 계속성·전략성에 있어서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진로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미국이 체계성있는 아시아·태평양외교를 구축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외교란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결의가 없이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미·일·중3각관계의 制御 그리고 다국간 외교의 시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냉정하게 인식하면서 목표로 하는 이념을 내세워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구상을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미국의 왜소한 추종자도 아니고, 동시에 중국 주변국으로의 轉落도 아닌 전후 일본인이 소중히 해 왔던 [경무장 경제국가]로서의 길을 “Global Economy”시대에 살려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Jain's Intelligence Review & Jain's Sentinel Pointer

*Kim consolidates  
power in purges*

BY ken Gause

1996. 9.

본 자료는 영국의 군사 전문지인  
**Jain's Intelligence Review(9월호)**에 게재된  
김정일의 권력 기반인 군부의 인맥과 조직에  
관한 기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속청을 통한 김정일의 권력강화

지난 2월과 3월에 나온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김정일은 이미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상당한 수준에까지 진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부의 주요 실력자들에게 승진과 막대한 선물, 그리고 각종 은전 등 3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회유함으로써, 김정일은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선인민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김정일의 계획속에는 군부의 실력자 내에서 어떠한 잠재적 불평분자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감시하는 첩보망을 조직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김정일이 구축하고 있는 첩보조직의 최고 정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조직지도부이다. 편제상으로 볼 때 조직지도부는 산하 13개 과를 통하여 인민무력부의 모든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지도부 출신들이 인민무력부 상급지휘관 직에 골고루 임명됨으로써 인민무력부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조직지도부가 이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군 총참모장인 김영춘 차수의 경력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작년 10월에 인민무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광 원수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임명되었다. 김영춘이 쌓은 경력

들은 인민무력부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정치국에서의 활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1960년대에 조직지도부에 근무했던 김영춘은 당시 조직지도부 부장이었던 김정일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김영춘의 군경력은 1970년대 제1군단과 제2군단의 정치국원으로 근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1984년에 제6군단 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인민무력부 작전참모장의 직도 겸직한 바 있다. 1986년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 되었고, 4년뒤인 1990년에는 강원도 고산선거구에서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군부 조직 내에는 북한군 지휘관들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4개의 통제조직이 있다. 인민무력부의 조직부(the Organization Department) 산하에 있는 당 생활지도과(The Party Life Guidance Section)는 장성급 이상의 지휘관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과에서는 고위장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6개월에 한번씩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당조직부 산하에 있는 정보과(The Information Section)도 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정치보위국은 장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장교들의 일상활동과 인맥관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이들의 감시보고서도 역시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총참모부 산하의 작전국은 고위장성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내의 유력한 인물들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계급이 아닌 김정일과의 친밀도에 따라 군부내 권력서열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실세는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광진 차수, 군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 군 총정칙국장 조명록 차수, 인민무력부 부총국장 박재경 상장, 중앙정치국 선전국장 한동근 중장, 인민무력부 보위국장 원응희 대장, 인민무력부 작전참모장 김명국 대장, 제3군단장 장성우 대장 등이다.

군사정책에 관한 의견을 사령관에게 제시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 비서국의 4~5명 실세들이 모두 위에 열거된 집단에 포함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들의 면모를 보면 비서국 책임비서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조명록 차수, 김영춘 차수, 원응희 대장, 김명국 대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인민무력부장 최광 원수가 5번째 서열이다.

최근에 평양으로부터 발신되는 텔레비전 보도는 권력이양 작업이 물밑에서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김일성의 신화와 이미지는 극적으로 퇴조되고 있는데 반하여 김정일의 존재는 다방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일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특히 최근에 입수되는 정보들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만연하고 있는 기아와 기근현상이 북한의 지배계급까지 동요하



도록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떠한 인물이나 파벌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가 주석직을 승계함으로써 권력을 공식적으로 이양받아 ‘친애하는 지도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이 작업이 지난 7월 김일성 사망 2주년 행사때 이루어 질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 김정일이 다음 기회로 오는 10월 노동당 창립일을 이용할 것이라는 추측도 해 볼 수 있다.



統一評論

# 北韓 崩壞論 と北 の 現實

姜德洙(저널리스트)

1996. 9.

본 자료는 일본의 친 조총련계 성향의  
月刊 統一評論 9월호에 게재된 북한 붕괴론  
에 관한 반론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북한붕괴론에 대한 반론

변함없는 북한붕괴론에 대한 반대론으로 필자는 붕괴의 징조가 보이지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 평양에서 만난 독일인과의 대화

2개월전에 필자는 평양의 보통강 호텔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독일 [동아시아협회]의 상주대표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95년 11월 이 호텔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금년 3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했다는 [동아시아 협회]는 독일의 주요 대기업을 거의 망라한 민간 단체로서, 가맹한 기업이 동아시아 각 나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대상국에서의 거점구축을 맡아서 그일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가맹하고 있는 개별기업들이 독일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아 경제성이 자세하게 파악되지 못한 나라로 진출하는 경우의 안내인 내지는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대상국의 경제나 사회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가맹 각사로 통보하는 것이다.

동 협회의 사무소에 상주하는 귄터 운터 벡크씨는 거의 8개월간의 평양생활에서 느낀 것은 “북한 경제는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낙관적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독일기업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강하다

고 대답했다. 대한민국 KOTRA에서 발행하는 [북한 뉴스레터]에 의하면 이미 독일의 대표적인 화학회사인 Helm AG사는 평양의 창강 호텔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밖의 몇 개의 독일 기업도 동호텔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고 한다.

KOTRA에 의하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독일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독일 기업의 대북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필자가 금년 1월에 평양에 체류하고 있을 때, 독일의 중공업분야의 중견기업인 ABB사는 앞으로 북한 발전소의 근대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금년 10월에는 독일 함부르크 소재의 전시회 전문기업인 IFS사가 평양에서 제1회 국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다가 금년 10월중순에서 10월말사이에 독일의 IMAG사가 평양 산업자료 전시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 기업의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은 당연히 다른 유럽나라들을 자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독일 동아시아협회 평양상주대표는 “실제로 우리들의 진출은 유럽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과 풍부한 자원, 그리고 근면하고 능력있는 노동력,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상황 등의 유리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무역진흥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MOCI지 96년 2월 4일-14일자 지면에 북한이 경공업 부문의 위탁생산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프랑스기업의 북한진출을 권유하고 있다. 그 이유로 생산품의 질이 양호하며, 전국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100여개소나 있다는등 상당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리적으로 유리하다는 점, 유럽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노동 시장조건이 보증되어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었다.

프랑스 기업의 대북한 진출 컨설팅업무에 적극적인 [동서비지니스 앤드 컨설팅사]는 독일 동아시아협회의 북한진출 사실을 알고 프랑스 기업도 북한진출에 적극적으로 개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연락사무소를 보유하여 관련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 **북한에서 만난 청년들**

이와 같이 유럽기업들이 북한의 미래를 밝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북한붕괴론] 등의 평가는 재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분석과 [북한붕괴론]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붕괴]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인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을 착실하게 걷고 있다.

필자가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 모내기를 하고 있는 어떤 젊은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 젊은이는 최근 식량 등의 생필품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자연이 농민시장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팔리고 있는 식량 가격이 비싼 것에 상당히 놀랐다고 했다.

농민시장은 이른바 자본주의식 시장으로 그곳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물론 흔히 말하는 암시장은 아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될 때부터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규정된 장소사용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이곳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다.

젊은이가 놀란 것은 무엇이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배급을 받아온 식량이 실제로 이렇게 비싼 물건이었던가 라는 것을 처

음으로 알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이 받아온 배급의 고마움을 이번엔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배급이라는 사회제도를 지켜나갈 결의를 보였다.

요컨대 북한주민들은 충분하게 먹지는 못해도 낙천적이며, 반드시 이러한 곤경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 **북한의 경제적 곤경을 둘러싼 상황변화**

최근 북한의 경제적인 곤경을 둘러싸고 몇가지 상황변화가 생겼다. 작년 11월에는 UNDP와의 협력계획에 의해 저열탄을 사용한 순환비등보일러라는 열실험장치가 도입되어 평양 피혁청소공장의 16톤 보일러에 저열탄을 사용한 순환비등층 연소방법이 실험적으로 도입되었다.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저열탄을 이용하여 열효율을 높혀 공해를 방지하면서 열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효율이 높은 설비이다. 전면적인 도입은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밝은 소식이다.

또한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의 전력을 담당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화력발전소의 제1계통이 발전을 개시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5만킬로와트의 화력발전터빈은 북한에서 처음으로 자력으로 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금강산 발전소의 제1단계 공사가 완성되었다. 전공사가 완성되면 북한 최대의 81만 킬로와트의 발전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인데, 가장 난제로 인식되어온 수로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할 것이다.

1월에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

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을 몇 년사이에 89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 경공업, 임업, 합작회사, 건설, 광산개발,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참가, 석유정제사업등 8분야에서의 협력원칙등에 관해서 합의를 보았다. 또한 최근에 일본을 방문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위원장에 의하면 [조·러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금년 6월부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사이가 다시금 긴밀화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도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특별히 부정될 문제가 아니다.

독일과 북한은 청산무역방식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정보도 있다. 북한의 국내 경제건설도 확실하다. 구체적인 숫자 발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에너지의 대대적인 개발이 각부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북한경제의 모습이 보인다.

북한이 현재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거기에는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의 급격한 해체와 한·미·일 등의 세계적인 대북경제봉쇄의 강화가 최대의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남한에서는 이것을 [북한고사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붕괴론은 그러한 흐름속에서 생겨난 정치용어이다. 그것은 북한의 실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세력들의 바람이 나타나 있다.



統一評論

北韓崩壞論 の 迷妄から  
脱け出すべき

金成浩(재독학자)

1996. 9.

본 자료는 일본의 조총련계 친북 성향의  
月刊 統一評論 9월호에 게재된 4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변화와 그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북한붕괴론의 미망으로 부터의 탈출**

### **동북아정세의 핵심요인인 북한변수에 대한 정책전환의 필요성**

한반도정세가 전후 최대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북아정세의 핵심적 변수인 북한정세를 둘러싸고 미·일·중·러 등의 주변 4대강국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은 11월의 미국대통령선거 이전에 평화해결사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며, 중국은 현재 유일하게 남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암중모색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한과의 수교에 의해 소원하게 된 북한과의 연계의 실을 묶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일수교교섭에 임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남북한과 미·중·일·러의 2+2+2구조가 한반도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기본구도라고 할 때 각 나라의 위치가 절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 **한반도 정세변화의 핵심요인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변수**

현재 북한이 최고의 외교목표로 하고 있는 휴전체제의 평화체제으로의 전환이라는 문제는 휴전회담의 당사자인 북한과 미·중이 현대화의 당사자이며, 남북한 UN 동시가입 등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남북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미·중·일·러의 남북한 교차승인문제는 북·미, 북·일간의 수교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본문의 주된 대상은 동북아정세변화의 핵심적 요인인 북한이라는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파기선언과 판문점에서의 군사훈련 등에 대응하는 과정, 그리고 또한 쌀지원에 관한 정책결정문제 등에서 한·미 간에는 공식적으로 미묘한 시각의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또한 항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 **한국정부는 남북대화의 의사가 있는가**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집요하게 주장해 온 한국정부는 과연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었던가.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직전에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조문파동이 있었고, 대북쌀지원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한반도평화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북·미, 북·일간의 수교진전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설로서의 북한 붕괴론**

침체하는 북한경제, 식량난, 탈북자의 증가,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의 지연등이 [북한붕괴론]이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좋은 재료로 되어 [충무계획]이라는 북한접수를 목적으로 한 군사작전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북한내부의 불안정요인에 의해 북한내부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그 때에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전력을 무력화시켜 북한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많은 북한 방문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일심단결]이라는 슬로건하에 공고하게 단결하고 있는 북한사회내부에는 그 어디

에도 붕괴할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구심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북한사회의 유기적인 특성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형을 찾을 수 없는 특수한 체제이며, 외부의 경제제재나 식량난 등에 의해서 붕괴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미 국무부는 일찍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것을 핵협상 과정에 있어서 재빨리 파악하여 정책전환을 과감하게 실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전 미국무부 아시아정책 보좌관으로 현재는 미국 진보정책연구원의 전임연구원인 로버트 매닝은 미국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 등 제네바협정 이행비용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부담시키는 것에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정보라인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무부 자료에도 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인 세릭그 해리슨의 긴급보고에도 또한 최근 클린턴의 메신저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빌 칼린 부의장의 보고서에도 북한이 붕괴될 징조는 없었다. 북한정세의 연착륙(Soft Landing)개념은 미국무부가 만들어낸 것인데, 한국의 보수세력과 미국의 강경파세력은 오히려 북한이 공중폭파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이 북한붕괴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내어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의 잘못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주범인 것이다.

### **평화체제 정착이 필요**

가령 북한붕괴론이라는 가설을 실현시키기 위해 붕괴로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예상되는 결과로서 군사적 충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남북한 쌍방의 군사력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6.25전쟁의 실로 75배에 달할 것이다. 전한반도의 초토화와 상상할 수 없는 인명

피해를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 파산이라는 조용하게 덮쳐오는 경제적 붕괴도 결과적으로는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남한경제의 파산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독일통일과의 비교분석으로 이미 여실히 들어난 문제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붕괴는 즉각 남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생존을 위해서도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은 필수적이다.

구시대론적인 안보논리에 의해 정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주변정세가 진전되고 있으며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4자 회담에 대한 검토**

미국과 한국은 지난 4월 16일에 있는 제주도 정상회담이후에 4자회담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시각이 어느 정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집요하게 주장해온 남북당사자론의 파기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대화의실마리가 약간 열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한국정부가 제동을 건 이유가 된 남북대화우선의 원칙도 파기되었다. 북한당국은 한미측의 4자회담제안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고 신문사와의 인터뷰형식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시사했다.

북한이 4자회담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제안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도 남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미국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북미관계가 해결된다면 남북한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북한의 생각도 이해는 되지만, 남북한 문제의 경직화는 북미나 북일의 대화에 대해서 언제나 제동을 거는 구실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한 정부는 상호협력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문제는 7,000만 남북한동포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며 동북아정세 전반을 안정시키는 기초상에서 남북한의 경제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상호신뢰의 회복**

현재상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대화이전에 대화할 수 있는 상호신뢰감의 회복이다. 「조문파동」 이후 급냉각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쌀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불신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이 아무 말없이 북한에 대해서 쌀지원을 행하고 있을 때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식량지원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나 경제교류 및 협력은 상호신뢰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북한붕괴론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화합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중·일·러의 주변 4강의 어지러운 모색이 제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정세의 과도기에 남북한의 대응은 앞으로의 2-300년의 한반도의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日本 防衛白書

## 日本 周邊國의 軍事情勢

防衛廳 編

1996. 9.

본 자료는 일본 방위청이 최근 발간한 방위백서의 동북아 주변 군사 정세에 관한 내용 중 북한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번역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동북아주변 군사정세

### 1. 전반적 정세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다양성이 풍부하여 각 나라의 안전보장관은 다양하다.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도 東西대립관계가 유지되었지만, 유럽에서처럼 東西 양진영이 제각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여 대립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인 대치구조는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 혹은 소련과의 2국간 동맹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1960년에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격렬하게 된 결과,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대규모적인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東西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냉전이 종결된 다음, 이 지역의 군사정세에도 변화가 보인다. 냉전의 종결, 소련의 붕괴라고 하는 사태하에 질과 양적인 면을 동시에 증강해 왔던 극동러시아군(구극동소련군)은 90년대 이후 양적으로 축소경향을 보이면서 즉응태세도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90년 9월 한국과 소련, 이어서 92년 8월에 한국과 중국사이에 국교가 수립되고 작년 7월에는 베트남 전쟁 이래 단절되고 있던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장기간 대립관계에 있었던 중·러간의 관계개선이 대폭적으로 진전하는 등, 외교관계에도 변화가 보인다.

한편, 이 지역에는 변함없이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적인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수많은 나라가 국방비의 증액과 새로운 장비의 도입등 군사력의 확충, 근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일본의 북방영토나 한반도, 남사군도 등의 제문제가 변함없이 미해결

된 채로 존재하고 있으며, 당장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화가 보일 상황은 아니다.

### 일본주변의 병력상황(사단수)

지 역	병 력	항 공 기	군 합
극동 러시아	19만명(15)	900기	660척-155만톤
중 국	220만명(96)	6,010기	940척-105만톤
북 한	100만명(26)	590기	750척-10.7만톤
한 국	55만명(22) 해병대2.5만명	490기	210척-14.1만톤
주한 미군	2.7만명	90기	
일 본	15.3만명(13)	520기	160척-34.6만톤
주일 미군	2.2만명(1)	150기	
미 7합대		140기	60척-65만톤
대 만	24만명 해병대 3만명	470기	390척-22만톤
베트남 캄란만	(러시아군)		보조 함정

- (주) 1.자료는 Militart Balance(95-96) 등에 의함, 일본은 95년도 말 실세력  
 2. 주일 주한미군의 육상병력은 육군 및 해병대의 총수를 표시한다.  
 3. 캄란만 러시아군의 병력은 극동러시아병력에 포함된다.  
 4. 작전기에 관해서는 해군 및 해병대기를 포함한다.  
 5. ()는 사단수를 표시한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두 나라간의 동맹 우호관계와 이에 의거한 미군의 존재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이 지역에서 도 역내의 정치·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ARF(아시안지역포럼)의 설립등, 지역적인 안전보장에 관한 다국간 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 2. 한반도

### 1) 전반적인 정세

한반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전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은 최근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정착시키고 있으며 1993년 2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민출신의 김영삼대통령은 국내의 부정일소에 노력해 왔는데, 특히 수뢰죄 내란죄 등의 용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체포 기소되는 등의 사태 전개를 보였다. 외교면에서는 前 정권이 추진해 왔던 전방위외교를 계승·추진하고 있으며, 주변제국과의 양호한 관계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93년 12월, 87년-93년을 대상으로한 [제3차 경제발전 7개년계획]이 일부 미달성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등, 장기간에 걸친 경제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사정에 관해서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작년 여름 수해의 영향도 있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북한에 대해서 일본, 한국등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식량지원을 실시했다.

김정일에 대한 권력 이양은 김일성 생존시부터 국방관계의 포스트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며, 김정일은 91년 12월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고, 92년 4월에는 원수의 칭호가 부여되고, 93년 4월에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제도상으로는 군을 완전히 장악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후 2년에 걸쳐 국가주석, 당총서기라고 하는 국가, 당의 최고 포스트가 공석이 되어 있다.

외교면에서는 작년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하여 [소·조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신조약안이 제시되고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도 감소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전에 북한을 지지해왔던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가 보인다.

한국과 북한과의 대화에 관해서는 남북최고위급회담이 90년 9월에 개시되고, 92년 2월 [남북한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시키는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후에 대화는 중단되고 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는 남북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94년 10월에 서명된 핵무기개발의혹에 관한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서]에서는 북한은 남북대화에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 휴전협정]에 의한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을 철수하는 등, 동협정의 사문화를 획책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직접교섭을 제안하는 등, 남북대화의 진전보다는 대미관계를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6년 3월 및 4월에 발표한 담화문중에서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4월초에 3일간 연속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박격포등으로 무장한 병사를 진입시키는 등의 움직임 보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하여 한·미양국은 96년 4월의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발표된 [공동발표문]속에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의 추구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것을 확임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북한, 중국 및 미국에 의한 [4자회담]을 제안했다.

하여튼 북한은 지극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에 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반도에는 변함없이 한국과 북한을 합쳐 150만명을 넘는 지상군이 DMZ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적 대치상황은 한국전쟁 종료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냉전후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며,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정 요소로 되어 있다.

## 2) 북한의 군사태세

북한은 62년 이래,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라고 하는 「4대군사노선」에 바탕을 두고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현재도 경제부진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군사면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군사력의 근대화를 도모하면서, 즉응태세의 유지·강화에 힘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GNP에 대한 국방비의 비율은 20-25%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구에 차지하는 군인의 비율이 매우 높고, 총인구의 약 5%가 현역 군인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력은 육군중심의 구성이며, 총병력은 약 113만명이다. 장비의 대부분은 구식이나, 근대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스커트 B/C를 생산·배치하고, 화학·생물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26개사단 약 10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병력의 약 3

분의 2를 DMZ부근에 전방배치하고 있다. 그 전력은 보병이 중심이지만, 전차 약 3,400량을 포함한 기갑전력 및 포화력을 보유하고 240미리 다연발 로켓트와 170미리 포 등의 장거리화포를 DMZ을 따라 증강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약 750척 약 10만 7천톤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 고속정 등의 소형함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로미오급 잠수함 22척외에 특수부대의 잠입·반입용으로 보이는 미젯트 잠수함 60척 및 Air Cushion양륙정 약 140척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약 590기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중국과 구소련제의 구식기이지만, MIG-29와 SU-25라고하는 제4세대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구식이지만 특수부대의 수송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AN-2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 **3)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 및 미사일 개발**

#### **1. 핵무기 개발의혹**

북한은 종래부터 핵무기개발의혹을 가지게 했지만, 93년 2월 IAEA의 특별사찰요구를 거부하고, 3월에 NPT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것에 의해 이 의혹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94년 10월에 서명된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서]에 의해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제네바합의서]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으로의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위한 Arrangement를 하고, 이것에 대하여 북한은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 건설을 동결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NPT당사자로 머물면서 IAEA와 보장

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게 되어 있다.

[제네바합의]에 의거하여 95년 1월, 미국이 무역 투자에 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대체 에너지로서의 제1차분 중유공급을 실시하였고, 또한 동 9월에는 3월에 발족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제2차 중유공급이 실시되었다. 경수로 제공에 관해서는 95년 6월 Kuala Lumpur에서 있었던 미·북협약에서 북한은 KEDO가 경수로프로젝트를 위한 경수로형의 선택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KEDO는 그 설립협정에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공급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게다가 동 12월에는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프로젝트에 관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와 같이 현재 미·북간 [제네바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착실한 대처가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는 북한이 [제네바합의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그 대응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 2. 미사일 개발

북한은 80년대 후반이후, 스킵B 미사일과 그 사정거리를 연장한 스킵C 미사일을 생산·배치함과 동시에 이들 미사일을 중동제국으로 수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사정거리가 약 1,000KM로 알려진 노동 1호를 개발중에 있다.

노동1호의 성능에 관해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명중도에 관해서는 스킵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 시설을 정밀조준공격(Pinpoint Bombing)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93



년 5월하순에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했는데, 이 미사일이 노동 1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노동 1호개발에 성공하고, 실전배치한 경우에는 배치 위치에 따라서는 일본의 거의 반이 넘는 지역이 그 사정거리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노동1호보다도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핵무기 개발의혹과 얽혀 일본주변지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전체에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며,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동향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



DER SPIEGEL

# *Es verschlug mir die Sprache*

By Helmut Kohl

1996. 10.

본 자료는 독일의 「콜」 총리가 펴낸 統獨  
秘史 “Ich Wollte Deutschlands Einheit  
(나는 통일을 원했다)” 중 DER SPIEGEL(96.9.30)  
誌에 발췌·수록된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그것은 나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하였다

연방수상 헬무트 콜(Helmut Kohl)이 1989년·1990년 그리고 독일통일로의 여정에 관해 책을 저술하였다.

볼프강 호수(Wolfgangsee)에서 휴가를 보내던 콜은 독일에게 운명의 해였던 1989년과 1990년을 책의 형태로 형상화하리라는 생각을 진전시켰다. 많은 저녁시간 동안 『본』(Bonn)의 정부수반 콜은 자신의 기억을 구술하였고 이를 책으로 펴낼 저널리스트 카이 디크만(Kai Diekman)과 랄프 게오르그 로이트(Ralf Georg Reuth)는 그것을 녹음하였다. 그 결과로 『나는 독일통일을 원했다』(488쪽)라는 제목으로 총리취임 14주년이 되는 날 그리고 통일독일 6년을 이틀 앞둔 10월 1일 발간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Kohl의 회고 내용은 일반 명조체로, 주요 내용은 서두에 고딕체, 그리고 편집자의 해설은 필기체를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989년 6월 12일

**미하일 고르바초프(Michail Gorbatschow)가 수도 『본』을 방문하였다. 그는 거기서 『콜』과 회담하였다. 『콜』은 그때 “독일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서기장과 내가 좀더 산책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이 지났다. 우리가 라인강(Rhein)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단지 통역만이 동행하였다.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과 맞은 편에 있는 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성벽에 걸터앉았다. (...)

그날 밤은 솔직하고 우정에 찬 대화를 하기에 이상적 조건이었다. 유럽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과 소련의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데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독일과 소련은 과거에 대해 아직 종결짓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도달하였다. 이러한 조약—우리는 그것을 대조약이라고 명명하였다.—은 양 국민 모두에 의해 환영받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

나는 라인강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우리 앞을 흐르는 강을 보십시오. 강은 역사

를 상징하며 그것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서기장께서 강을 막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라도 그것은 강둑을 넘어 흐를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바다로 가는 물길을 낼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이 순간부터 수상의 대척파트너인 고르바초프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콰』은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적 접근의 결과였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평화는 우리 두 사람에게 있어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존을 위한 기본적 필요였다. 고르바초프 부부가 마침내 방갈로를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작별의 인사로 서로를 포옹하였다. 이날 저녁에 나는 대단히 중요한 체험을 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본』의 정부수반 『콰』은 역사적인 장벽붕괴 사실을 바르샤바 방문중 저녁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들었다.**

요니 클라인(Johnny Klein)이 내걸로 다가와 짧게 새로운 상황변화를 설명하였다. 그는 통일의 지지를 표명하는 국회에서 독일국가를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 보고하였다. 나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나는 되물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마 21시경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본』에 있는 에두아르트 아커만(Eduard Ackermann)에게 전화하였다: 그때 그는 이미 연회의 식사 중에 나와 통화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사무책임자인 발터 노이어(Walter Neuer)에게 내게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놓았다. 그가 전화를 받았다. “수상님 조금 전 장벽이 붕괴됐어요.” 그는 감격해서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그것이 정말이에요?” 하고 아커만에게 되물었다. (...)

그것은 나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하였다.

『콰』은 폴란드 방문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커만은 『콰』이 다음날 베를린(Berlin)의 쉐네베르크(Schöneberg) 시청사 앞에서 연설해야 된다고 알려왔다.

서독공군기는 동독의 영공을 비행할 수도 베를린에 착륙할 수도 없었으므로 우리는 우선 스웨덴을 경유하여 함부르크로 날아갔다. 비행기에서의 1시간 30분 동안 나는 연설문을 작성하였다. 우리가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너무 촉박하였다. 『본』의 미국대사가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는 미군 군용기를 타고 갈 수 있었

다. (...)

도착 후에 나는 안내자와 함께 계단을 서둘러 올라갔고 시청사의 좁은 난간으로 떠밀려 나갔으며 그곳에는 이미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 당시 외무부장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전 수상), 한스-요헨 포겔(Hans-Jochen Vogel: 당시의 사민당 당수), 발터 몸퍼(Walter Momper: 당시의 서베를린 시장)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다. 존 에프 케네디 광장에는 흥분한 좌익군중들이 소란을 피우며 귀가 마비될 정도의 횃술을 불며 나를 맞이하였다.

연사가 채 났을 시작하기도 전에 호르스트 텔치(Horst Jeltschik: 『콜』 총서기 에곤 크렌츠)이 고르바초프의 급한 전갈을 전달하였다.

전갈에서 소련의 총서기는 베를린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군중들을 진정시킬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동독의 지도부는 동독국민들이 서독이나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동독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그 외에도 베를린의 실정이 완전히 통제불능이라는 보도가 맞는 것인지 소련주둔군의 시설로 몰려가는 흥분한 군중이 있다는데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 싶어했다. (...) 나중에야 비로소 나는 고르바초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받고 있음을 알았다: 소련의 KGB와 동독의 국가안전부(Stasi)내의 개혁반대자들은 동독 내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 나는 쇠네베르크 시청사의 발코니에 꼼짝 못하고 서있었으며 만약에 내가 난간을 떠난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군중들 때문에 몰려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고르바초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고르바초프에게 그의 근심이 사실무근임을 전하도록 하였다. (...)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나에게 나중에 말했듯이 그는 소련군이 1953년 6월 17일(동독의 노동자들이 동독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해서 봉기한 날)처럼 탱크를 앞세우고 공격하지 않도록 동독의 권력자들에게 유의해서 오해의 여지없이 명료하게 신호를 보냈다. 나는 고르바초프가 선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합리적 사고 안에 머문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그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다.

**1989년 11월 11일**

**헬무트 「콜」 과 에곤 크렌츠(Egon Krenz: 당시의 동독 총서기)가 처음으로 통화하였다. 동독의 국가평의회는 장벽개방을 동독국민의 관심을 향한 개혁정책의 증거로 과시하였다.**

동시에 에곤 크렌츠는 객관성, 예측가능성과 선의를 공표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전처럼 국경은 존재하나 국경은 왕래 가능한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나는 크렌츠의 말을 경청하였고 그에게 장벽의 개방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한 후, 모든 형태의 급진주의는 위험한 것이라고 언급한 나의 베를린 연설을 상기하도록 하게 하였다. (...)

크렌츠는 한 번 더 나의 언질을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크렌츠는 내가 한 문제에 있어서 그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믿었다. 즉 현재 독일통일은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그에게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있어 나의 기『본』적 이해와 독일연방공화국수상으로서의 직무선서에 근거하여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화는 우스꽝스럽게 끝을 맺었다. 사회주의 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의 당수는 기자회견에서 통화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내게 물었다.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답하였다. 크렌츠는 나의 말을 군대식으로 짧게 반복하였다: “깊이 있는 대화” 나는 크렌츠 역시 원했을 것, 즉 필요할 때 전화를 통해 대화를 계속하자고 부언하였다. 그는 “전화로 통화를 계속합시다.”라고 대답하였다.

**1989년 11월 30일**

**서독과 조약공동체를 형성하자는 한스 모드로브(Hans Modrow) 동독수상의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콜」 수상은 10개조항의 프로그램을 대안으로서 제시하였다.**

나는 수상방갈로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가까운 나의 보좌관들과 우선 최초의 주제, 즉 어떻게 우리의 홍보대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는 모드로브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했다. 조약공동체라는 그의 제안이 들기는 좋았지만 본 뜻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통일당에게 부담을 주는 통일압력을 약화시켜 보자는 책략이었다.

우리는 모드로브의 제안에 대해 국가연합(Konföderation)이라는 조금 더 진전된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였다. 소련측으로부터 며칠 전에 그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두 개의 국가를 문서화한다는 것에 구애를 받았다.

수상은 외교담당특보 호르스트 텔릭의 지휘아래 작업팀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주말인 11월 25, 26일에 최초로 '독일을 위한 10개 조항'의 프로그래밍초안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은 『콰』 수상이 자신의 측근들과의 모임에서 한 번 더 수정·보완하였던 오거스하임(Oggersheim: 『콰』 수상의 고향)으로 보내졌다.

집사람 이외에도 램스테터(Ramstetter) 두 형제가 함께 하였다. 한 사람은 퇴직한 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루드비히스하펜(Ludwigshafen)의 교구감독이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나에게 신년사와 중요한 연설에 가치 있는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다. 그 외에도 나는 뛰어난 헌법학교수인 기민당의원 루퍼트 솔츠(Rupert Scholz)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다. 그들의 모든 지혜가 집사람이 작성한 메모에 흘러 들어갔다.

### 1989년 12월 8일

**수상은 유럽공동체의 국가 및 행정수반이 모여서 새로운 정세에 대해 협의하고 독일인을 불안하게 한 유럽의회가 있는 슈트라스부르크(Strasbourg)로 날아갔다.**

내가 수상으로 봉직했던 기간 중에 유럽공동체 정상외 모임이 그렇게 얼어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던 것을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다. 물론 나는 대부분의 유럽인에게 독일인은 유능하고 믿을만하다고 평가받고는 있으나 특별히 인기가 있는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금세기 역사에서 풀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다. (...)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마주친 흡사 법정에서와 같은 추궁에 놀랐다. 내가 10개조항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냐는 것이었으며 나는 그에 답하도록 요구받았다. (...)

다우닝(Downing)가 10번지의 의구심이 가장 강했다. 내용이 틀린 소문들을 해명하며 나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에게 연민(Sympathie)과 존경심을 느꼈다. 많은 사안에 대해 물론 나는 그녀와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대처는 독일인에 대해 오랜 세대에 걸친 깊은 불신감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처지가 되어 문제들을 생각하려고 항상 애썼다. 금세기에 두 번이나 세계전쟁에서 패했던 독일이 같은 세기의 말에 최후의 승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1989년 12월 19일

「본」의 통치자는 드레스덴(Dresden)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초대된 스타가 되었다. 「콜」에게 이 날의 진행경과는 대중집회에서 최초로 나타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플래카드로 인해 국가통일에 이르는 길목에서 결정적 체험이 되었다.

우리는 빠져 나올 수가 없었으며 그때 갑자기 내게 떠오른 것은 이 정권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통일은 오고야 말 것이다. 비행장 전체에 특히 건물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뒤덮여 있었고 독일의 삼색국기가 12월의 찬바람 속에 펄럭였다. 그 사이에 거의 잊어버린 듯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흰색과 초록색으로 그려진 작센(Sachsen)주의 주기였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착한 후 나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와 아래에 서있었고 모드로브는 약 10m 정도의 거리에서 석고같이 굳은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루디 자이터스(Rudi Seiters: 당시의 수상실장관)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 이따금씩 그 속도는 보행속도와 같았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길 양편에서 있었다. 공장을 결근하고 나온 종업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학급 전체가 나온 학생들도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환호하며 맞이하였다. 나는 “『콜』, 독일의 수상” 또는 “독일연방의 작센은 수상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이 순간까지 연설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이들에게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어디에서? 당시의 드레스덴 시장이었던 볼프강 베르크호퍼(Wolfgang Berghofer)가 아이디어를 내었다. 나는 프라우엔교회(2차대전 때 파괴된 교회인데 나치즘의 잔혹함을 상기하기 위하여 전후에도 재건하지 않고 파괴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음)의 폐허 앞에서 연설할 수 있었다.

예측 가능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 「콜」 수상은 동독수상과 함께 호텔 벨레뷰에(Bellevue)의 루드비히 니히터홀에서 단둥이 협상하였다.

모드로브는 경직된 채로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폭력에 다다를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설지도 모르는 차원에 접어들었으며 내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마침내 그는 동독의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1990년과 91년에 150억 동독 마르크의 부담조정금액을 요구하였다. 그 금액은 이미 샬크-고로드코브스키가(Schalck-Golodkowski: 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의 우두머리였으며 해외 무역을 담당했던 KoKo의 대표였던 인물)가 크렌츠를 위해 요구하였던 것이다.

나는 응답하면서 같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드로브의 관점과는 여러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독 측은 나의 10개조항의 프로그램중 9개항에는 동의하였다. 연방(Föderation) 구성이라는 목표는 아직 주제가 아니었다. 비록 나는 이러한 상황의 전개가 그런 방향으로 진척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수십 억에 달하는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동독은 이를 위해 먼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나는 모드로브에게 말하였다.

그 사이에 한 목소리로 『콜』이 창가에 서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호텔 빅레부에 모여들었다.

나는 내심 몹시 긴장하였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연설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힘든 연설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다. (...)

갑자기 내게 걱정이 생겼다: 군중들이 돌연 “모든 것의 상위인 도이칠란트, 도이칠란트(Deutschland, Deutschland über alles)”라는 소절로 시작되는 독일국가(19세기 전반 수많은 소연방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을 고취하기 위해 불러졌다. 그러나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주변국들에게는 이 노래가 광신적 독일 민족주의나 나치즘의 부활로 보는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다)를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시선이 드레스덴으로 쏠려 있는데 민족주의 과잉폭발을 의미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상황에서 일어난다면 독일인에게 파멸적 손해를 주지 않을지라도 어려움을 주리라는 점은 분명하였다. (...)

그러나 『콜』의 근심은 기우로 증명되었다. 그가 “신이여 우리 조국 독일을 축복하소서!”라는 문장으로 연설을 끝냈을 때 모인 사람들은 찬찬성을 보여 주었다.

열광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려 깊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전체 독일을 향한 열망이 이제 이성과 안목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아무도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귀가의 표시로 인식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연세든 부인이 연단 위에 있는 나에게로 올라와 나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 모두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직 커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모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 1990년 1월

**상상에 의해 애매하게 추정된 독일정책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격렬한 공격 후에 『콜』은 프랑스와 미테랑을 방문했다. 대서양 해안에 있는 미테랑의 휴가지 라체에서 『콜』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폴란드 국경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국경경계선의 신성함은 존중될 것이라고 나는 강조하였다. 미테랑은 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나는 폴란드를 유럽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프랑스와 미테랑은 두 개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러시아라고 하였다. 그는 의식적으로 소비에트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독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둘 사이에는 당장에는 해결될 수 없는 긴장의 영역이 있다고 하였다. 소련의 실험은 일정 기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고 그러면서 능변의 질문을 제기하였다: “소련이 실패한다면 그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것은 공산국가가 아니고 심각한 군사독제” (...)

미테랑에게 있어서 러시아가 독일문제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임은 의심할 바 없었다. 그것이 미테랑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다. 독일통일로 향한 행보가 고르바초프에게 어려움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되며 더욱이 모스크바가 다시 무력으로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독일에서의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기에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야 했다.

## 1990년 2월

**모스크바의 독일정책에 있어 극적인 변화의 징조가 보였다. 고르바초프는 동베를린의 한스 모드로브 수상에게 소련이 서독과 동독의 통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드로브는 “하나의 조국, 독일을 위하여”라는 계획을 가지고 서둘렀다.**

모드로브의 제안은 소련이 어떻게 동독의 붕괴를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답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독 측에서 제안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에 있어서 나의 10개조항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동베를린으로 돌아간 후 2월 1일에 명확히 확인한 대로 “통일된 독일은 중립국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독일의 나토로부터의 탈퇴와 중립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속한 독일통일을 제시했었다면 양독의 여론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의해 야기된 정치분야에 대한 곤경은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나는 독일의 중립화는 유럽 전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독일에게도 불행을 불러오는 실책이 되리라는 것을 너무도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독일이 고립되었던 것만큼 악수가 될 것에 틀림없었다.

모드호브가 『콜』에게 다보스(Davos)에서 있었던 “세계경제포럼”의 회의장에서 동독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시인한 후에 우선적으로 동독국민에게 서독 마르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획이 『콜』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우리는 통일과정의 동적인 면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상황은 대단히 극적으로 변해갔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수 없었다. (...)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했다: 만약에 우리가 라이프치히의 주민들이 서독 마르크에 다가서는 것을 막는다면 서독 마르크가 라이프치히의 주민에게 다가설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것은 정치적·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는 동독에 엄청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을 그리고 우리측에는 엄청난 가히 혁명적인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상과 그의 경제장관 그리고 전문가들의 앞에 놓여진 중요한 문제는 서독의 마르크와 동독의 마르크를 어떤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다.

1:1 교환비율이 엄청난 정치적·심리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그것은 동독인들에게 동일한 권리 아래에서 동서독 연대의식을 그리고 부자 사촌이 가난한 사촌에 대해 무례한 짓거리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어떤 경제학교과서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전례 없었던 제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통화의 하나로서 서독 마르크는 번영의 토대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피해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1 교환정책이 동독의 사회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파멸적 규모로 동독의 경제적 불행을 야기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1990년 5월 18일**

**서독과 동독은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 「콜」은 국가통일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4년까지 1,150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숫자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실제로 단지 연방재정에서만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총 7,200억 마르크가 구동독지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비록 내가 1990년 봄에 이 숫자를 알았을지라도 모든 기본적 정책들을 지금과 다르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의 지연에 따른 정치·경제적 비용은 신속한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의 재정적 비용보다 단언컨대 훨씬 더 부

답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1:1의 교환비율이 아닌 화폐 교환을 취하였다면 양독일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주민 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싶다. 도대체 누가 진정으로 당시 양독간의 국경을 다시 폐쇄하는 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믿었는가? (...)

사건이 경과한 후 나중에 사람들은 문제에 대한 처방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동독의 국가재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상기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동독이 세계에서 10번째 공업국가라는 전제에서 1조 2천억 마르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 조약의 협상에서 신탁청에 의한 동독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해서 동독채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

후에도 자주 나는 어떻게 동독의 경제력 능력에 대해 잘못된 평가가 나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하였다. 나의 견해로는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것이다. 동독에 대한 연구 또한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지 못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국가안전부(Stasi)와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위장정보 전문가에 의해서 마련되고 유포된 필경 선동성 거짓말이었다. 요컨대 동독은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큰 기만책략에 성공한 것이었다.

**1990년 7월 15일**

**모스크바에서 독일의 통일과 독일의 완전 주권에 관한 중요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협상에서의 쟁점은 독일의 「나토」 회원국 잔류문제였다.**

나는 고르바초프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비교적 명확히 이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독일은 형식적으로 전체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 서독지역만이 나토에 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소련군의 철수에 관해 효과적으로 협상했었다면 나중에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독립적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동맹군문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모스크바는 나중에 군대철수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였다. (...)

이날 오후에 일류신 62비행기가 두 국가정상과 그들의 수행원을 태우고 고르바초프의 코카서스 고향으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집주인은 자신의 독일손님들에게 산책할 것을 권하였다.

나는 털실로 짠 검은 색 점퍼를 걸쳤다. 조금 후에 나는— 고르바초프는 스웨터를 하나 더 껴입었다. —고르바초프와 함께 세렘추크강(Selemtschuk)을 따라 걸

었다. 우리 대표단의 수행원과 기자들이 뒤따라 왔다. 몇 미터 떨어져 고르바초프가 서 있었고 강가의 언덕을 내려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거친 물살의 강가에 서서 하천의 위협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나는 긴장이 풀린 느긋한 기분의 고르바초프를 경험하였다. 우리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의자들이 있는 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다음날 아침— 산간감시원이 사용하는 회의실에서 —우리의 목적이 담긴 문안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고르바초프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몇 년간에 걸쳐 소련주둔군을 철수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켰다. 처음에 고르바초프는 군대철수는 5년에서 7년간에 걸쳐 행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3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순간에 나는 1944년 11월에 적군의 최초 군대가 독일제국의 국경을 넘었던 것을 기억하여야만 했었다. 이제 정확히 반세기 후인 1994년에 소련의 마지막 군대가 독일을 떠났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Barter on the Border*

**By** Shim Jae Hoon

1996. 10.

본 자료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6.10.10)誌의 COVER STORY로 다루어진 기사로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성행하는 밀무역 현황을 다룬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의 밀무역

두만강변 중국측 강언덕에 30대의 남자 한사람이 서서 색안경너머로 강 건너편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30여 미터 떨어진 북한측에 자신의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두손을 입에 대고 큰 소리로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거래할 준비는 다 되었소?”라고 크게 소리쳐서 묻자, 강 건너 북한인으로부터 낫산 캐디락 중고품을 4천 달러에 팔겠다는 응답이 왔다.

두사람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쳐가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조그마한 다리의 양편에 있는 경비병들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이들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자신을 金이라고만 밝힌 색안경을 낀 사람이 경비병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거래에 상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은 “우리가 경비병들에게 화장실을 가라고 요청하면 그들이 자리를 비켜줄 것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차가 강을 건너온다.”고 말하면서 잇몸을 드러내고 히죽히 웃었다.

연길에서 남동쪽으로 2백킬로미터 떨어진 콩셴(Congshen)에서는 경비병들이 ‘화장실에 가는’ 일이 매우 잦았고, 이 틈을 타서 金과 북한측 상대방은 소맥분이나 옥수수, 그리고 예술품은 물론이고 공장설비기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가지고 활발하게 거래를 성사시켜 나갔다. 실제로 북한-중국 국경의 모든 곳에서 밀무역은 만연하고 있었다.

국경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평양정부나 북경정부도 이같은 밀무역을 억제하지 않는 것은 양측 정부 모두 밀수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생필품 조달 경로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동대학의 한 교수는 “중국은 곤경에 처해있는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계속적으로 위축되어 가기만 하는 북한의 경제상황은 파산직전에 직면해 있다. 평양정부로서는 필사적으로 무역을 확대시켜야 하지만 북한은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이 거의 없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결제할 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베를린장벽이 붕괴한 이후에 전통적으로 북한의 시장이었던 지역들은 자본주의 상품들이 모두 장악해 버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북한에 상품을 수출하는 공급자들도 상품대금을 경화로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그나마 의존하면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국으로는 중국 밖에 남지 않았다. 북한-중국의 서부접경지역에 위치한 단둥시에서는 아직도 많은 트럭들이 덜커덩 거리면서 친선교를 넘나들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으로는 주로 소맥분이나 옥수수 등이고 북한은 목재, 석탄, 실리콘, 철광석, 생선 등을 수출한다. 작년 한해 동안 북한-중국간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교역량은 5억5천만불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중국측의 호의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연길시의 한 조선족 무역업자에 의하면 이러한 교역량이 현저하게 퇴조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중국간의 무역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무역량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북한에는 중국으로 수출할 물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인들이 무역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창고에 상품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한다”는 것이 사업차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중국회사의 젊은 사장의 설명이다.

밀수꾼들만이 활발한 밀무역 거래를 지속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두만강변에는 많은 북한인들이 동선케이 블, 고철덩이 등을 가지고 소맥분, 인스턴트 국수, 옥수수 전분 등의 음식으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같은 비공식적 무역거래는 대부분 북한과 접경지역인 중국의 길림성과 요녕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실제로 조선족 자치주 지도자들은 접경무역을 하기위하여 농사까지 포기하고 몰려가는 농민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연길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접경 밀무역에 나서고 있는 한 조선족은 “우리나 북한쪽 사람들이나 모두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싱글 싱글 웃었다.

조선족들에게 밀무역은 농사를 포기하고 덤벼들 만큼 매력 이 있는 일이다. 밀무역은 육체적인 부담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약간의 위험도 수반되는데 예컨대 뇌물을 받치지 않는 도보 무역상들을 북한 경비원들이 괴롭히는 일들이 간간히 발생한다. 그렇지만 북한 경비원들을 피해 다니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니다. 접경지역에는 통상적으로 거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고 울창한 숲과 짙은 풀안개가 깔려있다. 접경지역의 어떤 지점은 양측의 거리가 30여 미터에 수심이 한팔 깊이 밖에 안되는 곳도 있다. 겨울철에는 얼어 붙은 강위로 사람과 상품이 이동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밀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이 적게는 3천만불에서 많게는 3억불까지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양이나 가격을 산출해 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밀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로 추정해 보면 아주 많은 양의 밀무역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는 밀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1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같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접경지역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밀무역은 북한인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행위로서 밀무역을 통하여 음식물, 의류, 의약품은 물론이고 북한에서 구할 수 없는 기타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들을 조달한다. 또한 밀무역꾼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지하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박사의 주장이다.

밀무역은 대단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북한으로 1회에 28일씩의 여행이 허가되는 특별 여행증을 가지고 있는 밀무역 상인들은 중국측의 장백지역으로부터 시작되어 접경을 따라 산재해 있는 작은 읍이나 도시에서 정식 상점을 개설하고 있다. 자동차나 사치품들은 달러로 사들이고 음식물이나 기타 소비제품들은 북한원화로 거래한다. 평양의 공식적 환율은 달러당 2원이지만 연길의 암달러시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환율은 통상적으로 달러당 1백70원에서 1백80원까지 간다.

밀무역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전문 영역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연길에서 1백50킬로미터 떨어진 국경도시 산허(Sanhe)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은 전적으로 예술품만을 거래하는데 골동품에서 북한 최고수준급 현대 화가의 두루마리 작품까지 골고루 취급한다. 구매자는 통상적으로 남한에서 오는 예술품 중개인들인데 그들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가짜 물건을 사거나 강도에게 물건을 강탈당하는 일을 당하기

도 한다. 올해 초에 남한에서 온 한 중개인은 찌임에 빠져 강건너로 넘어갔다가 강도에게 물건을 강탈당하고 북한 경비원에게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간혹 거래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하여 대단히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초에 서울에서 온 저명한 예술품 중개인은 북경에서 출토된 7세기 청동불상을 1백만불에 판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 불상은 북한인에 의하여 북경에서 밀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었다. 언론에서는 북한의 어느 건설현장에서 출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였지만, 길림의 조선족은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불상을 밀수한 북한인은 북한군 고위장성의 대리인이라는 것이다.

골동품 밀수는 굉장히 드문 일이다. 연길의 한 밀무역상은 “단언컨데 박물관에 소장될 수준의 골동품은 당국과 공모하기 전에는 입수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말 속에는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를 위해서건 사욕을 위해서건 국보급 보물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 정도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피폐하여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 *Darkness at Noon*

By Shim Jae Hoon

1996. 10.

본 자료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6.10.10)誌의 COVER STORY로 다루어진 기사로서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에 따른 탈북 문제 등 제반 위기 상황에 대한 기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한낮에도 암흑같은 북한

늦은 저녁시간, 신의주 시가지는 이미 유령의 도시처럼 정적에 싸여 있다. 인구 7십만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도시 신의주는 칠흑같은 어둠속에 잠겨 있었다. 압록강변의 중국측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가로등이 강건너 단동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거대한 초상화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수령으로 기억되고 있는 김일성이 죽은 지도 2년이 지났고, 북한을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바꾸어보려 했던 그의 꿈도 그의 죽음과 함께 묻혀버렸다. 신의주시를 감싸고 있는 짙은 어둠은 김일성의 꿈을 물어 버리는데 사용된 수의를 상징하는 듯하다.

한때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자랑거리였으며 북한에서 석유화학 공업의 중심지였던 신의주시가 지금에 와서는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해버린 북한 경제의 처량한 유품처럼 되어버렸다. 모자라는 생활필수품은 전력만이 아니다. 수 많은 신의주 시민들은 초근목피로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야산을 마구잡이로 뒤지고 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식량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들고가서 지하시장의 암거래 상인들이나 중국 밀수꾼들과 교환하기도 한다. 굶주림과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몇몇 젊은 여성들은 밤을 틈타서 강을 건너가 단동시에서 매춘녀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국가 전역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의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으며 국가가 붕괴될 직전에 직면하여 있는데 이 상황을 되돌리기에 북한정부의 힘은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경제는 현 체제아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되어 있다. 아마도 국가경제의 기능 조차도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을

것이다.”고 모스크바에 있는 현대국제문제연구센터(Centr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Problems)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분석하여 지난 8월에 발표했던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몇가지의 통계수치를 들어보면 북한의 경제는 제동장치없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국내총생산은 지난 6년동안 연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감소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지난해 총무역액이 한국이 1주일동안 수출하는 액수보다 적은 20억5천불에 불과하다. 2년 연속 농토를 휩쓸어 버렸던 홍수로 인하여 곡물 수확량도 급격히 감소되었다. 지난 9월 북한의 한 고위관료는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백5십만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수요량 7백8십만톤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들이 북한정권의 내부적 동요와 기아에 못이긴 북한사람들이 잇달아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하는 사태와 더불어 북한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예견들은 서울과 북경의 수뇌부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한국정부나 중국정부 모두 그들과 상호 인접해 있는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은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한 파편들이 국경을 넘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체제가 몰락해 가는 쪽을 원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한국은 독일이 통일되면서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비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자신들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부담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은 북한을 “공중에서 엔진이 고장나서 통제수

단을 잃어버리고 지상으로 곤두박질 치기 직전의 비행기”에 비유하였다. 김대통령은 북한에 더 많은 식량을 지원하여 북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이나 중국은 모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사전준비로 북한주민들이 무더기로 북한을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을 수용할 피난처를 건립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산케이 신문은 8월 30일자 기사에서 중국이 북서쪽 접경지역인 연길시 인근에 대규모 피난민 수용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용 인공위성이 이 건물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왔다고 미국관리의 말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통일원 부총리가 서울 남쪽에 피난민 수용소를 건립하기 위한 재원으로 1997년도 예산에서 46억원(5백6십만불)을 지출해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아직은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으로 탈출하는 사람은 연간 1백명이 채 못되며, 1992년 이후 중국으로 탈출하여 온 사람의 숫자도 1천명 정도이다. 중국 국경지방인 길림성과 요녕성에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벗어나자마자 거대한 조선족 사회로 재빠르게 숨어들어가 버린다.(한국 정부 관료의 말을 빌면 4백여명의 탈북자들은 극동지역 러시아의 통나무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소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북한과 중국의 공안당국이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6년에 체결된 조약에는 불법 이주자에 대한 송환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발견된 탈북자들은 즉시로 북한으로 송환되고, 이들은 즉석에서 처형된다. 때로는 마을 주민들이 보는 공개장소에서 처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연길시의 한 조선족의 말이다. 러시아의 한 관료의 얘기에 의하면 지난 4월에 자신이 국경부근에서 두명의 탈북자들을 적발하여 북한으로 송환하였으나 세 번째 발견된 탈북자는 북한 경비병에 의하여 발견장소에서 즉시 처형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공안 관리들은 국경지방의 감시체계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각 가정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조장하고, 한 마을에서 탈주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을 전체를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여하튼 간에 밀무역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내지에 살고 있어서 국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중국 접경지방에 살고있는 북한사람들이 탈북하려는 욕구가 적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지난 1월에 평양 라디오 방송국 극작가인 장해송이 죽음을 무릅쓰고 연길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위조 여행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는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때 입었던 골절상으로 한 동안 고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피폐한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탈북하는 사태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 당국자들은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탈북현상은 머지않아 5백만명이상이 국경지방으로 몰려드는 대규모 탈북사태로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이며 비무장지대에 엄청난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구섭 박사는 북한에는 가용할 만한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월남처럼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년전에 한국이 예상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북한정권 내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분석해 보면 김정일은 이미 정권의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이고,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비밀경찰망도 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당 간부들이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고, 김정

일은 이미 자신과 동세대인 40~50대 노동당원들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상위직책에 포석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고위 장교들, 노동당 간부당원들, 국영기업체 간부들, 저명한 학자들과 같은 엘리트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족한 식량을 배급받을 때 우선적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단동대학교의 한 교수는 북한사회에서 체제에 도전하여 반란을 일으킬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계층은 사회의 최하층민과 상층부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들로 공장의 중간관리자들, 젊은 초급장교들, 젊은 기술자들, 지식인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체제 전복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행동에 돌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단동대학교 교수의 부연설명이다.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폭동이 일어날 시점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기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동이 여러차례 있어 왔으며 북한에 만연하고 있는 기아현상도 이미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영양실조가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1일 평균 식량배급량은 식량농업기구(FAO)의 최소 권장량인 4백50그램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그램까지 감량되고 있다.

기아현상의 징후는 각처에서 목격된다. 최근에 단동에서 압록강을 따라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가느다란 팔과 가슴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아이들이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강건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찍어온다. 지난 9월에 접경지역을 여행하였던 한완상 전 통일원부총리는 이런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하였다. 지난 9월에 진상조사차 북한을 다녀온 세계식량계획(WFP)의 로버트 하우스저(Robert Hauser)씨는 식량이 조만간에 조달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이곳 저곳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굶주림으로 인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이주하는 잠재적인 불안정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례없이 많은 수의 북한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 각처로 흩어져 나갔다. 북한-중국의 국경지방에 연해있는 산간지방에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식물들을 파내가서 생겨난 웅덩이가 사방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일당 독재정권이 대중을 통제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들 중에는 북한정권이 군대마저도 제대로 유지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 9월 중순에 워싱턴에서 열렸던 상원청문회에서 국방부 고위관료인 윌리엄 라이트(William Wright)는 기아의 영향은 막강했던 110만 군대의 기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군이 해체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층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식량이 배급되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보내졌던 쌀의 대부분이 군대에 할당되었고 나머지 분량을 국경지방에서 옥수수, 기장 등과 같은 가격이 저렴한 곡물로 교환하여 9배정도로 양을 늘렸다는 것이 한국 관료들의 이야기이다.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에 직면한 북한정권은 그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엄격하게 금지시켜 왔던 사유제 영농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완화시키기도 하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의 말에 의하면 북한정부는 현재 매 가구당 30평(1평은 3.3평방미터에 해당함)까지 텃밭을 사적으로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군인가족인 경우에는 1백평까지 확대하여 허용해주고 있다고 한다.

북한정권은 사유경작을 인정하는 외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이데올로기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에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 외국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던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정부는 엄격하게 폐쇄하여 왔던 시장구조를 기꺼히 개방할 뜻이 있다고 표명하였다. 이 설명회에는 합작회사 설립의 가능성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실망을 안고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이 실망한 첫 번째 이유는 투자자유지역내에 도로, 전력, 용수공급 등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설명회에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북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은 그로부터 몇일 뒤에 좌초한 북한잠수함에서 일단의 특수 전투요원들을 한국영토에 상륙시킨 사건에서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 상륙한 전투요원들의 일부는 한국군에게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이 벌이고 있는 이같은 군사적 모험주의는 외국의 기업가들의 불신을 뒷받침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교란정후는 9월초에도 발생하였다. 당시 홍콩세관은 북한에서 시리아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18개를 압류하였는데, 이 안에는 소련제 1백30밀리 M-46 대포들이 포장되어 있었다. 이 대포들은 국제무기시장에서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가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해야만 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가 극도로 파쇄되어 있어서 현금이 고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지하경제는 성행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이미 전국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다. 일부 계층에서는 자본을 축적하여 자본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종석 박사는 “지하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소위 제2의 경제가 국가경제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아 왔던 북한의 부패상은 이제 일상의 생활이 되고 있다. 국경 경비원에서 회사의 간부들에 이르기까지 관료들은 거래에 개입하여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집안에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 “한동안 북한이 공지로 내세웠던 사회적 규율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단동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람들 중의 일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은밀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중국의 조선족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부정적 비판을 토로하는 일이 심심찮게 있으며, 굶주림 때문에 격분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들 중에는 식량부족현상이 “인재”라며 직접적으로 김정일의 책임으로 돌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식량문제만 해결하여 준다면 누가 당권을 장악하든지 관심이 없다.”고 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북한을 여행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같은 상황이 북한체제가 붕괴되어가는 조짐이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한국의 송영대 전 통일원 차관은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할 때는 통상적으로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단계가 경제적 황폐화이고 이어서 정부기능의 마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국가의 소멸이 뒤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북한이 이제 그 첫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 중에는 향후 5년 이내에 북한에서 나머지 3단계 과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있다. 추측컨대 그 길만이 북한이 오랜 동안의 절망의 나락을 떨치고 빛을 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現代

金正日書記が企らむ

『せん滅作戦』の恐怖

모토기 마사히코(元木昌彦 : 주간현대 편집장)

1996. 10.

본 자료는 일본의 시사 주간지 現代('96.10.12)에 게재된 기사로써 최근 북한의 잠수함 무장 공비 남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김정일의 “서울 섬멸작전” 음모가 노리는 것

9월 18일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은 현재에도 한국을 동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무장공비 26명 전원이 테러리스트 양성기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동해안의 항구 도시 원산 근교의 정찰국 해상처 448연락소로부터 파견된 부대라고 생각되는데, 침투공비 26명 전원이 소위이상의 엘리트군인들이다.

인민무력부 정찰국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68년에 일어난 청와대 습격미수사건이다. 이 몸서리치는 부대에 대해서는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금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차성근씨가 이야기하고 있다.

“인민무력부 정찰국 군인들은 압록강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특수군사학교에서 격투기, 폭파, 납치, 암살, 지중은둔술등 철저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철조망을 뜯고 침입하여 도망치는 것 정도는 조반식사전에 하고, 소금 2Kg만 가지고서 지하호나 민가의 지붕밑에서 1개월 견디어내는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망은 하루라도 빨리 남파되어 김정일을 위해서 순사하여 [공화국영웅훈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차성근씨는 현재 북한에는 이 인민무력부 정찰국의 4개 여단, 특수8군단을 비롯하여 현대판 특공대라고 불리우는 특수부대만도 10만명이나 있으며, 더구나 그들은 군사분계선등은 아예 없는 듯이 거침없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93년에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 공작원 송명진씨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소속하고 있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작전부에서는 6개소대에서 제각각 1회씩 1조에 3명씩 1년에 4-5회이상 정찰목적으로 한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침입기간은 1주일에서 3개월인데 거의 전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되돌아 오고 있는데 성공률은 98%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은 통상적인 훈련중에 잠수함이 표류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대남보복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장공비 26명의 한국 침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궁극적으로는 한국 서울 섬멸작전이었는데 이에 3가지 세부목적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먼저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암살이다. 이것은 68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83년의 전두환 대통령 암살미수사건(랭군사건) 등을 보면 상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더구나 이번은 절호의 타이밍이었다. 10월 7일에는 이번의 침투지점인 강릉과 같은 강원도에 있는 춘천에서 가을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그 개회식에 김영삼 대통령도 출석할 예정이었다. 정확히 그 3일후는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과 버금가는 대단한 축제일인 북한 노동당 창건 51주년 기념일에 해당된다. 그 때문에 북한 인민무력부는 적국 대통령 암살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김정일에게 헌상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번에 침입한 무장공비들은 [김정일동지의 명령은 절대로 성공지킨다]고 하는 결의문을 휴대하고 있었다. 10월까지 그대로 잠복해 있다가 서울보다 테러하기가 용이한 강원도에서 김대통령을 저격하려 한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

다음에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교란이다.

금년 4월 11일에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북한군 병사가 38도선 비무장지대에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분명히 한국을 교란시킬려고 한 도발행위였다. 이번에도 8월 중순에 한국 대학생 약 5,900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최대 규모의 한총련 테모사건이 일어나는 등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내정세를 혼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확인의 목적으로 침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위협을 무릅쓰고 무엇을 확인한단 말인가. 대답은 강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금강산에서 한국 강원도로 흘러가는 북한강의 지세를 어떻게하든 상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북한강의 금강산댐을 완성시켜라!”

이 말은 2년전에 사망한 김일성의 유훈이었다. 금년 7월 3일 북한 노동신문은 1면 톱기사로, 다음과 같은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로부터의 감사-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드디어 꽃피었다. 약 100리에 이르는 장대한 하천에서 물을 가두는 금강산 댐이 완성된 것이다. 수령님의 생명을 받은 병사들은 예를들어 하늘이 무너져도,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대사업을 수행하고자 단단히 결의했다. 그리고 대자연개조공사는 6월 30일에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9월 17일자 노동신문에도, 김정일이 9월 10일에 이어 재차 금강산댐을 시찰했다는 기사가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었다. 과연 김정일의 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금강산댐에 대한 음모는 무엇일까.

86년 9월 22일에 갑자기 평양방송이 금강산댐 착공을 보도했는데, 그 직후에 한국의 당시 이기백국방장관이 “만약 완성되어 북한이 댐을 파괴시키면 서울은 물바다가 된다”고 발표하여 한국 국내을 공포에 잠기게 했다. 한국측의 추산은 서울의 수위는 30미터나 상승하고, 한국국회건물에서 아파트까지 수몰하여, 철도, 도로, 통신망등은 단절된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만10년이 지나 북한은 드디어 악마의 댐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야마나시대학의 미야쓰카 조교수가 설명했다.

당시 한국 건설부는 그 거대한 댐이 만수때에 파괴되었을 경우, 매초 230만톤의 수량이 한국으로 흘러들어 서울까지 도달시간은 겨우 20시간이라고 추정했다. 1,000만 서울시민은 일순간에 대혼란에 빠진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있다.

덧붙여서 한국은 금년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대홍수를 당해 전국각지 마을이 육지의 고도가 되는등, 사망자 85명을 내는 대피해를 내어, 이로써 공교롭게도 홍수에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북한측이 [댐파괴 효과]를 계산하려고 핵심 스파이를 선발하여 남파시킨 것이다. 더구나 금년 여름은 기록적인 강우량이었기 때문에 최대 저수량이 200억톤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금강산댐은 이미 물을 가득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상상된다. 이는 말할 수 없이 공포의 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테러리즘으로 질주하고 있는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일반국민의 1일 쌀과 잡곡배급량은 작년은 450그램정도 였는데, 금년은 250-300그램으로 줄어 들었다. 또한 암달러시장의 환율도 5년전에는 1달러=80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150원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이번 스파이 사건은 68년의 경우와 많은 면에서 닮아있는 것 같지만, 병사의 모양새만은 크게 달라졌다. 68년 당시는 충분한 지급금을 휴대하고, 번쩍 번쩍하는 신사복까지 휴대한 모양새 있는 병사들이 침입해 왔지만, 이번에는 식량을 강탈하기 위해 온 난민 같은 인상을 받았다. 대우받고 있을 엘리트 군인마저도 이제는 이 지경에까지 생활수준이 떨어졌다는 감이 든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도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국민은 지도자를 외면하는 법이다. 제아무리 종교국가라고는 하지만, 김정일과 북한주민들과의 괴리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급증하고 있는 망명자들이 증명하고 있다.

그 때문에 김정일은 점점 더 군부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 김정일시대가 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정일이 공식적인 장소에 얼굴을 내미는 것은 김일성 추도행사를 제외하면 군부에 대한 격려뿐이다.

이번 침입사건도 군부의 인기를 얻기 위해 김정일이 진두지휘하여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김정일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최광 인민무력부장, 김영춘 총참모장, 김대식 인민무력부 정찰국장, 김용순 서기등, 강경파가 많다. 9월26일에는 북한중앙통신이 “한국에 대하여 강경조치를 취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바, 결국 김왕조는 위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추진하는 길은 강경노선밖에 없다고 김정일이가 마음결정을 한 것은 금년 여름에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졌을 때가 아니겠는가. 그 판결로 보아 장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도 자신은 사형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어디까

지나 무력통일의 길을 추진하기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안기부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기도하는 공포의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더욱 더 불안해지는 것은 한국군의 대응이다. 잠수함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가까운 군기지로 신고한 택시 운전수에게 “관할이 다르다고 돌려 보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한국군은 태평에 너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해도 달리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겨우 26명으로 전 한국을 *Panic*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일은 웃음을 띄우며 다음에 칠 술책을 생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FOCUS

# *DIE BEZIEHUNGS- KRISE*

1996. 10.

본 자료는 최근 독일의 시사주간지 FOCUS ('96.9.30)가 독일 통일 6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통합 독일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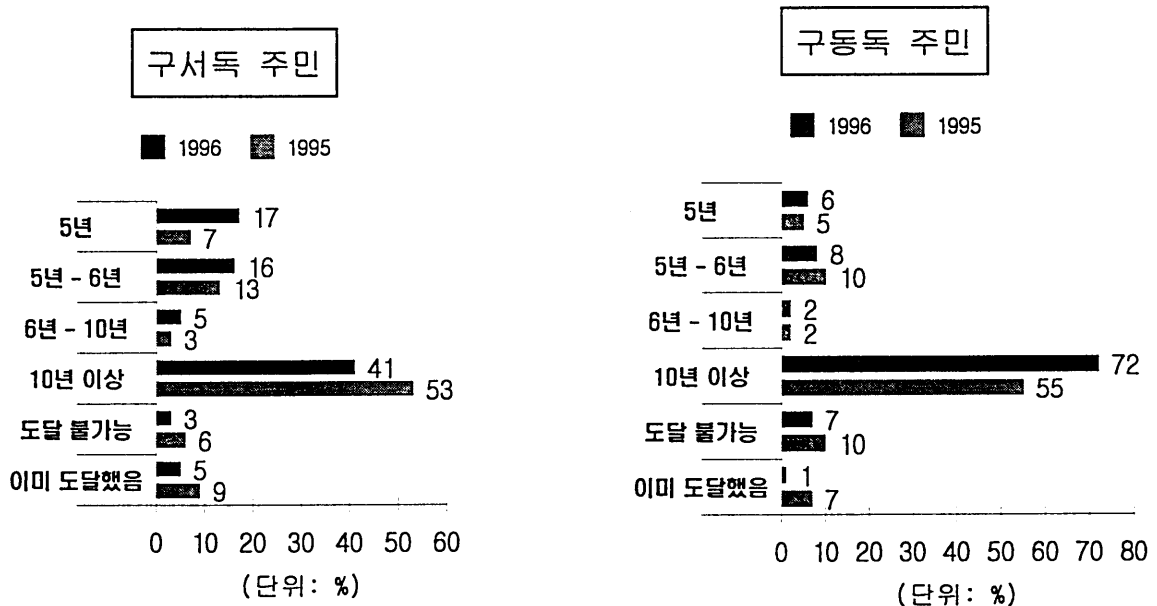
# 통일독일 6년, 하나된 땅위에서 두 개의 시각

## [하나의 민족]

1989년 11월의 어느 날에 있었던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슬로건이 점차 사라지고 기쁨도 가시고 있으며 동독과 서독사이에 있었던 열정도 얼어붙고 있다. 일년전의 조사에서 싹틔던 조심스런 낙관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 독일인의 다수는 동서독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구동독 주민의 72%가 그리고 구서독 주민의 41%는 동독과 서독이 하나의 민족으로 융화하는데 10년 내지 그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통합과정이 전체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구서독 주민의 61%가 그리고 구동독 주민의 6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으로 결합하는데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신연방주(구동독)가 구연방주(구서독)를 경제적으로 뒤따라 잡는데 얼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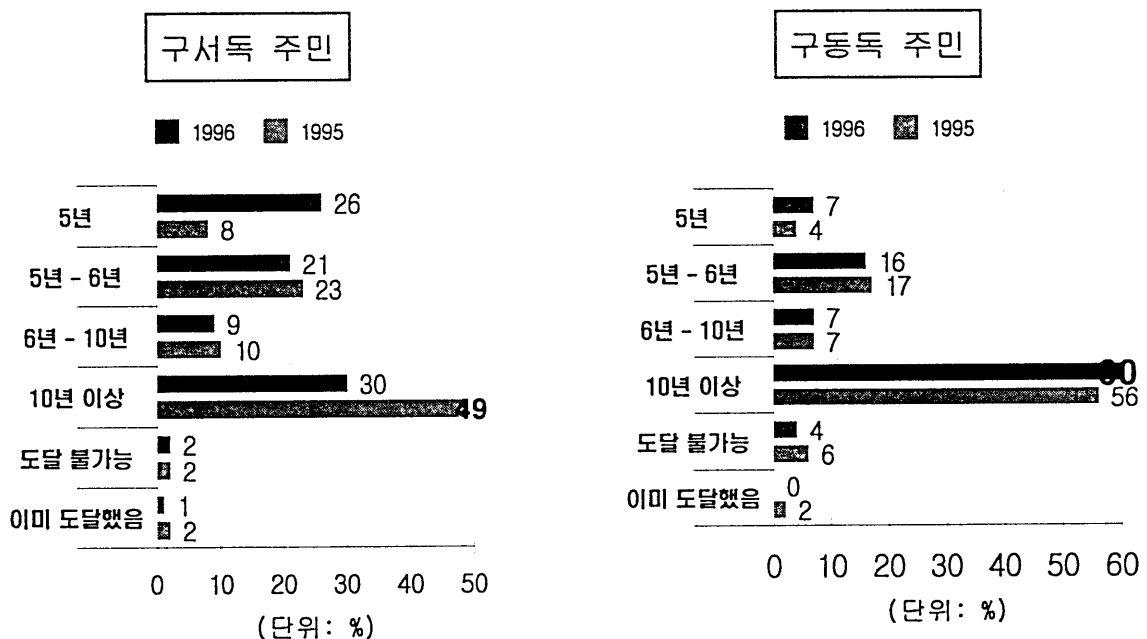


걸리겠는가? 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서독지역 주민의 거의 1/3과 구동독지역 주민의 2/3는 10년이나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가지 질문에 있어 서독 주민들은 1년전보다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반해 동독 주민들은 일년전보다 눈에 띄게 비관적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40년 동안의 사회주의가 짧은 시간에 번영하는 시장경제로 쉽사리 전환되지 않고 있는 쓰디쓴 현실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처음의 높았던 경제성장과 달리 현재 동독지역의 경기는 악화되고 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될 전망도 없다. 재정긴축제안, 연대기금 그리고 고용창출제도 (ABM;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노동청에 의해 재정적 지원을 받는 일자리로 장애인, 연로자, 기술이 없는 사람, 장기간의 실직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알선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년이고 이들이 고용되는 분야는 환경보호업무, 사회의 공적영역에 속하는 분야이다. 이를 통해 사회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의 축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에 직면하여 많은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서독으로부터 이제 바랄 것이 거의 없음에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결여되어 있다. 단지 구서독 주민의 36%, 구동독 주민의 20%만이 내년에 신연방주의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신연방주(구동독)가 구연방주(구서독)를 경제적으로  
뒤따라 잡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특이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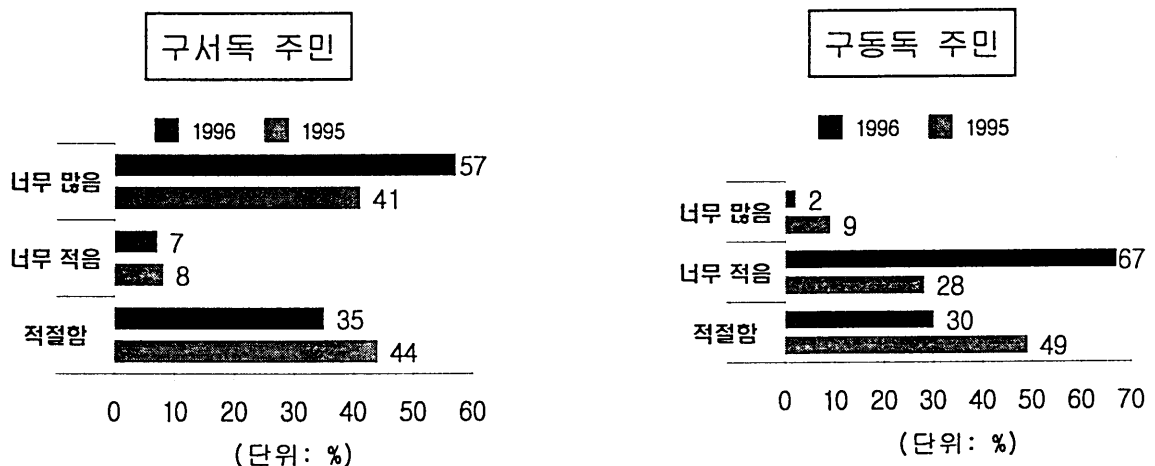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상황보다 전체로서의 일반적 상황을 훨씬 더 암울하게 보고 있다. 자신들의 개인적 상태에 대하여 구서독지역 주민의 13%, 구동독지역 주민의 10%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구서독지역 주민의 28%, 구동독지역 주민의 5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일년 전에는 각각 20%와 32%였음).

### [과거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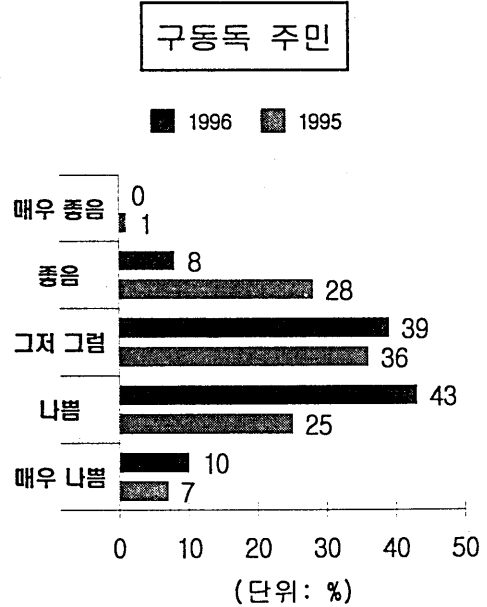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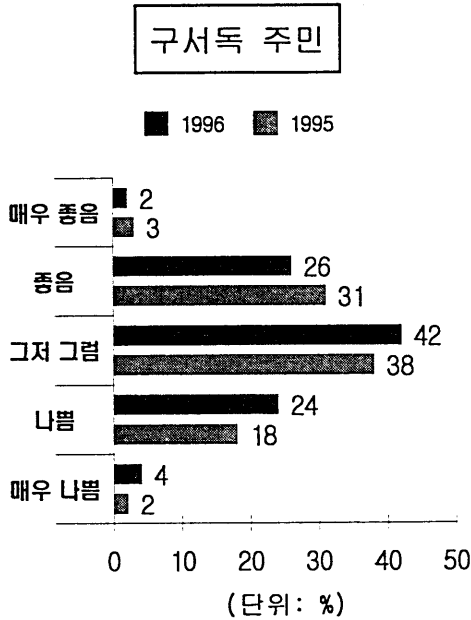
구서독 주민의 19%, 구동독 주민의 39%는 통일 전보다 구동독지역의 일반적 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25%, 구서독지역 주민의 56%는 작년에 자신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독인들은 더 이상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서독인의 57%(동독인은 단지 2%)는 구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동독인의 67%는 서독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원이 너무 적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시각은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를 향한 노스탤지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연방에 대한 구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

구서독지역 주민의 73%는 자신을 스스로 독일인이라고 명명하나 구동독지역 주민의 경우 단지 59%만이 그러하다. 결국 41%는 자신을 독일인보다는 동독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구동독지역에서의 새로운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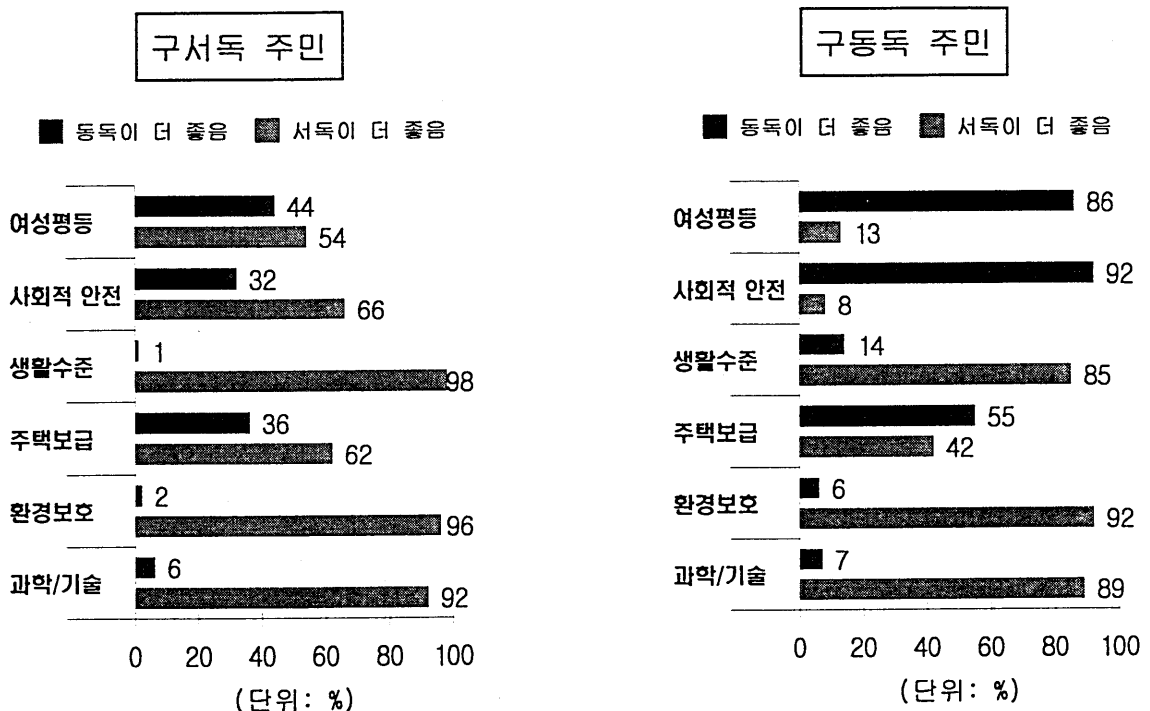
구동독지역에서의 새로운 감정은 자신을 부정적이고 퇴행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동독 주민의 71%는 통일된 독일에서 자신을 아직도 2등급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서독 주민의 28%는 구동독 주민이 2류국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통일의 꿈에 대한 환멸과 자기정체성의 추구가 변용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적은 없었다. 구동독지역 주민의 48%는

89년 이전의 동독상황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동독 주민의 18%는 구동독의 체제가 나쁜 측면보다 좋은 측면이 더 많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48%는 국가가 가능한 많이 개입하는 경제체제를 선호하였다.

구동독 주민의 10명중 9명은 여성평등이나 사회적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구동독이 서독을 능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생활수준, 환경문제, 과학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구동독 주민이 서독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떤 부문에서 구동독이 혹은 현재의 독일이 더 좋습니까?



칼 맑스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칼 맑스에 대해 구서독 주민의 20%가 그리고 동독 주민의 65%가 공감하고 있다. 구동독 주민의 65%는 공산주의의 옛 지도자들에게 동정을 보내고 있으며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동독 주민의 19%(구서독 주민의 경우 4%)가 공감하고 있고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44%(구서독 주민의 경우 32%)가 공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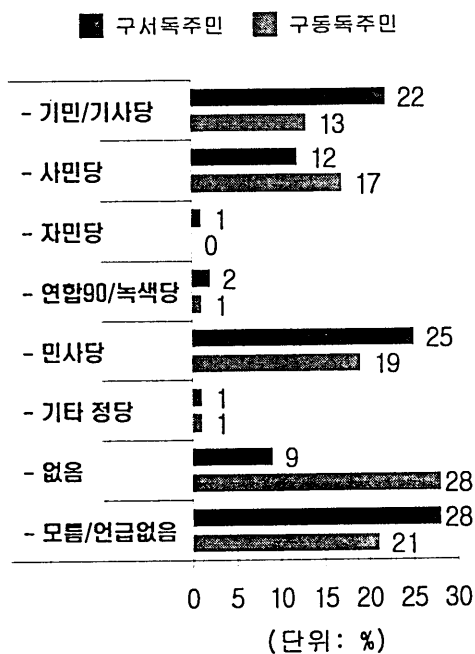
이러한 견해로부터 서독체제에 대한 거리감이 나타나고 있다. 구동독 주민의 28% - 32%(구서독 주민의 경우 15% - 17%)는 현 정치체제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해 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치관에 있어서 독일인사이의 단결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평등, 자유, 안전, 조국과 같은 개념들이 양쪽 모두에서 비슷한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다.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의 신학과 학장 리하르트 쉬뢰더(Richard Schröder)는 이런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독에서는 일종의 사회계약이 있었다고 한다: 즉 복지보다는 도덕적 품행을 국가적 선행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대량실업과 늘어나는 범죄에 직면하여 많은 구동독 주민들은 자유와 안전이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안전과 자유가 공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구동독 주민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 [예상하지 못한 결과]

어느 정당이 구동독 주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독지역 또한 정당에 대해 전체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어떤 정당이 가장 마음에 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서독 주민의 46%와 구동독 주민의 52%가 없거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어느 정당이 구동독 주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구동독 주민의 응답보다 훨씬 더 높은 구서독 주민의 25%가 민사당(PDS: 구동독의 지배정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임)을 뽑았다(구동독 주민의 경우 19%). 민사당에 대하여 구동독 주민의 49%가 민사당을 민주적 정당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구서독 주민의 70%는 민사당이 민주적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주민이나 구서독지역 주민 모두가 일치불하는 질문이 있

다. 그들은 동독의 과거청산이 너무 빨리 중단된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응답자의 2/3는 통일이 된 지 6년이 지난 지금 동독의 역사청산 작업을 마무리짓기를 바라고 있다.(동독의 역사청산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구서독 주민의 58%, 구동독 주민의 61%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 **[동독경제에 대한 전망: 경제전문가의 견해]**

이러한 구동독지역에 대한 비관적 생각에 대해 독일 경제발전평가자문회의의 다섯 위원중 한 사람이었던 할레경제연구소 소장인 뢰디거 폴(Rüdiger Pohl)은 신연방주의 경제상태가 서서히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 **○ 신연방주의 경제현황**

작년까지만 해도 8%에 이르렀던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성장률이 금년에는 3%로 내년에는 2%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의 생산량증가가 1991년 이래 1/3이나 증가했다. 반면 동기간에 구서독지역의 산업생산량은 8%가 축소하였다. 사람들은 신연방주의 도처에서 도산하는 기업들을 보지만 시장경제의 냉혹함에 적응하는 기업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 **○ 신연방주 경제의 전망**

현재 신연방주에 소재한 기업의 생산성은 구연방주(구서독지역)에 비교하여 55%에 머물고 있으며 이것은 서독의 1968년 수준과 비슷하다.

따라서 서독조차도 현재의 생산성 수준에 오르기까지 28년이 걸렸으므로 그것을 단기간에 동독에 요구할 수는 없다. 어쨌든 동독도 이와 같은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 **○ 신연방주의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

빠른 수준으로 신연방이 구연방의 생산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전제로 두 가지 정책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정책이다. 노사간 협정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더 좋기로는 노사간 협정임금의 인하이다. 그 대신 개별적 기업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정책은 공공재정의 운용이다. 경제영역에서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정치의 논리에 경제의 논리가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도로건설과 유치원 증설이 경합될 때 정치인들의 경우 투자효과가 큰 도로건설보다 유권자를 의식하는 유치원 증설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정책집행에서 경제원리가 무시된다면 결국 유권자들이 경제침체로 인한 실업률 등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By** Scott Snyder(미국평화연구소 Program Officer)

1996. 10.

이 자료는 미국 평화연구소가 최근 펴낸  
북한관련 보고서 중 탈북사태(북한의 난민  
유입 가능성과 북한의 자발적인 난민 유출  
가능성)관련 부분을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탈북사태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에서 탈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난민기구 라이오넬 로젠블라트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던 탈출사태의 예로 비추어 보건데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여 탈북 사태를 억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탈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고위급 협의와 의견조율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인공위성이 북한의 농작물 작황을 분석하여 보내오는 자료들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탈북 사태를 막거나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수위에 달해있는 지역의 농업생산물 문제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대한 데이터 등 인공위성에서 분석하여 알려주는 자료들은 탈북사태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 수립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에 대하여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돕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은 탈북사태를 막고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마도 스탈린 집권 하의 우크라이나나 대약진 기간 중의 중국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모델과 유사한데, 이 당시에는 정치적 요소들로 탈출사태를 저지하던 상

황이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소위 '말없는 기근'이라고 북한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식량위기가 영양부족 상태를 넘어 기아현상으로까지 진행된다면 몇몇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와해되고 엄청난 수의 탈북자들이 발생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탈출 사태는 정치적 불안정보다 앞서서 발생하는 선도요인이 아니고 정치적 불안정에 뒤따르는 후발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출 사태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심지어는 굉장히 먼거리나 문화나 관습적으로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까지 탈출하기도 한다.

'사막의 폭풍 작전(Operation Desert Storm)' 이후 150만의 쿠르드(Kurds)족들은 4일간에 걸쳐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라크, 이란, 터키 접경의 산악지방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채 3일도 안되는 기간동안 1백만명 이상이 르완다를 탈주하여 자이레의 고마(Goma)지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시간당 평균 2만5천명이 탈출한 셈이다. 만약에 대규모 탈출이 시작된다면, 탈출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지역에 식량을 공급함으로써 탈출을 진정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탈출에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경로를 3개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국경을 넘어 중국 북동부 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탈출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북한-중국 국경을 넘는 경로에 대하여는 중국정부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베트남 난민들을 처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정부는 한국정책담당자들의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만을 제공하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정부가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또다른 정책대안으로는 탈북자들이 길림성이나 요녕성의 대규모 조선족 사회에 흡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위기와 북한정부의 협상태도로 추정해 볼 때 과거 쿠바의 전례를 따라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나올 수 있다. 즉, 통제된 주민 탈출을 유도하여 한국과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도하는 정치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식량의 원조를 받아내는 것도 동시에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한국정부는 북한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고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돌보든가 아니면 이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난민들은 정치적 대립물의 희생양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AERA

# 北朝鮮 の 眞實

1996. 10.

본 자료는 일본의 시사주간지 AERA ('96.10.25)에 게재된 특집 기사 중 최근 북한의 잠수함 무장공비 남침사건과 관련한 대담기사, 나진·선봉 투자포럼 참가 기행문, 북한의 공식보도 내용을 해석하는 법 등 주요 현안 문제들을 발췌·번역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1.대담: 내년 후반이후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다.**

오코노기 마사오(일본 게이오대 교수)와 편집부 하마다 타로와의 대담

### **Q1: 북한 잠수함침투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A: 남북한 관계는 일본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잠수함 침투 자체는 종래부터 있어왔던 정찰활동의 일부이다. 북한 정책의 흐름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 폭발과 보복이 반드시 있다.”는 식으로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게는 “휴전협정은 무실화되었기 때문에 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식의 메시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한관계는 긴장관계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북-미관계를 먼저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다. 북-미관계개선의 다음은 북-일관계의 개선에 임한다. 한국을 고립시키고 마지막으로 남북한 대화에 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대화를 거절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이 남북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 **Q2: 한국측의 태도는 어떤가**

A: 김영삼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이 중·소와의 관계개선에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자신은 남북한 직접대화를 성취시키고 싶은 것이다. 수단은 유연정책에서 강경정책으로 변화했지만, 남북한 대화만 부활되면 북-미도 북-일관계도 방해하지 않고 대북식량원조도 대북투자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일성사후의 국내체제를 공고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에, 한국과의 교류나 대화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협력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에서 부는 [남풍]의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고 싶다는 입장이다.

### **Q3: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치한 북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A: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경제를 개방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방하면 외부로부터 [나쁜 바람]이 들어와 정치적인 안정성이 상실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묘책이 경제특구에서 단계적이며 한정적으로 시장경

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주위에 철망을 둘러치는 것이다.

철망의 안쪽에는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사상이 건실한 사람을 투입시켜 외화를 벌어들인다. 철망밖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사회주의 경제를 계속한다. 만약 성공하면 원산에도 신의주에도 경제특구를 만들어 체제를 연명시킨다는 생각이다. 경제특구가 4개나 5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북한이 의도한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통제경제가 이미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수령과 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지금 북한정권이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경제체제로 되어도 상관치는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은 [김정일의 영단으로 인민이 먹고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 **Q4: 북한의 식량부족을 어떻게 보는가**

A: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리된 기아]이다. 아프리카등지에서 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난민이 발생하고, 폭동으로 체제가 붕괴되는 [혼란된 기아]와는 다르다. 인구가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안에서 조용하게 굶고 있다. 쌀 폭동이 일어나도 진압할수 있는 국가의 관리체제가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이런 지경이 계속된다면 붕괴되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하여 기아를 외교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실로 만만치 않다.

#### **Q5: 북한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보는가**

A: 나는 그렇게 간단하게 북한체제가 붕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체제의 붕괴가 경제개방전이나, 후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 만약 경제개방후라면, 정치와 경제의 모순이 표면화된 가운데에서의 내부적인 붕괴이기 때문에 대외전쟁의 위험성도 적어진다. 어느 정도의 인프라도 정비되고, 2,400만명의 북한 인민도 시장경제에 대한 체험도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1-3년내에 북한경제가 완전히 파탄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서 붕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이다. 이런 형태라면, 전쟁의 위험성을 피하기 어려우며, 코스트부담이 한꺼번에 주변나라들을 덮치게

된다. 동아시아경제시스템이 동요하고 일본에도 걸프전이상의 부담을 받게 된다.

북한이 진정으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개방과 개혁을 통하여 중국과 같이 개방된 사회주의국이 되는 것이 유일한 시나리오이다. 일본의 코스트 부담도 분할지불로 해결될 수 있게 된다. 당분간, 남북한 공존이 계속되어도, 최종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보다 풍요하고 민주적인 체제를 구하기 위해 이동함으로써 독일형의 통일이 달성될 것이다.

다들 북한이 한꺼번에 붕괴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그렇다. 지금 북한에 대해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말로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 같으면 맨먼저 대북 원조를 개시할 것이다. 내년 봄이후는 금년이상으로 심각한 식량위기가 될 것 같다. 그 때문에 북한에서는 7월의 김정일의 주석취임, 한국에서는 12월의 대통령선거라고하는 정치일정이 있어 서로가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기 어렵게 된다. 그때까지 남북한 긴장국면을 타개하지 않으면, 내년 후반에는 남북한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것이다.

## 2. UNDP 지원하에 추진되는

### 북한 시장경제의 실험장(나진 · 선봉)

하사바(波佐場 清)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그전에 『웅기』라 불리우던 것을 선봉으로 개칭한 배경에는 이러한 연유가 있다. 주체를 기치로 내걸고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했던 죽은 김일성이 생전에 이곳을 시찰했을 때 농업, 공업, 어업이 균등하게 발전해 있던 이 지역이 장래의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향해 선두를 걷고 있는 말하자면, [선봉]지역이라고 해서 지명을 변경한 것이다.

그 선봉지대가 지금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경제특구]로서 경제건설에 UN을 내세워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선봉지구와 남쪽의 나진지구를 합해서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라고 부르는 것이 정식명칭이다.

이곳에서 9월 13일부터 15일에 걸쳐 3일간 각나라의 기업관계자 등을 모아놓고 [국제투자포럼]이 개최되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투자를 불러들인다는 북한의 의욕적인 기획이었다.



이 포럼에 참가한 일본의 기업관계자와 연구자, [환동해경제권]를 꿈꾸는 지방자치단체관계자들과 동행하여 현지취재를 감행했다. 일본의 니가타항에서 편도로 30시간이상이나 걸리는 배여행이었다.

### **북한이 선택한 배수진**

사회주의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지역을 제한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북한이 나진·선봉지대를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한 것은 91년 12월이었다. 이는 분명히 북한 경제개혁의 대전환이었다. 북한경제는 80년대후반이후, 경제부진이 눈에 띄게 심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84년에 [곡물생산 1천만톤 달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등, 화려한 숫자를 나열하고 있었는데, 그이후의 경위를 보면, 실제 그대로였는지 의문스럽다. 체제의 경직화와 더불어 체력이 약화되어 있던 차에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것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붕괴이다. 90년 북한의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비율이 60%이상이었다는 것이 소련이 해체된 91년에는 한꺼번에 14%이하로 떨어졌다.

북한은 중유, 곡물등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요물자의 공급선과 자국 제품의 수출선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이 상실된 이상, 시장경제권을 상대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체제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는 이러한 사정에서 북한이 선택한 [배수진]이었던 것이다. 이는 UNDP가 제시한 러시아, 중국도 포함된 두만강유역개발구상에 북한이 편승한 형태이기도 하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는 면적이 746만Km<sup>2</sup>이며 중계수송, 수출가공, 관광·금융서비스의 3기능을 가진 종합적인 『Free Zone』이다. 2000년을 목표로 10개의 공업구역과 국제공항 등을 설치하여 현재 14만명인 이 지역인구를 10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 **< 나진 · 선봉지역 투자에 대한 특혜조치 >**

- \* 투자자가 기업을 자본주의식으로 운영관리해도 좋다.
- \* 기업소득세율 14%, 장려부문 0%
- \* 3년간은 완전 면세, 그 후 2년간도 50% 감세.
- \* 토지의 대여기간은 50년간 연장도 가능.
- \* 자유무역지대에 직접 출입하는 외국인의 입국사증(비자)불요 등

사회주의의 원칙만 고집해 왔던 북한으로서는 파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도쿄, 오사카 등의 일본 각지와 홍콩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불러들이려고 노력해 왔다.

### **한국으로부터의 참가는 없었다.**

이번 포럼은 북한 현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설명회였다. 미,일, 중,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등 26개국에서 총 440명의 투자자들이 참가하였고, 이 자리에서 투자계약 6개 회사 2억7천만달러, 합의서에 조인한 10개 회사 5억 7천만달러의 성과를 올렸다고 북한측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거의 드나들지 않았던 지방도시에 이만큼 많은 외국인을 초청한 것 자체는 대단하다. 일본의 대기업상사로는 미쓰비시상사, 마루베니, 스미토모상사, 닛쇼이와이가 참가했는데, 전부가 영업부문이 아니라, [투자를 생각해 보기전에 먼저 현상과 방향성을 찾는 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쓰비시상사 아시아업무부 담당 차장인 시모쿠시씨는, “체제가 달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외화, 에너지, 식량부족상태에서 대금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70년대 대금결제도 회수불능상태에 있다. 무엇보다도 국교가 없으므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면서 난점을 지적했다.

북-일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800억엔에 이르는 북한측의 누적 채무가 있다. 이 때문에 일본 통산성은 무역보험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수출입은행의 용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투자보호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포럼에는 한국기업의 참가자는 없었다. 한국은 기업인, 정부관계자, 취재기자등 총 53명의 참가 신청을 하였지만, 북한측은 [숙박시설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정부관계자와 기자를 제외한 기업관계자 25명에게만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측은 [선택초청]이라면서 반발하여 참가를 전면적으로 단념했다. 일본재계의 대북한 창구로 되어 있는 동아시아 무역연구회 사무국장 카토씨는 이렇게 보고 있다.

“참가자는 선별적으로 초청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불참은 경제보다는

정치의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자본의 논리는 안전하게 이윤을 발생시켜 재투자로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이 정례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가 어떤가이다. 북한이 정치를 우선시키면 자본은 우선 베트남이나 미얀마등으로 흘러 들어간다”

### **남북한 관계가 열쇠이다.**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투자할 작정으로 왔다는 도쿄의 어느 무역회사 간부는 [전력과 도로가 문제이다.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는 하지만 중유 등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주저하는 모습이였다. 미국 관계자들 간에도 신중론이 들렸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I) 주임연구원인 마크 노랜드씨는, 베트남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한 것은 일본, 프랑스, 대만기업이 먼저 진출하여 미국제계에 진출이 늦었다는 불안이 고조되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경우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재미한국인 기업가들은, “의지할 만한 것은 민족자본밖에 없다. 중국의 경우도 대만자본이 홍콩 등을 거쳐 대륙으로 들어가 개발의 추진력이 되었다. 한국자본이 들어가지 않는한 아무 의미도 없다”면서 남북관계의 타개가 포인트가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렇다고는 하나 지리적으로 보아 중국의 동북지역과 태평양지역을 연결하는 중계점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측의 의뢰로 [투자촉진 가이드북]을 작성했던 동양엔지니어링 참사보 스텔키씨는, [평탄한 임해토지와 수자원이 풍부하여 대규모 중공업입지에 잠재성이 있다. 중계수송기지로서 실적을 축적하면 일본의 가고지마 임해공업지대와 같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장기적인 진단을 해 보였다.

### **설비의 노후화**

2차 대전전 어느 시기에 이곳에는 몇천명에 이르는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다. 포럼의 참가자가 탄 배에는 그러한 관계자 100여명도 [관광객]으로 타고 있었다. 50여년전과 비교해서 전체적으로는 [정비되었지만,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았다. 선봉에는 여관, 초등학교가 옛날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진에도 역이나 [만주철도숙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진 출생인 시즈오카현 소재 식품회사원인 우에하라씨는 “철도의 레일은 느슨하여 흔들흔들거리 50Km 이상은 결코 달릴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선봉지구에서는 증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견학했는데, 전문가들은 설비의 노후화에 크게 놀랐다. 바로 옆의 화학공장은 조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한편, 나진중심부에서는 2개월전에 중국출신 조선족이 경영하는 노래방이 생겨나, 일본이나 한국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 **북한인의 의식개혁은 가능한가**

포럼회장 부근에서는 중학생들이 열을 지어 [김정일 장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교하는 모습을 몇번이나 보았다. 배가 나진항을 떠나는 아침에, 현지의 할머니들이 부두에 선물용 송이버섯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갑판에 있는 일본인사이에서는, “좀더 빨리 왔다면 살 수 있었는데...”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부두의 할머니들은 달리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송이버섯을 나열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한정적인 시장경제 도입으로 북한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대전환을 하였지만, 인프라 정비이상으로 북한인의 의식개혁이 더더욱 어려운 것같이 보였다.

## **3.북한의 공식보도를 읽는 법:**

### **[김정일은 흑막형으로 원격조작의 정치가]**

스즈키(鈴木興幸): 라디오 프레스 편집부 차장

라디오프레스(RP통신사)에서는 24시간 북한의 해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과 국내용 [조선중앙방송]을 청취하는 이외에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영 통신사 [조선중앙통신] 등의 공식보도를 전부 체크하고 있다.

북한동향에 관한 뉴스는 [RP북한 뉴스]로 일본어로 번역하지만 거의가 통역없이 그냥 흘러 보내는 뉴스도 있다. [툭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10월 2일의 라디오 뉴스를 예로 들면, 아침은 김정일이 [인민의 생활향상에 노력한 근로자에게 감사]한 이야기가 톱뉴스이다. 낮에도 마찬가지이다. 저녁은 김정일에게 해외에서 건국 48주년을 축하하는 전보가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머릿뉴스였다. 이런 종류의 뉴스는 일부러 통역하지 않는다.

## **김정일은 무지개를 좋아한다.**

그러나, 거기에서 김정일의 정치스타일의 특징이 떠오른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행한 김정일의 목소리가 북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것은 92년 봄, 북한군 퍼레이드에서 [영웅적 북한인민군장병에게 영광이 있으리]라고 외친 것이 유일하다. 그런데, 톱뉴스에서는 연일 김정일이 누군가의 100세 생일축하 선물을 보냈다는지, 여기저기 감사문을 보냈다는 뉴스가 전해온다. 공식적인 장소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도 매일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연출가처럼 원격조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영화예술을 좋아하는 김정일의 성격때문인지도 모른다. 흑막형의 정치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디오 방송에 의하면,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에는 반드시 어떤 자연현상이 발생한다. 금년 생일날에는 평양시 상공에 원형 무지개가 나타났다. 작년 생일 바로 전날에는 백두산에 이중의 무지개가 걸렸다. 이런 [자연현상]은 93년부터 빈번하게 전해오게 되고, 이 때부터 김정일의 카리스마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93년 여름,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부주석의 자격으로 등장했다. 김영주란 이름을 라디오방송으로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의 이름을 방송으로 들은 것이 75년이었으므로 18년만의 등장인 것이다.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의 후견인으로 등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93년 가을부터 김일성이 김정일을 “이만큼 신념이 강하고 배짱이 있는 인간을 처음 보았다” 라며,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말이 보도되게 되었다. 김정일정권 기반구축강화를 위한 김일성의 배려가 엿보인다.

## **김영삼 대통령마저 역도로 호칭**

북한 공식보도의 특징은 비난할 시기는 모든 매체가 일제히 비난을 시작하고, 멈출 때도 일제히 멈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영삼대통령은 이전에는 반체제 반정부입장에 있었던 적도 있어 북한측은 당초에는 호의적이었다. 역대 한국대통령을 [역도]라며 지탄하고 있었지만, 김영삼대통령은 [한국 최후의 집권자]라고 부르던지 아니면, 경칭을 생략하고 성명만 막불렀다.

그러나, 93년 12월 8일부터 [역도]로 부르기 시작했다. “김영삼정권은

[반역도당]이다.”라는 식으로, 이말이 [라디오프레스 북한 뉴스]에서 세어 보았다. 한국에 관해서는 오직 [노동신문]이 검정으로 취급하고 있다. [RP 북한뉴스]는 이 노동신문 논평을 검정하여, 그경향을 조사했다. 역도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이 핵문제로 북한과의 대결자세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94년 6월 24일부터 그 비난은 중지된다. 김일성과의 남북한 정상회담개최 합의가 성립되었을 때이다.

7월 26일부터 다시 [역도]비난이 시작된다. 김일성이 사망한 뒤,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전역에 경계명령을 하달한 것에 반응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방송의 공식보도의 변화를 자상하게 추적해 가면, 북한측의 방침전환을 알게 된다.

비난의 논조는 강한 표현이 사용된다. 처음으로 듣는 사람은 [이것은 제2의 한국전쟁발발이 임박하다]고 오해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측으로부터 양보를 유인하기 위한 전술이다. 이점은 김일성에게도 김정일에게도 공통되는 이야기이다.

지난 9월 18일 발각된 강릉에서의 북한 소형잠수함이 좌초한 사건은 사건발생 5일후인 23일이 되어, 처음으로 해외용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보도는 북한측은 불가항력의 사고로 한국 영해에 들어가 버린 것인데, 한국측이 북한군 병사를 학살했다. 그러므로 북한측이 그어면 반격을 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한국측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전했다.

사건발각부터 5일간이나 걸려 이와 같은 논리를 조합한 것일까. 26일의 [평양방송]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다만, 북한측이 진정으로 반격할 의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조선중앙통신]보도는 국내용인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다. [조선중앙방송]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내에서는 그 사건이 있었는지조차도 전달하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해외교포를 향한 억지논리 설정과 한국으로의 위협을 의도한 보도였다고 생각된다.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에서도 보도되기 시작하면 위협한 징조라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용 미디어와 해외용 미디어의 사용구분은 북한 공식보도의 특징이다.

### **금년에는 한결같은 수해보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는 91년 12월이었지만, 국내 미디어에

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94년 4월이었다. 그것도 시정방침연설의 일부로써 이 지대의 정비에 힘을 경주한다는 정도였다.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보도되지 않았다. 그이후에도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은 때때로 진전상황을 전했다, 국내용에는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히지 않으면서 건설상황을 전할 정도였다. 북한측이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가 북한주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해보도도 마찬가지였다. 작년에 홍수피해가 있었을 때, [조선중앙통신]만이 피해총액과 피해자수를 전했다. 그러나, 국내용에는 [경애하는 장군이 사랑의 항공기를 보내어 수천명의 주민들을 구조했다]고 소개하는 정도였다.

RP통신사에서는 북한측이 보도하기 전부터 수해에 관해서 예측하고 있었다. 우선 일기예보로부터 추측할 수 있다. 강우량에 대한 정보가 매일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것이었다. 3년전의 냉해도 예측할 수 있었다. 일본도 한국도 냉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측도 무사할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풍작이라고 보도되는 지역을 체크해 가보니, 모두 서해안지역이었고 동해안측은 좋지 않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금년 북한측의 수해보도는 싹 일변했다. 8월 8일 [조선중앙방송]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형식으로 피해상황을 전했다. 북한 국내용 미디어로서는 처음이었다. 그 담화는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었고, 거기에는 제작년 9월의 냉해, 작년 8월의 수해 피해규모까지 소개되었다.

UN의 지원을 받아 UN직원이 피해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솔직하게 보도한 것일 것이다. 국내용 보도로 피해상황을 알림으로써 국제적인 지원을 얻기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수피해는 정책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전해도 북한정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것이다.

북한 공식보도를 읽을 때 서방측의 보도에 대하여 느끼는 것같은 객관적 태도로 이해하면 안된다. 북한의 공식보도는 북한노동당의 [사상무기]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現代  
金正日 vs. 北朝鮮人民軍は  
一觸即發

사이카와 다카오(歲川 隆雄:인사이드라인 편집장)

1996. 11.

본 자료는 일본 월간지 現代('96.1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써 최근 북한의 잠수함 무장  
공비 남침사건이 김정일과 북한군부와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김정일과 북한 군부의 갈등이 유발시킨 잠수함 무장공비사건

## 게릴라 침입사건의 최대 수수께끼

이번 무장게릴라침입사건에는 앞뒤가 맞지않는 점이 너무나 많다.

### <주요한 의문점>

1. 예기치못한 좌초사고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무기, 장비류가 너무나 많다. 한국측의 정보에 의하면, 기관총, 자동소총, 권총, 수류탄, 탄약, 무전기등 30여종류로, 약 450점에 이른다. 침입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2. 사살체로 발견된 11명은 다들 후두부를 토카레프 자동소총으로 맞았다. 경찰국 해상처장인 북한군 대좌를 포함한 11명은 잠수함 승무원과 승선지도원으로서, 특수공작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처치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다고는 하나 그 방법에는 의문이 남는다.

3. 한국군 당국은 당초, 침입북한병사의 호칭을 [무장간첩]으로 했다가, 하루뒤에 [공비]로 변경했는데, 게릴라로서는 장비가 빈약하고 중화기류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4. 이번에 침투한 북한병사는 주간에 이동하다가 발각되어 총격전으로 사살되었다. 게릴라작전의 상도(常道)에 반하는 것으로 탈출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 침입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체포된 이광수상위(31세)는 [강릉비행장등 군사시설의 정찰이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정기적인 공작원 잠입작전인가? 잠입중인 공작원을 귀환시키기 위해선가? 청바지에 T셔쓰 차림이 많았던 점으로 보아, 얼마전 한국국내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었던 친북학생운동단체(한총련)의 후방지원요원 호송책인지 한국측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에 잇는 것 같다.

6. 한국측의 초동태도에도 의문이 남는다. 잠수함의 좌초현장부근에 감

시소( OP)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수함이 유고급인지 상고급인지의 여부로 정보가 혼동되어 침입병력의 판단에 시간이 걸리고, 주한미군을 당혹케했다.

이와같이 이번 북한 무장게릴라 침입사건은 많은 수수께끼에 싸여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북한의 국내상황과 이번의 잠입·침투사건 사이에 커다란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이광수 상위는 무장공비들이 탄 소형잠수함은 9월 14일 새벽에 함경남도 퇴조의 잠수함기지를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 북한 북부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구에서는 15일까지 [국제투자포럼]이 개최되고 있었다. 이것은 부분적 경제개방노선을 추진하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한 이벤트로서 힘을 기울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일기불순과 수해로 인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원조를 열심히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무장공비침입사건을 일으켰다는 시기에 관해 가장 큰 의문이 남는다.

### 개방노선에 대한 반발인가

그런데, 최포된 공비 이광수는 침입한 26명중 공작원 3명과 안내원 2명을 제외한 21명이 경찰국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군 당국도 이번에 침입한 게릴라의 태반이 경찰국 소속장교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총병력 10만명의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경찰, 경비병, 저격의 3병과가 있고, 인민무력부 경찰국은 이 특수작전부대의 경찰부문에 해당한다. 경찰국은 대남공작의 전문부서의 하나로, 후방침입, 요인납치, 중요시설파괴 등의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집단이다.

말하자면, 이번 무장게릴라침입사건은 북한의 정규군에 속하는 정예부대의 특수공작원그룹이 도발한 것이 틀림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체제의 개방노선에 대한 북한군부의 반발이라는 「북한군부 반발설」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미·일과의 대화노선과 함께 경제개방노선은 말하자면 김일성의 [유혼]이며, 김일성사후 파경적인 경제곤란을 배경으로 이는 북한의 기본노

선으로 정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자유경제무역지구]가 나진·선봉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아가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을 위한 [고도의 보안지역]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개방노선을 북한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긴장완화와 정치·사회의 자유를 추구하고, 나아가 군비축소에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군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 최근에는 북한군의 동향을 둘러싼 개방노선에 대한 반발설이 빈번하게 흘러나오게 되고, 금년 4월상순에 300명 이상의 북한군 중무장부대가 38도선의 비무장지대를 침입하여 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도발행위를 감행했을때에도, 김정일체제에 대한 북한군부의 반발설이 힘을 얻었다. 특히 한국내에서는 그것이 김정일체제의 붕괴의 서막이라는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북한무장공비침투사건이 개방노선에 대한 북한군의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재쳐두고, 지상군 병력 100만명, 약 890대의 전투용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공군, 675척의 함정을 보유하는 북한해군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제 5위의 북한군의 동향이 김정일체제에 강력한 압력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북한경제는 변함없이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산업의 인프라인 에너지와 전력(電力)의 부족이 심각하고, 2대공급원이었던 구소련경제의 붕괴, 중국의 원유수출 대금의 경화결제 등에 의해 95년의 북한의 석유 소비량은 80년대의 50%이하까지 격감했다. 그 여파로 전력공급도 파멸적인 타격을 받아 극도의 에너지부족에서 북한의 공장 조업률은 95년도에는 생산능력의 반으로 멈추고 말았다.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이 더욱 심각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더구나 북한주민이 기아상태 바로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질 정도로 식량위기를 겪고 있다. 95년은 식량수요의 3분의 1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96년에는 미증유의 이상기후와 대수해로 식량위기는 더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체제에 호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파탄이라는 절대적인 궁지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군부의 이반(離反)을 초래했다는 것은

체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김정일체제의 명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군부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군부반발설의 진위는 앞으로의 북한을 보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특별배려

물론,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체제가 군부의 향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 94년 7월 김일성의 죽음으로 실질적인 권력계승을 이룩한 이래, 아니 그이전부터 그는 군부대책에 전력을 다해 왔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73년의 당중앙위원회였는데, 이때는 외부로 공표되지않는 비밀지명이며, 공식적인 결정은 80년 10월의 북한노동당 제6차 대회이다. 이후 김정일은 아버지의 조언과 직접지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분야의 활동에 참가하여, [제왕학(帝王學)]을 배웠다. 그 제왕학 커리큘럼의 중요한 부분을 [군부대책]이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권력조직의 최상위의 직위를 가지게 된 것은 군사부문의 직위가 최초였기 때문이다. 즉, 91년에 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되고, 다음해인 92년 4월에는 군인의 최고위직인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93년 4월, 모든 무력을 지휘·통괄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 배경에 김일성의 위광이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으나, 김정일 자신이 당·국가·군의 3권력 중에서 먼저 군권력을 장악한 것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왕조의 붕괴를 타산지석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위를 혈연적인 측근으로 구축하여 군림했던 차우체스쿠대통령은 89년말, 자유화의 격동속에서 처형되었는데, 김정일은 그의 말로를 보고, 연고주의적 권력의 위험성을 깊이 명심하여, 가장 실질적인 파워인 군부의 장악에 몰두하여 왔다.

그리고 김정일은 자신이 단순히 군의 최고직위에 취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직위의 기반을 돈독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예를 들면, 그는 원수의 직위를 얻은 지 3일후에는 김정각, 김하규, 현철해등 혁명제3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장군 8명을 동시에 상장(대장과 중장의 중간계급)으로 승진시켰다. (김하규와 현철해는 작년 10월 대장으로 승진)

한국전쟁이후에 성장한 혁명제3세대는 김정일비서와는 거의 동세대로 현재 50대에서 60대초까지의 당중앙위원급으로, 지금부터 군의 중추 포스트로 승진할 인재가 많다.

군이외의 직위·호칭으로는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이 언제 취임하느냐는 문제로 주목을 받아온 당총서기 직을 아직 계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의 직위는 아직 비서 그대로이지만, 총서기가 공식인 현재, 그가 실질적으로는 당의 제1인자이다. 그외에 [우리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존칭이 있다.

하지만, 죽은 김일성이 주석직을 장기간에 걸쳐 맡아왔던 것과는 달리 김정일은 정부관계의 직위에는 일체 취임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그가 설득력이 없고, 사교력이 없으며, 연설을 싫어하며, 외교활동에는 조예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

사실, 김정일이 공중앞에서 발언한 장면이 담긴 녹음은 단지 2개밖에 없다. 하나는 92년 4월의 군사퍼레이드때에 2단단상에서 [영웅적 조선인민군장교에 영광이 있으리]라고 외친 것이며, 또 하나는 95년 10월10일의 당창건 50주년 기념식 후에 개최된 재일조총련대표단 환영연에서 대표단부인들에게 인사하는 순간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뿐이다. 이런 지도자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 잇다른 쿠데타미수사건

이처럼 군부대책을 이른바 체제전략의 기본으로 인식해온 김정일이지만, 군의 포스트를 손에 넣었다고해서 군부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군의 3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와중에 그는 군부와 의 관계에서 쓰러린 일을 당하는 일련의 쿠데타사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쿠데타사건중의 하나는, [4.25 쿠데타 미수사건]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92년 4월, 김정일이 원수직에 취임하기 전후의 일인데, 군에 의한 대규

모적인 쿠데타계획이 사전에 적발되었다. 그것은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이라는 중추적인 지위에 있었던 안종호상장등 구소련 군사유학생그룹의 장군급 40명이 중심이 된 사건이었다.

당시 소련판 웨스트 포인트로 불리웠던 프룬제 군사대학 유학출신그룹은 북한군부에서 엘리트로 취급받아 군부내에서 큰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구소련유학그룹의 필두격인 안종호상장등이 4월25일 북한 인민군창설 60주년행사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의 전차부대를 동원하여 쿠데타 궤기를 감행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이어서 일어난 군사쿠데타 미수사건은 92년 12월, 김일성의 경호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호위총국소속 장교들이 기도한 것이다. 내통자의 사전밀고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적발되었다. 이 쿠데타계획의 적발로 국가안전보위부는 호위총국과의 파워게임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3번째의 쿠데타 계획은 93년 3월에 적발된 것으로, 함경남도 함흥에 주둔하는 제7사단의 이모사단장(중장)이 주모자가 되어 구소련 유학그룹을 포함한 장군 30명이 가담한 사건이다.

92년봄부터 93년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발생한 이들 3건의 쿠데타 미수사건으로 구소련 군사유학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장군급이 처형, 혹은 추방되어 구소련 유학그룹의 군간부세력은 거의 파멸하게 되었다.

이들 쿠데타계획이 군부장악에 착수한 김정일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김정일측에서 보면, 군부장악의 장애가 되는 세력을 숙청에 의해 뿌리채 뽑아내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사실 그는 구소련 유학그룹을 숙청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군부의 3권을 장악할수 있는 포스트에 취임한지 1년남짓밖에 지나지 않는 94년 7월, 김일성이 급사한다. 전세계의 이목이 김왕조의 권력계승을 둘러싼 동정(動靜)에 돌려졌다. 쿠데타 미수사건 정보가 잇달아 흐르던 때이기도 하며, 김정일체제의 취약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지적하고, 김정일으로의 권력이양을 의문시하는 [불안설]이 고

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전문가의 대부분은 [불안설]은 한국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캠페인이며, 김정일체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도 73년에 김일성으로부터 비밀리에 후계자로 지명된 이래 김정일은 당과 군간부 등의 유력한 라이벌의 숙청도 포함하여, 권력체제확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김정일세력에 의한 도전은 당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 탄환이 김정일의 어깨를 스치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일체제와 군부의 관계를 둘러싸고 북한내부에서 또 다시 흔들렸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작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정보로서 흘러들어온 [제6군단내의 쿠데타 미수사건]이 그것이다.

제6군단내의 쿠데타계획은 자유경제무역지구로 지정된 북한 동해안 북단의 주요 도시인 청진에 주둔하는 제6군단소속 장교들에 의한 것이었다.

계획은 현지 대학을 습격.점령한 다음 외부세계로 널리 [반란]사실을 알리고, 평양으로 진주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양에서 투입된 특수부대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로 끝나고, 제6군단의 장교 수십명이 숙청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김정일 암살 미수사건은 작년 4월 20일에 돌발했다. 그날 평양교외에 [현지도방문]을 위해 김정일이 현지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악수하려고 하는 순간 호위총국소속의 경호원이 2번째 줄의 위치에서 김정일을 향해 권총 1발을 발사하여, 탄환은 김정일의 오른쪽 어깨를 가까스로 스쳤을뿐 암살은 미수로 끝났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정일은 자신의 보디가드 부대원에게 충격을 당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격노하여, 호위총국장인 이을설차수(현재 원수)에게 명하여 33,000명이나 되는 호위총국 소속부대원의 [출신성분]을 재점검



시켜 신뢰할 수 있는 계층. 가게에서 대원을 재선발하게 했다.

그후에 김정일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2.16부대]라고 이름붙인 경호담당 비밀친위대를 창설시켜 밀착태세로 호위에 임하게 하고 있다.

군단규모의 군사반란계획과 자기자신에 대한 암살테러 미수사건에 대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는 김정일은 군부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작년 가을부터 금년 여름에 걸쳐 대규모적으로 추진해 왔던 군간부의 인사가 바로 그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과 훈장의 획기적인 제공이었다.

그 제1탄이 된 것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군수뇌급인사이다. 우선 최광 총참모장을 작년 2월에 사망한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최광과 이을설 호위총국장에게 원수의 칭호를 수여했다. 이것으로 원수는 김정일 최고사령관을 합치면 3명이 된다.

78살의 최광 인민무력부장은 김일성이 지휘했던 항일빨치산출신의 이른바 혁명 1세대이다. 군의 장로로 당정치국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 김정일이 노리는 것은 군부유일의 거물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시켜 자신의 체제기반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총참모장의 후임에는 역시 혁명제1세대의 김영춘차수를 임명하고, 최광과 함께 김정일체제를 지탱하는 수레의 양바퀴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오진우가 겸직하고 있던 군총정치국 후임에 조명록공군사령관(차수), 인민무력부 제1부장에는 김광진 국방위원회 위원(차수)을 각각 임명했다. 조명록과 김광진 두사람은 항일빨치산 세대에 이은 혁명 제2세대이다.

그리고 혁명 제3세대의 김정일직계에서는 김명국 인민무력부 작전국장(대장), 현철해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부국장, 원명균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부국장(상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상장) 등 3사람이 중추적인 존재이다.

말하자면, 일련의 군인사로 김정일이 혁명제1, 제2, 제3세대의 군간부를 균형있게 배치한 것이었다.

그후에도 금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장군급 승진인사가 실시되어 왔는데, 특히 작년 가을의 인사 이래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배려는 대단한 것으로, 작년 10월의 인사에서는 원수 다음 칭호인 차수를 조명록등 3명에게 수여한 것 외에 대장 3명, 상장 5명의 승진을 발표했다.

이 차수라는 계급은 김일성시대에 창설된 북한군의 독자적인 것인데, 차수와 상장과 같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수여했기 때문에 북한인민군의 장군은 점점 늘어나, 현재에는 1,200명의 장군이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위한 사탕인 것이다.

## 대편대가 국경근처에

그러한 김정일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과잉배려에 군부쪽에서도 정성껏 보답하려는 것인지, 작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그전에 없었던 대규모 「DEMONSTRATION」을 전개해 보였다. 북한공군이 한국전쟁이후 최대규모라고 일컬어지는 연습을 감행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10월21일에서 22일까지 2일간 미그 17, 미그 21, 미그 29전투기, 이류신28폭격기, 수호이25 폭격기등 약 100대가 장거리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게다가 미그17, 미그 19, 미그 21전투기, 안토노프2 공격기, 밀2 헬리콥터등 220대가 평양부근의 공군기지에서 북한남부의 공군기지로 이동하고, 11월중순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원소속부대의 기지로 귀환했다.

이 대규모적인 항공기군은 평양과 원산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라인보다 남방지대, 말하자면 한국과의 군사경계선(DMZ)가까이까지 남하했을 뿐 아니라, DMZ에서 겨우 40Km 북쪽에 있는 북한의 태안비행장과 누천비행장에 전투폭격기와 폭격기가 처음으로 날아와 한국측과 주한미군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이 북한의 대규모 공군 연습이 한·미측에게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극도의 에너지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하여 국내공장의 반이 조업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대이상의 군용기에게 장거리비행을 감행시킨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한·미양측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런데, 지난해 11월14일과 15일에는 평양근교의 순안공군기지에서 미그19, 미그21, 수호이25 등 약 80대의 대편대가 또다시 날라왔다. 이번에도 태난, 누천, 구읍리의 3비행장에 내렸지만, 그중의 반은 12월이 되어도 계속해서 원기지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다.

## 군과의 친밀성을 호소하는 김정일

북한측의 이와같은 공군대이동의 저의에 대해 진정으로 한국을 공격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한·미·일 군사관계자도 좀체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시각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설은 [내부불만 해소설]과 [쿠데타 미수사건 관계설]이다.

[내부불만 해소설]이란 미군측의 시각으로 북한의 군부내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대남강경파(남침파)의 욕구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DMZ근처에서 유사(類似)도발행동을 취했다는 시각이다. 지휘는 아마 조명록 총정치국장 자신이 했다고 보고 있다.

[쿠데타 미수사건 관계설]은 한국군측의 시각으로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이번 대규모 공군 연습 이전에 이루어졌던 북한군수뇌의 인사 이동에서 총참모장으로 복귀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 최근 김정일은 군부와의 친밀성을 호소하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2월 16일 김정일의 54세 생일에 북한에서 방영된 TV화면에는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정일]이 백마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과 군인들과 섞여서 군용기의 조종석에 앉는 모습, 군함의 함교(bridge)에 서있는 모습등이 방영되었다. 김정일과 인민군이 일체인 것을 무엇보다도 그는 북한주민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군과는 일체라고 TV화면으로 어필하는 것과 군을 실제로 장

악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점에서 한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번 북한무장공비침입사건에서 처음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북한당국이 상륙한 게릴라가 섬멸된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실제로는 잠수함이 [훈련중에 기관고장]으로 조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우발사고라는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최고사령관]은 군이 저지르는 것을 [追認]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점이다. 군과 일체가 되어 권력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이 저지른 일을 무엇이든 추인해야 한다면, 이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김정일이 정말로 군과 일체라면, 그는 이번의 무장공비남파와 같은 군의 대남작전의 실태를 알고 있었을터이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터이다. 김정일이 군부의 괴뢰가 아닌한, 이번 사건에 관해서도 그는 사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 무장게릴라의 밀명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왕조의 연고인택에 의한 권력지배의 붕괴를 깊이 학습했을 김정일이 최근에는 김 「패밀리」에 의한 「Nepotism」적 지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설에 의하면, 김정일은 노동당, 인민군, 정무원에 있는 심복 28명을 통하여 [밀실정치]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심복 28명중의 주요인물로 당관계자는 김정일의 친누이동생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외에 전병호 정치국원, 한성룡 정치국원, 최태복 정치국원후보, 김기남 서기등이다. 군관계자는 최광 인민무력부장, 백학림 사회안전부장(차수), 그리고 당혁명제2세대의 장태원 인민무력부부부장(상장), 장성택의 친형 장성우 제3군단장(대장)등이다.

김정일 측근 28명의 실태는 아직 베일에 싸인 부분이 많지만, 세대적으로는 김정일에 가까운 혁명제2, 제3세대가 태반이며, 김정일과 그 어떤 혈연관계가 있는 자들이 눈에 띈다.

또한, 김정일은 작년부터 군관계시찰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동행하는 측근그룹이 따로 있다. 이하일 당군사부장(차수), 김광진차수, 조명록 차수, 김명국 대장, 현철해 대장, 박재경 상장등이다. 그중에서도 김명국은 김정일이 [나의 작전부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대적인 신망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이번 무장공비침투사건이 노렸던 밑명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게릴라가 상륙한 강릉이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겨우 80Km 떨어진 지점인 것으로 보아, 원자력발전소의 파괴공작의 밑명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10월7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수뇌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한국의 요인테러가 목적이었지 않았던가

셋째, 한국전쟁시에 북한군의 최초 상륙지점이기도 했던 강릉비행장이 최근에 정비·확장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임무였다는 등 등의 시각들이 부상하고 있다.

결국 이번사건은 단순한 공작원의 잠입, 혹은 공작원의 호송이 그 목적이 아니라 군사행동이라는 것이 되는데, 아직 그 실상은 베일에 싸인 채로 있다.



證證

# 極私的‘北朝鮮一般人’ ウオッチソワ

미야즈카 토시오(宮塚利雄; 야마나시학원대학 교수)

1996. 12.

본 자료는 일본 월간지 諸君('96.12월호)에  
게재된 기사로써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  
서 성행하는 밀무역에 관한 기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중국·북한 국경지대에서 본 북한 일반인들의 참모습

### 밀수가 횡행하는 중-북국경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이루는 두만강과 압록강유역에서 백주부터 당당하게 밀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답사에서도 보고 들었다. 그러나 강폭이 1Km나 되는 압록강 하류지역에서 대낮부터 밀수가 행해지고 있다고는 믿기가 어려웠다.

의문스러워하는 나를 조선족인 김씨가 안내한 것은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단동시(구 安東)에서 자동차로 약 40분정도의 거리에 있는 관전만주족자치현에 있는 호산장성(虎山長城)이었다. 만리장성의 동쪽끝이라 불리우는 호산장성은 명나라시대에 축성되었던 것으로 1992년에 복구되었다.

중국-북한의 국경은 하천의 한 가운데가 아니라, 중국측의 강안까지가 북한의 영토라 하고 있다. 압록강을 따라 중국과 가장 가까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영토는 강폭이 10m도 채안되는 좁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 이 좁은 중국측의 강가에서 3인승 작은 배가 노를 저어 왔다. [지금부터 밀수상담이 시작된다]고 김씨가 이야기해 주었다.

### 뱃머리에서 밀수상담

300미터 망원렌즈로 밀수상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작은 배는 북한측의 강가에 접안해 있었지만, 내리지 않고 뱃머리에서 밀수상담을 시작했다. 배에서 내리면, 불법입국자가 되는 것 같았다.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북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보자기에서 무엇인가 꺼내고, 그것을 본 조선족이 배안에 숨겨두었던 조그만 현금뭉치를 건네주었다.



돈을 받아준 북한 아주머니는 두세마디 하고는 바로 옥수수밭에 몸을 숨겼다. 또한 이 현장에서 10m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의 옥수수밭에는 몇 명이 모여있었고, 배가 강가에 다다르면, 청년 한사람이 나와서 역시 뱃머리에서 상담이 시작되었다. 내가 있는 곳까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용까지는 알아듣지 못했다.

중·북 주민간의 밀수는 좁은 장소에서만 아니라 강폭이 넓고 게다가 강수량이 늘어 급류를 이루고 있는 수풍댐 부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 **중국으로부터의 물자로 물자부족을 채운다**

나는 압록강 하구에서 백두산을 지나 두만강 하구까지 답사하여 12개소의 세관과 국제교를 보았는데, 중국과 북한의 도시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장백시와 북한의 혜산시뿐이었다.

이 때문에 혜산시는 풍부한 물자로 활기에 넘친 장백시의 영향을 한꺼번에 입고 있으며, 자본주의사상의 유입으로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같은 혜산시의 행정담당자의 고민과는 상관없이, 쌍방 주민들간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공급과 수요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혜산시와 장백시를 연결하는 국제교가 있지만, 이 다리와는 별도로 시내의 상류에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붓독위에 만들어진 조그만 다리가 걸려 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압록강 강가에는 빨래하는 척하면서 북한의 동제품을 중국의 식량과 의류, 자전거 재봉틀, 빵굽는기계등과 교환하는 것이다. 압록강

이나 두만강에서 주야로 행해지고 있는 쌍방 주민들에 의한 물자의 운반이 [밀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통체제가 마비되어 중앙으로부터 물자가 도달하지도 않는 북한의 변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국경의 교류는 [밀수]가 아니라 [강변주민교역]인 것이다. 북한의 식량, 물자부족사태가 계속되는 한 이 압록강과 두만강에서의 [강변주민교역]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원래,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중국으로부터 물자와 식량이 운반되고 있어 행운으로 생각하지만, 한국과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와같은 [밀수]에 의한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궁핍한 생활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이 지역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식량과 생활필수품이 운반되는 형태는 크게 국가간의 무역, 보따리장수나 친척방문에 의한 반입, 강가주민교역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원목을 밀가루와 교환하는 어리석은 정책**

[강변 주민교역]은 규모는 적지만, 각지에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의 식량이나 일용잡화의 배급이 뜻대로 안되는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마로 중요한 생명망이기도 하다. [강변 주민교역]에 관해서 중요한 것은 보따리장수와 친척방문으로 반입되는 물자이다. 강 건너의 만포시로 가는 보따리장수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가지고 가는 것은 쌀과 된장, 간장, 식용유, 라면 등의 식료품과 의류가 주였다. 때로는 1장에 400원이나 나가는 이불 등을 가지고 가는 일도 있다고 했다. 이 이불은 북한화폐로 환산하면, 10배이상의 값이 나가고, 월수입이 100원전후의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림에 떡이지만 당간부는 다투어 산다고 한다.

한편, 1개월 반동안의 친척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흑룡강성의 할머니가 북한에서 온 열차(1년교대로 중-북양국의 열차가 운행. 작년은 북한의 열차, 금년은 중국의 열차가 운행)에서 내린 리어카 가득히 실은 물건중에는 송이버섯, 오징어 거기에다 말린 해삼등이 있었다.

“이것을 모으는데 1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가지고 간 물건을 운반도중이나 숙박지에서 강탈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보따리장수나 친척방문으로 반입되는 물건의 중앙으로부터 보급이 끊어지기 쉬운 지역주민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물자가 풍부한 중국에 대한 동경]과 [먹을 것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도 보따리장수나 친척방문으로 물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흑룡강성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말했다.

국가간의 교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운반되는 식량은 거의가 옥수수과 밀가루이다. 60Kg짜리 흰 부대에 들어있는 밀가루를 산더미처럼 적재한 양강도와 자강도의 트럭이 줄을 지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중국으로부터의 소맥분과 교환하기 위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운반되는 것은 백두산기슭등에서 벌목한 적송 등의 원목으로 일단 송강에 집적되고 그후에 화남지방으로 운반되어 간다고 한다.

臨江市 세관근처에 있는 북한 트럭운전수들의 숙박지로 되어 있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식당 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루에 많을 때는 100대 가까운 트럭이 원목을 싣고 중국으로 들어온다고한다. 북한은 식량을 획득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빈발하는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흡수능력이 높은 삼림을 조성하거나 식목에 힘쓰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여 연거푸 중국으로 운반해 가는 것이다. “당면한 큰일을 위해서는 딴 일에는 일체 마음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일이 “산림보호와 치산치수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는 노동신문 96년 9월 5일자 보도는 전혀 믿을 수 없다.

### **붕괴된 북한의 식량배급제도**

먹는 문제를 지금까지 식량배급제도에 의해 교묘하게 지배, 통제해 왔다. 직종이나 지위, 거주지역에 따라 곡물과 일용필수품의 배급량과 품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입수한 94년도와 95년도의 배급통장의 공란은 북한의 쌀, 물자부족을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다. 94년의 통장은 함경북도, 95년도의 것은 평안북도의 것이다. 2개의 통장을 비교해 보면, 지역에 따라 배급이 미묘하게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94년도의 미곡배급통장(식량카드)의 기재란에는 쌀과 잡곡 두가지 뿐이지만, 95년의 통장에서는 쌀, 옥수수, 소맥분, 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평안북도쪽이 함경북도보다 식량이 풍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94년도의 통장과는 달리 95년도의 통장에서는 2개월분밖에 배급이 행해지지 않았고, 이것은 점점 식량사정이 긴박하다는 증거이다.

[부식물 및 일용필수품배급통장(중요지표공급카드)에서도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의 것에서는 품목의 차이가 있다. 평안북도의 통장에는 간장, 된장, 식용유, 담배, 성냥, 신발, 세탁비누, 세수비누, 치솔, 치약, 전구, 여름용 속옷, 런닝셔츠, 춘추복바지, 팬티, 양말, 사발

(밥사발과 된장사발), 노트, 장판지, 숟가락, 젓가락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함경북도의 통장에는 소금과 계란, 과자, 민물고기등이 들어 있다.

양 지역에서 공통되는 것은 간장과 된장, 소금 등의 조미료와 부식물이 약간 배급되어 있을뿐으로, 그 배급도 끊어져 있다는 것이다. 급료의 체불이 일상다반사로, 게다가 국가로부터의 배급이 끊어져 있는 상황하에서 가게를 꾸려나가야만 되는 가정주부의 고충은 이루 말할 바가 아니다. 주식인 쌀과 옥수수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부식물의 부족은 영양실조를 초래하고, 유아의 발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사이에서는 생리불순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기관의 직원도 최근에는 여원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게 될 정도로 북한의 식량부족은 국민전체의 건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 **강한 서민은 암거래로 돈을 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것은 공장에서 훔쳐온 동이나 동제품, 그리고 도굴한 골동품과 불상등인데, 이것을 식량이나 의류와 교환해서 국내에서 비싼 값으로 팔아 큰돈을 버는 잡배들이 상당히 있다.

더구나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수 없다]고 하는 북한에서는 직장에는 반드시 출근해야 되지만,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방향으로 지혜가 움직이고야 한다. 직장에 있는 제품이나 자재, 도구 등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냥이나 담배, 된장, 간장등과 교환해서 그것을 가지고 농촌으로 간다. 식량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가을 추수뒤에 곡물을 현물교환하는 북한 농민은 어느정도의 곡물은 비축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이것을 쌀이나 옥수수 등의 곡물과 교환하지만, 쌀 1Kg을 70원분의 물건과 교환하여 이 쌀을 도시로 가지고 와서 농민시장(자유시장,암시장)에서 80원에 팔아서

10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물론, 한번에 시장까지 운반해오는 곡물의 양은 한도가 있지만, 200Kg 이상이나 되는 경우도 있다. 증명서가 없으면 기차에 탈 수도 없는 북한에서는 친척이나 형제의 결혼 또는 사망, 부모 환갑축하 등으로 위장한 가짜 전보를 치게하여 이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것조차 귀찮으면 역원이나 공안관계자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뇌물로주어, 기차에 타고 가볍게 운반해 오는 것이다. “구루마” 또는 “딸따리”로 불리우는 소형리어카등도, 대체로 공장등에서 흠쳐온 자재로 만든 자가제가 많고, 사이즈도 다양하다. 이 딸따리로 100Kg이나 200Kg을 운반하는 것이다.

[대거리장사에서 가장 재미보는 것은 밀조주의 전매이다. 보통 옥수수 1Kg은 밀조주가 2병,(큰 맥주병보더 약간 적다), 잘 하면 3병이 나오는데, 1병은 자기가 마시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옥수수 2Kg과 교환하여 그 옥수수로 다시 밀조주를 만들어 전매한다. 이러한 작업을 몇번이나 반복하여 돈벌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초고급품인 칼러텔레비나 자전거 등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최근에 자동차를 대신하여 인기가 있는 자전거는 북한제가 300원 이상, 중국제와 일본제는 그 10배이상 나간다.

### 일본돈이 있으면

북한의 농민시장에는 [고양이 뽕외에는 무엇이든 팔고 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라, 북한의 친척방문으로 방북한 재일조총련이 니가타에 있는 조총련 납품회사에서 쌀 10Kg이 들어있는 [쌀세트]를 선물로 지참해 갔는데, 평양의 시장에서는 1만엔이 있으면 10Kg이 아니라, 그 20배에 가까운 쌀을 살 수 있다고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엔과 북한원과의 공식환율은 96년 3월 15일 현재 1엔이 0.0206원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비율이고, 암시장에서의 교환비율은 1만엔이 북한원 2만원에 상당하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와주려면 일본엔과 빵굽는 기계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인 것 같다. 일본엔만 있으면 외화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언제라도 암시장비율로 북한원과 비싼 비율로 교환할 수 있다. 빵굽는기계가 있으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반입되는 소맥분으로 빵을 구워서 시장에다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노동자들은 급료는 아예 생각치도 않고 있으며, 만일 그것을 기대한다면 굶어죽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독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앓는 것이다. 그래서 강도와 절도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비울 수도 없으며, 보호해야 할 군인이나 사회안전부의 직원이 도둑이나 강도로 돌변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다. 농촌등에서는 작물도둑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원을 부치고 있다. 유통체제가 마비상태이며, 중요한 식량배급은 일부 도시와 특권계층에게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작년에 일본과 한국에서 원조한 60만톤의 쌀은 지방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배급되었겠는가. 내가 아는 한, [제일조총련이 남한과 일본에서 사서 보내준 쌀]이라고 선전되어 혜택을 본 사람은 적지만, 원조미를 암시장으로 흘러보내어 한몫을 잡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 인민의 대부분은 [위대한 지도자동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그를 비판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야기하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 인 터 넷 자 료



# LETTERS FROM PYONGYANG

자료조사담당관실제공(96.2.12)

\*\*\* NEW FAX FROM NORTH KOREA \*\*\*

이 글은 지난 해 9월 17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북한 홍수복구위원회가 Bernard Krisher 회장(American Assistance to Cambodia and Japan Relief for Cambodia)에게 홍수 피해 상황과 구호 요청 서한을 FAX를 통해 보내온 전문과 이에 응답한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 FLOOD REHABILITATION COMMITTE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 Bernard Krisher  
Chairman  
American Assistance to Cambodia and Japan Relief for Cambodia

Pyongyang January 6, 1996

Dear Mr. Krisher,

Acknowledging the receipt of your letter of December 25, I wish to express my gratitude for your continuous active efforts to arrange the donations with respect to our flood damage.

I inform you as follows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s raised in your letter.

We find it possible that you would come to our country together with your daughter when the next donations arrive in our country, attend and photograph the distribution of donations in the flood damaged areas of which you visited during your last trip, and send some donations through "Mangyongbong" ship.

However, it is our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cannot get the approval of our organizations concerned regarding your visit to our country on that ship because Wonsan port is not a boundary passage spot of foreigners and furthermore, it cannot be used in the light of still aggravating situation.

Out of 600 kgs of powdered milk that you left behind during your last visit, we have provided 100 kgs respectively to the nurseries of Samyangri, Pakchon County and Chosanri, Chongju County of North Pyongan Province, and of Yongwhari, Sinpyong County and Kaesamri, Singye County of North Hwanhae

Province, and to the kindergarten of Ichon County and nursery of Hawoiri, Pyongsan County of Kangwon Province; and the 700 pairs of shoes were distributed respectively from 100 to 150 pairs to Maengjungri, Pakchon County and Kaesanri, Chongju County of North Pyongan Province, to Ichon County Seat of Kangwon Province, and Chupori, Pyongsan County and Haepori, Singye County, and Yudongri, Sinpyong County of North Hwanhae Province.

With regard to the matter of food in the flood damaged areas which focussed your concern, an additional urgent measure is needed to be taken under such a situation that we find it difficult to continue our food supply for the period after this winter because of the absolute lack of rice stock, although now it is kept placed in an appropriate level by the current government measure.

I wish you and your family good health, great happiness and success in your work in the new year.

Faithfully yours,

Pak Song Gyun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P.R. of Korea

-----  
-----

OUR FAX TO THE DPRK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September 26, 1995 (Input to Web Oct. 7)

Japan Relief for Cambodia &  
American Assistance for Cambodia  
4-1-7-605 Hiroo  
Shibuya-ku, Tokyo, Japan (150)

September 26, 1995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DPRK

Fax: 850-2-381-4660

Dear Sirs & Madam: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Internet page to seek support for the flood relief victims is receiving some publicity. Kyodo News Agency sent out a story in English and Japanese. CNN ran the Internet address for the page on its major news broadcasts last night, The Washington Post, San Francisco Chronicle, Seattle Times, North Carolina News & Observer and th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entioned it in stories on 9/22, and AFP sent out a story on 9/25. The Financial Times is expected to run a story in its Monday edition. Several Japanese newspapers, including The Tokyo Shimbun and Kanagawa Shimbun ran stories.

Meanwhile, I am organizing in parallel a winter clothing collection campaign here in Tokyo and have also contacted the Italian clothing chain, Benetton, in Italy, to try to persuade them to organize such a collection

campaign throughout Europe and sponsor a train delivery originating in Paris to Moscow, Khabarovsk, Shenyang and Sinuiji. If they do not go along with my proposal, I will try some other potential sponsors in Europe. I will keep you informed.

I cannot guarantee anything but am aiming to set a goal of \$1 million in cash or goods in kind donations to purchase drugs and blankets.

We are also getting other networks within the Internet to incorporate the page into their systems so we should have a very wide audience within a week. The beginning is slow but I believe it will pick up.

On the Internet "home page" we have allotted a section which will be titled "Letters from Pyongyang" where we will carry your messages to us and any KCNA or other stories you may wish to forward. I suggest you write us often, and provide us with news of the flood victims as it will be a channel for the international media and charitable organizations desirous of helping you to access and read news about the ongoing situation.

If the clothing drive in Japan brings in substantial donations I would like to request your cooperation in helping us in the following way:

Could you arrange a contact for me at the Ass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could help us with transportation of such donations from Tokyo to Niigata and allow these donations to travel separately on the ship from those collected by your Korean community here. It would be effective in successfully organizing a continuing collection if our donations could then be put together on the ship which goes from Niigata to Wonson and for one or two representatives of my group (myself or a member of the Krisher family) to accompany the shipment and hand it over to you and/or UN representatives in Wonson or Pyongyang and obtain a receipt. It would be even more effective for the success of this campaign if a member of our group or myself could visit one of the afflicted areas and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I realize this may be unprecedented but this is the way

relief activities usually are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hit by a disaster. They include representatives of the donor organization and it is a most effective way to encourage people overseas to continue their support. Donors like to be involved, they like to witness what their good will is accomplishing and they often lose interest when they don't exactly know or see what is happening to their donations.

It is also very effective to personalize the situation. In the case of Kobe, international support was so great, even though Japan could have managed to support the crisis itself, because the media personalized the victims, describing individual cases of loss and suffering, the effect on families, children, etc. Again, I know this is not the way you do things, but a profile on a family or the child depicted in the photo we are running on our Home page (the little boy standing in front of his destroyed home), can effectively get people to respond. What is his name. Can we learn something about his family. What their life was like before and what is it like now.

I do not wish to press my ideas on you as you have your own policy and customs but I just wish to suggest how other campaigns have worked in other countries when such a disaster hit.

Apart from the plan to try to deliver warm winter clothing collected in Japan through Niigata and Wonson, we are also studying the route through the train from Beijing and I am contacting the Chinese Embassy in Tokyo for their cooperation should contributions be delivered on this route.

I look forward to your furthe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hich we will readily place on the Internet page.

I extend my warmest wishes to all the flood victims and pray for their comfort and good health.

Sincerely yours,

Bernard Krisher  
Chairman

-----  
-----

\*\*\* THE PRIORITY IS FOOD \*\*\*

RESPONSE FROM DPRK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ctober 4, 1995

To: Mr. Bernard Krisher  
Chairman and Publisher  
American Assistance to Cambodia &  
Japan Relief for Cambodia

From: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ar Mr. Chairman: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knowledges the receipt of your fax of September 26 and thanks you deeply once again for your committed campaign for international relief assistance and information activities, setting a goal of \$1 million relief donations for the flood damage in our country.

We would like to assure you that the issues you have raised in your fax with regard to the transport to our country of the forthcoming donations will be positively considered and resolved as you requested as soon as possible, and in particular we will readily agree to your visit to our country coming with the relief supplies to hand them over to us.



It will be necessary for us to exchange further communications as regards the relief supplies transport and your personal visit to our country.

We wish to remind you of our significant loss of grains due to the hail damage last year and again the recent flood damage, and would like you to put into consideration our suggestion that it would be preferable for you to give priority to food assistance in your donations collection campaign.

As for your request to provide you with any information about the child in the home page photo, we cannot meet your needs to our regard, since the photo we got from your fax is hardly discernible.

In the meantime, we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end you information on the pres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relief assistance for the flood damage in the DPRK for your release through your INTERNET

(Begin)

1. A two-member team of the Medecins Sans Frontiers" (MSF) visited Pyongyang from September 23 to 26, 1995.

During the visit, an agreement was reached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MSF on the MSF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to the flood affected people of Pakchon, Huichon and Unpa Counties. According to the agreement, a MSF medical team is due to be in the DPRK by next week with all its committed medical supplies worth USD 1,000,000.

2. The DPRK Government has agreed to the visit to the DPRK by a three-member delegation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UNDHA) and requested the UNDHA, through the UN Resident Coordinator, to forward at the earliest possible particulars required for procedural arrangement for issuing visas including curriculum vitae and

specific duration of their stay in the country.

3. Relief supplies from the Russian Government (20 tons of rice, 3,000 blankets and 1.5 tons of medicine) arrived in Pyongyang on September 28, 1995.

4. Updated Contribution (not reported to the UNDHA)

Governments:

a) Germany	USD 100,000
b) Pakistan	USD 160,000
c) Finland	USD 100,000
d) Sweden	USD 110,000
e) Iran	USD 100,000
f) India	USD 100,000
g) Malaysia	USD 25,000
h) Belgium	USD 7,300

UN Organizations:

UNICEF	USD 300,000
--------	-------------

Red Cross Societies:

a) China	USD 36,000
b) Norway	USD 33,000
c) Austria	USD 23,000
d) Iceland	USD 3,100
e) Finland	USD 45,000
f) Denmark	USD 55,000
g) Slovakia	USD 1,300
h) Sweden	USD 280,000

NGOs:

a) Catholic Relief Services, Regional Office

	USD 500,000
b) World Council of Churches	USD 100,000
c) Suma-Chenghai Society of Cambodia	USD 200,000
d) Assn. of Medical Doctors for Asia	USD 70,000
e) ADRA (US)	USD 760,000
f) American Aid	USD 240,000
g)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the Christ (US)	USD 100,000
h) International Vision	USD 500,000

(End)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rely wishes you great success in your humanitarian work.

Best regards,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MESSAGE FROM THE UNDP REPRESENTATIVE in PYONGYANG to CHIEF  
OF THE RELIEF  
COORDINATION BRANCH, DHA, GENEVA

30 September 1995

To: Mr. Robert Souria

Chief, Relief Coordination Branch

DHA, Geneva

Fax: 41-22-9170023

From: G. Faruq Achikzad

Resident Representative and UN Resident Coordinator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Pyongyang, DPR Korea

Subject: DPRK Emergency Relief

Text: Mr. Bernard Krisher, a former Newsweek correspondent in Tokyo, now involved in Asian relief projects, has contacted me offering to help publicize our flood relief efforts through the worldwide INTERNET. He has also interviewed me over the telephone on the situation and our efforts. He could be of immense assistance considering the world-wide coverage which could be gained through INTERNET. In this respect you may wish to contact him directly on fax no. 81-3-3486-6789 (or: Internet address: bernie@media.mit.edu). We are providing him with a copy of our local flood emergency update, which we are circulating locally to embassies, etc.

Regards.

-----  
-----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Bernard Krisher and G. Faruq Achikzad, the United Nations Resident Representative and UN Resident Coordinator

in Pyongyang on September 28, 1995

(Transcription courtesy of Maureen McLaughlin, Hotel Okura)

TEXT:

Krisher: Hello, may I speak to Mr. Faruq Achikzad please?

Achikzad: Speaking.

K: Hello. This is Bernard Krisher calling from Tokyo. I've been in touch with the flood committee in Pyongyang and we have placed an appeal on the

Internet. We're getting quite a response. I wanted to get a little more information from you and maybe put some of it on the Internet as well. Could you tell me what sort of donations are coming in and what's happening in the area?

A: Yes, well I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we need here but I can tell you roughly that through the UN appeal there is quite a bit, many countries who are giving donations. I can give you a rough idea but if you would put it on the Internet it would be a little bit more specific. I will fax you a press release with more detailed information.

... All right, there is as I said through the UN appeal the UNDP and the DHA, the Department of Humanitarian Aid, we are getting a response from various governments - the governments of Italy and Luxembourg, the Swiss government... They are all contributing one way or another. Now, they are giving construction material, blankets and so on, they are coming in one airplane, for which we pay for the fuel. It goes from Italy to Berlin and their (North Korean) plane will carry it from Berlin to Pyongyang. We will pay for the fuel. A complete load of all sorts of materials including blankets and pots and pans and so on are coming.

K: How much is the fuel cost from Berlin to Pyongyang?

A: \$30,000.

K: Is it worth it to send heavy blankets and clothes by plane?

A: Well there are some construction materials which are being donated so they are coming from these countries in kind so the only thing is (the fuel transport) cost \$30,000 (donated) from the same city. I think it's worth it because these people don't have anything.

K: Are they sending along technicians or just the materials?

A: We have three people from the Swiss government for logistics an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and so forth. There will be \$250,000 dollars from the regular budget of UNICEF which we diverted to the flood, \$150,000 dollars... for family planning, medicine for ladies, or pregnancies and other things, and then various governments -- \$74,000 from the British government, given to the DHA so it's under my control and I can buy anything which the people need here ... and I am even buying here locally now. There are companies here who make pots and pans and if we give them money they can make them within a week. So we are buying locally as well. It is very few but we want to get it as soon as possible. You have to do things right away, and then there is \$60,000 (worth of rice) from Thailand.

K: How will you bring it in from Thailand?

A: Sea would take a long time so probably by air. The Russians brought the first plane ever here. It would be 20 tons of rice, 3, 000 blankets, one and a half tons of medicine--antibiotics.

K: Did this come from the Russians or the Koreans who live in Russia?

A: The Russians, it was from Moscow.

K: Tell me, what about the distribution? Do you control it?

A: The government has abided by our rules. They have a very good system actually. They have the names of the people in all the villages. We apply (to visit the villages and make the distributions ourselves) and we go and get there within a few hours; things will go like that. It's a very good system.

K: Do you see any corruption or diversion of donations?

A: No, no, no, you don't see any corruption. I have not seen corruption.

K: And the foreigners are considered friends within those villages? They don't mind having foreigners on the scene?

A: It's the first time ever, that the UN and the UNDP representatives have been in such villages, distributing donations. By my hands I give to the peopl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ever, in 50 years.

K: So they have changed their policy? Is that right?

A: Oh I think so, because they need assistance and they will abide by the rules, of course they have to think of their own country too but I didn't see any friction.

K: Are they letting other foreign groups in?

A: Yes they're allowing Medecins sans Frontieres and a representative team in on Sunday and they are bringing in two planeloads of things including vehicles, medicine and all sorts of kits. There will be 12 people from Medecins sans Frontieres. They are already opening their. They will go in three stations and will be bringing people in from The Netherlands, from Belgium and France. The three teams of these nationalities will be in the villages.

K: And the doctors will be attending North Korean patients?

A: Yes the doctors and others. But it will be three teams of three people, a total of nine. Then there will logistics comprising of two or three other people. We are coordinating ... and they are all coming to me. I will give them the information they need, anything they want, because we want to help the government...

K: Are there any Americans there?

A: No, no, no. There are no Americans at this time... You know Washington Post in Tokyo interviewed me. Probably you saw that.

K: Yes. I asked someone to give them your phone number.

A: Yes, thank you. It was very good to appear in the Washington Post. It had a good effect in the House and the Senat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e are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no strings attached. We are very neutral and I think it's good that the people in Washington, in the House, Jesse Helms and all these people will hear we are doing the best to help here and with neutrality. There is no right wing or left wing.

K: How much do you know about the Internet project? Our Home page and appendixes?

A: The only thing I saw about the Internet was the news over CNN. It was also in Washington Post, and people from New York informed me about it. (The North Koreans) have not mentioned it but I showed them a copy of the Washington Post article and they appreciated it.

K: I'd like to invite you to send us your news and comments and we will add them to our Internet page. In addition to that I'd like something personal for the Internet audience signed by you. Whenever you send me something we'll just add it. Can you send me photos you took of the flood damage or of people in the villages which you took with your camera. We will put them on the Home page. I received a message just now from somebody in South Korea and he's appreciating what we're doing in helping the flood victims. I think the Internet has quite some power.

A: OK, Very good, excellent. I will send you the photos I took.

K: Which is the area are you focusing on? Sinuiji?



A: Yes.

K: How do you get there? By train?

A: By train it's four hours; by car it's six hours.

K: And when you go from Pyongyang to Sinuiji can you see the flooded areas from the train?

A: You can see some but in the car you see more. Of course through the helicopters it is much more complete.

K: What are the major problems now, the flood is over; is it lack of food and clothing and...

A: It is all of them on top of the structure problems that exist. It's the chronic problems plus these few things. All together so it's a little bit more dramatic.

K: What about the spread of illness, diarrhea, measles?

A: There is no cholera, definitely, because the government told me clearly that if there was, it would ask for our assistance. There are certain cases of diarrhea and respiratory problems. These are the things that they want medicine for so WHO is taking care of them.

K: Where are those drugs kept, in the local clinic?

A: Yes, local clinics exactly.

K: And those clinics were saved? They were not flooded?

A: Some of them were flooded and some not. They have discipline and a

system. They don't have much in these clinics but whatever they have is clean and nicely put in order.

K: What about the children? Are they being fed now?

A: The ones that I saw were okay but the [ones that the] UNICEF people saw, they said that if they continued for nine months like that, then it really would become very bad because the malnutrition is quite serious.

K: Besides rice what sort of food do you need?

A: UNICEF is bringing in powdered milk; it should arrive any minute any day. Soy milk, also Medecins sans Frontieres is bringing in nutritious foods because BB2 (chk?) or some others, it is a nutritious food for children and others too.

K: What would you ask people, for instance, I'm going to try to make an appeal in Europe which is very far away.

A: Powdered milk is very good. Powdered milk for children. Really that is fantastic if we can get powdered milk for children. The children here are all having some sort of milk which is a Soya milk but if we can get powdered milk it would be very good.

K: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transportation route? If we sent clothes from Niigata to Wonson by ship?

A: They prefer Nampo. Wonson is fine, too. But they prefer Nampo for some reason.

K: Does the ship from Japan go to Nampo too?

A: Only to Wonson. Wonson is just a hop from the Sea of Japan, the Sea of Korea or whatever you call it.

K: What do you think of the train? I'm trying to get, if it works, a train where things such as warm winter clothes, blankets and daily necessities would be collected in various European cities, accumulate in Paris and move with passengers as guards via Moscow, Khabarovsk, Shenyang, Dandong and then cross the Yalu River bridge to Sinuiji the center of much of the flood disaster. The distribution the could be made right on the spot to the people most seriously affected.

A: Yes. But Moscow is one week from here by train, all through Siberia.

K: But it would be dramatic and could excite the public's imagination and involvement. The passengers taking the goods could communicate with us from time to time at strategic stops through the Internet. Those trains could also hold a lot of boxes of clothes. Much more than a plane. If volunteer passengers accompany the goods it would be dramatic and you could put a lot on those trains.

A: Exactly that would be good too, yes?

K: Has anyone done it and do you think it is safe and would work?

A: No, no one has tried it. You would be the first to do that.

K: Will it work?

A: Yes, yes, yes.

K: I sent a fax to Benetton in Italy a few days ago (see text elsewhere) and I asked them to sponsor this. They are a first rate and imaginative and very humanitarian company. Young people feel good wearing their clothes and they respect their president because is a very creative and courageous man. I felt they would be the kind of company which would help us. I haven't gotten an answer yet but I am confident they will reply in due course and help us in some way. They collected clothing a few years ago for the poor

so this would not be a precedent.

A: Okay.

K: If the people arrived on that train would they be able to distribute the donations or would they have to hand it over to officials?

A: One has to have permission first of course.

K: But the spirit of it would lead me to believe that there is a kind of give and take now. A: Yes, but you have to get permission for people who come in. Without such permission goods may be held up while procedures for security, clearance and all that take place. But in this case they will probably clear it fast.

K: When does the real winter cold set in?

A: This year, it is now getting chilly. The real cold, if it continues like this, will probably hit at the end of November. That is really the coldest time.

K: So you're talking about half a million homeless people who need warm winter clothing and food to survive the harsh winter?

A: Well this is what the government says. We've never challenged it. I don't think it's half a million but, the important thing is if you can feed anybody it's always welcome for more than half a million. I have told (UN agencies) do not challenge them; if you can help that is all right, but to challenge the government (on figures) is useless.

K: Which agency are you working with in North Korea, the flood committee?

A: With the person who is called the Chef du Cabinet of the Prime Minister,

who is in charge of the flood. He is more than a minister, a super minister.

K: What is his name?

A: Kim Chang Sik (sp?) He's a very nice man. He has a good sense of humor. He asked me to have dinner with him. He is very nice. He is 58 years old to be exact because he asked my age and I said 59 and he said "one year you are older than me." He jokes, he has a sense of humor. But of course when you are high you can do that.

K: Do you travel a lot to the flooded areas?

A: Well I can go but I have no intention to go. I will send my people down. What I have done here is I have broken the ice. So now anybody can go.

K: How many people do you have working for you?

A: For the time being I have three people on my committee. Soon we will be 6, 7 people.

K: Again concretely, what do you need? Blankets, what kind of drugs, what is the target for cash donations?

A: I would appeal \$15 million.

K: Do you think you need that much?

A: Yes, there are lots of structural problems. Because of the structural needs, it would make things worse; winter comes and so on. I don't think we will get that but we will get close to it.

K: Some countries like Japan have only given half million dollars and the U.S. just \$25,000 .

A: But other countries are giving too. You will see quite a bit.

K: And is private funding coming in?

A: Foundations, like the Sasakawa Foundation have offered a large sum, I understand.

K: They pledged \$3 million but the Japanese Transportation Ministry, which has the last word, hasn't approved the screening commission's sum yet.

A: Well they already gave to us \$19,000. But you'll see I think we'll get close to that. Everyday, things are coming.

K: Well I will put this interview on the Internet because that's the way everybody can sort out all the information. Do you have any way of accessing the Internet in North Korea?

A: We could get on the Internet through New York but we have a kind of problem now. I can go to the Internet myself and we get windows through New

York. We can access but it's only a matter of somebody knowing how to do it because I have tried myself and we couldn't get it, but we have to get it this week or next week.

K: I don't think you can the World Wide Web and if you have e-mail it must be through voice phone lines which are very expensive.

A: We have, it's called Higgins, an e-mail system.. Through Higgins we get to the New York window.

K: But the phone lines must be through China?

A: Through New York. Direct access to NY.

K: But that's very expensive, 3-5 dollars a minute.

A: Yes.

K: It's not a packet service.

A: But to access you call at a certain time to load and unload, and it is expensive. Yet it is much better than if we call directly or fax directly.

K: Be sure to ship me some of your photos. Send it by airmail or TNT. You have a TNT service in Pyongyang?

A: Yes, but it's very slow. Now I am sending something to Australia and it takes more than a week.

K: It was good talking to you. Send us some e-mail and photos and let's keep in touch.

A: Okay-doke. Bye-bye.

-----  
-----  
UNDP Flood Emergency Update, 29 September 1995

Relief Activities Stepped Up

Message from the Office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UN Resident Coordinator

Pyongyang, DPR Korea

The UNDP resident Representative and UN Resident Coordinator, Mr. G. Faruq Achikzad mingled with Korean flood victims at Sundan Ri in the outskirts of

Sinuiju, handing out the first consignment of relief supplies purchased through immediate UNDP/DHA Emergency Funds. More than 5,000 blankets and some 1,050 kitchen utensils were distributed.

Other relief items procured from China and Thailand--rice, clothing (including quilts and blankets) will comprise the next consignment, whilst the purchase of certain other relief commodities from local sources is also being pursued.

Meanwhile five health kits provided by WHO arrived in Pyongyang on 20 September. Each kit contains sufficient medicines capable of catering for the needs of 10,000 people for a period of three months. In addition a further 2,142 kg medicines are waiting to be airlifted to DPR Korea. Furthermore the Government has agreed to: (a) the re-programming of US\$250,000 from the UNICEF 1995 Country budget towards emergency relief; and (b) 1 WFP and 1 UNICEF-funded officers and 3 Swiss experts to be based in Pyongyang for an initial period of three months.

Recent contributions are as follows: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US\$150,000
Australia	US\$75,188
Japan	US\$500,000
Luxembourg	Provision of Relief Goods
Russia	Airlift of 20 tons rice, 3,000 blankets and medicines
Switzerland	US\$2,895,885
Italy	Provision of Relief Goods
United Kingdom	US\$76,923
CARITAS Hong Kong	US\$500,000

The response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sident in Pyongyang to an appeal launched by Mrs. Zarlisht Achikzad proved to be very



generous. Mrs. Achikzad and representatives of some Embassies who made contributions, presented relief items such as food, clothing, quilts, kitchen utensils, rice and flour to the Government on 22 September 1995. Donations were received from the following:

Embassies of Indonesia, Russia, Poland, Nigeria, Ethiopia, Cuba, Egypt, Yemen, Hungary and Romania, Brig. Gen. Raafat and Mrs. Rashad, Mr. Ludo Drijbooms, UN Volunteers and international staff members of UNDP.

\*\*\*\*\*

Mail: P.O. Box 27

Telephone: 381-7566, 3817567

Cable address: UNDEVPRO PYONGYANG

Telex: 35029 UNDP KP

Fax: 850-2-3817603, 872-150-7451 (Satellite)

-----  
-----  
MESSAGE FROM THE NORTH KOREAN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N

SEPTEMBER 23

To: Mr. Bernard Krisher

We are happy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fax of September 22, 1995 and feel very grateful to you for your active cooperation in information aimed at facilitating international relief assistance for the flood victims of our country.

We take this opportunity to sincerely wish you greater successes in your noble work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close links in the years to come.

We are sending you a copy of the report, for your information release, of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on international relief operation.

(Begins the News)

092327 - International Assistance to Flood Sufferers under Way  
Pyongyang, September 23 (KCNA) -- Fact-finding teams from differ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untries visit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ssess the flood damage from the end of August to mid-September.

A delegation of the Swiss Foreign Ministry and the fact-finding teams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the World Food Program,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the UN Children's Fu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ARITAS (Social Service Agency), Doctors Without Frontiers and the 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of the United States confirmed through their field assessment that the recent floods, the biggest ever in one hundred years, caused landslides and the collapse of storage dams in some areas which entail heavy damages including the destruction of dwelling houses and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emergency aid is needed.

The fact-finding teams inspected some areas by helicopter, train or car and expressed satisfaction over the DPRK Government's sincere help for their field assessment.

There was a meeting at the UN Secretariat in Geneva on September 12 where the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presented reports on the UN findings and assessment of the floods in the DPRK. The meeting was participated by delegates of Switzerland, China, the United States, Britain, Australia,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and the World Food Program,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nd many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ll delegat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dispatched fact-finding teams seriously discussed on the results of their assessments and appealed for emergency assistance with priority given to food assistance.

At the meeting the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appealed to five UN organizations and agencies to render US \$15,720,000 in aid to the DPRK.

The governments of Denmark, the United States, Germany, Norway, Pakistan, Britain, Australia, Finland and Switzerland and the UN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the World Food Progra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ESCO, the UN Children's Fund, the UN Population Fund, the UN Development Program and other UN organizations,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CARITAS, Doctors Without Frontiers, the Chinese Red Cross Society, the Sasakawa Foundation of Japan, the America Aid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nounced that they would offer donations as early as possible.

The first batch of relief goods sen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flood sufferers arrived in Sinuiju on September 15 by train. The UN resident coordinator and UNDP resident representative, Mr. G. Faruq Achikzad, were present on the spot on September 18 for reception and distribution of the relief supplies.

(End)

Best regards,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RESPONSE FROM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PRK ON

SEPTEMBER 22, 1995

Mr. Bernard Krisher  
Chairman  
American Assistance to Cambodia  
& Japan Relief for Cambodia

Pyongyang, September 22, 1995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knowledges the receipt of your message of September 18, and expresses its gratitude to you for your active efforts calling for world-wide relief assistance to our country which has recently sustained severe flood damage.

We believe that the suggestions you proposed in your message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our people's rehabilitation efforts an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relief assistance.

The only point we want to draw your attention is the Paragraph (c) of your suggestion No. 5 which refers to "south Korea as a possible channel for relief supplies transport". In view of the prevailing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which you are well aware, the above Paragraph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and, therefore, would like you to consider the matter deeply.

We look forward to your cooperation in information affairs with regard to the relief assistance, and take this opportunity to kindly request you to report over your INTERNET any information we would make available for you.

We wish you greater success in your efforts for humanitaria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propose you to further deepen our mutual contacts in the future.

With best regards,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

RESPONSE FROM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PRK

Pyongyang, September 17, 1995

Mr. Bernard Krisher

Chairman

American Assistance to Cambodia

& Japan Relief for Cambodia (JRfC)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cknowledged the receipt of your letter dated September 11, 1995 and has the honor to inform you that the Committee feels grateful for and agrees to your plan to conduct the international relief campaign through the INTERNET concerning the flood damage in our country.

With respect to this, I update you on the data and the other inquiries requested through your letter.

1. The goods needed from the flood damage include food, clothes, cloth, footwear, underwear for winter, all kinds of daily necessities and medical supplies. We expect that you will offer the volume of goods as soon as possible as you can.
2. Your personal visit to Pyongyang with relief goods is welcome and you will be able to be granted the Certificate of Receipt and delivery of the Relief Goods.
3. With respect to the issue of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doctors and nurses of the other country for medical services in our country, we affirm

that we can render the sufficient medical services by ourselves if only the medical supplies are provided, because our country has the talented doctors and nurses.

4. We hope that the relief goods will be sent to the "DPRK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and you will have a communications with this committee by using FAX 850-2-381-4660, Telex 899-38054, 899-38055.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위대한 지도자께 절하십시오”

자료조사담당관실제공(96.2.13)

이 기행문은 1995년 3월에 있었던 북한 (NK)에서의 여행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참가자는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폴, 보스니아에서 얼마전에 돌아온 네덜란드 유엔 병사인 어윈, 그리고 현재는 아프리카에 주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릭 등이었다.

이 여행팀은 네덜란드의 VNC Travel of Utrecht (VNC.Travel @inter.nl.net)에서 주선했다. 북한에서의 일주일간 비용은 일인당 미화 900달러정도였으며, 이는 베이징에서 평양까지의 밤기차와 두명의 안내원, 소형버스, 숙박, 관광, 그리고 하루 세끼의 식사 가 포함된 가격이다. 하지만 베이징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가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들이 그 좋은 휴가를 하필 북한같이 고립되고 후진 나라에서 보낼 생각을 했는가하고 의아해 했다. 나와 릭은 공산주의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었으나 단지 그것만이 북한을 여행하게 된 동기는 아니었으며 그럴만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즉, 적은 비용으로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공산주의 국가는 지극히 싼 가격(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모스크바 그리고 발틱제국에 대한 기행문도 보라)에 귀빈 대접 을 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기이한 음식들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접해볼 수 있으며, 덩으로 20세기의 거대한 - 그러나 필연적으로 망할 운명의 - 이념운동의 현장, 즉 스탈린주의를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마치 구소련의 50년전 모습과 같은 나라로서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인데 1945년으로 간 것인지 1984년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여러 명의 여행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야만 했던 시기는 오래 전에 지났으며 86년부터는 개인도 비교적 자유로이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북한방문도 쉽게 성사될 수 있었다. 훌훌단신

북한을 여행한다해도 안내자와 차량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의무사항인 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 나라와 같이 관련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를 여행하려면 안내원을 동 반하는 것이 여행을 수월하게 하는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북경에서 평양까지

3일간을 뱀새나는 베이징의 '장 콤아오' 호텔에서 지낸 후 우리는 베이징 중앙 기차역으로 갔다. 팡쑤우에의 지난 여행에서 중국인들은 기차역근처에서 서성거리는걸 좋아하는 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수백명의 사람들이 중앙현관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백명의 인파사이를 뚫고 50년대의 이상한 장치에서 나오는 X-레이도 무사히 통과하고 나서야 더럽고, 땀내나고, 뱀새나는 역에 이상한 중국인들에 둘러쌓여 어둠속에 남겨졌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북한으로 가는 열차를 찾아낼 수 있을지 난감했다. 난 어원에게 "왼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면 넓고, 밝은 외국인 대합실이 있을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랬다. 여행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우리는 기차안에서 우리가 유일한 서양인이라는 것을 알고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요청했었는데도 우리중 아무도 북한에 다녀왔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믿음직한 Lonely Planet(여행 가이드북)조차 기차여행 시간을 실제와 8시간이나 차이가 나도록 적어놓았을 정도였다. (하긴 그 지침서라는 것도 89년 북한을 방문했던 단 한명의 여행자의 경험담을 근거로 짧게 작성한 것이었다) 우리는 곧 옆 객실에서 몇몇 북한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영어 실력은 형편 없었으며 'tourist (관광객)' 라는 영어 단어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으나 보통 서양인들이 보면 자칫 동성연애자가 아닌가 오해 할 정도로 친밀감의 표현이 심했다.

밤새 기차에 몸을 싣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거대한 강가의 다리 앞에 다다랐는데 이곳이 중국 -북한간 국경이었다. 기차에서부터 벌써 여러가지 슬로건과 포스터,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초 상화가 곳곳에 보였다. 북한측



세관원들은 내가 지금까지 공산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마주쳤던 무뚝뚝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며 느긋하게 우리들이 가져온 서양 잡지들을 뒤적여 보면서 자동차와 별거벗은 여자사진 등 그들이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서는 한참 동안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온 지도나 책, 잡지들이 혹시 남한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검사가 워낙 철저해서 남한 것이라면 바늘이라도 찾아낼 듯이 보였으며 라디오 또한 절대 반입금지 품목이었다.

평양에 도착했을 즈음 나는 잠에 푹아 떨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떠밀려 비몽사몽 간에 기차 밖으로 밀려 나왔다. 콘크리트 투성이의 플랫폼 밖에는 벤츠 여러 대가 정렬해 있었으며 역내에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우리를 안내한 안내원이 주변에서 유일한 서양인들인 우리 일행을 곧 발견하고는 달려와 고위 관리나 귀빈들이나 드나들직한 통로로 우리를 안내했다.

호텔로 향하는 도중 나는 다소간 상상했던 평양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리는 한산했으며 오래된 볼보와 벤츠, 그리고 여러가지의 낡은 일제 중고차들은 동구 국가들 방문시 보았던 것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이었는데 안내원에게 이 말을 하자 그는 자랑스러운 듯이 자기들도 이제 곧 자동차를 자체 생산할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가격 문제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어떤 제한은 없었다했으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것들과 같이)이 말을 끝이 끝대로 믿기는 어려웠으며, 아마도 가치없는 북한 화폐를 달러로 바꾸기 어려운 사실 하나 만으로도 북한 자동차들이 드물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먼저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3백m 이상 되어 보이는 피라미드형의 거대한 건물이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에 더욱 놀랐는데, 우리 안내원은 이 건물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105 빌딩'이라 불렀다.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이 될 것이며 그러면 평양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안내원은 이 건물 공사가 8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물의 완성까 지는 요원한 상태였으며, 후에 서방의 전문가들(그리고 남한의)이 이

건물의 안전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이 건물이 가까이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묵을 '해방산'호텔이 C 급 호텔이라는 것을 알고 약간 실망했다. 하지만 아침일찍에 더운 물이 부족하다는 것과 우리같은 서양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에 문 천장이 너무 낮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족스러울 정도였다. 우리 일행의 방 중 하나에는 TV 도 있었는데 2개의 채널 (일요일은 3개)이 있었으며 밤 10 시경에 일찍 방송이 종료되었으나 어차피 방송내용이 선전일색의 국영방송으로 '재미' 가 없어 별로 아쉽지도 않았다. 대부분 한국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이거나 '위대한 지도자 동지' 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흥분되고 감격한 아나운서 목소리), 그리고 군악대의 군가연주 등이었다.

안내원은 우리를 어두침침한 지하식당으로 안내해주고 우리끼리 식사를 하게 내버려둔 채 가 버렸는데 그 후에도 북한 체류기간중 내내 식사시간은 우리가 안내원과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들' 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용해 웃고 이야기하며 북한에 대한 험담도 마음놓고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북한이 식량 부족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데 매번 밥, 국, 닭, 쇠고기, 매운탕 등과 함께 6가지 이상의 반찬이 꼬박꼬박 나왔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안내원과도 더 친해질 겸 위층에 있는 바에 올라갔다. 첫 번째 안내원은 31세 였으나 담배를 워낙 피워대 걸보기에는 42세는 되어보였다. 그도 영어를 곧잘 했으나 두 번째 안내원만은 못했는데 두 번째 안내원은 관광학을 전공한 28세의 청년이었으며 외국 방문 경험은 없었다고 했다.

나중에 안내원에게 평양의 범거리를 산책해 보고 싶다고 하자 그는 우리가 자유로이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나 길을 잃을 염려도 있고하니 거리 설명도 해줄 겸 자신 이 동행을 하겠다고 굳이 고집했다. 거리는 좁고 어두웠으며 단지 큰 건물위에 구호를 적은 네온사인만이 보일 뿐이었고

서양상품 광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까지 다녀본 지구상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광이었다. 얼마를 걷자 곧 김일성 광장이 나왔다. '위대한 지도자'는 물론 마르크스와 레닌의 미소진 모습이 내은 불빛을 받으며 광장을 내려다 보고 있었으며 우리 일행과 몇몇 롤러스케이팅을 즐기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시간 거리에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다.

광장에서 강을 건너면 '주체탑'이 서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자립이념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체'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실상 한국전을 시작으로 소련 동구제국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북한은 끊임없이 중국과 소련의 간섭을 받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이야말로 비로소 북한이 -명목상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 그들이 '주체' 사상을 진정으로 시험해 볼 수 있게 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좋지않은 상황의 조짐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다. 석탄을 이용한 발전으로 인해 공기는 오염돼 가고 있고 과거 금지되었던 자전거가 평양 거리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평양을 나선 시골에서는 촛불만으로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박물관에서는 전시관을 지날 때마다 지나간 방안 절전을 위해 불을 꺼야만 했다.

#### 평양 시내관광

평양에서의 첫날 아침, 우리는 시민들이 일터로 나가면서 -문자 그대로- 행군중 부르는 노래 소리에 눈을 떴다. 우리는 호기심에 들떠 평양거리를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처음 발길을 멈춘 곳은 지하로 1백 60 m 나 뚫어 내려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지하철 입구였다. 푸른 유니폼을 입은 공무원들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북한의 지하철은 모스크바의 그것과 같이 대리석 등으로 잘 치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전동차들은 더럽고 낡았으며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초상화 외에 별다른 치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차를 타고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일성)'의 20 m 짜리 동상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서 안내원의 강요에 의해 미화 7달러나 주고 꽃을 사 동상앞에 헌화해야만 했다.

평양 근교에 있는 김일성 생가에서 현지 안내원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김정일)가 사실은 백두산이 아닌 구소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서방에서 읽었다)"고 묻자 그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며 몹시 화를 냈다. 평양으로 돌아와 파리 개선문보다 3 m 나 더 높은 '승리문' 앞에서 우리는 일단의 학생들이 집단체조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은 찍을 수 있었다. 안내원은 거대한 콘 다가를 축제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으나 가는 곳마다 예외없이 하루종일 학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의아했다. 에너지 위기는 듣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티타늄 지붕까지 구비되어 있는 '5.1 경기장'에 가는 도중 양복과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있는 공사현장을 목격했다. 안내원은 이 공사가 평양의 중심부를 가르는 다리를 만든다는 것이며 김정일이 1년안에 공사를 끝내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이를 돕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해 주었다. 실제로 우리 안내원중 한 명은 그곳에서 직접 돌을 나르기도 하였다.

이날 일정의 백미는 인민군 서커스단 방문이었다. 원기둥 형태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 안에 들어서자 수많은 관중들이 일제히 우리들 -서양인- 을 보기위해 고개를 돌렸다. 동구지역의 서커스단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눈을 즐겁게 해주는 훌륭한 서커스단을 가지고 있었다. 말과 권투하는 곰 그리고 강아지 등 온갖 동물모기가 볼만했으며 남한 군인과 미군 복장(금발, 선글래스, 큰코, 거만한 걸음걸이까지 완벽한)을 우스꽝스럽게 차려입은 광대들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다.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남한을 미제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형제국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우리의 가이드는 (과장되게) 몇번씩이나 한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공작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다. 통일은 북한에서 큰 애깃거리인데,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는 계속 금세기내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많은 서방 전문가들이 그에 동의하지만 그가 꿈꾸는 방식은 아니다.

빈틈없는 경계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둘째날 우리는 판문점을 방문하기 위해 개성행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도로는 역시 텅텅 비어 있었으며 한참을 달렸지만 오가는 차들이 한 대도 없을 정도였다. 밤에 돌아오는 길에는 불도 밝히지 않은 자전거와 정면 충돌할 뻔도 하였다. 안내원은 간간히 나타나는 큰 길가의 높은 콘 크리트 구조물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유사시 적 탱크의 진압을 저지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 시골 풍경은 대체로 갈색 이미지에 동산들이 많은 호주 내륙이나 캘리포니아 중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마을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붉은 글씨의 구호들이 산중턱에 놓여 있었다.

휴전선 쌍방 2km 에 달하는 비무장지대 답사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안내원들이 군사시설 물 주위는 일췌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깃발과 북측 선전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리의 음악을 들었다. 판문점은 매우 흥미로운 곳이었다. 문자 그대로 남 한과 북한 군인들이 담장도 없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며 각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였으나 그날 남 측 관광객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측 설명에 의하면 남한측에서 판문점 관광을 위해서는 방문 훨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내야하며 운동화나 청바지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한 병사가 우리를 안내했는데, 그는 휴전선 양쪽 모두에 반씩 걸쳐 있는 일곱개의 건물중 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방을 나오면서 "내가 만일 판문점에서 남측으로 걸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안내원은 "미군이 당신을 쏘아 죽일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인 안내원은 그들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1백만 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개를 물어뜯은 사람

고려호텔 회전전망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내원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일정을 바꿔 보신탕을 먹으러 가자고 제의하는 것이 아닌가. 여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또는 위험)중의 하나는 그 지역 특유의 별미를 맛보는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맛난 음식을 우연히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베이징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곳 음식은 내가 호주의 중국음식점에서 경험했던 저염분, 저지방의 중국 음식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들 뿐이었다.

1인당 20달러로 값을 흥정하고 안내원을 따라 보신탕을 먹으러 나섰다. 북한인들은 개를 애완 동물로 생각지 않는 것 같았다. 개들은 농장에서 노동력으로, 식당에서 음식으로 사용될 뿐 개인 적으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매우 귀해서 심지어 동물원에서조차 20여종의 개들을 모아놓은 전시관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북한인들은 중국인들이 거북이를 비싼 건강식으로 생각하듯이 개를 취급했다. 옛말에 따르면 일 년에 개한마리를 먹으면 건강을 지켜주고, 겨울에 외투한장을 더 입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날 저녁 7시께 우리는 어두운 통일로를 달렸는데 교외는 고층건물들이 많았으나 불이 켜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안내원에게 그 이유를 묻자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모두를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층건물이 있는 교외지역은 평양 중심부와 넓은 대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큰 것은 왕복 13차선이나 되는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빌딩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콘크리트 건물군' 한중간에 우리가 타고 가던 차가 멈추고, 우리는 안내원을 따라 나즈막한 건물 안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약간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보신탕집, 가라오케, 술집 이 함께 붙어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천장에는

서양의 디스코텍에서 볼 수 있는 둥근 사이키 조명 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커다란 가라오케 기계에는 영웅을 찬미하는 북한 음악밖에 들을 수 없는 등 내가 이 세상에서 가본 곳 중 가장 별난 레스토랑이었다.

종업원이 금방 개고기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개의 등뼈 부분이 나왔는데 고기가 얼마나 연한지 포크를 가지고 고기의 껍질을 벗길 수 있을 정도였다. 매우 맛이 있었다. 사슴고 기와 맛이 비슷하다고 느꼈다. 다음으로는 고기가 별로 붙어있지 않은 갈비부분이 나왔다. 역시 맛이 있었다. 게걸스럽게 먹던 안내원이 우리를 바라보며 재미있다는 듯 "맛있어요" 하고 물었다. 종업원 하나가 다가와서는 우리 안내원에게 "저 서양놈들이 자기들이 뭘 먹는지 알기나 하고 있는기야요" 라고 묻자 안내원이 장난스럽게 "저놈들은 자기들이 노루고기를 먹고 있는 줄 알 아"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했다. 안내원들은 예전에 독일인 부부가 이곳에서 개고기를 먹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독일인 남편 이 아내에게 요리에 사용된 것이 개고기란 말을 앓고 있다가 뒤늦게 공항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공항 바닥에서 구역질을 하며 먹은 것을 토해 버리고 만 것이다.

요리를 위해 개를 잡을 때 제맛을 내기 위해 잔인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관한 생각은 가능한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안내원이 게걸스럽게 고기를 먹어치우는 속도는 그다음 개요리가 나오자 절정에 달했다. "이게 오늘 개고기 요리중 백미야요" 안내원이 계속 강조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요리는 꼭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운데 다리' 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게 뭘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술취한 북한인 하나가 가라오케 기계로 애국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가.

가운데 다리다음으로, 다음으로 탕요리가 나왔는데 매콤한 것이 매우 맛이 있었으나 이즈음 우리는 개고기만 계속해 서 먹는데 질리기 시작했다. 탕과 함께 작은 공기그릇에 붉은 죽같은 것이 함께 나왔는데 안내 원은 이것을 탕에 섞어 먹으라고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것은 개의 골을 재료로 만든 스프였다. 이것을 다 먹어치우자 개 혀바닥 요리가 후식으로 나왔다. 어원은 "우와 잘 먹었다" 며 튀어 나온 배를 두드렸다.

## 스탈린의 선물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국제친선전람관' 을 둘러보게 되어있다. 평양에 서 기차를 타고 가면 어느 아름다운 산 속에 위치한 '전시관' 이 나오는데 이곳에는 세계 각국에 서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보내온 수천점의 각종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시골쪽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이상한 'AA 포' 가 산정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어느 지점을 지나는 중에 대공포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지도를 보 고 알아보니 이곳은 북한 중심부의 '영변' 이라는 곳으로서 핵의혹 시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었다.

전시관에 진열되어 있는 각국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것이 편지봉투 개봉칼, 의자 등 잡동사니 였으나 스탈린이 선물했다는 50년대식 방탄세단은 볼 만 했다.

전시관을 나와 얼어붙은 폭포가 있는 어떤 산에 올랐는데 한 바위 전면에 김일성의 초상이 그 려져 있었다. 무슨 유적지라는 곳도 가보았는데 이러한 곳 대부분은 한국전 당시 참화를 입었던 곳이었다.

안내원과 친해지면서 우리들은 정치를 소재로 점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애초 우리 일행 3명에 안내원 둘을 맡겨준 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들은 혼자 남아 있을 때에도 그들의 당노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언행을 보였다. "하긴 사상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회에서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도 했으나 후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하는 바를 진실로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구에 사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심각한 범죄, 빈곤, 에이즈, 창녀, 호모, 담배피우는 여자들이 없 는 세상을 쉽게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신문, 잡지를 비롯하여 외부와 모든 정보가 차단되 어 있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들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생각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할지 도 모른다.



## 전쟁박물관

우리의 다음 방문일정은 '조국해방전쟁전승박물관' 으로 잡혀있었다. 이 곳은 한국전(한국전 에서의 미국의 전망을 보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으로, 한국전이 서구에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없는 전쟁으로 치부되는 반면 이곳 북한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은 마치 전쟁이 45년 아닌 5년 전에 일어났 었던 것으로 착각할 만큼 관심과 열의가 대단했다.

전승박물관을 여행일정에 넣을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안내원에게 묻자 그는 약간 놀라는 눈치 였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전승박물관에 먼저 관심을 보인 서양 관광객들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으로서의 한국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북한측 주장에 귀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전역 어디를 가나 방문객들은 한국전쟁에 관한 갖가지 유적, 기념비, 묘지, 기념관, 박물관 등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림과 우 표에까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40년전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는 현재까지 오래전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방문한 곳 중 '혁명의 순교자 묘지' 라는 곳이 있었는데 82년에 완공된 이 묘 지는 북한 전역의 전쟁 희생자들을 이장해와 평양이 잘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그들의 대리석 흉 상과 실물크기의 동상들을 세워놓은 곳이었다. 이는 결코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로서 경 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이와같이 45 년전에 있었던 전쟁의 기억들을 생생히 유지하려는 데에는 틀림없이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이다.

평양에 있는 전쟁박물관에서 우리는 역시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박물관 안내원으 로부터 전쟁에 관한 북한측 주장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안내원이 통역을 해주었다) 그는 2시간이나 걸린 박물관 관람 내내 미리 암기한 듯한 내용을 막힘없이 들려주었는데 만일 그가 '위대하신 최고 지도자 김일성 장군' 과 '미제국주의 침략자' 라는 말 대신에 그냥 '김일성' 과 '미 국' 이란 단어를 썼더라면 관람시간이 1시간으로 족했을 것이다.

박물관에서 우리가 처음 안내받았던 곳은 전쟁중의 밀고 밀리는 상황을 불빛으로 표시해 놓은 커다란 한반도 지도가 있는 방이었다. 북한측은 6.25 전쟁이 미군의 기습 북침으로 시작된 전쟁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에 온갖 무기를 퍼부은 후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을 기습공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치밀하게 계획된 미군의 북침이 3.8 선 몇 마일 못 넘어 북한 농부들의 저항을 받아 멈추게 되고 북한의 반격으로 3일만인 수요일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소련제 T-34 탱크가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자 박물관 안내원은 미소지으며 고맙다고 했다.

계속해서 방에서 방을 따라 여러 전시관을 둘러보았는데 방마다에는 김일성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들이 최소한 두개 정도씩은 걸려 있었으며 많은 곳은 4 개가 걸려있는 곳도 있었다.

이밖에도 한 영웅적인 북한 병사가 끊임없는 미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트럭을 몰고 고립된 북한군에 보급품을 전달한 이야기와 어떤 농부가 부서진 나무다리 앞에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있는 인민군을 위해 나무를 등에 받치고 스스로 다리가 되어 그 위로 트럭들이 다리를 건너게 했다는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미화되고 있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는 미군이 선량한 양민들이 있는 곳에 세균 폭탄을 사용해 많은 이가 희생되었다는 등 비교적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지어낸 것이 명백한 터무니 없는 말들이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경험

북한의 어린 아이들은 무척이나 친절하고 명랑하다. 그들 특유의 별스런

경례동작과 함께 "안녕하십니까"하고 외국인들에게 인사한다. 아마도 그들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특 히 친절하도록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다.

평양의 '어린이 궁전'을 방문했는데 그곳은 재능있는 아이들이 방과후 과외활동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했다. 이곳은 내가 북한에 와서 보아왔던 그간의 여러가지 모습들에 비해 격이 맞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시설이 잘되어 있었다. 의문을 갖고 안내원에게 이곳이 모든 어린 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일부 특권층 자녀만을 위한 곳인지 등 몇몇 질문을 해보았 으나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어린이 궁전은 큰 극장이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10m가 넘는 다 이빙대가 구비된 실내수영장과 유리 엘리베이터 등 매우 잘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교실에 잠깐 들어가보니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 아코디언 등을 연주하고 있었다. 극 장으로 들어서자 수천명의 어린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우리 일행을 환영해 주었는데 순전히 외국 관광객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노래하고 연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귀여웠으나 마치 서커스단에서 조련된 동물들이 연상 되었다. 판에 박힌 똑같은 미소를 얼굴에 각인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나는 어린이 학대의 한 단편을 볼 수 있었다.

후기 - 떠오르는 친애하는 지도자

북측의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글을 쓰던 6월경 김정일이 마침내 '위대하신 지도자' 의 위치에 올랐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으며 북한이 남측의 식량원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도 한다. 또한 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폐지된다고도 한다.

우리를 안내했던 안내원은 우리가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북한 관광을 적극 추천해 달라고 부탁 했으나 이러한 그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북한은 참으로 흥미있는 여행지로서 추천할만 하다고 생 각한다. 동구가 무너지기 전에 보였던 여러가지 전조를 북한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평양 거리는 그야말로 종이조각

하나없이 깨끗했다. 안내원은 무척이나 친절해서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최근 남한과 일본으로부터의 원조를 받아들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더이상 공산국가를 원조하지 않으며 중국도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구 소련과 동구 제국들이 무너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면 아예 흔 적도 없이 소멸되어 버릴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들도 이 희안하고 이상한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한 번쯤 경험해 보길 권한다.

이 글을 읽고 소감이나 의견교환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특히 한국인 들은 더욱 반갑습니다.

cheers,

Paul & Rick Bakker

bakker@etl.go.jp

Copyright 1995 - Paul Bakker

Paul Bakker / bakker@etl.go.jp

The opinions expressed above are my own, not my employer's.

## NORTH KOREA BUSINESS INFORMATION

자료조사담당관실제공(96.2.16)

이 자료는 인터넷 상의 북한관련 전문 비즈니스정보를 다루고 있는 사이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교류 및 비즈니스분야에 관심있는 부서에서는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북한클럽에 가입하여 이용하시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정보 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반드시 "IMRIUSA.COM 북한클럽"에 가입 하여ID와 PASSWORD 를 받으셔야 합니다.

ID, PASSWORD는 위의 "TO EDITOR" 메뉴바를 이용하면 되는데,  
"IMRIUSA.COM 북한클럽 가입 담당자 앞." 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회비를 받은 후 ID, PASSWORD를 등록시켜 드리며, 가입 회비는 \$25/년입니다.  
회원에 가입되면, IMRIUSA.COM에 있는 북한 관련 메뉴의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등 특수 자료는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등이 특수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Internet 상에서, 자료를 본다는 것은 자료를 자기 컴퓨터로 이미 가져온 것이므로, 수수료의 징수는 자료를 보기 직전에 징수합니다.

자료 구입이 필요하신 분은 위에 있는 "TO EDITOR" 메뉴 바를 이용하여 주문하시면 되며, 결제는 당분간 신용카드로만 받으므로 신용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날짜, 그리고 email 주소를 꼭 적어 주십시오.

자동 처리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10월 말 전에는 이 작업이 수동으로 진행되므로 3-4일 전에 미리 주문 하셔야 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머릿말

오늘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월을 살고 있다. 모든 것이 "급변(急變)"의 수준을 지나 "격변(激變)"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10년의 변화폭과 요즘의 1년과를 비교한다해도 시원치 못할 정도로 체감되는 수준은 온몸을 뒤틀리게 만들 정도로

실제 상기한 두 팩스는 모두 북한기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들이다. 과연 이 팩스가 아무런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단,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 팩스들이 대단히 무난한 내용을 담고 있고 "제안" 차원이 나 혹은 "회신(回信)"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들도 상당한 자율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다.

상대방의 입장이란 바로 북한,북한기업의 현 상태를 의미한다. 그들 집단,회사가 처한 현황이기도 하고 그들의 심리상황도 이에 속한다. 이 팩스들은 북한기업이 가진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 좋은 사업이라면 진행시켜도 무방하다는 뜻과 한편으로 번거로움은 피하고 싶다는 것이다.

두번째 팩스는 더 나아가 자신들의 장점도 언급할 정도라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파트너에 대한 확인 작업 정도를 거치고 난 후 객관적인 그들의 실력을 가늠해보고나서 이 제안을 고려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아직도 이런 제안을 그대로 깔아 뭉개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므로 대북비지니스를 시작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한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하한 상태인가는 상대를 읽는 척도(尺度)가 된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한 행동은 서두름이 없다. 남한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는 점차 북한기업과의 접촉도 확대시킬 여지가 높아짐을 뜻하며,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논의들도 따른다는 예상을 가능케한다. 실제 중국투자기업들중 상당수가 이와 유사한 제안들을 이미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기업들은 이런 식의 거래(?)에 대해 준비된 바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입장의 환치(換置)는 상대와의 교감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다. 일종의 테크닉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므로 부단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쉽게 "입장 바꾸기"로 보면 되는데 무턱대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소재를 찾아 원만히 해결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정작 두려운 것은 현지를 떠도는 상당한 수준의 루머들이다. 북한기업과의 교류가 가진 위험성은 비단 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다. 까다로운 절차도 그중 하나이며, 대북접촉에 대한 사시(斜視)적 관점도

동일하다. 처음부터 잘 될 것을 기대했다면 이 경우 금방 X팔 소리의 쌍소리가 절로 나온다. 그 래도 방법은 없다. 기다리는 수 밖에.

만나자고 연락을 받고 제3국(흔히 북경이나 중국과의 변경지역이 된다)에 급히 날아갔 는데도 정작 나타날 사람은 없는 경우도 흔하다. 급한 일로 못나오게 되었다는 중개자 의 전언(傳言)을 듣고나면 두다리의 힘이 다 풀린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사람들과 비지 니스를 할 필요가 있을까는 후회도 한다.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두고도 논란은 많다. 혹자는 북한은 변화가 없다고 이 야기 한다.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형태를 띤 엄연한 통 치체제를 갖춘 나라로 보면 그들이라고 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쪽으로 변 하는가의 방향성을 찾아야할 과제가 있을 뿐이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사람은 거시 적 혹은 미시적인 측면의 두가지를 구분하여 말해야한다. 상대의 입장이란 두가지 모 두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한가지의 요소로만 함부로 변화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를테면 국가정책의 변화 가 없이 기업이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다. 미세한 접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3국에서 만나자는 미팅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신이 왔다면 어떻게 판 단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 미팅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호의에 감사합니 다."

완곡한 거절이다. 과거 북한은 이 정도 수준의 회신마저도 할 줄을 몰랐다. 지금은 이 런 식의 답변을 종종 본다. 변한 것인가. 이런 예도 있다. 중국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 의 사무소를 느닷없이 팩스 한 장이 날아왔다.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 급히 서울 본 사로 연락했지만 이쪽도 준비된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별 대답을 못하고 있다. 판단해 보자.

"귀사가 생산하는 00상품을 우리가 수입해도 좋고 공화국에 와서 투자하는 항목을 상 론(相論인지 詳論인지는 모른다)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000소속이므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망치는 최후수를 의미함 으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背水陣)으로써의 35계를 제목으로 삼는다.

북한을 보는 다양한 우리의 눈 가운데 하나의 현실 개론서(概論書) 정도로 이 책을 쓴 다. 보편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일부는 개인적인 감상도 포함될 수 밖에 없었음을 우선 밝혀둔다. 어쩌면 이러한 감상적인 접근이 가진 위험성을 필자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인지도 모른다.

## 1. 상대를 중심으로 생각하라.

사람마다 입장이 있지만 북한업무는 유동적 상황이 워낙 많이 전개되다보니 입장을 정립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단순한 예로 북한측 기업인이 우리의 제의에 대해 아무소리 가 없다면 왜 그런가는 이유부터 찾는 것이 순서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답변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중개인을 통해 우리의 제안을 넣을 경우도 그렇다. 이런 경우는 '한 다리 건너가는'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북한기업을 상대함에 있어 가장 곤혹스러울 때는 역시 아무 대답이 없을 때다. 뭔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면 담당자는 숨이 막힐 수도 있다. 충분히 일을 진전시킨 상황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음의 여러 경우에 상 당한다. 이 경우를 벗어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서로의 연락마저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첫째, 내부적으로 미팅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내의 내부적 변고에 의해 나올 입장이 못된다. 셋째, 출장신청을 했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넷째, 개인 신변상의 문제가 있다. 다섯째, 아직은 성숙된 상황이 아니므로 약간의 지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섯째, 우리가 모르는 뭔가 오해하거나 혹은 미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일곱째, 너무 일방적인 요구로 생각되어 아예 묵살한다.

다양한 이유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해당사항이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알수 있는 것은 북한측의 준비자세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거래가 안된다는 말과



민족의 단점과 장 점이 역사속에서 침예하게 드러난다. 오늘의 시대도 여전히 "긴장(緊張)의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위기 앞에서만이 제대로된 사람의 평가가 되듯이 추운 겨울을 맞지 않고서야 제대로된 마음을 읽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90년대 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두말할 것 없이 각국의 "이기주의(利己主義)"가 경제를 매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或者)는 세기말의 현상을 들어 또 다른 전쟁예비론을 들먹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과거의 권력 쟁구론(銃口論)을 벗어나 첨단 경제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폐쇄되지 않은 국가라면 이제 세계가 관장하는 경제의 터밭을 무시할 수 없다. 세계경제는 한편으로 단순화되면서도 내부적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문명의 이기(利器)가 주는 첨단의 과학산물들은 몹시도 우리를 다급한 템포속으로 내몬다.

한반도(韓半島)를 보는 여러 시각(視覺)들중 여기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일부분에 속한다. 어쩌면 오늘의 남북한 관계가 남한의 젊은이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거라는 불안도 앞선다.

유행했던 사회주의 운동권의 목소리는 현실성과 멀게 느껴지고 이에 실망한 다수의 군중은 과거에 비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는 이른바 "유야무야(有也無也)"의 세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먹은 나이살만큼의 세대론 보다는 이제 의식의 세대론이 주창(主唱)될 만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기대를 가지긴 한다.

딱딱한 주의(主義)서적이 가져다주는 번거로움을 피해보기 위해 '비즈니스'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성의 경험들과 '시각'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을 함께 구성해보았다. 어느 한쪽도 소홀할 수 없다보니 작업은 무척 힘들었다.

"북한비즈니스35계"는 매우 초보적인 개념을 담고 있다. 물론 현실접근에 기초한 것으로 내용가운데 상당수는 반드시 한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다. 비즈니스를 하건 하지 않건 이 정도의 내용을 간과한다면 아마도 신세대를 이해못하는 구세대 만 큼이나 서로의 답답함이 가중될 뿐이다.보편적으로 36계란

사람의 피를 말린 다. 그런 시대는 곧잘 이제 몇년앞으로 다가온  
신세기(新世紀)의 문제와 중첩되는 경향 도 있다. 2000년이 상징하는 의미는  
너무 크다. 과거 100년과 1000년의 세월이 함께 고 개를 넘어간다.

세기말(世紀末)의 격변(激變)은 예외없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광복 50주년에다  
엄밀 히는 분단 50년이 거대한 스크린에 비추어진다. 어느 한 쪽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의 피해는 의외로 크다. 젊건 늙었건 간에 합부로 이 시대의 괴로움을  
정의내리지 못한다.

세월이란 언제나 오늘 젊음을 내일의 늙음으로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 들을 역사라는 책속으로 묶어 버린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의  
평가는 내일 어 떻게 변해질는지 모를 일이다. 새로운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 의 "역사(歷史) 맞이하기"가 무척이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일이다.

남북한(南北韓)의 분단은 과거 40여년간 쌍방을 침예한 경쟁(競爭)과  
갈등(葛藤)으로 점철되게 하였다. 이념의 분쟁은 세계적인 냉전(冷戰)의 조류와  
맞물려 우리의 의사인 지 아닌지를 파악못할 정도로 깊숙히 우리의 사고속에  
자리잡고 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역사의 희생자(犧牲者)일 수 있다.

술한 사람들이 동서독의 긴장과 한반도를 한테두리로 묶으며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했 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현실이 그들과 같을 수 없다. 이미 베를린의  
장벽(障壁)은 무너 졌지만 휴전선(休戰線)은 더욱 견고해진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발길을 잡아채고 있 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전 서글픈 상황이다.

완고(頑固)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이념이 지배한 북한사회는 성격적 관찰에  
의해 거대 한 종교집단에 비교되곤 한다. "주체(主體)의 나라"는 김일성주석의  
죽음으로써 변화 를 예고하고 있다. 제1대 교주(教主)가 사라지고도 살아남는  
종교는 변형되어 왔듯이 북한사회도 교(敎)가 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더이상  
과거와 같지 못한 것도 같다. 그래도 이제 1년여가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을 꼽으라면 유대인의 끈질김을 내세울  
사람들이 많 을 것이지만 한민족은 결코 그에 못지 않는 또 다른 냉혹함이 크다.

상존하다. 납치에의 두려움도 물론 있을 수 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연변(延邊) 일각의 소위 탈주 자를 잡는 북한프락치의 이야기들도 남의 얘기는 아니다. 또한 괜스런 번거로움을 만 들기 싫어하는 우리기업 직원들의 특성도 가미된다.

북한기업과 우리기업의 입장은 이런 긴장상태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 약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예견되는 문제들을 수월케한다. 한 국기업에게 있어 북한기업은 이제 별나라의 토끼가 아니다. 늘 주변에 있는 것과 진배 없다.

## 2. 사회주의는 보신주의(保身主義)다.

북한사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북한과 다른 사회주의국가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일까. 북한식 사회주의가 가진 독특함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등의 의문은 비단 북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체제 연구자 모두의 관심사다.

북한기업,기업인의 특성중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계층에는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근접한 판단이 아닌가 생 각한다. 지금까지 북한기업인과 접촉을 해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작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점도 없지 않지만 충분히 케이스가 있는 말이다.

- 1) 말 뿐으로는 믿지 않고 말의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믿음을 준다.
- 2) 상부인원의 권한은 우리와 비교,강하면 강했지 약하지 않다.
- 3) 법률적인 감각이란 것이 거의 없다. 우리와 비교하면 따라오지 못한다. 교시(敎示)중심의 종교적 성향이 짙다보니 원칙은 있어도 각론(各論)이 부족하다.
- 4) 정해진데 까지만 움직인다. 그 이상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 5) 중국에서는 회답,상담등 교섭이 의식인데 비해 북한은 이를 수단으로 여긴다.
- 6) 전례를 들먹여도 소용에 닿지 않는다.

- 7) 동등한 신분.자격이라해도 반드시 진한 서열의식이 배여있다.
- 8) 자아의식이 강하고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전체주의,집단주의 성향을 표면에 깔아둔다.
- 9) 지시가 없는 일에는 실행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기타는 자기주장이 강하다.
- 10) 베풀어준만큼 기대 앓는 것이 좋다. 기대하면 오히려 배신감을 느낄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 11) 회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가를 위해,자신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회사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 12) 오랜 김일성 체제하에 있다보니 개인들도 자신들의 독자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높다. 국가입장이 바로 개인입장으로 전환된다.
- 13) 사회주의의 능력평등관이 많이 부식지고 있다. 요즘은 능력있는 자를 치켜세우는 경향도 있고 시기,질투도 많다.
- 14) 자기 라인에 대한 충실도는 매우 높다.
- 15) 사회주의가 자신만이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잘안다.
- 16) 평등의식도 있는 반면 자기보다 힘이 센 상대에게는 쉽게 꼬리를 내린다.
- 17) 실패에 대한 제제가 엄격하다보니 집단 무책임주의 현상도 많다.

유사한 점도 많지만 북한식이 꼭히 중국식과 동일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를 대하는 태도가 오늘의 북한현실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이 이제 집단무책임 주의화합 은 사회주의가 가진 최대의 맹점(盲點)중의 하나다. 흔히 평양중앙TV에서 볼 수 있는 작업반의 긴밀한 협조들은 우리눈에는 어색한 쇼로 비춰진다. 그러나 우리도 새마을 운동시절에는 하나도 다를 바 없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북한기업인들이 "경쟁"의 의미를 인지하고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능력평등 관점들도 주목할만하다.심지어 공식석상에서 옆사람을 서로 치켜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수하로 둔 장(長)이 자랑스레 그의 개인적인 이력을 말하는 경 우까지도 있다.

법률적인 감각이 없고, 전례에 대해 민감하지 않음은 역시 사회적인 분위기와 직결된다. 법률이란 북한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축이라기 보다는 수단적 기능이 크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전례도 천차만별이다. 자신의 방식을 남에게 감추는 버릇은 상대가 주장하는 전례를 못받아들이게 하는 첫 원인이 된다고 본다.

상부인원의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결정권이 강함을 뜻한다. 사장들이 가진 파워는 단순히 기업을 이끄는 총수라는 역할이외에도 더 상부와의 선(線)이 전제가 된 것이기 때 문으로 깊숙히 연결될 경우 생사여탈권과도 직결된다. 대외무역회사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북한에 조그만 합영회사를 가진 중국기업의 사장은 북한기업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 다고 말한다. 실제 여러 사람에 의해 선박의 수배, 물건의 확보등에서 벌어지는 그들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이 전해지곤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들은 국가라는 큰 테두리 의 교육된 내용과 자신을 더 사랑한다.

주의(主義)시대에서 개인(個人)시대의 현상이 보인다. 이것도 변화라면 큰 변화일 수 있다.

북한도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분명 보신(保身)이란 악습을 양산할 소지가 크지만 그 들의 변화는 북한이라는 터밭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자라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 개입.확장 전략과 협상.공존 전략의 대처, 그리고 한(조선)반도 통일정세의 변동방향

1996. 3.

이 자료는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재미친북단체) 한호석 소장이 인터넷(북미주조국통일동포회의 HOME PAGE)을 통해 전송한 자료로서 북한의 대외 전략과 새로운 정책 구상에 관한 논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차 례**

**봉쇄.대결 전략과 개입.확장 전략의 이중수행**

**북(조선)의 전략적 대응**

**전략대처선의 변동과 남-북-미 관계**

**북(조선)의 새로운 정책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조선)이 내놓은 두 가지 전제조건**

**(각 주)**



## 봉쇄.대결 전략과 개입.확장 전략의 이중수행

오늘 미국은 탈냉전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냉전질서의 표상인 한(조선)반도에서 '봉쇄.대결 전략'(Containment-Confrontation Strategy)을 폐기하고 '개입.확장 전략'(Engagement-Enlargement Strategy)으로 수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이 정치적 부담의 핵심부에는 조-미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풀기 힘든 숙제가 들어있다.1)

미국의 수정된 전략과 정책이 한(조선)반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알려면, 먼저 미국의 전략수립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식을 파악해야 한다. 탈냉전의 물결이 물려오기 시작한 뒤로 워싱턴에 있는 전략수립가들의 머리 속에는 '개입.확장 전략'에 대한 고심이 가득차 있다.2) 우리는 세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저들이 자기들 내부에서 전략수정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왔는가를 엿볼 수 있다.3)

미국의 전략수립가들이 탈냉전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입-확장 전략'이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리하기까지 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 건설론'이 논의되었다. 이 논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James A. Baker, III)4)와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the States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로 임명된 윈스턴 로드(Winston Lord)5)였다.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 건설론'을 '확장전략'으로 개념화한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 백악관 국가안보담당관으로 임명된 앤서니레이크(Anthony Lake)다. 그가 1993년 9월 21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 국제학과에서 한 "봉쇄에서 확장으로"(From Containment to Enlargement)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확장'이라는 전략적 사고가 모습을 드러내었고,6) 한 해 뒤인 1994년 9월 12일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그가 한 연설 "민주주의의 확장: 힘과 외교의 결합을 위하여"(The Reach of Democracy: Tying Power to Diplomacy)에서 다시 제시한 바있다.7)

백악관과 국무부를 연결하는 전략적 사고의 진행체도와 다른 또 하나의 체도를 따라 움직여온 집단이 있는데, 그것은 미 국방부의 전략수립가들이다. 이들이 탈냉전 시대의 전략문

제에 대하여 어떻게 고심해왔는가를 살펴보려 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미국 방부 국제안보담당관 조셉 나이(Joseph S. Nye, Jr.)다.8) 그가 주도하여 작성한 뒤, 1995년 2월에 발표했던 중요한 보고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9)에서 저들은 이른바 '개입'이라는 전략개념을 정리했다. 미 국방부의 '개입전략'이 지니고 있는 핵심내용은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을 따라 1990년부터 1992년 말까지 시행되었던 주한미군 1단계 감축(7천명) 이후 북(조선)의 '핵문제'로 잠시 중단되고 있던 제2단계 감축계획(1993-1994년도)을 완전히 폐기하고10), 주한미군은 현 수준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한다는 것을 확정하고 주한미군 3만7천명과 주일미군 4만5천명, 그리고 미 제7함대의 해상지원병력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에 전진배치한 10만명의 병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과 동북아시아의 다국간 안보협의체를 창설하려는 구상이다.11)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미국이 남(한국)과 일본에 전진배치한 무력을 감축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앞으로 장기간 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사실이다.12)

조셉 나이는 '개입.확장 전략'을 '영도전략'(Leadership Strategy)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탈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입과 확장을 통해 자국의 영도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두드러지게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영도전략'을 논하면서 그는 "오늘의 안정과 번영을 앞으로 20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시아에 개입해야 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바지해야 하며,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13) 나이가 말하는 '영도전략'의 세 가지 구성부분은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을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기지로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 미국의 전진배치 무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자간 지역안보협의구도를 창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셉 나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북(조선)이라고 지목하였다.14) 1995년 10월 11일 미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열었던 중국군사력에 관한 청문회에서 그는 미국의 '개입전략'은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과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목적, 미-중 사이의 안보협력 및 안보상호의존도를 향상시키는 목적 등을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5)

레이크의 '확장전략개념'과 국무부-국방부의 '개입전략개념'이 결합되면서 '개입.확장 전략'으로 정식화됨으로써 논의의 완결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워런 크리스토퍼는 미국의 외교전략을 4대 원칙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16) ① 미국의 영도력을 수행하는 원칙, ②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생산적인 방향에서 유지하는 원칙, ③ 협력관계를 강화한 공고한 체제를 수립하는 원칙, ④ 미국의 이익과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원칙이다. 그는 "미국이 일본과 맺은 전략동맹관계는 남(한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 맺은 전략동맹관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개입은 아시아의 안정, 번영, 민주화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17) '개입.확장 전략'은 미국이 1994년 한 해 동안에 아시아 지역에서 1천5백3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이로써 자기 나라에서 3백10만개의 직업을 유지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18)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수립.가동하는 전략이다.19)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개입.확장 전략'을 수행하려면 중국과 북(조선)에 접근.공략해야 하는데, 이 접근.공략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조선)반도의 정전협정체제다. 앞으로 몇 해 안으로 미국은 정전협정체제를 어떤 경로,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 또는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 정전협정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얼마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미군장성으로 다시 교체하고, 북(조선)이 제의한 조-미 장성급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추정했다고 한다.20)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검토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은 미국이 아직 한(조선)반도에서 '개입.확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행할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낡은 '봉쇄.대결 전략'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일정기간 동안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21) 따라서 현시기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략수행은 이중적이며, 대북(조선)관도 이중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북(조선)을 관계개선 대상으로 인식하여 1995년 9월 23일부터 열린 평양회담에 참석하고, 결국 임시 영사보호권을 상호행사하기로 합의하면서도22) 같은 때에 북(조선)을 '잠재적국'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하는23) 전략수행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예다.

1995년 9월 1일 한-미 국방장관의 호놀룰루 회담에서 '한-미 중장기 안보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있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은 1995년 9월 1일로 임기가 끝난 군사정

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인 이석복(소장)을 임명한 사실, 그로부터 꼭 한 달 뒤인 10월 1일에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현재 주한미군사령부 산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기관들인 육군 501군사정보여단(MIB), 해군 방첩수사대(NIS), 공군 제45지구 방첩수사대(OSI), 제32특활정보대(AFIC)의 대인정보수집기능을 통폐합하여 '미 국방정보국 코리아지원단'(DODSAK)을 창설하기로 했다는 사실,24) 그리고 주한미군이 무력충돌의 위기가 생기면 사전에 긴급히 배치할 '신속전개 억제전력'(FDO)에 더하여 '전투력증강'(Force Enhancement)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9월 23일 언론기관에 흘린 사실25) 등은 모두 미국이 한(조선)반도에서 자국의 전략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위에서 파악한 현실을 종합해보면, 지금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기존의 '봉쇄.대결 전략'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면서, '개입.확장 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개입과 확장'이 확실히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봉쇄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대결의 칼끝'을 누구러뜨리려 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이 두 전략의 비중을 따져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접근속도를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동역할을 맡은 곳이 미 의회다. 알려진 대로, 1995년 9월 18일 미 하원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의 발의로 지난 6월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한 뒤 일부 수정된 이 결의안은 프랭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비슷한 내용의 대북결의안과 조정.통합되어 단일법안으로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결의안은 북(조선)이 휴전선 부근에 배치한 군병력을 후방에 재배치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수출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장기정책 목표에 진전이 없는 것이므로 미 대통령은 조-미 관계를 격상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26)

다른 한 편으로, 미 상원 에너지 위원장 프랭크 머코우스키가 주도하여 외교위원장 제시 헬름즈, 상원의원 존 맥케인, 돈 니클스가 공동제출한 결의안에는 조-미 국교수립의 전제조건으로 특별사찰을 포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 완전 이행, 남북대화 진전, 한국(조선)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문제에 대한 공동조사활동, 국제테러 지원 중단, 인권 존중,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준수, 모든 폐연료봉의 제3국 반

출 허용, 흑연감속로 완전해체를 제시하면서, 의회에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지출을 허용한 것 외에는 행정부가 전용하여 북(조선)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북(조선)이 중유를 전용할 경우 더 이상 중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27) 미 의회의 이러한 보수적 조치들은 한(조선)반도에서 긴장.대결상태를 지속시켜 잉여무기를 처분하려고 하는 미국 군수산업자본의 '선거구 공략'28)의 영향에 대해서 행정부보다 의회가 더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조-미 관계개선에 대한 미 의회의 이러한 거리낌은 조-미 관계개선의 진전속도가 '개입.확장 전략'을 수행하는 제도 안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 북(조선)의 전략적 대응

1995년 9월 23일 평양에서는 조-미 연락사무소 개설협상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미 국무부 코리아 담당관인 제프 골드스타인(Jeff Goldstein)을 단장으로 한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미국정부의 공식대표단이 제3국이 아니라 평양에 들어가서 협상자리에 마주 앉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1984년 조-미 협상전략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던 북(조선)은 4년 뒤인 1988년 12월 6일 베이징에서 참사관급 공식접촉을 이끌어냈으며, 1991년의 뉴욕 고위급 협상과 1994년의 역사적인 제네바 합의를 거쳐 마침내 11년만에 미국을 평양에 끌어들여 협상자리에 마주앉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을 협상자리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북(조선)이 수행해 오고 있는 대미 외교전략을 우리는 '협상.공존 전략' (Conversation-Coexistence Strategy)이라고 부를 수 있다.29) 이로써 한(조선)반도는 미국의 '개입.확장 전략'과 북(조선)의 '협상.공존 전략'이 서로 맞부딪치며 힘을 겨루는 씨름판이 되었다. 이 양대 전략의 격돌은 이미 이른바 '핵문제'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이목을 끈 바있다. 조-미 '핵협상'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충돌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북(조선)은 자국의 '핵주권'을 양보하는30) 대신, 주한미군의 지상배치 핵무기를 모두 철거시키는 한 편, 미국을 극적으로 조-미 협상자리에 끌어내었으며, 40억 불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조선)이 '핵주권'을 양보하고서라도 '협상.공존 전략'을 기어이 관철시켜 미국을 협상자리에 끌어낸 근본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론들이 주장하듯이 북(조선)이 경제난을 개방정책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구책이 아니라, 한(조선)반도 전체의 '민족문제'인 평화체제 수립문제와 통일문제에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의 성과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 북(조선)이 '핵협상'과정에서 이른바 '한국형 경수로'의 수용문제에 대해 반대한 까닭은 언론들이 추측하듯이 남(한국)의 기술·인력·자본이 북(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미국을 지향한 '협상·공존 전략'을 일관되게 수행하려는 정치협상과정에 다른 변수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개입·확장 전략'과 북(조선)이 수행하고 있는 '협상·공존 전략', 이 양대 전략은 지금 조-미 관계개선이라는 중심축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양대 전략의 수행방향과 그 중심축인 조-미 관계개선의 추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조선)반도의 자주문제, 평화문제, 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냉전시기, 그러니까 미국이 한(조선)반도에 대해서 '봉쇄-대결 전략'을 수행하던 시기에 미국은 한(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 정착의 가능성과 통일국가 수립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조선)반도의 상황은 질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앞으로 한(조선)반도에서 평화체제 정착과 통일국가 수립의 역사적 경로와 성격은 이 양대 전략의 대치선에서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의식은 북(조선)이 과연 미국이 추구하는 '개입과 확장'의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과 미국은 과연 북(조선)이 추구하는 '협상과 공존'의 범위와 수준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이 '개입·확장 전략'을 한(조선)반도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냉전시기에 작동했던 이른바 '두 코리아 정책'(Two-Korea Policy)의 궤도(31)를 수정하여 이른바 '유도·편입 정책'(Inducement-Incorporation Policy)을 수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도·편입 정책은 북(조선)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 성격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도와 의지를 담고 있다. 남(한국)에서는 이것을 흡수통합(integration by absor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늘 북(조선)이 당면한 문제는 미국의 '개입·확장 전략' 및 '유도·편입 정책'에 대응력을 갖추는 일이다. 북(조선)은 이 대응력을 '체제수호'라는 소극적, 수동적인 명분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협상.공존 전략'의 수행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전략대치선의 변동과 남-북-미 관계

이러한 전략 대치선의 변동은 남(한국)의 처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남(한국)은 자신의 '적대자'인 북(조선)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커다란 지각변동 속에서 당혹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남(한국)은 전략 대치선의 변동추세를 따라가기 위해 미국과 정치.군사적 관계를 더욱 의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금방 눈에 띈다. 평양, 워싱턴, 서울의 삼각관계에서 평양-워싱턴 관계가 가까와질 수록 서울은 그 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sup>32)</sup> 이른바 남북 사이의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반대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워싱턴에 대해서 더욱 밀착.의존된 관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조-미 관계개선이 진척되면 남(한국)의 대미의존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예시해주고 있다.

최근 대통령 김영삼의 미국방문과 한-미 국방장관의 호놀룰루 회담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미의존성의 증대현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미 알려진대로, 이 두 사건에서는 각각 새로운 형태로 대미 의존관계의 강화를 위한 포석을 놓았다. 지난 7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무차관급 이상이 참가하는 새로운 안보협의체인 '대북 공동전략고위협의체'를 오는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후 서울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sup>33)</sup>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하와이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있던 국방장관 이양호는 1995년 9월 1일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는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북(조선)에 제의한 바있는 유엔군 대표 4명 (미군장성, 남[한국]군장성, 영국군장성, 그 밖의 참전국장성)이 참가하는 회의 이외에 군사정전위원회와 관련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뿐만 아니라, '한-미 중장기 안보협의체'를 새로 창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sup>34)</sup> 이것은 장기적인 군사동맹회의로서, 미국은 앞으로 조-미 관계개선과 중국의 영향력 증가, 일본의 군사적 진출이 이루어지게 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역내질서를 변동시

키지 않으려 하는 사정 때문에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북(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협상.공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외교환경을 조성해 가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국)이 가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비동맹회의가 이러한 외교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적으로 떠올랐다. 북(조선)이 비동맹외교를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5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비동맹 정상 및 외무장관 회의(NAM)에서 정전협정 체결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비동맹회의 이름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sup>35)</sup> 이 움직임을 포착한 남(한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주재 대표부 차석대사를 파견하고, 의장국의 특별초청을 받은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애를 썼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비동맹 외교무대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남(한국)은 북(조선)의 외교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었다.

남(한국)은 이러한 북(조선)의 외교공세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남(한국)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은 미국과 유엔을 통한 외교통로 밖에 없다. 남(한국)은 중국을 끌어당겨 조-미 평화조약 체결을 지향한 관계개선 추세에 제동을 걸려고 했으나<sup>36)</sup>, 이것은 기대한 것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미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평양회담 개최와 때를 맞춰 남(한국)이 조-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를 북(조선)이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에 가입하는 문제와 연계시켜 달라고 미국에 공식요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외교불안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sup>37)</sup>

다른 한 편 유엔무대에서 남(한국)은 북(조선)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연설을 통해 북(조선)에 대한 외교공격을 퍼부었고,<sup>38)</sup> 이것은 유엔을 무대로 한 남북의 '인권공방'으로 변했다.<sup>39)</sup> 남(한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성호 사건, 안승운 목사 사건<sup>40)</sup>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HCHR)에 정식으로 제소하기로 했다고 한다.<sup>41)</sup>

1995년 9월 30일 제3차 남북대화는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담에서 남(한국)은 첫날부터 대남비방을 중단하고, 김용순 비서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우성호 선원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하면서, 경제협력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재지원을 받으려면 당국자 간의 협상으로 격을 높혀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이것은 현재의 쌀협상이



나 수제지원협상을 남북 당국자 협상으로 전환.격상시킴으로써 한(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남북 당국자 협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이며,43) 조-미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조-미 관계개선으로 발언권과 협상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남(한국)의 대응책이었다. 그래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조선) 수석대표인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고문에 대해 그러한 비공식 직함 대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공식직함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44) 그리고 남(한국)은 제4차 회담장소는 반드시 한(조선)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3국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당국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남(한국)이 조-미관계개선 추세에 완전히 밀려나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개선 추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변경시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와 이를 반대하는 북(조선)의 의지가 대립하고 있다. 북(조선) 대표들은 이러한 남(한국)의 '정치적 의도'를 간파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남쪽이 쌀과 정치를 직결시키는 전략을 써서 순수한 목적의 쌀회담이 결국 결렬되었다. 남쪽은 동족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4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조-미 관계개선이 진척되는 과정 초기에 남북관계의 냉각상태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46)

그렇지만 남(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조-미 관계개선이 곧 남(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일까? 북(조선)이 주장하는대로,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조-미 관계개선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 당국자 간 협상체계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면, 남(한국)은 한(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이 왜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주요언론인 뉴욕 타임스는 북(조선)에 관한 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 브린의 말을 빌려, "미국과 북(조선) 사이의 분리된 평화협정은 남(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한(조선)반도에 포괄적인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47)

## 북(조선)의 새로운 정책구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나라든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대외정세에 돌파구를 내려고 할 때는 자국의 정책구상을 언론을 통해 외부에 흘려주거나, 민간통로를 통해 자국의 정치적 의사를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탐지하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1994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다국적 동맹세력이 이른바 '핵문제'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드센 압박을 가하고, 이에 대하여 북(조선)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기세로 맞서고 있었던 '핵위기의 긴장'이 한(조선)반도에 뒤덮혀 있을 때, 미국이 평양에 보낸 사람이 셀릭 해리슨이었는데, 그는 조-미 대결 분위기의 극적 반전을 이끌어내는 민간통로의 구실을 맡은 바있다. 해리슨이 1995년 9월 19일부터 한 주간 동안 북(조선)을 방문하고 서울에 가는 길에, 그리고 서울에 들어가서 발표한 내용은 그가 이번에도 다시 조-미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놓을 수 있는 민간통로의 구실을 맡았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이번에 북(조선)이 셀릭 해리슨을 통하여 밝힌 자국의 새로운 정책구상은 미국이 올해 1995년 2월초에 발표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전략'에 대한 일종의 대응방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조선)은 셀릭 해리슨의 발언을 통해 자국의 새로운 정책구상을 미국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정책구상이 '협상.공존 전략'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가 전한 북(조선)의 새로운 정책구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관련한 것이다. 해리슨의 발언 내용에 나타난 북(조선)의 새로운 정책구상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① 북(조선)은 미국이 남(한국)과 공조하여 북(조선) 체제를 변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체제붕괴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개입.확장 전략'이 한(조선)반도에서 결국 '유도.편입 정책'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데서 생길 수 있는 경계심이다.

② 북(조선)은 현재 조건에서 조-미 평화조약 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평화조약 체결이 조-미 관계정상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주

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③ 북(조선)은 조-미 평화체제(체계)가 이루어져야 남북 당국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북(조선)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상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체계'(new peace mechanism)를 구상하고 있다.

⑤ 북(조선)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대신, 현 정전체제를 '새로운 평화체계'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해리슨의 말을 따르면, 김영남 외교부장은 주한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북(조선) 관리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동북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재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sup>48)</sup>

⑥ '새로운 평화체계'란 먼저 '조-미 상호안보협약체'를 구성하고, 이 협약체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는 이중구조의 평화 보장안을 뜻한다.

해리슨이 전한 북(조선)의 구상에 관련하여 먼저 주한미군 용인론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주한미군 주둔용인론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1992년 1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김용순 비서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며, 연방제 통일 뒤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고,<sup>49)</sup> 같은 해 6월 23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 회의'에서 리삼로 대표(당시 조-일수교 교섭대표)는 통일 전에 남북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통일 뒤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50)</sup> 지금까지 북(조선)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하여 밝힌 견해와 주장을 살펴보면, 1954년에 나온 주한미군의 즉각적, 전면적 철수안<sup>51)</sup>→ 1987년에 나온 평화와 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이 단계적,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안<sup>52)</sup>→ 1990년에 나온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안<sup>53)</sup>→ 1992년에 나온 통일 전까지 주한미군 주둔 용인하고,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안으로 차츰 변화되어왔음

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북(조선)이 주한미군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군축문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군축을 위한 선행조건, 곧 군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로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여기서 북(조선)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군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sup>54)</sup> 만일 북(조선)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면, 주한미군 주둔 용인론을 내놓은 북(조선)은 앞으로 조-미 협상을 통해서 아무리 요구해도 미국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되지도 않을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조-미 사이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조선)이 생각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이외의, 다른 방식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란 과연 무엇일까?

북(조선)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자면, 그것은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 드리운 미국의 현존 지배질서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며, '개입.확장 전략' 및 '유도.편입 정책'을 일정한 범위에서(전면적으로가 아니라) 용인하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북(조선)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란 무엇이며, 미국의 개입.확장 전략을 인정하는 대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문제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북(조선)은 만일 미국이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게 되면, 통일을 향하여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연방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게 되면, 다른 문제들도 그 바탕 위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 시기 북(조선)은 정전상태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대미예속성의 근거라고 규정하면서, 먼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자주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자주성을 확립해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55)</sup> 정전상태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은 곧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며, 미국이 '두코리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았다. 정전상태의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이란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과 양립할 수 없는 상극의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56)

다음으로 새로운 평화체제(체제) 수립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북(조선)은 여기서 정전체제와 정전협정을 서로 구별하고 있으며, 평화체제와 평화협정(또는 평화조약)을 서로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북(조선)이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 된 정전협정, 그리고 그 사문화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인 군사정전위원회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빠진 현재 상황에서 정전체제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군사정전위원회를 가동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군과 북(조선)의 정치.군사적 대치균형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면 무조건 평화협정(조약)부터 체결해야 한다고 인식해오던 고정관념을 일단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조선)의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론에도 주한미군 철수론과 마찬가지로 단계적, 점진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한(조선)반도의 평화는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서 고위급 정치.군사협상을 시작하고 이를 '상호안보협약체'로 정착시켜가는 점진적, 단계적 과정에서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안보협약체'란 평화협정(조약) 체결로 가는 복잡하고 긴 협상과정에서 거쳐가는 '중간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57)

북(조선)은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조-미협상의 내용과 성격을 단순히 '정전체제 대체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정치.군사.경제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안보문제'로 확대하여 '상호안보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평화체제가 한(조선)반도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체제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조선)과 미국 사이에 '상호안보대화'가 시작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문제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바꿀 수 밖에 없으며, 북(조선)은 그렇게 성격과 임무가 달라진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 주둔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 냉전시기 동안 북(조선)을 '망나니 정권'(rogue regime)이라고 비난.공격하면서 북(조선)을 적성국으로 규정하여 적대의사를 표명해왔던 '봉쇄-대결 전략'을 명시적으로 포기해야 하고, 북(조선)을 겨냥한 공격의지를 내포한 모든 군사훈련, 군비증강을 포기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탈냉전적 전략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

국의 안보질서를 탈냉전시기의 전략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은 '개입-확장 전략'에 기초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본성격을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여, 그 조약을 한(조선)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일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포괄적인 안보'(comprehensive security)58)를 추구하는 법적 장치의 일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며, 주한미군은 역내의 포괄적인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무력으로 그 존재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존 안보질서의 성격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공상적 생각은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다른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유추해석을 통해 찾을 도리 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대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은 지난 냉전시기 소련방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독미군을 그대로 존치시킨 채 러시아와 안보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시사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이 미국-러시아 관계개선은 곧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해체와, 주독미군의 철수라는 등식으로 성립된다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기존 안보질서의 형식을 존치시킨 채 개입.확장전략 및 유도.편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미 관계개선은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해체라는 등식으로 성립된다는 고정관념을 수정하게 하는 역사적 경험이 된다.

또한 탈냉전 시기 유럽에서 냉전시기의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 regime)인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대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협력안보체제(cooperative security regime)59)인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창설한 것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60) 즉 북(조선)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설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조-미 안보대화'는 기존의 한-미 안보질서를 대체하거나 그 안보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며, 기존 안보질서의 틀을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새로운 안보대화체제를 창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북(조선)이 구상하고 있는 '조-미안보대화'와 '유럽안보협력회의' 사이에서 구성원리상 커다란 차이를 지적한다면 전자가 쌍무적 협력안보대화고, 후자는 다자간 협력안보대화라는 것이다.

북(조선)이 '조-미 안보대화' 창설구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재래식 군비의 감축이다. 평화보장체제는 군비감축이 없이는 수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창설되고 나서 비로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 사이에서 병력수준에 관한 협정인 '유럽재래식 무력협정'(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1A agreement)이 체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북(조선)이 조-미 안보대화를 통하여 군비감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북(조선)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조선)반도의 군축문제를 평화보장체제 수립론과 통일국가 수립론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논리적 뒷받침을 받는다.<sup>61)</sup> 북(조선)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비롯한 남북의 군축문제는 조국통일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조선)반도에서 군축문제는 미국의 기존 이익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sup>62)</sup> 앞으로 미국은 북(조선)이 제안한 조-미 안보대화 구상이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구실로 이 구상을 외면하는 대신, 자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를 창설하고, 그 안에 북(조선), 남(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를 창설하는 문제는 한(조선)반도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와 남북의 이해관계가 매우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간단하게 성립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를 창설하기 위해서라도 조-미 관계개선을 안보대화라는 더 본격적인 차원으로 높여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미 관계개선이 일정에 오른 지금, 미국이 기존의 '한-미연례안보회의'를 존치시킨채, 한-미 중장기 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회의체를 창설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조-미 관계개선이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미 사이에서 중장기 안보협력대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체를 창설하려는 움직임과 조-미 관계개선 사이에는 과연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 미국은 조-미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그 개선범위 안에 조-미 안보대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체의 창설을 수용하는 중장기적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닐까? 미국이 북(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편입 정책'의 기초 위에서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정책과 조-미 안보대화 구상은 접촉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조-미 관계개선은 비록 느린 속도로 진척되었지만, 결국 그 종착점이 두 나라 사이의 국교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연락사무소

개설에서 국교수립까지 이어지는 긴 과정에서 조-미 안보대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북(조선)은 조-미 관계개선이 남-북-미 3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3자 대화는 일원화된 3자 대화가 아니라 조-미 대화와 남북 대화라는 이원화된 3자 대화라는 형태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제 미국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기초한 조-미 안보대화 구상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이라는 이원구도로 변형된 3자 회담 개최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고심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9월 28일자 보도를 통해 주한미대사관의 공사 카트만이 "북(조선)의 제의가 표면상 잘못된 것이 없고,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정전체제가 사실상 마비된 조건에서 미국이 북(조선)과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하는 지금, 문제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북(조선)의 구상과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비록 비공식 견해지만)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북(조선)과 미국이 '핵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제안을 서로 일정정도 수용하고 타협했듯이, 한(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도 상대방의 전략과 정책을 서로 일정정도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타결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정치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북(조선)이 내놓은 두 가지 전제조건

해리슨이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조선)은 미국이 두 가지 전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주한유엔군사령부의 깃발을 내리는 문제다. 주한미군은 명색만 남은 유엔군의 낡은 깃발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북(조선)을 상대할 때마다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나왔다.<sup>63)</sup> 정전협정과 군사정전위원회가 완전히 파탄상태에 빠진 오늘 이 협정과 이 위원회의 '형식'('내용'이 아니라)을 그나마 유지해오고 있었던 일방이었던 주한유엔군사령부도 마지막 존립근거를 잃어버린 것이다.<sup>64)</sup> 그런데도 미국이 여전히 유엔군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까닭은 직접적인 조-미 군사협상 제안을 피하고 기존의 정전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직접적인 조-미 군사협상 제안을 피하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한(조선)반도에서 '개입.확장 전략' 및 '유도.편입 정책'을 수행할 만한 주객관적 조건<sup>65)</sup>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할 조건을 성숙시키기까지는 냉전시대의 '봉쇄.대결전략'의 핵심인 현 정전체제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군의 깃발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추구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한(조선)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건, 즉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미국이 한(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과정과 통일실현과정(미국으로서는 '통합'실현과정이라고 인식할 것이다.)에 깊이 개입하여 미국의 이익추구판도를 전 반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한(조선)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의 성격과 방향을 이끌어가고, 궁극적으로는 북(조선)에 자본주의 체제를 확장.이식하여 북(조선)을 자본주의 질서 안으로 유도.편입하는 것을 뜻한다.<sup>66)</sup> 미국은 이러한 개입과 확장의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의 자주적 국가역량을 약화.무력화시켜 의존.종속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만일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직접적인 조-미 군사협상 요구에 응한다면 그것은 북(조선)의 정치.외교적 위상을 강화시키고 남(한국)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불행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직접적인 조-미 군사협상을 피하고 유엔군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한, 새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조-미 상호안보대화는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북(조선)의 당면과제는 주한미군에게서 유엔군 모자를 벗겨내고 직접협상의 구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이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하는 문제다. 만일 북(조선)이 조-미 상호안보대화를 통하여 남(한국)의 자원, 시장, 기술에 대한 미국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시장, 자본, 기술이 북(조선)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리하여 그 대가로 성격과 임무를 변경된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면, 미국도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연방제 통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미 상호안보대화의 추진 이후 변화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연방제 통일은 한(조선)반도에서 미국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통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수립론과 주한미군 주둔용인론에 관한 북(조선)의 견해는 1995년 8월 11일에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미국이 정전체계를 평화보장체계로 바꾸는 문제를 담당해야 한다. (중략) 미국이 이미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해 공약한대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넘어가려면 낡은 정전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고 밝히면서도, 조-미 평화조약 체결론과 주한미군 철수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67)

마지막으로 남북 사이의 평화체계 수립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북(조선)은 남북의 평화체계 수립에 관한 협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이상 이미 완료되었고, 이행문제만 남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북(조선)은 이번에 새로운 정책구상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조-미 관계개선 속도를 늦추고 있는 명분이 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거부해왔던 종래의 방침을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북(조선)의 새로운 정책구상에 대하여 셀릭 해리슨은 조-미 상호군사위원회와 남북공동군사위원회의 창설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이나 남(한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점과 남북 양쪽의 전방 배치군 철수나 감축을 통해 군사분계선의 긴장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신뢰구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조선) 관계자들에게 지적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조선)은 동시적 이원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두 문제가 상호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남북 전방배치군의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감축문제는 논의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68)

북(조선)은 남북협상 보다 조-미협상을 선행하려고 시도하면서,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남(한국)은 이러한 전략을 '통미봉남' 또는 '친미배남'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셀릭 해리슨의 발언을 통해서 전해진 북(조선)의 정책구상은 '선 조-미협상, 후 남북협상'으로서 '선미후남'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조선)이 남(한국)을 배제하거나 남북협상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또는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남(한국)의 보수적 견해는 북(조선)이 종전처럼 평화협정 체결을 그대로 주장하든, 아니면 새로운 평화체계 수립을 주장하든 간에 그것은 한결같이 남(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하여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면서, 남북협상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조선)전쟁의 당사자가 남북

이며, 한(조선)반도에서 대치한 당사자가 남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69)

이제 북(조선)과 미국은 조-미 관계개선이 남(한국)의 기존안보체제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한국)에게 납득시켜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 < 주 석 >

1) 미국이 북(조선)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로 지목하고 있으면서도, 북(조선)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기본적인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통계자료는 미국의 '시카고 외교관계협의회'(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주최하고, 미국의 Gallup Organization이 1994년 10월에 조사한 것으로, 보고서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에 발표된 것이다. ('시카고 외교관계협의회' 의장 John E. Rielly의 기고문, "The Public Mood at Mid-Decade", Foreign Policy [Spring 1995], 77쪽. 참고로 미국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나라들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이라크(24%), 이란(28%), 북코리아(34%), 쿠바(38%), 하이티(44%), 중국(46%), 아르헨티나(47%), 남코리아, 인도, 타이완, 사우디 아라비아(모두 48%) 등으로 나타난다. (같은 논문, 85쪽) 한(조선)반도의 분단이 유지되는 한, 그리하여 미국의 남(한국)에 대한 예측상태가 지속되고,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봉쇄-대결이 지속되는 한 남(한국)이나 북(조선) 모두 미국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는 불행한 현실은 아마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새로운 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미국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이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직면했던 상황을 상기시켜 주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냉전에서) 승리했으므로 뒤로 물러서느냐, 아니면 미국의 영도력을 행사하여 미국과 전세계 인민들을 위하여 평화와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하느냐 하는 두 길이 미국 앞에 놓여있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이 장기적 안목에서 영도와 개입을 추구하는 것은 현시기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세계적 판도에서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ren Christopher, "America's Leadership, America's Opportunity", Foreign Policy (Spring, 1995), 6쪽.

3)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시아 정책담당 선임연구원 해리 하딩(Harry Harding)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가 펴내는 외교전문지 'Foreign Policy' 1994년 가을호에 발표한 논문 "벼랑에 선 아시아 외교"(Asia Policy to the Brink)에서 미국의 전략수립가들은 '확장전략'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1994년 봄 윈스턴 로드가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에게 제출한 비망록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쌍무적 외교관계가 침식되면서 불안정이 생기고 있다고 경고하고, 클린턴 행정부는 장기목표가 아니라 단기목표에 집착하려는 경향,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미국의 국익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 위에서 수립하려고 하지 않고, 특정기관이나 부서의 좁은 관점에서 수립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음을 전하고 있다. 로드의 말을 빌리면, 클린턴 행정부가 냉전시대의 '봉쇄-대결 전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대

결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골목깡패가 아니면 유모 꼴이 되고 있으며,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더욱 반발을 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4) 제임스 베이커가 1991년 말 발표한 논문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1, Winter 1991-92, 1-18쪽. 이 글은 탈냉전 시대의 '개입-확장 전략'을 논의한 출발점이었다. 이 글에서 그는 경제통합 구조,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공헌, 역내 군사체계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점을 논의한 바있다.

5) 윈스턴 로드는 1993년 3월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새로운 태평양 공동체 창설'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과 8월 31일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정책'이라는 주제의 특별 브리핑에서 '개입-확장 전략'을 더욱 다듬었다고 볼 수 있다. "Lord Lays Out 10 Goals for U.S. Policy in Asia", USIS Official Text (1993년 4월 5일), 10쪽.

6) 뉴욕 타임스 1993년 9월 22일자 보도. 레이크의 이 연설전문은 1993년 9월 27일자로 나온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4에 실려 있다.

7) 이 연설 발췌문은 뉴욕 타임스지 1994년 9월 23일자에 실려 있다.

8) 조셉 나이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소장, 국가정보협의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의장으로 있다가, 국방부 국제안보담당관(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가 되었다. 원래 그는 지역통합론자로서 이름을 떨친 바있다. 일찌기 그는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을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정치통합(political integration)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있다. Joseph S. Nye, Peace in Parts: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통합'이라는 개념을 개입.확장 전략으로 발전시켜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전략수립자들은 한(조선)반도의 통일문제를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확장 전략과 통합개념은 서로 친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미국이 통일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는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1990년과 1992년의 국방부 보고서는 90년대 말까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탈냉전 시대의 추세에 맞게 군사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으나, 올해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진배치한 현존 10만명 병력수준을 앞으로 장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적었다. 조셉 나이는 이 보고서에 관련한 핵심내용을 'Foreign Affairs' 1995년 7.8월호에 "심층개입의 상황"(The Case for Deep Engagement)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발표한 바있다. 그는 1995년 1월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한 회견에서 이러한 개입전략구상을 언론에 미리 흘린 바있다. (중앙일보, 조선일보 1995년 1월 25일자)

10) 미 국방부가 1990년 4월 19일 '년-위너 수정안'을 따라 의회에 제출.공개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지탱해줄 미군병력수준의 재조정을 1990년 기간중 모색할 것이다.

① 제1단계 (1990년 10월-1993년 12월) - 유엔사령부는 현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한미공군 2천명,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을 감축한다. 미 지상군 무력을 강화하고, 남(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한다.

② 제2단계 (1994년-1995년) - 제1단계 후반에 이르면 미국은 북(조선)의 위협을 다시 조사.평가하여 제2단계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다. 미 제2사단 개편을 이 시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③ 제3단계 (1996년-2000년) - 모든 단계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남(한국)군은 주도적인 일을 맡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미 군사력은 줄어들 것이다." (중앙일보 1990년 4월 21일자)

11) 조선일보 1995년 1월 25일자

12) 미국이 자신의 안보공약의지를 과시하고 신속대응군(RPF)의 기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을 자국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역에 최대한으로 근접하게 전진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전진배치 무력은 정치적 상징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미 군사전략의 핵심이라고 한 언론의 분석(중앙일보 1995년 8월 5일자)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13) 그의 논문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102쪽. 워런 크리스토퍼는 미국의 영도관 확실한 무력위협을 동원하여 지구력있는 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Warren Christopher, "America's Leadership, America's Opportunity", Foreign Policy, (Spring 1995), 8쪽.

14) 같은 논문, 95쪽. 한 편 미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한 외교전문지에 기고한 자신의 글에서 미국의 사회적 이익과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망나니 국가'들을 이라크, 이란, 리비아로 지목하였고, 북(조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Warren Christopher, 위의 논문, 7쪽. 여기서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대북인식이 미묘한 편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15) 중앙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16) Warren Christopher, 위의 논문, 8쪽.

17) 같은 논문, 12쪽.

18)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연구소(소장 제임스 프리즈스텝)이 1995년 9월 11일 발간한 '95 미국과 아시아의 통계 핸드북'에서 지적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아시아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으며, 여기에 관련된 직업은 82만8천개가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13일자) 미국의 지배계급은 자국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들 가운데 90% 이상의 응답을 보인 나라들 러시아(98%), 멕시코(98%), 일본(96%), 중국(95%), 사우디 아라비아(94%), 캐나다(93%), 독일(91%), 남코리아(90%) 순으로 뽑았다. ('시카고 외교관계협의회' 의장 John E. Rielly의 기고문, "The Public Mood at Mid-Decade", Foreign Policy [Spring 1995], 76-93쪽) 미국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조선)반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가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 미국의 아시아 전략수립에 직결되어 있는 5가지 요인을 이렇게 풀이하는 전문가도 있다. ①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전진배치한 무력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점차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점, ②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정을 주도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이 지역에 현존하는 쌍무 안보협정들이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과 상호의존성의 증대와는 걸맞지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점, ③ 미-일 상호안보관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대국화를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④ 러시아, 중국, 베트남,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조선)을 더욱 확고한 역내절서 속으로 편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⑤ 지역안보비용을 절감하고, 일본과 같은 역내 강대국들이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고, 미국의 전진배치 무력에 대한 주둔국의 지원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은 지역안보협력체 건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Joseph A. Camilleri, "The Asia-Pacific in the Post-Hegemonic World",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estview Press, 1995) 206쪽.

20) 한국일보 1995년 9월 5일자

21) 탈냉전시기에 들어섰는데도 한(조선)반도를 지향하는 미국의 무력증강배치 및 군사훈련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언론에 밝혀진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다.

① 미국은 1개 중여단분의 최신 전투장비를 4-5척의 대형 수송선에 실어, 최근 폼에 배치했는데, 이 무기들은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과 미국 본토에서 수송될 미 육군, 해병으로 구성될 이른바 '신속기동군'을 짧은 시간 동안에 무장시킬 무기들이다. 이 무기들은 원래 싱가포르 해안에 배치하려고 한 것인데 싱가포르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폼에 두게 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미 이러한 전진배치 무기들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2개 중여단 규모를 배치해두었다. 미국은 냉전시기에 중유럽지역에 전진배치했던 5개 중여단분 무기의 일부를 철수하면서, 그 가운데 3개 중여단분 무기를 우리 땅과 폼에 배치하였다. 미 국방부는 1993년 새 국방계획(BUR)을 수립하고 신속기동군을 창설했는데, 이 전략군은 한(조선)반도를 지향하여 전개할 전술무력단위다. (중앙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② 미국이 최첨단 장비를 갖춘 작전기지들, 이를테면 전역항공통제센터(Theater Air Control Center), 중앙방공관제센터(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코리아 전투작전정보지원센터(Korea Combat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해놓았다.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태평양사령부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남(한국)과 북태평양지역을 작전범위로 삼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 4개 공군력들 가운데 하나인데, 주일 미 공군보다 규모가 크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12일자) 주한미군은 '탱고'(TANGO: Tactical Airforce-Navy-Ground Forces Operation), '서울', '오스카'로 이름을 붙인 3개의 핵심 지휘통제소를 핵공격과 생화학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설한 극비지하벙커 안에 구축해놓고, 미군의 최첨단 정보 시설인 '스킵'(SCIP)를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3일자)

㉓ 미국은 1995년 10월 13부터 11월 17일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95 독수리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 2만여명은 물론, 미국 본토와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소속 7함대 병력 1만여명과 서울 이남지역에 있는 남(한국)군 모든 병력이 참가했으며, 미 제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 호'가 이끄는 핵추진 잠수함, 구축함, 상륙함 등 함정 9척도 동원되었다. 이 기간 동안 상륙훈련, 대공훈련, 대함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특수전 훈련, 기뢰 제거훈련을 벌였다. (중앙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22)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6일자.

23) 워싱턴 포스트지 1995년 9월 20일자 보도를 보면,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미국을 비롯한 28개 선진국들이 북(조선), 이란, 리비아 세 나라를 잠재적국으로 규정하고, 이 나라들에 대해 무기 및 첨단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 for Export to Communist Area)의 새로운 후속체제를 창설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1일자)

24)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25일자. 남(한국)의 군관계자들은 미국이 남(한국)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남(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 수립능력이 없으며, 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8일자)

25) 조선일보 1995년 9월 25일자. 주한미군은 지난 1993년 게리 렉이 사령관직에 취임한 뒤로 '신속전개 억제전략'(Flexible Deterrence Option: 무력충돌의 위기가 생기면 미 항공모함 기동부대, 전투비행단, 해병원정군을 24-72시간 안에 긴급배치하면서 외교적, 경제적 조치도 병행수행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했으며,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포착되면 페트리엇 미사일, 에이타킴스(ATACMS) 신형 지대지 미사일, 각종 탄약 등을 긴급배치한다는 전략개념을 '전투력 증강'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속전개 억제전략'은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다소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전투력 증강'은 군사적인 조치라고 한다. 미국은 1994년 봄 이른바 '핵문제'로 한(조선)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전투력 증강' 전략의 초기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무렵 미국은 '전투력 증강' 전략을 남(한국)에 알리지 않고 수행하였으며, 한-미 연합사에서도 남(한국)군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핵문제'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한다. 한-미 연합군은 1995년 8월 '95 올지포커스 렌즈' 훈련에서 '전투력 증강' 전략을 시험했으며, '신속전개 억제전략' 보다 많은 전폭기 등 막강한 무력을 한(조선)반도에 배치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미연합사령관 리스카시가 남(한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



에서 북(조선)으로부터 야간기습을 받았을 경우 남(한국)군은 서울을 잃은 뒤 오산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쟁 게임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지난 1992년 초였으며, 이 제시를 통하여 남(한국)군에게 지상군 위주로 전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제시와 촉구에 대해서는 남(한국)군 내부에서도 위게임(War Game) 결과판 컴퓨터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 달라지는 데, 미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 일부러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조작,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8일자) 군사평론가 지만원 씨의 견해를 따르면, 북(조선)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한국)의 안보문제를 '담보'로 잡고 있는 미국은 남(한국)에 대해 무슨 요구든지 할 수 있으며, 만일 남(한국)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북(조선)의 위협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여 위기감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가 "(미국은) 다른 독립국가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요구까지도 (한국에 대해서) 서슴없이 강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겪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세계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일면 정당한 비판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95년 9월 28일자)

26) 한국일보 1995년 9월 20일자

27) 조선일보 1995년 10월 6일자.

28) 세계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고 무력증강이 촉진될 수록 활황을 맞게 되는 미 군수산업자본은 각 지역선거구별로 자기들의 산업체를 거미줄처럼 분산배치해놓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군수산업자본이 탈냉전시기의 군비감축으로부터 타격을 받고 문을 닫게 될 때는 그 지역선거구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므로, 지역선거구의 표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은 당연히 군수산업자본의 요구와 주장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군수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의 생산체계를 민수산업자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9) 1995년 9월 15일 '제일본 조선인총연맹 제17차 전체대회'는 지난 1955년에 제정한 강령 내용 가운데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우리는 조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미제국주의자를 괴수로 하는 일체의 외래침략자들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조항을 "우리는 전민족 대단결의 기치 아래 70만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의 민족적 유대를 강화, 발전시키며 온갖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연방제 방식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한다"고 한 강령수정(중앙일보 1995년 9월 18일자 보도)은 미국에 대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조치여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30) 이로써 남북이 모두 미국에게 '핵주권'을 양보하게 되었다. 남(한국)은 1970년대 말 박정희 정권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였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되고, 결국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였으며, 1980년 이른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미국 한테 자기들의 정권보장을 받아내기 위한 대가로 핵개발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1995년 10월 6일자)

미국은 적어도 한(조선)반도의 '핵문제'에 관한 한 조셉 나이가 말한 이른바 '영도전략'을 관철하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1) 지난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유엔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 약화라는 치명상을 입었던 미국은 유엔에 가입한 비동맹국가들과 사회주의 진영이 한(조선)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문제를 자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되자, 당시 미 국무장관 키신저는 서둘러 코리아의 분단을 합법화, 영구화하는 '두 코리아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두 코리아 정책'은 한(조선)반도를 겨냥한 '봉쇄.대결 전략'의 한 전개단위였다.

32) 이 문제에 관련하여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장 김영진 교수가 "남한정부는 북한측이 제의하고 있는 미-북한 장성급 군사접촉을 반대하고 있는데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나 돌발사건 발생에 대비한 해결책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불가침선언 조항이 들어있고 여기에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된다면 남한이 미-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사문화된 군사정전위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요."라고 한 지적(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은 정당하다.

33) 한국일보 1995년 7월 28일자

34) '한-미 중장기 안보대화'는 1995년 11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족될 예정이며, 두 나라의 국방부 차관보급 접촉인 '고위 정책협의회'와 국.과장급 접촉인 '실무위원회'로 이루어지는 회의체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1995년 9월 5일자,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3일자)

35) 남(한국)의 외무부장관 공로명은 유엔을 방문하고 있던 1995년 10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마치 북한과 유엔참전국 16개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관련국 간 평화협정' 체결촉구 결의안을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5일자) 다른 신문에서는 북(조선)이 이 회의에서 채택될 최중선언문에 조-미 평화조약 체결을 지지한다는 항목을 넣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조선일보 1995년 10월 5일자),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조-미 평화조약 체결지지가 아니라 한국(조선)전쟁에 참전했던 관련국들이 평화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을 선언형식으로 발표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36) 유엔을 방문하고 있던 남(한국)의 외무부장관 공로명이 1995년 9월 25일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조-미 평화협정체결에 대해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기도라고 비판했다고 밝힌 것(동아일보 1995년 9월 27일자)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1995년 7월 말 부르나이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안보포럼(AFR)에서 있었던 한-중 외무장관 회담과 9월 25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7월 말의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남(한국)은 이른바 '2+2 회담안'을 중국측에 제시하면서 지지를 얻어보려고 하였는데, 중국은 조-미 평화조

약 체결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정전협정은 한(조선)반도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다는 견해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남(한국)의 '2+2 회담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5년 9월 27일자) 남(한국)이 1995년 8월 15일 '2+2 회담안'을 발표하여 대북공세를 펴려던 당초의 계획이 무산된 것은 중국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지난 6월 당정 고위대표단을 북(조선)에 파견하여, 북(조선)의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있다. (한국일보 1995년 9월 27일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중국이 북(조선)의 조-미 평화조약 체결안과 남(한국)의 '2+2 회담안'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지만, 북(조선)이 새로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없다. 중국이 조-미 평화조약 체결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까닭을 중국이 한(조선)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직접개입의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북(조선)-대만의 관계개선 추세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이해관계의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조선)이 이미 조-미 평화조약 체결안을 포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 수립안'을 제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남(한국)의 보수인론들이 조-미 평화조약 체결안에 대해 중국이 반대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을 중국이 북(조선)의 의사를 반대하고 남(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는 것은 착각으로 보인다.

37) 이러한 공식요청 사실이 남(한국)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5년 10월 4일이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5일자) 이와 때를 맞춰 워싱턴 타임스지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존 킬(공화당. 아리조나주), 미 국방부 소식통이 전하는 미 국방정보국(DIA)과 탄도미사일 방어기구의 분석,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제3국의 정보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조선)이 2000년쯤 핵탄두 또는 화학-생물탄두가 장착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미사일로 미 중서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보도한 바있다. (세계일보 1995년 9월 30일자) 10월 2일에 나온 남(한국) 국방부의 '1995-1996년 국방백서'도 북(조선)의 군사력 증강이 한(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 아시아문제연구소가 펴낸 '미국-아시아 통계편람'을 보면 1994년도 군사비는 남(한국)이 1백40억달러(지난해 대비 16.1% 증가)고, 북(조선)은 겨우 23억달러(지난해 대비 5% 증가)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5년 9월 14일자) 또한 남(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천9백50달러이고, 북(조선)은 9백23달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95년 9월 15일자) 군사비를 무려 6배나 많이 지출하고, 경제력이 무려 10배가 많은 남(한국)이 '북(조선)의 위협'을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38) 1995년 9월 28일 외무장관 공로명은 유엔회원국 기초연설이 이어지고 있는 제50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당국이 개혁과 사회개방을 통한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현 정전협정 체제 유지문제, 남북대화 재개문

제를 거론했다.

39) 남(한국)과 북(조선)은 각각 두 차례씩 답변권을 얻어서 치열한 '인권공방'을 벌였다.

40) 안승운 목사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당국이 안 목사의 입북사건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5년 9월 19일자) 남(한국)은 1979년 노르웨이에서 입북했던 고상문 씨(당시 수도여고 지리교사)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문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대북대결정책의 정치적 이용물로 삼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고 씨는 북(조선)에서 정작하여 지리학 연구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돌아갈 의사도 없다고 남(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서면통보했으며, 이로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끝내게 되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4년 7월말 김일성 주석의 급서 직후에 남(한국)이 대북비난공세를 퍼붓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로서, 당시 '국제사면위원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북(조선)의 강제수용소에 55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그 명단 가운데 고 씨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등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발표한 것인데, 이번에 이 사건이 유엔 차원에서 마무리되어 결과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하여 추진하려 했던 남(한국)의 대북 공세는 '전과'를 올리지 못한 실패작으로 보인다. 언론은 이번 사건종결을 보면, 결국 "국제사면위가 공개한 북한 정치범 수용실태도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41) 이것은 외무장관 공로명이 1995년 10월 3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세계일보 1995년 10월 5일자)

42) 이번에 북(조선)이 제시한 안은 당국을 대표하는 직위가 아니라, '큰물피해 복구대책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전금철'이라는 비당국 직위로 수재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지난번 쌀지원 합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이라는 비당국 지위를 사용한 바있다.

43) 한(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문제를 남북 당국자 간의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남(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김영진 교수가 "제 생각에는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봅니다.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정부공식성명을 통해 남북한 불가침을 지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고 한 지적(동아일보 1995년 9월 23일자)은 정당하다.

44)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1일자

45) 이것은 전금철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고문이 남(한국) 기자의 물음에 답변한 내용이다.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3일자)

46) 안기부장 권영해가 1995년 10월 11일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대미유화정책을 계속하면서 종래 미-일을 상정해 왔던 주적대상을 남한으로 설정, 모든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간 당국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같다고 분석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12일자)

47) 뉴욕 타임스, 1995년 8월 31일자. 이 신문의 기사는 일본에 있는 한 동포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일 비서가 한(조선)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로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 비서를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두 지도자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그 동포의 개인적 견해를 실은 바있다.

48)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4일자. 미국은 자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집중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국의 전진배치 무력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다.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지 1995년 9월 11일자의 특집보도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와이 사령부에 아.태안보전략센터를 창설하고, 연례적인 대규모 합동훈련 대신 이 지역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더 늘일 계획이라는 사실과 10월 7일 미 해군, 해병대가 '아시아 원탁회의'를 열고 오는 2015년까지의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하고 이 지역에 주둔하는 해군과 해병 군사력의 수정배치의 필요성을 논의한다고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1995년 9월 13일자) 미국의 랜드 연구소(Rand Cooperation)가 도출한 6가지 아태지역의 군사태세 시나리오에 관한 보도도 눈길을 끄는데,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략연구'에 발표한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글에 정리되어 있다. (세계일보 1995년 9월 9일자) '태세 A: 냉전기 전력'은 7개 함모전투단, 3개 보병사단, 2개 해병원정군, 5개 전술공군비행단으로 유지하는 전력이고, '태세 B: 기반전력'은 태세 A보다 15% 감축된 상태로 해외주둔 지상군 및 지상배치 공군력은 감축하지만 주요전투조직은 중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력이고, '태세 C: 해외기지 감축전력'은 태세 B와 비슷한 전력규모를 유지하되, 남(한국)과 일본의 배치전력을 썸, 하와이, 알래스카로 철수하고, 다른 지역철수병력은 미 본토에 배치하는 상태다. '태세 D: 태평양 스윙전략'은 태세 B와 비슷하나 중동지역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태평양전력이 부분적으로 동원되는 시나리오로서, 해.공군 및 해병대는 미 본토와 일본에서 신속히 중동지역으로 배치되지만 주한미군 전력은 태세B와 비슷하게 남는다. '태세 E: 국방예산 감축전력'은 태세 A보다 35% 감축된 상태로, 해외주둔 기지에는 해.공군 전력이 배치되고, 남(한국)에는 전술공군비행단과 1개 보병여단만 남게 된다. '태세 F: 국방예산절감 스윙전략'은 태세 A보다 35% 감축되고, 태세 D와 태세 E가 혼합된 형태로서, 남(한국)과 일본의 2개 전술공군비행단, 남(한국)의 1개 보병여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력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라고 한다. 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공통된 점은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조선)반도에서는 해.공군 무력은 물론이고 지상군 무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부인 동북아시아, 그리고 그 중심부의 핵인 한(조선)반도에 전진배치한 무력에 대한 미국의 완강한 태도와 고정불변의 전략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초로 하여 대미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9) 김용순-아놀드 센터 회담에서 북(조선)의 주한미군 주둔용인론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2년 7월 5일자 요미우리신문에 실려 외부에 알려진 바있다.

50) 요미우리신문 1992년 6월 24일자 보도. Li Sam Ro,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Peace and Security in Asia", Amos A. Jordan ed.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ignificant Issues Series, Volume XV, Number 7, 1993), 29-34 쪽에 실렸다. 리삼로 대표는 그 뒤에도 동아일보와 한 단독회견에서 "주한미군은 통일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지만 통일 이후에는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여 주한미군 장기주둔 용인론을 재확인한 바있다. (동아일보 1992년 11월 9일자) 통일 전까지 주둔을 용인한다는 발언과 통일 뒤에도 주둔을 용인한다는 발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51) 1954년 정전협정의 규정을 따라 제네바에서 열린 코리아전쟁 전후처리 회담에서 북(조선)은 남북에서 외국군을 철수할 것과 1년 안에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명 아래로 줄이자는 군축안을 내놓았으며, 1995년 8월 15일 김일성 주석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군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한미군 철수안은 1980년대 말까지 모두 236회나 제기되었다.

52) 1987년 7월 23일 발표한 '단계적 무력감축방안'이다. 이 제안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동안 3단계에 걸쳐 남북 쌍방 병력을 10만명으로 줄이고, 1992년부터 10만명 이하로 유지할 것, 주한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핵무기와 다른 무력들도 철수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철수안은 1988년의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그리고 1990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에서 더욱 명료화·구체화되었다.

53) 지미 카터가 1994년 6월 18일 CNN 방송과 한 회견내용에는 그가 6월 11-18일 방북했을 때 김일성 주석과 회견한 내용 가운데서 김 주석이 카터를 통해 미국에 제안한 군축안이 나온다. 카터는 "(김일성 주석의 말은) 남북이 각각 군대를 10만으로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과거의 요구를 계속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남북군대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주한미군도 감축하면 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보다 먼저 재미언론인 문명자 씨와 한 회견에서 김일성 주석은 "단계적으로 무력을 축소한 뒤 조선반도의 자주적 방위가 가능해지면 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이지 즉각 미군이 나가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년 5월 20일자) 이러한 단계적 철수안은 북(조선)이 1987년 7월 23일 발표한 '단계적 무력감축방안'에서 출발하여 1990년에 나온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54) 문정인, "남북한 신뢰구축-그 가능성과 한계",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편 (1992년), 203쪽.

55) 1989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의 세미나 "코리아의 긴장완화"에서 김정수 부소장(당시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현재 유엔북[조선]대표부 부대사)을

대표로 하는 북(조선) 대표단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한(조선)반도의 자주권 문제로 인식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의 상호군비감축을 동시병행하자는 제안을 제확인한 바있다. Dialogue with North Korea, Report of a Seminar on "Tension Reduction in Kore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89) 9쪽.

56) 이 문제에 관하여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중략) 미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고 말한 바있다. (김일성 저작집 제35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년), 344-345쪽.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 한(조선)반도의 주객관적인 정세는 근본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된 정세에 맞게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한 북(조선)의 시각도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문정인 교수는 "주한미군이라는 제3자적 개입변수가 완전히 해소된 뒤에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간 신뢰구축, 군비통제, 그리고 군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문, "남북한 신뢰구축-그 가능성과 한계",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213쪽) 그렇지만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개입변수'(사실은 개입상수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를 해소하는 방안을 꼭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만 국한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타력성 있는 논리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57) 북(조선)의 평화체제 수립론에 점진적, 단계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95년 1월이다.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 대표단의 방북성과를 설명하는 특별기고문에서 이 연구소 소장인 김영진 교수는 "북한의 외교 및 통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인사들은 현 시점에서 평화협정이 불가능할 경우 '중간적인 조치'를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 중간조치라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미국이나 한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해볼 과제다."고 적었다. (동아일보 1995년 1월 26일자)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 연구소는 10여년 전부터 북(조선) 외교부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와 학술교류를 추진해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정세변화로 중단되었던 학술교류를 그때에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 대표단에는 제임스 릴리(전 주한미국대사), 돈 오버도퍼(전 워싱턴 포스트지 도쿄지국장), 토켈 페터슨(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부장) 등 '실력자'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58)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가,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제기한 개념으로서 비군사적 차원의 안보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여기서는 조-미 관계개선과 함께 한(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개념이 군사 일변도에서 포괄적 차원으로

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을 썼다.

59) 냉전시기 미국의 '집단안보' 전략이 저지(deterrence)와 봉쇄(containment)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면, 탈냉전시기의 '협력안보'라는 새로운 전략은 이 두 개념에 재보장(reassurance)라는 새로운 개념을 더하여야 하며, 재보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협력안보'라는 개념은 원래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에반스(Gareth Evans)가 제기한 것인데, (그의 책 Cooperating for Peace: The Global Agenda in the 1990s and Beyond, [Allen & Unwin: Sydney, 1993] 결국 '개입.확장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전략수립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최근 벌인 집중적인 논의는 Janne. E. Nolan, 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4)를 참조할 것.

60)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90년 11월 파리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고, 신뢰.안보구축조치(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에 관한 비엔나 협정, 공공협약(Open Skies Treaty)에 관한 협정, 군사교리 세미나 개최, 신뢰.안보구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통신망 설치, 안보협력포럼(Forum for Security Cooperation) 개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협력안보체제 창설문제에 던져주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는 Trevor Findlay, "The European Cooperative Security Regime: New Lessons for the Asia-Pacific",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estview Press, 1995), 224-232쪽을 참조할 것.

61) 북(조선)이 통일문제와 군축문제를 하나의 인식틀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조국통일 5대 강령' 제시(1973년 6월 23일), 최고인민회의의 결의문(1984년 1월), 정부성명(1986년 6월), '단계별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1987년 7월 23일),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1988년 11월 7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발표(1990년 5월 31일) 등 지난 30년 동안 238회에 이르는 신뢰구축 및 군축관련 제안들이 한결같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 가운데 '평화통일의 원칙'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밝혀진다. 이에 반해 남(한국)의 군비통제관련 제안은 60여회에 이르고 있다. (이석호,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김창수, "한국의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통일원 편,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참조할 것.)

62) 셸릭 해리슨은 한 일간지의 기고문을 통해서 한(조선)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보장체제로 바꾸는 문제와 군축문제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현재 이 문제에 관해 미국정부 및 학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가 말하는 조심스런 논의는 유럽지역의 재래식 전력 감축에 관한 미-소협정에 협상대표로 참가했고 지금은 핵무기 해체 및 폐기를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는 미 대통령 특사 제임스 굿비와 전에 남(한국)에서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군 대령 윌리엄 드레넌이 미 국방대학에서 펴내는 'Strategic Forum' 1995년 5월호에서 내놓은 제안을 말한다. 그 제안은 비공격적인 방어에 기초한 남북 재래식 전력의 재편과 주한미군 병력 및 장비의 병행 감



측인데, 이러한 군비감축과정을 감독하고 점검하기 위해 수립될 새로운 구조는 현 정전협정체제를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셀릭 헤리슨의 기고문 '정전협정과 평화보장' 한겨레신문 1995년 7월 24일자) 제임스 굿비의 한(조선)반도 군축문제에 관해서는 James E. Goodby, "Opera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Implications for Security Negotiations in Korea", The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1 (Summer 1990). 111-126쪽.

63) 1975년 11월 18일 제240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코리아에 관한 유엔 결의안'(The U.N. Resolution on Korea)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유엔총회는 (중략) 1972년 7월 4일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정신을 따라서, 그리고 그 공동성명을 환영한 1973년 11월 28일의 유엔 제2080차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따라서 코리아의 남과 북이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항구적 평화는 현존하는 정전상태가 코리아에 존속되는 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코리아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고 코리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내정문제에 대한 외부간섭을 끝내기 위한, 그리고 그 지역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1.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코리아에 유엔의 깃발을 달고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2.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코리아에 유엔의 깃발을 달고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한 상황에서 코리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코리아의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64)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65) 여기서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주관적 조건이란 적어도 한(조선)반도를 지향한 미국의 '개입과 확장의 전략'에 대한 정치.외교.군사.경제부문의 전략수행력을 높은 수준에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며, 객관적 조건이란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국가역량이 약화.무력화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66) 1995년 1월 20일 미 국무부가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일부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 언론은 "이번 완화조치는 미국이 지난 십여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들에 대해 사용했던 접근 방식, 즉 통상개방과 정보 및 이념의 유입증가라는 접근방식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의 이념이 유입되는 것은 곧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에 대한 지지도를 높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행정부 관리의 미국의 의도는 (북[조선]에 대한) 정보교환과 개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 1995년 1월 21일자) 이것은 미국이 '개입-확장 전략'을 한(조선)반도에서 '유도-편입 정책'을 통하여 수행할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다.

67) 로동신문 1995년 8월 12일자에 비망록 전문이 실려 있다. 이 내용은 1995년 10월 11일 유엔총

회 기조연설에 나온 북(조선) 외교부 최수현 부부장의 연설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그는 연방제 평화통일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정전협정 폐기 및 미국과의 평화체제 수립, 유엔사령부 해체, 비무장 지대 콘크리트 장벽 철거를 주장했다. (조선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여기서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미 평화조약 체결이 아니라, 조-미 평화체제 수립을 주장했다는 점을 유의 하여 보아야 한다. 그는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남북대화-긴장완화-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68) 한겨레신문 1995년 10월 4일자. 남북의 군사력 감축문제는 남북 당국자 협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국제사회의 다국적 군축협상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95년 9월 21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남북이 다자간 군축기구인 유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 함께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조선일보 1995년 9월 23일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69)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진현의 기고문 '북의 새 평화안'(조선일보 1995년 10월 5일자)에서 나온 주장이다.

# 미 국무성 '96 세계인권보고서

- 한국관련 부분 -

1996. 3.

이 자료는 미 국무부가 '96년 3월 6일 발표한 '95 인권보고서 내용 중 한국 인권 관련 부분 전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CONTENTS -**

**RESPECT FOR HUMAN RIGHTS**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Section 3 Respect for Political Rights: The Right of Citizens  
to Change Their Government*

*Section 4 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ction 5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ex, Religion,  
Disability, Language, or Social Status*

*Section 6 Worker Rights*

##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is governed by a directly elected president and a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selected by both direct and proportional voting. The judiciary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executive branch. The Government continued to reform the political system in 1995, holding fair local elections in June. As a result, control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major cities such as Seoul and in several provinces passed into the hands of opposition parties.

Under the law, responsibility for maintaining internal security lies with the National Security Planning Agency (NSP),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There is an independent intelligence oversight committee. Legislation passed in 1993 restricts the NSP from interfering in domestic politics; it has investigative authority only in cases involving terrorism, espionage, and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There continued to be credible reports of some NSP infringements of suspects' rights during the interrogation process.

As a result of strong growth in 1994, Korea has one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as measured by gross national product. Continued strong growth in 1995 was expected to push annual per capita income past \$10,000. In the near term,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remain robust due to high exports, investment in plant and equipment, and, increasingly, consumer spending. However, labor shortages, an inefficient agricultural sector, and inadequate infrastructure continue to constrain the performance of an otherwise extremely successful, market-based economy.

The Government generally respects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however, problems remain in some areas. The use or threatened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continued to infringe upon citizens' civil liberties, including the right to free expression. There was no progress toward reform of the NSL, although in some instances court decisions limited the NSL's application in order to protect free speech. Labor practices in Korea remained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There continued to be credible reports that in some instances police deprived suspects of timely access to counsel and subjected detainees to threats, physical abuse, and sleep deprivation during interrogation. Women continued to face legal and societal discriminati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physical abuse remained serious problems. There is still no effective legal redress for these problems. However, judges continued to demonstrate their independence by blocking the prosecution of dissidents under the NSL,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new guidelines requiring that suspects be tol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ir right to remain silent and their right to a lawyer.

The Government continued its surveillance of some released political prisoners and required some of them to make regular reports to the police under the Social Surveillance Law. In August the Government issued amnesty and pardons to a number of political dissidents, including some prisoners who had been incarcerated since the Korean War.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authorize independent investigations of the cases of prisoners who had received sentences on charges believed to have been fabricated by previous governments. Some of these prisoners had reportedly been subjected to torture to extract confessions and received trials that did not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 **RESPECT FOR HUMAN RIGHTS**

###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 a. Political and Other Extrajudicial Killing

There were no reports of political or other extrajudicial killings. In an effort to punish past abuses, prosecutors investigated former President Chun Doo Hwan and other former high-ranking military officials for their alleged role in the army's suppression of demonstrations in Kwangju in 1980, which resulted in the death of several hundred civilians. At year's end, prosecutors wer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criminal charges should be filed against Chun and other officials for ordering the use of excessive force.

#### b. Disappearance

There were no reports of politically motivated disappearances.

#### c.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Government has ordered authoriti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investigate allegations of abuse while in custody. Nonetheless, prosecutors continued to place much emphasis on extracting confessions from suspects. In spite of government directives discouraging sleep deprivation as an interrogation technique, there continued to be credible reports of police use of sleep deprivation and verbal or physical abuse. There also continued to be reports that police denied suspects timely access to an attorney. For example, Professor Park Chang-Lee was reported to have been deprived of sleep, beaten,

and threatened after his April arrest under the NSL. In March courts acquitted three persons on murder charges because of evidence that police had in 1994 tortured the defendants in order to extract confession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investigate and consider cases in which former detainees argued that they deserved redress for torture suffered in the past. However, the Government failed to provide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dress, such as an independent body to investigate complaints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It remained relatively rare for officials accused of abuse or harassment of suspects to be prosecuted. In February the Government ratified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rture, which will allow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br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ison conditions are Spartan. Prison diets are adequate, but the prisons offer little protection against cold in winter and heat in the summer. Consequently, some prisoners claim that the conditions have damaged their health. There have been a few claims that prison guards have used excessive force or have needlessly manacled prisoners. Prisoner access to reading materials has improv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and they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receive television and radio broadcasts. There is little independent monitoring of prison conditions, although representatives of human rights groups may visit certain prisoners at the discretion of the prison warden.

#### d.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Korean law is vague with respect to detention, and prosecutors have wide latitude to interpret the law. The NSL defines espionage in broad terms and permits the authorities to detain and arrest persons who commit acts viewed as supportive of North Korea and therefore dangerous to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arrested not only persons spying on behalf of North Korea but also those who praised North Korea, its former leader Kim Il Sung, or the DPRK's "self-reliance" ("juche") political philosophy. (See also the North Korea report.) The U. N. Human Rights Committee termed the NSL "a major obstacle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Government arrested over 200 dissidents under the NSL during the year.

Article 7 of the NSL permits the imprisonment for up to 7 years of anyone who "with the knowledge that he might endanger the existence or security of the State or the basic order of free democracy, praised, or encouraged, or propagandized for, or sided with the activities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The legal standard for knowing that one might endanger the existence of the State is vague. Consequently, a number of citizens have been arrested for what appeared to be the peaceful expression of opposing views. For example, in March Professor Kim Mu Yong, a 34-year-old history lecturer, was arrested under Article 7. He was accused of supporting North Korea through conclusions he had reached and published about the Korean guerrilla movement of the 1940's and 1950's.

The Government's rationale for keeping the NSL is the claim that North Korea is actively trying to subver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and that special circumstances call for limiting some forms of expression to block the greater danger to freedom and democracy posed by totalitarianism. The effect is to sometimes relieve the Government of the burden of proof in a court of law that any particular speech or action does, in fact, threaten the nation's security. Citizens continued to be arrested for unauthorized travel to North Korea (see Section 2.d.).

The Criminal Code requires warrants to be issued by judges in cases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except if the person is apprehended while committing a criminal act, or if a

judge is not available and the authorities believe that the suspect may destroy evidence or escape capture if not quickly arrested. In such emergency cases, judges must issue arrest warrants within 48 hours after apprehension, or, if a court is not located in the same county, in 72 hours. Police may detain suspects who voluntarily present themselves for questioning for up to 6 hours but must notify the suspects' families. The police generally respected these legal requirements.

Upon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the security services normally must release suspects after 30 days unless an indictment is issued. Hence, detainees are a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the total prison population.

The Constitution specifically provides for the right to representation by an attorney, but attorneys are not allowed to be present during a police interrogation. The Government began in 1993 to permit suspects to consult with "duty lawyers" during breaks in the interrogation. The Justice Ministry also in 1995 issued guidelines requiring police to inform suspects at the time of arrest about their right to be represented by a lawyer. In at least one case, prosecutors refused to issue an arrest warrant because the police had not read the suspect his rights when subdued by police. Despite these regulations, there continued to be complaints that access to a lawyer was restricted. There is a functioning bail system, but human rights lawyers say that bail is generally not granted in cases involving serious offenses, and, even when the offense is relatively minor, bail often will not be granted unless the victim of the alleged crime agrees to the bail request.

Exile is not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control.

#### e. Denial of Fair Public Trial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President appoints the Chief Justice and most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judges do not receive life appointments, in recent years the judiciary has shown increasing independence, and that trend continued in 1995. Judges cannot be fired or transferred for political reasons. Judicial officials generally considered committed to the independence and integrity of the judiciary were appointed to important positions in 1995.

The judicial system has local courts presided over by judges who render verdicts in all cases. There is no trial by jury. Defendants can appeal a verdict to a district appeals court and to the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hallenges can be take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began operation in 1988, continued to expand its role of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defendants a number of rights in criminal trials, including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right of appeal, presumption of innocence, protection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freedom from retroactive laws and double jeopardy. When a person is physically detained, the initial trial must be completed within 6 months of arrest. These rights are generally observed. Trials are open to the public, but the judge may restrict attendance if he believes spectators may seek to disrupt the proceedings.

In a notable instance of judicial independence, in April a Seoul appellate court acquitted Lee Chang Bok, a leader of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Reunification of Korea, after he had been sentenced to 10 months' imprisonment by a lower court. In reversing the conviction, the appeals court ruled that the simple coincidence of a citizen's political views with North Korean policy cannot be used as grounds for prosecution. The NSL conviction of Park Chi Kwon, an editor of the monthly magazine "Man and Workplace," was also reversed by the courts; Park had been convicted after publishing a book by a North Korean author. The appeals court ruled in May that the

NSL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make publishing the novel a criminal offense.

Judges generally allow considerable scope for examination of witnesses by both the prosecution and defense. The same courts try cases involving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cases. Although convictions are rarely overturned, appeals often result in reduced sentences. Death sentences are automatically appealed.

The courts continued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past abuse of political dissidents. Human rights groups believe that many of these dissidents were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during the 1970's and 1980's on trumped up charges of spying for North Korea.

Furthermore, they reportedly had been held incommunicado for up to 60 days after their arrest, subjected to extreme forms of torture, forced to make "confessions," and convicted after trials that did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 fair trial. The Government granted amnesty to a number of these prisoners in 1995, including long-term prisoners Kim Son Myong and Ahn Hak Sop. Human rights groups allege that other political prisoners have been denied early parole because they refused to renounce real or alleged Communist beliefs. Some political prisoners who have been released are subjected to police surveillance and are required to report their activities regularly to the polic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because it is not clear whether particular persons were arrested for merely exercising the right of free association or were detained for committing or planning acts of violence or espionage. Despite an extensive amnesty announced by President Kim Young Sam in August, some human rights monitors estimate the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in Korea to be as high as 400. However, these monitors' definition of political prisoner

generally includes all persons imprisoned for acts that were politically motivated, without distinction as to whether the acts themselves included violence or other criminal behavior. The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and detainees as defin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appears to be under 200.

f. Arbitrary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In general the Government honors the integrity of the home and family. In the past, the security services conducted varying degrees of surveillance, including telephone monitoring, of political dissidents. The Antiwiretap Law and the law to reform the NSP were designed to curb government surveillance of civilians, and appear largely to have succeeded. The Antiwiretap Law lays out broad conditions under which the monitoring of telephone calls, mail, and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are legal. It requires government officials to secure a judge's permission before placing wiretaps, or,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soon after placing them, and it provides for jail terms for those who violate this law. Some human rights groups argue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illegal wiretapping is still taking place, and assert that the lack of an independent body to investigate whether police have employed illegal wiretaps hinders the effectiveness of the Antiwiretap Law.

Citizens are not allowed to listen to radio broadcasts from North Korea in their homes or read books published in North Korea if the Government determines that they are doing so for the purpose of helping North Korea. Student groups make plausible claims that government informants are posted around university campuses. Persons with backgrounds as political or labor activists may find it difficult to obtain some forms of employment or advance in such fields as government, broadcast media, and education.

##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Including:*

### a. Freedom of Speech and Press

While most political discourse is unrestricted, under the NSL the Government limits the expression of ideas that the Government considers Communist or pro-North Korean. Broad interpretations of the NSL allow for restrictions on the peaceful expression of dissenting views. Although most radio and television stations are state supported, the stations maintain a large degree of editorial independence in their news coverage.

While the Government has abandoned direct control over the news media, it continues to exercise considerable indirect influence. Journalists and editors practice some degree of self-censorship, avoiding or softening criticism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advance their careers. Moreover, while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campaign curtailed politicians' payments of money to reporters, it did not eliminate these payments. Nevertheless, press criticism of the Government is widespread, and the Government did not use heavy-handed or repressive measures to influence media reporting.

The Government or other complainants sometimes use libel laws to win judgments against publications for articles that are unflattering. In 1994 Kim Hyon Chol, President Kim's son, sued the Hangyoreh Sinmun newspaper after being the subject of an unflattering article. At the end of 1995, the case had not yet been adjudicated.

Prosecutors continued to indict dissidents under the NSL for producing, selling, or distributing pro-North Korean or pro-Communist materials. Court precedents allow Koreans to possess these kinds of publications for purely academic use,

profit, or curiosity, but not with the intent of subverting the State. Because prosecutors are allowed wide latitude in determining motives for possessing or publishing such material, people continued to be arrested for such NSL violations. For example, Moon Ki Seh and Lee Kyung Ryol were arrested in March

for producing and distributing a pamphlet at the funeral of a former political prisoner who had fought for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 pamphlet was alleged to have praised the political prisoner's past exploits. Both of the dissidents involved in this case received suspended sentence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allow, within its guidelines, an increase in media coverage of North Korea. South Korean television networks continued to broadcast edited versions of North Korean television programs. The media extensively reported on U.S. and South Korean talk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he Government censorship board, which screens movies for sexual or violent content before release, has followed more liberal guidelines in recent years.

Beginning in 1994, authorities began investigating eight Kyongsang University professors whose textbook on Korean society was deemed by prosecutors to endorse North Korean ideology.

This investigation triggered extensive criticism in the scholarly community as constituting a serious infringement on academic freedom. Prosecutors attempted to arrest several of the professors under the NSL but were denied warrants for insufficient evidence. At year's end, it did not appear that further action would be taken against the professors, but they remained under formal investigation.

#### b.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rohibits assemblies considered likely to undermine public order. It forbids outside interference in peaceful assemblies approved by the authorities. The law requires that the police be notified in advance of demonstrations of all types, including political rallies. Police must notify organizers if they consider the event impermissible under this law. Associations, except those whose aim is deemed by the Government to be the overthrow of the State, operate freely. The Government did not generally interfere with rallies in 1995.

c. Freedom of Relig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religion, and the Government respects this provision in practice.

d.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Country, Foreign Travel, Emigration, and Repatriation

For most citizens, there is universal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country. However, police may restrict the movements of some former prisoners. Foreign travel is generally unrestricted, but travel to North Korea is allowed only with government approval. One of the conditions is that the trip must not have a political purpose--that is, to praise North Korea or criticiz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avelers to North Korea who do not receive government permission are likely to be arrested upon their return to South Korea. For example, authorities arrested Park Yong Kil, the 75-year-old widow of Reverend Mun Ik Hwan, in July. Like her deceased husband, Park visited Pyongyang without government authorization, and reportedly met with high-level North Korean officials. In addition, Ahn Ho Sang and Kim Son Jok, leaders of the Korean folk religion Daejonggyo, were arrested when they returned from an unauthorized 5-day trip to North Korea in April.



In the past, the Government forbade some Koreans convicted of politically related crimes from returning to Korea, and some citizens would face sanctions upon return. In 1994 the NSP lifted the entry ban on composer Yun I Sang, a dissident who has been living in Berlin for a number of years. However, the Government required that he refrain from any political activity while in Korea, and that he give an accounting of his political activities overseas before authorities would allow him into the country. Yun refused these conditions and decided against returning to South Korea.

The Government cooperates with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ther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assisting refugees, and there were no reports of forced expulsions of those having a valid claim to refugee status.

### *Section 3 Respect for Political Rights: The Right of Citizens to Change Their Government*

Citizens have the right to elect their own government. The Constitution, as amended in 1987, provides for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for a mixed system of direct and proportional election of legislators to the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serves a single 5-year term and may not be reelected. The National Assembly's term is 4 years. All citizens aged 20 or above have the right to vote, and elections are held by secret ballot.

Kim Young Sam, who took office in February 1992, is Korea's first chief executive in nearly 30 years not to have a career military background. In June the Government held local elections deemed to be free and fair. The elections also resulted in increased representation for opposition parties.

Because of cultural traditions and discrimination, women occupy few important positions in government. In the current and past governments, the only woman in the Cabinet has been the second minister for political affairs, whose portfolio is Women's Affairs. In addition, a woman was elected mayor of Kwangmyong City, and a female legislator chairs one of the special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 *Section 4 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veral nongovernmental private organizations are active in promoting human rights, and they operate without government restriction. Chief among these groups are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arangbang,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Mingahyup," an association of the families of political prisoners. These groups publish report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and make their views known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Government and ruling party officials generally have been willing to mee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 *Section 5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ex, Religion, Disability, Language, or Social Status*

The Constitution and equal opportunity statutes forbid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sex, religion, disability, or social status, and the Government respects these provisions. However, traditional attitudes sometimes limit opportunities for women and the disabled. Ethnic minorities face both legal and societal discriminatio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s a problem and some women's rights groups maintain that it has worsened in the past few years. The law does not provide adequate protection to victims of abuse.

Rape remained a serious problem, with 6,173 cases reported in 1994 (the last year for which statistics are available). Many incidents of rape go unreported because of the stigma associated with being a rape victim. The activities of a number of women's groups have increas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porting and prosecuting rapes as well as offenses such as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However, in July a Seoul appellate court overturned a landmark 1994 sexual harassment decision by ruling that evidence that a professor coerced or damaged the alleged victim was insufficient. A female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been awarded approximately \$40,000 in damages for being sexually harassed. According to women's rights groups, most cases involving sexual harassment or rape go unprosecuted, and perpetrators, if convicted, often receive very lenient sentences.

Spousal abuse is a continuing problem and has reportedly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amended Family Law, which went into effect in 1991, permits women to head a household, recognizes a wife's right to a portion of the couple's property, and allows a woman to maintain greater contact with her children after a divorce. Although the revisions helped abused women, divorce remains a social taboo, and there is little government or private assistance for divorced women. These factors, plus the fact that divorced women have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have difficulty remarrying, lead some women to stay in abusive situations. The Government has created some shelters for battered women and increased the number of child care facilities, which gives women in abusive environments more options, but women's rights groups say they fall far short of dealing effectively with the problem.

As a result of conservative Confucian tradition, women are subordinate to men socially, economically, and legally. There has been some limited and gradual change in social mores and attitudes affecting women; for example, women have full access to education, and a few have become government officials and hold elected office. Despite the passag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legislation in 1988, few women work as company executives or leading officials in government.

### Children

Children's human rights and welfare have not been prominent social policy issu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demonstrated a commitment to promote children's health and welfare. The Government continued to devote an increasing share of the overall budget to social expenditures, which includes those related to the welfare of children.

Child abuse has not been studied extensively, and statistics on such abuse are limited.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have generally numbered less than 50 per year in recent years. Although experts believe that a number of cases go unreported, instances of child abuse still appear to be relatively rare. According to official statistics, the number of runaway children each year has dropped from about 7,000 in the past to approximately 1,000.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uns a children's counseling center, which investigates reports of abuse, counsels families, and cares for runaway children.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law against child abuse,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prosecute and punish child abusers unless they commit a crime punishable under a separate law.

The traditional preference for male children continues, although it is less pronounced among younger generations. Although the law bans such practices, fetal sex testing and abortion of

female fetuses are still believed to occur frequently; hard evidence to support this conclusion is unavailable.

### People With Disabilities

Community and social organizations have begun to consider the rights and treatment of people with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ies. Although there were public displays of concern for the disabled, such as the Special Olympics and television documentaries, public facilities for their everyday care and use remained inadequate. The Government did not discriminate officially against the disabled who were capable of attending regular schools, but societal pressures and cultural biases influenced parents to send disabled children to special schools.

After a dramatic suicide in the spring by a wheelchair-bound street vendor who claimed that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unlicensed vendors deprived him of the chance to make a living, the Government stepped up efforts to help the disabled.

President Kim announced in late April that his Government would expand job training programs, medical benefits, and welfare facilities for disabled citizens. Since 1991 Korean firms with over 300 employees have been required by law either to hire disabled workers or pay a fee. After human rights groups publicized a recent survey indicating that 89 percent of such companies either paid the fee or evaded the law, the Labor Ministry announced it would increase the subsidies provided to companies that hire the disabled. In 1995 new public buildings were required to includ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uch as a ramp access to entrances, a wheelchair lift, and parking spaces for the disabled; these requirements were generally met.

### National/Racial/Ethnic Minor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 racially homogeneous country with no ethnic minorities of significant size. Citizenship in Korea is

based on blood, not location of birth, and Koreans must show as proof their family genealogy. Ethnic Chinese born and resident in Korea cannot obtain citizenship or become public servants, and sometimes have difficulty being hired by some major corporations. Due to legal as well as societal discrimination, many ethnic Chinese once resident in Korea have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since the 1970's. Amerasian children are usually able to obtain Korean citizenship, and no leg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exists. Informal discrimination, however, is prevalent and makes it difficult for Amerasians to succeed in academia, business, or government.

### *Section 6 Worker Rights*

#### a. The Right of Association

The Constitution gives workers, with the exception of public service employees and teachers, the right to free association. There are some blue-collar public sector unions in railroads, telecommunications, the postal service, and the national medical center. The Trade Union Law specifies that only one union is permitted at each place of work and that all unions are required to notify the authorities when formed or dissolved. About 10 percent of Korean workers are members of a union.

In the past, the Government did not formally recognize labor federations which were not affiliated with the country's two legally recognized labor groupings--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and the Independent Korean Federation of Clerical and Financial Workers. In the past several years, however, the Labor Ministry officially recognized some independent white-collar federations representing hospital workers, journalists, and office workers at construction firms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The courts ruled in 1992 that affiliation to the FKTU is not required in order to be registered as a legal labor federation. In practice, labor

federations not formally recognized by the Labor Ministry existed and functioned without government interference, unless authorities considered their involvement in labor disputes disruptive.

The Government, however, did arrest unionists it viewed as acting as third parties in instigating labor disputes. By year's end, 30 workers had been arrested for violating the labor laws according to Ministry of Labor statistics, and 21 of them remained in prison. This statistic does not include workers who were charged with violating other laws during a labor disturbance. In the spring, for example, authorities issued arrest warrants for about 20 unionists at the Korean telephone company, Korea Telecom, who police said had committed provocations such as disrupting board of directors meetings and assaulting company managers.

The Government continued the ban on labor union activities by public and private schoolteachers, arguing that the teachers' union (Chonkyojo) is essentially a political organization with radical aims. The Government continued its program of reinstating those among the 1,500 fired teachers who agreed to resign from Chonkyojo.

No minimum number of members is required to form a union. Election and labor laws forbid unions from donating money to political parties or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However, trade unionists have circumvented the ban by temporarily resigning from their union posts and running for office on the ticket of a political party or as an independent.

Strikes are prohibited in government agencies, state-run enterprises, and defense industries. By law, unions in enterprises determined to be of "public interest," including public transportation, utilities, public health, bank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an be ordered to submit to

government-ordered arbitration instead of striking.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requires unions to notify the Labor Ministry of their intention to strike, and it mandates a 10-day "cooling-off period" before a strike may legally begin. (This period is 15 days in public interest sectors.) Labor laws prohibit retribution against workers who have conducted a legal strike and allow workers to file complaints of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employers.

Kwon Yong Kil, Chairman of the dissident Korean Council of Trade Unions (KCTU), was arrested in November for labor law violations stemming from his involvement in disputes such as the 1994 railway workers' strike. The authorities charged that he had fomented illegal strikes in the public sector. Human rights groups argued that Kwon was arrested for attempting to exercise the legitimate functions of a leader of a trade union federation in consulting with unions involved in a dispute. His case had not been adjudicated at year's end, and Kwon remained in custody.

The FKTU is affiliated with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Most of the FKTU's 20 constituent federations maintain affiliations with international trade secretariats, as does the KTUC Metalworkers Council. In response to freedom of association complaints lodged by Korean dissident and independent unions,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issued a report in 1994 recommending that the Government bring Korean labor law and policy up to international worker rights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association.

The Government under President Kim continued to cultivate a more neutral stance in labor disputes. Nevertheless, police were dispatched to the Hyundai automobile factory in Ulsan in May when workers there who opposed the policies of their union president staged a wildcat work stoppage that paralyzed the



plant. Also, authorities served arrest warrants and took into custody Korea Telecom unionists for disrupting board of directors meetings and committing other provocations. There were no reports of employer-hired squads assaulting workers.

Since July 1991, South Korea has been suspended from the U.S.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OPIC) insurance programs because of the Government's infringements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other worker rights.

#### b.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The Constitution and the Trade Union Law provide for the right of workers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his law also empowers workers to file complaints of unfair labor practices against employers who interfere with union organizing or practice discrimination against unionists. Employers found guilty of unfair practices can be required to reinstate workers who were fired for union activities.

Extensive collective bargaining is practiced, even with unions that are not legally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The labor laws do not extend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to government employees, including employees of state or public-run enterprises, defense industries, and public and private schoolteachers.

Korea has no independent system of labor courts. The central and local labor commissions form a semiautonomous agency of the Labor Ministry that adjudicates dispute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Law. Each labor commission is composed of equal representation from labor (represented by the FKTU), management, and "the public interest." Local labor commissions are empowered to decide on remedial measures in cases involving unfair labor practices and to mediate and, in some situations, arbitrate labor disputes. Arbitration can be

made compulsory in sectors of the economy (e.g., utilities and transportation) that are deemed essential to public welfare.

The Trade Union Law and Labor Dispute Adjustment Law forbid third-party intervention in union and labor disputes by federations not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uch as the dissident federation, Minjunochong), but they allow recognized labor federations, principally the FKTU, its affiliates, and some independent white-collar federations, to assist member unions. The ban on third-party intervention also exempts mediation efforts by lawyers, experts, and others who have the consent of both labor and management, a policy much criticized by non-FKTU labor leaders.

Workers in Korea's two export processing zones (EPZ'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s public interest enterprises--whose rights to organize were formally restricted, have gradually been given all the rights enjoyed by workers in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 c. Prohib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no person shall be punished, placed under preventive restrictions, or subjected to involuntary labor, except as provided by law and through lawful procedures. Forced or compulsory labor is not condoned by the Government and is not practiced.

#### d. Minimum Age for Employment of Children

The Labor Standards Law prohibits the employment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3 without a special employment certificate from the Labor Ministry. Because there is compulsory education until the age of 13, few special employment certificates are issued for full-time employment. Some children are allowed to hold part-time jobs such as selling newspapers. In order to

gain employment, children under age 18 must have written approval from their parents or guardians. Employers may require minors to work only a limited number of overtime hours and are prohibited from employing them at night without special permission from the Labor Ministry. Child labor laws and regulations are clear and usually enforced when violations are found, but the Government employs too few inspectors to carry out regular inspections.

#### e.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minimum wage law in 1988. The minimum wage level, which applies to all firms with 10 or more employees, is reviewed annually. As of September, the minimum wage was raised to approximately \$1.65 (1,275 won) per hour. Due to Korea's tight labor market, however, most firms pay wages well above the minimum in order to attract and retain workers.

The FKTU and other unions continue to claim that the current minimum wage does not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of urban workers. In fact, a worker earning the minimum wage would have some difficulty in providing a decent standard of liv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despite the fringe benefits such as transportation expenses with which Korean companies normally supplement salaries. (The Government notes that the money an average Korean blue-collar worker takes home in overtime and bonuses significantly raises the total compensation packag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5.2 percent of the population lived below the poverty level in 1992.

Foreign workers, most of whom come from China, the Philippines, Bangladesh, Nepal, and Pakistan, often face difficult working conditions.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ameliorate the problems of illegal workers by initiating a program whereby 50,000 foreign workers were allowed to enter Korea legally to work at established wages and with legal safeguards. In March

the Government also announced its intention to ratify ILO conventions concerning foreign workers. Illegal foreign workers, who probably number more than 60,000, still suffer significant hardships at the workplace. It is difficult for illegal workers to seek relief for loss of pay or unsatisfactory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because they are always under the threat of being deported. The Government has, however, established counseling centers that will hear complaints from illegal foreign workers facing deportation about such issues as overdue wages and industrial accidents.

Amendments to the Labor Standards Law passed in 1989 brought the maximum regular workweek down to 44 hours, with provision for overtime to be compensated at a higher wage, and the law also provides for a 24-hour rest period each week. However, labor groups claim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adequately enforce these laws, especially with regard to small companies.

The Government sets health and safety standards, but South Korea suffers from unusually high accident rates. The accident rate continues to decline gradually, due to public and union pressure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However, the number of deaths resulting from work-related accidents remains very high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e Labor Ministry has improved enforcement of safety standards, but still lacks enough inspectors to enforce the laws full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does not guarantee job security for workers who remove themselves from dangerous work environments.

# 미 국무성 '95 세계인권보고서

## - 북한관련 부분 -

1996. 3.

이 자료는 미 국무부가 '96년 3월 6일 발표한 '95 인권보고서 내용 중 북한 인권 관련 부분 전문을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CONTENTS -**

**RESPECT FOR HUMAN RIGHTS**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Section 3 Respect for Political Rights: The Right of Citizens to Change Their Government*

*Section 4 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Section 5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ex, Religion, Disability, Language, or Social Status*

*Section 6 Worker Right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Kim Il Sung ruled the DPRK from its inception until his death in July 1994. Although he has not assumed his father's positions of President of the DPRK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WP, Kim Jong Il's leadership appears to be unchallenged. Both Kim Il Sung and Kim Jong Il continue to be the objects of intense personality cults.

The Korean People's Armed Forces is the primary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external security. It is assisted by a sizable military reserve force and several quasi-military forces, including the Worker-Peasant Red Guards and the People's Security Force. These organizations assist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cadre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 maintaining internal securit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committe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The State directs all significant economic activity, and only government-supervised labor unions are permitted. According to some estimates, the economy has contracted in each of the last 5 years, largely due to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the elimination of Soviet and Chinese concessional trade and aid. Economic development continues to be hindered by distribution bottlenecks,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lack of access to international credit stemming from the DPRK's default on much

of its foreign debt, and by the diversion of a quarter of the gross national product to military expenditures. In 1995 North Korea admitted publicly for the first time that it suffered from food shortages, which were exacerbated by widespread flooding in the summer; it sought international food aid as well as other forms of assistance. Food, clothing, and energy are ration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Government continues to deny its citizens human rights. Citizens do not have the right peacefully to change their government. There continued to be reports of extrajudicial killings and disappearances. Torture and harsh pris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does not allow representatives of foreign governments, journalists, or other invited visitors the freedom of movement that would enable them to assess human rights conditions there. This report is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over a period of time extending from well before 1995, as updated where possible by information drawn from recent interviews, reports, and documentation. While limited in detail, this information is nonetheless indicative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day.

conditions are common. Citizens are detained arbitrarily and many are held as political prisoner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fair trials are not implemented in practice. The North Korean regime subjects its citizens to rigid controls. The state leadership perceives most international norms of human rights, especially individual rights, as illegitimate and alien social artifacts subversive to the goals of the State and party. The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ll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The Government prohibits freedom of the press and association; all forms of cultural and media activities are under the tight control of the party. Little outside information reaches the public except that approved and disseminat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restricts freedom of religion, citizens' movements, and workers' rights.

## **RESPECT FOR HUMAN RIGHTS**

###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 a. Political and Other Extrajudicial Killing

According to defector sources, the regime continued summary executions of political prisoners, political opponents, repatriated defectors, and others (reportedly including military officers suspected of plotting against Kim Jong Il). The Criminal Law makes the death penalty mandatory for activities "in collusion with imperialists" aimed at "suppressing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Some prisoners are sentenced to death for such ill-defined "crimes" as "ideological divergence," "opposing socialism," and other "counterrevolutionary crimes."

#### b. Disappearance

There is no reliable information on disappearances within North Korea. However, there continued to be numerous reports of DPRK

involvement in the kidnaping abroad of South Koreans, Japanese, and other foreign nationals. The Japanese press estimates that as many as 20 Japanese may have been kidnaped and remain in detention in North Korea. In addition, several cases of kidnaping, hostage taking, and other acts of violence allegedly intended to intimidat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Russia were reported. The DPRK denies these reports.

Amnesty International (AI) reports issued in 1993, 1994, and 1995 detail a number of cases, including that of Japanese citizen Shibata Kozo and his wife Shin Sung Suk, who left Japan in 1960 and resettled in North Korea. Mr. Shibata was reportedly arrested in 1962, allegedly after encouraging a demonstration against the poor treatment given to former residents of Japan. In 1993 AI claimed that he was still in custody, and in poor health. AI stated that there had been no word about his wife and three children since 1965. In June AI was informed by North Korean officials that Shibata Kozo, his wife, children, and grandchildren died in a train accident in early 1990, a few weeks after his release from nearly 30 years in prison. However, AI has received other reports that Shibata Kozo was still in custody at the time of the alleged accident.

In another case cited by AI in 1993, North Korean officials informed AI in April that Japanese citizen Cho Ho Pyong, his ethnic Japanese wife Koike Hideko, and their three young children were killed in 1972, while attempting to flee the countr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ld AI that Cho had escaped from a detention center, where he was being held for spying, killing a guard.

In September AI reported that three ethnic Korean residents of Beijing, China (ages 16, 18, and 20) had been taken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in apparent retaliation for criticism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made by their father, a former prisoner in North Korea, on Japanese television and in the Japanese pr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eny this allegation, claiming that the three brothers had been deported to North Korea for breaking Chinese law, and that they are now living with relatives. AI has been unable to confirm this account and at year's end was still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the three brothers.

Numerous reports indicate that ordinary citizens are not allowed to mix with foreign nationals, and AI reported that a number of North Koreans who maintained friendships with foreigners have disappeared. In at least one case, AI reported that a citizen who had disappeared was executed for maintaining a friendship with a Russian National.

c.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le there is no information on recent practices, credible reports indicate that prisoners are routinely tortured or ill-treated, and that many prisoners have died from torture, disease, starvation, or exposure. There are increasing reports of executions reportedly carried out at public meetings and rallie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 children. Executions have also been carried out before assembled inmates at places of deten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and defector sources, whole families, including children, are imprisoned together. "Reeducation through labor" is common punishment, consisting of forced labor (logging, tending crops)

under harsh conditions. A small number of people who claim to have escaped from North Korean detention camps report that starvation and executions are common. In one prison, clothing was reportedly issued only once in a 3-year period. Former inmates have produced photographs of an inmate wearing specially designed leg irons which permit walking but make running impossible. AI reports the existence of "punishment cells," too low to permit standing upright and too small for lying down flat, where prisoners are kept for up to several weeks for breaking prison rules. Recent visitors to North Korea report observing prisoners being marched in leg irons, metal collars, and shackles. With the exception of one model "rehabilitation center" visit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presentatives, the Government has not permitted inspection of prisons by human rights monitors.

#### d.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There are no practical 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detain and imprison residents of North Korea at will, and hold them incommunicado.

Little information is available on North Korea's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practices, and outside observation of its legal system has been limited to apparent show trials on traffic violations and other minor offenses.

Family members or other concerned persons find it virtually impossible to obtain information on charges against detained persons. Judicial review of detentions does not exist in law or in practice.

Defectors claim that North Korea detains about 150,000 political

prisoners and family members in maximum security camps in remote

areas. An October 1992 report by two former inmates made reference to the severe living conditions in what they called "concentration camps." North Korean officials deny the existence of such gulags or prisons but admit the existence of "education centers" for people who "commit crimes by mistake."

One credible report lists 12 such prison camps in the DPRK. It is believed that some former high officials are imprisoned in the camps. Any form of communication with detainees, including visitors, although once allowed, is now said to be prohibited.

In July 1991, a North Korean defector who had been a ranking official in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aid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detention areas. One consists of closed camps from which prisoners never emerge and where conditions are extremely harsh. In the other type, prisoners can be "rehabilitated."

e. Denial of Fair Public Trial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courts are independent and that judicial proceedings are to be carried out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law. The Constitution contains elaborate procedural guarantees, and it states that "cases are heard in public, and the accused is guaranteed the right to defense; hearings may be closed to the public as stipulated by law." However,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individual rights do not exist in fact in the DPRK. The Public Security Ministry dispenses with trials in political cases and refers defendants to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for imposition of punishment.

When trials are held, lawyers are apparently assigned by the Government. Reports indicate that defense lawyers are not considered representatives of the accused, but rather are expected to help the court by persuading the accused to confess guilt. Some reports note a distinction between those accused of political crimes and common criminals and state that the Government affords trials only to the latter. The Government considers critics of the regime to be "political criminals."

Numerous reports suggest that political offenses have in the past included sitting on newspapers bearing Kim Il Sung's picture, or (in the case of a professor reportedly sentenced to work as a laborer) noting in class that Kim Il Sung had received little formal education. A foreigner hired to work on foreign broadcasts for the regime in the 1970's was imprisoned for 1 year without trial for criticizing the quality of the regime's foreign propaganda, and then imprisoned for an additional 6 more years (with trial) shortly after his release for claiming in a private conversation that his original imprisonment was unjust. While AI has listed 58 political prisoners by name, the total number of political prisoners being held is unknown. Several defectors and former inmates reported that the total figure is approximately 150,000.

f. Arbitrary Interference with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The constitutional stipulation that "citizens are guaranteed the inviolability of person and residence and the privacy of correspondence" does not reflect reality. The Government relies upon an extensive, multilevel system of informers to identify critics and potential troublemakers. Whole communities are sometimes subjected to massive security checks. According to

Kim Jong Il, North Korean society embodies "a new way of thinking" which cannot be evaluated on the basis of "old yardsticks" of human rights imported from abroad. In this context, the DPRK celebrates the closed nature of its society as a virtue. The possession of "reactionary material" and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are both considered crimes which may subject the transgressor to the death penalty. In some cases, entire families are punished for political offenses allegedly committed by one member of the family.

The Government's ideology is derived from Marxist-Leninist concepts of collective consciousness and the "Juche" idea of self-reliance propounded by Kim Il Sung. Although Juche is generally translated as "self-reliance," it more literally means "the ability to act independently without regard to outside interference." Originally described as "a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in the Korean context, Juche is a malleable philosophy, reinterpreted from time to time by the regime as its ideological needs change and used by the regime as a "spiritual" underpinning for its rule.

As defined by Kim Il Sung, the Juche idea connotes a quasi-mystical concept in which the collective will of the people is distilled into a supreme leader whose every act is by defini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and society's needs. An October 1995 commentary in the North Korean press explained that

"the leader is not an individual, but the brain of the revolution, the center of unity, and the supreme person who represents the popular masses." Opposition to such a leader, or to the rules, regulations, and goals established by his regime, is thus in itself opposition to the national interest. The

regime therefore claims a social interest in identifying and isolating such people.

The Government continued to classify citizens into three main classes: "core," "wavering," and "hostile." These 3 classes are further subdivided into over 50 sub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loyalty to the party and the leadership. Security ratings are assigned to each individual; according to some estimates, as much as 75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designated as either wavering or hostile. These loyalty ratings determine access to employment, highe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medical facilities, and certain stores, and affect the severity of punishment in the case of legal infractions. While there are signs that the Government has eased enforcement of this rigid system in recent years, it remains a basic fe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The authorities subject citizens in all age groups and occupations to intensive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Even after Kim Il Sung's death, his cult of personality and glorification of his family and the official Juche ideology continued to be omnipresent. The North Korean press regularly reports the occurrence of miracles on the anniversary of Kim Il Sung's birth. The cult approaches the level of a state religion.

The goal of indoctrination remains to ensure loyalty to the Kim Il Sung system and to his son and heir Kim Jong Il, as well as conformity to the State's ideology and authority. The necessity for intensification of such indoctrination is repeatedly stressed in the writings of Kim Jong Il, who attributes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largely to insufficient ideological indoctrination, compounded by the entry of foreign influences.



Indoctrination is carried out systematically not only through the mass media, but also in schools and through worker and neighborhood associations. Kim Jong Il has recently stated that ideological education must take precedence over academic education in the nation's schools, and has also called for the intensification of mandatory ideological study and discussion sessions for adult workers. One objective of these extended studies is to deny citizens sufficient leisure time in which to engage in undesirable activities or reflection.

Another aspect of the State's indoctrination system is the use of mass marches, rallies, and staged performances, sometimes involv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e recent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cluded several hours of carefully choreographed demonstrations of mass adulation of the leadership, reportedly involving virtually the entire population of Pyongyang and outlying communities. Foreign visitors were told that nonparticipation by Pyongyang residents in this event was unthinkable.

Citizens with relatives who fled to South Korea at the time of the Korean War appear to be classified as part of the hostile class in the DPRK's elaborate loyalty system. This subcategory alone encompasses a significant percentage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One defector estimated that the class of those considered potentially hostile may comprise 25 to 30 percent of the population; others place the figure at closer to 20 percent. Members of this class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although a defector has claimed that their treatment has improved greatly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monitors correspondence and telephones.

Telephones are restricted to domestic operation (see Section 2.a.).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Including:*

a. Freedom of Speech and Press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that require citizens to follow the "Socialist norms of life" and to obey a "collective spirit" take precedence over individual political or civil liberties.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speech,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Government prohibits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in practice. The regime permits only activities which support its objectives.

The Government strictly curtails freedom of expression. The authorities may punish persons criticizing the regime or its policies by imprisonment or "corrective labor." One defector reported in 1986 that a scientist, whose home was bugged through his radio set, was arrested and executed for statements made at home that were considered critical of Kim Il Sung. In another case, AI reports that a family formerly resident in Japan was sent to a reeducation through labor center because one member of the family allegedly made remarks disparaging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attempts to control all information that enters and leaves the DPRK. It carefully manages the visits of Western journalists. Domestic media censorship is strictly enforced, and no deviation from the official government line is tolerated.

The regime prohibits listening to foreign media broadcasts except by the political elite, and violators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Radios and television sets are built to receive only domestic programming; radios obtained from abroad must be submitted for alteration to operate in a similar manner. North Korea's private telephone lines operate on an internal system which prevents making or receiving calls from outside the country. Some foreign relatives of well-connected individuals are reportedly able to contact them through official telephone lines.

The Government severely restricts academic freedom. The Government controls artistic and academic works, and visitors report that the primary function of plays, movies, operas, children's performances, and books is to contribute to the cult of personality surrounding Kim Il Sung and Kim Jong Il.

#### b.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Government does not respect these provisions in practice. The Government prohibits any public meetings without authorization. There are no known organizations other than those created by the Government. Professional associations exist solely to reinforce government monitoring and control over the members of these organizations.

#### c. Freedom of Religion

The 1992 Constitution provides for the "freedom of religious belief" including, "the right to build buildings for religious use." However, the same article adds that "no one can use religion as a means to drag in foreign powers" or to disrupt the social order. In practice, the regime firmly discourages all organized religious activity except that which serves the

interests of the State.

As late as the 1980's, foreign visitors to North Korea were told that there were no churches in the country, and only a handful of Buddhist temples. However, in recent years, the regime has facilitated the formation of several government-sponsored religious organizations. These serve as interlocutors with foreign church groups and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Some foreigners who have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se organizations are convinced that they are sincere believers; others claim that they appeared to know little about religious dogma, liturgy, or teaching.

There are a few Buddhist temples where religious activity is permitted, and three Christian churches--two Protestant and one Catholic--have been opened since 1988 in Pyongyang. These appear to be the only active Christian churches in the country. Many visitors say that church activity appears staged. Foreign Christians who have attempted to attend services at these churches without making prior arrangements with the authorities report finding them locked and unattended, even on Easter Sunday.

The DPRK claims there are 10,000 Christians who worship in 500 house churches, and that the Chondogyo Young Friends Party, a government-sponsored group based on a native Korean religious movement, is still in existence. The authorities have told foreign visitors that one Protestant seminary exists, accepting six to nine pupils every 3 years.

- d.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Country, Foreign Travel, Emigration, and Repatriation

The regime strictly controls internal travel, requiring a travel pass for any movement outside one's home village; these passes are granted only for official travel or attendance at a relative's wedding or funeral. Long delays in obtaining the necessary permit often result in denial of the right to travel even for these limited purposes. As an additional means of control, travelers must produce special "travelers coupons" in order to buy food on trains or at restaurants or shops. Only members of a very small elite have vehicles for personal use. The regime tightly controls access to civilian aircraft, trains, buses, food, and fuel.

Reports, primarily from defectors, indicate that the Government routinely uses forced resettlement, particularly for those deemed politically unreliable. The Government strictly controls permission to reside in, or even enter, Pyongyang. This is a significant lever as food, housing, health, and general living conditions are reportedly much better in Pyongyang than in the rest of the country. Diplomatic and press reports concur that the DPRK began an intensive effort in 1995 to reduce significantly the population of Pyongyang due to concerns about overcrowd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ere reportedly required to relocate out of the city.

The regime limits foreign travel to officials and trusted artists, athletes, academics, and representatives of religions. It does not allow emigration, although there have been a limited number of defections. Recently, the number of defectors has increased. The regime reportedly retaliates harshly against the relatives of those few persons who manage to escape. According to the Penal Code, defection and attempted defection (including the attempt to gain entry to a foreign embassy for the purpose of seeking political asylum) are capital crimes. Defectors and

other sources report that involuntarily repatriated defectors are routinely executed. As a rule, the regime does not allow students to study abroad except in China and a few other friendly countries.

From 1959 to 1982, 93,000 Korean residents of Japan, including 6,637 Japanese wives, voluntari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Despite regime assurances that the wives, 1,828 of whom still had Japanese citizenship, would be allowed to go home to Japan every 2 or 3 years, none is known to have done so. Most have not been heard of since, and their relatives and friends in Japan have been unsuccessful in their efforts to gain information about their condition and whereabouts.

Although over the past decade the DPRK has permitted an increasing number of overseas Korean residents of North America,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visit their relatives in North Korea, most requests for such visits are still denied. Many foreign visitors to the April International Pyongyang Sports Festival reported that they were denied permission to visit or otherwise contact their relatives, even those who lived only a few miles from Pyongyang. The DPRK does not participate in United Nations or other international refugee forums, and it is not in contact with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Section 3 Respect for Political Rights: The Right of Citizens to Change Their Government*

Citizens have no right or practical means to change their government. The political system is completely dominated by the KWP, with Kim Il Sung's heir Kim Jong Il apparently in control.

There is very little hard information available on intraregime politics following Kim Il Sung's death. The legislatur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ich meets only a few days a year, serves only to rubber-stamp resolutions presented to it by the party leadership.

In an effort to create the appearance of democracy, the DPRK has created several "minority parties." Lacking grassroots organization, they exist only as rosters of officials with token representation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Their primary purpose appears to be that of promoting government objectives abroad as touring parliamentarians. Free elections do not exist in North Korea, and Kim Jong Il has derided the concept of free elections and competition among political parties as an artifact of capitalist decay.

Elections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to provincial, city, and county assemblies are held irregularly. In all cases there is only one government-approved candidate in each electoral district. According to the media, over 99 percent of the voters turn out to elect 100 percent of the candidates approved by the KWP. The vast majority of the KWP's estimated 3million members (in a population of 22 million) work to implement decrees formulated by the party's small elite.

Few women have reached high levels of the party or the Government.

#### *Section 4 Governmental Attitude Regarding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Investigation of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does not permit any independent domestic organizations to monitor human rights conditions or to comment on violations of such rights. A North Korean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in 1992 denies the existence of any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is merely a propaganda arm of the regime. However, by offer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 identifiable official interlocutor, the new body facilitates their ability to enter into two-way communication with the regime.

AI representatives visited the DPRK in 1991 and 1995 and met officials from the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and Public Security, as well as judges, lawyers, and legal scholars. The Government has ignored requests for visits to the DPRK by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 *Section 5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Sex, Religion, Disability, Language, or Social Status*

The Constitution provides for equal rights for all citizens. However, the Government denies its citizens most fundamental human rights.

##### Women

There is no information available on violence against women.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women hold equal social status and rights with men." Women are represented proportionally in the labor force, with the exception of small factories in which the work force is predominantly female. Like men, working age women do not have the option not to work. They are thus required to leave their preschool children in the care of elderly relatives or in state nurseries. Howeve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women with large families are guaranteed shortened working hours.

### Children

Social norms reflect traditional, family centered values in which children are cherished. The State provides education for all children. There is no available evidence of a pattern of societal abuse of children. However, some children are denied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subjected to other punishments and disadvantages as a result of the loyalty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principle of "collective retribution" for the transgressions of their parents.

Like others in North Korean society, children are the object of intense political indoctrination; even mathematics textbooks propound the party line. In addition, foreign visitors to North Korea and academic sources report that children are subjected to several hours a week of mandatory military training and indoctrination at their schools from an early age. School children are sometimes sent to work temporarily in factories or in the fields to assist in completing special projects or in meeting production goals.

## People with Disabilities

Traditional social norms condone discrimination against the physically disabled. Disabled persons are almost never seen within the city limits of Pyongyang, and several defectors and other former North Korea residents report that disabled persons are routinely assigned to the rural areas. There are no legally mandated provisions for accessibility to buildings or government services for the disabled.

### *Section 6 Worker Rights*

#### a. The Right of Association

Nongovernmental labor unions do not exist. The Korean Workers' Party purport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all labor. There is a single labor organization, called the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formerly Soviet-controlled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Operating under this umbrella, unions function on the classic Stalinist model, with responsibility for mobilizing workers behind production goals and for providing health, education,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strike. North Korea is not a member of, but has observer status with,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b. The Right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Workers have no right to organize or to bargain collectively. Wages are set by government ministries. The State assigns all jobs. Ideological purity is as important as professional competence in deciding who receives a particular job, and foreign companies that establish joint ventures in North Korea

report that all their employees must be hired from lists submitted by the KWP. Factory and farm workers are organized into councils, which do have an impact upon management decisions.

c. Prohibition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There is no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and the Government routinely uses military conscripts for construction projects. Reformatory labor and reeducation through labor are common punishments for political offenses. AI reports that forced labor, such as logging and tending crops, is common among prisoners.

d. Minimum Age for Employment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State prohibits work by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years. As education is universal and mandatory until age 15, it is believed that this regulation is enforced.

e. Acceptable Conditions of Work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all working-age citizens must participate in work, and "strictly observe labor discipline and working hours." The Penal Code states that anyone who hampers the nation's industry, commerce, or transportation through purposefully failing to carry out a specific assignment "while pretending to be functioning normally" is subject to the death penalty; it also states that anyone who "shoddily carries out" an assigned duty is subject to no less than 5 years' imprisonment.

Even persistent tardiness may be defined as "anti-Socialist wrecking" under these articles. A DPRK official praised the North Korean labor force to an audience of foreign business executives by noting that "there are no riots, no strikes, and no differences of opinion" with management.

The Financial Times reported in September that the minimum wage for workers in foreign joint ventures is \$80 a month (about 168 North Korean won); no data are currently available on the minimum wage in state-owned industries. Wages and rations appear to be adequate to suppor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t a basic subsistence level. Wages are not the primary form of compensation since the State provides all educational and medical needs free of charge, while most good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rationing system, and only token rent is charged.

In 1994 new labor regulations for foreign-funded enterprises were reportedly adopted by the Administration Council. Referring to labor contracts, they set out provisions on the employment and dismissal of workers, technical training, work hours, rest periods, remuneration, labor protection, social security, fines for violations of regulations, and settlement of disputes.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n 8-hour workday, but several sources report that most laborers work 12 to 16 hours daily. Some of this additional time may represent mandatory study of the writing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The Constitution provides all citizens with a "right to rest," including paid leave, holidays, and access to sanitariums and rest homes funded at public expense. The actual availability of these protections in practice is unknown.

***Reports from our second donation trip  
to North Korea, March 1996 (1)***

1996. 3.

이 자료는 미국 언론인 버나드 크리셔가 3월 5일 두번째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홍수피해 지원 관련 캠페인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하는 내용으로서 3월 6일과 8일의 활동 상황을 전송한 보고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Reports from our second donation trip  
to North Korea, March 1996***

**Pyongyang 3/6/96 (Report #1)**

Joseph and I left Tokyo on March 3 and spent two nights in Beijing. The morning of March 4 we drove to the DPRK Embassy where our visas were waiting for us and we received our visa certificates, inserted into our passports, on the spot. The visas were gratis.

We then drove to the residence of King Sihanouk, who has been undergoing medical treatment in Beijing, and spent three and a half hours with him, which turned into an interesting and provocative interview that I filed to my newspaper, The Cambodia Daily.

On March 5th we boarded flt JS152 of Koryo Airlines at 12:30 p.m. and landed at Pyongyang airport about two hours later. On the same flight there was a team from ABC-TV, a Korean-American Protestant minister from New York, a top-level delegation from Nigeria and the charge d'affaires from Romania and Sweden, as well as the trade representative from Belorussia. On routes like these (there are only flights a week into Pyongyang from China, and just a couple more from other cities), one makes friends easily. Only the ABC group was quite secretive. I tried to start a conversation to inform and interest them in our rice donation project with the view of possible coverage, but they denied they were Americans and did not want to converse so I did not pursue the conversation.

At the airport we were met by our guides, Mr. Li, from the Foreign Ministry, and Mr. Kim, formerly a researcher from the Peace and Disarmament Committee, who is on loan to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We drove back to the hotel in two black Mercedes Benz sedans and discussed our schedule which we agreed on as follows:

March 5 (Tuesday)

15.00 Arrived at Pyongyang Airport

17.00 Arrived at the Koryo Hotel

18.00 Discussion of schedule at the hotel

(We later dined together at the National Restaurant, a charming folklore restaurant, serving Bulgogi, near our hotel).

March 6 (Wednesday)

9.30 Discussion with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members on presentation of rice, at the hotel

14.00 Meeting with Deputy President of Korea Cereals Export and Import Corp. at the hotel 18.30 Dinner with guides at the hotel

March 7 (Thursday)

9.30 Visiting Mangyongdae, birthplace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10.00 Visit to the Art Studio

14.30 Sightseeing Dangun tomb

17.00 Enjoying acrobatic performance

March 8 (Friday)

9.30 Receiving rice at Nampo port

14.00 Presentation of rice in Unpa County of North Hwanghae Province

March 9 (Saturday)

9.30 Receiving rice at Nampo port

14.30 Presentation of rice in Anju County of South Hwangage Province

March 10 (Sunday)

9.30 Receiving rice at Nampo port

14.00 Presentation of rice at Huichon County of Chagang Province

19.00 Dinner with Guides at the hotel (sleeping in Huichon planned)

March 11 (Monday)

10.00 Arrival in Pyongyang

10.30 Meeting

In the afternoon, departure preparation

March 12 (Tuesday)

10.00 Departure by airplane

.....

Joseph and I met with Mr. Li Jong Hua, Representative of the Section of the Comprehensiv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whom we also met on our last visit, to discuss our distribution plans and future collections and visits. I confirmed with Mr. Li that previous announcements by the DPRK government regarding a halt to accepting foreign donations to the flood victims was aimed at donors who intended to use such donations for political purposes, who attached conditions, or provided unwanted materials. It was not aimed at groups such as ours, the Internet Appeal for North Korean Flood Victims or other organizations whose donations were "sincere" and purely humanitarian.



Mr. Li also stated that the government was fully capable now of providing the victims with ample clothing, blankets and shoes and most of the 500,000 victims were already living in new homes, but rice supplies remained short and would now be the only welcome donation from overseas.

Mr. Li suggested (1) direct cash contributions to his organization which could purchase rice most economically or (2) shipments of rice to one of the North Korean ports where donors could consign it to the Flood Rehabilitation Committee or (3) in some cases, like us, receive the shipments at the port, consigned to us, and then deliver them directly to the villagers in the flood-affected areas were possible options.

We aim to begin doing this from Thursday (March 8) and will report on it on this page.

He confirmed there was a severe food shortage but dismissed reports of the existence of a famine and questioned whether such comments, depicting starvation and severe malnutrition among children, made by some foreign officials were intended to gain sympathy or to undermine an image of stability in his country. He stressed his government took the appropriate procedures to prevent such conditions and its citizens received fair and equal distribution of available rice.

He questioned whether persons aiming to propagate a picture of a famined nation were not trying to use the food situation to attack the nation's dignity. "We regard our dignity as our life," he declared. "Do not touch our dignity using the food situation."

He added: "Even though we have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assistance, the quantities we have received is not much and a number of

pledges have not materialized or have been greatly delayed." Therefore, he concluded "such assistance was not welcome and the government would not issue a new appeal." They would work with existing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dependable and sincerely humanitarian.

He also stressed that his committee could not handle all the potential donors which have contacted the committee, wishing to visit North Korea with uncertain commitments.

It was clear, however, from our conversation that aid was not being unilaterally rejected. Pure, humanitarian aid and aid that is needed, rice or cash which can buy rice, not tied to political motives or other conditions that challenged North Korea's dignity or 'juche' (philosophy of 'self-reliance') was welcome.

In this respect we were encouraged to continue our Internet campaign and I in turn pledged I would spare no effort to aim at larger contributions for our next planned visit in May or June when the food shortage may become more severe.

Finally, I raised the question which is on the mind of many donors -- which is whether rice donations will reach the civilian population and not be distributed to the military.

Mr. Li was quite firm in his response:

"It is slanderous to imply that the donations to our flood victims have been distributed to the military," he stated. "Those donations will not be, cannot be and are not given to the military. They are all provided without exception to the civilian population."

He cited numerous international donors who had supervised their donations to civilian populations -- including French and Swedish donors. He questioned the motives of those who were spreading "such slanders" and suggested these were aimed at undermining donations.

[I had breakfast this morning with Kjeld J. Madsen, team leader of the UN's Department of Humitarian Affairs -- DHA -- who has been supervising donations of rice and stated he was fully satisfied the DPRK's government distribution system was efficient, thorough and reached the flood victims.]

After lunch, I met with Kim Hall, Director of the Korea Cerelas Export & Import Corp. to discuss the shipment of 260 tons of rice we had ordered through Medmar, a Greek shipping firm, through Geneva and which was coming into Nampo port. We are to pick up the first part of this shipment on Thursday at Nampo and load it onto nine or ten trucks (we will pay for the gasoline and the Flood Committee will provide the trucks and drivers) and distribute it in Unpa County.

*Watch this page for future reports*

## **Pyongyang 3/8/96 (Report #2)**

This morning we are off to Nampo port, about 40 minutes from Pyongyang with a number of trucks to pick up and load our first donations of rice. We are then scheduled to take them to Unpa where we will deliver them to the population there.

Yesterday we spent the day visiting the Mangyongdae (birthplace of the late President Kim Il Sung), visited the art studio and met artists who continue to paint in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potters continuing to produce

celadon and Koryo-style vases and pots, a room of lady embroiderers. In the afternoon we visited the newly built tomb of King Dangun (sometimes spelled Tangun), the founder of the Korean nation more than 5,000 years ago, an impressive monument, and in the souvenir shop there purchased an elaborate book of artworks produced during the Li Dynasty. At 5 we went to see an acrobatic performance which was spectacular, particularly the trapeze act. In the audience was an European Christian group that was here to deliver rice donations. We also met with the group from ABC-TV and later dined with them at the Koryo Hotel. Charles Lustig, ABC News foreign editor; Ray Homer, the Tokyo bureau chief, along with Han S. Park, director and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Issues, were here to discuss a news project with the authorities. On the plane I had approached Lustig and asked him if he was "American" and said: "no" so I did not talk with him further. But I discovered he was in fact Canadian so he was right and turned out to be very friendly. We had a pleasant dinner and exchange of views about our trips.

During the lunch hour I visited Trevor Page, head of the World Food Program operations here at his office (also private quarters) located on the sixth (walkup) floor of the Diplomatic Apartment complex. Mr. Page gave me an update chart of food donations which we will attempt to reproduce on this Home Page. The donations so far fall far short of the needs.

I will reproduce some of the Q & A with Mr. Page in a few days but the gist of our talk was the urgent need for food to prevent malnutrition, which he said was already occurring in some areas; that the monitoring of donated rice distributions by the WFP confirmed that all such donations were reaching the civilian populations, and that corn and wheat could be substituted for rice at lower cost and provided nearly the same nutritional value.

Mr. Page said the North Korean distribution system was very efficient and appeared to be fair and could be trusted. Far more than in other countries he had worked. He said he had asked a North Korean colonel who was flying to Hawaii to talk with the U.S. on MIA matters, and who spoke English, how he reacted to reports that the military were receiving abundant rice supplies at the expense of the civilian population. The colonel, Page said, had a convincing response. he told Page in effect: how could this happen when my mother, father, brothers and sisters are all civilians? Do you think we would allow our relatives to be without food? Page surmised that the military may have rice stored from the previous Korean harvest but foreign donations designated for the flood victims were not being diverted.

We were off to Unpa, though I see fresh snow outside my hotel window. I hope there is no new snow in the coming days.



## 북(조선) 경제의 이해를 위하여

1996. 3.

이 자료는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재미친북단체) 한호석 소장이 북한 사회과학원 김원삼 교수, 한득보박사와 경제건설의 기본 원칙, 행정, 대외 무역, 산업 구조 등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대담한 기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북(조선)경제의 이해를 위하여

### (1) 대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1995년 8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결성된 '8·15 50주년 민족공동 통일대축전 미주준비위원회'의 일원으로 방북하였다.1) '미주 준비위원회'에서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8·15 행사에 각각 대표들을 파견한 바있다. 나는 평양을 방문한 길에 북(조선) 경제학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대담을 나눌 수 있었다. 나는 미주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대담을 요청했는데,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소장이며 경제학학회 회장인 김원삼 교수(박사)와 이 연구소 정치경제학 연구실장인 한득보 박사가 대담에 응해주었다.2)

대담은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 이층에 있는 한 회의실(돈을 주고 빌린 장소였다)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담내용을 녹음한 것을 다시 정리하였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일 본의 아니게 착오가 생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이 될 것이다. 대담에서 나온 일부 표현이나 존칭 등에 관해서는 남(한국)과 해외의 읽는 이들을 생각하여 정리자 임의로 일부 고쳐야했음을 밝혀둔다. 내 자신이 경제분야의 전문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북(조선)의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대담이라고는 했으나 토론형식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묻고 답하는 형식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자는 뜻에서 정리자 임의로 각주를 달아서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번 대담에서도 밝혀진 것이지만, 남북의 학술교류가 외부적인 제약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난 50년 분단시대를 지나왔다는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 베이징(7월)과 독일 프랑크푸르트(9월)에서 남·북·해외의 학자들이 만나 학술토론을 벌이면서 상호이해수준을 높인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제까지의 남북학술토론은 주로 조국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학 분야에서는 남북학술교류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조선)반도의 복잡한 정치정세 때문에 남북당국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풀어지기는 커녕 더욱 조이고 있는 듯한 오늘, 통일문제를 생각하고 논의하는 공간을 넓혀가는 일은 우선 민간차원에서 상호이해의 수준을 높여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런 목적에서 기록한 것이다.



## (2) 경제건설의 기본원칙과 노선에 대하여

자본주의 나라건 사회주의 나라건 간에 경제건설의 기본원칙과 노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북(조선)의 경제건설노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건설과정에서 주되는 총화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입니다.3)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노선을 내놓고, 그 노선을 단계별로 실현해왔으며4), 지금은 더 높은 단계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5) 외부에서는 자립경제를 폐쇄경제, 고립화된 경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말하는 자립경제와는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6) 우리가 자립적으로 경제를 건설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자원에 의거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수준을 높히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생산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자는 것입니다.7) 이것이 기본입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상호경제협조회의'(COMECON)8)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은 "동구나라들의 생산력은 중학생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유치원생 수준인데, 만일 중학생과 유치원생이 한 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유치원생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힘으로 경제를 건설해서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그 나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끝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9)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체적인 생산경험이 있고 일정한 기술토대를 축적한 한 두개 부문에서는 자립적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문에서 자력으로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이 걸어 온 경제건설 행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계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업기초를 자력으로 건설하려 하니까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촌에서 기계화에 필요한 트랙터는 약 8만대인데, 해마다 1천대씩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8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해마다 1천대씩 수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생산한 트랙터를 두 대 들여와 분해해 가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자체 힘으로 트랙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10), 오늘에 와서는 한 정보당 6-7대의 트랙터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체 힘으로 트랙터를 생산하다보니, 선진국에서 생산한 트랙터에 비교해서는 생산품의 질이 좀 낮은 것은 있지만, 어쨌든 자체의 힘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데서, 그리고 높은 속도로 농촌의

기계화를 이룩하는 데서는 결정적으로 유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노선에 기초해서 다른 공업부문의 발전도 자체 힘으로 이룩했습니다. 그 건설과정은 참으로 힘겨운 전투와 같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건설 기본노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건설노선을 내놓았을 때, 일부 사람들은 그런 노선은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중공업만 발전시켜서는 영락된 인민생활수준을 높힐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와 전쟁시기를 거치면서 인민생활은 가장 뒤떨어진 수준에 있었습니다. 전쟁시기 우리 농민의 40-50%는 집도 없는 영세농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보자면, 중공업만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성이론은 우리 실정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면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전인민적 운동으로 지방단위의 산업시설을 건설하자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침은 매개 군단위로 군의 자체, 군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자체적으로 공장 한 개를 건설하고, 그 건설경험을 모범으로 해서 다른 공장을 건설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방침을 따라서 경공업부문의 건설에 힘을 기울여온 결과 지금은 매개 군에 2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이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약 4천개가 됩니다. 중요한 기본소비품들은 자기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자급하고 있습니다. 경공업 생산의 지방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11)

그런데 군단위에서 자체로 건설한 지방산업공장의 기술수준은 대규모 중앙산업공정보다 낮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뒤떨어진 기술수준을 갱신하기 위해 중앙산업공장이 지방산업공장을 하나씩 담당하여 기술수준을 높히는 데 협력해왔고, 이렇게 힘쓴 결과 지금은 지방산업공장의 기술수준도 거의 중앙산업공장 수준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공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거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민소비품 총생산량 가운데서 54·3%가 지방산업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기본되는 것은 중앙에서 풀어주고, 식료품, 편직물 같은 생활소비품들은 군에 있는 20여개의 공장에서 거의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의 지방자급산업이 중앙산업에 의존하면서도, 자체적으로 생활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 (3) 경제건설의 행정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8월 5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3년을 전후복구기로 정했고, 1956년부터 1960년까지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단계로 정하고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액수상으로는 2년 8개월만에 끝났고, 지표상으로는 4년째인 1959년에 끝났습니다. 남은 1년인 1960년은 완충기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에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기초를 축성했습니다. 이 기간에 처음으로 트랙터, 자동차(12), 불도저(13) 같은 중력기계들을 생산했습니다.

1961년부터 제1차 7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제건설에 힘썼는데, 7개년 계획이라면 68년에 끝나야 하는데, 1970년까지 3년이 연장되었습니다.<sup>14)</sup> 그 까닭은 카리브해 위기('쿠바사태'를 말함), 베트남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의 정세가 매우 긴장하게 되어, 경제건설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방건설을 병진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국방건설에도 돌려야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3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쟁으로 마사진 뼈허 위에서 일어난 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1970년까지 14년 동안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지은 것입니다. 1971년부터 1976까지는 기술개조를 기본과업으로 한 6개년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sup>15)</sup> 기술혁명<sup>16)</sup>은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3대혁명의 기본인데, 이것은 공업노동과 농업노동의 차이,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줄이는 과업을 뜻합니다. 특히 고열노동, 유해노동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술혁명의 과업에는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것은 가사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부엌살림을 꾸려주는 것, 가정에서 필요한 식료품을 가공원료로 꾸려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새로 건설한 공장은 1만7천7백여개나 됩니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제2차 7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sup>17)</sup> 이 기간 동안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해온 공업화의 성과를 세계발전의 추세에 맞게 더욱 고조시키자는 것입니다. 현대화 과업이란 구체적으로 종합적 기계화·자동화를 말하며, 주체화의 과업은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원료토대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며, 과학화란 경영활동에서 전자계산화·로봇화를 말합니다. 제2차 7개년 계획의 성과로 농업노동에서 손으로 하는 노동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제3차 7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와 인민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업생산 총규모에서, 그리고 강철, 화학섬유, 전력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목표량에서 미달되

있습니다.18) 그 밖의 다른 지표들에서는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 미달하게 된 원인은 우리나라 경제건설에서 아주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 것 때문인데, 소련과 동구 나라들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들과 맺었던 대외경제관계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군사대결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19)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만 하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토대를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t 프레스, 대형 산소분리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지엽적인 물음인데, 1만t 프레스나 산소분리기관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 건지 궁금하군요.

지금 1만t 프레스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열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우리는 1년반 걸쳐 자체설비와 기술로 만들어냈습니다. 룡성기계총국에서 이것을 만들어낸 것도 벌써 오래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만t 프레스는 '5·18 공장'이라는 한 공장단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각종 기계설비들, 내연기관들을 만들 때 일일이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에 넣고서 눌러서 단번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커다란 베의 내연기관이나 기관차 크랭크 축 같은 것을 깎아서 만들자면 상당히 힘이 들지만, 이 프레스에다 넣고서 눌러서 찍어내면 됩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3천t 프레스나 6천t 프레스는 여러 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3천t, 6천t 프레스는 중소기업의 기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판식 산소분리기를 자체로 만들어내는 나라는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겁니다. 산소분리기에는 판식 분리기와 관식 분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식은 낡은 기술이며, 판식은 우월한 새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 관식 분리를 보았는데, 선진 기술정보를 조사하던 중에 관식보다는 판식이 우월하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명이 기술자들이 달라붙어서 판식 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내는 데 힘썼습니다. 락원기계제작소에서 1년반 걸쳐 판식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6천입방m 판식 산소분리기를 만든 것입니다. 98%이상의 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성과지요. 산소분리기에서 나온 산소는 모든 제철소에서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6천입방m 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낸 것도 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은 매해 1만여 건의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있습니다.20)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이제까지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자립적 기초 위에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

다.21) 그런데 이에 비하여 인민생활의 수준은 아직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것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당의 결심이며, 김일성 주석의 생각이었습니다.22)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전략의 기본내용은 이제까지 마련한 경제토대를 인민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축적해놓은 경제토대를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서 은을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은 지금 이 단계에 와있습니다.23)

그리하여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대외무역제일주의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중공업 토대를 갑자기 경공업으로 돌리려하니 까 지난 해 성과에서 나타났듯이 미흡한 점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구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생산, 트랙터 생산을 늘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학비료 생산은 1·5배 늘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외무역부문을 보면, 자본주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로를 봉쇄하고 있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와 무역관계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가 무너진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역의 방향을 제3세계 나라들로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합영과 합작을 늘이고 있습니다. 지금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세우는 것도 대외무역제일주의를 추진하는 한 방도가 됩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우리의 기술을 다른 나라에 밀어넣기도 하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자는 생각입니다.

#### (4) 대외무역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북(조선)의 경제발전전략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들어와서 대외무역제일주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북(조선)의 경제에서 수출의존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말 가운데는 "생산이자 수출이고, 수출이자 곧 생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외무역제일주의를 추진하면서 대외무역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으

로부터 10년 전에는 대외무역액이 65억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그 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대외무역량에 대한 공식발표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대략 3-4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대외무역은 중앙에서 하는 것도 늘어났지만, 지방단위에서 하는 무역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는 무역, 도 자체에서 하는 무역, 군 자체에서 하는 무역 등 변방무역, 단독무역이 있습니다. 산지사방에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품종을 보면 지난 시기에는 공작기계류와 1차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품종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연합기업소들은 거의 자체원료와 자체기술로 생산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생기는데, 각 연합기업소에서 원료자재가 모자라거나 기술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 기업소의 상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번 외화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합기업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출목표와 무역목표에 미달하는 연합기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역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역목표를 달성해야 국내생산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적 민족경제라고 하면, 폐쇄경제를 생각하게 되고,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가 약화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라고 보지 않고 구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관계에서 자기 것을 주고 남의 것을 달라고 하는 유무상통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sup>24)</sup>

## (5) 산업구조에 대하여

이야기를 산업구조에 관한 문제로 옮겨보겠습니다. 공업과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요?

대개 공업이 80%, 농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sup>25)</sup>

발달된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이른바 서비스산업이 있습니다.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70-80%가 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공업과 농업의 많은 부분을 제3세계 나라들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보

이고 있습니다.

공동화현상이지요.

국제분업체계라고 이름을 달았습시다만, 실제로는 자본주의가 아직 덜 발달된 나라들에 대한 국제적 수탈구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산업을 봉사산업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봉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봉사산업을 따로 분리해내어 독자부문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본다면, 그것도 적은 비중은 아닙니다. 교통, 통신·정보, 금융, 관광 등이지요. 우리는 교통, 통신부문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이라고 보면서 이 부문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만해도 800km의 전기화를 완성했습니다. 대외무역 부문에서는 다른 나라와 봉사산업부문에서 무역을 하려는 경향, 봉사무역의 경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관광산업시설도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객을 약 50만명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백만에서 3백만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발전할 것입니다.<sup>26)</sup> 그런데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교통·통신·정보산업이 함께 발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통신부문에서 빛섬유통신시설을 들여와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봉사산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봉사산업분야는 아직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자산업부문은 어떠한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에 전자산업기지를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자계산기(컴퓨터)와 전자일용품 70여 가지를 생산해내었습니다.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기지도 최근에 꾸렸습니다. 16비트짜리 전자계산기(컴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32비트 수준으로 높은 새로운 전자계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sup>27)</sup> 1994년 4월에 김정일 비서가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했는데, 이 현지지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전자제품생산의 첨단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 (6) 연료·원료부족을 해결하는 길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주요한 원료인 원유가 우리 땅에서 나오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북(조선)이 에너지난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난으로 인한 '위기론' 더 심한 경우에는 '몰락론'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원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유, 생고무, 코크스입니다.

흔히 외부에서 하는 평가를 보면, 원유가 나오지 않는 이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유가 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에, 원유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탄으로 해결하는 에너지 공급체계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좀 더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력원천을 해결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사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땅에서 석탄을 캐내어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기 소련은 우리나라가 상호경제협조회의(COMECON)에 가입하면 시베리아에서 송유관을 우리나라에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원유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조건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땅에서 나는 석탄으로 동력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석탄으로 돌아가는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28) 우리나라에는 원유발전소는 없고, 모두 석탄발전소입니다.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들라하면, 동평양화력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 해주화력발전소, 12월2일화력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29) 석탄개발이 점점 불리해지기도 하지만30), 수요충족은 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가 돌아가지 않을 때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가지고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때에는 화력발전소를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유란 동력문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경공업제품의 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요원료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원유가 경공업제품생산에 들어가는 부문이 2백여 가지나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더군요. 우리는 2·8비날론 연합기업소를 건설하여 원유를 대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스제들인 메타놀, 가성소다 등을 개발함으로써 화학공업을 발전시켰고, 그 수요가 늘어나서 다시 순천비날론 연합기업소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종합 가스제를 가지고 상당한 정도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자동차, 트랙터 같은 수송부문의 원료로 쓰면서, 우리



가 경공업부문에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생산부문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유개발총국을 두고 우리땅에서 원유를 찾아내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해안 대륙붕에 원유가 묻혀있다는 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땅에서도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31)

우리나라에서는 생고무도 나지 않습니다. 만포타이어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는 아직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5,60여명이 달라붙어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 생고무를 기본원료로 하여 합성고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크스탄도 나지 않습니다. 코크스탄은 강철생산에 필요한 고열탄을 말합니다. 소련의 치타지방이나 몽골에 코크스탄이 많이 묻혀있는데, 소련당국과 몽골당국에서 우리에게 캐어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매우 큰 채취공업설비와 수송설비에 드는 비용 때문에 하지 못하고, 이 문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개발해낸 것이 삼화철입니다. 코크스탄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삼화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고열탄, 그러니까 8천칼로리가 나오는 석탄과 시멘트와 석회석을 섞어서 알로 만든 것입니다. 삼화철을 용광로에 넣으면 코크스탄은 원래 쓰던 양의 8분지 1만 넣어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 외국자본의 유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핵문제'가 타결되면서 조-미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복잡한 경로를 통하여 진척되겠지만, 아뭏든 이 관계개선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미국의 자본이 여기 북(조선)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일본자본이나 남(한국)의 자본,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의 자본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의 생리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자본의 유입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우리는 외국자본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32) 일본은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21세기에 들어가서 다시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투자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언젠가 캐나다 기업이 자본을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미국에 있는 재향군인회의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미관계

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꺼려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은 조-미관계개선 속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조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일꾼들에게 여러 차례 관심을 표시한 바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쪽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항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쪽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익규모가 상당하더군요.

최근에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법제화 조치도 이루어놓았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스웨덴 같은 유럽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나라들은 정치정세를 관망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 (8)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이해

지금 외부에서는 북(조선)의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에 관하여 여러가지 비판과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sup>33)</sup>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의 본질적 특성은 계획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계획경제란 일방적인 지시·명령체계를 통하여 운동하는 구조이므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위로부터 지시와 명령을 받고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 피동적 존재로 생산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창조성과 노동의욕이 떨어지게 된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경제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몰락하게 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계획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북(조선)의 경제운영도 소련·동구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조선) 경제의 침체를 논증하는 주요한 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북(조선)의 경제학계에서는 소련·동구형 경제운영방식과 북(조선)형 경제운영방식의 차별성을 논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그 관리 운영하는 방식의 일치성을 주장합니다. 제도는

좋은 데 관리·운영방식이 나쁘면 안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은 사회주의적 경제제도는 그대로 두고, 관리·운영방식은 비사회주의적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기술부문, 경제관리·운영부문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별이 없다고 보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미국에서 이른바 테일러 시스템을 생산현장에 적용하니, 소련에서도 그 관리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식 관리체계란 무엇입니까? 자본가가 공장의 주인인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는 생산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한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일하지 않게 되니까, 시간단위로 노동강도를 측정하여 노동자들이 건달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그런 관리체계가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 경제제도에서 그런 비사회주의적인 관리체계를 들여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약화시키려는 나라들은 이러한 비사회주의적인 관리체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식 관리체계가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과를 일정하게 높힐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본주의적인 관리운영방식을 들여올 경우 일시적으로는 더 많은 생산성과를 얻는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근본을 갉아먹는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인민일보를 보니까 중국농촌에서 가족도급제를 실시한 뒤로 분쟁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군요. 분쟁의 주요원인이 관개수 공급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관개관리소는 7정미의 관개수를 보냈는데, 정작 농민들의 논에는 5정미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만 공급되니까, 농민들은 5정미에 대한 돈만 내겠다고 해서 마찰이 생긴 겁니다. 중국에서 관개관리소는 공동경리고, 논은 개인경리입니다. 공동경리와 개인경리의 불일치가 결국 마찰과 분쟁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농촌에서 병해충을 구제하는 것, 물을 공급하는 것, 농약치는 것 등에 관련해서는 개인경리가 아니라 공동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각 향 단위로 공동관리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생산·기술부문에서 공동관리의 필연성이 다시 제기되는 겁니다. 차츰 공동경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도 개인경리로 해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제관리와 운영은 경제제도의 본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은 한 마디로 말하여 민주주의 중앙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라고 공식화되어 있었습니다.<sup>34)</sup>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생산자 대중의 창의성, 창발성을 발양하고 집계하여 중앙에서 결정한 사항은 하부에서 무조건 관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계획경제란 국가계획이 기본으로 되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에 생산력을 집중하는 경제질서를 말합니다.

지난 시기 소련·동구형의 경제운영방식을 보면, 소련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행정명령

식으로, 지령하달식으로 하부의 근로대중을 경제건설에 동원하는 중앙집권제에 크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먹이는 경제운영방식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근로인민의 창발성과 생산의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계획실(Gosplan)과 국가물질공급국(Gosnab)에서 결정한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하부의 생산자들과 다시 토론하지 않았습니다.<sup>35)</sup> 각 경제부문들 사이의 연계균형, 다시 말하여 생산수단과 소비재 사이의 균형, 공업과 농업 사이의 균형, 채취공업과 가공업 사이의 균형을 평가하여 국가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사항을 하부의 생산자들에게 무조건 내리먹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소련식 계획경제는 계획경제라고 하기 보다는 관료주의 경제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sup>36)</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계획경제는 가장 먼저 생산자에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의 국가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계획은 구체적인 것까지 밑으로부터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경제운영이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시작하여 각 부서들과 기업소를 거쳐 마지막에 생산자로 내려가는 하향식을 취하게 되면, 생산문제에 관한 책임은 위에서 지는 게 아니라 모두 밑에서 떠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명령식, 지령하달식 운영방식의 폐단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계획사업을 군중노선에 기초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중노선에 기초한 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맨처음에 공장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자리에는 국가계획위원회 일군과 부위원회 일군이 함께 참여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국가계획위원회 일군들, 부위원회 일군들이 현장에서 생산자들과 구체적으로 토론하면서 생산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생산자들과 함께 일차적으로 생산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간 일군들은 제 1차 생산목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국가계획전반의 시각에서 목표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중앙의 일군들은 어떠한 조건이 갖춰지면 이번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제기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것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어떤 설비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중앙의 일군들은 이러한 문제기와 요구들을 종합하여,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지구위원회인데, 여기서 다른 기업소들과의 연관 속에서, 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구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맨마지막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부위원회에서 받아안게 됩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부위원회는 지방의 토론을 거쳐 올라오는 생산자들의 문제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국가가 받아안고 대외무역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운영방식입니다. 절대로 내려먹이는 식의 운영을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었을 때, 생산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산자들과 토론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위로 올라오면서 풀어주고, 마지막까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국가가 대외무역을 통해서 책임지고 풀어줍니다. 우리나라 경제운영에서는 아래단위의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존중하고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 아래단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국가에 어떻게 책임지고 풀어주며 보장해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계획지표있습니다. 국가계획지표, 지구계획지표, 기업소 자체의 계획지표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국가계획지표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고, 기업소 자체의 계획지표는 아니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각 기업소들이 자급할 수 있는 원료와 자재로 달성하는 계획지표는 자체의 힘으로 하고, 국가계획지표를 달성하는 문제는 중앙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하게 됩니다. 국가계획지표를 달성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기업소는 영예를 받아안게 되며, 생산자들에게는 생활비와 상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생산자들은 국가계획지표를 달성하는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 원인을 보면, 밑에서 생산자들과 함께 계획지표를 세우지 않고 꼭대기에서 내려먹이는 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9) 집체적 지도란 무엇인가?

한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른바 집체적 지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체적 지도라는 것은 공장기업소에서 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장기업소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위원회입니다. 얼핏 듣기에 당위원회라고 하면, 그저 당관료가 일방적으로 내려먹이는 정치지도를 머릿 속에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안전기공장의 당위원회에는 한 서른다섯 명으로 구성된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당위원회 위원 35명의 90%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 직장장들입니다. 만일 생산자들이 생산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에 관하여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당위원회에 갑니다. 당위원회에서는 기사장, 지배인, 당비서가 생산자들이 제기한 안을 토론하여 결정합니다. 이 당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배인은 행정적으로 조직사업을 수행하고, 기사장은 기술적으로 안받침하고, 당비서는 거기에 맞게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사장, 지배인, 당비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공장기업소의 당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당비서는 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일정정도 지니고 있는 당일꾼들입니다. 당비서

가 아무리 정치사업을 전담한다고 하지만, 경제·기술분야의 지식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소 당위원회의 토론내용은 국가계획을 수행하는 문제, 생산기술적 문제, 계획지표 수행에서 나서는 문제, 다른 기업소들과의 문제들입니다. 지배인이 독단적으로 기업소를 관리·운영할 수 없으며, 당위원회의 토론을 통하여 생산자들의 의견을 존중·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활동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7)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실시한 사회주의 나라에도 당위원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위원회는 노동자이사회, 행정간부이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이사회가 반대하게 되면, 그 문제를 공장기업소가 시당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당에서 나온 사항도 노동자이사회가 반대하면 중앙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결정 되면 노동자이사회가 참고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통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지만, 정치적 지도만이 아니라 생산·기술·정치 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럼 당위원회가 공장과 기업소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1961년에 체계를 창조하고 196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38)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인 유일관리제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적 문제가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지배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산자 대중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생겨난 것이지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현상들 가운데는 당이라는 존재가 경제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시만 내리기 때문에 경제관리·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고 경제발전속도를 늦추는 역기능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관료들이 장악하고 생산자 대중은 그저 의견이나 제시하고 관리권은 온데 간데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대중에게 관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관리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전에 소련의 경우처럼 토론할 때 생산자가 참가하여 의견이나 말하라고 해서 생산자가 공장관리의 주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39) 그렇다면 생산자 대중의 관리권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생산자 대중의 의견을 당위원회에 집중하고, 당위원회는 생산자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40) 당위원회를 통하여 나온 생산자의 의견은 그대로 관철되는 겁니다.

## (10) 연합기업소가 움직여가는 경제

설명하시는 가운데 기업소라는 개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개념이 북(조선)의 경제운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합기업소라고 합니다. 연합기업소는 계획단위, 집행단위, 생산단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나라의 경우를 보면, 연합기업소가 계획단위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그저 경영단위로만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채취공업부문과 화학공업부문에서 한 두 개의 연합기업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매개 공장들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운영하니 자기 공장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본위주의가 심해지는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공장들은 분산상태로 놓아두지 말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경영할 수 있는 단위로 묶어야 하겠다는 요구가 나왔고, 마침내 1985년에 전반적으로 연합기업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는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첫째로는 기본제품생산에 연관된 공장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있는데, 이 연합기업소는 철강재 생산에 복무하는 쇳돌광산들, 석탄을 보장해주는 석탄광산들, 광산들에서 생산된 원자재들을 운반하는 수송부문 사업소들을 하나의 생산기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통합한 생산기지가 연합기업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합기업소는 크고 작은 규모가 있지만, 가장 커다란 연합기업소는 20-30여개의 개별공장 사업소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총국'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10여개의 공장기업소들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가는 개별공장을 상대로 하지 않게 되고, 연합기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합기업소 안에서는 생산수단, 원료조달을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외부와 계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합기업소들은 대외무역권 한도 행사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같은 종류의 공장기업소들을 묶어놓은 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와 트랙터를 생산하는 '윤전기체총회사' 같은 연합기업소가 그것입니다. 글라인더 공장,

타이어 공장 같은 것들은 하나로 묶어놓고, 모든 운전기계를 생산하는 겁니다. 탄광의 경우도, 개별탄광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더욱 우월성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와 같이 여러개의 탄광들, 갱목사업소들, 건설사업소들을 망라하여 한 생산단위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활동에서 집체성이 발양되고, 뒤떨어진 공장은 앞서가는 다른 공장이 도와주고, 모자라는 것은 서로 보충해주는 협동정신이 실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합기업소를 큰 공장에 작은 공장들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기업소는 회사, 관리국, 총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합기업소는 독립채산제의 한 단위이며, 또한 연합기업소에 망라되어 있는 개별공장기업소들도 독립채산제의 한 단위가 됩니다. 이중적인 독립채산제입니다.<sup>41)</sup> 개별공장기업소들은 연합기업소의 생산에 이바지한 정도를 따라서 평가를 받으며, 상금이나 장려금을 받게 되는 체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연합기업소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매 군마다 20여개 썩 있는 '지방산업 종합공장'도 연합기업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산업 종합공장에는 생산·기술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개별공장들이 망라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료공장과 건재공장이 한 지방산업 종합공장에 망라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력은 거의 모두 연합기업소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 (11) 이윤추구의 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교환을 포괄하는 경제활동 전반은 철저히 사적인 이윤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에서 경제활동은 사적인 이윤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제활동에서 이윤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이윤본위제는 반대하지만, 어느 기업에서건 일정한 정도의 이윤이 있어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장기업소는 수익성을 보장하고, 이윤을 내야합니다. 이윤이 없으면, 생산확대를 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이윤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활동 전반을 이윤추구에 종속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공장기업소가 자기의 경영활동을 이윤추구에만 종속시키게 되면, 국가계획지



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어떤 공장기업소에서 트랙터를 만들어야 하는 데, 트랙터 생산에서 나오는 이윤보다 라디오 생산에서 나오는 이윤이 더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서면 전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윤이 많이 나는 것으로 따지면,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물지표별 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이윤을 내야 합니다. 연합기업소에서 얻은 이윤 가운데 경영활동에 들어가는 이윤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퍼센트는 연합기업소의 기금으로, 몇 퍼센트는 공장기업소의 기금으로, 몇 퍼센트는 국가에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기업소의 이윤 가운데 국가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국가경영이익금과 거래수익금이라는 두 통로를 통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소에서 남는 이윤은 자체기술발전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임을 배꾸는 것이나, 생산자에 대한 상금수여로, 생산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소들은 이윤추구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의 지표별 계획을 무시하고 이윤이 많이 나는 부문만을 골라서 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윤추구의 문제는 현재 사회주의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서 민족적 자립경제노선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관리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관리운영의 문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나 아니면 개별적 경쟁체제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극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극체계의 문제란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생산노동의욕을 높이고, 생산노동에서 창발성, 자발성을 발휘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로 집약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극체계의 사적인 이윤동기로 획일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하여, 우리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물질적 자극체계와 정치·도덕적 자극체계를 구별하고 이 둘을 어떻게 배합하는가 하는 문제로 되어있습니다.42) 소련과 동구나라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적 자극체계만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물질적 자극체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어디까지나 정치·도덕적 자극체계를 앞세우고 있습니다.43)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이며, 이 차이는 주체사상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주인이라는 자기인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물질적 자극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습니다.44)

선행 맑스주의 전통에서는 사회가 사회주의 단계로 발전하면 상품경제,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시기 소련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왔다갔다 했고45), 중국도 우왕좌왕했습니다.46) 그러나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품·화폐경제와 물질적 자극을 무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나갔습니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기본으로 선행시키면서, 거기에 물질적 보상을 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양자를 어떻게 배합하느냐를 따라서,

사회주의가 제 모습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로 전락되고 마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자극을 앞세우면, 생산활동에서 일시적인 성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게 되는 사회적 풍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한 생산노동이 어느 길로 가느냐는 뻔합니다. 노임도 많이 주고, 혜택도 많이 주어서 생산을 높히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치사업을 통하여 생산을 높히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과 정치의 결합은 위대한 예술입니다.

정치·도덕적 자극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적 각성을 말합니다.47)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주인답게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답게 일을 잘 한 근로자에게는 정치적 평가를 줍니다. 전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생산노동의 주체인 인간을 물질적 자극으로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도덕적인 각성으로 상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생산노동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노동관과 인간관에 대한 철학적 물음에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주의 학자들은 인간을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노동에 나서는 존재로 보고 있는 자본주의적 인간관과 노동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단순한 노동력을 보고 있는 거지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 자체의 완성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과 인간을 사회역사의 발전을 지향하는 존재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갖는 우월성은 사람을 물질적 자극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덕적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인간관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소련형의 사회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봅니다.48)

## (12) 소유문제

소유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로 구분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사적 소유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적 소유(cooperative property)와 소련형의 집단적 소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소유는 공업 부문에서 지배적인 형태고, 협동적 소유는 농업부문에서 지배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업부문이라 할지라도 전부 국가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단체 소유도 일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자전거 공장이라든지, 철제일용품 공장이라든지, 비닐수지공장 같은 데는 생산협동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단위가 소유단위입니다. 이러한 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생산을 합니다. 물론 중앙의 계획을 받기는 받지요. 국가소유제에서는 국가가 소유단위이고 경영단위는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기업소입니다. 경영권과 관리권은 생산단위별로 분할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 협동적 소유가 지배적인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전체가 협동적 소유라는 뜻이 아니라, 협동농장단위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한 협동농장의 소유를 다른 협동농장에서 이용하지 못합니다. 협동농장끼리 생산현장에서 연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소유단위와 경영단위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경영·관리권의 통일이지요.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등가성의 원칙이 아니면 안됩니다. 반면에, 국가소유제인 기업소들 사이에서 교환원칙은 완전가치에 근거한 교환이 아니라 기업소 도매가격, 다시 말해서 원가와 기업소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윤을 합한 가격이 통합니다. 그러나 국가소유제인 기업소가 협동농장과 교환할 때는 상품교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상품화하지 않는 것은 국가소유로 남겨둡니다.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나 자동차는 국가소유입니다.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동자가 농촌에 들어가서 일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한 노임을 받습니다. 해마다 농기계 사용료, 관개사용료, 종축 값 등은 국가에서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소유는 그 사회화 수준이 전인민적이기 때문에 전인민적 소유(property of the whole people)라고도 부릅니다.

협동적 소유는 협동농장의 소유인데, 어떤 협동농장에서 자기 포전에 벼를 심기가 힘드니까 강냉이를 심겠다, 아니면 강냉이 농사는 그만두고 박하를 심어서 외화를 벌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매개 협동농장이 각자 자기 수익성만을 높히려고 한다면, 가뜩이나 농경지가 제한된 우리나라에서는 알곡수요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가족도급제를 도입하면서, 30년동안 경영·관리권을 주었으므로, 무엇을 경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완전히 개별화,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중국농촌에서는 개인이 트랙터와 자동차도 사들여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벼농사를 집어치우고 딸기를 심어서 비행기로 베이징에 내다가 파는 경우도 생겼고, 농경지에 자기 별장을 짓기도 하고, 농토의 일부에 자기 조상의 묘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로 중국의 알곡생산량이 자꾸 줄

어들이 시작했습니다.49)

그런데 경지면적이 2백만 정보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러한 사태가 생기면 커다란 혼란이 오게 됩니다.5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군단위로 협동농장경영위원회라는 국가의 농업지도기관을 내왔습니다.51) 전국적인 범위에서 농업생산력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지요. 이 위원회에서는 해당 협동농장에게 알곡생산계획을 줍니다. 만일 어떤 협동농장에서 알곡생산이 아닌 다른 품목을 경작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가농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협동적 소유는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아직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협동적 소유가 협동농장단위의 소유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을 완전히 전인민적 소유·관리·경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농업생산력 발전수준에서 본다면 협동적 소유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러한 조건에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있습니다.52)

지금 협동농장을 무조건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해서 국영농장으로 만들어놓으면 농민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숙된 농장들부터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농민들이 스스로 협동적 소유를 없애고 국가적 소유로 넘기겠다고 하는 경향이지요. 이를테면 만경대 국영농장, 숙천군 국영농장을 비롯하여 몇몇 농장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토지개혁을 할 때,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개인단위로 경영할 수 없는 일부 토지는 군단위로 국가소유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웅기군, 안악군 등이지요. 이러한 국가소유 농장의 생산수준은 다른 협동농장의 생산수준에 비하여 높지 못합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이 아직 전인민적 소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관념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협동농민들이 국가적 소유로 넘어가는 원인은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발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생산에 참가하는 물질·기술적 수단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소유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농장의 소유란 탈곡장, 사료 분조장에 국한되어 있고, 주요 농기계는 모두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농기계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생산수단의 동원문제에서 국가소유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변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협동적 소유가 국가적 소유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관리부문에서 우리 당의 방침은 어떤 법령을 제정하여 협동적 소유를 당장 국가적 소유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소유의 생산수단과 협동적 소유의 생산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그 결합관계에서 국가적 소유가 지도적,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여 농업생산의 전과정에서 국가소유의 생산수단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동농민들이 국가적 소유·관리를 닦아가면서 자발적으로 국가적 소유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시키는 역사적 경로입니다.<sup>53)</sup> 농업생산의 전과정이 약 1백 가지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노동과정이 30가지가 됩니다. 이 30가지의 노동과정이 국가적 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면 협동적 소유는 자동적으로 국가적 소유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영농장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국가가 많이 팔아주면서 국가적 소유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잘 사는 농장은 더 잘 살게 되고, 잘 못사는 농장은 여전히 못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사람들은 소유단위가 적으면 적은 수록 이해관계가 절실해지고 생산추동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농장 소유단위는 너무 크니까 분조단위로 소유권을 분할하자, 분조단위 소유권보다도 가족단위 소유권이 가장 좋다고 하여 가족도급제, 개인책임제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물질적 견지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견해인데, 농민이 자신들을 공동소유,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협동적 소유가 발전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지요. 중국농민들은 이러한 의식수준과 자각을 갖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 자극만을 추구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의 행사는 실제적으로 관리·운영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 협동농장에는 분조관리제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한 개 분조에는 17명에서 20명까지 망라됩니다. 이 분조관리단위 안에 토지, 농기구, 육축, 트랙터, 농기계 등을 대체로 5-6년 동안 고정시킵니다. 분조단위로 생산수단과 토지를 일정기간동안 고정시키고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당 수확고를 따른 알곡생산계획의 정해진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분조에 소유권과 처분권을 주어 노력에 따라 분배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분조관리제를 합리적인 생산 및 노력을 조직한 형식이며, 현재 농민의 사상의식수준과 농업생산력에 맞는 우월한 분배방식이라고 봅니다. 협동농장 안에 여러 개의 작업반과 분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협동적 소유라고 하면 국가가 절대로 개입·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국가적 지도의 책임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교조적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적 소유라고 해서 협동농장이 잘 되건 망하건 자체의 힘으로 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동농장 뿐 아니라 국가도 농업생산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는 마땅히 협동농장에서 제기되는 각이한 문제들을 풀어주고 도와주며 농업생산력의 통일적 발전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우에, 특히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협동적 소유가 사적 소유로 분해되어가는 경향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북(조선)에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동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기본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협동적 소유는 농민계급의 물질 기초가 아닙니까. 농민계급의 물질 기초가 전인민적 소유로 되어야 농민들도 노동계급으로 될 것이고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회발전의 전망이고, 경향입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협동적 소유를 해체하여 개인적 소유로 만들어 놓으면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sup>54)</sup>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협동농장을 모두 없애고 국영농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협동농장에서 국영농장으로 바뀌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생활비 계상이 달라집니다. 협동농장(cooperative farm)에서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분배되고, 적게 생산하면 적게 분배되지만, 국영농장(state-owned farm)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모두 국가에 들여놓고 국가가 정한 식량과 생활비를 받게 됩니다. 국영농장의 농민은 공장노동자와 같이 농업노동자로 변하게 됩니다. 국가는 농업노동자들에게 대해서 노동보호물자,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사회보장문제도 협동농장에서는 공동축적분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지만, 국영농장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정양이나 요양이나 휴양을 가게 되는 경우 국가가 모두 해결해주지만, 협동농민은 자기 협동농장의 공동축적분투가 있는만큼만 정양, 요양, 휴양을 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사회보장은 매달 자기 생활비의 1%만 내면 모두 해결되는데, 협동농장의 경우에는 5-6%를 내야 합니다. 국가가 협동적 소유의 생산자들까지 모두 노동계급과 똑같이 보장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sup>55)</sup>

협동농장별로 차이가 있을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차이가 있지요. 평야지대의 협동농장과 산간지대의 협동농장은 차이가 많습니다.

알곡생산량을 보면, 평야지대의 협동농장에서는 알곡생산량이 많지만, 산간지대의 협동농장은 알곡생산이 아닌 다른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생산하여 현금을 벌어들이기는 하지만 알곡생산량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경지는 그 자연·지리적 조건을 따라서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로 구별합니다. 산간지대와 중간지대는 농업조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이므로, 그곳에 있는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농기계를 더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 (13) 노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구체적으로 노임(wage)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군요.

생활비는 국가에서 정하는 국가생활비 등급기준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sup>56)</sup> 우리나라에서는 생활비와 노동정량에 관한 문제는 각 기업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sup>57)</sup> 기업소에는 개별 근로자들의 생활비와 노동정량을 결정하거나 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일하든지 개별 근로자는 국가가 기능급수를 따라서 정한 생활비를 받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 정한 노동정량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상황에서 조절할 필요가 생기면, 문건을 작성해서 부위원회에 올라가야 하고, 노동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부류를 다양하게 나누지만, 우리나라에서 노동부류를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부류가 힘든 노동으로 채취공업과 석탄공업의 노동이 여기에 들어가고, 제2부류는 조금 덜 힘든 노동으로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의 노동이 여기에 들어가고, 제3부류는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노동으로 상업노동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부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노동은 특수부류로 두었는데, 지하막장의 노동, 잠수부의 노동, 벌목노동 같은 것입니다. 특수부류의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정량을 따라서 누진도급제를 실시합니다. 국가가 특별히 생활비를 더 많이 보장해주는 거지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노임을 시간제로 결정합니다. 한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노임은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저노임제는 주정부에서 주법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노임 이상의 노임액수에 대한 결정권은 각 기업에 맡겨져 있습니다. 최저노임 이상을 주는 기업도 있고, 최저노임만을 주는 기업도 있고, 불법채류자들에게는 최저노임 이하로 주는 불법적인 행위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기업에서 정해진 노임 밖에 더 주는 것을 상여금이라고 하는데, 북(조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금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노동정량을 높혀 계획을 초과달성하면 상금을 주지요. 원가를 절약한 근로자에게는 장려금을 줍니다. 기술을 혁신한 근로자에게는 표창금을 줍니다. 목표량 초과달성, 원료절약, 기술혁신에서 나온 이윤은 국가가 기업소와 개별 생산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대개 상금, 장려금, 표창금의 액수는 생산자 본인 생활비의 50%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생활비의 1백%까지도 책정되지만, 법령으로 1백%를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14) 경제학분야의 남북학술교류와 상호이해의 문제

남북의 경제학자들이 만나서 학술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분야나 언어학분야 같은 데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는 있었지만, 경제학분야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남(한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박현채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박현채 선생은 진보진영의 이론가로서, 민족민주운동에 실천적으로 참여한 분으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애석하게도 지난 8월 1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그 분의 저작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남조선'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대해서 폭넓게 알지 못합니다. 오래전 이야깁니다만 제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할 때, 박극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였지요. 얼마나 정열적으로 강의하셨던지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침이 튀기는 것을 참으면서 열강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혹시 박극채 선생이 박현채 선생과 인척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조선' 경제를 논할 때, 일부 사람들은 발전수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면서, 경제적 자립수준은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해서 팔았던 상관하지 않고, 상품생산수준이 앞섰다고 주장합니다. 소련사람이 '남조선'에 가서 경제형편을 평가한 것이라든지, 폴란드 사람이 가서 경제형편을 평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조선'의 경제발전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남조선' 경제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측이 되었건 어쨌건 간에 상품만 매끈하게 잘 만들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서는 실제로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자동차들을 매끈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조선'의 상품생산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예속적 경제발전'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우리에게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보는 평가기준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체 기술과 자기 자본으로 생산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제적 자립도를 기준으로 삼고 '남조선' 경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상품들을 여기에 들이밀기만 하면 우리 인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거니 하고 상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선 우리의 평가기준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조선'에서는 얼마나 매끈하게 잘 만들어서 상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를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조선'에서는 우리 경제가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발전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립적 민족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우리 사회주의 경제가 유지·발전시켜온 성과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를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남북의 경제학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이해를 깊게 해야 합니다. 김정일 비서도 그의 논문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경제는 예측경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이며,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제를 조국통일문제와 연결해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민족이 분단 50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상태 안에 묶여있습니다. 분단이란 민족사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만, 특별히 우리의 논의와 결부하여 생각하자면 분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봅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경제를 전민족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인식하고 이것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조국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기로 하지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의 기본정책은 한 민족, 한 국가, 두 제도, 두 정부라는 개념 속에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시대가 반세기가 흘렀다고 해도 민족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상이한 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연방국가를 창립하고, 그 두 제도를 각기 운영하는 지역자치정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

습니다. 우선 남과 북에 있는 자원을 민족의 공동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민족적 견지에서 나라의 국토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통일연방국가의 경제시책이란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경제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겁니다. 제도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은 결국 남과 북 사이에 다시 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이 다른 쪽을 먹겠다는 호전적인 정복론입니다. 제도통합은 전쟁의 위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과 제도통합은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경제학 분야에서도 남북의 학술교류가 진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논문과 연구성과를 서로 교환하면서 남북의 상호이해를 넓혀나간다면 분단시대가 쌓아놓은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이란 상호이해를 통하여 상호실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끝 -

## <각 주 >

1 ) 이번 평양방문에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수재피해에 관한 나의 현지인상이다. 나중에 미국 뉴욕에 돌아와서 수재피해가 막심하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언론보도는 내가 평양에 머무는 동안에 북(조선)에 수재피해가 극심했다고 하였는데, 정작 현지에 있던 나는 별로 심각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이틀동안 많은 비가 내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대동강 중류의 수위가 평소보다 약 3-4m 높이로 올라갔던 흔적을 내 자신이 강가에 내려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강가에 심어놓은 옥수수밭 일부에 물이 빠지지 못하여 누렇게 말라죽은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물에 잠겨 말라죽은 옥수수대를 베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던 날 뉴욕으로 돌아오기 위해 평양시 교외에 있는 공항으로 차를 타고 나갔는데, 때마침 빗물에 휩쓸려 쏟아져 내린 길 위의 토사를 치우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지역주민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평양시민들이 신의주 지방에서 있었던 수재피해(거기서는 '큰물'피해라고 한다.)에 관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지만, 당시 남(한국)의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듯이 전국토의 70%가 수재피해를 입었고, 산업시설도 수재로 무너져 곧 망할 것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2 )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는 80여명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활동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원이란 사회과학전반에 관한 지도기능을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주체사상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연구소, 김일성동지 혁명역사연구소, 사회주의경제관리연구소, 세계경제 및 남북협조연구소, 언어학연구소, 문학연구소, 법학연구소, 고고학연구소, 자료통보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 등이 산하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북(조선)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각 분야별로 학회가 조직되어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연구기관들과 대학의 연구부서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원은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던 1952년 12월 1일 미군의 폭격을 피해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과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1963년에 사회과학원과 자연과학기술원으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에서는 학보발간, 격월간으로 '경제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단행본으로 된 전문서적도 펴내고 있다고 한다.

3 ) 지금까지 나온 북(조선)의 경제건설노선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노선, 사회주의 공업화노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노선, 3대기술혁명방침 등이라고 한다.

4 ) 한국사회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남북의 경제실상을 분석하고 나서 이렇게 적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산업생산력이 떨어지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남한의 산업생산은 내수보다는 수출을 위해 발전을 해 왔고, 이것이 대량생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산업생산은 그 소비를 위한 시장의 확대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장실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그 생산은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자국 내의 자체 소비를 위한 생산이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과도한 양적 확대보다는 오히려 자립의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생산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생산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 따라 자국 내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며 시장의 문제가 질곡으로 되는 상황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내수의 한계에 따라 산업생산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생산의 차이는 경제발전노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의 가치판단은 과연 어느 형태가 그 국민경제의 구성원들에게 더 큰 후생을 보장하는가에 의거해야 하며 단순히 양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김은경, '남북한 경제의 구조와 경제협력의 전망,' 분단 50년의 구조와 현실 [서울:민중사, 1994], 233쪽)

5) 그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체화'된 경제란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원만히 풀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한 경제를 말한다. 이것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장된 경제다. '현대화'된 경제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와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실현되고 농업이 공업화된 경제를 말한다. '과학화'된 경제란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 생산방법 및 기업관리의 자동화가 실현되어 생산과 경영활동이 현대적인 과학적 토대 위에 올라선 경제를 말한다. 그들은 인민경제의 주체화가 현대화와 과학화의 방향을 규정한다고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란 기계공업과 금속공업을 강화하고 제철, 제강, 압연 공정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며 2차 금속가공제품생산과 화학공업을 강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는 공업부문을 개발하고 수입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으로 차츰 개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란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부문에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원격조종을 실현하여 고열노동과 유해노동을 없애고, 농촌경리부문에서도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민경제의 과학화란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을 과학적 토대 위에 세우는 것이며,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데, 기술공학부문, 농업부문, 기초과학부문의 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연구성과를 인민경제에 빨리 도입하는 것, 그리고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의 연구, 원자에너지와 태양에너지에 관한 개발, 레이저와 플라즈마에 관련한 연구 등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수용하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박영근,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제7권: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185-204쪽 참조.) 과학기술문제를 중시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역량을 집중한 사람은 김정일 비서라고 한다. 그는 일찌기 황해제철소에서 전면적 자동화의 모범을 창조한 뒤로 이를 전산업영역으로 확산하는 데 힘썼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제기된 1985년 8월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1988년에는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을 발기했다고 한다. (이찬행,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변화 [서울:도서출판 두리, 1993] 192쪽과 각주 26 참조)

6) 이 말은 '개방경제'를 곧 '예속경제'라고 볼 수 없듯이, '자립경제'를 곧 '폐쇄경제'라고 볼 수 없다는 말로 이해된다. 북(조선)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축성의 기본방향으로 되는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민족국가단위로 쌓아지기 때문이며, 둘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빨리 쌓을 수 있게 하는 근본방향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리성복, 앞의 글, 137-139쪽 참조)

7) 여기서 북(조선)이 말하는 '자립경제'(self-supporting economy)라는 개념과 '자급자족경제'(autarky)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대외무역경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립적 경제체제이고, 후자는 대외무역경제를 포함하지 않은채 완전 폐쇄되어 있는 경제

절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구분에서 보자면 북(조선)의 경제는 자급자족경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북(조선)의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조선)의 민족자립경제를 자급자족경제라고 규정하고 그 폐쇄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 오류로 보인다.

8) 상호경제협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는 1946년 유럽지역에서 미국이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마살플랜'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국제분업체계로서, 소련이 중심이 되어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창설하였다. 북(조선)의 한 학자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의 '통합경제론'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서 자립적인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을 수 없게 하며 매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불균형성과 파산을 가져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전반적 경제력을 약화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파괴하는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이론이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리성복,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발전하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평양출판사, 1993] 133쪽)

9) '상호경제협조회의'에 가입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이 대부분 1960년대 중반에 경제위기에 휩쓸렸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적 경제관리방식을 도입한 이른바 '탈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0여년 뒤에는 자본주의로 복귀하고 말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10) 1958년 11월 기양트랙터공장(오늘의 금성트랙터연합기업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널리 알려졌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두 대의 트랙터를 분해한 2천여개의 부품을 가지고 30여일 동안 거의 수제 공정으로 두들겨 조립한 트랙터가 시험운전을 하자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만 갔다는 일화다. 그로부터 한 해 뒤에는 3천대의 트랙터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11)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부문 뿐만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부문에서도 지방자립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셸릭 헤리슨은 미 농무부 연구보고서의 결론부분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중앙집중식 식량배급 체제를 지방분권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와중에서 일부 지역이 때때로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처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94년에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조짐도 없다"고 적었다. (셸릭 헤리슨의 기고문 '쌀에 담긴 북의 메시지'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14일자])

12) 1958년 11월 덕천자동차공장(오늘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40여일만에 첫 자동차를 생산한 북(조선)은 지금 독일제 벤츠승용차와 생김새가 비슷한 '평양 410'이라는 승용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지만, 원유부족 때문에 승용차 생산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시내에서 흔히 눈에 띄는 승용차(개인승용차는 없으므로 모두 관용차들이다)들은 독일제 벤츠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끔 일제 승용차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화물트럭 같은 수송차량은 모두 자체로 생산한 것들이었다.

13) 1958년 12월 북중기계공장(오늘의 불도저를 생산했다고 한다. 평양전기기관차공장(오늘의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전기기관차를 처음 생산한 때는 1967년 11월이라고 한다.

14) 제1차 7개년 계획을 통하여 공업총생산은 3.3배가 늘었고, 기계금속공업은 18.4%가 늘었으며, 노동생산성은 147.5%나 늘었다고 한다.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1988], 13쪽)

15) 이 기간 동안에 공업총생산은 2.5배가 늘었고, 기계금속공업은 19.1%가 늘었으며, 노동생산성은 155%가 늘었고, 양곡수확고는 1976년도 현재 800만t에 이르렀다고 한다. (국토통일원, 같은 책,

같은 쪽)

16 ) 북(조선)의 한 학자는 "기술혁명은 기술적 개건의 전면적 실현을 준비하는 첫 단계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는 전면적 기술개건단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보장하며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는 3대기술혁명단계, 모든 생산공정을 전면적으로 기계화, 자동화하여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까지 없애고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높은 기술혁명단계를 거쳐 완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영근, 같은 책, 178쪽)

17) 이 기간동안에는 공업총생산이 2·2배가 늘었고, 전력생산성장률은 178%, 철강생산성장률은 185%, 공작기계생산성장률은 185%를 각각 기록했으며, 양곡수확고는 1984년에 1천만t에 이르렀으며, 시멘트, 합성수지, 직물의 생산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다. (국토통일원, 같은 책)

18 ) 이 대답에서 북(조선)의 경제학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지표에서 미달되었다고만 밝혔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 미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다. 1993년말로 끝난 이 계획에 관해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에서 집계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중앙일보 1993년 8월 4일자 보도내용 종합)

㉔ 전력생산 - 3백10억 kw (목표는 1천억 kw)

금강산 수력발전소, 안주화력발전소 준공은 뒤로 미뤄졌고, 남강수력발전소, 동평양, 해주화력발전소 건설도 아직 부진한 상태다. 대천수력발전소는 일부만 완공했다. 유엔에너지연감은 1989년 현재 발전설비용량을 950만kw, 발전량은 535억kwh로 보았다. 전력소비량은 남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㉕ 석탄생산 - 92년말 현재 5천만t (연간목표는 1억2천만t) 통일원은 1989년 현재 4천3백3십만t으로, 북(조선)은 1986년 현재 7천8백만t으로, 유엔에너지연감은 1989년 현재 5천3백만t이라고 발표했다.

㉖ 철강생산 - 연간 목표량은 1천만t. 김책제철소가 그 절반인 5백만t을 생산하기로 했으나 목표의 30%를 맴돌고 있다.

㉗ 선철생산 - 1992년 현재 3백50만t

㉘ 강철생산 - 1992년 현재 4백만t

㉙ 비철금속생산 - 1992년 현재 30만t (연간목표는 1백70만t)

㉚ 기계류 생산 - 금속절단기계 2만2천대, 트랙터 2만대, 트럭 1만5천대

㉛ 곡물생산 - 지난 해 5백50만t (연간목표는 1천5백만t, 그 가운데서 쌀은 7백만t)

곡물생산이 나빠지기 시작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평균 5백10만t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 4백81만2천t, 1991년 4백42만t, 1992년 4백26만8천t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곡물 총수요량은 6백58만t에 이를 것으로 보여 2백31만여t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2년에 1백40만t을 수입하기로 계획했으나 경화가 없어 83만t을 들여오는데 그쳤고, 1991년 캐나다, 호주, 태국으로부터 쌀과 밀을 많이 들여왔는데, 1992년 수입선을 바꿔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분량을 2.5배가량 늘였다. (한국일보 1993년 6월 29일자)

㉜ 간척지 개간사업 - 5정보 (목표는 30만정보)

㉑ 비료생산 - 3백50만t (연간목표는 7백20만t)

㉒ 수산물 생산 - 3백만t (연간목표는 1천1백만t)

㉓ 섬유생산 - 지난 해말 현재 4억5천만 평방m (목표는 연간 15억평방m)

㉔ 화학섬유생산 - 87년부터 순천화학섬유단지를 비롯 50개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5개만이 완성단계에 있다.

㉕ 시멘트 생산 - 상원시멘트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고 있는데, 사리원에도 큰 시멘트공장이 곧 설 것이다.

㉖ 전자제품 생산 - 산업로봇 같은 제품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고, 텔레비전을 비롯 단순제품 생산량도 늘어났다.

㉗ 전자계 생산 - 생산실적이 좋다.

㉘ 살림집 건설 - 3만가구 건설사업도 잘 되어 평양시 안 광복거리, 통일거리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1993년 남(한국)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자면 - 물론 산출방식의 차이를 무시한 계산법, 정확하지 않은 추산 및 추론 등의 한계가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 북(조선)의 최근 경제실상을 대체적인 시각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경제성장률 - 1990년 마이너스 3.7%, 91년 마이너스 5.2% (통일원 자료), 92년 마이너스 3.0% (교토통신 자료)

② 동력자원공급구조 - 석탄 70%, 수력발전 16%, 유류 10%, 기타 4% (통일원의 1991년도 북한 경제동향 종합평가)

③ 원유도입량 - 1990년 252만t, 91년 198만t, 92년 130만t

④ 식량수요량 - 1991년을 기준으로 주식용 450만t 등 모두 640만t으로 추산하고 있다.

⑤ 식량작물생산 - 1990년 481만t, 91년 442만7천t, 92년도 쌀 290만t, 옥수수 220만t (교토통신 자료)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1백여만의 식량(1억달러에 이룸)이 모자라 이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통일원 자료) 중국 수입선은 곡물수입 가운데 약 25%, 원유수입 가운데 약 60%에 이르고 있다.

1993년 6월 7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92년 국민소득 추계결과'도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이 북(조선)의 경제에 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기 시작한 때는 1990년부터라고 하는데, 한은의 통계 뿐만아니라 북(조선)에 대한 다른 기관들의 모든 경제분야 통계들은 추정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산출방식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성과 신빙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하버드 인구개발연구소(Center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와 국립아시아연구국(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의 연구가인 에버스타트가 내놓은 비교통계자료를 보면, 1985년도 북(조선)의 일인당 국민총생산(GNP)은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2천7달러, 미중앙정보국이 1천3백59달러, 미국 군비통계국축국(ACDA)가 1천1백55달러, 유엔이 7백67달러, 통일원이 7백65달러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는데, (Nicholas Eberstadt, Korea Approaches Reunification [Armonk:M. E. Sharpe, 1955] 6쪽) 국제전략연구소와 통일원의 차이는 무려 1천2백42달러나 된다. 한은은 북(조선)의 경제가 1990년 뒤로 연속 평균 5.5% 선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

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화학공업제품 생산도 17·8%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상국민총생산은 2백 11억달러인데, 1991년에는 2백29억달러였다. 이것은 남(한국)의 14분의 1수준이다. 남(한국)보다 인구 수가 절반 밖에 되지 않으므로 총량은 그만큼 적을 것이다. 한 사람당 국민소득은 9백43달러로, 1991년보다 93달러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남(한국)의 7분의 1수준이라고 한다. 1989년에는 1천달러에 이르렀던 적도 있었다. 대외거래액은 26억6천만달러인데, 1991년에는 27억2천만달러였다. 군사비는 55억4천만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군사비는 한 해 사이 4억1천만달러가 늘어났지만, 그래도 남(한국)의 절반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다. 군사비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3%로 남(한국)의 3·8%의 7배에 가깝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조선)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꾸러가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을 수 있지, 만일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면 연속 3년 사이 5%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에 견디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북(조선)의 경제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 제3차 7개년 계획지표 가운데 일부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에 관해서 북(조선)의 경제학자들은 외부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고, 남(한국)의 관변학자들과 언론은 사회주의 경제구조 자체의 내부모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문제는 따로 검토·연구해야 할 주제다. 1984년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렸던 조-독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은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올해는 미군이 20만명의 용병을 동원해 또다시 틴스피리트 훈련을 했다. 적군의 군사훈련이 있으면 우리는 이에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생산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군대수가 남한보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있으면 많은 노동자를 동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동원되면 훈련기간인 한달 반동안 노동력이 빠져야만 한다. 이는 매우 큰 손실이다." (한국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20) 북(조선)에서는 자기들의 기계공업 기술수준을 파악하려면 특수공작기계들과 현대적 공장설비를 살펴보라고 하는데, 위에서 말한 대형산소분리기나 1만t 프레스 밖에도, 12만5천kw짜리 수력발전기, 2백10t짜리 대형보일러, 2만t 이상의 대형선박들을 주요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21) 북(조선)의 국민총생산량(GNP) 연평균 성장률에 관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통계자료(1961년부터 1981년의 기간)를 보면 사회주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National Foreign Assessment, [1984],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 편, 같은 책, 109쪽에서 재인용)

22) 1984년 8월 3일 경공업제품전시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 비서는 '8·3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 운동을 벌인 결과 직매점판매유통액이 해마다 평균 20·8%씩 늘었고, 1990년 현재까지 소비품 생산액이 3·4배 이상 늘어났고, 기본품종수는 4천5백여종, 확대품종수는 1만여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1990년 한 해 동안 8·3인민소비품 작업반, 가내작업반이 1천8백여개 늘어나 소비품 생산기지는 3천여개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찬행, 같은 책, 226-227쪽 참조)

23) 외부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하는 평가를 보더라도, 북(조선)의 생활수준은 중국과 비교하여 더 우위에 있으며, 세계은행 통계에서도 중하위 소득수준(Lows Middle Income)국가의 대열에 속한다고 한다. (Robert F. Dernberger, '중국, 북한, 베트남 경제의 비교', 김달중. 스칼라피노, 아시아 공산주의



의 지속과 변화 [서울:법문사, 1988], 392쪽) 외부에서 북(조선)의 경제발전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쓰는 평가기준은 이른바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조선)의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한 통계수치가 작성기관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1984년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수치는 1천1백74달러로 나왔는데, 통일원의 수치는 762달러로 나왔다. 이처럼 통계수치의 차이가 생겨나는 까닭은 국민소득이라는 개념과 거래수입금의 성격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조선)의 경제총량을 미화로 환산하는 데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태우,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경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어문각, 1990] 108쪽, 각주 5 참조) 남(한국)의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통계자료를 제시하기도 한다. (김병로,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도서출판 한울, 1994], 쪽 참조)

㉑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해서는 조사기관마다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큰 문제가 된다는 점.

㉒ 한국의 경제발전은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며, 북한의 경제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상업 부문의 가치창출을 인정하지 않고 물질생산만을 위주로 한 사회총생산(GSP; Gross National Product)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

㉓ 사회주의 사회의 사회총생산을 자본주의 사회의 국민총생산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 값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은 동.서유럽의 경험적 비교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

㉔ 한국의 국민총생산을 사회총생산으로 환산했을 경우, 최저 27%에서 최고 41%까지 줄어들고,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사회총생산으로 환산하면 두 배가 늘어난다는 점.

㉕ 한 사람 당 순물질생산(NNP; Net Material Product)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1980년에 들어서서 1천62달러 대 1천달러로 북한을 앞선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는 한국이 북한을 약 두 배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㉖ 한 사람당 에너지 소비량은 1985년에 북한이 2천1백18 kwh로 남측의 1천2백41 kwh보다 약 1.7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㉗ 공업생산력은 1988년에 북한이 국민총생산의 70%가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한국은 31.7%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㉘ 쌀 생산량은 1987년 한국이 5백91만톤, 북측이 6백20만톤으로 북한이 절대생산량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 식량수입의존도도 한국은 49.5%인데 비해 북한은 3.5%로 자립도가 매우 높다는 점.

㉙ 도로의 총길이는 한국이 5만1천 km로 북한의 7만5천112 km에 훨씬 못미치고 있고, 한국의 철도 총길이는 6천3백39.8 km로 북한의 4천5백 km보다 앞서지만, 북한은 80%가 전철인 반면 한국의 전철화 비율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㉚ 한 사람당 총사회생산을 실제구매력 (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환산했을 경우, 한국은 2천4백 달러, 북한은 2천 달러지만, 화폐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점. 북한은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인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국민소득의 2차적 분배, 즉 식량, 연료, 주택, 무상교육, 무상치료, 생필품 공급 등의 혜택이 북한주민의 평균임금과 맞먹는 정도여서 북한주

민들의 실질임금은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의 두 배가 된다는 점.

㉔ 하루 필요량에 대한 영양공급상태는 1984-86년에 한국이 122%, 북한이 135%로 북한이 나은 편이라는 점.

① 인민의 가계비 지출 가운데서 한국의 저축률은 총수입의 7·3%에 지나지 않는 반면, 북한의 저축률은 최하 40%에서 최고 47%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

24 ) 남(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0%인데 비해, 북(조선)은 20%라고 한다. (국토통일원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7년도)

25 ) 북(조선) 학자의 발표를 보면, 14년 동안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한 1970년에 와서 공업과 농업의 비중이 1956년에 비해 총생산에서 34 : 66으로부터 74 : 26으로 높아졌으며, 국민소득에서는 25 : 75로부터 65 : 35로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1946년에 비해 1989년에 공업총생산액은 5백54배로 장성하였으며 1946년 한 해에 생산하던 공업생산을 오늘날 10여 시간 안에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리성복, 같은 글, 148-149쪽) 에버스타트의 통계를 보면, 1987년 현재 농업, 공업, 기타부문의 비율은 소련이 19 : 38 : 43, 중국이 60 : 18 : 22, 베트남(1989년 현재)이 71 : 12 : 17로 공업화 비율이 낮은 반면, 북(조선)은 25 : 57 : 18로 사회주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높다고 한다. (Nicholas Eberstadt, 같은 책, 15쪽 도표 참조)

26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중국 4대기업의 하나인 중달집단공사는 1995년 9월 26일 베이징에서 1996년 3월부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관광사업계획은 제2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칠보산에서 시작하여 백두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북(조선) 당국은 이 지역관광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물론, 남(한국)주민들에게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세계일보 1995년 11월 21일) 유럽아시아 비즈니스 컨설턴트(EABC)사의 회장 토니 미셸은 북(조선)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1996년 3월 커다란 카지노가 들어서는 한편, 홍콩 등과 연결되는 항공로가 개설된다고 1995년 11월 16일 밝혔다. 그는 홍콩의 아시아개발회사가 이 지역에 모두 2억달러를 들여, 카지노와 아파트, 면세점 센터 등을 착공하기로 하고 1995년 10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계약했으며, 홍콩의 뉴 노스이스트 아시아사도 1996년 1월까지 이 지역과 외부를 헬리콥터로 잇는 항공로를 개설하기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5년 11월 17일)

27 ) 북(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남(한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북(조선)은 1991년부터 제2차 과학기술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3개분야에 대한 집중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산업체질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간에 총련과 합작투자, 중국과 기술협력을 통하여 컴퓨터 생산공장과 전문기관을 잇달아 세웠다고 한다. 현대산업을 움직이는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컴퓨터 기술수준은 정책목표를 보면 1991년까지 32비트급 컴퓨터를 실용화하고 64비트급 극소형컴퓨터를 개발해 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금 16비트급 개인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컴퓨터를 생산한 것은 1982년쯤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와 8비트급 마이크로 컴퓨터 1대를 시험생산한 뒤 '봉화 4·1'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다. 1987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원조를 하여 평양에 집적회로 시험공장을 완공, 16비트급 컴퓨터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은 60여

개 공장에서 0·9평방센티미터에 60-1백만개 칩이 들어가는 집적회로를 생산하고 있는데, 2천년까지는 집적도 1천6백만개의 16메가급 집적회로를 개발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총련의 과학자들과 공동연구하여 산업로봇을 소형화, 고기능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지금 '유연프레스 종합체'라고 하는 로봇이 일부 공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연구 및 인력양성기관으로는 1990년 10월 총련이 지원하여 세운 '조선컴퓨터센터'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1990년에는 '평양전자계산기 운행사'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창덕'을 개발했다. 이것은 개인컴퓨터 문서처리용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하드웨어 부문에서 자체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2년 6월 22일자)

28 ) 1985년 소련 과학아카데미 세계사회주의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나온 통계(통일월, 북한의 정치경제 [1988]에 수록됨.)를 보면, 1979년 현재 북(조선)의 연료 및 에너지자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93.6%로 나와있으며, 따라서 북(조선)의 총에너지 소비량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이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87.9%며, 일본은 석유의 해외의존도가 99%, 석탄은 88%라고 한다. (이찬행,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과 변화 [서울:도서출판 두리, 1993], 208쪽)

29 ) 북(조선)의 석탄매장량은 147억t으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79억t을 파내어 쓸 수 있다고 한다.

30 ) 이것은 석탄을 캐내면 캐낼수록 탄전의 깊이가 차츰 깊어져서 단위당 생산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31 )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한 자료를 따르면, 호주의 석유탐사업체인 비치 페트롤리움사가 북(조선)의 동해안 유역 3만 평방km에 대한 석유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1994년말 북(조선)과 석유탐사와 생산량 분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두 차례 방북했다고 한다. 탐사대상지역의 지질구조는 생산성이 매우 높은 러시아의 사할린유전지대와 비슷하며 물깊이는 100-200m 정도라고 한다. 이 지역은 이미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7천5백평방km에 대해 지질탐사시험을 실시했으며, 북(조선) 당국도 지질구조 확인을 위해 시추공 2개를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국제석유 메이저나 일본업체들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1995년 11월 21일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영국의 셸 퍼시픽사가 석유비축공급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북(조선)의 '중앙통신'이 1995년 11월 17일 보도했다고 한다. (도쿄=AFP 연합, 한겨레신문 1995년 11월 18일자)

32 )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정한 것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이 결정문을 채택. 발표함으로써 알려졌다.

33 ) 남(한국)의 한 연구가의 지적은 "지금까지의 북한경제에 대한 연구는 흔히 경제현실의 전체적인 상(경제과정, 경제정책, 경제구조, 경제주체, 경제건설의 역사성)을 파악·제시하지 않은 채, 우선 북한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의 추출에 매달리는 '부조적' 수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는 제도권 관변학자나 진보권 연구자를 막론하고 일정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이만우, "북한의 경제",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길잡이, [월간 '사회평론' 1992년 신년호 별책부록], 283쪽)

34 )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란 1930년대 스탈린시기에 확립된 이른바 중앙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y)라고 한다. 이 체제는 생산수단이 모두 국유화되어 있고, 모든 산업이 국유, 국영으로 움직이며 농업도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으로 운영된다.

35) 토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보다 토론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시기 소련의 국가계획실에서 작성한 소련의 국가경제계획은 약 6만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이라고 한다. 또한 국가계획실이 작성한 생산우선순위의 균형과 조절안은 약 2천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물자공급국에서 작성한 안도 수천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한 경제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생산자 대중이 직접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36)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로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인 코르나이는 당이 노동계급에 대하여 부성적 역할(paternalistic role)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와 관료조직화에 대한 이념적 정당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맑스 자신이 생각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현존사회주의에서 나타나는 관료권력(bureaucratic power)이 결코 아니라 노동계급의 집단주의적 자기관리(collectivist self-management)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레닌과 스탈린의 생각은 노동계급의 전위(vanguard)를 자임하고 나선 당이 인민의 이익이 요구하는 것을 인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 위에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Princeton Univ. Press, 1992], 55-57쪽 참조)

37) 소련-동구형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업소의 최고책임자가 당비서인가 아니면 지배인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기업소에서 당비서는 형식상 지배인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반 생산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를 최고책임자로 여겼다고 한다. 기업소의 당비서는 정치 사업을 담당할 뿐아니라 사업촉진자(tolkach)로서 생산활동전반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국영기업소의 관리·경영에서 당비서의 우위성이 공식화된 바 있다.

38) 1961년 12월 김일성 주석이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창안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말한다.

39) 소련에서는 생산자들이 주인(proprietor)처럼 생산의 경영과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지만, 하향식-명령식 관료체제 안에서는 생산자들이 결코 주인의식을 갖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소련형 경제관리체제를 '행정명령식 체계'(administrative command system)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Gavril Kh. Popov, "From An Economist's Perspective: Bek's Novel "New Appointment"(Russian),

Nauka i Zhizn, April [4], Janos Kornai, 같은 책, 121쪽 각주 21에서 재인용) 코르나이는 이러한 사회주의의 관료적 경제통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성격을 "예속과 굴종의 심리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혹평했다. (Janos Kornai, 같은 책, 121쪽)

40)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는 생산자 대중이 어떻게 경영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냐 하는 물음으로 집약된다. 이 문제는 북(조선)의 경제관리가 과연 생산자 대중중심의 경제인가 아니면 소련형의 고전사회주의에서 나타난대로 행정명령식 관료중심의 경제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북(조선)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렇다. 어떤 학자는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자면, 첫째로 경제관리가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실현되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관리가 인민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하며, 셋째로 경제관리가 동지적 단결과 협조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림대규, '근로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고 있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평양출판사, 1993], 165쪽) 다른 학자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기업관리에 생산자 대중을 광범히 참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형식과 방법이 적용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의 월전투계획작성을 위한 군중토의사업체계와 질서는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계획화사업에 효과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중요한 형식과 방법으로 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계획과 기술발전계획을 비롯한 모든 계획들을 작성하고 그 세부적인 지표들을 맞물리는 사업을 군중토의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그리하여 계획화사업에서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킨다."고 설명했다. (박영근, 같은 책, 265쪽)

41) 독립채산제란 사회주의 국영기업소가 상대적 독자성을 보장해주는 관리운영제의 한 방법을 뜻한다. 독립채산제를 도입한 기업소는 그 기업소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관리·경영권에서는 기업소에게 독자성을 주어 스스로 생산수단을 관리하고 이용하여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조선)의 한 학자는 독립채산제가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과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말하는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과도기적 성격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것은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과 밀접히 연결된다. (중략) 기업소들이 경영활동을 잘하여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를 받게 되며 반대로 국가에 손실을 주었을 때에는 물질적 책임을 지게 되는 데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상품화폐관계가 있고 기업소들이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게 되는 것과 관련하여 단일한 국가소유를 이루고 있는 기업소들 사이에 주고 받는 생산수단이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적 형태를 띠게 되며 여기에서는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박영근, 같은 책, 249-259쪽)

42) 이 문제에 관련하여 북(조선)의 다른 경제학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두 자극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가 근로자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사회적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는 데로부터 밀접히 결합되게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국가적, 전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면 일할 수록 그들 자신의 몫도 늘어나게 되며 또한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열성껏 일하는 과정은 사회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이해관계와 전사회적 이해관계는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화롭게 결합된다. 여기로부터 물질적 자극은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것과 함께 노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를 키우는 공간으로 된다."고 밝혔다. (박영근, 같은 책, 223쪽)

43) 북(조선)의 경제학자는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옹계 배합할 때에는 당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결합이 더욱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지만 반대로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할 때에는 경제조직사업은 물질적 자극공간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기술적인 실무사업일면에 치우치게

되며 경제관리와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상태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 (중략)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여 근로자들의 정치적 자각과 사상의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여기에 물질적 자극을 옹계 배합할 때에만 당정치사업에 의한 대중동원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게 되며 이것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박영근, 같은 책, 223 쪽)

44) 자극체계에 관하여 한 경제학자는 "정치도덕적 자극이 사회전체의 리해관계에 대한 관심성을 반영한다면 물질적 자극은 개인적 리해관계에 대한 관심성을 반영한다. 정치도덕적 자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미래를 대표하는 공산주의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면 물질적 자극은 극복되어야 할 낡은 사회의 유물인 과도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근, 같은 책, 222쪽)

45) 소련형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28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스탈린시대에 확립되었으며, 1953년부터 1964년의 후르시초프시대는 자본주의의 패배와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환상적 전망을 따라 갔던 개혁실험의 전환기였다. (후르시초프는 "아마도 머지 않아 소련은 일인당 생산과 생산규모총량에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에 대한 평화적 경쟁에서 사회주의에게 세계적 판도의 역사적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고 호언장담했다. Nikita S. Khrushchev, "Report to the Congress", L. Gruliov and the Staff of the Current Digest of the Soviet Press (eds.) Current Soviet Politics: The Documentary Record of the Extraordinary 21th Congress of the CPSU, [New York:Columbia Univ. Press, 1960], 56쪽) 후르시초프의 이른바 '개혁 실험'에 대해서 북(조선)의 한 학자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약화시키고 지방분권화를 강화하며 물질적 자극을 경제관리의 기본방법으로 할 데 대한 리베르만주의가 정책화되어 장려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가 전사회적 리익보다도 개별적 집단의 리익에 적극 리용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박인회, '인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공고발전되는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평양출판사, 1993] 97-98쪽) 1964년부터 1982년의 브레즈네프시대는 고전적인 계획경제가 되살아난 시기였으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고르바초프시대는 이른바 경제개혁(Prestroika)과 개방(Glasnost)을 본격화했으며,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열친시대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46) 중국의 경제건설행정을 살펴보면, 우왕좌왕한 것이 드러나는 데, 1953년부터 1957년까지 이어진 제1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에는 소련형의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를 충실하게 시행해왔으나, 1958년 중·소분쟁이 일어나고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면서 소련형을 다소 수정하였다.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다시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1978년 덩소평이 등장하면서 실사구시를 주장하고 중국형 계획상품경제(Planned Commodity Economy)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47) 북(조선)의 경제학자는 "정치 도덕적 자극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고상한 사상의식,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려는 높은 정치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교양사업과 정치적 평가를 통하여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박영근, 같은 책, 222쪽)

48) 하버드 대학 경제학교수 코르나이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하여,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

루이농은 기초 위에서 더 많은 노동생산성을 불러온다”는 레닌의 유명한 말(V. I. Lenin, "Immediate Tasks of the Soviet Government"[1918], Collected Works, Vol. 25 [Moscow:Progress, 1969], 248

쪽)을 상기시키면서, 일찌기 마르크스와 레닌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윤리적 수준에서가 아니라 경제적 수준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고 지적했다. 소련형 사회주의의 공식이념은 이러한 경제적 우월성은 사회주의 제도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르나이에 의하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는 도덕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경향은 스탈린주의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모택동주의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와 같은 헝가리 출신의 맑스주의 철학자 게오르규 루카치의 말 "가장 나쁜 형태의 사회주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자본주의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언제나 생각하였다"는 말(Georg Lukacs, "Lukacs on His Life and Work: Interview", New Left Review, 68 [1971], 58쪽)

을 인용하였다. (Janos Kornai, 같은 책, 51-52쪽) 북(조선)은 이러한 정치 도덕적 우월성이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조선)의 한 학자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요구는 경제생활에서 생산성장속도를 얼마나 보장하는가, 사회로부터 얼마만한 량의 물질적 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착취에서 해방되고 실업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며 서로 반목하고 질시를 더는 하지 않게 된 근로인민대중은 경제생활상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하나의 대가정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일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이 요구는 생산의 계획적인 빠른 발전속도에 대한 요구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하며 자기에겐 차례지는 노동보수의 크기에 대한 요구보다 선차적이다. 바로 이러한 근로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충분히 실현시켜주는 경제제도가 사회주의 경제제도이며 그 본질적 우월성이다."고 주장했다. (서재명,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제도,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제도 [평양:평양출판사, 1993] 25쪽)

49) 중국정부는 맛은 떨어지나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을 장려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정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부 농민들은 값이 오르길 기다리며 농작물의 출하를 늦추고 있기도 한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 1993년 폐지된 식량배급권이 급속도로 부활하면서 현재 39개 도시 가운데 29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경지면적의 대규모 전용(지난 3년동안 1백만ha의 경작지가 사라졌다고 한다.)과 농민들의 무작정 도시진출로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국농업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공기오염, 산성비 등 환경오염까지 겹쳐 농업생산이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비료값 인상 등 농업생산비의 급상승과 1994년 25·5%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중국농촌을 해체의 위기로까지 몰며 '식량자급'이라는 대원칙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월드 워치'가 1994년말 발표한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6억4천만명의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4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중국 식량문제가 앞으로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식량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인구는 세계인구의 21%인데 비해 농업용수 7%, 경작지 7%, 산림 3% 밖에 되지 않아 넓은 국토에 비해 식량생산에 필요한 자원은 매우 모자란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5년 5월 8일자, 중앙일보 1995년 5월 17일자, 5월 19일

자)

50 ) 1986년 10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조-독 정상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은 독일통일사회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매우 작은 경작지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2백만ha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백50만ha 뿐이다. 나머지 50만ha는 경작이 어려운 산악지대이다. 우리는 30만ha의 농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51 ) 1961년 12월 김일성 주석이 평안남도 속천군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확립한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는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군인민위원회에서 따로 분리하여 전문적인 농업지도기관을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협동농장의 지도관리에서 '군중노선'을 구현한 '청산리방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52 ) 식량의 자급자족에 관련하여 외부의 통계자료는 북(조선)은 세계적으로 쌀생산이 13위국, 기장생산이 10위국, 콩생산이 11위국이라고 하였고, 이 기록은 북(조선)이 농업에 부적당한 산악국가라는 사실에 비추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The World in Figures [London: Economist Newspaper Ltd.], 1988. 박한식,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외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어문각, 1990], 각주 17에서 재인용.)

53 ) 이 문제에 관하여 북(조선)의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차이를 없애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로 하여 있게 되는 공업에 비한 농촌경리의 물질적 기초의 낙후성, 로동계급에 대한 농민의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서의 제한성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적 소유의 물질적 기초가 전인민적 소유의 물질적 기초의 수준에 이르며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로동계급의 사상의식으로 개조되며 농업 로동의 조건이 공업로동의 조건과 같게 되며, 로동활동을 통하여 맺는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동지적 협조와 방조의 관계, 관리운영수준이 공업에서의 수준에 이르게 될 때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의 차이는 극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박영근, 같은 책, 77쪽)

54 ) 최근 남(한국)의 언론이나 연구가들은 북(조선)이 부분적으로 개인적 소유를 허용하거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55 ) 북(조선)에서 발표한 사회적 혜택을 살펴보면, 국가가 협동농장에서 쌀 1kg을 74전 주고 사서 노동자들에게 8전에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써 노동자 한 세대가 해마다 식량공급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매해 평균 560원이라고 한다. 어린이 한 명을 탁아소로부터 대학까지 교육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한 사람당 평균 1만9천여원이라고 한다. 무상치료를 통하여 한 세대가 한 해동안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963원이라고 한다.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하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옷과 침구를 공급해주는 데 한 사람당 해마다 410원의 국가자금을 들고 있다고 한다. (림대규, 같은 글, 233, 237, 239쪽)

56 ) 북(조선)에서는 '노임'(남[한국]에서는 '임금'이라는 말도 쓰고 있으나, 이 말은 일본식 한자어로서, 식민지 언어잔재이므로 노임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이라는 개념 대신에 '생활비'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노임은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노임노동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적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57 ) 북(조선)은 1992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으로 '인민복지향상시책'을 발표하여 3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평균 43·4%나 올렸고, 사회보장연금은 평균 50·7%를, 각급 학교생의 장학금은 평균 33% 올린 바있다. (한국경제신문, 1992년 2월 17일자) 이에 대해 남(한국)의 한 연구가는 "시기적으로 김정일 비서의 5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파격적인 인민복지향상시책이 발표된 것은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비롯하여 '84년부터 인민생활 향상에 앞장서온' 김비서의 정치 활동에 성과가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찬행, 같은 책, 229쪽)



***Reports from our second donation trip  
to North Korea, March 1996 (2)***

1996. 3.

이 자료는 미국 언론인 버나드 크리셔가 3월 5일 두번째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홍수피해 지원관련 캠페인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3월 8일과 10일의 활동 상황을 전송한 보고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Reports from our second donation trip to North Korea, March 1996

### Pyongyang 3/8/96 (Report #3)

The snow melted and it turned out to be a beautiful day. We learned that at our ship with the 260 tons of rice we ordered had not yet arrived and is due to arrive tomorrow. So we borrowed 50 tons of rice from the Korea Cereals Export & Import Corporation against our shipment and hired five trucks (with Red Cross flags on them as normal trucks without such flags may not use the highway) which had a capacity of ten tons. We met these trucks, already loaded with 100 sacks each of 50 kilo of 35 percent broken rice. The sacks bore the label of a Singapore trading company. The trucks waited for us in front of the Grand Theater at 2:30 p.m.

Our two black Mercedes Benzes, Joseph in one car with Mr. Kim, and I in the other with Mr. Li, led the convoy of trucks for about an hour's drive to Sariwon City (which is the provincial capital for North Hwanghae Province) where we met the head of the provincial government's foreign section at the local hotel. We had stopped there once before last November when we made the clothing donations there. The gentlemen greeted our guides and recognized Joseph and me and rushed over and said with apparent surprise and obvious joy: "Mr. Bernard Krisher" in one word. That was all I could understand but he went on in Korean and our guides explained how grateful he was for our previous visit and how happy he was to see us

again so soon and unexpectedly. We then drove another twenty minutes to the rice warehouse of Unpa where we were greeted by the same woman we had also met in November at the village of Sochang dong village. She was the vice chairman of the Unpa City Administrative Council. She also showed great joy at seeing us again. She had only been notified that some foreigners were coming with rice donations but had not expected \*us\*.

The trucks then moved toward the warehouse and about 20 men had been mobilized to help unload the rice which they efficiently piled into neat stacks along the warehouse's walls as Joseph photographed and videotaped the operation. A woman with a notebook counted the sacks as they were piled up and each time 50 sacks had been unloaded she entered the figure into her notebook which Joseph also videotaped. I carried a few stacks myself and they were quite heavy. Each sack weighed 50 kilo. There were 100 sacks on each truck, totaling ten tons. So the total rice we delivered was 50 tons enough to feed 3,750 persons for a month. I had noted one sack which appeared to be less full than the rest but another sack already been placed on top of it. If sacks were short of rice it could be a claim that could be made against the shipper.

I asked whether they had a scale and a scale was brought out of the warehouse. I picked five sacks at random as they were unloaded and had them placed on the scale. Three sacks weighed exactly 50 kilo and two weighed more than 51 kilo, so I joked and cupped my hands that I had taken back 1

kilo. Everyone laughed.

I then picked some 20 kernels of rice that had fallen out of the sacks to the floor of one of the trucks and looked at them with the local people. They concurred that this appeared to be 35 percent broken rice. Some of the kernels were full size and about a third were smaller in size which confirms it was the type of rice we had ordered to be shipped.

I was satisfied that we donated 50 tons of 35 percent rice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Unpa. There were enough witnesses at this unloading operation to convince me the rice went to the people we had intended to receive it and they would receive a fuller diet from this donation. I asked some questions and learned that the winter had not been too harsh, many houses had been rebuilt but a number of farmers were still living in temporary housing and had experienced some cold days. A number of children had colds. The powdered milk we had donated the last time was very welcome and was properly administered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school that had been destroyed by the flood, which we saw on our last visit, was not yet rebuilt and the children were attending another school in a neighboring town. That school was now operating in two shifts. Our rice would be distributed to needy families. The current storage of rice enabled the local authorities to distribute 150 grams per person per meal or a total of 450 grams a day. Our distribution helped to assure the continuation of this ration.

After receiving many thanks and I in turn thanking the drivers and the team which lifted the heavy bags and stored them, we left and returned to Pyongyang where we go ready to go out for dinner with my old friend Ludo, a Belgian, who has been in Pyongyang for eight years, operating a diamond polishing joint venture factory and his charming Vietnamese wife, who was a former foreign student at Kim Il Sung University. We are also asking our guides, Mr. Li and Mr. Kim, to join us at the Azalea restaurant, one of the best Korean styler estaurants in the capital. As we let our drivers go home early to see their families (since this is also Women's Day) to prepare for tomorrow's trip to Anju , Ludo will pick us up in his mini-bus which he drives himself. Actually I fee l guilty to be eating so well while so many people here and elsewhere in the world survive on reduced rations.

#### **Pyongyang 3/10/96 (Report #4)**

It was another fine, clear day but very cold. Joseph and I with our two guides, Mr. Li and Mr. Kim Left the Koryo hotel at 8:30 and met five trucks carrying our rice in front of the Grand Theater. As our ship had not yet arrived, we borrowed another 50 tons from the Cereal Corporation. We drove along a beautiful and scenic highway for more than an hour north to the city of Anj u which had also been severely hit by floods. We led the convoy of trucks, eac h one carrying 10 tons but had to stop several times because the trucks were s topped by traffic police at checkpoints. Trucks are not

permitted to use the highways and they had to show the special certificates which they had been issued for this purpose. Our car also had suffered a flat at one point but our driver very skillfully replaced it in a matter of minutes.

We arrived at Anju, an industrial city with a population of 220,000 at 11:30 and first went to rest at the Chong Chong Dong Hotel, situated atop a hill overlooking a river and the city. This city has a broad six lane main street with flats lined up at each side. Mr. Li Sa Yong, vice chairman of the City's administration division, who met us at the gate of the city, explained as we drove to the hotel that this wide street had been flooded up to the second story of these buildings. We later walked to a mud embankment, aimed at preventing such a flood and saw how it had been cracked and had fallen apart. It has since been reinforced again with sand bags.

We were also accompanied on this trip by Mrs. Nam Yong Ae, vice director of the cereal department of the Flood Rehabilitation Committee, who manages the cereal deliveries to the flood victims throughout the country. She rode in one of the trucks to assure they would not lose us.

After assembling at the hotel we drove to the rice storehouse with our trucks. There, some 20 workers stood ready to unload the rice and pile the sacks up into neat piles. I again requested a scale and we weighed the



sacks. This time six out of eight sample sacks weighed 300 to 500 grams less than the full 50 kg.

The sacks had the words "Singapore" written on them, also "Suno Chian Lee, Atuc Fair Price." I was perturbed at this discrepancy and asked Mrs. Nam. She confirmed that they frequently experienced such shortages but had stopped claiming because the sellers refused to accept their claims. She said this was 10 year old rice purchased from Japan. It apparently was Thai or other non-Japanese rice which the Japanese had purchased from third countries and not used because it was not to the taste of the Japanese. She said when claims had been made before about the weight discrepancies they were told when the rice was packed it had weighed the full amount but over the years the moisture in the rice had evaporated and that is why the rice weighed less. I told her I felt this was no excuse and the sellers should make for the difference in weight at the time the rice is bought. I was surprised that sellers of rice to people threatened with famine could be permitted to take such advantage of them.

The quality of the rice on examination, however, was of very good quality. Hardly any broken pieces.

A monitor carefully counted all the sacks and wrote the details into his book.

After we had unloaded everything we returned to the hotel for lunch and I requested to meet a family which had been uprooted by the flood. I heard many homes had been demolished and those families had either been placed into new apartments being built along the main street (usually five story walk-ups) or were still living with friends, coworkers or relatives.

We walked up three flights of one of these newly built apartments and visited a family where the grandfather was celebrating his 60th birthday, an auspicious event, and various sons and daughters and grandchildren had assembled with him. We had a lively conversation with them for about an hour, all of which Joseph videotaped, and the grandchildren were prompted into singing a song. They occupied a three story apartment and the eldest son and his family were living with them. Two sons and a son-in-law all worked in the city's chemical factory which produces fertilizer.

We walked about reunification and relatives. This family has relatives in South Korea whom they haven't seen or heard from in nearly 50 years but they also have relatives living in the States who have visited them in Anju. I asked about their rice ration and was informed before the flood each person received 600 grams a day but this was now reduced to 450, or 150 grams per meal. Families get their allotted rice twice a month in sacks at rice distribution centers.

On the street I stopped a man riding on a bicycle and surprised him by

speaking English to him as he got off his bike. This was a way to be able to pick my own candidate at random and inquire about the food situation. My guide then came over to interpret. He told us he was in his thirties, a driver, had two children and didn't know exactly what his rice ration was "because my wife takes care of that and does the cooking" but stated he "was probably" getting a lesser ration than before but it did not bother him. He was not hungry.

After returning to Pyongyang we went to the warehouse where a lot of clothing we had shipped was stored and also boxes of powdered milk donations from Wyeth-Eisai and shoes from Ohtsuka Shoe Co. We will take these with us to Huichon.

From here I dropped by to the residence of the Cuban ambassador, Jose Ramon Rodrigues Varona, who had stopped by the hotel earlier to look for me. He is a colleague of my good friend Amb. Gerra, the Cuban ambassador in Beijing, who was formerly the envoy to Tokyo. And we had a late dinner at the Koryo Hotel with Vladimir I. Azaroushkin, counsellor of the Russian Embassy.

This morning we will leave soon for another distribution in Huichon County of Chagang Province.



***Reports from our second donation trip  
to North Korea, March 1996 (3)***

1996. 3.

이 자료는 미국 언론인 버나드 크리스셔가 북한  
홍수피해 지원관련 캠페인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3월 11일과  
12일의 활동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한  
크리스셔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북측의 공식답변을  
전송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Reports from our Second Donation Trip to North Korea**

### **Pyongyang 3/11/96 (Report #5)**

We left at 8:30 a.m. again yesterday morning in our two Mercedes Benzes with our guides, Mr. Li Jong In and Mr. Kim Dae Gil for Huichon County in Chagang Province. Mrs. Nam also joined us again. Huichon is about 130 kilometers north of Pyongyang. We met five trucks loaded with 50 tons of rice (which we borrowed again from the Cereal Corp. because our ship has still not arrived) and stopped at a warehouse to pick up the powdered milk donated by Wyeth Eisai and shoes from Otsuka Shoe Company.

We then drove for several hours on a picturesque newly completed highway and then turned off to even more scenic winding mountain roads to Huichon City. I could well imagine if a few good hotels, a golf course and an airport were situated near here, throngs of Japanese could fly in for weekends of rest and recreation, unbothered by long lines to play golf and it would be less than a two hour flight from Tokyo.

We stopped briefly for a rest and a lunch hosted by Mr. Pak Kang Gun, Chairman of the Administration and Economic Committee of Huichon, at the Huichon Hotel. Mr. Pak, who is the equivalent of the city's mayor, expressed the hope that we would send more rice to Huichon in the future and I promised we would focus our next campaign on this city which had suffered greatly during the flood. Thousands of homes had been destroyed

and not all the victims were yet housed in new ones. The city of 220,000 is an industrial city with two joint venture factories. One is jointly run with a Japanese-Korean and produces silk threads from cocoons which are exported to Japan; the other is a machinery plant that was established with the Soviet Union but since its collapse, neither parts nor funds have been coming in and the plant is practically inoperative. The city is considering other investors. I asked Mr. Pak how rice donations such as ours would help the food shortage and he said this was supplementary rice for food victims in addition to the reduced rations people were now getting. He said it would go to the neediest.

We left for the city's rice warehouse and watched a group of workers there unload rice as we had observed it in Unpa and Anju on the previous days. This time the rice sacks were white. The origin was Vietnam. The quality was almost perfect and the random sacks we checked all weighed the full amount.

After unloading four trucks we took a final truck of 10 tons of rice to a neighborhood rice distribution center where about 50 people had been gathered to receive rice I would distribute personally. These were all families whose homes were completely destroyed by the flood, who had lost their possessions and lived in camps until their new homes were completed and where they now reside. While giving them rice and shoes I talked with them about their lives and food experiences. This group was getting an extra ration through me. Each one presented a slip allowing them to receive this ration, based on family size.

Our final stop was the Huichon Hospital where we would donate the powdered milk. Dr. Cha Ki Chol, the deputy superintendent; Dr. Yu Kil Yong, chief of the public health department; Dr. Li Kwang Ho, pediatrician, and Ms. Yu Sun Yong, a pediatric nurse greeted us in front of the hospital. We went to Dr. Cha's office to present him with the infant formula powdered milk cartons and explain how it is used.

Dr. Cha then took us to a room occupied by four mothers with their severely malnourished children. One of the children was crying with apparent pain. The mothers holding these children looked sad and concerned. Dr. Cha explained that during the flood, water had filled the hospital's basement nearly to the ceiling and the ten boilers were now broken; there have been no funds available to repair or replace them. Consequently the hospital is now too cold to house patients except the most severe cases who are in rooms heated by stoves. Most of the patients are being treated in their homes and the hospital's 500 beds are mainly empty. Surgery is performed on the second floor and as soon as they are able, the patients are moved to their homes. The doctors are out all day on house calls. The four most serious malnourished children we saw were kept at hospital. Another 20 were being treated at home.

I asked Dr. Cha about the boiler repair and what it would take to fix them. He said they might eventually be fixed under the government budget but there was not enough funds around. If he had \$10,000 from an outside source, he said, they could order the parts and engineers immediately from the North Korean factory that makes such boilers and they would get a



priority repair. These boilers would then be in working condition again in two months or so and the hospital could be operative again. This is the major general hospital in Huichon, serving the general population.

I have chosen to make a priority appeal to repair these boilers through this Internet Home Page. I hereby appeal to all the readers of this Home Page to consider contributing to a special fund aimed at collecting \$10,000 to get these boilers fixed as soon as possible. Once this fund is reached I will wire the money immediately directly to Dr. Cha and we will subsequently learn of its progress.

\* \* \*

...Bernard and Joseph Krisher returned to Tokyo via Beijing on Wednesday night.

### **Pyongyang 3/12/96 (Report #6)**

We learned yesterday morning that our ship, the Ryong Gang, had finally arrived during the night of March 10th and our rice would be off loaded the next morning (March 11) so after breakfast we drove to Nampo port, about 30 minutes from Pyongyang, with Mr. Kim, Mr. Li and two officials from the Korea Cereal Export & Import Corp., Mr. Kim Ha Il, director, and Mr. Choo Gwang Wook who joined as interpreter.

They took us directly to the ship, which we boarded and looked down into the freight storage area below the deck where we saw our 260 tons of rice in 50 kilo burlap bags together with other rice. Before our arrival, cranes

had already off-loaded most of 100 tons of our rice onto 20 trucks we had hired. Ten tons were being loaded onto each truck. The Flood Damage Rehabilitation Committee had obtained these trucks for us from the central transportation organization with considerable difficulty as such trucks are in constant motion transporting good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ey provided the trucks and drivers without charge while we offered to pay just for the fuel which in this case was \$800 for the 20 trucks to go to Anju for a second donation mission there.

Previously we had donated 50 tons each (with five hired trucks) to Unpa, Anju and Huichon.

We watched this loading operation, then returned to the Koryo Hotel for lunch and met the trucks again at around 4 p.m. after all the rice had loaded, in downtown Pyongyang in front of the Pyongyang Hotel.

This ship came from Japan with Thai rice purchased from Japan. Our rice was said to be consolidated with rice that had been ordered by commercial establishments such as hotels, restaurants, and cooperative enterprises, also rice purchased by the government to supplement domestic civilian shortages.

While waiting for the trucks to arrive, we learned that our convoy would be accompanied by several officials whose help had been recruited to assure a smooth journey.

Mr. Oak Tae Roo, in charge of all government civilian truck transport, who manages some 3,000 trucks and perhaps more than twice as many drivers, drove up in his car to greet us and thank us for our donation. He said this may have been the first time he had organized such a convoy of trucks to deliver rice which is usually shipped by rail.

Mr. Chi Yong Gil, director of the government's cereal department and the superior of Mrs. Nam, who had accompanied us the last two days and who was with us again, also joined us on the trip to Anju. They all thanked us and the Internet campaign for our concern over their flood victims.

While waiting for all the trucks to arrive, we chatted on the street and Joseph videoed our conversation. In an informal discussion, I elicited strong denials from everyone that such rice could be diverted to the military.

The consensus also was the food shortage was growing more severe every day with the worst yet to come. Some said April and Mrs. Nam predicted May could be a very severe month of food shortage if international donations did not increase.

I asked Mrs. Nam about other cereal donations such as wheat and maize, which was considerably less expensive per ton than rice and had about the same nutritional value (according to Trevor Page of WFP). I inquired if it might not be more worthwhile to donate twice as much maize as rice. She insisted this was a personal, not an official answer, but said she agreed with me.

I also inquired about the rationing system. It was explained that the government subsidized the rice, selling it to the public at a much lower rate than it purchased it from abroad or from the farming cooperatives. Rice was also rationed according to one's type of work—not position. Average rations used to be 200 grams per meal for adults or 600 grams a day but heavy laborers such as miners or farmers had higher rations, i.e. 800 grams. Those of 600 gram rations per day had been cut to 450 but some of the high ration workers such as miners were said to be still on 800 where it was possible. Donations such as mine, Mrs. Nam, and also others I questioned independently, said would enable eligible persons among flood victims who required extra food intake to receive supplementary rations. Candidates to receive such additional occasional rations were chosen by local community or work team leaders who knew the health or age factors of their teams and made such decisions on a fair basis, I was told. Such was the case where I personally helped to distribute my rice in Huichon a few days before. The people who had lined up for our rice had large families, older parents, young children or ill people in their households.

Twenty trucks loaded with our rice had now all arrived and our convoy took off for Anju on the recently completed expressway. It was a dramatic and moving scene to see all these trucks following our two cars. We reached Anju just before sundown and were still able to photograph and video the sacks being unloaded inside the guarded rice storehouse, this time the quantity was four times the amount as before.

After all the trucks had been unloaded we drove to the Chong Chon Hotel for

a delicious dinner, served by a very sweet waitress who repeated everything that was said. When I said thank you she would say thank you and when Joseph said "kam-sahamnida" (thank you) she would repeat that too. The hotel was barely lit, to conserve energy. The lobby, toilets, etc. were all unlit and persons accompanied us with flashlights as we walked through the lobby. The dining room had one, probably a 75 or 100 watt bulb hanging on the ceiling. But the food, service, variety of local wines and beer were excellent. The wines soon heated us up, as the dining room was also unheated, and the dimly-lit dinner had a candle-lit, romantic atmosphere. The conversation about the flood victims and distribution continued, but we also talked about the children and families of those seated around the table, including banter with the waitress and much humor.

Earlier in the day I could not get the scene of the Huichon Hospital with its broken boilers, empty beds, malnourished children in the ward, and others confined at home, because of the lack of heat in the hospital, out of my mind. A number of patients would probably die this winter because of the hospital's inability to provide proper care. The doctor had said \$10,000 would fix the boilers and the patients could then be moved back in. I decided to try to raise the \$10,000 (in yen) as soon as possible in an emergency appeal once I got back to Tokyo.

So early in the morning, after breakfast, I asked one of our guides to contact Dr. Cha Ki Chol, the deputy superintendent of the hospital, to inquire if he could come to Pyongyang before my departure so I could provide him directly with a partial contribution toward the repair of the

boilers. When we returned to the Koryo Hotel, Dr. Cha had arrived and I presented him with 400,000 yen (\$4,100) toward the \$10,000 which I told him I hoped to raise within the next month.

He seemed to be moved by our quick reaction. He said the mothers of the malnourished children we had seen had been encouraged by our visit to the hospital and wanted to convey their thanks for our visiting their ward. He said he would begin immediately to take the necessary procedures to get the boilers repaired.

Kim Sok Chol, our guide from three previous trips, whom we had not seen on this visit, showed up at the hotel just then to look for us. I had left word at his society that we were in town and he himself had been abroad and just returned over the weekend. It was nice to see him before our departure the next morning. We also saw Ludo at the Koryo's second story bar near the billiard tables. So Joseph, Mr. Kim, Ludo and myself had a few beers together before Joseph and I went up to our room after midnight to pack for our departure today.

Mr. Li and Mr. Kim met us in the lobby at 8:30 this morning ready to leave for the airport. Mr. Li brought a bunch of documents--receipts for the purchase of gas, confirmations of the rice distribution, thank you letters to donors, etc.

He also brought a response from the Flood Damage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to four questions I raised some days before about donations and rice distribution. The response appears at the top of the Home Page and is repeated below.

RESPONSE TO QUESTIONS ON FAMINE SITUATION,  
DISTRIBUTION AND DONATION POLICY  
BY DPRK GOVERNMENT BY OUR INTERNET APPEAL

The following written response our questions, presented during our rice distribution visit to Pyongyang this week, was given to us on March 12, the day of our departure.

TEXT FOLLOWS

Flood Damage & Rehabilitation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D.P.R.K Tel: 850-381-2-7222  
Fax: 850-2-381-4660

March 12, 1996

Mr. Bernard Krisher

Chairman

Internet Appeal for North Korean Flood Victims

4-1-7-605 Hiroo, Shibuya-ku

Tokyo, Japan

Dear Mr. Krisher: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Internet Home Page on behalf of the flood victims and your most recent donation of 260 metric tons of rice collected through this campaign which you distributed directly to the civilian populations in Unpa, Anju and Huichon this past week.

In answer to the questions you have posed, I would like to answer as follows:

Question (1): *We have recently read that you have stopped accepting international donations for the flood victims. But it is not clear if this is a unilateral decision or only directed against certain kinds of donations. Could you please clarify the situation?*

Answer: We are disappointed that our international appeal, to help victims of the severe floods which hit our country last fall and caused vast destruction of our crops, has been misused and politicized by some countries and people who wish use this calamity to their advantage. They have attached political or other self-interest conditions to such aid. Their campaign has been aimed at blocking donations, causing mistrust of our distribution system and creating a picture of instability in our society. This is a slanderous campaign challenging our dignity. Therefore we are rejecting any aid associated with such a campaign including that from South Korean authorities some of whose sinister forces politicize the humanitarian aid because they wish to place obstacles and hindrances in the way of donation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ssued a study report stating North Korea had sufficient rice so there was no need to donate cereals. Because of this, other countries' organizations will not supply aid to us.

We do not deny all aid. Aid based on pure humanitarian motives is continuing.

We are also disappointed in organizations which pledged aid but have not provided it, donors who have requested unacceptable and humiliating conditions or demanded duplicated inspections which have already been



satisfactorily conducted by appropriate UN agencies and duly reported. We are also wary of those who have caused undue delays in providing the emergency aid they promised.

We are a society dedicated to providing fair and equal care to our people. We spared no effort after the floods to reconstruct homes and provide the necessities they lost. We were able to achieve such reconstruction in a minimum period under our Juche philosophy and we are able to survive even the critical food shortage through Juche, if necessary.

However we cannot deny that we face a very severe food shortage in the coming months, until this year's harvest, if a large amount of rice is not imported. Our need is only rice. Some countries and organizations, well meaning and otherwise, have decided to ignore this need and send us materials we do not require. We reject such aid.

Consequently we have also decided to issue no new appeals.

We will not refuse aid already promised or sincere and humanitarian future aid from countries or organizations which have not stipulated conditions or politicized their aid.

We are grateful to those who sincerely wish to aid us in this respect.

Question (2): *There have been media reports that international donations designated to the flood victims may have been distributed to the military. Can you comment on this?*

Answer: It is slanderous to imply that the international and private donations to our flood victims have been distributed to the military. Such statements are groundless. Those donations will not be, cannot be and are not given to the military. They are all provided without exception to the civilian population.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the WFP, UNDP and UNICEF have all monitored the distribution system of rice and are satisfied such donations have been properly distributed.

Question (3): *As rice is the only commodity you require, what is the best procedure for private organizations to help the flood victims?*

Answer: There are several ways--

(a) Donors may transfer cash by bank transfer to The Flood and Rehabilitation Committee and may contact us directly by fax to learn the means of transferring such funds to us. Donors will receive full written documentation and photos of their donations' distribution. They can discuss the details of such donations by sending us a fax and we will respond.

(b) Donors may also purchase rice directly and ship it to one of our ports consigned to our committee. When it arrives and again when it is distributed we will provide a full accounting and documentation to the donors.

We can also refer potential donors of rice to several firms, located in Europe, which will provide such rice (35 percent/broken) at \$250 per metric ton including transportation to Nampo port. Donors may then negotiate with these firms directly.

(c) Donations may also be made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or other private organizations with whom we are in close and regular contact such as your Internet Campaign and others. The best way to deliver actual cereal donations is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as they are expert in this field.

The most important donation now is cereals but other assistance is also still acceptable if it is not attached to any sinister political conditions.

Question (4) *Can you provide me with the current food situation? Is there a famine as has been reported or severe cases of malnutrition?*

Answer: No one can deny that the destruction of our stored rice and lost crop in our farm belt has resulted in severe belt tightening among our populations. We do face a growing food shortage as the statistics disseminated by the FAO and WFP indicate. Their independent February report states "The U.N. WFP/FAO mission found that production, imports and already committed food aid would only cover 4.8 million tons of rice, leaving a shortfall of some 1.2 million tons to feed a quarter of North Korea's 22 million people devastated by the flood."

Sincerely yours,

Li Jong Hua

Representative, Flood Damage &  
Rehabilitation Committee



## *Country Report: North Korea*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1996. 3.

이 자료는 '95년 10월 미 국무성이 발표한  
북한의 분야별 개황(Profile)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미국 국무부 북한 보고서 (Country Report: North Korea, '95/10)**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 North Korea, October 1995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This is one in a series of reports prepared by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s which provide summary information about selected independent states, dependencies, and areas of special sovereignty in the world; and selected multilateral organizations.

October 1995

**Official Nam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FILE**

***Geography***

Area: 120,410 sq. km. (47,000 sq. mi.), about the size of Mississippi.  
Cities: Capital--Pyongyang. Other cities--Hamhung, Chongjin, Wonsan, Nampo, and Kaesong.  
Terrain: Approximately 80% of land area is moderately high mountains separated by deep, narrow valleys, and small cultivated plains. The remainder is low land plains covering small, scattered areas.  
Climate: Long, cold, dry winters; short, hot, humid, summers.

***People\****

Nationality: Noun and adjective--Korean(s).  
Population (1994 est.): 21.8 million.  
Annual growth rate: 1.9% (1991).  
Ethnic groups: Korean; approx. 50,000 Chinese; some 1,800 Japanese

spouses of Korean returnees from Japan.

Religion: Buddhism, Shamanism, Chongdogyo, Christian; religious activities have been virtually nonexistent since 1945.

Language: Korean.

Education: Years compulsory--11. Attendance--3 million (primary, 1.5 million; secondary, 1.2 million; tertiary, 0.3 million). Literacy (1994)--90%.

Health: Medical treatment is free; 1 doctor for every 700 inhabitants; 1 hospital bed for every 350. Infant mortality rate (1992)--30/1,000. Life expectancy (1990)--males 66 yrs., females 73 yrs.

### **Government\***

Type: Highly-centralized Communist state.

Independence: September 9, 1948.

Constitution: 1972; reportedly revised in 1992.

Branches: Executive--President (chief of state); Premier (head of government). Legislative--Supreme People's Assembly. Judicial--Supreme Court, Provincial, city county, and military courts.

Subdivisions: 9 provinces; 4 province-level municipalities--Pyongyang, Kaesong, Chongjin, Nampo; 1 Free Trade Zone (FTZ)--Najin-Sonbong FTZ.

Political parties: Korean Workers' (communist) Party.

Suffrage: Universal at 17.

Defense (1992 est.): 1.2 million people under arms; military spending is 20-25% of GNP, with about 20% of men ages 17-54 in the regular armed forces.

Holidays: Independence Day, August 15; National Day, September 9; the late Kim Il Sung's birthday, April 15; Kim Jong Il's birthday, February 16; Founding of Korean Workers' Party (KWP), October 10; other holidays.

Flag: Two blue horizontal stripes at the top and bottom; two white narrow stripes; and a wide red center band on which appears a red star in a white circle.

### **Economy\***

GNP (1991 est.): \$22.5 billion. Per capita (1991 est.): \$1,038.

Agriculture (30% of GNP): Products--rice, corn, potatoes, fruits, vegetables, tobacco.

Mining and Manufacturing (31% of GNP): Types--steel, cement, textiles, petrochemicals, machines.

Services and Other (39% of GNP).

Trade (free on board, 1990): Exports--\$1.95 billion; machinery and equipment, military hardware, iron, steel, metal ores, nonferrous metals, nonmetallic minerals, textile fibers. Imports--\$2.85 billion: textiles, petroleum, coking coal, grain. Major partners--Russia, China, Japan, Hong Kong, Europe (this figure does not include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Exchange Rate (August 1995)--2.02 won=U.S.\$1.

###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 member, September 1991. UN-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ternational Postal Union (IPU),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UN Development Program (UNDP),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Nonaligned Movement (NAM).

\*In most cases, the figures used above are estimates based upon incomplete data and projections.

### ***GEOGRAPH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occupies the northern portion of a mountainous peninsula about 966 kilometers (600 mi.) long and 217 kilometers (135 mi.) wide, projecting southeast from China, between the Sea of Japan and the Yellow Sea. Japan lies about 193 kilometers (120 mi.) east of the peninsula, across the Sea of Japan. North Korea shares border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ong the Yalu and Tumen Rivers--and, with Russia--along the Tumen



Rive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marking the line of separation between the belligerent sides at the close of the Korean War, forms the boundary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A demilitarized zone (DMZ) extends for 2,000 meters (just over one mile) on either side of the MDL. Both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old that the MDL is only a temporary administrative line, not a permanent border.

Approximately 80% of North Korea's terrain consists of moderately high mountain ranges and partially forested mountains and hills separated by deep, narrow valleys and small cultivate plains. The most rugged areas are the north and east coasts. Good harbors are found on the eastern coast. Pyongyang, the capital, near the country's west coast, is located on the Taedong River.

The climate reaches extremes in the winter and summer. July and August are normally the warmest and most humid months. January is the coldest; temperatures often drop below -20 degrees C (-4 degrees F). Rainfall is concentrated in the summer months, usually occurring in June and July. Snowfall is generally light, but the ground is covered for long periods.

## **PEOPLE**

Korea was first populated by a Tungusic branch of the Ural-Altaic family, which migrated to the peninsula from the northwestern regions of Asia. Some of these peoples also populated parts of northeast China (Manchuria); Koreans and Manchurians still show physical similarities-- in their tall height, for example. Koreans are racially and linguistically homogeneous. Although there are no indigenous minorities, there is a small Chinese community (about 50,000) and an estimated 1,800 Japanese wives who accompanied the approximately 93,000 Korean returnees from Japan around 1959-62.

Beginning in the mid-1920s, th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concentrated its industrial development efforts in the comparatively underpopulated and resource-rich north, resulting in a considerable movement of people northward from the agrarian southern province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trend revers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hen more than two million Koreans mov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following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into Soviet and American military zones of administration. This southward exodus continu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1948 and during the Korean War (1950-53). Korea's population is now divided between the 44.5 million people in the south and the 21.8 million the north.

### ***Language***

Korean is a Ural-Altaic language. It is related to Japanese and remotely related to Hungarian, Finnish, Estonian, and Mongolian. Although dialects exist, the Korean spoken throughout the peninsula is mutually comprehensible. In the DPRK, the Korea alphabet (hangul) is used exclusively, unlike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a combination of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is used as the written language.

### ***Religion***

Korea's traditional religions are Buddhism and Shamanism. Christian missionaries arrived as early as the 16th century but it was not until the 19th century that they founded schools, hospitals, and other modern institutions throughout Korea.

Major centers of 19th century missionary activity included Seoul and Pyongyang, and there was a relatively large Christian population in the north before 1945. Although religious groups exist in North Korea, most available evidence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everely restricts religious activity.

### ***HISTORY***

According to legend, the god-king Tangun founded the Korean nation in BC 2333. By the first century AD,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the kingdoms of Silla, Koguryo, and Paekche. In 668 AD, the Silla kingdom unified the peninsula. The Koryo Dynasty (from which Portuguese missionaries in the 16th century derived the Western name "Korea") succeeded the Silla kingdom in 935. The Choson Dynasty (ruled by members

of the Yi clan) supplanted Koryo in 1392 and lasted until the Japanese annexed Korea in 1910.

Throughout most of its history, Korea has been invaded, influenced, and fought over by its larger neighbors. Korea was under Mongolian occupation from 1231 until the early 14th century and was plundered by Japanese pirates in 1359 and 1361. The unifier of Japan, Hideyoshi, launched major invasions of Korea in 1592 and 1597. When Western powers focused "gunboat" diplomacy on Korea in the mid-19th century, Korea's rulers adopted a closed-door policy, earning Korea the title of "Hermit Kingdom."

Though the Choson dynasty paid fealty to the Chinese court and recognized China's hegemony in East Asia, Korea was in fact independent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t that time, China sought to block growing Japanese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ussian pressure for commercial gains there. This competition produced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and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1905. Japan emerged victorious from both wars and in 1910 annexed Korea into the growing Japanese empire.

Japanese colonial administration was characterized by tight control from Tokyo and ruthless efforts to supplan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rganized Korean resistance during the Colonial Era--such as the March 1, 1919 Independence Movement--was unsuccessful and Japan remained firmly in control until the end of World War II.

At Japan's surrender in August 1945,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 but its fate was left to the two big victors of the war, the U.S. and the Soviet Union. First, at Cairo, they agreed that Korea would be free "in due course" and then, at Yalta, it was agreed to establish a four-power trusteeship over Korea. However, the unexpected early surrender of Japan led to the division of Korea into two occupation zones, with the U.S. administering the sou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SR taking over the area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e division was intended to be temporary to facilitate the Japanese surrender and until the U.S., UK, Soviet Union, and China could organize a trusteeship administration arrangement. In December 1945 the Moscow

Conference convened to discuss the future handling of Korea. A five-year trusteeship for Korea was discussed and a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was established. The commission met intermittently in Seoul but deadlocked over the issue of establishing a national government and in September 1947, with no solution in sight, the United States submitted the Korean question to the UN General Assembly.

The initial hopes for Korean independence quickly evaporated as the politics of the Cold War and domestic opposition to the trusteeship plan resulted in two separate nations with diametrically oppose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 ***Korean Conflict***

The Soviet Union and Korean authorities in the north refused to comply with the UN General Assembly's November 1947 resolution on elections and blocked entry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into the north. Despite this refusal, elections were held in the south under UN observation, and on August 15, 1948,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the south. Syngman Rhee, a Korean nationalist leader, became the Republic's first president. On September 9, 1948, the north establish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aded by then-Premier Kim Il Sung, known for his anti-Japanese guerrilla activities in Manchuria during the 1930s. Both administrations claimed to be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on the peninsula.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states, South Korea experienced several violent uprisings by indigenous, pro-North Korean leftist guerrillas. As Soviet troops left in late 1948 and the U.S. troops in the spring of 1949, border clashes along the 38th parallel intensified.

North Korean forces invaded South Korea on June 25, 1950.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its Charter, engaged in its first collective action, and established the UN Command (UNC), to which 16 member nations sent troops and assistance. Next to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the United States contributed the largest contingent to this international effort. The battle line fluctuated back and forth from south to north and after large numbers of Chinese "people's volunteers" intervened to assist the north, the battle line stabilized

north of Seoul near the 38th parallel.

Armistice negotiations began in July 1951, but hostilities continued until July 27, 1953. On that date, at Panmunjom, the military commanders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nd the UNC signed an armistice agreement.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South Korea is a signatory to the armistice per se, although both adhere to it through the UNC.

The armistice called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find a politic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Korea's division. This conference met at Geneva in April 1954 but, after seven weeks of futile debate, ended without agreement or progress. No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has replaced the 1953 armistice pact; thus, a condition of belligerency still exists on the peninsula.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 was created in 1953 to oversee and enforce the terms of the armistice. The Neutral Nation Supervisory Committee (NNSC)--originally made up of delegations from Poland and Czechoslovakia on the DPRK/Chinese People's Volunteers side and Sweden and Switzerland on the UN side--monitors the activities of the MAC.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sought to dismantle the MAC in its push for a new "peace mechanism" on the peninsula. In April 1994 it declared the MAC void and withdrew its representatives. Prior to this it had forced the Czechs out of the NNSC by refusing to accept the Czech Republic as the successor state of Czechoslovakia, an original member of the NNSC. In September 1994, at the DPRK's urging, China "recalle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representatives to the MAC, and in early 1995 North Korea forced Poland to remove its representatives to the NNSC from the North Korean side of the DMZ.

## ***Military***

North Korea now has the fourth largest army in the world. The North has an estimated 1.2 million armed personnel, compared to about 650,000 in the South. North Korean forces have a substantial numerical advantage (approximately 2 or 3 to 1) in several key categories of offensive weapons--tanks, long-range artillery, and armored personnel carriers. The North has perhaps the world's second largest special operations

force (55,000) designed for insertion behind the lines in wartime. While the North has a relatively impressive fleet of submarines, its surface fleet has a very limited capability. Its aging air force has twice the number of aircraft, but except for a few advanced fighters, the North's air force is obsolete. The North (and the South) deploys the bulk of its forces well forward, along the DMZ. Several military tunnels under the DMZ discovered in the 1970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North Korea has moved even more of its rear echelon troops to hardened bunkers closer to the DMZ. Given the proximity of Seoul to the DMZ (some 25 miles), South Korean and U.S. forces are likely to have little warning of any attack. The United States and ROK continue to believe that the U.S. troop presence remains an effective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 ***Terrorism***

The DPRK is not known to have sponsored any terrorist acts since 1987, when a KAL airliner was bombed in flight. The DPRK has made several statements condemning terrorism, most recently a May 1994 Foreign Ministry spokesman statement "opposing any act encouraging and supporting terrorism." The DPRK and ROK pledged in their 1991 reconciliation agreement to "refrain from all acts destroying and overthrowing the other side" and not use arms against one another. North Korea appears to be respecting a promise to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suspend its support for the Communist New People's Army (NPA).

Normalization talks with Japan have been complicated by North Korea's refusal to respond to quest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a Korean resident of Japan allegedly kidnapped by North Koreans to teach Japanese to DPRK agents. Pyongyang continues to provide sanctuary to members of the Japanese Communist League-Red Army Faction who participated in the hijacking of a Japanese airlines flight to North Korea in 1970.

### ***Reunification Policy***

Throughout the postwar period, both Korean Governments have repeatedly

affirmed their desire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but until 1971 the two governments had no direct, official communications or other contact.

In August 1971, North and South Korea agreed to hold talks through their respective Red Cross societies with the aim of reuniting the many Korean families separated following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 Korean War. Following a series of secret meetings, both sides announced, on July 4, 1972, an agreement to work toward peaceful reunification and an end to the hostile atmosphere prevailing on the peninsula. Officials exchanged visits, and regular communications were established through a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and the Red Cross. However, these initial contacts broke down and ended one year later after the kidnapping of Kim Dae Jung from Tokyo by the ROK intelligence service and there was no other significant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til 1984.

The breakdown of these talks characterized the start-stop, halting nature of inter-Korean dialogue. Basic differences in approach--Pyongyang then insisting on immediate steps toward reunification before discussing specific, concrete issues and Seoul maintaining that, given the long history of mutual distrust, reunification must be a gradual, step-by-step process--made improved North-South relations an elusive aim.

Dialogue was renewed on several fronts, in September 1984, when South Korea accepted the North's offer to provide relief goods to victims of severe flooding in South Korea. Red Cross talks to address the plight of separated families resumed, as did talks on economic and trade issues, and parliamentary-level discussions. However, the North then unilaterally suspended all talks in January 1986, arguing that the annual ROK/U.S.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 was inconsistent with dialogue. There was a brief flurry of negotiations on cohosting the 1988 Seoul Olympics that ended in failure--and was followed by the KAL 858 bombing.

In a major initiative in July 1988,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 Woo called for new efforts to promote South-North exchanges, family reunification, inter-Korean trade, and contact in international fora. Roh followed up this initiative in a UN General Assembly speech in which

Seoul offered for the first time to discuss security matters with the North.

The first meetings that grew out of Roh's proposals began in September 1989. In September 1990, the first of eight Prime Minister-level meetings between th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Prime Ministers took place in Seoul beginning an especially fruitful period of dialogue. The Prime Ministerial talks resulted in two major agreements: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Basic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Joint Declaration).

The Basic Agreement, signed on December 13, 1991, called for reconciliation and nonaggression and established four commissions. The four Joint Commissions--on South-North Reconciliation, South-North Military Affairs,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South-North Social and Cultural Exchange--were to work out the specifics for implementing the general terms of the Basic Agreement. Subcommittees to examine specific issues were created and liaison offices were established in Panmunjom, but in the Autumn of 1992 the process came to a halt because of rising tension over the nuclear issue.

The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Joint Declaration), initialed on December 31, 1991, forbade both sides to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and forbade the possession of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A procedure for inter-Korean inspection was to be organized and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JNCC) was mandated with verific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On January 30, 1992, the DPRK also signed a nuclear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as it had pledged to do in 1985 when joi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This safeguards agreement allowed IAEA inspections to begin in June 1992. In March 1992, the JNCC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Joint Declaration; but subsequent meetings failed to agree on the main issue of establishing a bilateral inspection regime.

As the 1990s progressed, concern over the North's nuclear program became a major issue in South-North relations and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 lack of pro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Joint Nuclear Declaration's provision for an inter-Korean nuclear inspection regime led to reinstatement of the U.S.-ROK Team Spirit military exercise for 1993. The situation worsened rapidly when North Korea, in January 1993, refused IAEA access to two suspected nuclear waste sites, and then, announced its intent to withdraw from the NPT in March 1993.

U.S.-DPRK talk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began in June 1993 and resulted in a joint declaration in which the North suspended it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laid the groundwork for continuing U.S.-DPRK talks. The complex negotiations deadlocked and in the spring of 1994 the DPRK created a crisis by unloading fuel from its 5 MW reactor. The United States responded by initiating consultations concerning UN sanctions.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visited the DPRK, and in July a further round of U.S.-DPRK talks on the nuclear issue was begun. These talks were recessed with news of the death of Kim Il Sung on July 8, 1994. They resumed in August and proceeded until the conclusion of the U.S.-DPRK "Agreed Framework" on October 21, 1994. (see the section on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Prospects for Re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had a difficult and acrimonious relationship in the forty years that have followed the Korean War. They have yet to have a Presidential-level summit. During former President Carter's visit, Kim Il Sung agreed to a first-ever South-North summit. The two sides went ahead with plans for a meeting in July but had to shelve it because of Kim's death.

The two Koreas have begun to develop economic ties. Following the ROK Government's 1988 decision to allow trade with the DPRK, South Korean firms began to import North Korean goods. Direct trade with the South began in the fall of 1990 after the unprecedented September 1990 meeting of the two Korean Prime Ministers. Trade between the two increased from \$18.8 million in 1989 to \$174 million in 1992.

During this period, Daewoo's chairman, Kim Woo Choong, visited the North and an agreement was created to build a light industrial complex at Nampo. In other negotiations there were discussions to develop tourism

and build road and rail links in Korea. Economic contacts continued to develop until the spring of 1993 when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PT slowed the expansion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 Sam prohibited substantial direct investment in the North until the nuclear issue was resolved, although inter-Korean trade continued with South Korea becoming one of the DPRK's largest trading partners. With the signing of the U.S.-DPRK Agreed Framework on October 21, 1994, President Kim announced he would again allow discussions for investments.

## **GOVERNMENT**

North Korea has a centralized government under the rigid control of the communist Korean Worker's Party (KWP). Kim Il Sung, commonly referred to as "Great Leader", dominated the government from 1948 until his death in July 1994. Kim served both as Secretary General of the KWP and as President of North Korea. A few minor parties are allowed to exist in name only, presumably to present a facade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to the outside world.

The 1972 Constitution was reportedly amended in late 1992, but the North has never publicized the changes. The DPRK government is led by the president and in theory a super-cabinet called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CPC). Officially, the legislature,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PA), is the highest organ of state power. Its members are elected every four years. Usually only two meetings are held annually, each lasting a few days. A standing committee elected by the SPA performs legislative functions when the assembly is not in session. In reality, the assembly serves only to ratify decisions made by the ruling KWP. The constitution designates the Central People's Committee (CPC) as the government's top policymaking body. It is headed by the President who also nominates the other committee members. The CPC makes policy decisions and supervises the cabinet or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 The SAC is headed by a premier and is the dominant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agency. The judiciary is "accountable" to the SPA and the President. The SPA's Standing Committee also appoints judges to the highest court for four-year terms that are concurrent with those of the assembly.

Politically, North Korea is divided into nine provinces and four provincial-level municipalities--Pyongyang, Chongjin, Nampo, and Kaesong. It also appears to be divided into nine military districts.

Little is known about the actual lines of power and authority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spite the formal structure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e death of Kim Il Sung, his son, Kim Jong Il, appears to have inherited supreme power. However, a year after his father's death, Kim Jong Il has not formally assumed Kim Il Sung's two main titles: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WP. An inner core of ranking member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including an increasing number of Kim Jong Il's followers, dominates the political system and the economy through an elaborate party structure and through the civilian and military bureaucracies. A pervasive personality cult has developed around Kim Jong Il, 52, who was groomed for many years to succeed his father. Kim's continuing media build up suggests that he will eventually succeed his father in one or both of his positions--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 ***Principal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Kim Jong Il--KWP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KWP Secretary, Supreme Command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son of Kim Il Sung and de facto heir.

Kang Song San--Premier, Politburo

Kim Yong Nam--Foreign Minister, Vice Premier, Politburo

Ch'oe Kwang--Politburo, Chief of General Staff,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Vice Chairm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Kye Ung T'ae--Politburo, KWP Secretary, Chairman of Supreme People's Assembly Bill Comm.

Kim Yong Sun--KWP Secretary, Chairman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reign Affairs Committee.

### ***ECONOM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resulted in imbalances of natural and human resources, with disadvantages for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By most economic measures, after partition the North was

better off in terms of industry and natural resources. The South, however, had two-thirds of the work force. In 1945, about 65% of Korean heavy industry was in the North but only 31% of light industry, 37% of agriculture, and 18% of the peninsula's total commerce.

North and South both suffered from the massive destruction caused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years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mobilized its labor force and natural resources in an effort to achie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Large amounts of aid from other communist countries, notably the Soviet Union and China, helped the regime achieve a high growth rate in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During the early 1970s, North Korea, probably noting the mor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outh, attempted a large-scale modernization program through the importation of Western technology, principally in the heavy industrial sectors of the economy. Unable to finance its debt through exports that shrank steadily after the worldwide recession stemming from the oil crisis of the 1970s, the DPRK became the first communist country to default on its loans from free market countries. In 1979, North Korea was able to renegotiate much of its international debt, but in 1980 it defaulted on all of its loans except those from Japan. By the end of 1986, the North's hard-currency debt had reached more than \$4 billion. It also owed nearly \$2 billion to communist creditors. The Japanese also declared the North in default. By 1993 North Korea's debt was estimated at \$10 billion.

Largely because of these debt problems but also because of a prolonged drought and mismanagement, North Korea's industrial growth slowed and per capita GNP fell below that of the South. By the end of 1979, per capita GNP in the North was about one-third of that in the South. The causes for this relatively poor performance are complex, but a major factor is the disproportionately large percentage of GNP (possibly as much as 25 percent) that the North devotes to the military.

In April 1982, Kim Il Sung announced a new economic policy giving priority to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through land reclamation, development of the country's infrastructure-- especially power plant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and reliance on domestically produced equipment. There was also more emphasis on trade. In September 1984,

North Korea promulgated a joint venture law to attract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The new emphasis on expanding trade and acquiring technology, however, has not been accompanied by a shift in priorities away from support of the military. North Korea has an international trade share--exports plus imports--of 12 percent of GDP, well below South Korea's figure of 55 percent.

In 1991, the DPRK announced the creation of a Special Economic Zone (SEZ) in the northeast region of Najin, Chongjin, and Sonbong. Investment in this SEZ has been slow in coming. Problems with infrastructure, bureaucracy, and uncertainties about investment security and viability have hindered growth and development.

North Korea's faltering economy and the collapse of trade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of the former socialist bloc have confronted Pyongyang with difficult policy choices. Other centrally-planned economies in similar difficulties have opted for domestic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The DPRK announced in December 1993, a three-year transitional economic policy placing primary emphasis on agriculture, light industry, and foreign trade. Despite its limited economic opening, the leadership seems determined to maintain tight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rol.

Although most North Korean citizens live in cities and work in factories, agriculture remains a rather high 30% of total GNP, although output has recently been falling. While trade with the South has expanded, no physical links between the two remain 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North is generally poor and outdated.

## **FOREIGN RELATIONS**

After 1945, the Soviet Union supplied the economic and military aid that enabled North Korea to mount its invasion of the South in 1950. Soviet aid and influence continued at a high level during the war; the Soviet Union was, in large part, responsible for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after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In addition, the assistance of Chinese "volunteers" during the war and the presence of these troops until 1958 gave Beijing some degree of influence in Pyongyang. In 1961, North Korea concluded formal mutual security treaties with the Soviet

Union (inherited by Russia) and China, which have not been formally ended.

In the 1970s and early 1980s,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Soviet-backed Vietnamese occupation of Cambodia, and the Soviet occupation of Afghanistan created strains in North Korea's relations with its two major communist allies. Pyongyang tried to avoid becoming embroiled in the Sino-Soviet split, obtaining aid from both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attempting to avoid dependence on either. Following Kim Il Sung's 1984 visit to Moscow, there was a dramatic improvement in Soviet-DPRK relations, resulting in renewed deliveries of advanced Soviet weaponry to North Korea and increases in economic ai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the Soviet Union in 1990 and the PRC in 1992 put a serious strain on relations between Pyongyang and its traditional allies. Moreover, the fall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in 1989 and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resulted in a significant drop in communist aid to North Korea. Despite these changes, and its past reliance on this military and economic aid, North Korea proclaims a militantly independent stance in its foreign policy in accordance with its official ideology of "Juche" (self-reliance).

###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U.S. Government supports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on terms acceptable to the Korean people. Recognizing that the North's isolation is an inherently destabilizing factor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an impediment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the DPRK to adopt policies that will help bring it more fully into the world community.

To advance this goal, and in support of President Roh's 1988 reunification initiatives, the U.S. Government, on October 31, 1988, announced the following steps regarding relations with the DPRK.

--Authorized U.S. diplomats to hold substantive discussions with DPRK officials in neutral settings;

- Encouraged unofficial, nongovernmental visits from the DPRK in academics, sports, culture, and other areas;
- Facilitated the travel of U.S. citizens to the DPRK by permitting travel services for exchanges and group travel on a case-by-case basis; and
- Permitted certain commercial exports to the DPRK of goods that meet basic human needs (food, clothing, medical supplies, etc.) on a case-by-case basis.

As a result, there have been cultural, academic, and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rom January 1989 to May 1993,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met 33 times in Beijing. The first political-level meeting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ccurred on January 22, 1992 between U.S. Under Secretary of State Arnold Kanter and Korean Workers' Party Secretary Kim Yong Sun. Both sides outlined their policies toward bilateral and inter-Korea relations.

After North Korea's announced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on March 12, 1993, the UN Security Council on May 11 passed a resolution urging the DPRK to cooperate with the IAEA and to implement the North-South denuclearization accord. It also urged all member states to encourage the DPRK to respond positively to this resolution and to facilitate a solution. In response, the U.S. held political-level talks with the DPRK in early June 1993 that led to a joint statement outlining the basic principles for continued US-DPRK dialogue and North Korea's "suspending" its withdrawal from the NPT. A second round of talks was held from July 14-19, 1993 in Geneva. The talks set the guidelines for resolving the nuclear issue, improving U.S.-North Korean relations and restarting inter-Korean talks. Following the DPRK defueling of its 5mw reactor, the resultant US push for UN sanctions and President Carter's June visit to Pyongyang, a third round of talk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pened in Geneva on July 8, 1994. On October 21, 1994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signed an Agreed Framework for resolving the nuclear issue.

*The Agreed Framework calls for the following actions:*

- North Korea agreed to freeze its existing nuclear program under enhanced IAEA safeguards.

--Both sides agreed to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for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LWR) power plants.

--The two sides agreed to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was obstructed initially by North Korea's refusal to accept South Korean-designed LWR model reactors. U.S. and DPRK negotiators met for three weeks in Kuala Lumpur, Malaysia and on June 12, 1995 reached an accord resolving this issue. North Korea agreed to accept the decisions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with respect to the model for the LWRs, and that KEDO would select a prime contractor to carry out the LWR project. The KEDO Executive Board announced on June 12, 1995 that it had selected the South Korean-designed Ulchin 3-4 LWR as the reference model for the project and that a South Korean firm would be the prime contractor. The South Korean prime contractor would be responsible for all aspects of the LWR project including design, manufactur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 the Kuala Lumpur Accord on the Geneva Agreed Framework, the DPRK also agreed to negotiate directly with KEDO on all outstanding issues related to the LWR project.

The U.S. also seeks progress from North Korea in the following areas: North-South dialogue; credible condemnations of terrorism, return of the remains of U.S. military personnel missing in action during the Korean War, and greater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U.S. has also expressed concern about North Korea's export of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technology, and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military threat.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at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primarily a matter for the people of Korea to decide. The U.S. Government, therefore, believes that a constructive and serious dialogue between the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ssues on the peninsula, and that concrete steps to promote greater understanding and reduce tension are needed to pave the way for



reunifying the Korean nation. The U.S. Government remains prepared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f so desired by the two Korean Governments and provided that both are full and equal participants in any such talks.

The United States does not maintain any diplomatic, consular, or trade relations with North Korea. Negotiations are ongoing, however, to implement the Agreed Framework's provision for an exchange of diplomatic missions at the liaison office level.

North Korea has been included on the U.S. list of states supporting international terrorism since January 1988, after North Korean agents bombed a South Korean airliner on November 29, 1987, causing the deaths of 115 persons. U.S. law prohibits almost all financ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by persons or firms subject to U.S. jurisdiction. Exceptions were made in 1988 for informational material and commercial export of goods meeting basic human needs. Export of goods, whether as a sale or donation, requires a specific license by the U.S. Treasury Departmen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Agreed Framework, in January 1995, the U.S. Government responded to North Korea's decision to freeze its nuclear program and cooperate with U.S. and IAEA verification efforts by eas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ur areas were specified.

-Authorized transaction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connections, credit card use for personal or travel-related transactions, and opening of journalist offices.

--Authorized DPRK use of U.S. bank system to clear transactions not originating or terminating in the United States. Unblocked frozen assets where there is no DPRK government interest.

--Authorized imports of magnesite, a refractory material used in the U.S. steel industry. North Korea and China are the world's primary sources of this raw material.

--Authorized transactions related to future establishment of liaison offices, case-by-case participation of U.S. companies in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supply of alternative energy, and disposition of spent nuclear fuel as provided for by the Agreed Framework,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ravel by private U.S. citizens to North Korea. However, they may only spend money in North Korea to purchase items related to travel. In addition, \$100 worth of merchandise for personal use may be brought back into the United States as unaccompanied baggage. On September 20, 1995 a consular protecting power arrangement was implemented allowing for consular protection by the Swedish Embassy of U.S. citizens traveling in North Korea. The Swedish Embassy in Pyongyang is not authorized to issue U.S. visas or passports. U.S. citizens and residents wishing to travel to North Korea must obtain visas in third countries.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further eas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s progress is made in implementing the Framework.

### ***FURTHER INFORMATION***

These titles are provided as a general indication of the material published on this country. The Department of State does not endorse unofficial publications.

Baldwin, Frank, ed. *Without Parallel: The American-Korean Relationship Since 1945*.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Barnds, William J. *The Two Koreas in East Asian Affair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6.

Bucher, Lloyd M. *Bucher: My Story*. New York: Doubleday, 1970.

Chung, Joseph S.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Clough, Ralph. *Embattled Korea: The Rivalry for International Support*. Colorado: Westview Press, 1987.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1*.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_\_\_\_\_.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Eckert, Carter, Ki-Baik Lee, Young Ick Lew, Michael Robinson, and Edward W. Wagner. *Korea Old and New: A History*. Seoul: Ilchokak Publishers for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Foot, Rosemary.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53*.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Han, Woo-kuen. *The History of Korea*.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71.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Henthorn, William. *History of Korea*.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 Hwang, In K. *The Neutralized Unification of Korea*. Cambridge: Schenkman, 1980.
- Kihl, Young Hwan.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Colorado: Westview Press, 1984.
- Kim, Hak-joon. *The Unification Policy of South and North Korea, 1948-1976: A Comparative Stud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7.
- Kim, Ilpyong J.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1975.
- Kim, Joungwon Alexander. *Divided Korea: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45-1972*.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Kim, Young C. and Abraham M. Halper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Praeger, 1976.
- Koh, Byung Chul.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 \_\_\_\_\_.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1969.
- Lee, Chong-sik.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 \_\_\_\_\_. *Materials on Korean Communist 1945-1947*. Honolulu: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1977.
- \_\_\_\_\_.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Lee, Chong-sik and Se-Hee Yoo,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1.
-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MacDonald, Donald S. *The Koreans: Contemporary Politics and Society*.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8.
- Merrill, John.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1988.
- Nahm, Andrew C. *North Korea: Her Past, Reality, and Impression*. Kalamazoo: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8.

Paige, Glenn D. *The Korean Decis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_\_\_\_\_.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66.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Ridgeway, Matthew B. *Korean War*. New York: Doubleday, 1964.

Scalapino, Robert A.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83.

\_\_\_\_\_.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Suh, Dae-sook. *Kim Il Sung: A Biograph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_\_\_\_\_.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_\_\_\_\_ and Lee, Chong-sik.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Available from the Superintendent of Document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20402:

Library of Congress. *North Korea: A Country Study*. 1994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1961.

Department of the Army. *Communist North Korea: A Bibliographic Survey*. 1971.

인터넷자료96-12호

SPECIAL REPORT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UPDATED Feb. 21, 1996

1996. 3.

이 자료는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식량계획(WFP)이 '95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현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특별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UPDATED Feb. 21, 1996

#### WFP UPDATE ON THE REPORT:

#### WFP EMERGENCY REPORT (Excerpt)

Issued weekly by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Report No. 07 of 1996 Date: 16 February 1996

The food pipelines for the following relief operations are currently of significant concern to WFP and unless contributions are made available during the coming weeks, serious gaps in distribution will occur during the coming months.

#### 1.3 WFP resourcing situation (in metric tons):

	1996 Needs	Estimated Availability	1996 Con- tributions	1996 Shortfall
Angola PRO	90,720	5,300	18,850	66,570
Ethiopia PRO	76,000	11,000	12,330	52,670
Georgia	25,733	6,694	---	19,039
Iraq	301,051	50,059	11,907	239,085
DPR Korea	15,785	---	6,500	9,285

Rwanda Reg.	500,608	161,543	100,000	239,065
Sudan PRO	20,246	10,246	2,000	8,000
Tajikistan	32,850	8,208	---	24,624
Uganda PRO	54,625	20,000	5,000	29,625
Former Yugo.	330,657	36,851	94,858	198,948

Definitions:

Estimated Availability: WFP in-country stocks as at 31 Dec 95 plus 1995 contributions being delivered in 1996.

1996 Contributions: contributions confirmed by donors in 1996

1996 Shortfall: outstanding 1996 WFP relief needs to be resourced (1996 requirements minus 1996 availability minus 1996 contributions.)

PRO: Protracted Refugee/Displaced Person Operation

Details of operations:

	Target Group	People to be assisted
Angola	IDPs and war affected	1,060,000
Ethiopia PRO	Som/Sud/Djb/Ken refugees	419,850
Georgia	IDPs and vulnerable groups	300,000
Iraq	vulnerable persons	2,151,000
DPR Korea	flood victims	500,000
Rwanda Regional	conflict victims	2,440,000

Sudan PRO	Ethiopian, Eritr. refugees	200,000
Tajikistan	IDPs and war affected	400,000
Uganda PRO	Sud/Zair/Rwa refugees	250,000
Former Yugoslavia	refugees/IDPs/war victims	2,246,600

## **WFP EMERGENCY REPORT**

Issued weekly by the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Excerpt of DPRK section)  
Report No. 06 of 1996 Date: 9 February 1996

### **HIGHL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1. Update**

- a) **US gives donation of USD2 million to WFP for relief operation in the DPR Korea.**
- b) **Current shortfall for WFP operation stands at 7,450 mt of rice and 675 mt of vegetable oil.**
- c) **Schools closed in January due to lack of fuel for electricity and heating; CARITAS school feeding to schools resumed with the reopening of schools 1 Feb.**

### **REPOR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1. UPDATE**

1.1 As the demand on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continues to exceed supply, the bulk of the population



continues to go short of food. In North Pyongan province people interviewed by WFP said that they were now only eating two meals per day. It appears that a per capita ration of about 9 kg of cereals per month is being sold to coupon holders at the normal highly subsidized rate through the PDS.

1.2 Schools were closed throughout the country for the month of January, when temperatures were 5 degrees below zero Centigrade, because there was no heating or electricity supply due to acute fuel shortages. This was the first time this had ever been necessary. During a WFP visit to South Hwanghe 1-4 February to monitor the distribution of CARITAS supplied rice at schools, kindergartens and nurseries, it was observed that although the schools have reopened, they are extremely cold, and the many of the children are suffering from coughs and colds. Absenteeism in the schools visited ranged from 20-30% Hot cooked school lunches prepared with CARITAS rice are being provided as they were in December before the schools closed. WFP has been entrusted by CARITAS to assist with in-country management of its rice contribution, including monitoring and reporting on distribution.

1.3 Resourcing situation: On 2 February,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 contribution of USD2 million for the purchase and delivery of food aid to the DPRK, through WFP. This together with contributions announced earlier by Australia,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itzerland, brings the total value of food aid channelled through WFP to USD3,881,000, enough to purchase and deliver approximately 12,800 mt of cereals. Of this total, distribution of 5,140 mt was completed by 9 December 1995. A second shipment of 5,000 mt of rice is being purchased by WFP and will arrive by the end of February or early March. A third shipment of 3-5,000 mt is likely to follow in early March, if tentative unconfirmed donations firm up. By the end of March WFP expects to have delivered 70% of its Emergency Operation commitment of cereals, but no vegetable oil. Other new donors have shown strong interest in supporting the relief efforts in DPR Korea. The shortfall is currently about 7,450 mt of rice and 675 mt of vegetable oil.

1.4 The Special Report of the FAO/WFP Crop Production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was released in Rome on 22 December 1995. The full report is now in draft and will be issued in Rome in February.

## SPECIAL REPORT

\*text partially lost here\*

nt agencies, in particular those responsible for agriculture, state planning and economics and finance. Discussions were also held with representatives of other UN bodies. In addition, field visits were made to North Pyongan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which are key agricultural areas, to assess (ex-post) the flood damage to agricultural areas, harvested crops and required remedial measures.

Between 30 July and 18 August, this year, an average of 300mm of rain across the country, coupled with high tidal waves caused flooding, which seriously affected agricultural production. As a result, rice and maize production fell sharply. In addition to agricultural losses, significant damage occurred to the irrigation network, transport, property and the infrastructure generally. The floods came at a critical time in the crop cycle that allowed very little opportunity for recovery in the aftermath of the floods. There was also effectively no opportunity to replant, given the short duration of the agricultural season in the country.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floods this year were extremely serious and caused extensive damage to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However,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floods made an already and rapidly deteriorating

food supply situation much worse, rather than caused the situation in the first place. It was estimated by the Mission, that Korea DPR would have carried a substantial food deficit this year notwithstanding the floods.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is, a stagnating agriculture, exasperated by the declining economic situation of the country . Only a small proportion, one fifth or 2 million hectares, of the country's land area can be cultivated, which severely limits its scope to feed a growing population. The problems of limited land are further compounded by declining soil fertility, due to monoculture and intensive farming and climatic conditions, which constrain cropping systems and rotations.

Given these constraints, the only option open to the country in the past, to produce more food, has been heavily intensive agriculture, based on scientific and well coordinated methods and high inputs of chemicals, machinery and irrigation. The emphasis, in other words, has been on maximizing the quantity of crops produced per hectare, instead of expansion of areas planted. The country enjoyed assured economic tie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China and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up to 1990 and a large part of its input requirements or shortfalls in cereal production used to be covered through a preferential system of trading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mainly the former U.S.S.R.. However, the break-up of the U.S.S.R. and a rapidly changing world in the 1990s, has effectively left the country isolated economically, with little capacity to

pay for requirements, inputs and foo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problem of food imports especially, exacerbated in the last two years by high international grain prices and the inability of China, a key supplier, to export large quantities of grain to the country, as it itself suffered reduced harvests which necessitated large imports, notably in 1995. In brief, therefore, a declining economy, low foreign exchange reserves, a large and persistent trade deficit and a difficult credit position, together mean that the country has serious problems in mainta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productivity and food supply, resulting from the failure to supply agriculture with required (imported) inputs to maintain intensive production. This has been compounded by the reduced ability to import larger quantities of food grain commercially to meet a growing food deficit.

Decl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has certainly manifest itself in the revision of the food rationing system by the Government and net drawdown of stocks. Previously, there was a rather cumbersome rationing system that involved 9 levels, ranging from 900 grams/day of cereals for heavy industrial workers to 100 grams/day for children in kindergarten. Presently a three level system operates, with age being the determining factor. Seventy five percent of the daily calorie intake under the ration is expected from cereals, of which about two-thirds would be rice and one-third maize. Even this reduced level of food intake has not been sustained and the Government now accepts a reduced average daily intake requirement of 2131 kcals and has revised the cereal composition of the

rations to 60 percent rice and 40 percent maize.

Based on this reduced level of calorie intake, the Mission estimates a requirement of some 3.69 million tons of food grain in 1996, to meet human consumption alone. The per caput yearly consumption of rice and maize would be 100 Kg and 67 Kg respectively, giving a total of 167 kg of cerea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ould need cereals for feed and industrial uses, though past levels can not obviously be sustained in an emergency situation and need to be reduced. The total grain requirements for 1996 are therefore estimated at 5.99 million tons. With floods this year, the amount available from domestic production is estimated at 4.1 million tons, which together with planned imports and food aid, already received or programmed, will raise total food availability to 4.8 million tons in 1996, leaving an overall shortfall of some 1.16 million to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es a grave food supply problem, aggravated by large reductions in output over the past two years due to adverse weather. There is a need for both emergency and project and programme food assistance as well as for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agriculture sector to raise domestic food production to more normal levels. Emergency food assistance is especially needed for the farming community, who have no established access to the Public Food Distribution System, in addition to young children and pregnant and nursing mothers. So far there has been very limited response by donors to providing emergency assistance. Only urgent mobilization of food assistance would

avert further hardship and possible starvation in the months ahead.

### **Food production in 1995**

Only some 20 percent of Korea DPR can be cultivated, wher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live. The rest comprises mountainous areas, which offer extremely limited scope for agricultural expansion. Total arable land amounts to some 2 million hectares, though only some 1.43 million hectares is suitable for cereal and other food grain production, of which approximately 80 percent is irrigated. Of the rest approximately 300,000 hectares is under fruit cultivation, and the remaining 270,000 hectares predominantly under mulberry trees for sericulture. Important features of agriculture in the country are, (1) the extremely limited scope for expanding cultivable area to enhance food production, (2) declining soil fertility due to monoculture and intensive farming techniques and (3) climatic conditions which do not permit more than one cropping season per year, on account of the limited number of frost free days, estimated at 165-180 days. There are two options available for area expansion open to the Government, which have currently been developed to a limited extent. These include (a) the reclamation of tidal areas, which would add a total of 300 000 hectares, if completed, for paddy production and (b) terracing in mountainous areas, for which the target is 200 000 hectares, for maize production. Despite the recognized necessity of bringing these lands into cultivation, the costs involved are high and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The limited potential for expanding domestic food production through area expansion, coupled with the drive for self sufficiency have, hitherto, meant that the Government has laid heavy stress on four aspects in modernizing agriculture. These are, irrigation (some 1,700 artificial reservoirs and 40,000 km of canals), mechanization (5-6 tractors per 100 ha), intensive use of chemicals and electrification. In addition the system of crop husbandry aims to be extremely intensive and relies heavily on the philosophy of individual plant care, from seed to harvest.

Although the aim is to provide the technically optimum dose of fertilizer, it is clear that the objective has not been met for several years, if at all. On average, and in normal circumstances, the application ratio of optimum N, P, K is 100:100:50, using Urea, Super-Phosphate and Potassium Chloride fertilizers. In 1989, an optimal year, it is reported that the average quantity of fertilizer applied to cereal crops was approximately one ton per hectare. which dropped to 750 kg/ha in 1994 and 500 kg/ha in 1995. The figure for 1995 appears to be consistent with the domestic availability of Urea and Phosphoric fertilizers for cereal crops, which were given as 350,000 tons and 240,000 tons respectively. Although Potassium fertilizers were previously imported, presently the only source is as a by product of domestic cement production.

The economic problems involving, low foreign exchange reserves, a large and persistent trade deficit and low credit worthiness, in recent years, have



meant that the country has serious problems in mainta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productivity) and food supply. These factors have contributed to failure to supply agriculture with required (imported) inputs to maintain intensive production and a reduced ability to import larger quantities of food grain commercially to meet a growing food deficit. In 1989, considered an optimum year, production of paddy and maize was estimated at 8.1 million tons, though by 1993 this had fallen to 6.64 million tons, a year before adverse weather affected cereal production in 1994 and 1995. Therefore, during the period 1989-93 productivity and overall cereal production declined by some 18 percent and can de-facto be attributed to structural problems in agriculture. In both 1994 and 1995, the underlying and continuing decline in agricultural production was further compounded by hail storms and floods respectively, which exacerbated an already serious problem. Therefore, as Government figures of production losses in 1995 would certainly incorporate an element of structural decline,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level of production under a without and with flood scenario, in order to have a more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damage. In order to do this the following assumptions and factors have been used by the Mission:

he average annual rate of decline in production between 1989 and 1993, taken to be structurally induced, was approximately 3 percent for paddy and 6 percent for maize.

Production in agriculture is declining at an increasing rate as more and more

macro economic problems filter into the agriculture sector.

sing 1993 as the base year (1994 was also weather affected), and assuming an increasing rate of structural decline in agriculture, in the two year period between 1993 and 1995, the production of paddy is assumed to have decreased by 10 percent and maize 15 percent, i.e. the annual rate plus a factor for an increasing rate of decline. In this way the production of paddy and maize in 1995, under normal weather scenario would have been some 3.1 million tons and 2.7million tons respectively.

he area of paddy under cultivation is taken to be 650,000 hectares, (including reclaimed tidal areas) and maize 700,000 hectares, including hill terraced areas.

he official figures of flood area damage were adjusted to arrive at the Mission's estimate of area lost of paddy and maize. The adjustment factor is based on discussion , field visits and an analysis of the areas (river deltas) where the principal effects of floods were felt. Based on this adjustment, the area of total loss in paddy was calculated to be 106,900 hectares and maize 94 700 hectares.

he loss of production of paddy and maize with floods in 1995, therefore, is calculated on Mission estimates of area affected by floods and expected yield in 1995. This loss has been deducted from the normal weather scenario production to arrive at the domestic level of cereals available this year.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the shortfall in production, of paddy and maize, that can be attributed to underlying problems in agriculture is estimated at 820,000 tons and to the floods 890,000 tons, giving a total of 1.7 million tons. The Mission's estimate of cereal production in 1995 and its

comparison with production in 1993 and 1989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Food Cereal Production 1989, 1993 and 1995**

Crop [Mission estimate]	1989 Crop		1993 Crop		1995
	Production(000 tons) Yield(kgha)	Yield(kg/ha)	Production(000 tons)	Yield(kg/ha)	Production(000 tons)
Paddy	3900 3969	6000	3440	5300	2580
Maize	4200 3357	6000	3200	4600	2350
Total/Avg	8100 3663	6000	6640	4950	4930

Source: Office of the Agricultural Commission and Mission estimates.

### Supply and demand analy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rading is entirely under state control and prices for production and consumption goods are fixed by the Price Fixation Committee, which depends directly on the People's Central Committee. Prices, however, have a purely accounting role, and do not reflect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The quantitative rationing system is the tool which permits the Government to adjust supply and demand. In determining national demand, a distinc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farm and non-farm population.

Norms have been defined for the basic consumption needs in grams per day,

with cereals normally providing 75 percent of daily calorie intake. These norms have been established for various population groups, initi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ir work activity. The original ration system had nine levels, the highest providing 900 grams of cereals per day, for coal miners, workers in heavy industry etc and the lowest level providing 100 grams, for children in kindergarten. However, for some time the Government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rations according to the system and, at present, it is operating a 3-level system with the age of the person being the determining factor. Cereals are assumed to provide 75 percent of the total calorie intake, with the remaining 25 percent expected from fish, meat, vegetables, fruit, fats and oil etc. Seventy percent of the cereal ration is expected from rice and 30 percent maize and the rations are distributed twice a month.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set higher targets, it now accepts a reduced average daily intake requirement of 2 131 kcal, across the population.

Moreover, although the Government initial objective was to provide 70 percent of the requirement in rice and 30 percent in maize, it has now changed the ratio to 60 percent rice and 40 percent maize. Based on the revision, the per caput yearly consumption of rice and maize would be 100 Kg and 67 Kg respectively, giving a total of 167 Kg of cereals.

The Mission's calculation for total grain requirement for the food year 1996 is, therefore, 3.69 million tons for human consumption, 1.4 million

tons for animal feed and 900 000 tons for other uses, giving a total of 5.99 million tons.

As indicated earlier, food production has continuously declined since 1989. Whereas in 1989, per caput availability of food grains from domestic production was 345 kg, it was 272 kg in 1993 and only 222 kg in 1994, the year in which a hailstorm caused widespread damage to production.

At the beginning of 1990, Government was reportedly holding some 4 million tons in food grain stock. In an attempt to adhere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rationing system, Government in the years thereafter has heavily drawn upon this stock, to make up the shortfall from domestic production, and it would appear that Government has been able to run the rationing system more or less at the established level. However, due to economic problems in the 1990s, it has been unable to replenish stocks through imports.

Consequently, the volume of stock has continually declined and run down to a negligible level at the beginning of the 1995 marketing year.

The national cereal supply situation for 1996 is shown in Table 2 below.

**Table 2: Cereal supply/demand balance sheet ('000 tons)**

Total Availability	4077
- 1995 Production	4077
- Stock Drawdown	-
Total Utilisation	5988

- Food Use	3688
- Feed Use	1400
- Other Use	900
1996 Import Requirement	1 911
- Commercial Imports Planned	700
- Food Aid Received	56
Uncovered import Requirement	1 155
of which:	
. Emergency food aid	16
. Project food aid	35
. Programme food aid	1 104

Food Aid Needs There is a serious food supply problem in Korea DPR, and part of this can be attributed to inherent problems in the sector and part to the crop losses by floods in 1995. Given these two dimensions to the current problems of food supply in the country, there is a need for both emergency and project and programme food assistance as well as support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agriculture sector to raise production to more normal levels. So far there has been very limited response by donors to emergency assistance. Various independent assessments of the situation in the country, ie by WFP, the IFRC and UN/DHA, indicate that malnutrition can be expected to increase in 1996, unless substantial food aid is provided.

The leanest period will be August-September next year, when the reduced remnants of the 1995 harvest will have been consumed.

Those most at risk are young children and pregnant and nursing women, estimated at 2.1 million and 0.45 million respectively. Immediate attention also needs to be focussed on the farming population, as they lost grain stocks and have no established access to the Public Food Distribution System. The target populations, for emergency assistance, are principally located in Chagang, North Pyongan and North Hwanghae provinces, which were most affected by floods.

The emergency operation jointly approved by FAO and WFP in October 1995, following an earlier UN Inter-Agency Mission in September, required a total 20,250 tons of rice and 675 tons of vegetable oil to meet the consumption needs of 500,000 flood affected people for three months. Only 5,140 tons have been delivered, which leaves a balance of 15 110 tons of rice and 675 tons of oil which should be supplied urgently.

As there is also urgent need to rehabilitate agriculture, damaged by the floods and further expand arable land through reclamation, project food aid should be considered. Almost ideal baseline conditions exist in Korea DPR for food-for-work. The country's principle of "juche" or self-reliance means that the mass mobilization of the population to undertake community work projects is guaranteed. In order to inject food aid into rural areas,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ion, FFW could be used to repair the damaged dykes and infrastructure caused by the floods, to terrace hillsides to expand the area under cultivation and to increase the amount of arable land through tidal reclamation projects. An FFW project involving 12.5 million mandays per annum would require 25,000 tons of wheat/maize plus some quantities of canned fish or equivalent. Further, project aid should be considered for vulnerable group feeding as malnutrition is expected to increase in 1996.

The Government requires substantial quantities of cereals for its Public Distribution System. Thus far only 8,000 tons of rice, financed by Switzerland, has been committed. Considerable scope exists, therefore, for donors to assist Korea DPR with balance of payment support through the provision of programme food assistance for distribution through the PDS. Up to 1.2 million tons of food aid could be used in this manner. Cheaper cereals, maize, maize meal, wheat and wheat flour should be supplied.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have accepted that this is necessary.

Arrangements would need to be discussed between donors and the government on the utilisation of the sales proceeds which would be generated in local currency. Conditionality, should include the progressive increase of the sale price so as to support a reduction in the subsidy on the domestically procured grain which is the mainstay of the PDS.

## **Evaluation and Analysis**



Even under normal growing conditions Korea DPR has serious problems in attaining the food production level necessary to guarantee the appropriate food supply to its popul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ing factors outlined above, an objective based on self-sufficiency is very unlikely to be economically sustainable, given limited land, an increasing population and demand for improved diet. There may therefore be the need for government to re-consider its agricultural policy and to take certain medium and long term measures to improve domestic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The present poor crop diversification and the absence of rotational schemes on a large scale have negatively affected soil fertility and constrained agricultural productivity. Government may consider to move from the present monoculture of paddy and maize to a more diversified crop production and for a better integration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In discussion with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four areas of possible assistance were identified by the Mission:

The identification and delivery of early varieties and short-maturing maize seed to obtain two maize crops.

Technical advice on the establishment of rotation schem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green manure, in particular leguminous crops, and the supply of the most suitable leguminous seed.

Technical advice on the most suitable sugarbeet variety for the

country's growing conditions and supply of the respective seed.

Technical advice on mulberry cultivation with a view to further sericulture development.

International suppor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bove measures will go a long way in reversing the production trends and improving the food security of the country.

***The Prospect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Evaluating and Exploring the Options

by: David F. Von Hippel, Peter Hayes

1996. 3.

이 자료는 미국의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가 최근 북한의 분야별 에너지 자원과 양적 효율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그 잠재력 등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정책을 다룬 보고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The Prospect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valuating and Exploring the Options

*by: David F. Von Hippel, Peter Hayes*

This study was published by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2. Energy Sector Problems
  - o Key Resource and Technological Bottlenecks
  - o Low Rate of Utilization of Energy Facilities
  - o Under-development of Key Sub-sectors
  - o Limits on Coal Resources
  - o Low Efficiency of Energy Transforming Processes and Equipment
  - o Fragmentation of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for Key Parts of the Energy Sector
  - o Demographic and Work-force Issues
  - o Suppressed and Latent Demand for Energy Services
3. Potential for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in the DPRK
  - o Goal of the Study
  - o Approach and Data Sources
  - o Overall Results for Energy Efficiency Measures Evaluated
  - o Sectoral Results
4. Institutional Issues and Policies Affecting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 o Introduction: Issues in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in the DPRK
  - o Lessons From Ongoing Examples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Transfer
  - o Potential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 Measures in North Korea

### 5. Tables

- o Table 1: Estimated Detailed DPRK Energy Balance for 1990
- o Table 2: Summary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ptions for DPRK

### 6. Maps

### 7. Acknowledgement

### 8. References

### 9. Notes

## Acknowledgement

The authors would like to acknowledge that Jonathan Sinton of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reviewed and contributed text to section 4 of this paper.

## 1. Introduction

The Yalta Conference at the end of World War II resulted in the partitioning of Korea. Though the boundary thus created was altered slightly by the agreement that ended the Korean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left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divided. The two Korean states thus created--the Republic of Korea (ROK), often referred to as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went on to rebuild their shattered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ursue development in very different ways, aided by different economic partners. The DPRK's economic rise from the ashes of war was impressive, particularly given its political isolation from the Western world. Recently, however, the effectiv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substantial withdrawal of economic aid from the former Soviet Bloc, together with other world and regional events, have put the DPRK's economy in what most observers agree is either a downward spiral or, at best, a state of stagnation.

A recent study by the authors (funded by the Alton Jones Foundation)

estimated the prospect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DPRK economy. In the process, we derived a detailed estimated supply and demand balance for fuels used in North Korea, which is shown in Table 1. We would encourage readers interested in a detailed discussion of how this balance was compiled to consult that study (Von Hippel and Hayes, 1995). In this paper we touch on some of the problems faced by DPRK in its energy sector, describe our indicative estimates of the potential for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in the DPRK, and discuss some of the means whereby the DPRK's energy problems can be address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 2. Energy Sector Problems

In this section, we briefly discuss some of the energy sector problems in North Korea. In some cases, evidence of these problems is largely anecdotal, gleaned from various project descriptions and mission reports filed by recent visitors to DPRK. In other cases, there is clearer evidence for energy sector problems. In either case, problems in the DPRK energy sector must be considered (and in some cases addressed) before meaningful progress can be made on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or renewable energy measures.

### 2.1. Key Resource and Technological Bottlenecks

Though the evidence for these problems is largely anecdotal, there have been reports of "bottlenecks" in the DPRK energy system that have the effect of impeding the flow of goods and materials. In some cases these bottlenecks interact to form cycles that further constrict the DPRK economy. For example, coal shortages at power plants have reportedly (Hayes, 1993c) been caused, at least in part, by a lack of iron and steel to maintain the rail system that brings the coal from the mines to the power station. The iron and steel deficiency is, in turn, the result of the lack of coal to fuel metals production, as well as rail transport difficulties in moving ore from the mines to the mills.

Similarly, lack of spare parts for certain imported industrial

infrastructure may constrain production in some industries, and in downstream industries that rely on the output of the upstream industries. Lack of fuel for trucks and other transport equipment delays delivery of parts and other inputs to factories, resulting in lower overall productivity.

The DPRK electricity generation and distribution system is outdated, with a fairly complex grid of 62 power plants, 58 substations, and 11 regional transmission and dispatching centers operated literally by telephone and telex, without the aid of automation or computer systems. This results in poor frequency control, poor power factors, and frequent power outages[1]. The power generation system suffers from a lack of spare parts in some instances, as well as testing equipment for use in maintenance activities.

## 2.2. Low Rate of Utilization of Energy Facilities

In part because of resource bottlenecks like those above, the rate of utilization of key energy facilities in the DPRK is reportedly relatively low. If official DPRK electricity generation figures are correct, the capacity factor for electricity generation facilities (computed at the output of power plants divided by what their output would be if they operated 100 percent of the time at full power) was on the order of 50 to 60 percent in 1990. On the other hand, if estimates by outside observers are more accurate, capacity factors could have been in the 30 to 40 percent range, and may have been even lower in more recent years (for example, 1991 to 1993). Capacity factors of 50 to 60 percent are low, but not extremely so, for a modern electrical grid, while average capacity factors of 30 to 40 percent would be quite low.

There are several different estimates of DPRK refining capacity. If the higher estimates are correct, refining capacity in North Korea is probably under-utilized, while the lower estimates would imply that refineries ran at near full capacity in 1990. In either case, reportedly lower oil imports since 1990 probably has resulted in one or both of the DPRK's refineries

being operated at sub-optimal rates, which typically results in lower operational efficiencies (due to being operated at part load and/or being started and stopped more often).

Industrial boilers and furnaces are probably also operated at sub-optimal rates due to the types of feedstock and fuel constraints noted in section 3.1. Like refineries and power plants, these industrial devices typically perform at lower average efficiencies, when operated at lower rates.

### 2.3. Under-development of Key Sub-sectors

The economic development in DPRK in the last few decades has focussed, as indicated above, on extractive and other heavy industries. Partly as a consequence, of this focus--and partly as a result of North Korea's political isolation from much of the industrialized world--some key sectors of the DPRK economy remain under-developed or produce goods that are effectively obsolete.

Unlike many Asian countries, the DPRK does not have a semiconductor industry. As a consequence, and because imports of computer equipment to the DPRK are difficult at best--electronic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that could markedl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processes, boilers, and other equipment.

The DPRK produces a number of medium and heavy trucks. Chief among these is a 2 1/2 tonne vehicle that is apparently a crude copy of a Soviet truck from the 1950's and 1960's. This truck reportedly has a carburetor that wastes a considerable amount of fuel at low speeds. More modern, efficient, and reliable truck designs would enhance efficiencies in the transport sector and on the many other sectors of the DPRK economy that rely on truck transport of goods.

Coal preparation, with the exception of some small-scale manufacturing of coal briquettes, is apparently not practiced in DPRK. The power plant and industrial boilers, and even the smaller boilers in residential and



public/commercial buildings, would be more efficient and easily operated and maintained if they were fueled with prepared coal. Coal preparation involves pulverizing and washing coal to reduce impurities such as ash and sulfur.

Other key processes that have been under-developed in North Korea include coal mining technologies--DPRK lacks the technology to mine coal at more than moderate depths--and oil and gas exploration. There may be oil and gas reserves in offshore areas of North Korea, but the country lacks the technologies to effectively explore and develop these resources, and has yet to secure an international partner to aid in such an effort.

#### 2.4. Limits on Coal Resources

Although the DPRK has substantial coal reserves, the varying quality of its coals, and the location of some of its better coal reserves, sets limits on their utilization. Some of the coals mined in Korea have ash contents as high as 65 percent, and heating values as low as 1000 kcal/kg (roughly one-sixth the energy content of high-quality coals). Untreated coals of this quality can be expected to have a low efficiency of combustion, and the large volumes of bottom and fly ash generated when these coals are burned create a disposal problem[2] .

Approximately one-half of the coal reserves in the important Anju mining area (located northwest of Pyongyang) are located under the seabed. The DPRK currently lacks the technology to effectively and safely extract this coal, which includes some of the higher-quality coal in the area. In mines in the Anju district that are areas close to the sea, it is reportedly already necessary for miners to pump six tonnes of seawater per tonne of coal mined, due to saltwater intrusion into the low-lying coal seams.

#### 2.5. Low Efficiency of Energy Transforming Processes and Equipment

The reported low efficiency of energy transforming processes and combustion

equipment has been noted earlier in this report. Low- efficiency energy sector devices in the DPRK reportedly includes:

- \* Industrial boilers, which suffer from a lack of spare parts, inadequate maintenance and control systems, sub-optimal fuel quality, and antiquated design
- \* Boilers in residential and public/commercial buildings, which have the same general problems as industrial boilers
- \* Utility boilers and generators, which have the same types of efficiency problems as industrial and other boilers, but also have problems with the electrical components of the generating facilities (including reports of degraded insulation on generator windings) and experience emergency power outages.
- \*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Official estimates of losses in these systems total 16 percent of generation, which would be high for a modern system of similar size to the DPRK grid but is not unreasonably so. Other observers, however, suggest that these losses comprise a higher fraction of generation. In either case, it is clear that the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 has room for marked improvement.

## 2.6. Fragmentation of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for Key Parts of the Energy Sector

The fragmentation of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in the energy sector inhibits efforts to upgrade the DPRK's energy systems. There is no single institution in North Korea that is responsible for energy analysis, integrated planning, and management. Ministries and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energy sector include:

- \* The Ministry of Coal Mining (coal exploration, mining, and supply)
- \* The Electric Power Industry Commission (electricity generation, dispatching, sales, and development)
- \*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Central Statistics Bureau, and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statistics and energy

planning activities)

- \* The Transport Commission (energy use in the transport sector)
- \* The Ministry of Atomic Energy (nuclear energy research)
- \* The External Economic Affairs Commission (purchase of crude oil and refined products, and purchase of imported equipment for use in the energy sector)
- \* The Ministry of Machine Building Industry (domestic manufacturing of power generation equipment)
- \* Institutes within the Academy of Scie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are also carried out by the individual ministries)
- \* The State Committee for Energy (major decisions in the energy sector)
- \* The Military (Army, Air Force, and Navy, as well as reserve units) accounts, by our estimate, for a significant share of fuels use in the DPRK, particularly petroleum products.

Coordination between the various institutions involved in energy sector activities is apparently less than optimal, and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Nor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the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and energy planning resources that could become availabl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or example) in the near future.

## 2.7. Demographic and Work-force Issues

The North Korean workforce is literate, disciplined, and hard-working; these attributes have been key in allowing the DPRK to make the economic strides that it did in (particularly) the two decades following the Korean War. The DPRK workforce, however, suffers from a lack of technological training as a result of North Korea's political isolation. In addition, the relatively low rate of growth of the population means that the workforce is aging. This may cause average workforce productivity to decline over the long term (all else being equal, as the ratio of active workers to retirees declines), and may present problems in retraining workers for new, higher-technology jobs (for example, to make goods that would be

competitive in the export market). Academics and engineers involved in the basic sciences and in appli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bably also suffer lower productivity due to limited and tightly- controlled contact with their peers in other countries.

Another workforce issue is the significant fraction (probably on the order of 17 percent) of potentially economically active males that are in the armed forces of DPRK. While soldiers apparently participate in public works projects and in some other civilian economic activities (such as harvesting of crops),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 active armed forces (and the time spent by the 5 million reservists in military training) undoubtedly acts as a drain on the overall DPRK economy[3].

## 2.8. Suppressed and Latent Demand for Energy Services

Lack of fuels in many sectors of the DPRK economy has apparently caused demand for energy services to go unmet. Electricity outages are one obvious source of unmet demand, but there are also reports, for example, that portions of the North Korean fishing fleet have been idled for lack of diesel fuel. Residential heating is reportedly restricted in the winter to conserve fuel, resulting in uncomfortably cool inside temperatures.

The problem posed by suppressed and latent demand for energy services is that when and if supply constraints are removed there is likely to be a surge in energy use, as residents, industries, and other consumers of fuels increase their use of energy services toward desired levels. This probable surge in energy use makes it even more important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of equipment and appliances in the DPRK as much as possible, but will limit any net savings in fuels.

Compounding the risk of a surge in the use of energy services is the virtual lack of energy product markets in the DPRK. Without fuel pricing reforms, there will be few incentives for households and other energy users to adopt energy efficiency measures.

Energy consumers are also unlikely, without a massive and well-coordinated program of education about energy use and energy efficiency, to have the technical know-how to choose and make good use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 3. Potential for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in the DPRK

In a recent study (Von Hippel and Hayes, 1995) we describe an estimated energy supply and demand balance for North Korea (Table 1); the previous section of this Chapter related some of the energy sector problems facing the country. In this section we use the estimated energy balance as a starting point for a indicative--though quite admittedly very approximate and not at all exhaustive--quantitative analysis of some of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ption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the DPRK, as well as a more qualitative discussion of some of the alternatives available. In the text that follows, we describe the goals of our analysis, present the approaches and data sources used, describe the overall results of the analysis, and present the specific assumptions used and study results for the key subsectors and end-uses addressed.

#### 3.1. Goal of the Study

The preparation of a full-fledged analysis of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pportunities for a country like the DPRK is a large undertaking, and is not only well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but even further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data on the North Korean energy situation that we have had available to work with. As a consequence, our much more modest goal was to prepare indicative quantitative analyses of energy efficiency options for a number of key sectors and subsectors. Although these analyses are necessarily built on a number of assumptions, they are designed to provide order-of-magnitude estimates for the energy savings potentially available, and of the costs of achieving those savings. In addition, we hope that this analysis will help to indicate fertile areas where additional work is needed to evaluat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while suggesting specific near- and medium-term opportunities for energy efficiency measures.

### 3.2. Approach and Data Sources

Our general approach to preparing the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can be described as follows:

- \* Use the estimated DPRK energy balance data as a guide to indicate key sectors and subsectors where fuel demand c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by energy efficiency measures.
- \* Use the energy balance results, together with data from the international energy literature and where necessary (that is, often) rough estimates of key parameters to estimate end-use shares for key technologies.
- \* Use cost and performance data on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data from international literature sources to estimate the potential achievable fuel savings available in key subsectors, and the investment costs required to achieve those savings. In many cases, we have been fortunate to be able to draw on the large body of work on energy efficiency progra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has been published by the by the Energy Analysis Program of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 or LBL) and their Chinese collaborators. In many of these cases, the cost and performance data are based on actual Chinese experience obtained during the 1980's.
- \* A full-fledged analysis of the achievable potential for energy efficiency measures requires a host of assumptions about the future. Population growth rates, economic growth rates, and underlying, ongoing structur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the housing stock, shifts in industrial output, and changing patterns of personal consumption (among many others) form the backdrop against which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is analysis, however, and for a variety of reasons, we have chosen, for the quantitative portion of our analysis, to let our estimate of potential

energy sector improvements stand for the achievable savings over the next 10 years. Our reasons for this assumption, in addition to the paucity of reliable data that the reader will by now recognize is endemic to our topic, include:

- o Since our study is based on a 1990 energy balance,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reportedly been either static or in decline in the years since 1995, it would seem that even an immediate turnaround would be unlikely to result in 1990-to-2005 fuel consumption levels that, on average, greatly exceed 1990 levels. Realistically, political considerations would appear to make a complete and immediate turnaround less likely than a slow recovery.
- o Though complete implementation of a particular energy efficiency measure in a subsector is unlikely, we feel that the pathways for technology dissemination in North Korea, if there is committed support from national leaders and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the potential to allow the rapid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 o We believe that our assumptions as to the energy savings achievable from the technologies we address (quantitatively) are more likely to prove to be under- than over-estimated. This belief is informed by the large number of anecdotal reports of vast waste of energy in the DPRK, even when compared with early 1980's conditions in China.
- \* Evaluate and aggregate the potential impacts and costs of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quantified, and suggest other key measures that are likely to be broadly applicable in North Korea.
- \* Evaluate, briefly, the potential environmental and other impacts of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 3.3. Overall Results for Energy Efficiency Measures Evaluated

We chose the following set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for our initial analysis:

- \* Measures that Save Coal
  1. Industrial boiler improvements
  2. Residential (multi-family) and public/commercial military boiler improvements
  3. Domestic coal stove/heater improvements
  4. Residential (multi-family) and public/commercial/military building shell improvements
  5. Electric Utility boiler improvements
- \* Measures that Save (or Generate) Electricity
  1. Industrial electric motor improvements
  2. Electric motor improvements in other sectors
  3. Residential Lighting improvements
  4. Non-residential Lighting improvements
  5. Reduction in "Own Use" at coal-fired Electric Utility plants
  6. Reduction in "Emergency Losses" at coal-fired Electric Utility plants
  7. Reduction i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es
  8. Wind powered electricity generation
- \* A Measure to Save Petroleum Products
  1. Replacement of the existing fleet of 2 1/2 tonne trucks

The details of the process we used in estimating the impacts and costs of these measures are provided in the study mentioned previously (Von Hippel and Hayes, 1995).

Table 2 shows the overall results of our evaluation of these measures. We have assumed that under an aggressive program with both strong leadership commitment inside the DPRK and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from other countries, these measures (or some of these measures and others with similar per-unit costs and impacts) could be implemented over the next 10 years. In total (that is, in year 10 of a crash program), they save approximately 390/yr Petajoules (PJ[4]) of coal (about 29 percent of 1990 DPRK coal supply) at a cost of about \$US 1.3 billion (1990 dollars), plus



over 50 PJ/yr (about 25 percent of 1990 generation) of electricity supply (electricity saved plus new wind-powered generation) at a cost of approximately \$1.7 billion. Replacement of the DPRK fleet of 2 1/2 tonne trucks, as we have modelled it, is unlikely to be cost effective (for reasons explained in the next section), but would save approximately 4.4 PJ of refined products (somewhat under 4 percent of total national use and 18 percent of road transport use as we have estimated it) at an investment cost of \$0.82 billion.

As noted in below, the key assumption that we have made in estimating the costs and performance of most of the coal- or electricity- sav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is that the costs and performance of these measures, when implemented in the DPRK, will be similar to the cost and performance of the measures as experienc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ring energy efficiency programs carried out there in the 1980's. It could be argued that the costs of the measures in China might be lower than in the DPRK, due to lower labor rates and a larger manufacturing base in China. It could in our opinion, however, equally be argued that the opportunities for savings with the measures we have evaluated are likely to be greater in the DPRK than they were in China, due to the older capital stock in the DPRK.

The transfer of LWR (Light Water Reactor) technology is, at present, a political prerequisite to start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initiatives in energy efficiency (or other types of projects and trade, for that matter) with the DPRK. We cannot resist the temptation, however, to compare the costs and impacts of our list of measures with the costs and impacts of the proposed nuclear power plants. A pair of LWRs with a combined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of 2 GW (two gigawatts or two billion watts, the current LWR transfer proposal) would produce, if run reasonably efficiently, roughly 12,000 GWh/yr of electricity. This is about 44 PJ/yr of electricity supply. The cost of the reactors, probably about \$4.5 billion US (1995 dollars), would be a bit less than 50 percent higher than our estimates for the costs of both the electricity and coal saving measures we evaluated (factoring in inflation to our cost estimates in 1990

dollars)[5]. Like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the LWR would likely take nearly 10 years to provide its full capacity, even if construction were to start today (1995). Unlike the energy efficiency options, however, none of the LWR capacity will be available until the year that the plants are complete and fueled, while some of the energy efficiency savings will be available in the first year of the program (with more available each year thereafter).

Not coincidentally,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that we have evaluated will als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unit of energy service provided[6]. Based on the emissions calculations detailed in the study referenced earlier, we estimate that GHG savings (and costs per tonne of carbon reduced) would be as follows:

Measures	GHG Savings	Cost: \$US 1990/(te/yr)
Measures to Save Coal	36 million te CO2	\$35
	210,000 te Methane	\$6090
Measures to Save Electricity	9.7 million te CO2	\$165

In reviewing the cost figures presented above, the reader is urged to keep several considerations in mind:

1. The CO2 cost figures are expressed in dollars per tonne of carbon dioxide, not per tonne of saved carbon (as is also common in the literature). To express these figures in dollars per tonne of saved carbon, one would multiply by 44/12.
2. The cost figures are expressed as total investment (over ten years) per tonne of annual emission reduction. In order to express these figures in terms of dollars per tonne of total emission reduction, one would probably divide them by a factor of 10 to 20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savings continue over 10 to 20 years--assuming a low, zero, or negative discount rate is applied to future GHG emissions).
3. The cost figures are given on a gross basis, and are thus not adjusted for the fuel, operations and maintenance, and other type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at would accrue from th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we have evaluated.

4. The costs for carbon dioxide and methane savings shown for coal-saving measures are not additive. The same efficiency investment outlay provides savings of both gases.
5. In estimating the GHG savings from electricity generation measures, we have assumed that the electricity saved would have been generated by the combination of coal-fired, hydroelectric, and oil-fired plants currently operating in DPRK. If the thermal plants would be "on the margin"--if electricity savings through efficiency measures and renewable sources displaced electricity generated by coal- and/or oil-fired plants first--then GHG emissions savings would be greater (and their costs lower) than shown above.

### 3.4. Sectoral Results

Here we present our performance and cost assumptions for those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that we have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discuss other measures that could be applied (and should be evaluated in a more detailed study) in the various sectors and subsectors of the DPRK energy economy.

####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Measures

Our quantitative analysis of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of the DPRK includes the following measures:

- \* Electric Utility coal-fired boiler improvements: Utility boilers in the DPRK reportedly have minimal (if any) insulation, are poorly operated, suffer from steam tube cracks and other maintenance problems, and are often antiquated. We assumed that a combination of measures that have been applied to industrial boilers in China can be applied to utility boilers in the DPRK at similar costs to obtain

similar results. We have assumed that a combination of microcomputer boiler control, insulation of piping, and renovation of boilers can raise the average boiler efficiency (heat energy output divided by fuel energy input) from about 60 percent to near 85 percent, reducing coal consumption by about 30 percent (Levine and Xueyi, 1990; Yande, 1992; Levine et al, 1992). We assumed that these measures are available for about the same cost as similar industrial boiler improvements in China--approximately \$3.86 per annual GJ of coal saved  $(\$/(\text{GJ}/\text{yr}))$ [7]. In fact, economies of scale may make efficiency improvements for utility boilers less costly, per unit of energy saved, than similar measures for generally smaller industrial boilers.

- \* Reduction in "Own Use" at coal-fired Electric Utility plants: We have assumed that the in-station use of electricity at coal-fired power plants is 7.2 percent of gross generation. Based on cost and savings estimates from Sathaye (1992), we estimate that own use can be reduced to 4.5 percent at a cost of \$46.3 per GJ/yr of electricity saved.
- \* Reduction in electricity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T&D) losses: Official DPRK estimates plac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osses of electricity at 16 percent of net generation (electricity leaving the power plant), although, as noted earlier, this figure may well be low. We have assumed, again based on performance and cost data in Sathaye, 1992, that will be possible through a combination of measures to reduce combined T&D losses to 10 percent of net generation at an average cost of 29.2  $\$/(\text{GJ}/\text{yr})$ . T&D improvements would include better system control facilities, improved transformers, and the addition of capacitance to the system and other measure to improve power factors and reduce voltage fluctuations.
- \* Reduction in "Emergency Losses" at coal-fired Electric Utility plants: We have assumed, based on anecdotal reports, that emergency losses of power at coal fired power plants in the DPRK average about 7 percent of gross generation. We assume that these losses can be reduced by 90 perc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measures available at a cost per unit energy saved similar to that for T&D improvements. It may well be, however, that the combination of boiler improvements and T&D improvements will by themselves reduce or eliminate emergency

losses, with little or no additional efficiency investments required.

- \* Wind powered electricity generation: Wind power is one of the major renewable resources readily available to the DPRK, though the wind resources in the country remain, to our knowledge, largely unmapped[8]. We have assumed that 500 MW of wind generation capacity (for example, 500 machines per year of 100 kW, or 250 200 kW machines per year) could be installed in the DPRK over the next 10 years (with machines manufactured in the DPRK and/or imported), and that the average capital costs of the machines would be similar to those for wind machines produced in joint ventures in Eastern Europe, about \$400/kW. We assumed a capacity factor of 25 percent for machines installed in the DPRK, yielding an investment cost of \$51/(GJ/yr) of electricity generated. Note that this cost does not include fixed or variable operating and maintenance costs, but these are typically a small fraction of annualized capital cost for wind power generation. Other potential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addressing th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that seem promising but which we have been unable to evaluate quantitatively include:
  - \* Coal Preparation: Grinding and washing coal to remove ash and sulfur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coal combustion in utility boilers. Such preparation will reduce the load of ash in the bottom of boilers and provide a more homogeneous coal particle size, allowing for cleaner and more complete combustion.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such measures (including reduced particulate and sulfur oxide emissions to the air) could be considerable, and byproducts of coal cleaning (inert material removed from coal, and elemental sulfur) could be used in the building and other industries. In addition, coal preparation, if done near the coal mines, should reduce coal transport costs by increasing the energy content of the coal per unit mass.
  - \* Expansion of Electricity Metering: At present there is reportedly little or no metering of electricity consumption in North Korea. Metering the electricity used by industrial facilities, residences, and buildings would not onl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the use of electricity in the DPRK, it would also, if coupled with per-unit

electricity pricing, provide electricity users with an incentive to use electricity efficiently.

- \* **Cogeneration:** The energy literature on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or example, Levine and Xueyi, 1990) cites examples of industrial boilers and furnaces that have very high exhaust gas temperatures, indicating the availability of a substantial amount of waste heat. Assuming that such situations are also common in North Korea, the waste heat from industrial and other large boilers could be used to generate electricity.
- \* **Gasification-Combined Cycle Electricity Generation/Retrofits:** The efficiency of electricity generation from coal could be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DPRK by first converting the coal into a gas, combusting the gas in a turbine that turns a generator, and then routing the exhaust gasses from the turbine to a boiler to raise steam for a second cycle of electricity generation. Gasifiers could be added as "front ends" to existing (renovated) coal-fired boilers in the DPRK. The efficiency of gasification-combined cycle plants can be over 40 percent (Williams and Larson, 1993), a vast increase from the probable 20 to 25 percent efficiency in existing DPRK plants. There should also be substantial emissions benefits from employing this technology. Coal preparation may be a prerequisite for implementing this technology in North Korea. Repowering of the DPRK's oil-fired utility boilers (over 200 MW) to make them combined-cycle plants is also a strong possibility[9].

#### Industrial Sector Measures

Our quantitative analysis of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in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DPRK includes the following measures:

- \* **Improvements in industrial coal-fired boiler and furnaces:** Like utility boilers, industrial boilers and furnaces in the DPRK reportedly have very low average efficiencies, perhaps as low as 50 percent for boilers. Using the same set of improvements assumed for utility boilers (see above), we assumed that the average boiler

efficiency could be raised from about 50 percent to about 80 percent, reducing coal consumption by about 37.5 percent (Levine and Xueyi, 1990; Yande, 1992; Levine et al, 1992). We assumed that these measures are available for approximately the same cost as similar industrial boiler improvements in China--approximately \$3.86 per GJ/yr.

- \* Improvements in industrial electric motors: Electric motors in DPRK may be made domestically, imported from China, or a combination. In any case, the stock of motors in the DPRK is highly likely to be both aging and inefficient. We have attached rough estimates of the fraction of electricity use, by subsector, is consumed in motors and drives. These estimates vary from as low as 50 percent, for subsectors where we felt electricity was likely to be used intensively in end uses other than motive power (such as electrolytic refining of metals) to as high as 95 percent for subsectors (such as the Cement industry) where we felt that motor-driven applications such as grinding and sizing of cement "clinker" would likely be the dominant use of electricity. As a point of reference, note that 65 percent of the electricity used in the entire Chinese economy has been estimated to be consumed in electric motors.

Based again on Chinese experience, we have assum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increase the average motor efficiency from approximately 75 percent to approximately 88 percent (Sathaye, 1992). The latter efficiency (which corresponds to higher efficiency new motors produced in China as of 1990) is similar to that for standard new electric motors sold in the US and Japan, so efficiency improvements beyond what we have assumed are definitely possible[10]. We have assumed that the cost of this efficiency improvement would be on the order of \$39 per GJ/yr of electricity savings.

- \* Industrial lighting improvements: We have assumed that lighting accounts for a relatively modest 5 percent of electricity use in the DPRK. Based on the cost and performance of non-residential lighting improvement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we have estima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save 50 percent of the industrial lighting

electricity used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including improved bulbs and ballasts, more efficient fixtures, replacement of incandescent lamps with fluorescent lamps, and lighting controls) at a cost of about \$28 per GJ/yr of electricity saved (Von Hippel and Verzola, 1994).

As in the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there are a wealth of opportunities for saving energy in the industrial sector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se include:

- \* Industrial process improvements: It is likely that a considerable amount of electricity and coal could be saved by improvements in industrial processes. These opportunities are available in many subsectors. In the DPRK cement industry, for example, the coal consumption per unit output is 6.9 GJ per tonne of "clinker" (raw cement; data from document in authors' files [CE1]). This can be compared with an average coal use of 6.1 GJ/te in China in 1980, 5.2 GJ/te in China in 1992 (Sinton, 1995) and 3 GJ/te in modern plant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implies that coal use in the cement subsectors could be reduced by 12 to more than 50 percent. Similar opportunities exist in the iron and steel, other metals, fertilizer, textiles, and other industrial subsectors. In the important iron and steel subsector, possible process improvements include integrating steel production and forming processes (thus eliminating the need to cool and reheat the steel, continuous casting and forming, electricity generation using top pressure in blast furnaces, use of coal gas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other technologies (Liu, et al, 1994). Generic efficiency improvements applicable to many industries include insulating product pipelines, using better refractory materials (special ceramics used as, for example, furnace linings) that last longer and have better insulating properties, using variable-speed drives to reduce the electricity used in electric motors, modifications to reduce friction in piping, valves, and conveyance systems, and using harder, longer lasting materials in cutting and grinding applications.



Note that process improvements can be geared to not onl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fuel use, but also in reducing materials waste.

Improving chemical reactors so that there is less waste of reactants, using better-quality raw materials to improve product yield, and recycling waste materials from production processes and product refining can reduce both waste and energy consumption[11]. Product modifications that result in the reduction of raw material (and thus energy) used per unit of product are also possible[12]. Not coincidentally, these improvements also typically reduce process effluents to the environment.

Process improvements could also be directed toward the 30 percent of DPRK petroleum demand that is reportedly used in carbide manufacturing. As we at this point know little about how this petroleum is used in carbide manufacture (if the report is in fact correct), it is impossible to say what the prospects for savings are.

- \* Coal processing: As for electricity generation, coal washing and other methods of coal preparation could help to dramatically improve the combustion efficiency of coal-fired boilers and furnaces in the industrial and other sectors. It is likely that coal processing could als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dustrial processes where coal is used as a feedstock--including fertilizer (ammonium) and synthetic fiber manufacture.
- \* Construction industry modifications: The massive scale of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DPRK, coupled with the use of manual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s, results in a wastage of building material relative to more updated methods. Considerable savings in steel and cement--and thus savings in the energy needed to produce these materials--are possible through the use of improved construction practices (Document from authors' files).

Our quantitative analysis included four efficiency measures for the residential sector:

- \* Boiler improve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space heating (and possibly water heating, in some instances) boilers of the type found in urban residential and other buildings, we assumed, based roughly on the same sources we used for our industrial boiler measure estimates, that a 15 percent improvement in efficiency (starting from an average boiler efficiency of 50 percent; thus a 23 percent reduction in coal use) is available for approximately \$2.15/(GJ/yr) of coal saved. Note that the boiler improvements included here are unlikely to exhaust th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boiler energy efficiency through equipment upgrades and improved operations and maintenance.
- \* Building envelope improvements: We have included two simple building envelope improvement measures in our estimate of possible energy efficiency savings. A combination of A) application of a 30 mm coat of concreted containing perlite--a lightweight mineral with insulating properties--to the inside of the typical concrete slab walls of residential and other buildings, and B) double glazing of windows are together estimated, based on simulations for Chinese buildings, to save 20 percent of heating energy (Lang et al, 1992). The cost of these savings are estimated at slightly under \$2 per GJ/yr. Note that in applying this measure to coal use in buildings, we have assumed that boiler improvements take place before (or at the same time as) building envelope improvements, that is, the savings fraction for building envelope improvements was applied to the total energy use after boiler efficiency improvements had been factored in.

The two building envelope improvements can be considered a minimal simple start to the list of potential measures of this type. Other measures include caulking and weatherstripping to reduce air infiltration, insulation of water piping, improved radiator controls (in fact, visitors to the DPRK report that the only heat control measure available to residents of typical North Korean apartment buildings is the opening and closing of windows and doors), interior

and exterior wall and roof insulation, roof coatings, and others.

- \* Rural residential coal stove/heater improvements: We have assumed that the average residential stove/heater can be improved from an average of 30 percent efficiency to 40 percent efficiency, thus saving 25 percent of initial coal use. This is a rough estimate on our part. The estimates that we have found of coal stove efficiency in the DPRK and China range from 20 to 50 percent, 30 percent was cited as an estimate for DPRK by an informed visitor to the country (Document in authors' files [R1]). We have assumed that this efficiency improvement is available for the same cost cited for coal stove improvements in China (Levine et al, 1992), namely \$0.72/(GJ/yr).
- \* Electric motor improvements in urban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Electric motors are typically used in multi-family apartment buildings and in non-residential buildings for a variety of uses, including ventilation, refrigeration, and water pumping (for heating and potable water), We have assumed that 10 percent of the electricity used in the urban residential subsector, and 30 percent of that used in the Public/Commercial and Military sectors, is used in electric motors. These estimates are admittedly rough guesses at best, but are lower than the fraction of electricity used in motors in similar sectors in many other countries. We have assumed that the average cost and performance of measures that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se motors is roughly the same as in the industrial sector.
- \* Improvements in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lighting: We have assumed that the fraction of residential electricity used in lighting end-uses is 40 percent. This is somewhat higher than lighting electricity fractions quoted for, for example, Thailand and the former Soviet Union (28 and 33 percent, respectively), but both of those societies use electricity for end uses--including air conditioning and water heating--that reportedly are little used in DPRK residences. We have assumed that 80 percent of lighting electricity use in residences in DPRK powers incandescent bulbs, that compact fluorescent (CFL) bulbs can save 75 percent of the electricity used by incandescent bulbs (while providing similar or enhanced light output), and that

compact fluorescent bulbs can reasonably be substituted for incandescent bulbs for 80 percent (by energy) of lighting uses. Taken together, these three assumptions result in a 48 percent reduction in electricity use in residential lighting. As an estimate of costs, we have assumed that, as other authors have suggested for China, a factory producing 3 million CFL bulbs per year could be built in North Korea at a cost of \$5 million (Sathaye, 1992). The cost of conserving electricity by producing and using these bulbs is approximately \$39/(GJ/yr). We should note that since the lifetime of CFLs is shortened if they are operated on a grid with fluctuating voltage and low power factors, thu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mprovements would probably have to go hand in hand with introduction of CFLs in the DPRK.

Our assumption for non-residential buildings is that 50 percent of the electricity consumed is used in lighting. As for industrial lighting, we assume that 50 percent of this amount can be saved by a package of light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at a cost of about \$28 per GJ/yr. Since these costs and savings estimates are based on figures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our guess is that similar improvement will cost less and save more in the DPRK, particularly if production of quality lighting components can be done with a substantial contribution of domestic (versus imported) labor and materials.

Other possible energy efficiency measures for the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sectors include:

- \* Improvements in electric appliances: The fraction of residences in the DPRK with refrigerators is unknown, but likely to be small. What refrigerators are in use in the DPRK are likely similar to Chinese models, and thus up to 50 percent less efficient than those manufactured in industrialized countries. Liu et al (1992) report that Chinese refrigerators in the 200 liter size range consumed 365 kWh per year, while South Korean models of similar capacity used 240 kWh per year. To the extent that refrigeration is used in buildings other than

private residences (for example, in communal kitchen facilities), similar savings may be possibl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refrigerators manufactured in or available to DPRK could be increasingly important, as a refrigerator is probably one of the first appliances that households will invest in if economic conditions in North Korea begin to markedly improve.

A substantial fraction of households in DPRK have either television or radio, or both. Recent improvements in electronics technology that the DPRK does not currently have access to has reduced the hourly energy consumption of these devices markedly, though the aggregate amount of electricity saved by such improvements may be small due to the limited power consumption of radios and small televisions. Other improvements in appliance efficiency in North Korea may well be possible, but their evaluation must await better information on the stock of electricity-using appliances in the household and other sectors. Microwave ovens, for example, accomplish many cooking tasks more efficiently than simple electric resistance burners, but the penetration of the latter in the DPRK residential housing stock is currently unknown (we assume that penetration of microwaves in North Korea is near zero).

- \* Improvements in cooking efficiency (non-coal fuels): Urban households in the DPRK reportedly use charcoal, LPG, and kerosene stoves for cooking in addition to coal stoves. Rural households use wood and other types of biomass for cooking and heating. Efficiency improvements in all of these technologies are possible, though the percentage improvements (and the aggregate amount of fuel savings) is likely considerably higher for devices using solid fuels. Reduction in the use of wood and biomass fuels through the use of more efficient stoves and heaters would help to make wood and biomass available for other applications and/or reduce harvest pressures on forests.
- \* District Heating: District heating of homes and other buildings using heat from power plants, industrial facilities, and stand-alone central steam plants is apparently practiced in North Korea (as it is throughout Eastern Europe), but the extent to which it is practiced is

unknown. Switching to an efficiency district heating network from a system of dispersed small boilers and stoves can result in substantial coal savings.

- \* Building shell improvements in rural homes: Potential improvements include caulking and weatherstripping, insulation, and glazing, but any definitive list of measures will have to wait until a better description of the rural housing stock in DPRK is in hand.
- \* Use of biogas: Biogas produced via anaerobic fermentation of human night soil, animal manures, and agricultural wastes could be used as a clean cooking fuel in rural areas, or could contribute to small-scale power production (with cogenerated heat for agricultural processing or other applications). The biogas production process also has the potential to yield important by-products such as animal bedding, soil amendments, and organic fertilizer, as well as potentially (depending on the state of current waste disposal practices)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s.

#### Transport and Other Sector Measures

We have evaluated only one energy efficiency measure in the transport sector in a quantitative manner:

- \* Replacement of medium-duty trucks: Two and one-half tonne trucks are the workhorses of the military ground transport fleet in the DPRK, and are reportedly widely used in civilian goods as well. We have assumed that all of the gasoline used for civilian freight transport by road in the DPRK is used in such trucks, and assuming that the freight transport provided by each vehicle is on the order of 30,000 tonne-km per year, we calculate that there are slightly under 60,000 civilian 2 1/2 tonne trucks to go along with a similar number of military trucks in active service. If the most heavily used two-thirds of these trucks (which we assumed to use 90 percent of the fuel) were replaced with new vehicles similar to the Isuzu FRR model, a fuel savings of about 43 percent would result. We have assumed that these vehicles could be manufactured in DPRK at a cost of \$10,000[13]. At this cost, however,

replacement of the truck fleet is not likely to be cost-effective.

Note, however, that we have assumed that the existing trucks will be replaced whether they are at the end of their useful life or not. If one assumes only an incremental cost for the truck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s of producing a standard DPRK truck and one similar to the Isuzu model), and/or if one assumed a substantially heavier usage (in te-km/yr) for the new trucks, this measure would appear more cost-effective. Whether these changes would make this measure sufficiently cost-effective to pursue is not possible, with the data at hand, to ascertain.

Other potential improvements in the transport and other sectors might include:

\* Electric motor and drive improvements for electric locomotive:

Electrified rail is the backbone of the DPRK transit system. Though we have no data on the efficiency of electric locomotives in North Korea, potential efficiency improvements on the order of those described above for industrial motors seem plausible.

Substantial improvements in electric rail efficiency may come about simply as a result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mprovements on the electric grid as a whole. Other options for increasing rail efficiency might include updated rail control and scheduling systems, track improvements to reduce friction (and forced halts), and optimizing freight loads.

\* Updating other transport fleets: Updating the road passenger transport, water transport (including the fishing fleet), and air transport fleets may as much as double their efficiency, but any fuel savings is highly likely to be offset by increased use of these transport modes as they become more efficient and reliable.

\* Biofuels for transport: The DPRK government has expressed an interest, in various documents, in increasing self-reliance by replacing petroleum-based transport fuels with liquid fuels derived from biomass. While the GHG and pollutant reduction benefits of such a

program are important, we are reluctant to enthusiastically endorse this idea at present because 1) all DPRK agricultural land appears to be needed and fully employed just to feed people, thus production of motor fuels from agricultural crops such as corn would appear to be ruled out; and 2) there appears to be relatively little extra wood or crop wastes available for use as cellulosic feedstocks for biofuels production (via either fermentation or thermal liquefaction). If the biomass resource situation changes in the future, however, biofuels would become a more attractive option.

- \* Improving agricultural tractors: Specific fuel consumption in tractors in China, reported to be 195 grams/hp-hr in the 1980's was some 10 percent greater than for similar tractor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Liu et al, 1992). Tractors in the DPRK are unlikely to be more efficient than the Chinese average, and are likely to be worse.
- \* Reducing fertilizer use: Fertilizer application in North Korea is reported to be excessive for some crops. On rice, for example,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typical-practice nitrogen fertilizer application in the DPRK could be reduced by 25 percent[14]. If so, significant reductions in energy use in the energy-intensive ammonia manufacturing industry in DPRK should be possible, as well as (probably minor) reductions in the need for tractor fuel for fertilizer application.

#### 4. Institutional Issues and Policies Affecting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f simply estimating the potential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for an economy was all one had to do to convince policy makers to implement such measures, fuel use in the world would be markedly less than it is now. As it turns out,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institutional issues and national policies that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in any country. North Korea, while presenting a situation that is unique in many ways, is no exception. In this section we:

- \* Discuss some of the types of institutional and policy issues that



affect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 \* Review some of the recent lessons learned from nascent and ongoing energy efficiency programs in Eastern Europe, Chin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 \* Examine some of the exis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energy efficiency-related initiatives underwa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 \* Present some potential strategies and mechanisms for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in the DPRK;
- \* Put forward suggestions as to how to build and strengthen North Korean institutions so a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carry out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the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 activities.
- \* Hint at ways in which organizations inside and outside North Korea might lend support to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in the DPRK.

#### 4.1. Introduction: Issues in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in the DPRK

A host of issues--some unique to North Korea, and some generic to the situation in many countries--affect which energy efficiency programs and measures[15] are implemented, as well as how they are implemented and on what time frame. We discuss some of these issues briefly below.

- \* **Institutional Weaknesses and Fragmentatio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the energy sector are complicated and reflect a high degree of functional fragmentation (Hayes, 1993b). Since there is no single specialized institutional authority or ministry that is responsible for energy analysis, integrated planning, and overall energy sector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know which of the many institutional players in the DPRK energy sector should be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programs. While many energy efficiency programs could be restricted in scope to, for example, a single economic sector, the need to coordinate activities by both

suppliers and consumers of energy argues that a single authority (or coordinated consortium of authorities) must be created in the DPRK if effective programs are to be implemented. China's experience in coordinating planning and policy organs with line ministries to achieve energy efficiency goals is relevant in this respect.

- \* **Lack of Information:** One universal barrier to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is the lack of information--on the part of residential customers, industrial plant managers, building superintendents, transport decision-makers, mid-level bureaucrats in energy sector institutions, upper-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others-- as to the benefits, relative costs, and potential impacts of these technologies (Reddy, 1991).
- \* **Lack of Energy Markets:** The lack of meaningful pricing of most energy commodities in the DPRK, combined with the insensitivity to prices common to planned economies, creates an indifference to energy efficiency measures. If, for example, coal for an industrial plant is supplied as a matter of course according to a fixed allocation schedule, the plant manager has relatively little incentive to try and increase energy efficiency. While true market pricing of goods, especially energy goods, is probably at the very least several years away in North Korea, some sort of pricing reform will be necessary to encourage energy users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of energy use.
- \* **Access to Funding:** Though they result in cost savings in the medium-to-long term, many energy efficiency measures will require an initial outlay of capital. For the DPRK, this capital will be needed to either import efficient equipment, or to retool its industries to produce efficient equipment. In either case, internal DPRK funds will be hard pressed to meet the needs of an aggressive energy efficiency program like the effort we have described. While some countries--Thailand and China are examples--have set aside significant sums for energy efficiency programs, North Korea, which lacks the vibrant economic growth of some other developing nations in the region, would have difficulty doing the same, and external sources of initial funding would have to be provided. On the other hand, China began funding its energy efficiency programs at the beginning of the

1980s, at a time when the leadership was laying the groundwork for economic growth, but before the current phase of rapid growth had been established. Such experience highlights the difference that a committed leadership can make, even when money is tight.

- \* **Access to Technology:** In countries with open trade policies, access to funding is most of what it takes to have access to technology. In the case of DPRK, however, the issue is a bit more complex, as some nations with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to export--the United States is an example--have less-than-open policies with regard to exports to North Korea. The thawing of the DPRK's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US, South Korea, and others, however, could fairly quickly change this situation. In the mean time, China may be a good source of inexpensive and easily-adopted technologies that, while not the most advanced, would represent significant improvements over those currently in use in North Korea.
- \* **Institutional Motivati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DPRK will require that official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perceive a mandate for energy efficiency and a benefit to themselves or their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1) a clear and detailed mandate to aggressively implement energy efficiency measures must be issu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2) any institutional disincentives to energy efficiency must be dismantled; 3) a system of clear, verifiable (to the extent practicable) energy efficiency goals must be set up to reward officials for program performance; and 4) the status of energy efficiency activities in the rankings of institutional activities must be high enough to encourage officials to aggressively pursue their targets.
- \* **Energy Supply Bias:** Many officials and other decision-makers in developing nations (and developed nations, for that matter) see energy sector problems as primarily a matter of ensuring adequate supply of fuels, rather than simply providing energy services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available. As a consequence, officials may tend to be either blind to or suspicious of the benefits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Reddy, 1991). Efforts must be made to persuade key individuals that efficiency improvements are complementary to supply expansion.

- \* **Project Scale Bias:** Unlike energy supply projects, which tend to be large in scale (and large-scale undertakings are a North Korean specialty), energy efficiency projects vary widely in scale, but often involve many small installations. The incremental nature of these investments may appear unfamiliar and thus daunting, from the bureaucratic and/or job prestige perspectives, to the officials who would be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m.
- \* **Lack of Skills and Training--Government Level:**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programs will require that government energy planners be well-versed in the concepts of energy efficiency. This is almost certainly not the case in the DPRK at present. Even in countries where officials can be expected to be technically competent, continued training and exposure to new developments is desirable.
- \* **Lack of Skills and Training--Program Implementation Level:**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must support, sanction,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programs, a cadre of trained engineers and technicians will be required to survey pre-installation energy performance and to actually design, install, and monitor applications of energy efficiency equipment. This cadre of skilled individuals probably does not exist in DPRK at present, though there are doubtless many trained people in the DPRK with sufficient basic skills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to learn the "trade" relatively rapidly. Training these people, or training the trainers who will run in-country courses, will be necessary before energy efficiency measures can be implemented on a broad scale.
- \* **Relative Status of Sectors:** If resources to implement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grams in the DPRK become available, and assuming that the issues presented here can be adequately resolved, there will remain a question of which energy efficiency measures are implemented first. While yardsticks such as fairness across sectors and overall cost-effectiveness ("bang-for-the-won") may

be considered, it is likely that the political status of different ministries (and even that of industries within a given ministry) and the personal status within the governmental hierarchy of key officials will influence the selection of projects for implementation.

- \* **Prospects for Reunification:** An additional layer of complexity in deciding which DPRK sectors and subsectors to target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s posed by the prospects for and possible modes of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For example, would it make sense to undertake energy efficiency modifications in the North Korean motor vehicle industry when South Korea's infrastructure in the subsector is both much more modern and probably adequate for both Koreas? Would it not make more sense to target industries that are complementary to the industrial strengths of the South? These questions unfortunately cannot be answered in a straightforward and academic fashion, as they are inextricably linked to political issues such as national sovereignty, self-reliance, and pre-reunification military sustenance.

Many of these issues are covered in a generic and much more complete fashion in "Barriers to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by Prof. Amulya Reddy (1991).

#### 4.2. Lessons From Ongoing Examples of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Transfer

Given the unique nature of North Korean society, one could expect that implement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the DPRK would require somewhat different techniques and approaches than those appropriate to promoting energy efficiency in a Western nation or in a developing market economy. Happily, research on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the Republic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and in China provide some insight into what sorts of approaches appear to be effective in countries with some economic, political, and infrastructural similarities with North Korea. The brief review of these lessons and insights presented in this section leans heavily on the work of the

researchers in the Energy Analysis Program at the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 Berkeley, California, USA), and the reader is urged to consult the LBNL work for further elaboration on the topic (Schipper and Martinot, 1993; Martinot, 1994; Levine et al., 1992; Liu et al., 1994; Wang and Sinton, forthcoming).

The approaches and insights from efforts to implement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in other countries that are likely to be applicable, in our view, to the DPRK as well, include the following:

- \* Promote changes in physical infrastructure that will facilitate energy decision-making. We have discussed at some length elsewhere in this report the types of energy-using equipment and other infrastructure in the DPRK that could be targeted for replacement or rehabilitation. What has been emphasized relatively less, but is at least as important, is the need to invest in equipment that allows flows of energy to be controlled and quantified adequately. Such equipment includes electricity, heat, and hot water meters; steam and process control valves and shunts; and dimmers and other equipment for controlling lighting. Applications for such equipment exist throughout the residential, commercial/public/military, and industrial sectors. Without such equipment--which typically is inexpensive and relatively easy to install and operate--any attempt to institute price signals in energy markets, or even to reward reduced energy use in other ways, will be futile, as end-users will lack the ability to control energy flows, the quantitative feedback that tells them whether efforts to reduce energy use have succeeded, or--worst of all--both.
- \* Implement institutional changes to spur the adoption of energy-efficiency measures. At present, the prices for energy commodities in the DPRK, to the extent that they are priced at all, need not bear any resemblance to their cost of production. While pricing reform in the energy sector is perhaps farther off in the DPRK than in the economies of Eastern Europe,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some revision in the way that fuels are distributed will clearly be necessary. Schipper and Martinot (1993) also cite the

example of energy quotas that may work against energy efficiency in that a factory (for example) that implements energy efficiency measures to the extent that it uses less than its energy quota may simply have its quota reduced by the utility, forcing it to reduce output and de-valuing its efficiency investment. This "ratchet effect" was found to be a barrier to efficiency improvements in China as well. It was at least partially addressed through modifications to the incentive system, e.g., preventing the ratcheting downward of energy allocations to enterprises that successfully improved efficiency, allowing such enterprises to resell unused allocations or awarding them a portion of the cost of saved energy, and providing efficient enterprises with preferential access to material and energy inputs and investment funds. While it is not clear to us exactly how energy quota systems work in the DPRK, similar issues are likely to arise there.

Standards for specific energy consumption (that is, the amount of energy needed to produce a unit of physical output) have long been used in China to gauge performance of and within industrial and other enterprises. Issued nationally, and often tailored to conditions specific to individual enterprises, these standards have been used to measure progress in improving efficiency, and have formed the basis of a system of financial and other awards. It is, in effect, a system of performance evaluation that parallels that based on output levels and product quality. This system is losing its effectiveness as China's transition to a market-oriented economy progresses and the central planning apparatus weakens, but it may still be quite appropriate for North Korea at this time.

Another necessary institutional change concerns access to energy-efficient products, materials and parts. Since these items will probably, at least initially, be imported, this will entail a loosening of restrictions on imports. China, already one of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s, would be a good source of efficient technologies and equipment that may be more easily absorbed (and more

affordable) than those available from already developed countries.

China has been a major energy supplier to North Korea in the past, and may have an interest not only in marketing equipment, but in reducing North Korea's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Changing energy policies to shift from a focus on maintaining and increasing fuel supplies to increasing energy efficiency while maintaining or increasing energy services will also be necessary.

Although the DPRK government has released a general statement of support for energy efficiency (published as "Let Us Further Strengthen the Struggle to Conserve Power" in *Nodong Sinmun*, 21 January, 1995), these policies should be expressed in more concrete terms.

- \* Make available government-backed loans and grants for energy-efficiency improvements. Organizations in North Korea-- factories or local housing authorities, for example--will need access to capital or credits that will enable them to obtain energy-efficient equipment and devices. The success in the 1980s of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rojects in China is attributable at least in part to the availability of substantial amounts of money for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Levine and Xueyi, 1990; Wang and Sinton, forthcoming). Originally in the form of grants, such funding gradually gave way to low interest loans, matched by funds from local governments and enterprises that leveraged limited central government monies. Funding was targeted at measures the central government wished to demonstrate. Once end-users saw the benefits to be gained from adopting measures so demonstrated (and became willing to adopt them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from the government) funding was then shifted to other priority technologies.
- \* Provide training and information on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technology. The decentralized nature of energy efficiency investments, as pointed out by Schipper and Martinot (1993), requires that adequate information and training be provided in a timely manner to all of the various government officials, plant operators, ministry planners, equipment suppliers and installers, and others that must help to bring energy efficiency measures from the planning, program delivery and



measure installation phases. Among the major tasks of China's network of over 200 Energy Conservation Service Centers are the training of officials, plant personnel, and auditors in energy measurement and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various classes of energy efficient equipment. In the DPRK, personnel will need to be trained for the (probably) entirely new (to North Korea) classifications of energy auditors, equipment installers, demand-side management planners, equipment operators, maintenance personnel for specific energy-efficiency technologies, and, last but certainly not least, teachers to train all of the types of personnel just mentioned. As in China and the former East Bloc, this training must be provided to people working at the operational level. Unlike much of present-day Eastern Europe, however, decision-making in North Korea remains a centralized activ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as much information and training to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as the latter will allow.

- \* Obta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on existing "energy markets". While we are confident that there exists in North Korea a great deal of energy data that we (and probably anyone else outside of the DPRK) have not had access to, it is virtually certain that the specific energy end-use data that are required for accurate planning and evaluation of energy-efficiency options have not been collected (and/or gleaned from existing information). As a consequence, extensive energy demand surveys and equipment audits will be required in every sector before energy efficiency programs on a broad scale can be implemented in the DPRK. This assumes the availability of trained people who can carry out audits and surveys, and evaluate their results (see above).
- \* Pursue sector-based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One point made forcefully by Schipper and Martinot is the need to pursue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on a sector-by-sector basis, as opposed to through an overarching "Least Cost Planning"-style of analysis as has been practiced for electric and gas utility service

areas[16]. It is people at the sectoral level who must work with energy-using equipment daily to do their jobs, rather than planners in a central ministry, who are most likely to be interested in energy-efficiency opportunities.

One way to gain support for energy efficiency measures is to emphasize those that achieve multiple goals. Energy-efficient technologies can be combined with building retrofits that increase the comfort of residents, the rebuilding of factories to improve output, the renovation of power plants to cut down on forced outages, and other upgrading efforts that have little--explicitly--to do with energy efficiency. China, in the 1980s, introduced a major process improvement to the steel industry--continuous casting--primarily as an energy efficiency measure, and supported its introduction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program of efficiency investments. In China's other energy-intensive industries, such as chemicals and cement manufacturing, measures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have typically resulted in greater output and higher quality as well, resulting in high rates of adoption.

To the ultimate users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the relative costs per unit of energy savings of the various possible industrial process, transport, and energy supply improvements is less than meaningful--what matters is how energy efficiency opportunities stack up to other potential uses for the investment funds that they have available (for example, investment funds allocat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likely to be a mistake to place personnel from the typically supply-oriented energy sector in charge of equipment decisions--energy-related though they may be--in other sectors of the economy, since they would bring with them a strong supply-side bias.

- \* Carry out demonstration projects. The most effective way to convince decision-makers in the DPRK--both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that energy efficiency measures and programs are worthwhile will be to show that they work in specific North Korean situations.

Carefully designed, effective demonstrations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involve local actors as much as possible are likely to catch the interest of North Koreans. Given the good system for technology dissemination in the DPRK, this is likely to lead to the adop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to the North Korean way of doing things. One word of caution here is to make sure that any demonstration projects carried out can be replicated elsewhere in the DPRK--measures unique to one or a few specific industrial plants, for example, are not likely to be widely replicated.

- \* Promote domestic production of energy-efficient products. This will involve ventures such as establishment of foreign-owned factories for making appliances, lighting products, and other types of energy-efficiency equipment, as well as joint ventures between foreign companies and North Korean concerns (probably state-owned, but perhaps eventually parastatal or private) in which foreign technology is licensed to North Koreans. Examples of foreign-owned factories and licensing of technologies abound in the developing world, including a number of venture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Martinot, 1994) and in China. It is likely that the earliest examples of such technology transfer to the DPRK will come in the context of ventures in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If they do, efforts will probably have to be made to ensur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output of energy-efficient devices remains in the country for use by North Koreans, rather than simply being exported to generate (much needed) hard currency.

#### 4.3. Potential Strategies for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in North Korea

Building on the experience and research in similar countries, as well as on the ongoing energy sector-related projects involving the DPRK, we present below our suggestions for key strategie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measures in the DPRK. Some of these

strategies will, quite admittedly, take time to implement (or even to start), and some are more likely to gain the approval of DPRK officials than others.

- \* Provide information and general training in the concepts and technologies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to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Getting energy efficiency programs off the ground in the DPRK will be impossible without top officials embracing the concept, as virtually all policy changes in North Korea, at present, must have clear direction from the very top. Consequently, the advantages and local/international opportunities provided by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measures must be presented to top officials in a manner that is both forceful and forthright.
- \*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and training to local actors. Training of a very specific and practical nature must be provided to personnel at the local level. Examples here are factory energy plant managers, boiler operators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power plant and heating system operators, and new job classifications such as energy-efficiency equipment installers and energy auditors.
- \* Implement practical, specific energ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nd provide the means to enforce them. DPRK officials have made general statements about their support for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ext step is to codify these in terms of quantitative standards for the efficiency of new appliances and equipment, as well as effluent standards for new--and perhaps eventually, existing--factories, power plants, residential heating boilers, vehicles and other major sources of pollution. Once standards are set, it will be necessary to create the capability to enforce them by recruiting and training enforcement personnel and supplying them with the tools necessary to do their job (testing equipment and adequately equipped labs, for example) and the high-level administrative support needed for credible implementation of sanctions.
- \* Establish a program of grants and concessional loans for energy efficiency projects. Experience in China has shown that such a program

in itself ca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in overall sectoral energy efficiency. The benefits of institutionalizing support for efficiency, however, would go beyond those obtained through the various individual projects themselves. Creating a government agency or corporation with its own budget would signal a strong commitment to efficienc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nd would create a constituency within official circles for promoting energy efficiency goals[17]. Moreover, by establishing a pool of funds for which government ministries, sectors, and/or individual enterprises could compete, it would stimulate at all levels awareness of energy efficiency potential, methods, and technologies. Eliciting proposals would encourage end users (including those whose proposals were ultimately rejected) to translate general concepts of energy efficiency into actual changes in equipment and operating procedures, thus bringing them one step closer to practical implementation.

- \* Modify existing incentives facing plant managers and relevant officials to encourage more efficient use of energy. Despite some problems, quota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key to China's success in eliminating many of the worst energy inefficiencies in its industrial sector, and in stimulating adoption of relatively more advanced techniques and technologies. While inappropriate to a market economy, a well-designed program of administrative measures would effectively utilize the strengths of North Korea's current form of government.
- \* Reform energy pricing. Before market forces of any kind can help to spu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the prices for energy products in the DPRK must be adjusted towards their actual costs of production. This, of course, includes products that are currently not priced at all. Pricing of some energy products, particularly electricity, will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metering and billing systems. To be effective, parallel reforms that sensitize local decision-makers to prices (i.e., that allow them to benefit from cost savings) must be implemented.
- \* Promote joint ventures, licensing agreements, and other means of

manufacturing energy-efficient products in the DPRK. The government of the DPRK,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should promote joint ventures and licensing agreements between DPRK concerns (governmental or otherwise) and foreign firms with energy-efficient technologies to produce.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 factories are a commonly-cited example of potential energy technology transfers (Sathaye et al, 1994). A wide variety of efficient industrial equipment and controls (including adjustable speed drive motors and improved industrial and utility boilers), efficient household appliances and components, and efficient building technologies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o China through commercial channels are being or will be manufactured there. Wind turbine-generators are another intriguing possibility, given the apparent success of such ventures in former East-bloc nations (Martinot, 1994) and the North Koreans' historical emphasis on machinery manufacture. Foreign firms that have successfully transferred efficient and renewable technologies to China, Russia, and Eastern European nations represent a valuable repository of experience that could be applied to similar efforts in North Korea. Depending on how fast the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Zone develops (infrastructure in the area is not yet adequate to support major industry), this area could be the location most acceptable to the DPRK for the first such ventures. It is likely that the first few foreig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joint ventures in the DPRK will require guarantees not only from the DPRK government, but also from their own government or another industrialized-nation or a multilateral donor.

Table 1: Estimated Detailed DPRK Energy Balance for 1990

Table 2: Summary of Quantitative Evalua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Options for DPRK

#### References

Hayes, P, (1993b), Cooperation on Energy Sector Issues with the DPRK. Nautilus Institute, Berkeley, California, USA. October 29, 1993.

Hayes, P, (1993c) Should the United States Supply Light Water Reactors to

Pyongyang?. Nautilus Institute, Berkeley, California, USA. October 29, 1993.

Lang, S., Y.J. Huang, and M. Levine (1992),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for Space Heating in Chinese Urban Residential Buildings. Energy Analysis Program, Energy and Environmental Division,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Levine, M. and L. Xueyi (1990), Energy Conservation Progra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pplied Science Division,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and Energy Research Institute, Peoples Republic of China. LBL-29211.

Levine, M., F. Liu, and J. Sinton (1992), "China's Energy System: Historical Evolution,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Annu. Rev. Energy Environ.* 1992. 17:405-435.

Liu, F., W.B. Davis, and M.D. Levine (1992), An Overview of Energy Supply and Demand in China. Energy Analysis Program, Energy and Environment Division,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LBL-32275 UC-350.

Liu, Z. P., J. E. Sinton, F. Q. Yang, M. D. Levine, and M. K. Ting (1994), Industrial Sector Energy Conservation Program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ring the Seventh Five-Year Plan (1986-1990).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and Energy Research Institute, Peoples Republic of China. LBL-36395.

Martinot, E. (1994), Technology Transfer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n Russia: Prospects and Case Studies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nergy and Resources Group,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 California, USA. [Summary of a Ph.D. Dissertation - Draft]

Microsoft Corporation (1994), Microsoft Encarta, 1994. CD-ROM software.

Nodong Sinmun (21 January, 1995; page 3) "Let Us Further Strengthen the Struggle to Conserve Power". (The Nodong Sinmun is the official North Korean government newspaper.)

Reddy, A. (1991), Barriers to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LBL-31439.

Sathaye, J. (1992), Economics of Improving Efficiency of China's Electricity Supply and Use: Are Efficiency Investments Cost-effective?

Sathaye, J., R. Friedmann, S. Meyers, O. de Buen, A. Gadgil, E. Vargas, and R. Saucedo (1994), "Economic Analysis of Ilumex: A Project to Promote Energy-Efficient Residential Lighting in Mexico". Energy Policy, February, 1994, pp. 163 - 171.

Schipper, L. and E. Martinot (1993), Energy Efficiency in Former Soviet Republics: Opportunities for East and West. International Energy Studies, Energy Analysis Program, Energy and Environment Division,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LBL-33929. Prepared for U.S. Department of Energy.

Sinton, J. (1995), "Physical Intensity of Selected Industrial Products". Spreadsheet printout. LBL"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Von Hippel, D., and P. Hayes (1995), The Prospect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valuating and Exploring the Options. Nautilus Institute Report,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USA. Manuscript in final preparation.

Von Hippel, D., and R. Verzola (1994), Indicative Study of the Potent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emand-Side Management in the



Philippines. Nautilus Institute Report. Nautilus Institute, Berkeley, California, USA.

Wang, Q. Y. and J. E. Sinton (forthcoming) China's Energy Conservation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1980 to the Present, and Beyond.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Berkeley, California, USA and China Energy Research Society,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iams, R.H., and Larson, E.D. (1993), "Advanced Gasification-Based Biomass Power Generation". In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Fuels and Electricity, edited by T.B. Johansson, H. Kelly, A.K.N. Reddy, and R.H. Williams. Island Press, Washington, D.C., USA.

Yande, D. (1992?), An Analysis of the Potential in Investment-Cum- Energy Conservation in Chemical Industry in China. Energy Research Institute, The State Planning Commiss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831 2nd Street Berkeley, California 94710 USA  
Telephone: 510-204-9296 Fax: 510-204-9298  
E-mail: npr@igc.apc.org

Oregon Office:  
910 E 23rd Avenue, Eugene, Oregon 97405-3075 USA  
Telephone/Telefax: 541-687-9275  
E-mail: dvonhip@igc.apc.org



# 북(조선) 식량문제 분석에 대한 재검토

1996. 4.

이 자료는 미주평화통일연구소(재미친북단체)가 북한식량난과 관련된 공개된 자료를 종합분석한 내용을 인터넷에 전송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차 례

- (1) 통계수치의 혼란
- (2) 통계착오인가 아니면 통계조작인가
- (3) 북(조선) 식량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 (4) '식량난설'과 '식량부족설'의 차이

## 북(조선) 식량문제 분석에 대한 재검토

### (1) 통계수치의 혼란

최근 남(한국)언론에 나오고 있는 북(조선) 식량문제에 관한 통계수치와 분석들은 일관성이 없이 들쭉날쭉하다. 이러한 통계자료와 분석의 불일치는 논리적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불일치의 원인이 단순한 판단착오 및 계산착오가 아니라, 정치적 편견에 결부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넉넉할만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1995년도 북(조선) 식량생산량에 대해서 적게는 2백60만t에서 많게는 4백80만t까지 편차를 보여 무려 2백20만t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남(한국)의 분석은 적은 방향으로, 반면에 유엔관련기관들의 분석은 많은 방향으로 잡혀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조선) 당국이 1984년 뒤로 식량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공백'이 비과학적인 억측을 낳고 그와 더불어 심한 불일치 현상이 생겨났다고도 볼 수 있다. 우선 남(한국)언론에 나온 북(조선) 식량문제에 관한 통계수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95년 생산량	96년 수요량	부족량
1) 2백60만t	6백22만4천t	3백63만t
2) 3백40만t	7백만t	3백60만t
3) 3백45만t	5백8만t	1백63만t
4) 3백45만t	6백73만t	3백28만t
5) 3백45만t	6백73만t	3백28만t
6) 3백50만t	6백20만t	2백70만t

7) 3백76만t

8) 4백만t

9) 4백8만t

10) 4백13만t                  6백72만t                  2백59만t

11) 4백80만t                  6백만t                  1백20만t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이 내놓은 통계수치.1)

2) - 북(조선)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을 인용한 남(한국)언론의 보도.2)

3) - 남(한국) '통일원'이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3)

4) - 남(한국)의 한 고위당국자가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제시한 통계수치.4)

5) - 남(한국) 당국이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협의회에서 제시한 '북  
한식량사정 평가분석자료'5)

6) -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통계수치.6)

7) - '한국개발연구원'이 인용한 북(조선) 당국의 통계수치7)

8) -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담당 차관 알렉산드르 파노프가 1996년 1월 3일 이타르타스 통신  
과 한 회견에서 내놓은 통계수치.8)

9) - '한국개발연구원'이 인용한 유엔국제식량농업기구와 유엔세계식량계획 조사단의 통계수  
치9)

10) - 남(한국) 언론이 인용한 남(한국) 당국의 통계수치.10)

11)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합동보고서에서 나온 통계수치.11)

남(한국) 당국과 민간연구기관, 언론이 제시하고 파악하고 있는 북(조선) 식량문제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중요한 것은 북(조선)이 식량절약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식량수요량과 실제 식량부족량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에도 여러 가지 통계수치들이 엇갈리고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수요량	실제부족량	절약가능량
① 5백78만t	2백33만t	95만t
② 5백40만t	1백90만t	80만t
③ 5백18만t	1백73만t	1백55만t
④ 4백13만t	68만t	95만t

- ① - 남(한국)의 한 고위당국자가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제시한 통계수치.
- ② -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통계수치.
- ③ - 남(한국) 당국이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협의회에서 제시한 '북한 식량사정 평가분석자료'
- ④ - 남(한국) '통일원'이 1996년 1월 17일 배포한 자료.

다른 한편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1990년대 북(조선)의 식량수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12)

	해당연도 총수요	전년도 생산량	부족한 량
1991년도	6백47만t	4백81만2천t	1백65만8천t
1992년도	6백50만t	4백42만7천t	2백7만3천t13)
1993년도	6백58만t14)	4백26만8천t	2백31만2천t
1994년도	6백67만t	3백38만4천t15)	3백28만6천t

1995년도          6백72만t                  4백13만t                  2백59만t16)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북(조선)의 쌀생산량 현황17)은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1991년 1백64만1천t

1992년 1백53만1천t18)

1993년 1백31만7천t19)

1994년 1백50만2천t20)

그런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조선)의 1980년대 후반기 쌀생산량을 참고로 보면, 1986년 3백1만t, 1987년 3백6만t, 1988년 3백10만t, 1989년 3백55만t, 1990년 3백55만t으로 나와있다.21) 이러한 통계는 한국농촌진흥청의 발표와는 너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 3백55만t의 식량생산량이 한 해 뒤에 1백90만9천t이 줄어든 1백64만1천t으로 격감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통계수치의 차이는 단순한 계산착오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한국농촌진흥청의 통계수치 가운데 분명히 어느 한 쪽이 그릇된 통계수치를 내놓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북(조선) 식량생산량에 대한 통계수치는 기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가려낼 수 없을 정도다. 요즈음 남(한국)의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언론기관에서 나돌고 있는 북(조선)의 식량문제에 대한 통계자료는 엄청난 수치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가 제기하는 물음은 이러한 통계착오 또는 통계조작의 허구를 넘어서 북(조선) 식량문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데로 집중된다.



## (2) 통계착오인가 아니면 통계조작인가

식량문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파악해야 한다. 요즈음 남(한국)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이른바 '북(조선) 식량난'에 대한 요란한 담화들은 북(조선) 식량문제의 실상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북(조선)의 식량생산량과 식량수요량을 산출할 때 어떠한 산출근거를 적용하느냐 하는 데서 결정된다. 북(조선) 농업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도 "북한의 곡물수요량은 산출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sup>22)</sup> 그릇된 산출근거를 적용할 경우 그릇된 통계수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이른바 '식량난 발생설'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즈음 남(한국)에서 나돌고 있는 북(조선) 식량문제에 관한 계산법은 식량생산량은 되도록 적게 만들어놓고, 식량수요량은 되도록 많이 만들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식량난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분석'으로 둔갑하면서 결국 이른바 '북(조선) 멸망임박론'을 안받침해주게 된다.

먼저 북(조선)의 식량생산량에 관한 문제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무릇 식량생산이란 경작지 면적과 단위면적당 수확량 및 농업인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동원하여 파악해야 할 문제다. 북(조선)의 경작지 면적은 모두 1백97만4천정보다. 이 가운데서 논면적은 61만4천정보, 밭면적은 1백36만정보가 된다.<sup>23)</sup> 농업인구는 8백50만명이다.<sup>24)</sup>

북(조선)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통계를 보면, 북(조선)의 경작지 면적은 2만1천6백73평방km로 되어 있다.<sup>25)</sup> 이에 비하여 남(한국)의 경작지 면적은 1천54평방km가 적은 2만6백19평방km다.<sup>26)</sup> 남(한국)의 인구가 4천4백

61만3천9백93명(1993년 7월 현재)이고, 북(조선)의 인구가 절반 밖에 안되는 2천2백64만5천8백11명(1993년 7월 현재)라고 하는 미 중앙정보국의 통계수치를 놓고 생각해보면, 정작 식량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북(조선)이 아니라 경작지는 적고 인구는 두 배나 많은 남(한국)이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뒤엎어 버린 '반상식적인 정보' 앞에서 인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북(조선)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어떻게 산출하는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공식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기구의 공식발표를 따르면, 북(조선)의 단위면적당 쌀생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북(조선)은 이 분야에서 이미 1981년에 세계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고, 그 뒤로도 해마다 기록갱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기구의 통계자료를 따르면, 1991년도 세계평균 쌀수확량은 1정보당 3.5t인데, 1990년도 북(조선)의 1정보당 쌀수확량은 8.209t이라고 한다.<sup>27)</sup> 참고로 주요 쌀생산국의 정보당 쌀수확량을 살펴보면, 미국은 6.30t, 일본 5.86t, 중국 5.56t, 인도네시아 4.35t, 베트남 3.09t이다.<sup>28)</sup> 북(조선)의 논면적 61만4천정보에 단위면적당 쌀수확량(1990년 현재) 8.209t을 곱하면 5백4만t이라는 수확량이 나온다. 물론 이 수치는 감수량을 계산하지 않은 이론상의 수치다. 만일 감수량을 30%로 추정하면<sup>29)</sup>, 3백52만8천t의 쌀수확량이 나온다. 이 경우 정보당 수확량은 5.746t이 된다. 이것은 중국과 비슷한 수치다.

여기서는 정보당 쌀수확량을 얼마로 파악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남(한국)과 미국의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보고하여 공개된, 쌀수확량이 8.209t이라고 하는 발표를 믿지 않고 있으며, 그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면복(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은 북(조선)의 경우 실험농장의 쌀수확량이 정보당 8-12t이고, 협동농장에서는 정보당 3-5t으로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sup>30)</sup> 만일 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북(조선)의 정보당 쌀수확량이 중국의 수확량과 같다고 추정하면, 3백41만3천8백40t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한편, 북(조선)의 밭면적은 1백36만정보인데,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가장 낮은 추정값으로 계산하여 정보당 3t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밭작물 수확량은 연간 4백8만t이 된다. 밭작물 가운데서 중요한 옥수수 수확량에 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자. 북(조선)의 옥수수 경작면적은 65만정보다. 중국 길림성의 단위면적당 옥수수 수확량은 정보당 6.3t이고, 남(한국)은 정보당 4.14t이다. 만일 북(조선)의 옥수수 수확량을 중국 길림성보다는 적고, 남(한국)보다는 많은 정보당 5t이라고 추정하고, 여기에 감수량 30%를 빼면 옥수수 수확량만해도 2백27만5천t이나 된다.<sup>31)</sup>

다음으로 북(조선)의 식량수요량을 산출하기로 한다.

식량수요량을 검토하려면 먼저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북(조선)의 인구통계에 관하여 미 중앙정보국(CIA)은 2천2백64만5천8백11명(1993년 7월 현재)이라고 밝힌 바있다.<sup>32)</sup> 그 밖에도 미국의 전문가들이 낸 통계는 1990년 현재 약 2천1백40만명인데<sup>33)</sup>, 연간 자연증가수를 39만5천9백명으로 잡는다면<sup>34)</sup>, 1993년 현재 2천2백58만7천7백명이라는 수치가 나오므로, 미 중앙정보국의 통계와 미국 전문가들의 통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93년 이후 연간 자연증가수를 더한다면, 1995년말 현재 북(조선)의 인구수는 약 2천3백37만9천5백명으로 산정된다. 1995년 12월 25일에 통일원 정보분석실이 펴낸 '95 북한개요'에서는 1994년말 현재 북(조선) 인구를 2천2백95만3천여명으로 추산했다.<sup>35)</sup>

약 2천3백만의 인구가 모두 같은 양의 식량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의 나이층을 따라 식량소비량을 달리 계산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북(조선) 인구를 나이층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은 통계가 나온다. 0-14세의 미성년 나이층은 전체인구의 15.9%인 3백71만7천3백40명, 15-64세의 성인 나이층은 전체인구의 69.1%인 1천6백15만5천2백34명, 65세 이상의 노인 나이층은 전체인구의 15.0%인 3백50만6천9백25명이다.<sup>36)</sup>

이제 더 검토해야 할 것은 한 사람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참고로 남(한국)의 형편을 보자면, 한 사람당 연간 쌀소비량이 약 1백5.7kg(이므로 37), 하루 평균 쌀소비량은 2백90g이 된다. 북(조선)에서 0-14세 나이층의 미성년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루 평균 쌀 분량을 2백50g, 15-64세 성인 한 사람당 하루 평균량을 3백30g(38), 65세 이상 노인층의 하루 평균량을 3백g으로 각각 잡는다면(이것은 평균 2백93.3g의 쌀소비량을 뜻한다.)<sup>39)</sup> 미성년층은 한 사람당 연간 91.2kg, 성인층은 120.4kg, 노인층은 109.5kg의 쌀수요량이 각각 나온다.<sup>40)</sup>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미성년층은 한 해에 33만9천21t, 성인층은 한 해에 1백94만5천90t, 노인층은 한 해에 1백5만2천77t의 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를 모두 합하면 북(조선) 전체인구가 한 해 동안 필요한 쌀수요량인 3백33만6천1백88t이 나온다. 위에서 계산한대로 쌀 수확량이 3백52만8천t이라고 한다면, 한 해에 19만1천8백12t의 쌀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일 정보당 쌀수확량을 중국의 수확량과 같다고 추정하여 계산한 3백41만3천8백40t을 수확량으로 본다고 해도, 7만7천6백52t이 남는다. 한국농촌진흥원의 김운근도 최근 북(조선)의 식량문제를 분석하면서, 한 사람당 연간 평균 곡물소비량을 1백29kg이라고 주장하고, 북(조선)에서 연간 3백만t 정도의 곡물만 있으면 식용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41)</sup>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조선)의 식량수확량을 계산할 때, 경작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비교적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기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쁜 기후조건(냉해나 홍수 등), 병충해, 낙후한 영농기술, 협동농장제도운영로 농민의 의욕이 감퇴되었기 때문에 감수량이 생긴다고 전제한 감수량 산출과정에서 통계착오, 또는 의도적인 통계수치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감수량 산출과정에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감수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감수량 산출근거를 제시할 때 임의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의 주장이다. 그는 북(조선)에서는 물바구니의 피해<sup>42)</sup>가 심하여 쌀 감수량이 적어도 25%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 한 바있다. 그는 또한 북(조선)의 영농기술이 남(한국)의 1970년 수준 정도로 낙후하였기 때문에 감수량이 29%라고 주장했으며, 협동농장이라는 제도적 결함 때문에 농민들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농사일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감수량은 33.5%라고 주장한다. 그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나니까, 북(조선)의 정보당 실제 수확량은 1.63t으로 격감하게 된다.<sup>43)</sup> 이렇게 하여 산출된 북(조선)의 수확량은 고작 1백만8백20t 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서 감수량을 30%라고 추정하여 산출한 3백52만8천t의 쌀수확량에 비교한다면, 무려 2백52만7천1백80t이라는 엄청난 계산상의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다음으로는 식량수요량의 산출과정에서 생기는 착오의 가능성 또는 의도적인 통계수치 조작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할 차례다.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은 북(조선)의 식량수요량을 산출하면서, 만일 인구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 가운데 10g을 가산하느냐 아니면 감산하느냐는 산출기준을 따라서 연간 전체인구의 식량소비량은 무려 85만3천3백35t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한 사람당 평균 식량수요량이 얼마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 사람당 평균 식량수요량을 터무니 없이 늘려놓으면 그만큼 식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한 사람당 평균 식량수요량을 연간 380kg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대표적이다.<sup>44)</sup> 이 수요량을 다시 하루 평균값으로 환산하면 무려 1kg41g이라는 엄청난 수요량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 냉해나 홍수 같은 기후조건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감수량의 산출과정에서도 커다란 착오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해로 입은 곡물피해량에 대해서도 서로

엄청나게 엇갈리는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다. 최대 피해량과 최소 피해량 사이에는 무려 2백 74만이라는 격차가 드러난다. 수해 때문에 일어난 곡물피해량에 대해서 북(조선) 당국은 최대값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기관들은 최소값으로 산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해로 입은 곡물피해량

① 2백94만t

② 1백90만t

③ 1백50만t

④ 1백7만-1백45만t

⑤ 22만t (10억 달러)

⑥ 20만t

① - 1996년 2월 1일 마카오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나눔과 연대회의'에 참석한 조선기독교도연맹 강영섭 위원장이 보고서에서 밝힌 피해량(쌀 1백8만t, 강냉이 81만t, 재고식량 1백5만t)이다.45)

② - 북(조선)은 국제사회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1백50억달러에 이르고, 곡물감수량은 1백90만t이라고 밝혔다.46)

③ - 북(조선) 당국은 국제사회에 곡물피해량을 1백50만t이라고 발표한 바있다.47)

④ - 유엔조사단은 수해로 인한 곡물피해량이 1백7만 - 1백45만t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48)

⑤ - 한·미 두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발표한 추정치.49)

⑥ - 미 중앙정보국(CIA)은 1995년 수해 직후 곡물피해량을 20만t이라고 추정한 바있다.50)

이러한 추정은 미국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자료를 미 중앙정보국이 분석한 것이라고 한다.51)

미 중앙정보국의 통계자료는 북(조선)의 수해 가운데 곡물피해는 10% 안팎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남(한국)의 안기부와 통일원이 내놓은 곡물피해자료는 모두 미 중앙정보국의 이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2)</sup> 홍콩의 중국소식통들도 북(조선)의 중국접경지역은 해마다 식량수급난을 겪는 지역으로 지난 여름 수해 때문에 다소 심각한 형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다급하지 않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견해라고 밝혔다.<sup>53)</sup> 셀릭 해리슨은 미 농무부의 분석을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한 바있다.

"미 농무부가 북한의 외부지원 요청결단이 주로 중국쪽의 갑작스런 옥수수 수출 격감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가들은 좋지 않은 날씨가 북한의 곡물생산에 악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94년과 95년도의 북한 식량생산수준은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수입 필요량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sup>54)</sup>

그런데 요즈음에는 식량난의 원인이 수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조선) 농업의 '구조적인 결함'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작성한 유엔의 내부보고서에서 북(조선)의 식량난이 1995년 여름의 수해피해 때문이라기 보다는 단일품종 재배, 밀집경작에 의한 지력저하 등 '주체농법'으로 불리는 농업정책 자체의 결함이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sup>55)</sup>

남(한국) 당국이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협의회에서 배포한 자료는 남(한국) 당국이 "국내는 물론 러시아, 중국 등 수집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자세한 통계숫자와 산출방법, 배급량 등을 제시한 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1회성 지원이 아니라 영농기술개선·종자개량·비료·농약개발 등과 과대한 국방비 절감 등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sup>56)</sup> 이러한 주장은 민간연구단체의 주장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사회주의적 농촌경리 모순설'과 '비료·농약·영농기  
기 연료의 절대부족설'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운근의 주장(57), 전 북한  
농업과학원 연구원이었다는 이민복의 주장(58),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59), 미국 위스컨  
신대 교수 이희상의 주장(60) 등이다.

미 국무부도 이러한 남(한국) 당국의 견해와 일치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 1월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협의회에 참석했던 미국측 수석대표인 윈  
스턴 로드(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한'(serious) 상태며 이  
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북한의 정책결함, 그리고 지난 해 수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61)

### **(3) 북(조선) 식량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한때 미 중앙정보국이 북(조선)이 수해로 입  
은 곡물피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반하여(62), 미 행정부 일각에서  
는 북(조선)의 수해피해가 식량난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 '심각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는 사  
실이다. 1996년 1월 18일 대통령 안보보좌관 엔터니 레이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는 국가안  
보위원회(NSC) 관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언론은  
"홍수피해로 인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심각하다는 전제 아래 미국 정부차원의 지원에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체제의 동요와 군사적 불안상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63) 그런데 미 중앙정보국이 북(조선)의 수해피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한 뒤로 약 두 달이 지난 1996년 2월 22일 미 상원 청문회에 나  
온 미 중앙정보국장 존 도이치는 북(조선)의 수해피해와 경제난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



변하면서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으며, 기아와 궁핍의 상황을 돌이킬 능력도 거의 없다."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sup>64)</sup> 미국이 이처럼 '북(조선) 식량난'을 과장하면서 '식량난이 물고올 파멸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미 행정부가 식량 지원을 통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미 행정부는 왜 북(조선)의 식량난을 과장하면서까지 북(조선)에 식량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을까? 지금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지역이 이 지구 위에 얼마든지 있는 데, 정작 그러한 지역은 그만두고 실제로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북(조선)에 식량을 지원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래 국제사회에서 식량지원이란, 스포츠문제와 더불어,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주요변수들 가운데 하나다. 식량은 다른 데 전용하거나 오래 비축할 수 없는 '소모품'이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몇 나라를 빼놓고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지 반드시 필요한 '전략품목'이며, 그럴듯한 대외명분을 달기에 편리한 '인도주의 품목'이며, 미국에서 남아도는 '잉여품목'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북식량지원문제는 결국 하나의 표피적인 현상일 뿐이며 3국이 북한문제를 통해 노리는 정책이익이 크게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식량난이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한 분석이 국가에 따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65)</sup>고 한 남(한국) 인론의 분석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런 물음이 생긴다. 미 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쌀지원을 통하여 조-미 관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는 외교발판을 마련하려는 게 아닐까? 미국의 쌀지원 저의를 가장 솔직하게 밝힌 사람은 아마도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일 것이다. 그는 1996년 1월 21일 아침 '한국방송공사' 특별회견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식량을 미끼로 쓰고 싶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sup>66)</sup> 이것이 현지에 있는 미국 외교관의 이른바 '쌀외교'에 관한 언급이다.

#### (4) '식량난설'과 '식량부족설'의 차이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북(조선)은 현재 식량이 '일정정도'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식량부족 때문에 체제붕괴의 위기에 몰려있다거나 식량부족 때문에 '생지옥'으로 변하였다고 하는 '식량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996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황해도와 자강도의 수해피해지역을 돌아본 미국 언론인 버너드 크리셔(전 뉴스위크지 도쿄 특파원)는 자신이 만났던 북(조선) 큰물피해복구위원회 이종화 대표가 한 말을 이렇게 전했다.<sup>67)</sup>

"북한 내에서 식량부족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근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보도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하다는 외국관리들의 발언은 북한의 안정된 이미지를 약화시키거나 동정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다."

남(한국)의 이수성 국무총리도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성급한 단정은 우리의 건전한 대북관과 통일관에 혼선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북한 대응태세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있다.<sup>68)</sup> '식량난설'은 식량부족을 식량난으로 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장설의 뿌리는 북(조선)의 인민들이 굶주림에 지쳐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른바 '북(조선) 멸망임박론'<sup>69)</sup>에 결부된 것이며, 따라서 냉전·분단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국)의 한 언론인은 북(조선) 멸망임박론은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데 누가 교류협력이니 신뢰구축이니 하는 멀고도 지루한 작업에 매달릴 것인가"고 되물으면서, 그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논리가 아니라 주체적인 통일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sup>70)</sup>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식량난설'로 안받침을 받고 있는 북(조선) 멸망임박론은 결국

반통일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북(조선)의 식량문제에 관하여 균형감각을 갖추려면 아래와 같은 평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북(조선)의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자체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량사정이 어렵기는 하나 체제위기에 이른 것은 아니며, "독특한 공산체제의 배급체제를 감안할 때 북한이 나름대로의 생존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략) 특히 지난 시절 자국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서방세계들은 공산체제가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식량배급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71)

셀릭 헤리슨이 전한 미 농무부의 연구보고서는 "기근이 만연하고 식량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들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북한은 중앙집중식 식량배급 체제를 지방분권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와중에서 일부 지역이 때때로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에 처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94년에 사정이 더 악화됐다는 조짐도 없다."72)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셀릭 헤리슨은 1995년 10월 하순 북(조선)을 방문한 뒤에 적은 '인상기'에 이렇게 적었다.

"평양은 아직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고생은 없어보였습니다. 음식도 좋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식량배급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당 창건 50주년 기념행사 리허설로 평양거리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위로, 직장 단위로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하철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버스에서도 쏟아져 나와 수십만명이 거리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들은 손에 햇불이나 꽃을 들고 열정적으로 리허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나라가 결코 붕괴될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아직도 북한 체제 붕괴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이 많

은 데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늑기만 할 것입니다.”73)

일본의 사진작가이며 군사문제 전문가인 가토 겐지는 1995년말 함경북도 지역(유선과 무산)에 몰래 들어가본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명색이 국경인데도 경비병, 철조망, 감시탑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놀랐다. 국경지역의 경비가 의외로 허술해 주민들이 탈출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았지만 굳이 도망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중략) 북한의 농촌마을은 가난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개울에서는 아이들이 썰매를 지치고 있었고 동네어귀에서 한 떼의 어린이들이 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놀이를 하고 있었다.

길가는 어른들은 점퍼 등을 두툼하게 입고 있었고 건강상태도 좋아 보였다. 최근 언론들의 식량난 관련 보도 때문에 북한이 아프리카의 기근지역 못지 않은 참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나로서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중략) 이날은 북한의 전기사정이 궁극해 일부러 해가 질 때까지 머물렀다. 오후 6시쯤 사방이 어두워지자 산간지역 주택 곳곳에 전깃불이 켜졌다. 큰 길가에는 가로등까지 켜졌다. 분명히 북한의 물자난은 생각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74)

## < 주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은 북(조선)에는 비축미가 전혀 없고, 1995년 수해 감수량이 1백 50만t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주간조선 1996년 1월 22일자) 또한 그는 1994년 생산량이 약 4백만-4백 10만t으로 추산되므로, 1995년 생산량은 2백60만t 안팎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조선일보 1996년 1월 11일자) 1996년 수요량은 6백22만4천t으로 추정되므로, 부족량이 3백63만t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한국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1996년 1월 16일 서울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하고 통일원과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북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경실련 대표 장원석(단국대 교수)은 북(조선) 발표와 유엔, 농촌경제연구원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1995년에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수해 때문에 전년보다 36.4% 줄어든 2백60여만t이다. 연간 수요량을 6백20여만t으로 볼 때 올해 식량부족량은 3백60여만-3백90여만에 달한다."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17일자)

2) 북(조선)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식량수요량은 7백만t인데, 지난해 수확량은 3백40만t에 지나지 않아 하루에 한 끼(한 사람당 4백g)로 연명한다고 해도 절대부족량이 1백20만t이나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6년 1월 4일자) 1996년 2월 1일 마카오에서 조선기독교도련맹의 황시천 국제부장은 알곡수요량이 7백83만8천t이며, 현재 부족량은 2백30만t이라고 밝힌 바있다. (중앙일보 1996년 2월 2일자)

3) 남(한국) 관계당국이 1996년 1월 17일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료는 "북한의 식량용 곡물수요량은 정상배급시 5백8만t이지만 지난 87년 이후 22% 감량배급돼 온 점을 고려할 때 4백13만t이 소요돼 95년 생산량 3백45만t 중 종자와 감모량분 49만t을 제외할 경우 잔여분 2백96만t으로 9개월 간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18일자) 통일원의 송영대 차관이 1996년 1월 19일 내무부 주최로 열린 '기초단체장 초청 정부정책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도 이와 같다. (중앙일보 1996년 1월 20일자)

4) 남(한국) 당국의 한 고위당국자가 1996년 1월 17일 언론에 제시한 내용은 이렇다. "1995년 북(조선)의 식량생산량은 3백45만t이고, 정상적으로 배급할 경우 소요량은 6백73만t이다. 따라서 부족한 분량은 3백28만t이다. 그런데 지난 1987년 뒤로 절약미 명목으로 기준량에서 22%를 공제해 배급하고 있고,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량은 5백78만t이다. 이 경우 부족량은 2백33만t으로 추정된다. 예년처럼 60만t의 곡물을 수입할 경우 부족량은 1백73만t 수준에 이를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일보 1996년 1월 18일자)

5) 남(한국) 당국은 '북한식량사정 평가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는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협의회(이 협의회는 1995년 11월 17일 오사카에서 세 나라 외무장관 회담이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정례적 협의를 갖자고 합의한 뒤 처음 열린 것이다.)에서 남(한국) 대표단이 미국 및 일본 대표단에게 제시한 것인데, 1995년 북(조선)의 식량생산량은 3백45만t이고, 정상 소요량보다 3백28만t이 부족하며, 공업용, 사료용, 종자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부족량은 1백73만t이고, 현재 비축량만 가지고서도 9개월까지 배급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1996년 1월 26일자) 남(한국) 언론은 북(조선)이 국제식량기구(FOA) 재고곡물 권장량 2개월분보다 훨씬 많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18일자)

6) 북(조선)의 식량사정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은 '한국농촌진흥청'이 맡아서 하고 있다. 농진청은 북(조선) 법씨를 휴전선 근처에서 실제로 경작해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통일원과 안기부가 제공하는 북(조선) 수해평가 자료를 근거로 북(조선)의 식량사정을 분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농진청은 북(조선) 식량난에 대한 한·미·일 세 나라의 평가와 정치적 입장이 엇갈리게 되자 결과 발표를 계속 늦추고 있었다고 한다. 관계당국자가 확인한 바를 따르면, 농진청의 조사결과는 북(조선)이 올해 1996년도 7-8월까지 버틸 식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남(한국) 당국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농진청은 북(조선)의 1995년도 곡물생산량이 3백50만t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1994년 생산량인 4백12만t보다 60만t 정도 줄어든 양이다. 지난 여름 수해 때문에 생긴 감수

량을 60만t으로 평가한 결과다. 북(조선)이 양곡연도말인 1995년 10월 말에 확보한 쌀은 추수한 곡물 3백50만t, 일본에서 가져가지 않은 쌀 18만t, 군 비축미 약 1백만t이라고 추정하는 데, 이를 모두 합하면 4백70만t이 된다고 한다. 북(조선)이 한 해 수요량은 약 6백20만t인데, 여기에는 공급용 식량, 가축사료, 가공용 곡물, 저장시 감모분, 종자용을 모두 포함한 양이다. 이 가운데 공급용 식량이 약 5백40만t으로, 한 달에 45만t이 소요된다. (주간조선 1996년 1월 22일자)

7) 조선일보 1996년 2월 2일자

8)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담당 차관 알렉산드르 파노프는 1996년 1월 3일 이타르타스 통신과 한 회견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북한이 아직 어느 정도의 비축물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북(조선)의 1995년도 추정수확량은 4백만t정도라고 보고 있으며, 1994년도 추정수확량은 4백80만t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남(한국)과 일본, 태국 등에서 90만t 가량의 쌀을 받았으므로 1994년도 공급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스크바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줄어들긴 했으나 배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각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20kg씩 보관토록 된 전시대비 비축식량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16일자)

9) 조선일보 1996년 2월 2일자

10) 남(한국) 언론은 남(한국) 당국의 통계수치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다. "정부는 당초 북한이 올해(1996년) 필요한 식량은 6백72만t이나 지난해(1995년) 곡물생산량은 4백13만t에 불과해 부족분이 2백59만t 정도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배급량을 줄이는 등 내핍을 통해 소비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1백40만t 정도의 곡물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3일자) 성인노동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 7백g 식량배급을 5백86g이하로, 탁아소 어린이에 대한 지급량을 3백g에서 1백g으로 줄이는 등 '1백만t 절약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적이 있다. (동아일보 1995년 6월 27일자) 남(한국) 당국은 1995년 북(조선)의 곡물생산량은 1994년보다 60만t 이상이 줄어든 3백50만t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조선)의 하루 곡물소비량을 1만5

천t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남(한국) 당국은 1995년 곡물수요량을 6백72만t으로 추정했고, 따라서 곡물부족량은 약 2백60만t이라고 보았다.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11) 북(조선)은 오래 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해마다 식량작물 생산실적을 정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합동보고서는 "북한의 올해 곡물수요량은 약 6백만t이 될 것이다. 1995년 수확량 및 수입량 4백80만t을 뺀 1백20만t 가량이 부족할 것이다."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25일자) 유엔식량농업기구는 북(조선)의 곡물생산량(조곡기준)을 1971년 3백27만t, 1976년 7백32만t, 1981년 1천23만t, 1987년 1천1백56만t, 1988년 1천1백87만t, 1989년 1천2백4만t으로 발표했고, 이 가운데 쌀생산량(조곡기준)은 1985년 5백57만t, 1986년 6백만t, 1987년 6백20만t, 1988년 6백35만t, 1989년 6백40만t이라고 발표했다. (김남식, 이태섭, 이선태 지음,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며 [서울:도서출판 대동, 1992], 157쪽 참조) 이것은 요즈음 남(한국) 언론에 나타나는 통계수치와는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2) 동아일보 1995년 6월 27일자, 1996년 1월 3일자

13) 미국 위스컨신 대학의 이희상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북(조선) 식량문제에 관한 통계를 아래와 같이 내놓았다.

해당연도	식량공급량	식량수요량	부족량
1990년	7백54만t	8백14만t	60만t
1991년	7백31만t	8백29만t	98만t
1992년	7백9만t	8백45만t	1백36만t
1993년	7백23만t	8백61만t	1백38만t

(Hy-Sang Lee, 'Supply and Demand for Grains in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XVIII, No. 3 [Fall 1994], 542쪽) 그의 통계에 나오는 '식량공급량'이라는 개념 안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분량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국농촌진흥청'의 통계와 비교하면 너무 엄청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희상 교수의 통계수치는 미 농무부의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14) 미 농무부의 분석자료는 1993년도의 식량수요량은 8백61만t이라고 분석한 바있다. (셀릭 헤리슨, "쌀에 담긴 북의 메시지",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14일자)

15) 전년도인 1993년도는 동북아와 북미주지역에 냉해가 휩쓸고 간 시기였다. 중국, 남(한국), 일본, 미국의 농작물 수확은 이 해에 10-30%의 감수량(13년 이래 최대 감수량)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북(조선)만이 '풍작'이라고 발표했다. 3백88만4천t이라는 수치는 한국농촌진흥청이 전년대비 9%의 감수량으로 평가하여 내놓은 추정값이다. (North Korea News, [No. 723], 1994년 2월 21일자, 4쪽. Hy-Sang Lee, 위의 글, 545쪽, 각주 80에서 다시 옮김) 그런데 John Merrill은 1993년도 수확량을 전년도와 같은 4백50만t이라고 추정했다고 한다. (John Merrill, 'North Korea in 1993: In the Eye of the Storm', Asian Survey, Vol. 34, No. 1, [January 1994], 15쪽. Hy-Sang Lee, 같은 글, 같은 쪽에서 다시 옮김) 여기서도 한국농촌진흥청의 평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존 메릴의 평가를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16)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1995년에 발표한 북(조선) 식량통계는 1995년 곡물수요량 6백72만 t, 전년도 곡물생산량 4백12만t, 부족량 2백60만t이라고 밝힌 바있다. (동아일보 1995년 8월 24일자) 이 통계수치는 한국농업진흥청이 내놓은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17) 동아일보 1995년 6월 27일자. 이 기사에서 한국농촌진흥청은 1993년도 쌀수요량은 2백34만t 이었고, 해마다 약 10만t씩 수요량이 증가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18) 유엔식량농업기구에 제출한 북(조선)의 1992년도 보고서를 보면, 쌀 생산량 - 5백80만t (정곡으로는 418만t, 2천9백만 석, 1983년도에는 3백67만2천t[2천5백50만 석]이었으며, 1992년도 남(한국)의 쌀 생산량은 5백33만1천t [3천7백만 석]이었음) 그런데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재조정한 1992년도 통계는 쌀 생산량 - 4백30만t, 밀 생산량 - 10만t, 옥수수 생산량 - 2백40만t으로 나왔다.

19)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1993년도 통계는 쌀 생산량 - 2백90만t, 밀 생산량 - 10만t, 옥수수 생산량 - 2백20만t, 콩 생산량 - 40만t이다.

20)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한 1994년도 예상통계수치는 쌀 생산량 - 3백만t, 밀 생산량 - 10만t, 옥수수 생산량 - 2백10만t, 콩 생산량 - 40만t이다.

21) 미주동아 1995년 9월 18일자에 실린 오원철(기아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의 글에서 다시 옮김.

22) 조선일보 1996년 1월 11일자.

23) 이것은 통일원이 발표한 1993년도 통계다. 남(한국)의 한 일간지는 북(조선)의 경지면적이 논 65만정보, 밭 75만정보라고 보도한 바있다. (한국일보 1993년 6월 29일자) 남(한국)의 한 주간지가 입수하였다고 하는 옛 동독정부의 북(조선)관련 기밀문서들 가운데는 1986년 10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과 호네커 서기장 (옛 동독의 통일사회당 서기장)의 정상회담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김 주석이 말한 내용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우리는 발전도상국으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와 대면하고 있다. 식량의 확보, 주택문제 해결, 의복문제 해결이 세 가지 문제이다. 우리는 매우 작은 경작지만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2백만ha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백50만ha뿐이다. 나머지 50만ha는 경작이 어려운 산악지대이다. 우리는 30만ha의 농지를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다로부터 만들어야 한다." (한국일보 1995년 10월 13일자)

24) 같은 시기의 남(한국)의 농업인구는 5백40만명이라고 한다.

25)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4-95 (Washington, D.C.: Brassey's, 1994) 211쪽.

26)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같은 책, 211쪽.

27)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북(조선)의 단위면적당 쌀수확량은 1986년 6.977t, 1987년 7.086t.

1988년 7.175t, 1989년 8.209t으로 나와 있다. (미주동아 1995년 9월 18일자에서 다시 옮김) 재일본 조선인총연맹의 기관지 '조선신보' 1993년 6월 4일자는 북(조선)의 1993년도 미곡생산 목표는 정보당 10t이라고 하였다. 전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교수였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조명철은 북(조선)의 벼씨인 '평양15호'를 실험재배하니까 정보당 15t이라는 기록적인 생산량이 나왔다고 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11일자) 1985년 10월에 북(조선)을 방문했던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의 농학자 세 사람은 '평양15호'가 북(조선)의 서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의 논 약 60%에 심어져 있었으며, 협동농장에서 정보당 9.2t의 높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한 바있다.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Rice Research and Produc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based on the Visit of Drs. M. S. Swaminathan, G. S. Khush, and B. S. Vergara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ctober 1-8 1985, [Manila, Philippines, December 1985], 21-23쪽. Hy-Sang Lee, 위의 글, 526쪽에서 다시 옮김) 1994년 2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보당 생산량이 12t 이상이 되는 새로운 벼개량종을 개발할 것을 발표했다고 한다. (민주조선 1994년 2월 26일자)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자면, 벼는 자가수정을 하고 교배장애성을 지니고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퍼 벼개량종'의 개발은 아직 성공한 적이 없고 단지 중국에서만 성공했을 뿐이라고 한다. (Peter T. White, 'Rice: The Essential Harvest', National Geographic [May 1994], 65쪽 참조. Hy-Sang Lee, 위의 글, 552쪽 각주 96에서 다시 옮김)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북(조선)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8) 한편 남(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1993년 기준 정보당 곡물생산량은 네덜란드 7.743t, 프랑스 6.531t, 영국 6.373t, 독일 5.8t, 덴마크 5.667t, 남(한국) 5.608t, 이탈리아 4.658t, 중국 4.587t, 일본 4.428t, 미국 4.305t으로 나와있다. (한국일보 1995년 8월 19일자) 쌀 뿐아니라 '곡물'의 생산량에 관한 이 통계에서는 남(한국)의 수준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감수량을 30%로 잡는 것은 수확·가공·운반·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을 뜻한다. 서울시

립대 교수 정재정도 감수량을 30%로 잡고 있다. (정재정, '북한경제의 전개와 남북한 경제통합의 과제', 역사문제연구소 편,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223쪽)

30) 세계일보 1996년 1월 12일자. 남(한국)의 한 언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실으면서 북(조선)의 곡물생산성은 1정보당 2.2t으로, 남(한국)의 4.6t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한국일보 1993년 6월 29일자)

31) 이면복은 옥수수 수확량은 실험농장의 경우 정보당 10-15t, 협동농장에서는 2-4t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1996년 1월 26일자)

3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위의 책, 211쪽.

33) Nicholas Eberstadt, Korea Approaches Reunification (Armonk: East Gate Book, 1995), 105쪽. 이 통계자료는 Eberstadt와 Banister가 쓴 책, The Population of Korea Korea, 117-118쪽에도 실려 있다.

34) 같은 책, 같은 쪽.

35)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36) 각 나이층의 비율(%)은 Eberstadt의 통계수치를 따른 것이다. (Nicholas Eberstadt, 같은 책, 같은 쪽)

37) 중앙일보 1995년 6월 22일자

38) 쌀 3백30g에서는 약 1천1백25kcal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한다. 남(한국)의 성인 남자는 하루에 2천7백kcal, 여자는 2천4백kcal를 섭취해야 한다고 한다.

39) 남(한국)의 경우 한 사람당 하루 쌀 소비량은 평균 3백29g이다. 1960년대 '탈북자'들의 발언을 옮긴 것을 보면 그 무렵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하루에 3백g, 노동자에게는 7백-8백g의 곡물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한다.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The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1283쪽 참조) 1987년에 '탈북'했던 여  
만철의 발언을 보면, 0-1살 영아에게는 1백g, 2살 어린이에게는 2백g, 2살 이상 미취학 어린이에게는  
3백g, 중학생에게는 4백g, 노동자에게는 7백g의 양곡이 공급되었다고 한다. (한국일보 1987년 2월 23  
일자) 이회상 교수는 평균 양곡공급량(쌀을 포함한 양곡공급을 뜻함)을 6백g으로 잡고 있다.  
(Hy-Sang Lee, 위의 글, 540쪽)

40) 이회상 교수는 북(조선)의 최소 곡물소비량이 한 사람당 연평균 조곡 310-346kg 사이일 것  
으로 추정했다. (Hy-Sang Lee, 위의 글, 541쪽)

41) 조선일보 1996년 1월 11일자.

42) 1993년 황해도지역에서 번지기 시작한 '벼물바구니'라는 해충은 북위 40도 부근까지 농지에  
피해를 입히며 수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벼뿌리를 파먹는 이 벌레는 한때 남(한  
국)의 남부지방에서도 기승을 부린 바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3년 6월 29일자)

43) 김운근이 주장하는 감수량 통계수치는 미주동아 1995년 9월 18일자에서 다시 옮긴 것이다.

44) Hy-Sang Lee, 위의 글, 542쪽. 여기서 그는 이러한 수요량 착오 때문에 1993년도 북(조선)의  
식량수요량을 무려 8백61만t이라고 주장했다, 식량부족분은 1백38만t이라고 하는 잘못된 통계자료를  
내놓았다.

45)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2일자.

46)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국제아동기금  
(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유엔기구가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평  
가단이 내놓은 보고서는 "북한정부는 1995년 흉수로 인해 1백90만1천t (쌀 1백8만3천t, 옥수수 81만8  
천t)이 부족하다고 한다. 1995/96년도에 구조적이며 비정상적인 식량 부족분은 3백87만5천t(연간 곡물  
수요량의 2분의 1에 해당)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평가단은 독자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통계를 확인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고 밝힌 바있다. (‘유엔 평가단 북한 수해피해 보고서’, 주간 전국연합통신 제89호 [1996년 2월 17일자], 48쪽)

47) 주간조선 1996년 1월 22일자.

48) 동아일보 1996년 1월 3일자.

49)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50) 주간조선 1996년 1월 22일자.

51) 한국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현재로서는 정찰위성이 촬영한 사진자료를 분석한 것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다.

52) 권영해 안기부장은 1995년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수해로 인한 곡물손실을 10-15만t 수준이라고 밝혔고, 통일원은 20만t이라고 밝힌 바있다. (한국일보 1995년 12월 28일자)

53) 동아일보 1996년 1월 16일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도 “지역별로 보면 평야가 많은 평양, 황해도, 평남, 평북 일부 등 서부지역은 식량사정이 별 문제가 없으나, 양강, 자강, 함경도 등은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북한 전체가 굶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고 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11일자) 1995년 여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한 유실가옥수를 북(조선) 통계자료로 파악하면 신의주-의주지역 6천호, 광천-회천지역 6천1백호, 황해도 은파-신계지역 2천5백호, 황해도 리산지역 2천1백호, 강원도 이천-통천지역 5백50호, 기타 9천호, 모두 2만6천2백50호라고 한다. 그런데 이 유실가옥 한 가구당 5-6명으로 환산하면 수재민은 약 15만명(세계일보 1996년 1월 4일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만일 한 사람당 한 해동안 1백30kg의 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5만명의 이재민에게 한 해동안 필요한 쌀은 약 2만t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자면 국제적십자사 대표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1996년 1월 21일 국제적십자사 대표 두 명은 북(조선)방문에 앞서 “오는 9월까지 홍수피해를 당한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지원이 없을 경우 12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아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는데(한국일보 1996년 1월 23일자), 2만t의 식량이 없어서 수재민들이 모두 굶어죽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도통신을 따르면, 일본 사

민당 조직국장 후카다 하지메는 1996년 2월 20일 북(조선)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용순 비서는 지난 해 여름 홍수 피해를 입은 가옥의 80%가 재건되는 등 수해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21일자)

54) 셸릭 해리슨, 위의 글.

55) 아사히신문 1996년 2월 22일자 보도내용을 전한 조선일보 1996년 2월 26일자.

56) 조선일보 1996년 1월 27일자.

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은 "북한의 식량난의 가장 큰 원인은 농업생산성의 저하입니다. 집단영농체제, 비료-농약부족, 토양의 산성화, 저급한 영농기술 등으로 소출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11일자) 그는 1996년 2월 6일 발표한 '북한의 농자재 생산 및 소비현황'에서 북(조선)의 식량난 원인이 농약부족과 석유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6년 2월 9일자)

58)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이민복은 식량난의 원인을 집단영농체제, 비료-농약부족, 토양의 산성화라고 지적했으나, 영농기술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농업전문가들의 기술수준은 주변에서 흔히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북한에서 개발한 벼종자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강냉이종자는 남한과 중국보다 훨씬 우수하다. 잡종도입수준도 세계적이다. 농작물 재배기술 역시 '밭 냉상모 재배법', '강냉이 영양단지 재배법', '키낮은 종자 육성에 기초한 밀식 재배법' 도입 등 고급수준이며, 남한보다 먼저 시작한 농업기계화와 수리화도 무시 못할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 1996년 1월 12일자)

59) 한국개발연구원이 1996년 1월 30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식량난은 자연재해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난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주장을 따르면, 북(조선)의 곡물생산은 1989년 5백48만t을 기록한 뒤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1991년부터 95년까지 4백만대에 머물러왔고, 부족량은 2백만t대라고 하였다. (조선일보 1996년 2월 2

일자)

60) 이희상 교수는 옛소련에서 원유수입이 1989년의 50만6천t에서, 1992년의 3만t으로 격감하게 되자, 영농기계 작동과 화학비료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따라서 식량생산이 1989년에는 2%,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는 해마다 3%씩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Hy-Sang Lee, 위의 글, 544-545쪽) 이러한 주장은 쉘릭 헤리슨이 1995년 8월 14일자 한겨레신문에 발표한 기고문 '쌀에 담긴 북의 메시지'에 그대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희상 교수는 북(조선)의 원유도입선을 옛소련에만 국한하여 문제를 잘못 보고 있다. 통일원은 북(조선)의 원유도입량을 1990년에 중국에서 1백10만t, 소련에서 44만t, 이란에서 98만t 합해서 2백52만t이라고 추정했으며, 고려대 경제학과 황의각 교수는 1988년 북(조선)과 이란이 체결한 협정을 따라서 해마다 2백만t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같은 나라들에서도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한다. (김남식, 이태섭, 이선태 지음,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며 [서울:도서출판 대동, 1992], 158-159쪽 참조)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가 1996년 2월 29일 펴낸 '북한 에너지 백서'는 북(조선)이 수입하는 원유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에 지나지 않으며, 에너지 의존도는 석탄이 64%, 목재와 동식물 배설 합성연료 18%, 정유(휘발유 등) 1%라고 밝혔다. 이 백서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수입의존도는 11%라고 했다. (중앙일보 1996년 3월 2일자)

61) 한국일보 1996년 1월 27일자. 북(조선)의 식량부족원인을 수해와 같은 돌발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보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조선일보 1995년 12월 28일자에도 실렸다.

62) 일본 정부의 견해도 눈길을 끈다. 1996년 1월 24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협의회에 참석한 일본측 대표단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고, 2차 대북 쌀지원분량 20만t 중 5만t은 선적조차 이뤄지지 않아 추가 쌀지원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26일자)

63) 중앙일보 1996년 1월 25일자.



64) 한겨레신문 1996년 2월 24일자. 미 국방부 정보처장 팻 휴스, 미 국무부 정보담당차관 토비 가티가 참석한 이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조선) 멸망임박론'을 주장하면서 "북한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정권은 방식이야 평화적이 될는지, 폭력적이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6년 2월 24일자) 그런데 거의 같은 때에 미 국무부의 한 관리가 북(조선)의 붕괴징후는 전혀 없으며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정반대의 사실을 언론에 밝힌 바있다. (아사히신문 1996년 2월 23일자 워싱턴발 기사, 도쿄=연합, 조선일보 1996년 2월 24일자)

65) 한국일보 1996년 1월 23일자.

66)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23일자. 설사 북(조선)이 식량지원을 원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북(조선)에 대한 식량지원을 과거의 봉쇄전략 대신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개입전략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1996년 1월 17일 미 국무부 대변인 니컬러스 번스가 정레브리핑에서 "하와이 협의의 목적은 북한을 개방하고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말에서도 확인된다. (한겨레신문 1996년 1월 23일자 참조)

67) 조선일보 1996년 3월 13일자.

68) 이 말은 1996년 2월 29일 함참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8일자에 실린 김명걸 논설위원의 글 '점검, 북한 붕괴론'에서 다시 옮김)

69) 이른바 '북(조선) 멸망임박론'은 1996년 2월 22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미 중앙정보국장 존 도이치가 '붕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70) 한겨레신문 1996년 3월 8일자에 실린 김명걸 논설위원의 글 '점검, 북한 붕괴론'.

71) 조선일보 1996년 1월 4일자. 이 기사는 이러한 견해는 러시아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72) 셸릭 헤리슨, '쌀에 담긴 북의 메시지' (한겨레신문 1995년 8월 14일자에서 다시 옮김)

73) 월간 말 1995년 11월호 71쪽. 이러한 방북인상기록은 북(조선)을 거의 '생지옥'처럼 묘사하고 있는 언론기사와 정반대다. 홍콩에서 나오는 The South China Morning Post는 1996년 2월 4일자에

서 최근 방북했던 스웨덴 언론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모든 산업이 정지돼 있는 북한의 실정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모잠비크 등보다 열악한 상태"라고 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평양시민들도 식량배급이 심각하게 줄어들어 배고픈 상태에 있으며 "연료가 절대부족하여 일부 절망적인 주민들은 김일성 생가의 나무껍질까지 벗겨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1996년 2월 6일자) 이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74) 중앙일보 1996년 2월 20일자. 북(조선)을 '생지옥'으로 묘사하는 언론기사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The Washington Times는 1996년 3월 6일자에서 미 중앙정보국,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 고위 관리들에게 제출된 한 정보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조선)의 동북부지역에서 식량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식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1996년 3월 7일자) 이 보도가 나오기 두 달 전인 1월 초 남(한국)의 한 주요일간지는 만주에 사는 한 조선족의 말을 빌어 "북한에서는 올 봄철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 먹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말이 나돌만큼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동아일보 1996년 1월 5일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해보면, '식인사건 발생설'은 사실왜곡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증언록

1996. 4

이 자료는 지난 3월 19일 미 국무성의 윈스턴 로드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하원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증언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증언록

### 미국의 한반도 정책

위원장님, 오늘 초대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관해 합동 청문회에서 증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북한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한국문제의 중요성은 특히 지난 8월 한국 방문 등으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청하신 대로 오늘은 미국과 북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든 한국문제에 관한 우리 정책은 오랜 동맹이자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주요 무역 상대국인 대한민국과의 반석같이 단단한 유대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미북 기본합의--주요 업적

미북 기본합의문에 서명한지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점진적 개입정책은 큰 성공입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1월 출범한 후 얼마 안되어 북한 핵개발 계획이라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약 18개월 전, 북한은 대규모 핵무기 개발 계획에 열중하여 원자로 1기는 가동 중이었고 두 기의 대형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형이었습니다.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해마다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몇 개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 추출한 폐연료를 재처리한 후 원자로에 재장전해 추가로 플루토늄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 수중에 그러한 핵물질이 있었다면 이 지역에 위치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북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를 유지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향상시켰으며 우리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북한은 가동 중이던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건설중이던 두 개의 원자로 건설도 중단하였습니다.

곧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협조로 플루토늄이 든 폐연료를 안전한 보관용기에 저장하기 시작함으로써 북한은 앞으로 이를 추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기본합의문 관련 결의안에서 강조하신 대로, 북한에서 이 물질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결상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IAEA는 동결 대상이 아닌 핵시설의 특별사찰 및 정기 사찰을 재개하는 절차에 관해 북한과 최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기본합의 결과, 북한은 우리가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받기 전에 핵프로그램의 실상을 완전히 밝히도록 되었습니다. 기본합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위험한 가스 흑연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가입국이 IAEA 안전조치에 따라 폐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한데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합의문의 성공적 이행은 주요 목표이며, 앞으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1년 반전에 경수로 프로젝트와 중유의 형태로 임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를 설립하였습니다. KEDO는 스티븐 보스워드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대사가 대통령의 보스니아 특사로 임명된 후에 폴 클리블랜드 대사가 KEDO 집행이사

회의 미국 대표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위급 외교관을 임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부가 기본합의문의 원활한 이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은 핵확산을 억제하는 경수로를 북한에 공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공급협정은 허버드 부차관보가 북한과 팔라렘푸르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인 공동성명서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받아들일겠다는 것과 한국이 모든 면에서 경수로 프로젝트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12월 협정체결로 북한은 기본합의 조건에 따라 동결 대상이 아닌 핵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을 다시 허용하였습니다.

KEDO는 현재 경수로 프로젝트의 주계약을 완료하고자 하는 한국전력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EDO는 원자로 건설 부지 조사를 위해 네 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KEDO의 5차 방문팀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을 방문하여 평가작업을 완료하고 몇 달 내로 경수로 건설부지를 공식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인들도 매번 KEDO 대표단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남북관계를 조금이나마 진전시킨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들던 소문과 달리 KEDO 부지조사팀의 한국인들은 미국, 일본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KEDO는 북한과 12월에 맺은 경수로 공급협정을 보충할 의정서에 관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KEDO는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1년에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유 공급은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함으로써 잃은 전력 손실분을 대체하는 것으로 경수로 1기가 가동될 때까지 계속 공급할 것입니다. 북한은 기본합의문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중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기본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이 중요한 우선 과제입니다. 행정부는 미국 안보이익상 기본합의가 지닌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가 1996년 회계연도에 KEDO 프로젝트에 책정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은 예외조항과 확인서류를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EDO가 북한에 중유를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최근 중유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KEDO에 1천9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경수로 공급 프로젝트 재정조달에서 빨리 자신의 필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KEDO 새 회원국과 새로 재정적 기여를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10개 국가가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 의사를 비추는 등 KEDO에 대한 국제적 지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 20개국이 재원을 기부하였거나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일차적으로 6백3십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역시 각각 2백만 달러와 1백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 **미국 정책**

참고로 지난 8년 동안 3개 행정부를 거치는 동안 미국의 정책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은 1988년 레이건 행정부가 제한적인 접촉 창구를 열기 위해 소위 'Modest Initiative'를 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인도적 물자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첫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비정부, 문화, 학술 교류를 위한 미국인과 북한 주민간의 접촉을 위해, 그리고 이를 위한 비자 발급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의 공식 지원이 해당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1992년 1월 남북한 간의 희망적인

대화가 이뤄지던 때였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처음으로 미북 고위 관리들 간의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습니다. 유용하기는 했으나 그 후 고위급 공식접촉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았고, 미북 대화는 곧 중국 주재 대사관을 통한 실무급 접촉으로 뒷걸음질쳤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북한이 NPT 탈퇴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북한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자 현 행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북한에 개입했고, 결국 제네바 기본합의가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를 달성하는 것 외에도 미국은 민족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민들의 노력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한국민들이 이웃 국가와 건설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평화와 번영, 자유를 누리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기본합의를 체결한 후, 행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안정이 우리 국익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막강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우리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대북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세 가지 기본 틀 위에서 대북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첫째,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북 기본합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남북대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 지역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 **긴장완화**

기본합의가 성공적이었지만 한편 우리는 북한이 미국 외교정책에 계속 제시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폐쇄 사회로 대규모 전방 배치된 재래식 군과 위험한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가을 서울 방문 보고서에서 지적하신대로 한반도는 미군이 개입하는 전면전의 위협이 아마 가장 큰 곳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정책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의 핵심이 대한민국과 동맹관계입니다. 전쟁의 어려움 속에 단련된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3년 동안 대북 협상에서 증명된 것처럼 긴밀한 협의와 협조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맹관계를 떠받치는 3만 7천 주한미군은 아태지역 주둔 10만 미군의 일부입니다. 우리 동맹은 계속적인 경계태세 유지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을 제지하면서 우리는 재래식 군비 위협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제기하는 위협에 계속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은 1백만 이상의 군인이 있고 이들 대부분이 DMZ 가까이 배치되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국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동지역에의 미사일 판매에서 드러났듯이 한반도는 물론 그 외 지역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은 이제까지 약 4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제를 와해하기 위해 조직적인 계획을 펼쳤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합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은 영원한 평화가 정전협정을 대체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문점에 군사 대화채널이 있어야 정전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긴밀히 협의를 가진 후 유엔 사령부에서는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인민군을 대표하는 장성급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미국, 한국, 북한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와 논의하기 위해 직접적인 쌍무 회담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미북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는 미북 쌍무적으로 평화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다른 모든 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남북의 어떠한 공동 노력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한국인들이 미국에 원하는 어떠한 역할도 기꺼이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쌍무적으로 관계를 갖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이 모든 군사접촉에 같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는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는 남북한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북 기본합의에서도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없었다면 미국은 기본합의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북대화는 기본합의문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의 완전한 실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거듭 북한에 이 약속을 이행하여 한국과 정부간 직접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하였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한국 정부의 건설적인 새로운 조치를 지지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 접촉 확대

대북 접촉 확대는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폭넓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우리는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면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기본합의의 기본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많은 문제에 관하여서 접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그 밖의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개방 확대라는 선택을 추구하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확산과 테러리즘 같은 부분에서 국제사회의 규범에 합당하게 행동할 경우 이에 뒤따를 이득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북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와 미군 유해 송환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해 북한과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백2십2만5천 달러의 원조를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간접적으로 원조를 주기로 한 것은 책임있는 국제단체가 홍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한지역이 명백히 인도적 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은 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십2만5천 달러 분의 처음 두 차례 원조는 예방접종과 어린이, 젖먹이를 둔 어머니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 유니세프를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북한 수재민들을 위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2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최근 결정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2백만 달러 분의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한국과 협의했고, 또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삼국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조가 실제 인도적 필요에 사용될 것이며,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있도록 하고, 북한에 국제기구가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할 경우의 혜택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원조하겠다는 우리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민간 의사소통 채널을 여는 것을 찬성하며, 문화 학술 기타 인적 교류를 장려합니다.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북한과 대화를 타진할 의사를 밝히는 것도 환영합니다. 기본합의문 조건에 의거, 필요한 영사 및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평양에 북한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관계에서 작은 첫 걸음일 것이며 정기적이고 믿을 만한 의사교환 창구를 열어놓을 것입니다. 기본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우리는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북한과 몇 차례 대화를 가졌으며 전부는 아니지만 미결문제 대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는 남은 미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했고,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연락사무소를 열 예정입니다. 진전이 있는 대로 계획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점차 대북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비롯한 우리의 관심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개선 없이는 미북관계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합의에 관한 하원 결의에 나타난 대로 이 부분에 관한 위원장님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조형물 제막식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전에서 싸우다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들, 유해가 송환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월에 제임스 월드 국방부 부차관보가 이끈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과 이 문제에

관한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협상이 재개되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확산 문제, 특히 북한이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미사일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화를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을 테러활동 지원국가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북한이 취해주시기를 바라는 조치에 대해 이미 밝혔습니다.

북한은 테러리즘을 비난하는 공식성명을 내놓는 등 전향적인 움직임을 조금 보였습니다. 북한의 성명서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테러활동을 저지하는 국제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구체적 증거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경제관계를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동아시아 경제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북한의 세번째 교역국이 되게한 남북교역도 어느 정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1년 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완화한 바 있으며 소폭이긴 했지만 이 조치가 작지만 의미있는 미북간의 통상관계 증진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미국회사들이 북한으로부터 마그네사이트를 수입하는 계약에 서명하였고,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물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본합의와 그외 미국의 관심사에 진전이 있는 대로 북한과 정치관계 뿐 아니라 경제관계도 점차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진전 가운데 특히 경수로 공급협정 서명과 폐연료봉 보관에 관한 합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재완화는 상당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들 즉, 미사일 확산 미군 유해 송환 긴장완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북대화에 북한이 어느 정도 건설적으로 나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재조치 완화에 관한 정책변화에 대해 의회와 전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 결 론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한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국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의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이 워싱턴을 두차례 방문하였습니다. 레이크 안보보좌관이 지난 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탈보트 부장관이 1월에는 한국 외무부차관과 회담을 가졌고, 크리스토퍼 외무장관, 공로명 외무부장관, 고노 전외상이 지난 11월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삼국간의 고위급 회담을 계속 갖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속 회담을 1월에 주재하였으며, 추후 회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합의는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역 안정과 세계 확산금지 노력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본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본합의의 주요성과라면 북한 핵개발 계획을 동결했고, 이것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핵개발 계획의 완전한 해체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합의는 핵문제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영구 평화와 한국민들이 바라는 궁극적 재통일이라는 우리의 장기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이 합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감당할 사안입니다.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은 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NORTH AND SOUTH KOREA:  
BEYOND DETERRENCE***

Asia Society Corporate Conference

1996. 5.

이 자료는 5월 11일, 駐韓 美國 레이니 대사가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하여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특히 4자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 등을 연설한 내용의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남북한 : 억제(deterrence)를 넘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미국이 전쟁에 패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한반도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을 겪었으며, 또 어떻게 미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왔다가 그 분단을 해결하지 못한채 쓰라린 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마무리짓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 약 반 세기 동안 남북한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억제 (deterrence)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세계 냉전체제하의 대치구도가 그러했듯, 남북한과 동맹국들이 모두 어느 쪽이든지공격을 감행한다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공격자에게도 엄청난 파국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분쟁 재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억제에 바탕을 둔 이 관계는 대단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청와대 습격, 아웅산 폭탄 테러, 그밖의 테러 행위, 프에블로호 납치사건과 가장 최근 들어서는 93년과 94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 억제력은 남북이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쟁으로 부터 보호막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더욱 극적인 효과로서, 최근 한국이 괄목할 만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할수 있었던 정책은 가장 급박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제는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힘의 균형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억제는, 반드시 군사력의 균형일 필요는 없지만, 힘의 대략적인 균형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양측은 침략을 감행했을 때 치르는 비용이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훨씬 초과하므로 어떤 행



동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냉전이 끝난 후부터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 이전보다 불안정해졌습니다.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북한이 주요 후원자 겸 동맹국을 잃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경제가 의존하고 있던 원조를 거의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미 크게 벌어진 남북한 경제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 즈음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할 시점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다른 불안정의 요소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었다면 한반도 억제력과 동북아 지역안보와 그 너머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다행히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끌어낸 진지하고 긴박한 협상을 통해 지역안정에 위협이었던 북한의 핵무장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핵위기가 해소되자 북한의 경제문제에 다시 초점이 맞춰졌고, 1995년 말에 가서는 균형이 다시 한번 불안정해졌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부신 경제 발전과 외교적 성과로 전례 없이 막강한 한국과 비교하여 믿을 만한 우방국도 없고, 탈냉전 시대에 적응 불능 내지 거부상태인 북한의 힘이 소멸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식량난, 에너지와 외화부족 문제가 맞물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이 생겨났습니다. 북한정부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쇠퇴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결과로서 동독, 루마니아, 소련의 운명을 맞게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한으로서는 방향을 틀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이 경제부흥, 든든한 동맹국, 기술적으로 우수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는 등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굴욕스럽게 만들거나 흡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적대 세력과 진지하게 관계를 맺기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심각한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현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면 국제사회가 알아주는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군사력을 이용하는 여하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대안이 탐탁하지 않다면 군사적 선택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들이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침범과 같은 도발행위를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감행할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의 경제, 사회가 더욱 퇴화하면 국내 당파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분쟁이 북한 국경 밖으로 번져나갈 위험도 있습니다.

억제는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적대감을 해소하거나 관계형성의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도움이 안됩니다. 적대감과 의심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의사소통의 내용이란 주로 경고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억제가 효과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경고의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남북간 의사소통과 교류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고, 북한에게 군사적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몇 년전부터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할 영구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미국과의 대화만을 원했습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이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

지만 정책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한국을 배제한 협상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4자회담 제의는 이 협상구조가 가장 성공의 전망이 밝다는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4자회담 제의는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반도의 미래는 우선적으로 한국인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본 원칙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이 지금 가고 있는 내리막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성공의 보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호 보완하면서 전쟁 억제 상태를 넘어설 수 있는 긍정적 관계의 틀을 지금 구축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 기본합의가 이 틀의 일부로서 지금 틀만들기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 틀의 나머지 큰 부분에 대한 건설 작업은 북한이 4자회담 제의를 수용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중요한 점들을 충족시키는 임시합의나 부속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면 진정한 평화의 기반이 될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교류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려면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이제껏 사용했던 접근법을 적극 재고해 볼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을 일컬을 때 사용해온 우리의 원색적 표현과 발언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책수립을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지도층의 의도나 "진실성"을 신뢰하는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쓰던 간에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최근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사건과 같은 도발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행동을 조심스레 분석해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군사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 외에 생존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강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워낙 빠르게 성장해왔고 워낙 많이 성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실과 인식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보면 한국은 위험부담을 안지 않고도 아량을 베풀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는 그 누구도 오늘의 한국이 "고립"되거나 "주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족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현실적인 자신감은 우리가 실제 상황을 보는 데 방해가 되는 심리적 장애물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책 대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강하나" "부드러우나"에 의거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현명한" 정책인지 "어리석은" 정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정책이 미국과 한국에 이익이라면 그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북한의 이익과도 합치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치고 나오거나 혼란을 야기하면서 붕괴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익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주고, 긴장을 완화하며, 남북간에 포괄적인 교류관계가 있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원칙을 따른다면 정책도 가야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설득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지금 탁자에 올라와 있는 제안을 집어들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번영까지도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북

한을 침략하거나 파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과 남북한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어떤 방법에 의한 통일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억제 전략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을 위협하는 주된 문제는 북한의 약화와 절망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방식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정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늘날 한반도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소를 억제력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기때문에, 여기에 신뢰구축조치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주도에서 양국 정상이 보낸 근본적인 메시지였고, 이제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를 수락하겠다고 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답해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SPECIAL REPORT  
*URGENT WORLD PROGRAM REPORT  
ON CURRENT FOOD CRISIS  
IN NORTH KOREA*

1996. 5.

이 자료는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식량계획(WFP)이 최근 북한의 식량 위기 상황을 현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특별 보고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URGENT WORLD PROGRAM REPORT ON CURRENT FOOD CRISIS IN NORTH KOREA**

For official use only  
Released 13 May 1996

## **part 1**

### **S P E C I A L   A L E R T**

NO.267

(Circulated only for countries where foodcrops  
or supply situation conditions give rise to concern)

Issu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WORLD FOOD PROGRAMME, ROME

COUNTR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OVERVIEW**

A recent on-the-spot review by FAO and WFP, has found that since the joint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in December 1995, the food supply situation has deteriorated more seriously than had been anticipated. The mission had identified a substantial food deficit, most of which has remained uncovered so far. The Government has not been able to import food commerciall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the level of food assistance provided to date has only covered a very small part of the deficit. The situation is likely to become considerably worse in the lean months between May and September, as



most of last year's harvest has been consumed, stocks are critically low, significant commercial imports are unlikely and there is virtually no further food assistance in the pipeline.

Together these factors have led to widespread shortages in large parts of the country and brought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under considerable strain. In recognition of mounting difficulties, the Government has had to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reduce overall consumption, including a reduction in food rations and the use of cereals in feed and industrial use. There is an urgent need to mobilise food imports, in the absence of which the consequences are likely to be devastating for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especially those that are already vulnerable.

Preliminary findings of a food and nutritional assessment in March/April this year by WFP indicated that to date young children attending nurseries and kindergartens have been protected from food shortages. However, without adequate food assistance, the present nutritional situation of the population can only be expected to decline. Private, small plot cultivation will enable some communities to compensate partly for reductions in government food allocation and ensure minimum dietary intake. However, those living in mountainous areas or urban centres have limited or no access to such land and may, therefore, face more serious shortages. The micronutrient status of the population is also a cause for some concern, although this cannot be confirmed with data on prevalence rates. Vitamin D, the B group and C are thought to be the most inadequate.

Early prospects for the 1996 grain crops, now being planted, are unfavourable. Preparations for planting have been delayed by about 2-3 weeks due to cold weather and inadequate fuel supplies. The delay in planting alone could result in up to 10 percent reduction in yields this year. The agriculture sector also continues to face serious problems of input supply, principally fertiliser, the manufacture or import of which has been severely constrained by a shortage of foreign exchange. This, as in the past several years, will reinforce a persistent downward trend in food production in the country. In addition a substantial part, some 40 000 hectares, of the area affected by the floods last year still remains under sand and debris, effectively ruling out cultivation in these areas in 1996. Food supply difficulties could, therefore, continue well into 1997.

## **FOOD SUPPLY SITUATION**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is the mechanism under which the state aims to suppl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ith basic consumption needs, including rice/maize, cooking oil, cabbage, meat, fish and eggs. Food items are rationed and sold to the public at highly subsidised rates. Cereal rations for collective farm workers are distributed on-farm annually, immediately following the harvest.

Presently, out of the total population of some 22 million, it is estimated that about 13.5 million or 62 percent of the population are eligible to receive subsidised food rations through the PDS throughout the year. In addition, some 3 million workers and dependants on state farms are entitled to subsidised rations for 6 months. This leaves a population of roughly 5 million on collective farms, who receive no subsidised rations whatsoever and have to depend on a quota from the harvest for their annual need. However, as a result of the 1995 floods and food shortages, collective farmers were only allocated some 100 kgs, for the period up to the next harvest in October 1996, compared to an average of 200 kgs in normal years. The allocation therefore was halved and translates to a daily per caput availability of 250 grams of food grain, well below consumption needs. In view of the food shortages, substantial reductions in PDS rations were introduced in April.

It is becoming increasingly evident that the entire public distribution system is coming under considerable strain,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declining food production, the disruption of trade, a progressive drawdown of national cereal stocks and cessation in early 1995 of grain imports from China, estimated at between 700 000 to 1 million tons annually in the period 1992 to 1995. As this quantum of imports represented a substantial proportion of cereal requirement in Korea DPR, cessation has had devastating effects on grain supply. Indeed even before the floods in July/August last year, Korea DPR approached several countries for assistance and received some 450 000 tons of rice through bilateral channels partly as grant and partly on concessional terms, to meet requirements for 1994/95.

The serious problems of the PDS were further exacerbated by the 1995 floods, which resulted in substantial losses to standing crops and

stored food.

Although, no specific data on stock holding and off-take through the PDS is available, the Government estimates that present levels for the period April to October can only provide some 25 percent of normal requirements. It also indicated that off-take from the PDS had been lowered from 240 000 tons/month to 170 000 tons.

Farm families on collective farms, made homeless after the floods in North Pyongan, North Hwanghae and Chagang provinces, have been the main recipients of food aid. To date some 33 000 tons have been delivered, including 28 529 tons of rice, 2 269 tons of CSB, 1 756 tons of wheat flour and 270 tons of miscellaneous food items, mainly maize meal and soybean.

For the 1995/96 marketing year (November/October), the total cereal import requirement was calculated at 1.91 million tons, by the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in December last year. At that time it was envisaged that the Government would be in a position to import some 700 000 tons commercially. However, apart from concessional imports amounting to 200 000 tons from Japan, 40 000 tons from Syria, 8 000 tons from Switzerland and an expected 5 000 tons from Pakistan, it has been unable to secure further imports.

This is in spite of negotiations with several countries notably Thailand, China, India, Poland, Romania, Canada and the USA.

Under the circumstances, widespread shortages have occurred and there are reports of emerging and growing informal cross border trade with China, in which various products, such as lumber, scrap metal and shellfish are being bartered for wheat flour. For the remainder of 1995/96 marketing year,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although the country can only make very limited imports of food commercially, some will flow-in as cross border (barter) imports. The combined amount of these imports is estimated at 150 000 tons of grain. Further, as a process of adjustment the Government has also begun reducing the number of livestock, which are intensively fed on grain, to enable cereals to be diverted for food use. It is estimated that feed use has decreased by 25 percent and the use of cereals for other purposes by a further 10 percent. No adjustment has been made to overall food use as the reduced rations FAO/WFP reported last year are already felt to be the minimum required. Based on these assumptions, the FAO/WFP estimate of 1995 production and the quantity of emergency and programme food aid received so far, leaves an overall shortfall of some 1.04 million

tons. (See below)

## part 2

Released 13 May 1996

SPECIAL ALERT NO.267

- COUNTR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su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WORLD FOOD PROGRAMME, ROME

FOOD SUPPLY SITUATION, cont'd

1995/96 Cereal Balance Sheet ('000 tons)

---

Total Availability	4 077
1995 Production	4 077
Stock Draw-down	-
<hr/>	
Total Utilisation	5 548
Food Use 1/	3 688
Feed Use	1 050
Other Use	810
<hr/>	
1996 Import Requirement	1 471
Commercial Imports 2/	150
Emergency and Programme Food Aid	
Received and pledged 3/	284
Uncovered import Requirement	1 037
of which:	
- Emergency food aid	34
- Project food aid	25
- Programme food aid	978

---

Notes:

- 1/ On minimum required rations
- 2/ Commercial imports includes cross border trade
- 3/ Does not include CSB.

As there are no further pledges in the pipeline from May onwards, the food supply situ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desperate. The Government has already reduced food rations to 300 grams a day, whilst in some areas rations as low as 250 grams/day have been noted.

Consumption norms, therefore, have dropped progressively from an average of 600 grams per caput/day last year.

Worsening food shortages and the inability of the PDS to provide a regular supply of basic staples, have led to the development of a number of alternative coping mechanisms. These include, the consumption of wild food, petty trading of basic commodities and food around most towns, the cultivation of small private plots and rearing of poultry, support from relatives from abroad and the use of nominal savings for supplementary food purchases at 'peasants markets', which now operate at certain times during the month.

In view of the deteriorating food supply situation, the Government is clearly anticipating significant problems in the near future and requested the United Nations, in early April, to launch a new international appeal for mainly food assistance.

#### Emergency Food Aid Needs

It is estimated that, until the next harvest in October 1996, 33 750 tons of cereals (maize, maizemal, wheat and rice) is required in emergency food aid for 500 000 flood victims and/or other most vulnerable people. In addition some 11 800 tons of fortified cereal mix is needed for distribution, through kindergartens and nurseries, of 150 grams/day per caput to 25 percent of 2.1 million children under five in the most vulnerable areas, as compensation for the reduction in the PDS special ration.

For rehabilitation of the agricultural sector, especially the removal of sand and debris from flood affected areas and repair of river dykes, 25 000 tons of project food aid is required to provide 2 kilos

per manday for 12.5 million mandays.

#### Programme Food Aid

Although, the FAO/WFP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identified a substantial food deficit last year, at the time it was envisaged that the Government would be in a position to make commercial imports of 700 000 tons and obtain sufficient quantities of food assistance to help bridge the deficit. However, these imports have not materialised and a large part of the food deficit has remained uncovered. The food supply situation will, therefore, be critical in the lean months between May and September, as most of last year's harvest has been consumed, stocks are critically low, there is very little likelihood of significant commercial imports and there is virtually no further food assistance in the pipeline. The country, therefore, urgently needs programme food aid or balance of payments support for commercial imports of 978 000 tons of cereals, if the Government is to maintain minimum ration levels, until the next harvest in October.

#### OUTLOOK FOR 1996/97

Even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 domestic production of food in Korea DPR is heavily constrained by a shortage of cultivable land.

Since 1990 the problems of domestic supply have been further compounded by declining productivity due both to natural soil depletion and the inability of the country to manufacture or import sufficient quantities of fertiliser to maintain productivity, due to severe economic problems and the consequent shortage of foreign exchange. Declining productivity and the crippling effects of the floods last year, which not only destroyed standing crops but also the irrigation network and property, exacerbated an already difficult food supply situation. The floods also left an estimated 90 000 hectares of paddy land under large deposits of sand and debris. Due to extreme shortages of imported fuel for operating excavation machinery, the Government presently estimates that only 50 000 hectares can be partially reclaimed to allow some cultivation in 1996. FAO field visits in April confirmed that large areas still remained under debris and sand, estimated at 30 - 40 centimetres in depth. In addition production will be significantly constrained by the lack of fuel for irrigation purposes and agricultural machinery.

The Government presently estimates that 50 000 tons of diesel are needed for agricultural operations, including rehabilitation and operation of the irrigation system. As a result of the fuel shortage,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farming is reverting back to the use of animal draught power.

Unless there is a marked improvement in the supply of fertiliser and fuel in the coming months, the Government's most optimistic production scenario is an aggregate output of 5 to 5.5 million tons of food grains. This would be in line with trends outlined in the FAO/WFP assessment made last year. Under the worst case scenario output will be similar to 1995 production of some 4 million tons.

There is clearly a need to review the situation near harvest. It is, therefore, recommended that an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visit Korea DPR from Mid October, to assess food supply prospects for 1996/97.

Annual domestic requirement is substantially higher than what the country can produce, even under the most optimistic scenario, and would still need to be supplemented by grain imports in good years.

Needless to say in poor years the dependence on supplementary imports would be much higher. All indications are that in 1996/97 the country will carry forward a structural food deficit of over 2 million tons even under the Government's most optimistic scenario. It is envisaged, therefore, that cereal food availability can only be met if there is a further sharp reduction in the use for feed and other uses, which of course has significant repercussions for the country's livestock sector and future meat availability in the diet.

In view of dwindling crop prospects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a number of measures to enhance domestic production and access to food, apart from removing sand and debris from affected arable land. These include:

- priority to be given to agriculture in future development planning;
- the introduction of a new rice variety Pyongyang 21 (P21), claimed to be more fertiliser responsive than other varieties to reduce dependence on chemical fertilisers. The recommended fertilisers application for P21 will be 200 kg/ha, compared to 500 kg/ha for

existing varieties. The target yield is 8 tons/ha;

- in February last year under an extensive programme involving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some 320 000 hectares of arable land were covered up to 2 cm in depth, with 300-500 tons/ha of rich deposit from river basins to replenish top soil;
- developing the use of microbial fertilisers to reduce dependence on chemical fertilizers;
- allowing individuals to cultivate crops and vegetables in limited areas around dwellings to increase food availability.

## **CONCLUSION**

Unfavourable weather conditions in 1994 and 1995 seriously aggravated an already strained food supply situation in Korea DPR, which had steadily been tightening for years. In December 1995 the FAO/WFP mission strongly advocated international emergency and programme food assistance, as it predicted numerous problems in 1996, especially during the lean period preceding harvest, when individual and national stocks in the PDS would be near depletion. Not only has such assistance not materialised to the extent needed, but also Government has so far been unable to secure commercial imports.

Together this has meant that the institutional food supply system is perilously close to collapse and individual stocks are extremely low for those outside the PDS. Worse still the pipeline for emergency food assistance, which to date has been supplementing the diet of the worst affected population from last year's floods, is dry and from May these people will endure severe cutbacks in food availability.

There are already signs of some nutritional deficiency in various segments of the population, which could become chronic in the next few months, unless some assistance is provided.

Although there is clear and urgent need to provide both emergency and programme food assistance now, it is fully recognised that these measures would only help solve immediate problems and not inherent long term ones. In the medium to longer term, over the next few years, the country is in considerable danger of recurrent food supply difficulties, given its limited potential to expand domestic food



production either extensively or intensively, declining soil fertility that cannot sustain high doses of fertiliser even if they were available and a shrinking economy that effectively rules out sufficient imports of food to meet the deficit. It is clear that in the past food supply depended heavily on the general state of the economy and its capacity to finance imports. As this is no longer the case, it is evident that the country urgently need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implement some radical solutions, if it is to avert serious problems in the future.

**END**

This report is prepared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FAO and WFP Secretariats with information from official and unofficial sources and is for official use only. Since conditions may change rapidly, please contact the undersigned for further information if required.

Abdur Rashid

Chief, GIEWS FAO

Telex 610181 FAO I

Fax: 0039-6-5225-4495

E-Mail: INTERNET: GIEWS1@FAO.ORG

B. Szynalski

Director, OP, WFP

Telex: 626675 WFP I

Fax: 0039-6-5228-2837

Please note that this report is available on the Internet as part of the FAO World Wide Web and Gopher under WAICENT FAOINFO at the following URL address: [HTTP://WWW.FAO.ORG/](http://WWW.FAO.ORG/) then clicking on WAICENT, ECONOMICS and GIEWS.

FA 4/50 KOREA DPR



## ***Japan-U.S. Joint Declaration***

1996. 5.

이 자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입수된 자료로서  
지난 4월 17일 발표된 미·일 공동선언문의 전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Japan-U.S. Joint Declaration (April 17, 1996)**

1. Today,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celebrated one of the most successful bilateral relationships in history. The leaders took pride in the profound and positive contribution this relationship has made to world peace and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The strong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elped ensure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uring the Cold War. Our Alliance continues to underlie the dynamic economic growth in this region. The two leaders agreed that the future security and prosperity of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tied inextricably to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region.

The benefits of peace and prosperity that spring from the Alliance are due not only to the commitments of the two governments, but also to the contributions of the Japanese and American people who have shared the burden of securing freedom and democracy.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expressed their profound gratitude to those who sustain the Alliance, especially those Japanese communities that host U.S.

Forces, and those Americans who, far from home, devote themselves to the defense of peace and freedom.

2. For more than a year, the two governments conducted an intensive review of the evolving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Asia-Pacific region and of various aspects of the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 On the basis of this review,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profound common values that guide our national policies: the maintenance of freedom, the pursuit of democracy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They agreed that the foundations for our cooperation remain firm, and that this partnership will remain v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3.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possibility of global armed conflict has receded. The last few years have seen expanded political and security dialogue among countries of the region. Respect for democratic principles is growing. Prosperity is more widespread than at any other time in history, and we are witnessing the emergence of an Asia-Pacific community. The Asia-Pacific region has become the most dynamic area of the globe.

At the same time, instability and uncertainty persist in the region.

Tensions continu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still heavy concentrations of military forces, including nuclear arsenals.

Unresolved territorial disputes, potential regional conflicts,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ll constitute sources of instability.

4.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stability in this region and dealing with the security challenges facing both countries. In this regard,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iterated the significant value of the Alliance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y reaffirmed that the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 based on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mains the cornerstone for achieving common security objectives and for maintaining a stable and prosperous environment for the Asia-Pacific region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a) The Prime Minister confirmed Japan's fundamental defense policy as articulated in its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dopted in November 1995, which underscored that the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should play appropriate rol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Cold War.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agreed that the most effective framework for the defense of Japan is close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cooperation is based on a combination of appropriate defense capabilities for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and the Japan-U.S. security arrangements.

The leaders again confirmed that U.S. deterrence under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remains the guarantee for Japan's security.

(b)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agreed that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is also essential for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leaders shared the common recognition that the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 forms an essential pillar which supports the positive regional engagement of the U.S.

The President emphasized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 as well a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He noted

that there has been some adjustment of U.S. forces in the Asia-Pacific reg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basis of a thorough assessment,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that meeting its commitments in the prevailing security environment requires the maintenance of its current force structure of about 100,000 forward deployed military personnel in the region, including about the current level in Japan.

(c) The Prime Minister welcomed the U.S. determination to remain a stable and steadfast presence in the region. He reconfirmed that Japan would continue appropriate contributions for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Japan, such as through the provision of facilities and area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and Host Nation Support. The President expressed U.S. appreciation for Japan's contributions and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new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U.S. forces stationed in Japan.

5.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with the objective of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is vital security relationship, agreed to undertake efforts to advance cooperation in the following areas.

(a) Recognizing that close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s a central element of the Japan-U.S. alliance, both governments agreed that continued close consultation is essential. Both governments will further enhanc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views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particular the Asia-Pacific region. At the same time, in response to the changes which may aris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both governments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on defense policies and military postures, including the U.S. force structure in Japan, which will best meet their requirements.

(b)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agreed to initiate a review of the 1978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to build upon the close working relationship already established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necessity to promote bilateral policy coordination, including studies on bilateral cooperation in dealing with situations that may emerge in the areas surrounding Japan and which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peace and security of Japan.

(c)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welcomed the April 15, 1996,

signature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Reciprocal Provision of Logistic Support, Supplies and Services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and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xpressed their hope that this Agreement will further promote the b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hip.

(d) Noting the importance of interoperability in all facets of cooperation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of Japan and the U.S.

forces, the two governments will enhance mutual exchange in the areas of technology and equipment, including bilater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quipment such as the support fighter (F-2).

(e) The two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ir common security. They will work together to prevent proliferation and will continue to cooperate in the ongoing study on ballistic missile defense.

6.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cognized that the broad support and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people are indispensable for the smooth stationing of U.S. forces in Japan,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the Japan-U.S. security arrangements. The two leaders agreed that both governments will make every effort to deal with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presence and status of U.S. forces. They also agre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U.S.

forces and local Japanese communiti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Okinawa, where U.S. facilities and areas are highly concentrated,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confirmed their determination to carry out steps to consolidate, realign, and reduce U.S. facilities and areas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is respect, the two leaders took satisfaction in the significant progress which has been made so far through the "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 (SACO) and welcomed the far reaching measures outlined in the SACO Interim Report of April 15, 1996. They expressed their firm commitment to achieve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SACO process by November 1996.

7.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agreed that the two governments

will jointly and individually strive to achieve a more peaceful and stabl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is regard,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engagemen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supported by the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 constitutes the foundation for such efforts.

The two leaders stressed the importance of peaceful resolution of problems in the region. They emphasized that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region that China play a positive and constructive role, and, in this context, stressed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in furthering cooperation with China.

Russia's ongoing process of reform contributes to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and merits continued encouragement and cooperation. The leaders also stated that full normalization of Japan-Russia relations based on the Tokyo Declaration is important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y noted also that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vitally important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reaffirmed that both countries will continue to make every effort in this regard,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affirmed that the two governments will continue working jointly and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o further develop multilateral regional security dialogues and cooperation mechanisms 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and eventually, security dialogues regarding Northeast Asia.

8.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cognized that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is the core of the Japan-U.S.

Alliance, and underlies the mutual confidence that constitutes the foundation for bilateral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agreed that the two governments will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activities such as peacekeeping and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Both governments will coordinate their policies and cooperate on issues such a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including acceleration of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negotiations and the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 two leaders agreed that cooperation in the United Nations and APEC, and on issues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and the peace implementation process in the former Yugoslavia, helps to build the kind of world that promotes our shared interests and values.

9. In concluding,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agreed that the three legs of the Japan-U.S. relationship -- security, political and economic --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interests and rest on the mutual confidence embodied in the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The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reaffirmed their strong determination, on the eve of the twenty-first century, to build on the successful history of security cooperation and to work hand-in-hand to secure peace and prosperity for future generations.



## **Marshal Kim Jong Il's War Plan**

By Kim Myong Chol(former editor of The People's Korea)

1996. 6.

이 자료는 일본 「조총련」계에서 발행하는 주간  
신문 'PEOPLE'S KOREA'(93년 폐간)의 전 편집  
장이었던 김명철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김정일의  
전쟁계획'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Marshal Kim Jong Il's War Plan**

Kim Myong Chol, former editor of The People's Korea - June 10, 1996

---

An article published by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Friday, April 5, 1996 from Berkeley, California, USA III. Primary Document

NAPSNet is dedicated to the open-flow of ideas among all of the scholars in the region. Views and Opinions expressed in the "Discussion" section of the Daily Report in no way reflect the views of its publishers.

---

Very little has been written outside North Korea on the military thought and war scenario of Marshal Kim Jong Il, supreme leader of the tiny Far Eastern peninsular country that bitterly charges the Americans with reducing the armistice agreement to a dead letter. He i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and Marshal of the DPRK and Chairman of the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e serves as Acting Head of State under the 1992 amendment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country. He is known as a tested sharpshooter and jet fighter pilot.

The North Korean commander-in-chief has a far bett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merican military deployments in South Korea, Japan, and the Asian-Pacific region than the American commanders and any other Asian and American political leaders. Newsweek suggested (12/20/93) that he understands the United States better than his American counterparts know North Korea. If you ask a question on American air force, naval and ground troops, types of warplanes, naval vessels, and types of missiles, he will readily provide you with the requested figures and other details. Ask him for details of the Team Spirit series and other nuclear war games staged in South Korea, and he will never hesitate to answer (Rodong Sinmun, 3/13/96)

The DPRK leader, serving a stern notice on the Americans that any planned military strike on North Korea over the nuclear standoff would be Pyrrhic, has outmaneuvered the Americans into the framework agreement on a diplomatic solution of the crisis, which might have engulfed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 thermonuclear inferno. The Americans committed themselves to respect the socialist system in the DPRK, support the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Land of Morning Calm, agreeing to provide two advanced light-water nuclear reactors to Pyongyang in return for the freezing and eventual dismantling of the

graphite-moderated nuclear reactor program.

Howeve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mounting to the point where the DPRK military leader perceives ominous signs of the American military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contemplating a preemptive strike purportedly to forestall a possible North Korean strike as they fancy that the collapse of the Pyongyang regime is a time bomb to open Pandora's box.

Outgoing US commander General Gary Luck, testify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tated that the "question is not if this country will disintegrate, but how will it disintegrate, by implosion or explosion, and when." Luck expressed concern that "in a very short period, [the DPRK] will either collapse or take aggressive actions against the South in a desperate attempt to divert attention from its internal situation." Almost daily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US and South Korean forces have been conducting massive joint attack exercises in South Korea, involving several hundred warplanes and dozens of naval ships, according to DPRK military sources quoted by KCNA dispatches from Pyongyang.

The United States has refused to make a positive response to the repeated North Korean calls for talks on creating a working peace-guaranteeing mechanism to replace the current fragile armistice agreement. The North Koreans are now forced to take appropriate steps regarding the demilitarized zone. Vice Marshal Kim Gwang Jin, First Deputy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on March 29 noted that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are seeing a golden chance in the flood-caused difficulties the North Koreans are experiencing to move the military into the North. Alarmed at the fact that they have gone the length of slandering the top leadership, Vice Marshal Kim warned that the miss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is not confined to defensive oper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iece together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subject from very sketchy accounts obtained from DPRK sources.

#### Part One Military Thought

Kim Jong Il defines war as an extension of politics and elimination of the enemy's will to resist, which can be achieved partly through physical destruction and partly through mental destruction. The military is an instrument only intended to help achieve the prescribed political aims. What distinguishes Kim Jong Il from Western military strategists is that he puts military leadership (strategy and tactics) and ideology (source of motivation and morale) before weapons: that is, the extent of the

effectiveness of weapons is decided by the motivation of the people who use them.

The Korean Marshal, who has a wide reading in world war history, has carefully analyzed what decides the outcome of war. He made a critical study of General Kim Il Sung's 15 years of armed resistance to Japanese colonialism, the 1950-53 Korean War, the Vietnam War, Mideast wars, and other wars including the Gulf War. The following findings emerged (DPRK sources):

1. In most of the wars fought in recorded history, troop strength and arms were the decisive factors.
2. In some wars and in particular in national liberation struggles against foreign invaders, commitment to national freedom and liberation and military leadership made up for the inferiority of troop strength and weapons .
3. Air force fail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the outcome of war.
4. Some high-tech weapons make even a small nation effectively engage a big country.
5. Nuclear weapons are white elephants.

Kim Jong Il presented the following observations according to DPRK sources:

Traditional military science presupposes that war is conducted regardless of popular interests and opinion. Most of wars and conflicts in recorded history were launched, fought and ended by the ruling classes in total disregard for the will of the popular masse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fundamental to traditional, capitalist military science:

1. Troop strength;
2. Armaments;
3. Logistics (including economic potential).

In other words, war is winnable if there is a numerical or physical superiority of a three to one over the enemy or a clear advantage over the enemy in the above tangible three areas:

First, numerical, technical and material superiority; Second, killing or putting out of action of 1/10-1/3 of enemy troops; Third, destruction of the enemy logistic potential and removal of their capacity to continue war.

Consequently, it is a foregone conclusion that those with superior military strength and economic potential and sometimes better strategies emerge

victors. Therefore, Kim Jong Il concludes that American victory over Nazi Germany and Imperial Japan was logical and self-evident and not evidence of the superiority of the American military leadership.

However, capitalist military science fails to provide the right explanation for the American debacle in the Korean and the Vietnamese wars. The Americans had unchallenged superiority in terms of troop strength, weapons, and economic capacity. Their air force had controlled the air, while their navy had sea supremacy. They openly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Koreans and the Vietnamese, whose military hardware and economic capacity were apparently a joke.

Capitalist military science is also at a loss to explain:

1. The French defeat in Algeria;
2. The Spanish and the Portuguese rout in their African colonies;
3. The Soviet disaster in Afghanistan.

The Juche military science, fathered by the late President Kim Il Sung and developed by Marshal Kim Jong Il, characterizes the three wars as (1) people's wars and (2) cultural wars, where the decisive factor in people's war, culture's war is mental and intangible: people, culture, and ideology. Organized ideology prevails over organized matter, for humans are ideological, political, and mental beings in the final analysis. In other words, politically organized peasants and workers equipped with outdated rifles under a distinguished leader can vanquish a modern war machine.

1. Vantage ground (underground fortress) and harmony among people figure more than weapons;
2. Nation-wide defenses, involving arming all the population;
3. Weapons are not necessarily required to be better weapons than those in the hands of the enemy, made clear in the Six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October 1980).

To win a second Korean War, the United States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science of Kim Jong Il:

1. To negotiate the most rugged mountainous terrain;
2. To destroy the Korean People's Army;
3. To find and destroy every deep granite-housed underground military industrial installations
4. To kill the whole Korean population, men and women, young and old.

This would constitute mission impossible for conventional weapons. Hundreds of nuclear weapons including hydrogen bombs would have to be used.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start a third world war and destroy the Far East and the rest of Asia with thermonuclear forces.

To emerge victorious in resumption of hostilities, Supreme Commander Kim Jong Il, DPRK sources said to a visiting expatriate Korean delegation from Japan, has only to order the following steps taken to assure the Americans that "war would be Pyrrhic":

1. To kill hundreds of thousands of GIs;
2. To shoot down tens, or hundreds of American warplanes;
3. To sink most prized vessels of the Seventh Fleet, for example,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 or submarines;
4. To totally devastate American nuclear bases;
5. To have brutal war scenes live broadcast to the US mainland;
6. To launch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super-bomb warheads at a few prime strategic targe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uch as nuclear power stations and major metropolitan centers like New York and Washington.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uch remarks have been made public in print outside the DPRK. Quite obviously, many American Western experts may be right in scoffing at these remarks. But wait a moment and think. How can they make sure that they are right? Regarding the so-called Rodong Missile 1 firing tests, the Americans failed to get any advance warning despite their spy satellite surveillance. They also failed to learn of the death of the late President Kim Il Sung when it happened. Most of available Western accounts of the DPRK are garbled at best. )

Inhibitions against a full-scale American military attack on the DPRK are:

1. No justific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2. Logistic problems;
3. Little international support;
4. Difficulty raising war funds.

As it turned out, the United States, which is the sole surviving superpower on earth, is no longer what it was just after WWII and before the Korean War. To be more precise, the United States is "a sick, aging wolf" in the words of DPRK sources. Evidence, cited by DPRK sources in their meeting with the above-mentioned delegation, is this:



1. 29 deaths forced America to pullout from Somalia;
2. With its much-publicized high-tech victory, the US-led 500,000-strong allied forces halted the Gulf War half-way, haunted by the specter of another Korea, another Vietnam. The hated Hussein is still in charge.
3. The Americans uncharacteristically asked their allies to share the costs of fighting the Gulf War.
4. Col. Gaddafi is still in power, unscathed in the sporadic hit-and-run harassment's by the American naval task force.

These developments are symptoms of a dying giant organization. Look at Chechnya. Look at the closing years of the Tokugawa Shogunate in Japan, where a small but well-trained, well-motivated rebel force easily defeated the much larger, better-financed Tokugawa forces.

## Part Two Whole-Nation Fortress and High-tech Weapons

The top priority task of Kim Jong Il's military strategy is converting the whole part of North Korea into an impregnable fortress in anticipation of a likely military contingency, conventional and nuclear. He has taken all precautionary steps to fortify the whole land, modernize the armed forces, and arm all the people.

In the modern age of high technology, the young Korean leader rules out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long-range bomber force or a blue-water navy comprised of a shiny battleship or flattop as senseless vanity stuff. However, well aware of the impact of high technology on war and culture, DPRK sources revealed that he had ordered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anti-ship missiles, surface to air missiles, and strategic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ipped with "a super-powerful warhead designed to pierce and devastate heavily-protected nuclear facilities and destroy major metropolitan and population centers." He knows very well that high-tech missiles are also politically effective.

### 1) Fortress DPRK

National resources have been mobilized to change the mountainous terrain by building the whole land into an impregnable fortress to safely protect against incoming missiles, airplanes, and shells. The whole territory of the DPRK has been thoroughly fortified so that it can easily withstand hourly millions of artillery shells and rockets and even survive nuclear attacks.

All military installations, air force bases, army bases, naval bases,

submarine stations, and missile sites, are built deep underground, housed in granite and concrete shelters. All industrial,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are also built underground. To be more specific, facilities on the ground are something like the visible part of a giant iceberg. "The real Republic is found underground," in the words of an expatriate Korean visitor to Pyongyang.

The North Korean sources refused to give any figures. According to available Western sources, more than 10,000 long-range artillery pieces and multi-rocket launchers are in place underground along the front line, while the coastal lines of the DPRK are dotted with numerous shore batteries (anti-ship long-range guns and missiles). They are ready to fire on any invading enemy force. A 1961 American film "The Guns of Navaron" reminds you of what they are like. The survival of fortified Quemoy Island in a repeated artillery duel is a good illustration of the resilience of Fortress DPRK.

## 2) Cadre Army and Quick Expansion into 250 Divisions

One of the most noteworthy fact about the Korean armed forces is their expansionability. To be frank, 22 million people become shells, bombs and ammunition to defend their most prized sovereign fatherla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They are all candidates to be revolutionary martyrs to defend their national hero and father image, Kim Jong Il.

First, because all the servicemen and officers are educated and trained to better perform their jobs, secondly, because all the male and female citizens (except for children) undergo military training on a weekly basis, including live firing, and third, because the domestic munitions industry mass-produce guns, ammunition, and other modern equipment, the Korean People's Army can be quickly expanded into 250 full-strength tiger divisions in a week in case of a contingency (DPRK sources). Pyongyang's two million citizens can be reduced to essential personnel (some 100,000) in a few days without any confusion at all.

To be blunt, no conventional force in the world can expect to hold a three-to-one superiority over the well-armed, well-trained 250 division regular army protected in a granite underground fortress. Another three million well-trained youth are ready to join the militia forces.

## 3) Maximized high-tech Weapons

Modern technology is maximized to make the minuscule DPRK a good match to a

big country. High-tech missiles, reverse-engineered or independently developed and improved by the North Koreans, have entirely changed the nature of air, ground, and naval warfare. The availability of these high-tech weapons made big and heavy warships unnecessary.

In the fourth Mideast war, an Egyptian missile boat sank an Israeli destroyer with a single missile shot. The Anglo-Argentina war over the Falkland Islands was another demonstration of the might of anti-ship missiles. French-built Exocet anti-ship missiles fired from airplanes and ships sunk British naval ships including the high-tech destroyer Sheffield.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n torpedo boats sank an American heavy cruiser Baltimore in an historic naval exploit. Scores of North Korean naval boats carry two or four anti-ship missiles each.

Dozens of diesel-powered submarines, designed to operate both in the shallow West Sea (East China Sea with an average depth of about 40 meters unfit for nuclear submarines) and in the deep but inland sea-like the East Sea (an average depth of 1,600 meters). They will go into heroic action in a uniquely Korean style of joint air-sea-undersea submarine hunting operations to search and destroy nuclear submarines.

The day is gone when nuclear powered or nuclear armed American naval vessels of the 7th Fleet can engage in the so-called gunboat diplomacy to show the flag. They are, in the words of Kim Jong Il, sitting ducks for North Korean anti-ship missiles fired from the ground, bombers and vessels.

North Korean-produced anti-tank missiles easily prey on M-1 tanks, while infantrymen carry rifles of a new type (supplied since 1991: DPRK sources) developed for the purposes of shooting down cruise missiles, airplanes and attack choppers. In December 1994, a North Korean front-line guard fired the latest type of new rifle at an American chopper. One shot was enough to bring it down.

The DPRK has a wide range of air defenses the centerpiece of which is a surface-to-air missile system including shoulder-fired Stinger-type missiles. Any enemy planes of whatever type, invading Northern airspace at high and low altitudes, will be instantly intercepted and shot down. In other words, on crossing into Northern airspace, several hundred American warplanes would be intercepted and brought down on the first day of resumed hostilities. The KPA's kill ratio would reach not less than 70-80%. Some 300 cruise missiles would roar into air, aimed at North Korean targets, but most of them would be deflected off course and many shot down by thousands of cruise missile-hunting units formed a cross the country.

North Korean ground-to-ground ballistic missiles can reach the whole of South Korea, Japan, and much of the Asia and Pacific region. Major American military bases come within their range. In less than ten years, the DPRK will likely deploy an operationa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force capable of hitting the American mainland.

Some experts may argue tha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re unreliable. In some respects they may be right. However, they are unaware of the following four facts:

1. The North Koreans have recently succeeded in radically improving the navigational guidance system for missiles.
2. Very big targets like nuclear bases, nuclear power stations, and major metropolitan areas are main targets.
3. In the case of Japan, GNP density per inhabitable area is at least 30 times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four times the figure for Germany.
4. The case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Iraqi missile attacks on Saudi Arabia, a land of deserts.

Marshal Kim Jong Il was quoted by DPRK sources as dismissing the much-vaunted Star Wars Initiative and Patriot Missiles exploits in the Gulf War as sheer deception and cyber-warfare pieces and he stresses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re will be no effective defense system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 South Korean vernacular daily Hanguk Ilbo (3/24/96) front-paged a 3/22 AP story that a next-generation missile killer missile developed by the Americans was test-fired but failed to intercept a mock enemy intermediate-range missile.

### 3) Air Force Strength

No precise figures are released about the number of operational warplanes, many being museum pieces by American standards. From the beginning, Marshal Kim Jong Il never expects his air force to outperform American combat planes in terms of technical sophistication. He knows too well that it is physically impossible, DPRK sources noted. The point he stressed is the way combat planes are used to meet the nature of dog fights and the specific conditions of the Korean theater. Kim Jong Il reminds the air force pilots that maneuverability and not speed is vital to a fighter.

What is foremost in the Marshal's mind are the following facts:

1. Given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Peninsula (200-300 km east and west

and about 1,000 km north and south) bordered with China and Russia, flying too fast carries a danger of inadvertently violating their territorial airspace.

2. More than 70% of the Korean Peninsula are mountains. Mountains are home to most of key strategic installations. Enemy bombers have to slow down for effective air-raids.
3. In air duels, fighters have to maneuver at a reduced speed. North Korean pilots are trained not only to zero in on enemy aircraft's dead angle but also to meet an enemy face to face, to fire an air-to-air missile.
4. All DPRK fighters are equipped with high-performance air-to-air missiles capable of downing enemy aircraft.

Many generals and officers served abroad, in Vietnam, Mideast, Africa, and Latin America. During the Korean War, they shot down American sabre jets and B-29 s. In Vietnam, they drove vintage Mig fighters and manned air defenses, shooting down phantom jets and B52s. In the 4th Mideast War, North Korean pilots shot down French-built Mirage jets and US-built jets to the chagrin of then Israeli defense chief Dayan.

#### Part Three Nuclear Weapons

The DPRK has no nuclear weapons at all for the moment, but they are capable of acquiring them at any time if they so decide. If Marshal Kim Jong Il should deem it militarily necessary to build a nuclear force, the North Koreans could fabricate several nuclear bombs in a very short span of time. They could secretly develop nuclear arms in their underground facilities. Computer simulation would remove the need to conduct nuclear tests. They have a large contingent of nuclear scientists and engineers supported by sophisticated industrial facilities and laboratories, albeit less sophisticated than the Americans and Japanese.

As DPRK sources put it, Marshal Kim Jong Il made an in-depth historical analysis of wars and conflicts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cluding the Korean War and concluded that nuclear weapons are dead wood and that conventional arms and equipment are more than enough for national defense.

What are his findings?

1. Approximately 100 big and small wars and military clashes have erupted since atomic bombs were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at the end of the last world war, but no nuclear weapons have ever been put to operational use since.

- o In the Korean War, Gen. MacArthur urged the use of nuclear weapons, but President Truman refused his request for authorization and sacked him.
- o Faced with repeated defeats in the Vietnam War, the American military asked for permission to use nuclear weapons, but the US Administration refused.
- o The Afghanistan War ended in the Soviet withdrawal. The other superpower, the USSR was unable to use its huge nuclear arsenal.
- o The United States amassed half a million troops for the Gulf War despite the fact that the use of nuclear weapons was cost-saving. Instead, the Americans asked allied countries share the war funds.
- o Israel with a reported arsenal of several hundred nuclear warheads never used any of them in its four rounds of wars with neighboring Arab countries.
- o Nuclear capable India and Pakistan fought two rounds of war without mobilizing a nuclear unit.
- o South Africa, which reportedly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bombs with Israeli assistance, fought a series of wars with front-line countries, using only conventional arms.
- o The United Kingdom, now reduced to a shadow of the once powerful British Empire, refused to use much cheaper nuclear arms against Argentina in the Falkland War.

## 2. Korean Experience

- o The Korean War could have been a second nuclear war theater, but the Americans stopped short of using nuclear arms, resisting the powerful temptation.
- o At the time of the Pueblo incident and the Poplar Tree incidents, the United States brought a huge nuclear force into South Korea to blackmail North Korea, but backed down in face of the North Korean readiness to strike back in full force.
- o The crisis over the alleged nuclear weapons program prompted the Americans to launch a surgical air-raid, but the Americans were persuaded into agreeing not to attack North Korea and provide the latest light-water nuclear reactors.

In other words, in the historical analysis of Kim Jong Il, the age when nuclear weapons could be used in actual war is long gone, and nuclear arms are now awkward white elephants. In fact, he stresses that war is winnable without recourse to nuclear force.

However,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DPRK is possessed of nuclear

arms in a paradoxical sense:

- o Presence of operating nuclear power stations in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mainland
- o Nuclear power of a number of American naval ships, including aircraft carriers and submarines
- o Deployment of nuclear arms in American bases
- o Equipment of American forces (bombers, submarines, surface vessels, missiles) with nuclear arms

In other words, in retaliation against American attacks, the Korean People's Army would launch surgical assaults on nuclear-armed American forces, bases, nuclear-powered naval vessels, and nuclear power stations in their host countries where staging bases for Americans are located.

North Korean bombers, missiles and some units of the Special Command Force are charged with attacking nuclear bases and nuclear facilities. Deto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explosion of nuclear power stations would leave huge numbers of American servicemen and personnel instantly killed and the countries concerned would be ruined.

An explosion of an operating nuclear reactor would be as destructive as 150-180 hydrogen bombs in terms of radioactive fallout released. In other words, the situation would be tantamount to simultaneous explosions of several hundred H-bombs.

What deserves special mention is that Japan lies several hundred kilometers east of the Korean Peninsula. Hawaii and the US mainland are situated in almost the same latitudes as Korea. The Jet Stream, well known as the carrier of deadly fallout, flows just above the Korean Peninsula from west to east, reaches Japan, Hawaii, and the US mainland. The Jet Stream runs at maximum speed of up to 500 km per hour on the east of the Asian Continent.

American Air Force General Merrill A. McPeak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2/6/93) warned of the likely failure of a preemptive strike to knock out all of Pyongyang's nuclear arms and an escape of potentially deadly radioactive pollution into the air.

In this sense, Marshal Kim Jong Il has no good reason to take the trouble to produce nuclear arms. One of the iron rules of people's war is to seize enemy weapons. As he puts it, the DPRK is 'equipped with a large arsenal of American nuclear weapons in the paradoxical sense.' The United States is an helpless prisoner of its own nuclear force in a certain way.

## Part Four 2nd Korean War

Naturally, iron-willed brilliant commander Kim Jong Il has his own scenarios prepared for a second Korean War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He is determined to victoriously lead his people and armed forces in an unwanted but provoked nuclear shoot-out with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He envisages several causes of resumption of full-scale hostilities:

1.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confronted with a snowballing political crisis in South Korea, would try to find a way out in a war gamble.
2.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underestimating the military, politico-economic, social strength of North Korea, would attempt to overthrow the socialist regime in Pyongyang and reunify the divided country by force.
3. The Americans, who would go financially bust and default on their pledge to provide annually, 500,000 tons of oil to North Korea, prompting Pyongyang to resume the nuclear program, would be tempted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4. Miscalculation on the part of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5. An attempt of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to launch a limited war in a bid to demonstrate the need to keep the otherwise shrinking budgets. Ill-conceived overreaction to the North Korean downing of an American plane violating the North Korean airspace or sinking of an American warship when they intrude into the Northern territorial waters.
6. Misreading that the DPRK socialist regime, faced with an imminent danger of its fabrics falling apart,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would react by launching a preemptive strike in what they describe as a prevention action to forestall a possible suicidal military thrust from the North.

For a peaceful, negotiated settlement of the Korean issue, Kim Jong Il favors waiting till the completion of the light-water nuclear reactor project. Unfortunately, resumed hostilities, however, would force him to turn the renewed conflict into the final fatherland liberation war.

Whatever their cause may be, the new war is certain to be far more brutal and catastrophic, totally different from the 1950-53 war in that they would spill 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to expand into a thermonuclear war. He cites the following reasons:

1. Depending on the signs of imminent forestalling strikes by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the North Koreans would not wait for them to attack first. The Korean People's Army, primarily defensive in nature, is also trained and equipped for offensive operations.

2. Conventional weapons are utterly ineffective against the nation-wide, all-people defense system of the DPRK. The only option left to the Americans to avoid an eventual disaster, would be to use scores of, hundreds of tactical and strategic nuclear weapons.
3. Some incoming American ICBMs or strategic bombers would have to fly over China to reach targets in the DPRK, including those near the Chinese and Russian borders. They may be likely viewed by the Chinese or Russians as targeted at their countries.
4. Nuclear attacks on the DPRK are bound to fatally affect the Chinese and Russian military, industrial, and population centers in the border areas.
5. The North Koreans would be forced to retaliate by launching strategic surgical raids on enemy power supply systems, that is, nin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South Korea and 41 nuclear power stations in Japan, American nuclear bases in the Asian-Pacific rim.
6. North Korean commando forces, specially trained to destroy nuclear power stations and major metropolitan areas, would slip into the US mainland.

As long as the past some 100 wars and conflicts fought after WWII, there were no significant operating nuclear facilities in the front and the rear. In a second Korean War, there are numerous operating nuclear facilities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nce assaulted, the Korean People's Army would have no valid reason to refrain from attacking nuclear facilities in the enemy territory.

Where is the Korean People's Army different from what it was during the Korean War? The answer is obvious. They have capability of reaching out of the Korean borders to lethally strike back against the countries where the first strikes originate, be they Japan or the United States. Japan would be unable to prosper from its Korean War special procurement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nuclear battlegrounds, scenes of living hell.

Some American and South Korean military planners reportedly have engaged in a series of computer simulations under the imaginary condition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thrust into South Korea in three directions, including landing operations. Their assumption is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march into South Korea in a flashy way, upholding the red banner.

In the last Korean War the Korean People's Army was forced to launch a

counter-attack without any massive air-raids, massive artillery barrages, and command operations to block the line of retreat for the enemy forces. Consequently, it took the KPA one month to liberate 90% of the South Korean territory and reach the perimeter of Pusan. They ran short of supplies and ammunition because they had countered without sufficient preparations. However, this is history now.

If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should be perceived as about to launch a forestalling operation against the DPRK, the Korean People's Army would promptly take the initiative to knock out of action all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warplanes on the ground before they take off and naval ships sunk before taking to seas. Several hundred ballistic missiles would be fired in succession, locked on air bases, army bases, and naval stations, radar sites, communications installations. The job would be completed with thousands of bombing sorties by North Korean air force units. Ground troops and paratroopers of the KPA would occupy the whole of South Korea in a blitzkrieg, taking thousands of GIs prisoner.

DPRK sources gave these disquieting figures:

Number of Major War Games

1992 8

1993 12 (two-fold increase)

1994 32 (four-fold increase)

1995 37 (4.6-fold increase)

Territorial reunification of Korea would be a fait accompli as a new temporary democratic government would be formed in Seoul. In this case,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wo options: (1) recognizing the reunification of Korea as accomplished and (2) refusing to recognize it, calling it an aggression from the North, and risk fighting a thermonuclear shoot-out in the vicinity of Japan, China, and Russia, after Korea has been reunified.

Suppose the North Koreans were taken by surprise. Surviving the first strikes by the Americans and the South Koreans, the Korean People's Army front-line long-range artillery pieces, numbering more than 10,000, would turn Seoul and its adjacent areas into a sea of flames in less than an hour.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underground and mobile launch pads would rain on all the major military and industrial complexes throughout South Korea, which would instantly be consumed in repeated mushroom fireballs, inflated by the explosion of the nine operating nuclear

power stations. Strategic prime targets in Japan, home to American nuclear bases, would be gutted by fires.

Nuclear-powered or armed American warships would be sunk in a barrage of anti-ship missiles and torpedoes. Their nuclear arms and nuclear reactors on board exploding, turning the Sea of Japan into a sea of death. B-52s and Stealth bombers carrying nuclear bombs would be shot down.

The same doomsday scenario would unfold in Japan, Hawaii, and the US mainland. Most likely, the North Koreans would also suffer irretrievably. However, the North Koreans would be ready to lay down their precious lives for the sacred cause of safeguarding their fatherland and socialist regime. They would suffer irretrievably as the whole of their country would be bombed back to the stone age. Yet, the North Koreans, who have long geared all their military,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for all kinds of conceivable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contingencies, including nuclear doomsday, would fare culturally much better than the Americans and the Japanese.

The North Koreans would never die alone.



## **DoD News Briefing**

1996. 6.

이 자료는 최근 미국이 북한과 유해 송환협정을 맺은 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Memorandum: No. 131-M

---

June 14, 1996

MEMORANDUM FOR CORRESPONDENTS

---

From June 10-14, 1996, a U. S. Department of Defense delegation met in Pyongyang, Korea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plan joint humanitarian recovery operations of remains of U. S. servicemembers from the Korean War, as called for in a May 9, 1996 agreement.

During the talks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greed on the dates, locations and logistics for the first two recovery operations. The first recovery operation will begin on July 10, 1996 at an aircraft crash site in Unsar County, Korea. The second will take place in September 1996 at an aircraft crash site in Ryaing Bang County.

The willingness of the DPRK to cooperate on these two initial joint recovery operations represents another important step forward on this humanitarian issue. As stated in the May 9th agreement, such cooperation on this issue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D-

Press Advisory: No. 195-P

---

June 17, 1996

PRESS ADVISORY

---

Deputy Director of the Defense POW/MIA Office Alan Liotta will hold a press briefing today at 1 p.m. (EDT) to discuss th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r two joint humanitarian recovery operations of U.S. servicemembers from the Korean War.

The briefing will be held in the DoD Briefing Studio, Rm. 2E781.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Beverly Baker, 703-695- 0192.

-END-

---

DoD News Briefing

Mr. Kenneth H. Bacon, ASD PA

Monday, June 17, 1996 - 1:00 p.m.

---

Also participating is Allen Liotta, Deputy Director, Office of POW/MIA Affairs)

Mr. Bacon: Good afternoon.

Allen Liotta is well known to some of you as an expert on our efforts to follow up on all the leads about POWs/MIAs in Korea from the Korean War. He's the Deputy Director of the Office of POW/MIA Affairs. He has just returned from North Korea where he was heading the team that was negotiating the details of later trips into North Korea to look for remains of POWs/MIAs, so he's here to talk about that. He can also take questions about the reports that some of you wrote over the weekend on the reports that have come out, or the unconfirmed reports that have come out about sightings of people in North Korea.

MR. LIOTTA: Good afternoon. It's good to see you all again after such a short time.

I have a brief statement I'd like to make, and then I'll be glad to take questions from you all.

From the 10th to the 15th of this month I led the delegation to Pyongyang, North Korea for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on joint recovery work. My delegation was a technical working level delegation that came out of the New York agreement that was signed on May 9th between the North Koreans and us, on doing recovery work in North Korea and settling compensation issues over remains they had given to us in the past.

One of the significant parts of the delegation is this was the first DoD delegation to travel to the North Korean capital since the end of the war. As a result of that, the North Koreans treated us with a great deal of



respect. We had very high level discussions in terms of within the military counterparts it was all working level with the exception of a dinner with a two star general that's responsible for this issue. They wanted to make sure that we'd done a little bit of touring in the country and saw some things that were related to the issues, so we did take a tour of the museum for the Korean War. It's significant, although other Americans have been in this museum before, principally some congressmen and senators, we were taken to more rooms than any other American group had been to in this museum. There are 80-plus rooms in the museum. We saw about 39 of them. Not all the rooms deal with the Korean War. A lot of them deal with the Japanese War and the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We also went to the crash site, and what we did was, as the negotiations proceeded, we agreed on two joint recovery operations. A first which will occur next month in July. It will start on the 10th of July. It will last for 20 days. There will be ten Americans involved -- eight will be working at the site, and two Americans will remain in Pyongyang as liaison with the foreign ministry and the defense ministry officials there. That operation will end on the 30th of July, and then we will return in September for another 20 day mission. That mission will also include ten Americans under the same setup -- eight and two -- and will last, as I said, for 20 days. We haven't set a specific start date for the September mission. We'll do that after, but the mission will occur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The first crash site is an F-80C aircraft, crashed in Unsar County which is in the very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about 18 kilometers from the Chinese border. They took us to the crash site, to the area of the crash site, I should say. As with the Nam Po city crash site that I briefed you about, or that you heard about after Congressman Richardson's visit, we did not actually see wreckage on the ground, in the area. We were taken to the specific grid coordinates that we had provided to them for this crash site. We walked the terrain, we spent a little over an hour at the crash site walking the terrain, getting a feel for the area. But again, this is a crash site that's over 45 years old. It's an area that was cultivated. So there was no surface wreckage that we were able to see in the short time that we were there.

My delegation consisted of three representatives in the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in Hawaii, which does the actual excavation work;

two representatives from my office; and a State Department representative.

Q: Why did you choose that site if there was no wreckage there? Why are you interested in that site in particular?

A: We provided the North Koreans ten sites -- not all crash sites. Some crash sites and some grave sites. Of those ten, we asked them to choose two sites. We said we could go to any of these ten sites. We think these are all good possibilities for recovery work. We asked them to select from that. They did select two of those ten sites. This is one of those ten sites.

Q: The F-80C carried how many people?

A: It's a one-seat aircraft. It was a one-seater, so there's one individual involved in this crash.

Q: The F-80C is the one you're going to in July?

A: That's correct. And then the September operation is a B-29 bomber which crashed outside of Nam Po City. It's the area that they took Congressman Richardson too. I was also in Congressman Richardson's delegation as the DoD representative. They took us to that crash site during his visit.

Q: Where was that again?

A: It's in Nam Po City which is southeast of Pyongyang.

Q: What's the name of the pilot who was in the F-80?

A: We don't release the names of the crew members that are involved for privacy of the families. But Air Force Casualty is attempting to contact the family members involved in these incidents.

Q: Was this plane shot down, or...

A: Yes, it was. Both of these planes were shot down.

Q: Was he a prisoner of war or was he always simply missing?

A: In the F-80C incident? He's always been missing. He was never a POW.

Q: And the B-29 crew?

A: The B-29 crew had 13 aboard. Four parachuted out and were captured; three were returned; one was not returned. The other nine were aboard the aircraft at impact.

Q: Did you see any wreckage at that site?

A: No, we did not. And at that site with Congressman Richardson, we were not allowed to roam around. They basically took us to a spot on a road, a dirt road. We pulled over and they said this is roughly the area where the excavation work would be done. At that time, they had not identified that site as one of the sites we would go to. They just said this is the kind of area we would go to of the kind of a crash site, it would be somewhere in here, somewhere... And they pointed anywhere in these hills where we could possibly be.

The significance of the crash site visit we went to with my delegation is we were allowed to roam around and move through the mountains and the hills and the valleys and talk to people, probably a little less than a kilometer as we were taking pictures.

Q: ...recover remains?

A: The joint recovery work? Yes. The main reason is to recover and identify remains so we can return them to their families.

Q: What happened to the one B-29 crew member who wasn't returned?

A: We're pursuing in that case, we don't know. We have evidence that he was in the prison camps at the time, but he was not returned to us, and we're pursuing that.

Q: You wandered around the site... This most recent visit when you wandered around that site, did you talk to people in the area?

A: We did not talk to any local witnesses in the area. There was some local buildings nearby and a village not too far away. But there were no people out working in the fields while we were walking around that we could talk to.

Q: What will the people, the surveyors, the people who go there, what will they do if there's nothing to see?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A: That's where, as with any crash site, getting to the crash site is half the battle; finding something is the other half of the battle. The key will be to find, part of the key is hopefully to find some local witnesses. The North Koreans will help us identify some local witnesses that have lived in the area for a long period of time that were there during the crash during the war or had relatives there during the war. Oftentimes what we find in the Asian culture, in these environments, is the crash site becomes a local legacy, local lore. Everybody knows where it is, where it went down. We find someone who can pinpoint the location of the crash site. Even if it's been cultivated on top of it, our experience in Southeast Asia has shown that when you dig down five, six, seven feet, you can find a wealth of crash material at that level. So our confidence is if we can find the specific site and we dig the specific site, that we will be able to recover remains and crash site related evidence that will help us account for the pilot.

Q: Did you address at any time the issue of the American defectors that are living in North Korea? Or did you address at any time the possibility of other Americans alive, being possibly held against their will there?

A: I won't get into the specific official and unofficial discussions we had, but I did raise the issue of live American prisoners of war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We had also raised it with them in New York, at the time in New York as an area of interest that we need to pursue, that we have some reporting that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ey were, as they have been in the past with U.S. congressmen and U.S. senators, who have raised this issued, noncommittal. They've maintained that they have no Americans being detained against their will in North Korea.

Q: How credible is this evidence that there may be 10 to 15 Americans alive in North Korea?

A: We have a variety of reporting, largely hearsay reporting, about these kinds of... About Americans. The number ranges broadly, somewhere between 10 and 15 are the most frequent kinds of reports that we hear. That's what we're trying to determine, is exactly how credible are these reports. If we can corroborate this information and then if we can corroborate it, what action needs to be taken after that.

To date, we have not been able to corroborate any of this information. And we have not been able to determine with any degree of sufficiency the credibility of this information.

Q: Are you going to press on this at all? You say they're noncommittal. Is this within the area of your agenda? Do you have any leverage at all? Do you intend to try?

A: Absolutely we intend to press on this, and it is specifically within my office's purview to follow up on this, and we absolutely intend to follow up on this with the North Koreans.

Q: The report that we saw on Friday referred to very compelling reports. Would you use a different adjective in describing this evidence?

A: As I've seen it, the report that you're referring to, and that's been written up in the newspapers, I think overplayed the impact of that internal report. What that report was, it was an internal working document that an analyst drafted to draw out some of the "what if" scenarios, the questions about some of the reporting, to focus some attention on it, to ask the questions that an analyst should rightfully ask about what else do we need to follow up on here, where else do we have to go for leads? What other action should we take to try and corroborate this information. So that report, that internal working report was designed for that purpose, to raise those kinds of questions in our office, amongst our analysts, so that they can put some analytic thought behind it and figure out where do we go next in an effort to try and corroborate some of this information.

Q: It does say DPMO concludes that there are these two different groups. I mean does DPMO conclude that or not? That's what the report says.

A: No. That is not an official conclusion of the organization. It's an internal document that the analyst had written to try and put his thoughts down.

Q: Did he misrepresent what the facts are then?

A: No, I don't think he misrepresented an organizational conclusion. He considers himself part of the organization. I think it was just a mixed pronoun in terms of [views]. He's citing the organization when he's citing his own personal views. But because he considers himself part of the organization, he used the organization rather than himself... When an analyst typically writes, they don't write "this analyst thinks this or that." Not necessarily.

Q: It' also represented in the report a variety of additional citing reports have been received culminating in a recent flurry, the last 60 days, of very compelling reports. What very compelling reports did you receive earlier this year?

A: We did not receive a series of very compelling reports this year. Part of that was, the analyst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som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so he had talked with those defectors. We'd gotten more robust or fulsome briefings from them than had been previously reported. But none of the information they provided to us was information that you could characterize as a smoking gun, or information that definitively corroborated any previous information.

Q: Those are the very compelling reports he's referring to?

A: I'm not sure what he was referring to in terms of very compelling. I'm not sure exactly what he's referring to.

Q: Do you know why this was prepared, this document?

A: As I said, this is an internal document that our analysts frequently will do as an analytic exercise to determine how are we doing, how are we looking at this information, where do we need to go next for additional information, what are the next things we can do, helps crystallize analytic thought about some of the information that we do get. Very rarely in the

analytic world do you make a single decision based on a single piece of evidence. You get a pattern of evidence and you look at that pattern. So it's very common for analysts to step back at a point in time to take a look at all the information they've gotten thus far and determine if there's any clear patterns emerging, and then where do you go next.

Q: When you raised this issue when you were in Pyongyang and you got the noncommittal response, did you press at all? Did you ask to be taken out to these sites to visit them?

A: To visit with the POWs? I mean to visit with... No, they did not. They steadfastly maintain that there are none.

Q: I don't mean to quibble here, but you said they said to you no Americans are being held against their will, right?

A: Right.

Q: Did you at all think about following up to ask, can I just go talk to the Americans, even if they're not being held against their will?

A: We have asked to talk to the American defectors from the 1960s, and it's being treated as a consular issue, to try and gain access to them so that we can perhaps facilitate contact with their families. And because it's being treated as a consular issue, it's being handl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not by DoD. But that request has been made of the North Koreans.

Q: I thought you said the analyst who wrote this report was able to talk to some of these defectors. Did I misunderstand?

A: He was able to talk to defectors who have come out of North Korea. Korean defectors, not American defectors. Perhaps that's a misunderstanding.

Q: Also that report, wasn't it used as the basis for a briefing of the Joint Staff as well as OSD? In other words, this wasn't just an internal working document that stayed inside your office.

A: There are analysts not just within OSD and the DPMO and the POW/MIA

office. There are analysts throughout the Defense Department establishment. As I said, the report is designed to stimulate thought, and energize some people to say are we getting all the information? Is there other information? How else do we corroborate this information? So there's going to be a natural dialogue amongst analysts that focus on the issue. Specifically on POW/MIA, but also in the broader context of Korea as we try to analyze the information to put in context with other information that exists on Korea.

Q: So the answer is yes, it was used as a briefing for the Joint Staff?

A: I don't believe it was used as a briefing, but there was dialogue with other analysts, yes.

Q: On which sites you're going to search, why did you leave it up to the Koreans when you could have searched sites, possibly mass grave sites and other things? Why do you search a site here, an F-80C where one American was down, when you could have pressed to go to grave sites where possibly dozens of Americans... Why did you leave it up to them?

A: That's a good question. There are two reasons, actually. We carefully selected the sites that we did posit to them. We left it up to them to demonstrate to them that our objective here is a purely humanitarian objective. There's no other agenda involved with what we're trying to accomplish. We felt that by giving them a variety of sites that they could choose from, it would be one way to demonstrate to them that that is, indeed, our objective.

From our perspective, the sites that we proposed to them all had several things in common. One, they were not near any military installations or sensitive installations. Two, they were not near any major industrial facilities or large cities that would involve maybe having to tear down houses or redirecting roads, things that would complicate their approval process. Also, we gave them a mixture of crash sites and grave sites, but to be quite honest with you, we have more experience dealing in crash sites than we do in mass grave sites, and our objective is to make identification. Not just to recover remains, but to identify those remains so that we can return them to the families. In a crash site investigation you can go and do your excavation, not recover remains from the crash site,



but recover sufficient evidence from the crash site that shows that the pilot was in the aircraft at the time of the crash, perished in the crash, and therefore, you can provide closure to the family by being able to definitively state to them that their loved one died in the incident and we know what happened to them, even in the absence of being able to recover remains that we can turn over to the family.

Q: How many Americans are still listed as missing, and how many of these cases realistically could you expect to get closure on over the coming years?

A: There are currently over 8100 Americans listed as unaccounted for from the Korean War. I stated at the last press conference that I gave after the New York agreement, we would hope, our expectation is that we could recover perhaps about half of those, 3,000 to 4,000. But that estimation really is going to be geared by our experience on the ground. If we get to some of these crash sites and we discover that the 45 plus years i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retrieve crash site evidence or remains, that number could drop rapidly. The same once we get into mass grave sites. If we find that we're not having any luck within the mass grave sites, the number would drop even faster.

Q: As you moved around in North Korea, your movement was limited. We hear reports, of course, that people are starving and everything else. Can you give us your general impressions of what you saw in the countryside and the people in the city of Pyongyang? How does it look now?

A: Sure. These are my general observations. I wasn't there looking at the food situation, doing any sort of assessment. The World Food Program and others are there doing that. But I can tell you that in the drive from Pyongyang out to the crash site, which is about a four and a half hour drive, we did go through a number of villages and small towns. The corn cribs were empty, grain silos were empty. The crops that we saw, I would characterize as stunted or underdeveloped. We saw a lot of flood damage. Almost all the bridges on the roads which we traveled were washed out and we did a lot of having to drive the cars through the rivers themselves. On the fields that you can see from the roads, you can see a lot of silt and other leftover damage from the floods. I'm not a farmer so I can't say the effect that would be on there. But what struck me was corn, which I would

expect this time of season to be knee high or better, was ankle high.

Q: Back to the analyst's report for just one question. Could you give us an example of the sort of evidence you're talking about which the author found compelling or riveting or whatever, and which you were saying is very tentative and not hard and so on?

A: I don't want to be trying to juxtapose against the author's view. His intent was to generate some thought and stimulation within the analytic community or our office, and that's what he's done, and that's what his report is designed to do. That's what we pay him to do. But the kind of reporting that he gets is frequently there's an individual who sees some caucasians or caucasian looking people, doesn't have an opportunity to talk with them so he asks another person, do you know who those people are? Do you know why they're here? The other person says I've heard they're Americans. The other key for us is, there seems to be some loose interchangeability between the words defectors, deserters, and POWs. And we don't know whether there is a loose interchangeability in how they use it, whether it's simply a status symbol, or whether they attach significant distinction to those words, as we attach significant distinction to the words.

Q: ...on that level you're talking about.

A: That's correct.

Q: You and your office, just so we put this in clear context, you and your office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are whatever number, 10 to 15, whatever number, that there are Americans still in North Korea, either defectors, there against their will, prisoners of war. In other words, aside from the report we just talked about, as you move through your daily work and your investigation, you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are people still there. You talked about over 8,000 missing, unaccounted for. A specific number if you can.

A: We know that there are Americans living in North Korea, because we know of the defectors from the 1960s. That's one of the complicating factors. When you get reports about this, we don't know if these reports are referring to Americans whom we know are there, or if they're referring to

someone else. That's why we have to go through this corroborative process to try and determine the voracity of the reporting which we get.

We proceed on the assumption when we get these reports, every report needs to be investigated. We need to make a determination about these reports, we need to corroborate the information about the reports, and we proceed along that basis. We don't rule any report out simply because they say it's not possible that someone could have survived 40-plus years in captivity since the end of the war. We do not dismiss a report on that basis. We investigate every report, try and make an analytic determination on the voracity and the credibility of the information that's there, and based on the analytic conclusion that's reached at that point, additional steps could be taken.

Q: What have you found so far? What are your conclusions? If you've investigated all these reports, and we assume you've investigated many, many...

A: Yes. The conclusions are we have no conclusive proof that there are Americans being held against their will in North Korea.

Q: What's your opinion on that? Do you think it's possible?

A: My personal opinion is guided by what I see in my professional capacities. I have no information that shows to me or indicates to me definitively that there are Americans living against their will, being detained against their will in North Korea.

Q: What's in it for the North Koreans? Why now? What's the significance of being the first military delegation to visit since the end of the war?

A: I believe that they have made the internal political decision to cooperate with us on this humanitarian issue. I think the reason is because part of the agreed framework which dictates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clearly says that one of the five areas they have to cooperate on is POW/MIA. They know it's extremel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Congressman Richardson's raised it with them, as has Senator Smith and several others during trips there. When they have had delegations here that have been to Capitol Hill they've heard

the same story. The United States has made it very clear to them across the board that this is an issue of prime importanc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the families and the veterans and we intend to pursue it. I believe they have made the determination if they have any hope of try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us, this is one of the areas they must do that with. That's why in the New York agreement it says, and we state in the press release here, this represents another positive step to the contribution of the overall improvement in relations.

Q: Did you make any payments during your trip at all? Pay for anything?

A: Other than the hotel, the food, things like that, and souvenirs. But we didn't make any payments to them for anything.

Q: What's the compensation to the... What kind of financial compensation is there from the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is cooperation?

A: One of the agreements wa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ring in all the equipment which we're going to use. We're not going to, as we do in Southeast Asia or other places, Brazil and other places we've done operations, oftentimes we lease local equipment, minimize the logistics of what we have to bring with us, but under this agreement, we will bring in everything with us to use for the equipment.

Q: And leave it there when you leave?

A: We will leave it there between the operations, but it will return... It will remain U.S. Government property and it will return at the end of the second joint operation.

Q: What do you estimate this first operation will cost? This 20 day operation?

A: I don't know. The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in Hawaii is the organization that runs these operations. I don't know what it would cost us.

Q: You mentioned earlier that the U.S. Government wants to talk to these deserters, American deserters who are there. Have the North Koreans

indicated they would allow you to do that? Allow the State Department to do that?

A: They have not yet.

Q: They have not said either way?

A: They have not responded to the State Department request.

Q: Have they acknowledged that these deserters exist?

A: To my knowledge, they have not yet acknowledged that they exist.

Q: If there's any sort of evidence that Americans are being held against their will in North Korea, is this the moment to go ahead with these other forms of cooperation with them?

A: I think that's a hypothetical question that I really can't tackle. We have to make that determination first, based on the evidence that we have.

Q: I see the family groups this morning said this is not the moment to go forward with the search for remains if there's any question about Americans still being alive in North Korea and held against their will.

A: I would argue that when you have a society as closed and isolated as North Korea, you have to seize upon any opportunity you can to make inroads into that country. If you hope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if you hope to get answers to some of the more difficult questions, you pursue whatever avenues are open to you. We have a unique opportunity right now for U.S. servicemen to go into a country that technically we're still at war with, to begin these kinds of operations, and to recover the remains of fallen comrades and return them to their families, as well as to eventually gain access to archival information and other kinds of record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hat can help us in this process, and as we do that and as we gain additional information, it allows us to target and ask more specific questions and get other information and relate it to other questions.

Q: Did you see things in the museum that would lead you to believe there's information there of an archival nature of some other kind that would be

helpful?

A: Yes, we did. We saw, for example, a shoot-down record, and I made a point, it was in a display of anti-aircraft, a brigade hailing one of their anti-aircraft brigades. I made a point of pointing to that shoot-down record and saying these are the kinds of records which can be very helpful to us when we take your information and combine it with our information and synthesize it, it gives us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incident, tells us about witnesses that were involved in the shoot-down that might have additional corroborating information. So I pointed that out to them and said this is why we need to begin the process of doing archival work as well as field work. They understood that process.

Q: Like a diary sort of thing?

A: No, it's generally a shoot-down record kept by an operational unit that says this unit shot down an American plane at this time at this place. Whether they witnessed anybody parachuting out of the aircraft, if anybody was captured, that kind of information.

Q: Are you briefing South Korea at all on your findings? Are any members from South Korea a part of your team?

A: There were no South Koreans on my team, but we work very closely with our allies. We talked with them before we went in about the specific things which we would be discussing. After we came out we talked with the South Koreans and gave them a full read on what we discussed.

Q: I'm not sure if I got an answer to my earlier question about whether there's any financial compensation. You talked about equipment, but is the United States making any direct payments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is cooperation?

A: I won't get into the specifics that we negotiated and talked about, but we are treating this as we do our other operations around the world. So what we do will be consistent with those operations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fields which are destroyed, the process of the excavating work if we have to tear up a farmer's rice field, things like that, then we will compensate for those.

Q: Are we going to pay for remains?

A: No, we are not going to pay for remains.

Press: Thank you.

- END -





**North Korea:  
The Foundations for Military Strength**

1996. 6.

이 자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입수된 자료로서  
미국 DIA의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기초 보고서입니  
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North Korea: The Foundations for Military Strength***

## **Chapter 1 -- A Post-Kim-II-song North Korea**

### National Policy Goals

- Regime Survival/Security
- Leadership Succession
- Economic Development

### National Structure

- Government Organization
- Party Organization
- Military Organization

### President Kim II-song's Foreign Policy Legacy

## **Chapter 2 -- Increasing Internal Pressures**

### Economy

### Foreign Trade

## **Chapter 3 -- Strategic Issues**

### Proliferation/Nuclear Weapons Program

### Ballistic Missiles

### Chemical Weapons

### Biological Weapons

### Transfer Technology and Acquisition

## **Chapter 4 -- Military Forces**

Ground Forces

Organization and Disposition  
Weapons and Equipment

Navy

Organization and Disposition  
Weapons and Equipment

Air Force

Organization and Disposition  
Weapons and Equipment

Air Defense

Ballistic Missile Forces

Special Operations Forces

Reserve Forces

Security Forces

Wartime Employment

Weapon Production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Transportation

Logistics

Glossary of Acronyms

## **Preface**

In 1991,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published the document North Korea: The Foundations for Military Strength. That document noted that North Korea, despite an extremely closed, tightly controlled, and isolated government and economic system, fielded a very large, capable military with older but still lethal military equipment. Since that time, a number of new factors, along with the continuation of trends observed at that time, have altered the larger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These factors include the death of Kim Il-song, the end of the Cold War, increased international isolation, economic decline, and the Agreed Framework with the United States.

The most significant event since the 1991 publication was the death of President Kim Il-song on 8 July 1994. While Kim Chong-il has not officially assumed the positions held by his father - President of North Korea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Workers' Party - he in fact remains the supreme leader and ultimate decisionmaker in North Korea.

The October 1994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oncerning the North's nuclear program focused on the looming nuclear threat; however, Pyongyang still possesses a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continues to pursue an ambitious ballistic missile program. Questions remain abou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specially its past ability to acquire nuclear weapon capabilities. The more immediate threat to the region, however, remains its large conventional forces.

North Korea devotes a substantial amount of national resources to its formidable armed forces, while the underdeveloped and now deteriorating civilian sector bears the burden of this national emphasis on military strength. Internal hardship has not discouraged North Korean leaders from fielding and maintaining one of the 5 largest armies in the world, with approximately 1 million ground soldiers supported by an air force of approximately 840 jet combat aircraft and a navy of approximately 675 naval vessels. This publication will address the North Korean military in the altered context represented by the trends and developments noted above. The material presented is intended to update that contained in the 1991 publication, substantial portions of which remain valid.

## **Chapter 1**

### **A Post-Kim-II-song North Korea**

#### **National Policy Goals**

President Kim Il-song's sudden death in July 1994 placed responsibility for continued political stabi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hands of his son, Kim Chong-il. As successor, Kim Chong-il's immediate challenge has been to resolve critical national policy issues, including balancing the need for economic improvements against the demand of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and national security.

#### ***Regime Survival/Security***

North Korea's immediate policy relies on protecting its "own form of socialism" from foreign influence or eventual political collapse. Current leaders seem unwilling to undertake the extent of reform required to effectively address the mounting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r to open North Korea to the outside world.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has launched an extensive campaign of political indoctrination in the past several years. At the center of this campaign is the attempt to tighten political and social controls over antisocialist behavior.

#### ***Leadership Succession***

Kim Chong-il was formally designated his father's successor at the Sixth Party Congress of the KWP in October 1980. Since then, he has participated in all aspects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 mentoring and direct support of President Kim Il-song until the latter's death. Kim Chong-il was appointed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KPA) in 1991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1993. Kim Chong-il probably will avoid controversial decisions that might contradict Kim Il-song's traditional policies until he has secured his political power base.

####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s economy has been hobbled by the country's heavy defense

burden, low productivity, lack of managerial expertise, and inability to pay its international debts. Economic performance turned downward in 1989 and continues in recession because of the dramatic reduction in support from China,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ocialist-bloc countries in Eastern Europe. Severe shortages of crude oil, food, raw materials, and electric power continue to impair industrial productivity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opulation.

## **National Structure**

### ***Government Organization***

The government system has not changed - being composed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an elected President. Kim Chong-il, in his capacity as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PA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cts as "supreme leader" of the country, controlling the party, government, and armed forces. Kim Chong-il has not yet assumed the two most important positions - President of North Korea and Secretary General of the KWP.

### ***Party Organization***

The highly centralized KWP continues to make policy, and the government executes and administers those policies. As implied in the Constitution, the KWP and the state are inseparable, but the party is superior to the state. Party officials hold all important positions in the government, the economy, and the military. The Party Congress nominally is the highest deliberative organization. It is slated to convene about every 5 years. However, only six Party Congresses have been held in the past 50 years, and none in the past 15 years.

### ***Military Organization***

At the core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structure is the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headquarters, which i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military. Since 1991, the KPA leadership has undergone significant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hanges. A number of key figures have died from old age, and hundreds of general officers were promoted after Kim Chong-il's appointment as Supreme Commander.

Kim Chong-il's appointment as Supreme Commander in December 1991 may have been the catalyst for change in the KPA, but the pace has increased since

the death of President Kim Il-song. There are indications that a generational shift within the military leadership is under way. From December 1991 through the end of May 1995, promotions and assignments of nearly 800 general officers (many only in their 50s) were noted in a general officer corps of approximately 1,200. On 20 April 1992, Kim became a marshal, and 3 days later, eight generals were promoted to the rank of vice marshal. A year later, Kim Chong-il becam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e deaths of President Kim Il-song (Chairman, KWP Military Affairs Committee) in 1994 and O Chin-u (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 Vice-Chairm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1995 created vacancies at the senior levels that were not immediately filled. In late 1995, Choe Kwang was promoted to marshal, with Yi Ul-sol, and named as O Chin-u's replacement.

The armed forces maintain a single command system.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directly commands and controls ground force, navy, and air commands. As Supreme Command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Kim Chong-il retains overall command of the military system.

## **President Kim Il-song's Foreign Policy Legacy**

North Korea's self-imposed isolation has been deepened by South Korea's successful Nordpolitik, which achieved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30 September 1990) and China (24 August 1992), two of the North's closest allies. Pyongyang sees improving relations with Washington and moving the United States to a more equidistant posi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a key to broader diplomatic and economic openings to Japan and elsewhere. The North's handling of its nuclear program had been the most serious stumbling block to its efforts. The immediate effect of the Agreed Framework was to markedly ease tens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yongyang.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have eroded since 1991. Shared revolutionary wartime experiences and geopolitical desires form the basis of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Beijing. Pyongyang still receives a limited amount of military equipment and support from China, but most Chinese military support is symbolic.

Despite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in 1991, North Korea has maintained

official ties with Russia, but at a much reduced level. North Korea still buys a limited amount of weaponry from Moscow.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exists in name only; Russia has indicated a desire to change it. Moscow has offered a draft of a new treaty, but Pyongyang apparently has not officially responded.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Russia was already strained when Russia reaffirmed diplomatic relations and economic ties with South Korea in 1992.

## **Chapter 2**

### **Increasing Internal Pressures**

#### **Economy**

North Korea's socialized command economy remains basically unchanged in structure and emphasis. Agriculture is still labor intensive, and heavy industry, including arms production, is emphasized at the expense of consumer goods. Never a very prosperous country, North Korea's shortages of fuels and electric power have increased between 1991 and 1995, especially in the civil sector. A negative spiral of shortages has led to idle factories, fewer exportable items, and less hard currency to buy food, fuels, and other critical items. North Korea's petroleum deliveries subsequently have declined by over 50 percent from the peak consumption years of the late 1980s. During 1995, North Korean factories reportedly operated at less than 50 percent of capacity. The 1994 estimated gross national product was between \$20 billion and \$21 billion, amounting to a relatively high per capital income of \$925.

#### **Foreign Trade**

Foreign trade plays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s economy despite Pyongyang's avowed philosophy of staunch self-reliance. North Korea relies heavily on imports for several critical needs, such as crude oil, coking coal, and food. Pyongyang is placing a higher priority on earning foreign currency to purchase needed imports. North Korea's principal exports remain military weapons, minerals, chemicals, and metallurgical products. Pyongyang realizes that it must tap world markets to satisfy critical economic needs. However, this will entail revamping North Korea's industries and giving greater attention to quality of goods, financial responsibilities, and product warranties so that exports can attract



foreign exchange. North Korean leaders appear to fear that substantial foreign assistance, while alleviating some economic ills, could undermine the government. Hence, the new Najin-Sonbong Free Trade area is constructed as a high-security area.

Until 1990, half of North Korea's trade had been conducted with the Soviet Union, China, and Eastern Europe. With the breakup of the communist world and the new emphasis on market economics, Pyongyang's foreign trade in 1994 plummeted to its lowest level since 1978. Exports to China, Pyongyang's main trading partner, fell along with North Korean imports of Chinese goods. Exports to Japan, on the other hand, increased 20 percent while imports fell 18 percent. Inter-Korean trade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1988 despite frigid political relations. Indirect trade accounts for over 95 percent of the volume and is difficult to quantify.

## **Chapter 3**

### **Strategic Issues**

#### **Proliferation/Nuclear Weapon Program**

North Korea significantly advanced its nuclear, chemical,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uring the past 10 years. North Korea maintains its chemical warfare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Despite its isolation, North Korea uses several methods to acquire technology related to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NBC) warfare and missiles.

During the 1980s and early 1990s, North Korea developed a complete nuclear fuel cycle that included a plutonium production capability at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enter. This center, about 90 kilometers north of Pyongyang, comprises facilities to fabricate nuclear fuel, a 5-MW research reactor to produce plutonium, and a reprocessing facility that could extract weapons-grade plutonium from irradiated fuel. Operations of the reprocessing facility, fuel fabrication facility and 5-MW reactor at Yongbyon have been frozen under the Framework (AF).

In addition, North Korea was building a 50-MW reactor at Yongbyon and a 200-MW electric power reactor at Taechon. Construction at these reactors has been halted as part of the Agreed Framework (AF), under which all of these facilities eventually will be dismantled. Under strict terms of the Agreed Framework (AF), North Korea must eventually make its nuclear program completely transparent. In effect, Pyongyang has also obligated itself

beyond its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quirements by agreeing to eliminate, eventually, all its existing or planned graphite-moderated reactor and related facilities.

## **Ballistic Missiles**

Since the late 1980s, North Korea has pursued an aggressive ballistic missile program, including sales to customers in the Middle East.

In July 1987, North Korea delivered the first (300-km) SCUD Bs to Iran. North Korea also helped establish a SCUD missile assembly/production site in Iran. In late 1990, Iran agreed to buy North Korean (500-km) SCUD Cs as well. Pyongyang could also sell the No Dong missile to both Iran and Libya, but production of this medium-range missile is still stalled.

## **Chemical Weapons**

North Korea continues to have a chemical warfare program. Today, it can produce nerve, blister, and blood chemical warfare agents, and it maintains a number of facilities involved in producing or storing chemical precursors, agents, and weapons. In any attack on the South, Pyongyang could use chemical weapons to attack forces deployed near the DMZ, suppress allied airpower, and isolate the peninsula from strategic reinforcemen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conduct regular NBC defensive training exercises in preparation for operations in a chemical environment. North Korea has chemical defense units at all levels of its force structure. These units are equipped with decontamination and detection equipment.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have access to individual protective masks and protective suits.

Since 1990, Pyongyang has placed high priority on military and civilian chemical defense readiness. It has mandated operational training in chemical environments as an integral part of armed forces training and is trying to equip all military forces, including reserves, with full protective gear. In addition, the leadership has required broad segments of the population to engage periodically in simulated chemical warfare drills. Pyongyang has emphasized building and installing collective protection equipment at military production and civilian alternate wartime relocation sites, directing that the entire population be issued protective masks.

## **Biological Weapons**

North Korea continues to have the scientists and facilities for producing biological products and microorganisms. The North has the ability to produce traditional infectious biological warfare agents or toxins and biological weapons.

## **Technology Transfer and Acquisition**

Apart from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research programs, North Korea is not known to be engaged in significant research efforts in advanced technology programs with military applications. North Korea is concentrating on acquiring technology from foreign suppliers and is especially interested in obtaining nuclear-related equipment and advanced missile, chemical warfare, and biological warfare technologies.

Dual-use items, such as spectrum analyzers, computers, oscilloscopes, machine tool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fiber optics, are being imported. These items purportedly are imported for consumer applications, but many probably are employed in military programs, including those involv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Chapter 4**

### **Military Forces**

North Korea's military force structure and doctrine reflect aspects of both Soviet operational art and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light infantry doctrine. However, the primary influences have always been Pyongyang's operational experience in the Korean war, the peninsular environment, and North Korea's military culture and martial philosophy.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is primarily concerned with an offensive against South Korea and defense against a counterattack. Pyongyang has created the most militarized peacetime society in the world today, diverting tremendous investment resources away from productive sectors of the economy. The North Korean Army remains largely an infantry army adapted to peninsular conditions and employs infantry tactics developed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n Army tactical doctrine has always emphasized surprise, firepower, mobility, and strong armor and artillery components to meet these needs.

### **Ground Forces**

With roughly 923,000 active-duty troops, the ground forces are by far the largest and most formidable of North Korea's military forces. The size, organization, and combat capabilities of the Army provide Pyongyang with both an offensive military option and the ability to protect its homeland.

### ***Organization and Disposition***

The ground forces have eight conventional infantry corps, four mechanized corps, an armored corps, an artillery corps, and the Pyongyang Defense Command's Capital Defense Corps dedicated to wartime operations. The geographic dispersal of ground forces reflects the varied terrain of the nation and the consideration given to both defensive and offensive operations. The most capable ground forces are near the DMZ, where they defend the border or could be rapidly committed to a cross-border assault. Behind this zone, a layered disposition of mechanized exploitation forces provides for a speedy offensive or active defense of Pyongyang as needed. Korean reserve forces are positioned to defend against a sea invasion along either coast and can quickly assume territorial defense roles to allow for forward commitment of active-duty forces.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ground forces has been the continued deployment of long-range artillery systems (240-mm multiple rocket launchers and 170-mm self-propelled guns) near the DMZ. Although these deployments are not yet complete, the North is continuing production of these long-range systems. The increasing number of long-range artillery systems gives North Korea the ability to provide devastating indirect firepower in support of ground force operations. Pyongyang has deployed over 10,000 artillery systems, an increase of almost 10 percent over the past 15 years, in addition to over 2,300 multiple rocket launchers. Most of the artillery is self-propelled and can support a rapidly moving operation.

### ***Weapons and Equipment***

North Korea has some 4,000 medium and light tanks and assault guns, including over 2,000 T-54/55 main battle tanks of Soviet 1950s-era design. In addition, North Korea has indigenously produced about 700 T-62 tanks - a more capable version of the T-55 that was the Soviet Union's main battle tank in the 1960s. Light tanks are also fielded in large numbers and include variants of the former Soviet PT-76 and Chinese Type 62/63. An additional tank (T-34) and assault guns (ASU-85/100) reside with the reserve infantry divisions.

Although most of the Army is light infantry, it contains about 2,300 armored personnel carriers. North Korea has made a dedicated effort to expand motorized transportation available to its infantry forces. This provides Pyongyang with a flexible, mobile exploitation force that would be called on to exploit breakthroughs in defensive lines during wartime.

## **Navy**

The 46,000-member North Korean Navy is primarily a coastal defense force. Most naval vessels are small, patrol-sized craft unable to operate over 50 nautical miles from the coast but capable of policing North Korea's territorial waters. The Navy's numerous amphibious craft and midget submarines also can clandestinely insert special operations forces into South Korea.

### ***Organization and Disposition***

The Navy is organized into 13 naval commands under separate East and West Coast Fleets directly subordinate to the Supreme Navy Command. The two fleets do not share vessels. The East Coast Fleet is headquartered at Toejo Dong, with major bases at Najin and Wonsan. The West Coast Fleet is headquartered at Nampo, with major bases at Pipa Got and Sagon Ni. Numerous smaller bases line both coasts.

## **Air Force**

The North Korean Air Force has four primary missions: air defense, transport of special operations forces, strategic bombing, and air support to ground forces.

### ***Organization and Disposition***

Approximately 840 jet aircraft, 300 transport aircraft, 300 helicopters, and 85,000 people form the Air Force's fighter, bomber, helicopter, and transport regiments. Most aircraft traditionally have been deployed in the central and northern regions of the country. The regiments are well organized for command and control of forces in wartime.

Numerous operational, alternate, and secondary airfields throughout North Korea provide more than adequate runways for the large Air Force. Hardened shelters at operational airfields provide increased protection for

aircraft. Unoccupied airfields in southern regions near the DMZ can support flight operations during war, extending the range of fighter aircraft well into the South.

### ***Weapons and Equipment***

About two-thirds of the Air Force's 1,100 combat aircraft are older generation Soviet- or Chinese-made designs incorporating 1950s and 1960s technology.

Older fighter aircraft include 160 MiG-21/FISHBEDs, 20 Su-7/FITTERs, 160 MiG-19/FARMERs, 120 MiG-17/FRESCOs, and 190 MiG-15/FAGOTs. Most of these aircraft are daylight, clear-weather-capable only, and carry limited weapon loads. Three regiments totaling 80 medium-range Il-28/BEAGLEs are the only bombers in the Air Force inventory.

The Air Force received a limited number of newer, all-weather, air defense and ground-attack aircraft from the Soviet Union in the 1980s. In 1985, North Korea acquired 45 MiG-23/FLOGGERS, with increased range and payload over other older, less capable North Korean fighters. This aircraft can carry the older AA-2/ATOLL and the more sophisticated AA-7/APEX air-to-air missiles in an air intercept role. It can also be armed with general purpose bombs and rockets for ground-attack missions.

In 1985, North Korea also acquired 15 Soviet MiG-29/FULCRUM fighters. The MiG-29 carries the AA-10/ALAMO beyond-visual-range air-to-air missile. These FULCRUMs provide Pyongyang with a limited but much improved air defense capability.

In the late 1980s, the Air Force improved its ground-attack capabilities when it acquired 35 Su-25/ FROGFOOT aircraft from the Soviet Union. All-weather capable and well armored, the FROGFOOT has a combat radius of 300 nautical miles and carries up to 5,000 kilograms of bombs and rockets. However, North Korea has yet to show it has mastered the full potential of this highly capable fighter bomber.

The bulk of North Korea's transport inventory consists of nearly 300 1948-vintage An-2/COLTs. This single-engine biplane can cruise at 160 kilometers per hour. Capable of carrying up to 10 combat troops while flying at low altitude and slow speeds to avoid radar detection, the An-2 is uniquely suited for delivering special operations forces behind enemy lines.

## **Air Defense**

North Korea has historically put a high emphasis on air defense, placing military industries, aircraft hangars, repair facilities, ammunition, fuel, and even air defense missiles underground or in hardened shelters. Pyongyang's interpretation of the lessons of DESERT STORM reinforces this strategy.

Ground-based assets bear primary responsibility for homeland air defense. The North deploys roughly 11,000 antiaircraft artillery guns and has over 50 surface-to-air missile (SAM) sites to provide one of the world's most dense air defense networks. Most of these sites are equipped with SA-2/GUIDELINE medium-range missile launchers, but North Korea also has some SA-3/GOA short-range and SA-5/GAMMON long-range SAMs.

In addition, North Korean ground force units are equipped with over 15,000 SA-7/GRAIL and SA-16/GIMLET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Deployed in massive numbers, these shoulder-fired systems present a major threat to opposing tactical aircraft.

North Korea has also recently emphasized selected technological improvements in developing and testing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drones. These vehicles may be equipped with cameras for surveillance or target acquisition or launched as decoys to fool enemy radars.

## **Ballistic Missile Forces**

Despite economic problems, since the early 1980s North Korea has spent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in an aggressive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 Pyongyang has progressed from producing short-range SCUD missiles to the developmental testing of a medium-range missile, the No Dong, to early-stage development of longer range two-stage missiles, the Taepo Dong I (TD 1) and Taepo Dong II (TD 2).

North Korea has a brigade-sized SCUD B/C surface-to-surface missile (SSM) unit about 50 kilometers north of the DMZ. Several SCUD B/C facilities have also been noted in development near the DMZ. These facilities would provide North Korea with additional hardened sites that could double or triple the numbers of SSM launchers and support equipment in the forward area.

North Korea produces an indigenous variant of the former Soviet Union's SCUD B, known as the SCUD C. The C model has a 700-kg warhead with an

improved range of 500 kilometers over the B model's 300 kilometers. It also has an improved inertial guidance system for better accuracy. The North Koreans can produce four to eight SCUDs a month for their own armed forces or for export. For nearly a decade, North Korea has deployed SCUD-type, mobile SSMs capable of reaching all of South Korea. The country continues to emphasize its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 which eventually could provide Pyongyang with a system capable of threatening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No Dong is a medium-range missile based on SCUD technology. It has a range of about 1,000 kilometers with a 1,000-kg warhead. The No Dong was originally designed for export, but it still has not been produced in numbers suitable either for export or for operational deployment in North Korea.

North Korea's two long-range ballistic missile systems under development are the Taepo Dong I and Taepo Dong II. Both are two-stage systems. The estimated range for the TD 1 is more than 1,500 kilometers, while that of the TD 2 is more than 4,000 kilometers. At present, both systems are in the design stage. Before they reach flyable prototype form, Pyongyang must surmount difficulties in developing multistaging and engine clustering. North Korea has no experience with these significant technologies.

## **Special Operations Forces**

North Korea maintains a large, highly trained special operations force with 100,000 troops assigned to 24 brigades and 28 reconnaissance battalions. These forces have four basic missions: establishing a second front in the enemy's rear area, conducting reconnaissance, performing combat operations in concert with conventional operations, and countering the South's special operations in North Korean rear areas. Like all other North Korean troops, special operations forces can be tasked with maintaining internal security if the need arises.

North Korea classifies its special operations forces as reconnaissance, light infantry, or sniper. Team-sized elements conduct reconnaissance to collect intelligence or targeting information. Light infantry forces in company- or battalion-sized units attack military, political, or economic targets. Sniper operation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light infantry, but on a smaller scale, employing team-sized units.

The North Korean Air Force supports special operations missions with



airborne infiltration and resupply using its An-2/COLTs. Almost one-fifth of the Navy's assets also support special operations with hovercraft and minisubmarines.

## **Reserve Forces**

Lessons of the Korean war shape the North's military planning to a large degree, and Pyongyang determined that an inadequate reserve force for homeland defense was a critical deficiency during the Korean war. Therefore, North Korea's current Army reserve force totals nearly 700,000. In addition, the Red Guard Militia, composed of mobilization units with the primary mission of ensuring production at facilities and defending them from attack, numbers over 3 million. This large manpower pool can mobilize in a short time, and mobilization is exercised in all aspects - from resource callups to evacuations of key industrial resources to alternate sites.

All Army reserve and Red Guard Militia personnel receive annual training. North Koreans usually serve in the Red Youth Guards (15 to 17) until their conscription into the Army (18 to 25). Upon discharge, a former soldier is employed at a North Korean factory, enterprise, or collective farm. He will also serve in the reserve unit headquartered at his job location until the age of 40. At that time, most are reassigned to the Red Guard Militia. The quality of military training and the soldiers' endurance, military discipline, and party dedication support the government's conviction that the country is indeed a military fortress.

## **Security Forces**

The security force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State Security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country, its leaders, important visitors, borders, facilities, and operations. The forces number about 200,000 people, of which a fraction have a military mission.

## **Wartime Employment**

The wartime offensive strategy of North Korean forces is to move southward as quickly as possible to gain control of strategic areas and prevent reinforcement of the peninsula by allied forces. The significance of the

allied logistic buildup during the Gulf War was not lost on North Korean operational planners. For this reason, North Korea continues to concentrate troops, tanks, self-propelled artillery, and logistics near the DMZ.

At the onset of hostilities, ground artillery units would launch massive preparatory fire at defensive lines along major routes of advance in South Korea. North Korean infantry and armored elements of the forward divisions would attempt to penetrate allied forward defenses to provide areas for the exploitation forces to maneuver through. The exploitation forces are responsible for penetrating deep into South Korea, bypassing and isolating allied units to maintain their operational tempo.

The North Korean Navy's primary wartime roles include inserting special operations forces, inhibiting US reinforcement of the peninsula, and defending North Korea's coasts from attacking amphibious forces. The Navy would use its expanding inventory of hovercraft and its fleet of minisubmarines to insert special operations forces into South Korea prior to hostilities.

The North Korean Air Force would launch time-sequenced attacks against fixed or preplanned targets in conjunction with artillery, SSMs, and special operations forces. Since North Korea recognizes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quickly gain air superiority, it would concentrate much of its initial effort at degrading air force assets in the South.

Special operations forces perform at the strategic, operational, and tactical levels to establish a second front in the enemy's rear during wartime. Current force structure and deployment of North Korean special operations forces support an easy transition to war; sniper, light infantry, and reconnaissance units are fully integrated into all operational North Korean Army corps. Consequently, a shift to wartime operations would be difficult to detect before hostilities began.

## **Weapon Production**

President Kim Il-song left a legacy based on *chuche* ideology, which promoted a self-sufficient, closed society. Military forces that can operate for an extended period without outside support reflect this ideology. Increasingly,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Pyongyang's ability to indefinitely make military improvements. Similarly, its efforts to stockpile sufficient ammunition, food, and oil in hardened

underground facilities to sustain combat for several months without outside aid entail major costs to an economy that is buffeted by growing pressures.

The North remains capable of producing some higher quality weaponry and military equipment for use by its own forces and for export to other countries. Several hundred factories produce military materiel, so North Korea can manufacture most of the basic weapons and equipment it requires. A continuing priority for Pyongyang in recent years has been increased production of ammunition for the offensive weapons it has produced.

The North has either hardened many of its production facilities or put them underground, so significant production output could continue during conflict. Indigenous production of weapons and parts, stemming from President Kim Il-song's *chuche* doctrine, makes North Korea much less dependent on foreign support in case of conflict.

North Korea indigenously produces a number of weapon systems for each of the armed services. They continue to produce a variety of artillery systems, self-propelled guns ranging from 122-mm to 170-mm, and multiple rocket launchers ranging from 107-mm to 240-mm. The North has also indigenously produced armored personnel carriers, antitank guns, mortars, handheld rocket-propelled grenade launchers, and AT-1/SNAPPER and AT-3/SAGGER wire-guided antitank missiles.

The SANGO submarine and hovercraft continue to be priority projects for the Navy.

The North possesses a small-scale aircraft production and assembly capability limited to tactical transports and helicopters.

##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North Korea currently is modernizing its age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speed and quality and expand the capacity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A fiber-optic cable linking Pyongyang and Hamhung was complete by early 1995, with construction from Pyongyang to Kangwon, North Hamgyong, and South Pyongan Provinces almost complete by midyear. In 1995, North Korea acquired digital Chinese switching equipment for Chongjin, Najin, and Hamhung. Large quantities of new and used telephones from a number of countries increased the number of telephones to 3.7 per 100 persons by

1993.

The current emphasis in the modernization program is on upgrading communications supporting the Najin-Sonbong Free Trade Zone in northeast North Korea. A large communications center at Najin will be the focal point; it will be equipped with digital switching and other modern equipment and will offer modern communication services to businesses operating in the zone. Vastly improved communications between the Free Trade Zone and other countries will include fiber-optic cable and a digital microwave relay link between Pyongyang, Najin, and Vladivostok, with a shorter link between Najin and Hunchun, China. Additional plans for the Free Trade Zone include construction of a satellite earth station, as well as communication center branches, in the zone.

North Korea's military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s system consists of extensive hardened wartime command facilities, supported by redundant communication systems, which are believed to be largely separate from systems supporting other sectors. A modernize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ill greatly increase the regime's ability to perform both peacetime and wartime management tasks, and as in any country, could provide critical backup for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s if necessary.

## **Transportation**

North Korea has taken major steps to upgrade its transportation system in support of its industrial and military needs. Infrastructure improvements are ongoing, with rail and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progressing rapidly during the past few years. Despite concentrated improvements throughout the transportation network, it has not kept pace with the growth of the industrial base; the network is barely adequate to support increased demands for transporting raw materials and finished products. Conversely, the transportation system can support initial combat operations during wartime. However, the infrastructure would experience numerous difficulties supporting sustained operations. Rugged terrain, limited east-west routes; numerous bridges, tunnels, and other chokepoints; and inferior road surface types would be factors during sustained operations.

Rail and road networks continue to follow a general north-south axis with limited east-west routes, especially in northern areas. Rugged mountainous terrain restricts or channels supply movement to a few routes. Rails carry 90 percent of North Korea's freight and also would be the principal means of moving military equipment and supplies from northern sectors to combat

forces in the staging areas. The 5,000-km network is mostly single track. As a part of a network upgrade, North Korea is constructing several rail lines and electrifying additional routes. The network is 70-percent electrified, which has resulted in increased capacity and faster service. A major logistic goal is to electrify all primary rail lines. However, equipment shortages and reprioritization of assets create transport inefficiencies. North Korea has tried to circumvent this through tighter controls and improved management of equipment.

Insufficient roads, poor surfaces, and inadequate maintenance hinder the 30,000-km highway system. Although only 15 percent of the highways are paved, North Korea is reducing its dependency on rails. Three major multilane expressways and other highway construction are among the completed projects. The expressways connect Pyongyang with key military and industrial areas of the country and include a 200-km highway between Pyongyang and Wonsan, a 43-km highway between Pyongyang and the port city of Nampo, and a 100-km highway connecting Pyongyang with Panmunjom. A fourth expressway between Pyongyang and Huichon is nearly complete and will serve key military and POL facilities in the central sectors of the country. Highways are used primarily for short-haul operations; however, during wartime, they would become a strategic asset in the forward area and would supplement rails in the rear areas. Fuel constraints and the lack of private automobiles limit civilian use of highways.

North Korean economic plans include upgrading and expanding several primary maritime ports and opening some to noncommunist shipping. Development of the N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is another upgrade that will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e zone is in the northeast, on the borders with Russia and China. It includes the ice-free ports of Sonbong, Najin, and Chongjin, which are scheduled for modernization.

North Korea's 32 ports are not considered critical to short-term military operations. They are used primarily to supplement the inland system and to support domestic production and the fishing industry. The major ports of Chongjin, Najin, Hamhung, Wonsan, and Nampo serve large commercial areas and are near military installations or militarily significant facilities.

Should the lines of communication become saturated in wartime, unimpaired ports would be viable for resupply operations.

Civil aviation in North Korea is limited. Regularly scheduled international connections are restricted to flights from Sunan International Airport, north of Pyongyang, to Russia and China. An agreement to begin service with Japan was signed in 1990, establishing irregular flights between Sunan and Tokyo. Domestic flights are limited to a few routes from Sunan to Chongjin,

Hamhung, and Wonsan. Although personnel and equipment assigned to civilian flights do not have a direct military function, they could offer limited support during wartime.

North Korea has 24 permanent-surfaced, jet-capable airfields; 27 transport/utility airfields; and at least 16 highway landing strips. The landing strips generally are near military airbases. Improvements, including completion of new forward dispersal airfields and expansion of taxiways and parking aprons, have increased the North's capacity to sustain combat operations.

## **Logistics**

During the Korean war, lack of adequate logistics hampered North Korea's military forces and kept them from completely controlling the peninsula. After the war, sustainability of its military forces became a primary requirement of the North's military doctrine. Pyongyang continues to implement military doctrine that calls for maintaining war reserves for all classes of supply for 6 months of sustainability for regular forces and 3 months for reserve units and paramilitary forces. A major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ive forces and the deployment of many new types of weapons in the past 15 years complicate this doctrine. However, North Korea's massive war reserve stockpiles continue to expand despite tremendous cost to its economic structure and hardship to its people. The overall military sustainability required to support its extensive firepower continues to increase.

North Korea is expanding its ammunition, POL, and equipment storage capacities by building additional hardened and underground facilities and enlarging existing facilities. Major national-level storage installations have been built, and construction of unit-level storage depots continues - especially near the DMZ. Current ammunition stockpiles are estimated at over 1 million tons. A million tons of military POL exist, despite the severe shortage of fuel supplies for the civil economy. This amount would be sufficient to run Pyongyang's economy for a substantial part of a year. Substantial food and combat ration war reserves exist, despite major malnourishment in the North.

North Korea has over 200,000 vehicles, 1,000 locomotives, and over 20,000 railcars that are mostly nonmilitary but would be mobilized to support a conflict. Much of this normally nonmilitary transport is tied to reserve force units that would provide a substantial part of the logistic support

required by military forces and would move personnel, ammunition, and supplies into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 conflict. Truck transportation units would provide a full range of support. Rail assets would provide heavy-lift capacity to move armor, self-propelled artillery, and resupply from national depots. Merchant and fishery vessels would support naval forces and ground troops along the peninsula's coastal waters, and the civil air transport fleet would be mobilized to carry troops and high-value cargo and possibly for aerial delivery of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agents.

## **Glossary of Acronyms**

---

DMZ	-	Demilitarized Zone
KPA	-	North Korean People's Army
KWP	-	Korean Workers' Party
MW	-	Megawatt
NBC	-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SAM	-	Surface-to-Air Missile
SSM	-	Surface-to-Surface Missile
POL	-	Petroleum, Oil, and Lubricants

---





##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1996. 6.

이 자료는 최근 미국 캔사스 소재 육군 참모대학  
에 재직중인 데이비드 맥스웰 소령이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북한의 붕괴와 미국”이라는 논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A Monograph by  
Major David S. Maxwell  
United States Special Forces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Fort Leavenworth, Kansas – Second Term AY 95-96

---

Approved for public release; distribution is unlimited. The opinions contained herein are solely the author's and do represent the views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n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 **Table of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Collapse Scenarios, and ROK Reunification Policy
- III.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Issues
- IV. Military Operations Following North Korean Collapse

Endnotes

Bibliography

---

## **ABSTRACT**

This monograph examines the question of what will happen on the Korean peninsula if North Korea collapses without a fight. In 199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ppears to be on the verge of disintegration due in large part to Kim Il Sung's philosophy of juche or self-reliance (which is nothing more tha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solation of North Korea), the disastrous flooding of 1995 resulting in widespread famine, and disproportionate military spending at the expen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The collapse of the DPRK will mark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require that the "victors" conduct post-conflict operations for which they are responsible.

Four possible scenarios for collapse are advanced; two soft landing and two hard landing. The soft landing scenarios result in gradual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s three phase reunification plan. The "hard landing" scenarios cause tremendous suffering, increased instability, and require interven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 peninsula and prevent spill-over both to the north and south as well as massive migration of the north's popul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at the US should do as well as what it can do, the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concerns of China, Russia, Japan, the ROK, and the US are analyzed. The common theme among all is the desire to benefit economically from a stable peninsula and the Tumen River region could become the economic center of gravity for Northeast Asia and become the carrot that could attract cooperation among all the powers of the region and the US.

Finally, the monograph concludes by presenting the four mission essential tasks which must be accomplished following DPRK collapse: (1) establishment of security and stability; (2)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3) security of nuclear research, production, storage, and delivery facilities; (4) disarming, demobilizing, and resettling the DPRK military. In order to accomplish those tasks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recognize its responsibilities for conducting post-conflict operations to restore order in the north, establish a mandate for such operations, and build a coali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powers and the US to conduct combined operations under the command of the current UN Command.

---

## I. Introduction

If you concentrate exclusively on victory, while no thought for the after effect, you may be too exhausted to profit by peace, while it is almost certain that the peace will be a bad one, containing the germs of another war. -- B.H. Liddel-Hart

The United States (US) has always been well-focused on attaining victory in

war and, as shown in post-World War II Europe and Japan, it has even conducted successful post-conflict operations which did not lead to Liddel-Hart's "germs of another war." The question that must now be asked is: Can the US conduct successful "post-conflict" operations in a country like Korea if a "second" war does not take place? Will the US be "exhausted" by its long-awaited "victory" if North Korea collapses without a fight and thus leave the germs of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Never before has the US been involved in a war in which post-conflict activities have not been undertaken until some forty to fifty years after an armistice was signed. Is it prepared to do so now?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tates that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remain the principal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Asian region," and, as a result, planning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from attack by the North is the primary foc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Combined Forces Command (CFC), Republic of Korea (ROK),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military commands. It is prudent to prepare for the most dangerous and perhaps, in this case, even the most likely course of action; however, it can also be argued that it is prudent to examine other potential courses of action and at least prepare concept plans that can be finalized if and when indicators show that such other courses may come to fruition.

For the past forty three years the UNC, consisting primarily of ROK and US forces, has prepared for the defense of South Korea from attack from the north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ile both sides continue to prepare for a second Korean War, in reality, the first one has not concluded. However, given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recent internal problems in the DPRK, the question must be asked: Are other scenarios possible, such as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and if so, what is the impact on the UNC, ROK, and US military forces as well as other regional actors if such a collapse occurs? Or to put it another way: Can the Korean War come to an end without a second round of direct military combat action by either side?

The purpose of this monograph is to examine an alternative to such an attack, deduce the long-term and near-term strategic interests of the major powers, and determine a possible course of action for UNC, ROK, and US forces should the DPRK collapse without a fight. The reason that this must be addressed is perhaps best summed up by Nicholas Eberstadt in his recent work on Korean reunification. He states that the west does not understand northeast Asia well at all and he asserts that "for more than four decades, events in Korea have consistently taken Washington by surprise. Indeed,

nearly all of the great and terrible events that have defined the Korean drama since the peninsula's partition have caught American policy-makers unprepared."

Thus, while the UNC, ROK, and US forces are well-prepared to defeat an attack from the north, by Eberstadt's indictment of US policy, it is imperative that the military, as well as the policy makers, not be surprised by a North Korean catastrophic collapse. The best way for the UN, ROK, and US policy makers to be prepared is for the military to have multiple options available should scenarios other than the most dangerous occur.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four sections and uses a modified "backward planning" structure and an adaptation of the strategic estimate process from Joint Publication 3-0, Doctrine for Joint Operations as it works backward from the long-term regional interests to near-term actions following the North's catastrophic collapse as well as looking at the broader issues first and then concluding by focusing on the more narrow military actions.

The first section introduces the potential problem of North Korean collapse and frames the overall monograph by examining the primary and secondary research questions and outlining their significance. The second section examines the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and scenarios for collapse and summarizes the ROK's reunification policy. In the third, the long term interests of the major regional powers and the US following Korean reunification are addressed as well as the near term interest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DPRK. Finally, identification of a feasible, acceptable, and suitable course of action for the UNC, ROK, and US military forces will be addressed in the fourth section..

The fundamental hypothesis for this monograph is that the US military does have a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The role is both long-term and near-term; with the long-term role having primacy. However, such a role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near-term actions that the US takes following collapse. Furthermore, it is likely that any US actions taken must be in conjunction with a coalition most likely working through the UN. To determine the near-term requiremen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future security interests and concerns of not only the US but also the regional powers, and to develop a vision of the end state desired by the US as well as the other actors. Once this end state is determined it will be possible to backward plan to identify the near term requirements for the UNC, ROK, and US militaries.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is near collapse. Recent statements by key officials show that US and ROK national leadership are becoming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is possibility, although the focus remains on the possibility that such disintegration may lead to a desperation attack. In a recent article in Jane's Defense Weekly, the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Lieutenant General Kenneth Minihan said, "North Korea is collapsing economically. North Korea is implosion and explosion going on at the same time." His premise is that the situation is so complex that a new analytical process is required to determine when the North will attack. However, this condition of simultaneous implosion and explosion may also lead to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resulting not in conventional or nuclear attack but in a non-conventional conflict.

Additionally, the current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CINCUNC) General Gary E. Luck believes that the question is not if North Korea disintegrates but when it disintegrates: will it be by implosion leading to catastrophic collapse or explosion leading to a desperation attack? Furthermore, a recent report from the Korean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Reunification (ADCDP) states that North Korea is facing greater internal instability than ever and that its imminent collapse may not result in an attack of the ROK because the regime is unlikely to receive the military and economic aid necessary from Russia or China. If such a collapse occurs, the question to be answered is: What action should the US military take and what action can it take given the political and military realities of the region? This, then, i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monograph: to examine a potential scenario that does not appear to be often discussed in either the media or academic writing (at least until very recently), attempt to determine possible issues resulting from such a scenario, and recommend a possible response for the US and ROK military forces and the UNC as well.

### ***Primary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US military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if North Korea collapses without a fight?

This is the key question to be answered. Should the US simply withdraw when the DPRK collapses or should it have a primary or supporting role in the events that follow? It is likely that given the current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in both the US and the ROK, there will be a significant public outcry for the US to remove its forces from the peninsula. On the other hand, as this monograph will show, there are security issues that may cause

the US to decide to maintain a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in the future. However, to do so may require the US military to be engaged in operations, either bilaterally with the ROK military or under the flag of the UNC, in North Korea immediately following its collapse. Any delay in implementation of a post-collapse plan could result in the US forfeiting its future ability to directly influence events on the peninsula.

### ***Secondary Questions***

1. What are possible scenarios if North Korea suffers from catastrophic economic and political collapse which does not result in a desperation attack to the south?

This question is important because it will determine the possible courses of action which the UNC, US, and ROK military forces must develop. Four broad scenarios seem possible. First, a coup takes place in which the current regime is overthrown and replaced with leadership which desires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Government infrastructure remains at least marginally effective. This would likely lead to the most stable transition to reunification. Second, a complete collapse of the DPRK government occurs and is not replaced by any national level leadership. The result is a complete breakdown of the North Korean society with all the humanitarian tragedies that accompany the chaos of a society out of control. In this case North Korean civilians are likely to attempt to cross the Demilitarized Zone (DMZ) in search of peace, stability, and a better way of life.

The third scenario is the most problematic. It involves the overthrow of the current regime with competing factions fighting for control. In effect, a North Korean civil war breaks out and with it, like the second scenario, the people suffer horrifically and many attempt to come south as well as north to China and Russia. While in the second scenario there is chaos and suffering, in this one there is chaos, suffering, and open military conflict among factions fighting for control. The last, and perhaps most improbable but certainly the most desirable scenario, is that Kim Chong Il remains in power but recognizes that his power base is too weak and that he can no longer effectively govern. In this case he approaches the South and seeks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OK's long term reunification policy or variation thereof.

***2. What is the ROK reunification strategy?***

The ROK Committee for Reunification provides the guidance on Korean

reunification using a three phase strategy that extends over several years in order to allow a smooth transition to a unified peninsula. The first stage consist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ith expansion of trade as well as communication between the populations of each country. The next stage i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mmonwealth, and then finally complete reunification. This is a policy of agreement, unlike Germany which consisted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nd Vietnam, which was reunification by conques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policy because it may provide the best framework for dealing with DPRK collapse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not designed for such a scenario.

***3. What near term course of action might the Republic of Korea possibly adopt in the event of catastrophic collapse in the north?***

This question stimulates more questions than answers. Would the ROK assert its sovereign right over the peninsula and unilaterally attempt to stabilize the north and subsequently complete reunification? Would it request UN, US, or other regional power assistance or would it accept such assistance if offered? Would it attempt to keep the north sealed from the south to prevent massive migration or would it allow one way movement of its southern businesses to the north in order to exploit the natural and population resources?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ar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etermine from any open sources; however, the various major scenarios must be considered as they will significantly affect any action taken by UNC or US military forces.

***4. What are the long term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concerns of the major Northeast Asian powers: China, Japan, Russian, and Korea, if North Korea suffers from a catastrophic collapse and the peninsula is reunified under a ROK dominated govern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long-term is considered some fifteen to twenty year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DPRK. This time frame is used because the effects of North Korean disintegration will likely be felt for at least that long an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peninsula will not become stable for that period if the South Korean reunification plan were implemented under ideal conditions with agreement reached by both sides.

The long-term interests of all the regional powers revolve around economic prosperity for themselves resulting from a secure and stable peninsula. While each will be wary of the others' intentions while they strive for



economic superiority, they likely will not risk military confrontation at the expense of a stable economy unless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emerges.

***5. What are the near term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concerns of the major Northeast Asian powers, China, Japan, Russia, and Korea, following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As with long term interests, the short term interests will revolve around maintaining stable and growing economies. In the short term, the security concerns will be much greater as the fear of spill-over of civil strife in the collapsed DPRK will cause all regional powers to seek ways to guarantee their borders while maintaining the long term potential for economic gain. All powers will want to rapidly gain a foothold in the north in order to exploit the natural resources available there. Significantly, the single most important security concern will be the fate of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 in the North. There will be two guiding precepts: first, that any nuclear weapons be located and secured so as not to be used by potential rogue elements seeking to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second, that a reunified Korea doesn't gain control of the program and become a nuclear power in its own right.

***6. What are the long term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concerns of the US after a North Korean catastrophic collapse?***

The US strategic interests, like those of the other regional powers will revolve around the economy.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economic growth a secure and stable peninsula must exist and the domination by any single regional power must be prevented. Because of this, the US may deem it necessary to maintain a military presence in Korea to assist in stabilizing the region as well as maintaining its own influence.

***7. What are the near term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concerns of the US after a North Korean catastrophic collapse?***

As with the other powers the US is likely to seek immediate stability in the region in order to maintain current trading practices. The focus for the US will probably be on dismantling the nuclear program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It will want to avoid an immediate large-scale withdrawal of forces from the peninsula until the situation is well stabilized as well as to maintain its options for involvement in any future long-term security arrangements. A full-scal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peninsula is likely to cause the US to lose its ability to maintain

influence within the region and that only in the event of a major outbreak of hostilities would US troops be reintroduced into the Korean theater.

**8. What would be the possible courses of action for the UNC, CFC, the ROK military, and USFK if such a collapse occurred in the north?**

The possible courses of action following a collapse of the DPRK center around four distinctly separate possibilities which all have significan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first is that the ROK takes unilateral action to stabilize the north and embark on reunification by absorption. The ROK government conducts the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ecurity operations necessary to bring stability and set the conditions for a reunified peninsula. This is the "Go-it-alone approach" which is likely to be the most politically acceptable to the US public and probably the Korean public as well. The second is that bilateral ROK and US humanitarian and security operations be conducted in much the same way as the first; however, involvement by the US will ease the financial burden on the ROK and allow for continued US influence in the region. The third approach is that of a coalition effort under the flag of the UN to administer humanitarian and security assistance to bring peace and stability to the region. Finally, the fourth is that in which a coalition of the regional powers which excludes the US is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situation. Which is the best course of action, what would it take to implement such a course,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ch a course of action will be answered in the final section.

-----

**II. Current North Korea Situation, Collapse Scenarios, and ROK Reunification Policy**

If in taking a native den one thinks chiefly of the market that he will establish there on the morrow, one does not take it in the ordinary way. -- Lyautey: The Colonial Role of the Army, Revue Des Deux Mondes, 15 February 1900.

Is North Korea on the verge of collapse from within and if so what are the likely events that will take place if such a collapse occur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been on a downward spiral at least since the mid-1980s. The effect of a command directed economic system with disproportionate emphasis on military expenditures, combined with the unique North Korean philosophy of "juche," or self-reliance which is in

effect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solationism, the end of the Cold War with the attendant loss of its patrons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the recent flooding have led to the present instability which ultimately may cause it to self-destruct. This section addresses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affairs and the indicators which show why it may collapse in the near future, the four scenarios of collapse, and why an attack of the South is possible but not likely. It concludes with a summary of the ROK's reunification policy and plan.

There are six major indicators that show that the DPRK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possibly facing imminent collapse. These include the famine caused by the 1995 monsoon flooding, the increasing economic disintegration, the internal political problems as evidenced by the increasing number of defections by members of the elite, the apparent lack of transition of Kim Jong Il as the successor to his father, the seemingly incoherent foreign policy, and finally the disavowing of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culminating in the statements that it will no longer recognize the Demilitarized Zone (DMZ) separating the ROK and DPRK.

The recent famine caused by the unusually heavy monsoon rains in the summer of 1995 has led to the worst famine in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ended. According to the UN, North Korea will have a shortage of nearly two million tons of grain through 1996 and it estimates that some 2.1 million children and almost half a million pregnant women will need emergency food aid. Additional evidence of the severe problems caused by the famine includes three alleged cases of cannibalism which supposedly caused "paranoia and fear" in the North and led to calls for a crackdown and investigation by internal security forces.

As General Luck, CINCUNC, recently said in his March 28, 1996 testimony before Congress, the people who are not dying are taking extreme steps for survival. It is possible that the citizens of the north may no longer be satisfied by the so-called "juche" philosophy developed by Kim Il Sung. The result of this famine may lead to food riots, causing further crackdowns by internal security forces and the military, and thus begin the vicious cycle leading to further destabilization, if it has not already begun. The ROK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reports that the DPRK "seems to be preparing to mobilize its soldiers if hungry civilians revolt against the government."

North Korea's command directed economy has been steadily declining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by a rate of 3% to 5% annually and in 1994 its growth rate was measured at zero percent. There are two primary reasons

for this decline. First, the DPRK continues to spend between 20% and 25%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on defense expenditures while at the same time its two historical Cold War allies, the Soviet Union (now Russ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have ceased to provide subsidies to help prop up its economy. Furthermore, these countries now demand that trade be conducted with hard currency, something which is lacking in the DPRK. The Chinese are currently advising their businesses not to deal with Kim's regime because of its inability to pay.

Although information from the north is difficult to come by, the increase in defections from the DPRK is a telling sign of the current internal problems. Taking into account that defectors' stories are sometimes suspect, it is clear that one thing has changed: the amount of high level persons defecting has grown significantly in recent months. There have been defections by members of the diplomatic service in Africa, trade mission members in Europe, and even Kim Jong Il's first wife defected while in Russia and is reportedly considering asylum in South Korea. Kim Jong Il is apparently so concerned with the growing dissent within the DPRK that he has allegedly said that "ideological education must take priority over academic education." The US State Department's 1996 report on human rights notes that North Koreans fall into three categories: "core", "wavering", and "hostile". with more than 75% of the population falling into the latter two.

What this evidence shows is that there is at least the beginning of the transferring of allegiance of the elite of North Korean society away from the regime. As Crane Brinton writes in his seminal work on revolutions, along with the disintegration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machinery of the state, this transfer of allegiance of the elite calls attention to the impending breakdown of the status quo. While it is almost impossible to tell if there are any significant opposition groups formed for which these elite can transfer, it is clear that with the recent spate of defections the seeds of transference are present and there are dire internal problem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regime.

A fourth indication of instability is the fact that Kim Jong Il has yet to formally, or at least publicly, establish himself as the leader of the party and accept the reigns of power. This makes negotiation and diplomatic activities difficult as well as begging the question as to why the apparent leadership vacuum has been allowed to continue for nearly two years since the death of Kim Il Sung. His current wife explains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two year mourning period is not complete. Only recently has Kim Jong Il received a foreign dignitary, the hard-line Russian Defense

Minister, Marshall Dmitri Yazov. This event in itself is confusing because it is an apparent snub of both China and the moderate Russian leadership, both of whom the DPRK needs for economic support yet who have each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ROK. This certainly cannot help the DPRK gain needed aid from these countries.

The nuclear issue has been one of the most publicized concerns in Northeast Asia in the past few years. Like his father did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1950 and even throughout the Cold War, Kim Jong Il seems to be playing all sides against each other for the DPRK's benefit. The nuclear situation has bought him needed concessions from the west, including the future light water nuclear reactor but more importantly much needed fuel from the US. However, this strategy, when tied to its call for unilateral talks with the US, while excluding the ROK, about a peace treaty and normalization of relations, is clearly an attempt to defeat ones enemies indirectly by attacking the alliance of those enemies as Sun Tzu espouses. On the other hand, continuing to make conventional and military threats against the south while at the same time trying to court US favor do not seem to be actions stemming from a coherent foreign policy and, as with the issue of the leadership vacuum not yet filled by Kim Jong Il, again begs the question as to who is in charge and is the north a rational actor?

Finally, in a continuation of the political-military vein begun above, the most recent statements by the north in regards to the DMZ again show signs of the chaos of the internal situation. On April 4, 1996 the DPRK announced that it "shall give up its duty,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concerning the maintenance and control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DMZ." Combining this statement, the three subsequent incursions into the DMZ, and Kim Jong Il's five recent inspections of front-line forces, many fear that this is a prelude to offensive action. However, this might not be an indication of imminent hostilities, but rather it is possible that it is a further attempt to exact concessions from the west, or it is an additional means of trying to split the alliance and discredit the south by provoking it into taking some kind of aggressive action.

It could also be for internal DPRK purposes to bolster military support due to a crumbling political base. On the other hand, perhaps this is a prelude to allowing the mass migration of hungry citizens across the DMZ in order to ease the burden on the DPRK while at the same time possibly forcing the ROK into a position in which it denies entry, or even better yet, uses force to stop such crossings, thus providing the north with a propaganda coup and increased leverage which it can use to solicit international aid. The fact is that the intentions and internal problems of the DPRK are

difficult to discern, yet from the short discussion above it is clear that all is not well in the worker's paradise.

The most serious question to be answered is: Based on the DPRK situation laid out above, will the north attack the ROK in an attempt to shoot its way out of its internal problems? Many people, including the CINCUNC and the Director of the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worry that this may be the case and rightly so, as this would cause tremendous casualties and destruction in both the north and south. However, there are others who do not believe that an attack is likely or even possible. A recent, supposedly "top secret" US intelligence report says that China does not believe that the DPRK will attack for four primary reasons. First, its readiness is low due to the famine, use of the military for internal security, and lack of resources which have caused training to be scaled back significantly. Second, the severe fuel shortages do not allow its military to conduct sustained operations. Third, there is a great fear that such action will cause the regime to lose all internal control as opposed to shoring up control by focusing on the ROK threat to the DPRK as many in the west believe. Finally, and most important, the DPRK cannot no longer count on support from China and Russia as it did during the first Korean War.

If the north is not intent on conducting offensive operations, then what alternatives exist? The first is that the status quo will be maintained with the DPRK receiving outside aid that ends its famine and economic problems and brings internal stability, thus revitalizing the strength of the current regime. However desirable this scenario might be, in the author's opinion, it now appears that the most likely course for North Korea is one which results in its collapse. The issue in that case is whether the collapse will be a catastrophic "hard landing" or whether the DPRK will have a "soft landing." Ahn Byong-joon writes in Foreign Affairs that only through gradual economic reform and with help from the west can the DPRK have a "soft landing" of reform along with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world community. However, due to the regime's rigid nature, a "crash landing" leading to a sudden and unstable reunion with the south is more likely. Although the possible scenarios for the north are limited only by one's imagination and many variations of the following are conceivable, two broad "soft landing" and two "hard landing" scenarios will be addressed.

The ideal soft landing situation would be for Kim Jong Il to recognize that he is not able to govern his country nor adequately provide for the people's needs. He would realize that his only means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would be to seek reconciliation with the south and embark on

a phased reunification program. However, from all accounts this course seems unlikely.

A more plausible scenario is one in which elements of the current regime from the military as well as the bureaucracy depose Kim in a bloodless coup and install a moderate regime that either embarks on far-reaching economic and political reform or seeks reconciliation with the south. This would be desirable because it is possible that the reformist regime would be more practical if not more moderate. Nevertheless, this course could provide a stable base from which to either reunify the peninsula or at least reduce tensions below the current level. However, regardless of how much either of these "soft-landing" scenarios are desired, neither is likely to occur. What appears more likely are either of the following two "hard landing" ones.

In the first, there is a complete collapse and disintegr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is would occur if the ruling elite decided that total breakdown or possibly a coup was imminent and then sought asylum in another country such as China or perhaps even a western country such as Switzerland. Accompanying the collapse of the national government would be the breakdown of the internal security apparatus. This would lead to chaos in the country as some of the population might begin to fight for limited resources while other segments begin the inevitable migration north across the Tumen and Yalu Rivers, south across the DMZ, and even afloat in a "boat people" phenomenon, with all searching for a place where they could acquire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which,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most recent famine, have become increasingly scarce.

The impact of this scenario obviously has grave consequences for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s they would most likely experience a massive influx of people for which they would not likely have the resources to support. For the ROK, the migration of people would impose not only a significant burden on its support structures but also on its military and security apparatus as the fear of Kim's sympathizers might cause extraordinary population control measures to be institute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the population, some 1.2 million men, are under arms and in a collapse scenario there would not be any internal demobilization conducted. Additionally, the nuclear facilities cannot be overlooked. Control of nuclear technology or weapons, if they exist, could provide certain elements of the DPRK with significant monetary potential by selling them to rogue nations or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While the above case is certainly ominous, the following one bodes even worse for the region. In this final situation multiple factions exist and one of them conducts a coup to oust the Kim dynasty and his remaining followers. The coup could be either violent or bloodless; however, what makes this scenario different is that infighting occurs as these factions struggle for power. As in the above scenario, breakdow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ccurs. That a civil war beyond imagination could break out and spill-over into neighboring countries is likely as those 1.2 million armed men take sides and fight for survival. Again, there will be massive migration of the population searching not only for a better life but also to escape the devastation caused by the civil war. Additionally, the same issues concerning the nuclear facilities would exist.

The initial issue for the UNC and the ROK is to determine what is happening and which scenario is occurring. It is difficult now to understand what is happening in the DPRK with a functioning government, so how can outsiders analyze internal events and determine what is taking place when collapse is in the process of occurring? This is important because while there will be many common problems in each scenario, the actions of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ould probably be vastly different between each hard landing situation. The answer lies in the research and analysis currently being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r of the J5 Policy Branch of US Forces Korea, Robert Collins. He has laid out a series of "foreseeable patterns" of social infrastructure collapse as brought on by severe resource shortages and determined a seven phase process leading to the total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Careful observation of North Korean events using Collins' seven phases provides analysts with a capability to interpret those events and determine what is taking place in the DPRK. The first phase is resource depletion resulting from mistakes i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which cause failure of major components of the economic system. It is likely the fundamental failure of the late Kim Il Sung's "juche" policy which effectively isolated the DPRK from market economies, combined with the recent natural disaster caused by the 1995 monsoons which has led to severe resource shortages. The second phase is prioritization which occurs as a result of the resource shortfall. Either singly or in combination, two "selective provision policies" are implemented. Each sub-element of the economic system receives a less than minimum maintenance allocation of resources or selected elements receive no resources so that others may be maintained. In the third phase local independence takes hold to intentionally circumvent established centralized policy.



Suppression characterizes the next phase in which the government takes necessary measures to counteract the actions of the local independent organizations which are in contradiction to centralized state policy. According to Collins this is the most "pivotal" of phases. Effective suppression by internal security forces can maintain the regime's survival, whereas ineffective suppression will push at least some elements of the population to the next phase which is resistance. The level of resistance will be elevated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organizationally and violently. The sixth phase is fracture and is the result of the core elements of the regime splitting into factions due to their objection to methods in dealing with the resistance. The final phase is realignment of the national leadership which undertakes reforms based on its perception of how to deal with the resistance. Collins lays out between four and seven specific indicators for each phase which provide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where North Korea is in its process of collapse or reform. Collins also posits that even if the fracture phase is reached,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mmediate or peaceful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will occur.

What emerges from the above discussion is that North Korea is obviously in the midst of significant internal turmoil resulting from a variety of causes. How the UNC, CFC, ROK, and USFK military forces, in conjunction with political leadership and aid organizations, deal with the outcome is the key to stability on the peninsula. However, before this question is address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ROK's reunification policy to determine what effect that policy can have in dealing with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the DPRK.

At the South-North dialogue in June 1994, ROK President Kim Young Sam's unification policy was laid out. The policy consists of a phased process of unification with basic philosophy as "of building a single Korean national community rooted in the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There are three fundamental principles for unification:

Independence: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on Korea's own according to the wishes of the Korean people and on the strength of its inherent national capabilities.

Peace: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peacefully, not through war or the overthrow of the other side.

Democracy: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democratically on the strength of the freedom and rights of all Koreans.

The three phase process for unification allows for a gradual transition to unification in order to avoid the potential economic burden of reunification through absorption as happened in Germany. The three phases ar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hase: The present hostility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replaced with a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orean Commonwealth Phase: Peacefu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s secured and the two parts of Korea are joined in a single socio-economic community.

Single Nation-State Phase: A single nation-state is completed by fully integrating the South and the North.

Obviously this process applies to the "soft landing" scenarios above in which reunification is conducted by mutual agreement. Interestingly there is no discussion of how reunification will occur in the event of a catastrophic collapse because the assumption is that in order to accomplish reunification in the three phased approach the north maintains a functional government until the final phase. However, with some modification, it is possible that this process could be applied to either of the "hard landing" scenarios as well. This will be examined in section four and will serve as the basis for courses of action for military operations to be conducted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DPRK. Before this can be addresse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nterests, both long term and near term, of the Northeast Asian powers and the US. Once these interests are understood, then a feasible, acceptable, and suitable course of action can be proposed.

---

### **III.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Issues**

The responsibility of great states is to serve and not to dominate the world. -- Harry S. Truman, Message to Congress, April 16, 1945

While Truman's view is certainly the ideal, it is not always reality. All nations seek dominance in some form or another, whether economically, militarily, or diplomatically, if not over the world at least over their neighbors. The Korean Peninsula is a junction at which four of the world's great powers meet: Russia, Japan, China, and the US and any discussion of

the region must begin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se nations. The purpose of this section is to examine the strategic interests, objectives, and concerns of the Northeast Asian nations and the US, looking first at the long term and then the near term following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nterests are simply a nation's fundamental wants, needs, and desires. Interests vary from state to state and can change over time; however, there are several basic interests that are common to all nation-states, and these include survival and security, political and territorial integrity, economic stability and well-being; and stability and world order. Among the four powers that merge at the peninsula it is really only the view of world order which is open to question. In that respect each wants to achieve dominance in the world order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gain superior economic benefits while maintaining its other security interests. What is really different among these interests is how each nation determines the requirements to maintain them. These requirements can be termed national objectives, which are subordinate to interests, and are the "activities and situations a nation needs to promote, protect, or attain its interests." The following discussion illustrates the long term and short term national objectives of each nation which are required to satisfy their national interests.

### ***Russia***

Russia continues to suffer from the effects of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and as such, while remaining a near superpower strictly in terms of the size of its military, it is an economic basket case as it attempts to make market-based reforms. In addition, the internal turmoil caused by the breakup will continue to plague Russian leadership for the foreseeable future. At present, Russia is not capable of projecting significant combat power beyond the borders of the former Soviet Union due to its internal problems in areas such as Chechnya as well as the lack of funds to maintain its military forces. Without a strong economy Russia cannot maintain the military strength it enjoyed as the Soviet Union. Therefore, the number one long term objective is most likely the improvement of its economy by expanding export markets and exploiting its natural resources.

This is not to say that Russia has no military designs in Northeast Asia. In fact, as Stephen J. Iank, a professor of Russian/Soviet affairs, writes in 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report, Russian interests in the Far East are primarily military with threats from its traditional enemies: the US, Japan, and China and within the Russian Far East it is the military

component that is dominant over the diplomatic and bureaucratic corps. The past border disputes with China and the conflict with Japan over the Southern Kurile islands highlight the military issue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evident that some Russians have a pragmatic outlook in that leaders such as Viktor Chernomyrdin are now stressing that Russia must take an economic approach to secure its future and that the Far East "is the gateway to the Asian, if not world, economies" and failure to stake an economic claim there is likely to prevent Russia from regaining its superpower status.

Thus, Russia has a strong need to be economically engaged in Northeast Asia while at the same time its military sees the potential conflicts as the prevailing concerns. Its strategic interests remain the four basic ones listed above. What will be its long term objectives concerning the region following North Korean collapse? First, it desires to maintain, at a minimum, military parity in the region in order to protect its economic potential. It will want the region non-nuclear, especially Japan and a unified Korea. Economically it will need to have both a united Korea and Japan as trading partners. In light of this, if reunification occurs, it would want Korea to have a dynamic economy and have the region sufficiently stable in order to allow development and exploitati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Tumen River district. It would probably begrudgingly accept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if its presence contributed to reduced military capabilities of a reunited Korea and Japan.

What actions would Russia take or allow to take place when North Korea collapses? Interestingly, two Russian and one American field grade officers published an article in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in which they postulate that future UN peace operations may encompass forces from more than just the three western allies who ar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who traditionally participate in such operations. In this article they use a fictional scenario which takes place in Northeast Asia, where regional stability becomes disrupted and a UN mission is dispatched to conduct stability and security operations. The force consists of combined Russian and US units and their sketch map looks surprisingly like the Korean peninsula. This may be an indication of what the Russians may support in the event of collapse. In keeping with its strategic interests and its long term objectives concerning its economic development, then it is logical that a stable Korean peninsula, free of domination by the Chinese or Japanese, is paramount. Therefore, the Russians might be counted on to participate in combined operations to stabilize the region following DPRK disintegration in order to prevent dominance of the peninsula by other regional powers and to ensure long term economic

development.

### ***Japan***

Japan has historically been a major power in the region, although the nature of its power has changed. It has occupied both Korea and China and defeated Russia at sea and on the mainland in the 20th century. In the past it has been a significant military power; at present it is an economic superpower. Because of its past aggression, the traditional enmity which nations in the region feel for Japan, while not often voiced, is always present.

Japan requires the four core national interests in order to remain strong; however, a reunified Korea could become a potential threat, both economically and militarily. It feels the threat of the Russians in the Northern Territories (Southern Kurile Islands to the Russians) and fears that China, with its growing economic strength combined with its military power, is seeking to become the dominant regional power as well as a world superpower. In light of this, it has been developing a significant military capability by spending approximately one percent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GNP) for some twenty years on the Japanese Self Defense Force and currently has the seventh largest military budget in the world.

Of all the nations in the region, Japan probably fears a reunified Korea more than any other and might even be the most willing to help prop up the DPRK if it could do so without raising the ire of the US and the ROK. A Korea, reunified by peaceful means, with its combined military capability and economic potential would seriously challenge Japan. Furthermore, because of the animosities created by its past actions it may fear retribution from the peninsula.

Given that it cannot avoid a collapse, what are Japan's long term interests and objectives? Militarily, it probably perceives that US support to the region will wane given loss of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and the domestic political realities in the US; therefore, it must develop its military into a major regional power. It cannot tolerate a nuclear peninsula, but if a united Korea maintains a nuclear capability then Japan may attempt to produce deterrent weapons as well to maintain a balance of power, despite the fact its constitution prohibits development of anything more than a self defense force. Furthermore, without the buffer and distraction provided by a divided Korea, Japan will feel vulnerable to the natural invasion route from the mainland to its homeland. Paradoxically, while it would perceive a potential security threat from the mainland,

economically, it must continue to expand its markets and gain access to additional resources. Thus it will want to be engaged with a reunited Korea an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district to tap into the resources there, the trade routes into the interior of China and Mongolia, and the likely source of cheap labor in former North Korea. It is likely to enter into trade arrangements with Russia and other oil producing countries in order to guarantee access to oil.

In the event of catastrophic collapse of the north, Japan will want to participate in any military operation conducted there especially if it is under a UN flag. This will serve two purposes. First, it will help ensure access to the north and second, Japan desires to be a major player within the UN and by acting in this event it will use it to secure a permanent seat on the Security Council, if it hasn't already done so. It will demand the dismantling of Korean nuclear weapons production facilities and at the same time offer significant aid in development of the north's infrastructure as an investment in its own economic future. Thus, although Japan would like the peninsula to remain divided, there are opportunities to secure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objectives in the long and near term following the DPRK's demise and Japan will certainly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exploit them.

### ***China***

Although Japan was the most recent occupier, China has the closest long term historical ties with Korea. China will probably be the most important player in any future scenario with Korea, whether war breaks out or the DPRK collapses. Like Japan, China is striving to be the dominant economic power in Asia and, most likely, eventually, the world. It is already the dominant regional military power and it will almost certainly continue to develop its military force as it expands its reach to the Spratly Islands and works to secure all its lands, through the reintegration of Hong Kong and Macao, and the eventual solution to its situation with Taiwan.

As with Japan, China will have concerns about a reunified Korea, but will also be poised to exploit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it. First, the peninsula invasion route affects China in reverse from Japan. Second, the Korean border with China poses somewhat of a direct threat to its territorial integrity, especially with a militarily competent reunified Korea. Therefore, a long term objective will be to maintain significant military power in Manchuria to thwart any threat and maintain a superior balance of power.

China also will fear a reunited Korea economically. An article in the Wall Street Journal discusses an idea presented by a South Korean economic institute, the Damul, of an economic federation in Manchuria consisting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Manchuria. This concept, combined with the fact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pulation of ethnic Koreans in China (as well as in Russia and Japan), could give China great pause if Korea was reunified after the collapse of the DPRK and possessed both significant economic and military power that allowed it to compete for influence in the region.

Although there are concerns as stated above, China will also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collapse to further its economic interests and rid the mainland of the military threat posed by the US. It seems to be preparing for exploitation of the north even as this is being written.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it is apparently beginning to "reeducate" the 7,000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rived in China in 1995 with the probable intention of building a favorable political base in Korea when they return after the collapse. The economic opportunities available in the Tumen River region when the peninsula is stable will help China increase its economic strength to do fiscal battle with the US and Japan. In sum, the long term interests for China following the collapse will be continued economic growth, military strength, territorial protection, and regional stability.

In order to protect those interests the Chinese objectives will be to exploit the economic advantages in the north and the Tumen River region much as Japan will attempt to do. Diplomatically, it will seek to be the dominant influence on the peninsula playing on historic ties as well as the ties it has been building since it normalized relations with the ROK. Significant military power will remain in Manchuria to deter threats to its territory. It will demand a non-nuclear peninsula as well as the removal of US troops from the mainland; however, privately it will want the US to remain in Japan because they believe that as long as it is present in the islands it prevents Japan from seeking military expansionism.

Following the DPRK collapse China is likely to be the first to offer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to the ROK to help stabilize the north. As soon as practicable it will enter into a joint venture to develop the Tumen River economic zone and establish dominance over the project. In a more subtle action the "reeducated" defectors will be repatriated to establish a favorable political base. The number one objective for China will be to establish itself as the dominant actor in the region to offset the influence of the US, Japan, and Russia and may even seek a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with the reunited Korea. Thus, to protect its long term strategic interests and accomplish its objectives China can be expected to take immediate diplomatic, economic, and coordinated military actions to assist the ROK in stabilizing the north following its collapse.

###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ne long term objective for the ROK is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for unification stated in section two. By reuniting, Korea can then finally ensure its four basic strategic interests in terms of survival and security, economic stability, territorial integrity, and a stable world order. However, with peaceful reunification, Korea will be able to establish new strategic objectives to ensure its interests. With the removal of the threat from the DPRK, it may be able to embark on new and even more dynamic economic development than in the past forty years. Also, it will want to become more active in the diplomatic arena, both in regional and worldwide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Military strength will be maintained at a level commensurate with the perceived threat so that funds can be shifted to other activities. Economically, a reunited Korea will challenge Japan and perhaps even China.

However, to get to the long term they will have to successfully deal with collapse. In reality, the South Koreans should not desire the collapse of the north because while it will bring an end to the military threat it will bring a whole host of new problems that will require significant expenditures just as happened to Germany when the Berlin Wall came down. Gradual reunification in accordance with its reunification policy is the ideal; however, if there is collapse the ROK is going to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turning the peninsula to normalcy. Certainly it will have to conduct relief of the suffering population, and it will have to conduct some kind of security operations to stabilize the area; however, the unanswered questions are: How will it pay for this, will it allow the population from the north to migrate south, and what outside assistance will it solicit and be willing to accept? Without question, the ROK will be wary of any offers of outside aid especially from the regional powers, because in the long term it does not want to be beholden to any nation.

Among these four nations there is one common thread and that has to do with economic development. Specifically all four nations view the Tumen River region as an untapped resource with significant future economic potential, and is considered by many analysts to be one of the last resource frontiers. Not only does it contain vast resource potential, with development of port facilities and expansion of rail lines, it will provide



a more economical and faster route to the markets of Europe.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TRADP) concept was developed in 1989 and was favorably received by Russia, China, and North Korea, which are contiguous to the river, as well as Japan, South Korea, and Mongolia and in 1991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ject (UNDP) became interested.

The TRADP envisions converting the area from Yanji in China to the Sea of Japan, from Chongjin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in Russia into a major trade and transportation complex consisting of eleven harbors, three international airports, and an inland port rail hub. Development has not progressed as fast as hoped due to the regional tensions and the fact that the three principal countries do not have the fiscal resources required. With regional stability established due to Korean reunification and contributions from the regional powers commensurate with their abilities, the Tumen River region can be transformed into a Northeast Asian economic center of gravity and provide the found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temming from the nations' common economic interests. It should figure prominently in any long term regional plans.

###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the US is a Pacific nation and that security must be the first concern in East Asia. Like the countries of the region the US strategic interests are economic and stability related. Although there is little threat to US territory currently, it is concerned with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tability of its allies in order to ensure its own access to regional markets. The US has three primary objectives which support the four core fundamental strategic interests and guide its actions, and these include enhancing security, promoting prosperity at home, and promoting democracy. Given those, it is clear that events on the peninsula are within the US sphere of strategic interests. US security is enhanced by regional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ecause it is a global economic power, it requires access to Asian markets to ensure prosperity at home, and democratic principles can best be fostered in a secur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long term objective for the peninsula is a non-nuclear, peacefully reunified Korea and when it is reunified it could be even more important to the US than it is currently.

From the above discussions the long and near term interests of the regional powers were discerned. In light of those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postulate what the US envisions the strategic situation should look like in the long term following the collapse of North Korea and the subsequent

reunification. The overriding strategic objective for the US is economic growth through access to the region. To support this, the US must remain militarily engaged at some level in the region, either through deployment of forces and/or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arrangements to ensure stability. It will want to preclude any of the regional powers gaining hegemonic influence. It will take all reasonable efforts to make the peninsula non-nuclear as well as keep Japan from developing into a nuclear power. Through investment and direct participation in the TRADP it can achieve major economic benefits. Ultimately, regional stability might be reached by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mong all the major regional powers in the Tumen River region resulting in a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and healthy market economies conducting free trade.

If the desired end state is a stable region without a single nation dominant, with the US engaged economically and militarily, free trade among all the countries, regional cooperation in pursuit of the TRADP, and a non-nuclear peninsula and Japan, the next logical step is to determine how to get there. In the next section, what the US should do, as well as what it can do, will be analyzed. By taking the long term strategic aim and end state shown above, an operational end state for the immediate post-collapse of North Korea will be proposed. From this end state, the operational objectives must be established and then a course of action developed to reach them. This process will take into account the objectives and concerns of the regional powers so that when it is determined what the US should do, it will equal what it can do in terms of the political and military realities.

-----

#### **IV. Military Operations Following North Korea Collapse**

Victory will come to the side that outlasts the other. -- Marshall Foch, Battle of the Marne, 1914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eans that after some four decades the UNC, ROK and US together have outlasted it and finally achieved victory. With victory in war comes certain responsibilities for reestablishing order, caring for the beleaguered population, and rebuilding basic infrastructure. Following WWII in both Europe and Japan, the US and the allies met these responsibilities by helping to rebuild the defeated nations in order to prevent, as Liddel-Hart would say, the "germs of another war." To date they have been successful, but now the question of Korea must be dealt with and the fundamental question is do the UN, ROK,

and US have the same responsibilities for aiding former North Korea as the allies did in rebuilding Germany and Japan? In this section the requirements for post-conflict military, diplomatic, and economic activities in collapsed North Korea will be presented.

When beginning to plan a campaign, a planner mus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trategic aim. Summarizing the analysis from section three, the long term strategic aims for Russia, China, and Japan include a stable peninsula in which each can exploit economic benefits, thus contributing to their internal stability and economic prosperity. Each will seek to be the dominant power and they all desire a non-nuclear peninsula. Russia and China, want a reduced US military presence, and do not want Japan to increase its military beyond its current capability. The ROK desires reunification which leads to increased economic power in the region and in the world marketplace. The US desires access to Northeast Asian markets and to ensure that no single country dominates the reg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he US will want to retain the flexibility of being able to maintain a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and possibly on the peninsula.

In the near term following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Russia, China, and Japan want regional stability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gin rapid economic exploitation of the region. China will desire to maintain territorial integrity and thus will do what is necessary to cause the North Korean population to remain in place. The ROK desires reunification on its terms through a smooth deliberate transition, while denying the other powers' attempts to gain influence over the population in the north. All four nations want to ensure that the DPRK nuclear facilities are brought under control and not allowed to fall into the hands of dissident factions. The US's near term end state is to have a non-nuclear peninsula, a reunified Korea without bankrupting the south, continued economic access to the region, and continued political influence throughout Northeast Asia. These strategic end states guide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post-collapse planning for all involved nations.

Before any plan can be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make assumptions, and in this case three will be made since none of the events discussed in this monograph can be forecast with any certainty. The UN Security Council, ROK, and US recognize their responsibilities for stability, securit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perations in North Korea as part of post-conflict operations stemming from the uncompleted 1950-1953 Korean War, and they recognize the collapse of the DPRK as the termination of conflict.

China, Russian, and Japan may participate in combined operations under UN control to conduct post-conflict operations, or at the very least will not object to or veto a UN operation to relieve suffering and restore order in former North Korea.

The collapse scenario will be one of hard landing discussed in section two, though not resulting in an attack on the south, but in the total internal breakdown of North Korean society with either no government in place or factions vying for control and requiring a significant military commitment to bring stability and relief to the region.

These assumptions form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a plan to deal with the collapse of the north. Should they not become facts at the time of the breakdown, then branch plans might have to be considered or initiated.

Obviously, the main actor in any collapse scenario is the ROK. It has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the historical, cultural, and national ties to the north that require it to be the lead, if not sole, player in dealing with DPRK collapse. However, the ROK must consider the fiscal realities of bringing stability to the north and reunification by absorption as happened in Germany. Following German reunification, that country experienced significant economic and social upheaval with rising unemployment rates, initial declining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taxes. It is estimated that it had to spend more than six percent of its GNP, approximately one quarter of its annual budget, on reunification.

These costs are probably the main reason behind the ROK's three phase reunification plan; however, that plan is predicated on mutual agreement and gradual implementation between the ROK and DPRK and does not allow for the collapse of the north and the subsequent immediate absorption by the south. What is the ROK plan in the event of collapse?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no plan for such a contingency was discovered. It is likely that the ROK does have such a plan but will not publicize it for fear of alienating or provoking the north. In lieu of the actual plan the following is a recommended course of action for South Korea.

In actuality there are three choices for the ROK. First it can "go-it-alone" and deal unilaterally with the collapse and absorb not only the north but also the enormous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such action. Second, it can conduct bi-lateral operations in the north either with China, Russia, or the US. However, each of these countries would likely object as it would allow whichever country conducts the operation to have the best chance at gaining dominance over the region. The third course is

to allow the UN to take the lead in relief and stability operations and allow a coalition approach to the situation. This would be the most difficult method as a coalition is inherently fragile and could be fraught with disagreements among members leading to less than ideal operations.

However, there are some significant advantages to the ROK. Most importantly, a UN led operation could provide a long term commitment of a recognized world-wide organization which could set the conditions for the ROK to implement its three phase reunification plan. A UN force could be deployed to bring relief and stability to the population, establish a UN protectorate, while simultaneously embarking on infrastructure redevelopment through investment by the regional powers, and economic and political restructuring which would facilitate a gradual and smooth transition to a reunified Korea. In addition, because there are likely to be problems caused by th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the use of forces under a UN mandate rather than unilateral ROK operations will keep the blame for any negative activities away from the ROK, thus facilitating a smoother transition to re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hat the south's credibility with the population of the north could be reduced because it allowed action by an outside organization.

When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all the regional powers and the US, it appears that a UN led operation is the best course of action for dealing with a collapsed DPRK. Although it would not be each nation's ideal choice, it does provide a consensus approach that will allow the attainment of most of the desired end states for all players. It would prevent dominance by a single nation since all the regional powers would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some way or another, either through the direct employment of troops, as with possibly China, Russia, and the US or through fiscal resources from Japan. It would bring regional stability and allow infrastructure rebuilding in order to begin economic development. Finally, the cost for reunification would be spread among the contributing nations in return for future economic benefit.

Regardless of which approach is ultimately used, there are four mission essential tasks which deal specifically with operations upon the catastrophic collapse of the DPRK that must be accomplished in order for any of the regional powers to accomplish their objectives and protect their interests. These tasks must be executed near simultaneously an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nature of the collapse is identified because they are mutually supporting and cannot be conducted unilaterally without regard to the others.

### ***Establishment of security and stability***

The paramount requirement is for security and stability to prevent the outbreak of internal conflict in a fight for scarce resources, prevent spill-over into China, Russia, and the ROK, as well as the potential migration by any means of a vast North Korean population. Elements of the coalition will have to immediately deploy and make contact with the various factions vying for control in order to arrang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ain body of the coalition force. Once the main elements deploy they will focus on reestablishing law and order by developing existing local security systems and providing support to them. A stable environment sets the conditions for all other tasks to be accomplished;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other operations will not be undertaken until security and stability are established.

###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As already discussed,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present instability and will help in causing the ultimate collapse of the regime. If relief is not brought to the suffering population, the seeds of another war, or as a minimum, an insurgency will be sewn. Large scale relief operations must be conducted simultaneously with establishing security and stability because by taking away the root cause of the problems of the population, the potential for the outbreak of civil strife is reduced. Furthermore, by getting relief to the people where they live, the desire for migration either north to China and Russia or south to the ROK is lessened. Only by providing relief can a legitimate and effective "stay put" policy be implemented. In addition to military forces conducting humanitarian relief, it can be expected that a large number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volunteer organizations will contribute to this effort and they must be allowed to do so. The military forces must take advantage of this aid and integrate them as best as possible into operations.

### **Security of nuclear research, production, storage, and delivery facilities**

Accomplishment of this task will reduce the likelihood of nuclear material or technology being transferred to other potentially hostile regimes or terrorist organizations. This single task is one in which all the regional powers have a common interest. All weapons related material will have to be secured and then disposed of in a verifiable manner. This will be a significant military operation and will require assistance from the U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dditionally, all the major

powers in the region will want to have representatives participate in order to ensure that no material remains unaccounted for.

#### Disarming, demobilizing, and resettling the DPRK military

Aside from the nuclear issue, the 1.2 million man military will be the most destabilizing factor in the north. This sensitive operation will require great skill in order to prevent further violence. It will have to be done through an effective information program and negotiations by military and diplomatic leaders backed up by a credible capability to coerce should negotiations fail. As with security and stability, effective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will make this task easier by removing the need to have to fight for survival.

The above tasks are mission essential and must be the focus of initial military operations immediately following the disintegration of the DPRK regime. Once these four tasks and conditions are met, the coalition must begin work on tasks that will ensure long term stability and facilitate reunification. First, it must establish a "care-taker" or interim government under UN guidance in order to begin the transition to reunification under the ROK three phase plan. Once such an organization is established,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hase can begin in earnest. Because the north will be stable and reunification is projected, business ventures can be initiated to begin development of the north's infrastructure. This will accomplish two important intermediate ends. First, it will begin to bring prosperity to the population of the north and initiate them into the free market economic system. Secon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will prepare for efficient future economic development.

When phase one is judged to be sufficiently successful, it will be time to move into phase two,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commonwealth. During this phase the South Korean political processes will be introduced into the northern provinces. The north's historic political boundaries will be maintained; however, local elections will be held regularly using the ROK model. The UN will still maintain a presence and provide assistance and guidance to the north to facilitate this transition. The presence will be characterized by minimal military elements with emphasis on development organizations. Once this phase is deemed complete, most likely as judged by successful elections and the desires of the population as expressed through referendums, it will be time to enter phase three, the single nation-state, at which time all UN elements will depart leaving a reunified peninsula.

If a coalition is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collapse, the

obvious contributors will be the five powers discussed throughout this monograph: China, Russia, Japan, the ROK, and the US. It is necessary to briefly sketch the potential contributions each would make to the operation. China, Russia, the ROK, and US would contribute military forces to conduct the full range of missions outlined above. Each of these countries has the ability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security forces, command and control elements, medical and engineering detachments, among others, required to conduct large scale humanitarian relief. Few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can match the broad capabilities that these countries possess; therefore, they should be the main elements of the coalition force.

In addition, they would encourage their own business communities to make contributions either directly through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in the north, or indirectly through financial contributions to aid organizations. Japan would not be asked to participate with military force due to the historic enmity among the people on the mainland caused by Japan's past aggression not only on the peninsula, but in Manchuria prior to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even Russia at the turn of the century. Currently, relations remain tense between Korea and Japan due to disputes over the ownership of the unoccupied island of Tok-do in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over reparations and apologies stemming from the Korean and other Asian "comfort women" exploit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WII. Although Japanese military forces would be unacceptable on the peninsula, direct financial contribution, investment, and non-governmental and private volunteer organizations would likely be welcomed.

As with any plan developed at the strategic leve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diplomatic, economic, informational, as well as military, because together they play a significant role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n operation. In the collapsed north it will be no different. It will be the integration of all elements striving for the strategic aims stated above which will provide the foundation for a stable, reunified Korea.

Diplomatic efforts must be focused on building and sustaining a coalition under UN control. Immediately upon recognition of the collapse,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establish a mandate which will authorize a coalition to conduct operations in the north. This should be based on the combined UNC, ROK, and US responsibility for conducting post-conflict operations stemming from the final termination of the Korean War. South Korea must request such assistance and be willing to reunify using a combination of its three phase reunification plan with the assistance of the UN. The



coalition should consist of China, Russia, the US and the ROK as the main contributors. Although Japan will likely desire to participate, due to the historical enmity between the Koreans and Japanese, the commitment of Japanese defense forces will most likely be deemed unacceptable. Furthermore, China and Russia will be wary of having Japanese troops on the mainland; therefore, Japan should contribute to the coalition through financial aid to the UN and private economic investment in the region because Japanese business will be welcome but its military will not.

The coalition and the ROK must recognize the north's internal political structure at the province and local level and must use it to make reunification work. Remnants of the old regime from the national level must be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and have sanctuary in a third country to prevent destabilization and attempts to revert to its old system. Most important, this remaining senior leadership must be identified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leave the country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 new life. The reason for this is to prevent a Maoist-type "long march" and a possible insurgency. Finally, diplomacy must focus on the using the region as a way to bring the regional powers into a long term cooperative arrangement emphasizing mutual economic prosperity and non-aggression. The coalition can in itself become the center of gravity for regional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formation programs must support building and sustaining the coalition. The theme should be that the UN and its UNC has a responsibility to conduct post-conflict operations resulting from the final termination of the Korean War and that only a coalition of the major regional powers can bring the war to a successful conclusion. Internally in the north an inform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which exploits the "juche" philosophy as uniquely Korean as opposed to North Korean and that it can only be realized by a gradual transition to a reunified peninsula.

Economically, the combined resources of all the regional powers should be solicited in return for access to investment opportunity in the region. The economic effort initially should be focused on infrastructure rebuilding, then on natural resource explora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unifying economic focus should be on development of the Tumen River region. This area has the resources,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potential to benefit all the major regional actors. Investment by private business should be encouraged beginning as soon as the region is adequately secure. The sooner investment occurs the sooner the population will be able to obtain jobs and begin experiencing market economics.

Given a coalition operation under a UN mandate, the next issue is to determine the basic structure and organization for operations. Historically in UN operations each member of the coalition is assigned a geographic area of operations or responsibility. Often in cases like this there will be a disparity between areas based on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pecific coalition force working in that area. Unequal aid and assistance may prevent the coalition from maintaining stability and continued unrest will hamper economic investment.

In addition to dividing an operational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articipating nations, sometimes the areas of operation are determined based on arbitrary geographical considerations or the capabilities of the coalition forces. An historical example of this is the initi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38th parallel in 1945 which was based on an arbitrary decision by bureaucrats with no concern for the long term effects of such a division.

An operation in the collapsed north will have the largest military threat a UN operation has ever faced; therefore,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minimize and neutralize it. One of the ways to do this is to organize the coalition in a different form both in terms of military structure and areas of operation.

First the coalition should be organized as an actual combined force and not as just the sum of various national contingents. Each area of operations should contain a battalion-sized unit from each member of the coalition operating under a combined headquarters of approximately brigade size. Furthermore, the operational areas should be based on existing local and provincial political structures. By organizing the operational area based on existing political structures, as well as recognizing and using those structures, the legitimacy of the coalition force will be enhanced and the chances of success increased.

There are twelve provinces in north. In each, a composite brigade size unit could be deployed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ecurity Assistance Force (SAF) found in US doctrine. Such a coalition force could consist of a three to four battalions of infantry from each of the contributing countries, with augmentation of engineer, medical, aviation, signal, military police, civil affairs, psychological operations, and logistics support units. Elements from ROK and US special operations units could be attached to each coalition force to provide linguist support and enhance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by conducting their doctrinal coalition support mission. The command headquarters for each province would be a combined organization

and the commanders for each would be divided among the four major powers with three each from China, Russia, the ROK, and the US.

The north would not be divided into sectors by country, i.e., there would be no Chinese or US sector, it would only have its normal political provinces with a coalition force assigned to it to conduct security and stability and humanitarian assistance operations. Although such a unique organization would have inherent difficulties due to its combined nature, it is likely that only an organizational structure such as this would preclude any of the powers from achieving dominance in any particular area or of the north as a whole as well as to spread the costs of the operation among the coalition.

The final concern in terms of organization is command and control. On the surface the simplest method would seem to be to use the existing UN Command structure. It is in place and functioning and certainly has more area expertise than any existing or ad hoc command element could. However, it is likely that Russia and China would object to having their military forces placed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an organization dominated by US personnel. On the other hand, it may be possible to use the existing UNC and augment it with Chinese and Russian staff members and perhaps name a Russian and Chinese deputy, as well, to satisfy them. From purely an efficiency standpoint the UNC is the obvious choice and the effort should be made to establish it as the headquarters to deal with the collapse of North Korea.

In summary, it is apparent that the DPRK is on the verge of collapse and that it may suffer a hard landing, though possibly not involving an attack on the south. To deal with the collapse the best course of action seems to be one of using the UN to form a coalition among China, Russia, the ROK, and the US in order to conduct stability, security, and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s in the north. Immediate reunification with the south should be avoided, and the ROK's three phase reunification plan should remain the framework for the transition with the difference being that the UN and the coalition provide the security and stability to facilitate a deliberate and gradual reunification. The economic center of gravity is the Tumen River region and is likely to be the carrot that helps bring the coalition together. By building a coalition and allowing for a gradual reunification process, the Korean peninsula can once again become united in a stable and secure environment and all the regional countries can benefit from the economic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resources of the area.

## End Notes

1. B.H. Liddel-Hart quoted in "Balancing the Trinity: The Fine Art of Conflict Termination." by Susan E. Strednansky, MAJ, USAF. Air University Press, Maxwell AFB, Alabama. February 1996. 1.
2. William J. Clinton,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28.
3. Nicholas Eberstadt, Korea Approaches Reunification, (Armonk, NY: M.E. Sharpe, 1995), 130.
4. Department of Defense, Joint Pub 3-0 Doctrine for Joint Operations (Washington, DC: The Joint Staff, 1995), B-1.
5. Unattributed, "DIA Director suggests New N Korea approach," Jane's Defense Weekly, January 17, 1996, 8.

"What is clear is that in the post-Cold War world militaries around the globe, primarily under the auspices of the UN, are now involved in not only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ventional conflicts, but also in non-conventional conflicts (a non-doctrinal term). Conflict is defined as "an armed struggle or clash between organized political parties within a nation or between nations in order to achieve limited political or military objectives." (Joint Staff Officers Handbook, 1993) This definition, though somewhat more ambiguous than war, is still rather straightforward and simple to understand. "

"However, non-conventional conflict is something even more ambiguous and difficult to understand. It extends the continuum of conflict. Conflict in the conventional sense begins when the armed struggle begins; however, non-conventional conflict encompasses all of the types of conflict listed above, starting with the threat or possibility of conflict and extending past conflict termination, because the conditions that gave rise to hostilities in the first place may still remain, though not visible or easily recognized. It also includes armed clashes by unorganized groups that are not seeking to achieve any political or military objectives."

"Non-conventional conflict encompasses the lawlessness of a society in

which the governmental system has collapsed, but no organized group has risen to take its place. Violence and terrorist-like activity can occur out of frustration with no identifiable purpose. This type of conflict is non-convention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objectives and methods of the actors, perhaps difficult to even determine the actors, and thus it is difficult to apply conventional elements of power. This is the sensitive and complex environment in which peace operations may increasingly take place. Although the situation may not be a traditional insurgency, there will likely be many of its characteristics present. In these types of non-conventional environments it is the issue of perceived legitimacy by the people and the political powers involved that places new stresses on UN forces whose legitimacy is no longer a matter of fact." This definition is taken from the author's first term monograph Support to United Nations Forces: Is There a Role for United States Special Operations Forces? (page 9)

6. Bill Gertz, "US Commander in Korea sees North near Disintegration," Washington Times, 16 March 1996. 7.
7. Unattributed, "Pyongyang Regime Faces Threat of Collapse," The Korea Herald, March 8, 1996, 1.
8. Young Whan Kihl, ed.,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9.
9. Robert Debs Heinl, Jr, ed. "Dictionary of Military and Naval Quotations", (Annapolis, MD: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66), 69.
10. Yonhap News Service, "North Korea to Face 1.9 Million-Ton Grain Shortage," The Korea Herald, March 3, 1996, 3.
11. Bill Gertz, "3 Cannibalism Cases Spark Inquiry by Kim Jong Il," Washington Times, March 6, 1996, A3.
12. William Matthews, "Luck: 'Violent' Collapse Of North Korea Could Trigger War With South," Army Time, April 15, 1996.
13. Yonhap News Service, "Report Says North Korean Troops Receiving Adequate Food Supplies," Korea Herald, March 28, 1996, 2.
14. CIA World Fact Book for North Korea 1995, (On Line), Available from Korea WebWeekly

15. Jim Mann, "US is Trying to Prevent Tailspin by North Korea," *The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edition) February 5, 1996, 2.
16. Exclusive: "Kim Jong Il Receives his First Foreign Dignitary," from th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6, 1996 as quoted in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March 5, 1996, available from the Nautilus Institute, [npr@igc.apc.org](mailto:npr@igc.apc.org).
17. Kim Yong-bom, "North Korea Operating Red Capitalist Groups Overseas," *Korea Times*, March 28, 1996, 3. See also "Pyongyang Recalls Children of High-Ranking Officials", *Korea Herald*, February 22, 1996, 2. Also, Kevin Sullivan, "Missing Ex-Wife Adds to North Korean Leader's Woes", *Washington Post*, February 14, 1996, 17.
18. Mary Jordan, "Speculation Grows on Demise of N. Korea", *Washington Post*, April 6, 1996, 11.
19. Crane Brinton, "The Anatomy of a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65, 39.
20. Yonhap News Service, "NK's Kim to Assume Presidency After 2-Year Mourning," *Korea Times*, February 3, 1996, 2.
21. "Exclusive: Kim Jong Il Receives his First Foreign Dignitary."
22. Sun Tzu, "The Art Of War", Samuel Griffith, tra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79.
23. Kevin Sullivan, "N. Koreans Enter DMZ A 3rd Time", *Washington Post*, April 8, 1996, 1.
24. "Kim Visits Forward Positions", *Jie Fang Daily* (Pyongyang) March 24, 1996, A4. As quoted in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March 30, 1996, available from the Nautilus Institute, [npr@igc.apc.org](mailto:npr@igc.apc.org).
25. Bill Gertz, "US Intelligence: China Doesn't See N. Korea Attacking", *Washington Times*, March 29, 1996, 17.
26. Ahn Byung-joon, "The Man Who Would Be Kim",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100-101.
27. Bob Collins, "Patterns of Collapse in North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5 Civil Affairs Newsletter, Seoul, Korea, January 1996, 2-12.

28. Ibid., 7 and 11.
29.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on-line) (January 1996) from the Korea WebWeekly, File: Korean Unification Policy.
30. Heintz, 203.
31. LTC Ted Davis, "Concept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vereign Nation-States," Joint and Combined Environments (Fort Leavenworth, K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Department of Joint and Combined Operations), 1994, 16.
32. Ibid., 16-17.
33. Ibid., 18.
34. Douglas J. Murray and Paul R. Viotti, eds., "The Defense Policy of Nations: A Comparative Study", Third Edition,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221.
35. Ibid. 222.
36. Stephen J. Banks, "The New Russia in the New Asia", (Carlisle, PA: The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July 22, 1994), 3.
37. Ibid., 3.
38. A.V. Demurenko, V.K. Kolpanov, and Timothy L Thomas, "Peacekeeping: A Joint Russian-US Operational Scenario",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ume 7, Number 3, September 1994, 522.
39. Defense Agency, Japan, "Defense of Japan", (Tokyo, JA: Defense Agency, Japan, July 1994), 99 and 282.
40. Michael Blaker, "Japan in 1994: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Asian Survey, January 1995, 8.
41. Steve Glain, "After 1,300 Years, White-Collar Armies Target Manchuria,"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9, 1995, 1.

42. Yonhap News Service, "Report Says 7,000 North Koreans Fled to China", Korea Times, March 29, 1996, 1.
43. Philip Shenon, "Gunboat Diplomacy, 96 Model", New York Times, March 17, 1996, IV-1.
44. "Tumen River Plan", (On-line) Korea WebWeekly
45. Ibid.
46. Ibid.
47. Ibid.
48. Clinton, 28.
49. Ibid., 7.
50. Ibid., 28.
51. Robert A Fitton, ed. "Leadership: Quotations from the Military Tradi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222.
52. John T. Fishel, "Liberation, Occupation, and Rescue: War Termination and Desert Storm", (Carlisle Barracks, PA: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1992), 1.
53. Young, 266.
54. Tai Sung An, "North Korea: A Political Handbook",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Inc., 1983), 56. See also 1995 CIA Factbook. There are nine provinces and three special cities that are administered as provinces.
55.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0 Low Intensity Conflict",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1), 128. See also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0 Low Intensity Conflict",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90) and Department of the Army, "FM 31-20, Doctrine for Special Forces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90).



## BIBLIOGRAPHY

### BOOKS

1. Brinton, Crane. *Anatomy of a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65.
2. Eberstadt, Nicholas. *Korea Approaches Reunification*. New York: M.E. Sharp -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1995.
3. Fitton, Robert A. *Leadership: Quotations from the Military Tradi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4. Heinl, Robert Debs, Jr. ed., *Dictionary of Military and Naval Quotations*. Annapolis, MD: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66.
5. Hwang In Kwan. *United States and Neutral Reunified Korea*.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6. Kihl, Young Whan.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
7. Kim Il Pyong, ed. *Korean Challenges and American Policy*. New York: Paragon House. 1991.
8. Mosher, Steven W., ed. *Korea in the 1990s: Prospects for Reunification*.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2.
9. Murray, Douglas J. and Paul R. Viotti. *The Defense Policies of Nations: A Comparative Study*. Third Edition.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10. Naisbitt, John. *Megatrends Asia: Eight Asian Megatrends That Are Reshaping Our Wor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11. Pollack, Jonathon D. and James A. Winnefeld. *US Strategic Alternatives in a Changing Pacific*. Santa Monica, CA: Rand. 1990.
12. Roh Tae Woo. *Korea in the Pacific Century: Selected Speeches, 1990-1992*. New York: Permagon Press. 1992.
13. Sun Tzu. *The Art of War*. Samuel Griffith, tra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14. Tai Sung An. North Korea: A Political Handbook.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Inc. 1983.
15. Yu Eui Young and Terry R. Kandel, eds.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hanging World Order". Los Angeles, C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enter for Korean-American and Korean Studies. 1992.

#### GOVERNMENT DOCUMENTS

1. Banks, Stephen J. "The New Russia in Asia". Carlisle, PA: The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1994.
2. Clinton, William J.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3. Collins, Robert. "Patterns of Collapse in North Korea". The Combined Forces Command C5 Civil Affairs Newsletter. Seoul, Korea. January 1996.
4. Davis, Ted. "Concept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vereign Nation-States". Joint and Combined Environments. Fort Leavenworth, K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Department of Joint and Combined Operations. 1994.
5. Defense Agency, Japan. "Defense of Japan". Tokyo, JA: Defense Agency, Japan. July 1994.
6.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0 Low Intensity Conflict".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1.
7. Department of the Army: "FM 100-20 Low Intensity Conflict".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90.
8. Department of the Army: "FM 31-20 Doctrine for Special Forces Operations". Washington, DC: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90.
9. "Sou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2.
10. Department of Defense. Joint Pub 3-0. "Doctrine for Joint Operations".

Washington, DC: The Joint Chiefs of Staff. 1995.

11. Fishel, John T. "Liberation, Occupation, and Rescue: War Termination and Desert Storm". Carlisle Barracks, PA: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the US Army War College. 1992.
12. Lord, Winston. "US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Pacific."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ume Six, Number Nine, February 27, 1995. 143-147.
13. Oh Kongdan. "North Korea in the 1990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the US-South Korea Security Alliance". Santa Monica, CA: Rand. 1992.
14. Strednansky, Susan E. "Balancing the Trinity: The Fine Art of Conflict Termination". Maxwell Air Force Base, AL: Air University Press. 1996.
15.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Mutual Defense Treaty". Reprinted in USA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Class C510, Appendix 5 to Lesson 6, "Multinational Operations". 1995.

#### PERIODICALS

1. Ahn Byung-joon. "The Man Who Would Be Kim."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95-108.
2. Blaker, Michael. "Japan in 1994: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Asian Survey. January 1995. 8.
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Unificat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Significant Issues Series, Volume XV, No. 7, Pacific Forum/CSIS, Washington, DC. 1993.
4. Conable, Barber B. Jr. and David M Lampton. "China: The Coming Power." Foreign Affairs. Winter 1992/93. 133-149.
5. Demurenko, A. V., V. K. Kolpanov, and Timothy L. Thomas. "Peacekeeping: A Joint Russian-US Operational Scenario". 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ume 7, Number 3. September 1994.
6. Eberstadt, Nicholas. "Can the Two Koreas Be One?" Foreign Affairs. Winter 1992/93. 150-165.
7. Gertz, Bill. "3 Cannibalism Cases Spark Inquiry by Kim Jong Il".

- Washington Times. March 6, 1996. A3.
8. "US Commander in Korea Sees North Near Disintegration". Washington Times. March 16, 1996. 7.
  9. "US Intelligence: China Doesn't See N. Korea Attacking". Washington Times. March 29, 1996. 17.
  10. Glain, Steve. "After 1,300 Years, White Collar Armies Target Manchuria." The Wall Street Journal. October 9, 1995. 1.
  11. Goody, James and William Drennan. "Koreapolitik."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ic Studies, Number 29. May 1995.
  12. Johnson, Chalmers and E. B. Keehn. "The Pentagon's Ossified Strategy."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103-114.
  13. Jordan, Mary. "Speculation Grows on Demise of N. Korea". Washington Post. April 6, 1996. 11.
  14. Kang, David C.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Volume XXXV, Number 3, March 1995. 253-267.
  15. Kim Dae Jung. "Is Culture Destiny?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189-194.
  16. Kim Young-bom. "North Korea Operating Red Capitalist Groups Overseas". Korea Times. March 26, 1996. 3.
  17.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62-78.
  18. Mann, Jim. "US is Trying to Prevent Tailspin by North Korea". The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Edition). February 5, 1996. 2.
  19. Manning, Robert A. and Paula Stern. "The Myth of the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4. 79-93.
  20. Matthews, William. "Luck: 'Violent' Collapse Of North Korea Could Trigger War With South". Army Times. April 15, 1996.
  21. Nye, Joseph F.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90-102.

22. Shenon, Philip. "Gunboat Diplomacy, 96 Model". The New York Times. March 17, 1996. IV-1
23. Sullivan, Kevin. "Missing Ex-Wife Adds to North Korean Leader's Woes". Washington Post. February 14, 1996. 17.
24. "N. Koreans Enter DMZ A 3rd Time". Washington Post. April 8, 1996. 1.
25. Unattributed. "DIA Director suggests new N Korea approach." Jane's Defense Weekly. January 17, 1996. 8.
26. "East Asia's Wobbles." The Economist. December 23, 1995 - January 5, 1996. 35- 37.
27. "Pyongyang Recalls Children of High-Ranking Officials". Korea Herald. February 22, 1996. 2.
28. "Pyongyang Regime Faces Threat of Collapse". Korea Herald. March 8. 1996. 1.
29. Yonhap News Service. "North Korea to Face 1.9 Million-Ton Grain Shortage" . Korea Herald. March 3, 1996. 3
30. "NK's Kim to Assume Presidency After 2-Year Mourning". Korea Times. February 3. 1996. 2.
31. "Report Says 7,000 North Koreans Fled to China". Korea Times March 29, 1996. 1.
32. "Report Says North Korean Troops Receiving Adequate Food Supplies" Korea Herald. March 28, 1996. 2.

#### ELECTRONIC RESOURCES

1. CIA World Factbook for North Korea 199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5. Korea Web Weekly Magazine (On-line). WWW.kimsoft.com
2. Unattributed. "Exclusive: Kim Jong Il Receives His First Foreign Dignitar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6. 1996 as quoted in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March 5,

1996. Nautilus Institute: npr@igc.apc.org.

3. "Kim Visits Forward Positions". Jie Fang Daily (Pyongyang). March 24, 1996. A4. As quoted in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Daily Report. March 30, 1996. Nautilus Institute: npr@igc.apc.org
4. "Tumen River Plan". Korea WebWeekly.

## ***U.S. Official: N. Korean Leader Still in Charge***

**By Kevin Sullivan**

1996. 7.

이 자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입수된 자료로서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에서 제공한 북한  
관련 에세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U.S. Official: N. Korean Leader Still in Charge

---

Despite widespread speculation that North Korea's military leaders have assumed greater control over government policy, communist leader Kim Jong Il seems to be fully in charge, according to a U.S. congressman who just returned from North Korea.

"The civilian side is back in control; there seems to have been a shift," said Rep. Bill Richardson (D-N.M.), who found that military leaders held much greater authority when he was in North Korea in December 1994 negotiating the release of a captured U.S. military helicopter pilot.

Richardson spent 2 1/2 days in North Korea this week as an unofficial emissary from the White House to discuss peace-talk proposals, Korean War MIA issues and food aid for the reclusive Stalinist state. The North is suffering from severe food and fuel shortages made worse by devastating floods last summer.

In a telephone interview from Seoul today before he left for Washington, Richardson said he toured the Unpa region of North Korea, about an hour's drive south of Pyongyang, the capital, an area hard hit by the floods. He said he saw "people who were quite dispirited, looking hungry" and many bridges and schools that had been destroyed.

"It's not quite famine yet, but it's serious," Richardson said. "The need for food aid is evident."

He called his trip "productive" but declined to discuss specifics of his negotiations. He said he met with various Foreign Ministry and military officials and discussed a proposal by President Clinton and South Korean President Kim Young Sam for four-way peace talks that would include the two Korea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linton and Kim Young Sam proposed those talks when they met in South Korea last month, amid increasing signs of unrest, economic distress and military volatility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been lukewarm to the peace proposal, saying it needs more study. Any direct contact between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leaders in Pyongyang would offend South Korea, but Richardson's trip has been blessed



by the White House.

Richardson also toured the crash site of a B-29 bomber that went down in May 1951 in farmland outside Pyongyang. Thirteen U.S. servicemen died in the crash, and remains of several of those men already have been turned over to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  
Wednesday, May 29 1996; Page A15  
The Washington Post



SPECIAL ALERT

*FAO GLOBAL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FOOD AND AGRICULTURE WORLD  
FOOD PROGRAMME*

1996. 9.

이 자료는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 식량계획(WFP)이 최근 북한의 식량 위기 상황을 현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특별 보고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SPECIAL ALERT No 27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6 September 1996**

**For official use only**

**+ OVERVIEW**

**+ FOOD SUPPLY SITUATION**

---

**OVERVIEW**

An on-the-spot review by FAO and WFP has just been comple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high intensity rainfall and floods, which occurred in the last week of July 1996, on crop production and food supply. The appraisal is based on discussions with Government agencies and damage assessment visits to the worst affected areas. These include Pyongsan and Kumchon counties in North Hwanghae Province, Pyongchon and Changdon counties in South Hwanghae Province and various areas in Kaesong Municipality. Although, heavy rainfall also reportedly caused some localised flooding around Supung and Sinuiju in North Pyongan in mid-August, the damage caused was not assessed by the FAO/WFP team.

In the five days between 24 and 28 July 1996, the southern parts of the country received an average of 800mm of intensive rainfall, resulting in serious flooding and extensive damage to agriculture, property and infrastructure. The rainfall and resultant damage occurred most extensively in North and South Hwanghae Provinces, Kangwon Province and Kaesong Municipality. In addition, though much less extreme, agricultural areas close to the capital Pyongyang also sustained some damage to crops. Records indicate that during the five day period, South Hwanghae received 910mm of rainfall, North Hwanghae 830mm and Kaesong Municipality 630mm, compared to 230mm, 310mm and 130mm respectively, which would be expected during the same period in average years. The rainfall was, therefore, between three and five times normal and up to 200mm higher than the combined average for July and August, during which the country usually receives some 60 to 65

percent of its annual precipitation.

In general, it is estimated that the south/southwest produces roughly 60 percent of the country's food grain, with the remainder coming principally from the northwest and the provinces of North and South Pyongan. The areas affected by the rainfall and floods were, therefore, of considerable agricultural importance. It is estimated that 7 out of a total of 20 counties in South Hwanghae Province and 8 out of 17 in North Hwanghae were seriously affected.

The high intensity of rainfall resulted in a tremendous increase in the volume of water in rivers, reservoirs and irrigation systems, to levels much above normal safe carrying capacity. This resulted in various forms of damage, the most noticeable and significant of which was burst embankments, spillage and overflow from rivers and canals. The rapid increase in volume of irrigation reservoirs also meant that there was little option other than to leave sluices open, releasing vast quantities of water into feeder canals and onto fields. As an illustration, in one major irrigation area visited, it was estimated by local officials that whilst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canal system was 200 cubic metres/second, at the height of the rains some 700 cubic metres/second were being released.

As a result of heavy rains and the consequent overflow from rivers, canals and reservoirs, a large proportion of low-lying areas remained submerged for periods up to 5 days. The extent and duration of submergence, was by far the principal cause of crop loss, though to a lesser extent losses also occurred due to crops being washed away and to being covered by sand deposits, mostly in areas adjacent to rivers and canals. Submergence in itself need not have resulted in heavy losses had the crops been either more advanced or, alternatively, less advanced in the crop cycle. Both paddy, the main crop affected, and maize, however, were at a critical stage in development at which they were most susceptible to adverse conditions. In the case of paddy, which was at the critical stage between flowering and grain filling, periods over 24 hours under water effectively meant that grain formation stopped and any recovery is likely to be small. Evidence of this was clearly observed, where a large number of crops sampled had developed panicles but no grain.

In general, maize was less affected by submergence and other consequences

of flooding, as a larger proportion of the crop is grown on higher ground. Nonetheless, in the areas affected, as the crop was also at the critical stage of **변aring** and grain formation, production will be severely curtailed. The possibility of any recovery will also be constrained by smut disease, evidence of which was observed to be widespread.

Some minor crops, such as soya beans, were also damaged or destroyed, though as most of these are grown on borders, around principal cereals, on embankments and in peripheral areas, the relative extent of the damage is not anticipated to be large.

In provisionally estimating crop losses, the area damaged and potential yields this year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lthough productivity in recent years has been constrained by declining soil fertility and shortages of agricultural inputs, observations confirm that efforts have been made to maintain yield levels. These include the use of high yielding varieties (Pyongyang 15 & 21 in rice), the use of intensive and organised crop management, which places heavy emphasis on individual plant care, synchronised application of chemical inputs, the use of organic inputs and intensive plant protection methods. Based on field observations, therefore, it is provisionally estimated that 360 000 tons of paddy will be lost this year and 92 000 tons of maize. Total loss in cereals, due to the floods, is tentatively projected at around 373 000 tons (including rice in milled equivalent). However the full extent of losses and the consequent implications for food supply next year will depend significantly on possible crop recovery in affected areas and weather conditions between now and harvest in October. It will only be possible, therefore, to mak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overall crop production and the bearing this has on food supply, at the time of harvest.

Given the short duration and inflexibility of the crop cycle in Korea D.P.R, there is no possibility of replanting areas in which crops have been lost. What is possible and now being officially encouraged is vegetable planting, mainly cabbage and radish, on affected fields. Vegetables, will of course not compensate for the lack of cereals in the diet, in terms of calorific in-take, though they will, nonetheless, be useful in providing essentially needed nutrients and vitamins.

A number of interventions aimed at the rehabilitation of agriculture and

increasing food production were also identified by the team, which will be developed further by FAO's Special Relief Operations Service (TCOR).

---

## FOOD SUPPLY SITU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 recent floods will accentuate the seriousness of existing food supply problems in the country. Already supply difficulties in recent years, especially since the floods in 1995, have meant that rationing through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 which caters for the food needs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has been revised down significantly. As a result, rations are now considerably below historic levels an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ell below minimum quantities required.

In addition, of an estimated 5 million people on collective farms, who were formerly not entitled to PDS cereal rations, more and more have had to be progressively absorbed into the system, in the aftermath of the reduced harvest in 1995: some, as far back as last November and others at various times this year, as household stocks became depleted. Consequently, by May 1996, the majority of collective farm workers had effectively become dependent on the PDS. Those that had not, were in areas not affected by the 1995 floods.

In response to mounting supply difficulties, the Government has gradually had to lower off-take from the PDS. At present levels, it is estimated that a significant part of the population are entitled to receive a cereal ration of approximately 6 kg/month or 200 grams/day. This is considerably lower than an acceptable minimum. Moreover, as the supply channel is now almost entirely dependent on imports, it is likely that even this reduced off-take has not been consistently maintained and rations are only provided, irregularly, when and as imports arriv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cereal allocations have, on occasions, been restricted to once instead of twice a month .

As food supply difficulties have become more manifest,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late May/early June at the time of harvest , potatoes were introduced into the PDS for the first time to

supplement rations. As only a limited area is cultivated, officially estimated at some 35 000 hectares, supplies would have amounted to around 525 000 tons of potatoes or 131 000 tons in grain equivalent. Potatoes are not considered a staple and are normally utilized for industrial purposes. Nonetheless, it is estimated that they formed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diet for a period of six weeks from the beginning of June to the early part of July. In addition, at the beginning of August a part of the maize crop was harvested early and channeled into the PDS as cobs/green maize. This, being a stop-gap measure to ease current pressure, will obviously reduce availability at harvest

Grain use for livestock and other uses has been dramatically cut and it is currently estimated that only core breeding stock are being retained with large numbers of animals, either traded, released to households for tending or culled. Although the full extent of this reduction is not known, estimates range from 30 to 90 percent.

The Government has also authorized all provinces and counties to barter products directly with neighbouring countries, especially China, for food. Products that have been bartered, included fish/shellfish, scrap metal, marble and timber, the logging of which is believed to have accentuated problems of deforestation and erosion in some areas. Provinces and counties have also been allowed to utilize financial reserves held locally for food purchases, mostly wheat flour. It is estimated that imports through this system of trade, have amounted to approximately 250 000 tons of cereals since the beginning of 1996. Areas of the country that have been successful in importing food in this way, are excluded from central allocation for the duration imported quantities are expected to last.

Although the Government is seriously constrained in making commercial imports for cash, it has been successful in securing supplies through barter with some countries. The main commodities bartered include cement, steel and gold. It has also intensified attempts to secure food supplies through bilateral grant aid or on the basis of deferred paym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5/96 marketing year in November, it is estimated that pledges and deliveries of these imports, classified as programme food aid, amount to around 523 000 tons of grain.

By early September 1996, emergency food aid through the UN-system will



have amounted to around 46 500 tons of cereals and 6 000 tons of blended food, mainly CSB. Additional donation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tably CARITAS and IFRC, will amount to approximately 28 800 tons of grain and 1 600 tons of non-grain products. In total these sources, therefore, will have provided some 75 300 tons of cereals and 7 600 tons of non cereals in food assistance. However, so far pledges to the food component of the second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amounting to 70 550 tons of food equivalent or U.S.\$ 25.9 million, only cover 60 percent of requirement. The balance is, therefore, still required.

In relation to total cereal import requirement of 1 471 thousand tons of cereals for 1995/96, identified in the last FAO/WFP Special Alert No 267 of May this year, the quantity of commercial and cereal bartered imports and food aid provided or pledged so far, amounts to 848 300 tons. This, therefore, leaves an overall deficit of some 622 700 tons, with which the Government still needs assistance in the form of programme food aid or concessional commercial imports, in order to enable it to maintain minimum ration levels.

---

This report is prepared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FAO and WFP Secretariats with information from official and unofficial sources and is for official use only. Since conditions may change rapidly, please contact the undersigned for further information if required.

Abdur Rashid

Chief, GIEWS, FAO

Telex 610181 FAO I

Fax: 0039-6-5225-4495

E-Mail: INTERNET: GIEWS1@FAO.ORG

D. Morton

Acting for Director, OP, WFP

Telex: 626675 WFP I

Fax: 0039-6-5228-2837

FA 4/50 KOREA DPR



*STATE DEPT. TESTIMONY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1996. 9.

이 자료는 9월 12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와 북한관련 청문회의 일부 증언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STATE DEPT. TESTIMONY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hington -- The overall goals o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re to build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nd to facilitate progress by the Korean people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according to Mark Minton, director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at the Department of State.

In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eptember 12, Minton said: "Although direct government-to-government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not yet occurred as envisioned in the Agreed Framework, KEDO's nuclear reactor project has helped foster a growing indirect dialogu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outh-North contacts at the technical level, stemming in large part from the selection of a South Korean prime contractor for the project. These business-like talks have been frequent and productive, and will lead to the presence next month, if site preparation work begins as scheduled, of one hundred ROK contractors working side-by-side with DPRK counterparts."

The U.S. and the ROK continue to encourage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Four Party talks with the U.S., ROK, and China, proposed by Presidents Clinton and Kim in an April 16 summit meeting on Cheju Island, and the United States remains hopeful that it will, Minton said. "DPRK acceptance of this invitation would complete the agenda embodied in the Agreed Framework," he said.

North Korea's willingness to enter into bilateral talks on its missile program and to begin to address U.S. concerns on terrorism are other positive signs that U.S. diplomatic engagement is producing results, Minton said.

"Perhaps most striking of all," he sai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U.S. and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worked together this July to recover remains of American soldiers from the Korean War in DPRK territory.

The twenty-day joint mission resulted in the return to the U.S. of the remains of one American soldier. The second joint recovery operation will begin this month."

Future U.S.-North Korea contacts will depend on the degree to which Pyongyang is prepared to move further along the positive path on which it embarked with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Minton said. "In view of this objective, the U.S. eased some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in January 1995 as Pyongyang began to cooperate in implementing the Agreed Framework," he said.

"Provided that the DPRK continues to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d Framework and addresses other issues on the bilateral agenda in a positive manner, I expect that the U.S. would, over time, ease additional sanctions," Minton said.

Diplomacy with the DPRK, he said, has helped to pull the Korean peninsula away from confrontation and the threat of war, prepared the atmosphere for achieving a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created conditions conducive to greater North-South contact, which will eventually allow the Korean people to reunify their land peacefully.

Following is the text of Minton's testimony, as prepared for delivery:

(begin text)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EPTEMBER 12, 1996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ESTIMONY OF MARK MINTON, DIRECTOR  
OFFICE OF KOREAN AFFAIRS  
DEPARTMENT OF STATE

Mr. Chairman,

It is my pleasure to represent the Department of State before this Committee today.

I appreciate this opportunity to discuss our policy towar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Korean peninsula as a whole. Our overall goals in this policy are to build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s a key contribution to regional stability, and to facilitate progress by the Korean people toward national reunification.

Before I discuss North Korea specifically, I would like to stress the central place in our policy occupied by close cooperation with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None of our diplomatic achievements with North Korea to date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full consultations with, and the firm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Prior to assuming my duties here in Washington in July, I spent the last four years at our Embassy in Seoul. I can tell you,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 that every policy decision regarding the DPRK that was taken during this period was coordinated fully with the ROK.

As members of this Committee know well,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has been forged over five decades under the most exacting conditions: war, reconstruction,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uilding of South Korea's new democracy.

The Republic's recent history, and the role the US-Korean alliance has played in it, constitute an amazing success story. Today, the ROK has become one of our major international partners: its government and citizens share our interest in promot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ROK is our fifth-largest trading partner with more than \$50 billion in annual two-way trade. Bilateral security ties endure and continue to protect our common interests and promote regional stability. This partnership is the strong foundation upon which all of our diplomacy on the peninsula over the last several years has been built.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e combined efforts of the U.S. and ROK have led to a significant foreign policy achie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 gauge just what a positive change has been wrought, I ask you to look back to the situation four years ago. In 1992, the world community was forced to foc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 the DPRK denied access to its nuclear facilities to inspect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ary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mid suspicions that it had reprocessed enough plutonium for a few nuclear weapons, the North announced in March 1993 that it would withdraw from the NPT.

In response to a UNSC call for member states to help resolve the growing crisis, the U.S. engaged Pyongyang at the political level. After many arduous months of negotiation, these talks resulted, in October 1994, in the Agreed Framework.

This understanding with the DPRK, which was reached only after very close consultation between the U.S. and ROK, produced almost immediate results. The danger of an active, integrated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receded.

The alarming atmosphere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international crisis was replaced by a diplomatic process. Under this agreement, the DPRK has wisely taken a series of steps away from isolation that has resulted in an unprecedented opening up of that nation to contact and influence from the outside world.

For almost two years, the DPRK nuclear program has been frozen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The North has not produced any additional plutonium.

Teams of U.S. technical experts, with continuous access to DPRK nuclear faciliti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safely storing the North's spent fuel for eventual disposal outside of the DPRK.

The Agreed Framework also led to the cre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This organization -- which is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nuclear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including the supply of oil and Light Water Reactors (LWR's)

to North Korea -- has grown under American, Korean and Japanese leadership and seed funding into a truly international effort to make our diplomacy work.

Over the past eighteen months, KEDO's fundraising efforts have produced \$60 million in contributions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founding three. KEDO also has been able to double its country membership from 6 to 12. Furthermore, we are optimistic about securing, later this year, a multi-year commitment from the EU for \$20 million per year in funds.

These funds are, to a large degree, used to supply North Korea with heavy fuel oil, on an interim basis until the LWR's are built, as called for in the Framework. To ensure that this oil is used for the intended civil uses, the DPRK has agreed to monitoring procedures proposed by the U.S.

This impressive international effort continues to be premised on strong U.S. leadership within KEDO.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hat the Congress fully fund our request for \$25 million for KEDO's budget in FY97. I would like to thank the Senate for restoring this full amount to our budget request. With such a show of American support for its own diplomacy, others will follow and do their share. Indeed, the whole endeavor has been structured so that U.S. initiative and seed money will serve as catalyst to generate commitments and the bulk of the necessary funding from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is so often the case, there is just no substitute here for American vision and leadership.

Planning for the key element of the Agreed Framework,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also continues apace. In December 1995, KEDO signed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in which Pyongyang agreed to the construction of two Korean Standard Nuclear Plants built by the ROK. Subsequently, the North Koreans also signed protocols that will grant unprecedented access to the LWR sites to the foreign engineers and specialists -- including South Koreans -- who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ject. Although the U.S. is not contributing financially to the multi-billion dollar construction costs of the LWR's (the ROK and Japan are shouldering that responsibility), our continued funding of our KEDO obligations remains an indispensable symbol of the viability of the project.



We also have worked to ensure that the IAEA can continue to monitor the freeze on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effectively as well as move towards instituting full scope safeguards on the North's nuclear program. Our own Department of Energy continues to manage the work of safely storing the North's spent nuclear fuel, which contains material that could otherwise be used for nuclear weapons. This fuel also will be under international monitoring.

Although direct government-to-government contac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not yet occurred as envisioned in the Agreed Framework, KEDO's nuclear reactor project has helped foster a growing indirect dialogu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outh-North contacts at the technical level, stemming in large part from the selection of a South Korean prime contractor for the project. These business-like talks have been frequent and productive, and will lead to the presence next month, if site preparation work begins as scheduled, of one hundred ROK contractors working side-by-side with DPRK counterparts.

In part to spur the DPRK to directly engage the ROK in dialogue, Presidents Clinton and Kim, in an April 16 summit meeting on Cheju Is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a joint proposal inviting the North to participate in Four Party talks with the U.S., ROK, and China to discu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the ROK continue to encourage the North to participate in the Four Party talks, and we remain hopeful that it will. DPRK acceptance of this invitation would complete the agenda embodied in the Agreed Framework. Seoul recently has made earnest efforts toward improving the atmosphere for such talks. In a major policy speech delivered on August 15, President Kim enunciated three principles regarding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e South w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 North's present economic difficulties; Seoul wanted Pyongyang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eaceful re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without either side imposing its will on the other. Kim also stated that the ROK would continue to encourage international food assistance to supplement what the South had given already, and work to solve the systemic problems underlying the North's food shortages.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lso have evolved, as Pyongyang has met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d Framework, and moderated its behavior to begin to meet international norms.

The North's willingness to enter into bilateral talks on its missile program and to begin to address our concerns on terrorism are other positive signs that U.S. diplomatic engagement is producing results.

Perhaps most striking of all,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U.S. and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worked together this July to recover remains of American soldiers from the Korean War in DPRK territory. The twenty-day joint mission resulted in the return to the U.S. of the remains of one American soldier. The second joint recovery operation will begin this month. We expect that this humanitarian effort, which personally touches thousands of American families, will continue next spring when weather conditions permit further work.

The U.S. also has made a humanitarian gesture of its own towards the DPRK. In an effort to help alleviate some of the suffering that has resulted from lower crop production over the past year and severe weather in parts of North Korea, the U.S. Government join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We have made contributions of emergency relief assistance (medical supplies and food) totaling \$8,425,000 in September 1995, October 1995, February 1996 and, most recently, in June 1996. Our humanitarian assistance was given through U.N. agencies, which have staff members operating in North Korea to monitor final distribution of our contribution. We are confident, therefore, that our assistance reached the intended civilian beneficiaries, many of whom are children.

The U.S. did not act alone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tributed significant amounts of food as well-- 150,000 and 200,000 tons respectively -- in the summer of 1995. The monetary value of the ROK shipment alone was \$243 million. Several months later, we made our first contribution of \$25,000 of emergency assistance. More recently, at the time of the latest U.S. contribution of \$6.2 million of food assistance, Tokyo and Seoul also made similar contributions of \$6 million and \$3 million, respectively, to the DPRK. A broad spectrum of other countries also have contributed to this

international relief effort.

It is useful to note that the process of trying to move from stark confrontation to dialogue with the DPRK has a bipartisan history of some eight years. In 1988, under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U.S. undertook what was termed a "Modest Initiative" to open the window for greater, if still limited, contact with Pyongyang. The next phase came in January 1992, when, during a period of improved dialogu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decided to host the first-ever high-level meeting between U.S. and DPRK officials. Although useful, this did not lead to further high-level contacts. The current phase of diplomacy, which began when Ambassador Gallucci reengaged the DPRK on the nuclear issue in 1993, thus has important antecedents.

As for the future of U.S.-DPRK contacts, the Agreed Framework states that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he pace of change will depend, of course, on the degree to which the DPRK is prepared to move further along the positive path on which it embarked with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In view of this objective, the U.S. eased some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DPRK in January 1995 as Pyongyang began to cooperate in implementing the Agreed Framework. These modest steps permitted direct telecommunications services, contracts for U.S. companies to import magnesite from the DPRK, and licenses for American firms to provide humanitarian goods to the North. Provided that the DPRK continues to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d Framework and addresses other issues on the bilateral agenda in a positive manner, I expect that the U.S. would, over time, ease additional sanctions.

In terms of diplomatic representation, the U.S. and the DPRK have continued to 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liaison offices in Washington and Pyongyang, subject to the resolution of some technical issues. The establishment of these modest offices would be of practical benefit to both sides, especially in as much as more and more American citizens are visiting the DPRK -- as journalists, academics, humanitarian workers or specialists in the canning, remains, or fuel monitoring projects.

In closing, I would like to emphasize again that the positive effect of all of this diplomacy with the DPRK -- the Agreed Framework, KEDO, the

Four Party peace proposal, missile talks, joint recovery operations, humanitarian assistance -- has helped to pull the Korean peninsula away from confrontation and the threat of war; to prepare the atmosphere necessary for achieving a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to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greater North-South contact, eventually allowing the Korean people to reunify their land peacefully.

All this has been achieved, as I said before, in step with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Our partnership has constituted the winning formula for our joint diplomatic success on the peninsula to date. It will continue to guide our diplomacy in the future.

Thank you.

*HEARING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1996. 9.

이 자료는 9월 12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북한관련 청문회 회의록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U.S. SENATOR CRAIG THOMAS (R-WY), CHAIRMA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SUBCOMMITTEE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 *HEARING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EDERAL DOCUMENT CLEARING HOUSE, INC.  
201 PENNSYLVANIA AVENUE, S.E., 2nd Floor  
WASHINGTON, D.C. 20003  
Tel: 202-547-4512  
Fax: 202-546-4194

COPYRIGHT 1996 BY FEDERAL DOCUMENT CLEARING HOUSE, INC.  
NO PORTION OF THIS TRANSCRIPTION MAY BE COPIED, SOLD OR  
RETRANSMITTED WITHOUT THE EXPRESS WRITTEN AUTHORITY OF  
FEDERAL DOCUMENT CLEARING HOUSE, INC.

SPEAKERS LIST: U.S. SENATOR CRAIG THOMAS (R-WY), CHAIRMAN  
U.S. SENATOR RICHARD LUGAR (R-IN)  
U.S. SENATOR NANCY KASSEBAUM (R-KS)  
U.S. SENATOR PAUL COVERDELL (R-GA)  
U.S. SENATOR ROD GRAMS (R-MN)

U.S. SENATOR CHARLES ROBB (D-VA), RANKING  
U.S. SENATOR JOSEPH BIDEN, JR. (D-OH)  
U.S. SENATOR JOHN KERRY (D-MA)  
U.S. SENATOR DIANNE FEINSTEIN (D-CA)

U.S. REPRESENTATIVE TONY P. HALL (D-OH)

JAMES R. LILLEY, DIRECTOR OF ASIAN POLICY STUDI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TANLEY O. ROTH, DIRECTOR, RESEARCH AND STUDIES PROGRAM  
UNITED INSTITUTE FOR PEACE  
ROBERT L. GALLUCCI, DEAN, SCHOOL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WILLIAM J. TAYLOR, SENIOR VICE PRESIDENT, POLITICAL MILITARY

AFFAI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DONALD P. GREGG, CHAIRMAN OF THE BOARD  
KOREA SOCIETY

STEPHEN W. BOSWORTH, EXECUTIVE DIRECTOR,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MARK MINTON, DIRECTOR OF KOREAN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ADMIRAL TIMOTHY WRIGHT (USN), DIRECTOR, OFFICE OF  
ASIA/PACIFIC AFFAIRS, U.S. DEPARTMENT OF DEFENSE

-----

THOMAS: We will begin. I hope that we aren't interrupted too often by the floor activity today. And I'm sure we'll be joined later by some other senators.

I would tell you that we do have a number of witnesses. So to the extent that we can be concise, all of us, why we should do that. And I shall try to do that in the opening statement.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ld's greatest anachronisms. While the rest of the world has embraced democracy, North Korea appears to cling to sort of an outmoded, oppressive Stalinist system.

While other countries have moved towards open borders and open trade, North Korea remains a closed society in the world, relying on its ruinous juche philosophy.

While a community of nations has grown to more fully accept international norms, the behavior of North Korea routinely will threaten it's neighbors, and its state-sponsored terrorism and blackmail. While the population suffers from food shortages, it spends more per capita on its military than any other country.

Were North Korea just another third-world backwater, it might not be much of a cause for concern. But its militarism, history of dangerous predictability and strategic location do make it a worrisome matter.

Any outbreak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a great threat to two of our major allies and to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east Asia.

Because the North is such an opaque society, little is known about its intentions or motives. It makes it difficult to interpret present actions or predict future ones with any degree of uncertainty.

That uncertainty, in turn,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some misunderstandings could balloon into something more dangerous. That's why we're here today, I think, to continue to explore, to continue to learn, continue to share ideas as to where we are, where we ought to be in this issue, to learn more about the last vantage of the hermit kingdom.

The more we know the more likelihood that decisions that we're called upon to make will be right ones. So I look forward to all the witnesses this morning.

Again, we do have a number. I appreciate very much that. We purposely have quite a number of witnesses so that we will get some different views. And we appreciate that.

Let us start with a former colleague from the House, Representative Tony Hall, who has been very active in many things, particularly hunger. And we appreciate very much what you do, appreciate very much your taking time to be with us, Congressman. So if you'll proceed, please.



HALL: Thank you, Mr. Chairman. It's a pleasure to be before your committee.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emphasis on North Korea, especially along with the other senators, your emphasis on the POW/MIA issue, and certainly the way you bring attention to so many issues around the world.

I am convinced that our increasing contacts with North Korea can only benefit America's interest and make the job of the 37,000 American troops that we have stationed along the border with South Korea much easier.

As you know we have a tremendous amount of -- not only troops and relationships not only with supplying these troops. We spend one heck of a lot of money on our appropriation because South Korea is our ally and a good friend. But any increase in contacts that we have with North Korea, I think, would ease hopefully the situation over there.

With that, I have the chance -- and I have written testimony, Mr. Chairman. I'm not going to read it. I would just ask that it be part of the record.

THOMAS: Please, understand that each written statement for all the witnesses will be part of the record.

HALL: I travelled to North Korea. It was on the 20th for about 3.5 days. And it was more of a humanitarian trip than anything. That was my focus, especially on the damaged areas that were flooded. Especially not only from last year, but in the months of July of this year.

I emphasized to North Korea that I really wanted to be out in the field, and I wanted a chance really to see, not only the damages. I wanted to see the crops. I wanted to take a look at the people. And for the most part, they let me go where I wanted to go. I knew exactly what I wanted to see. And they

arranged it.

That doesn't mean that word didn't go out that a delegation was coming to take a look at various sections of the country, but the fact is, is that I made a number of unscheduled stops. That was not on their agenda.

I was able to talk to a number of people, see a lot of people. And I can tell you that in the time that I was outside of the capital, that there is a disaster that is occurring in this country in a humanitarian sense.

You get kind of a false picture when you're flying over the country, as you look at the country and it's green. And you're thinking -- as I was coming down, because I had visited so many disasters in the world, in Africa, Asia, but mostly in Africa -- that when you see green fields, you wonder what really is the problem here?

But when you get down on the ground and look down underneath the surface, you see a lot of things that are really wrong.

First off, the people are, for the most part, according to, not only witnesses, but World Food Program and people that have been on the ground for some time -- in general most people have lost about 30 pounds in weight since the 1st of January.

The food is being distributed probably in the best way possible, but what's happening is is that the people are only getting about 250 to 350 grams of food a day. And that's around 600 or 700 calories. And you know as well as I do that you can barely exist on that kind of ration of food.

The people look exhausted to me, including the soldiers. Everybody looks the same. The soldiers' uniforms don't fit. They look small to me from the standpoint of being weak and

exhausted. The people all look the same.

They are extremely tired. They're going many, many days without food. Oftentimes they are going into the fields picking premature corn. The flood damage to the country has been severe. It has wrecked probably tens of thousands of acres.

I brought with me a map of the area that I visited. I visited probably six or seven very rural areas in the southern part of North Korea near the DMZ.

The middle picture there is an example of flood waters that came in and some of those crops were under water for four and five days and it was at a time when, you know, food shouldn't be under water. It's too late to replant.

Corn there on the bottom picture is an example of what the corn looks like. I'm from corn country -- from Ohio. At this time, the corn ought to be over your head. This corn barely, in most cases, came up to my waist. You would be lucky to get an ear of corn out of each stalk. So I don't think that the harvest that's coming up here in the next few weeks is going to be really that good.

The World Food Program says that they expect them to maybe lose 10 to 15 percent on the harvest. In the area that I was in, I suppose -- for allegedly I was in the bread basket of the country -- that area was hit really heavy with floods, rains, hail.

The top picture, of course, is an example of the flood damage. It wiped out bridges. It wiped out roads. Many, many tens of thousands of acres were absolutely destroyed.

As you go through the country, especially in the southern part, you notice that there is a lot of not only flooding in the

hills but because there's been so much deforestation, a lot of the trees have been wiped out. You don't see -- except maybe in the capital -- any mature trees. So there's a lot of landslides in the hills.

As far as the international aid is concerned, China, U.S., Japan, South Korea are the leading donors. We've each given about \$6 million in food aid. Many,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not given, especially European Union, I think, except for maybe Sweden.

There's been barely hardly any tonnage of food come from our European neighbors to help North Korea.

Forty percent of the international appeal that has gone out relative to the problems of North Korea has been unfulfilled. Food for work projects must start soon. I think there are many NGOs, there are many private organizations, both in North Korea and -- I'm sorry -- both in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at want to do business, want to help, but the system itself in trying to get into North Korea is very, very difficult.

I think there's been some good faith efforts by the U.S. especially with the POW/MIA issue, the nuclear issue -- dismantle of some of the missile sites. I think that more and more of the people that visit North Korea, I think the better it is for people to get an idea of what really is going on in North Korea.

I want to commend President Kim Young Sam,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or announcing -- I think it was yesterday -- an issue that is very important.

They had a factory in North Korea that was wiped out and the factory produced what they call oral rehydration salts, and these are little packets that are put out in North Korea.

They're very good. They help in the dehydration of people, especially children. And the factory, as a result of the floods, was wiped out.

I mentioned it to the foreign minister and the security adviser when I was in South Korea, and they were very gracious and picked up on it. It's about \$350,000 that they have -- they are going to direct to North Korea to build this factory back up, and I think that's a very good step for South Korea.

I appreciate it and I think it will really help the children.

One of the -- the difference that I see in North Korea as opposed to other disasters in Africa -- whether it be in Ethiopia or Angola or Sudan, what you see -- you don't see green fields. You do see green fields in North Korea, but they're not producing any major crops mostly because of the flood damage, but it has a lot to do with some of their past practices, their agricultural practices.

Secondly, you don't see masses of children dying of starvation as you do in Africa. One of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s do do is they put their children up front. They make them a priority. They get an extra set of rations.

And the other thing is the governments and the people try to feed everybody there. Everybody's trying to get a little bit, but the fact is that it's not enough food to sustain -- to sustain you if you're only getting around 200 to 350 grams of food a day -- whatever they can grow in their little plot -- and it's just not enough to make a difference.

There is a disaster that's going on her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didn't see. I don't purport to be an expert in a 3.5 day trip to North Korea.

But there are very few people that have been there, seen it with their own eye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have to look at.

One of the eerie things is you don't see a lot of birds as you travel the countryside. You don't see cattle. You don't see goats. You see some oxen. You don't see any kind of rodents. You see very few living things except for people, and these people are hungry.

They're facing a major disaster. They want more of a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that if we're wise, you know the country's been closed for how long now? Sixty years?

I think if we're wise and we work with them in a way -- especially with humanitarian aid -- I think it will be better for all of us, especially for our troops over there.

So with that, Mr. Chairman, I'll just finish my statement by saying I appreciate your efforts and certainly your focus, and so many senators, especially Paul Simon, Senator Murkowski that visited North Korea. They set the stage.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And they've been amazing things at least opening up a little bit. I appreciate your concern and I'll be glad to try to answer any questions.

THOMAS: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 do appreciate your efforts in this area as well as in other areas.

I just -- the thing that occurs when you look at it in total -- you try to imagine how much of the current situation is an immediate disaster, which can happen anywhere and floods and so on, and how much of it is simply the residual result of the kind of economy, the kind of arrangement that they've had here -- how

much of it is an immediate problem that will go away with care, how much of it is a result of the situation. Can you comment on that?

HALL: Well, I'm not an agriculture specialist, but obviously, their system doesn't appear to be working very well. It didn't work well even before the disaster. It's probably the last time they had any major food in their warehouses was probably in 1973, but you take a system where you don't rotate crops, you don't let some of your fields lie fallow, you -- maybe you overfertilize, you have a situation that's going to create, in the long run, probably crops that should be yielding much more than what they're yielding.

You put disasters on top of that and they've had two major disasters in the last couple of years of flooding. Last year's flood produced major damage as far as the infrastructure. A lot of the factories were ruined.

You know, as you drive through the countries, you don't see a lot of factories being operated.

The second thing is, is that with the other disaster that just occurred in July, which is other flooding and chaos, that didn't have a lot to do with the infrastructure because a good portion of the infrastructure was destroyed, especially in the southern part of North Korea, but what it did is it created severe damage to the crops.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bleak harvest.

THOMAS: Thank you, sir. I appreciate it very much.

HALL: You're welcome.

I'm really not trying to move ahead that quickly.

I would, as it seems appropriate for you -- some of the rest of you, to comment a little bit on, you know, how much of what's currently going on is the result of an immediate disaster that needs aid, and how much of it do you think is a result of simply the system there that takes longer terms remedies.

Mr. Minton, would you begin, please?

MINTON: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day to discuss in a comprehensive way our policy towa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ll try to be brief and make the salient points of the longer statement in the record.

The overall goals of this policy are to build a durable peace on the peninsula as a key contribution to regional stability and to facilitate progress by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towards national reunificat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at the very start the place in our policy occupied by close cooperation with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None of our diplomatic achievements with North Korea to date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full consultations with and the firm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partnership has been the basis of this diplomacy and it will continue to be so.

I think over the past four years the combined efforts of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led to a significant foreign policy achie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One only has to look back to 1992, when the world had to focu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 the DPRK denied access to its nuclear facilities to inspect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ary to the DPRK's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mid suspicions that the DPRK had reprocessed enough plutonium for a few nuclear weapons, the North announced in 1993, early 1993 that it would withdraw from the NPT. In response to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quest that members become involved in resolving this crisis, the U.S. engaged Pyongyang at that point in political level discussions.

After many arduous months of negotiations led by Ambassador Bob Galucci, these talks resulted in October 1994 in what we call the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This understanding has produced in our view important results. In fact there was almost immediately important results.

The danger of an active, integrated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receded after this understanding was reached. The alarming atmosphere of military confrontation and international crisis was replaced by a diplomatic process.

For almost two years now the DPRK nuclear program has been frozen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Teams of U.S. technical experts with continuous access to DPRK nuclear facilitie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safely storing the North's spent fuel for eventual disposal outside of the DPRK.

Another element of this understanding was the cre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or in short KEDO. This organization, which is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nuclear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including the supply of oil and light water reactors to North Korea, has grown under American, Korean, and Japanese leadership and seed funding into a truly international effort to support our diplomacy.

Over the past 18 months, KEDO's fundraising efforts have produced \$60 million in contributions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founding three members -- the U.S., Japan, and Korea. KEDO

also has been able to double its country membership from six to 12 countries. This is truly becoming an international effort.

These funds, as you know, Mr. Chairman, are used in large degree to supply North Korea with heavy fuel oil on an interim basis until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To ensure that the oil delivered is used for the intended civil purposes, the DPRK has agreed to monitoring procedures in the DPRK proposed by the U.S.

This impressive international effort continues to be premised on strong U.S. leadership within KEDO.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in our view, for the Congress to fully fund our request for \$25 million for KEDO's budget in fiscal year '97.

We'd like to take this occasion to thank the Senate for restoring this full amount to our budget request. With such a show of American support for its own diplomacy, others will follow and do their share.

In fact the whole endeavor of KEDO and the agreed framework is structured so that U.S. initiative and seed money will serve as a catalyst to generate commitment and the bulk of the necessary funding from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rategy is succeeding. But, as often is the case, there's just no substitute for American vision and leadership in such a project.

Another key element of the agreed framework is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Planning for this is well underway. KEDO has signed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in which Pyongyang agreed to the construction in the DPRK of two Korean-standard nuclear plants built by the ROK.

Subsequently, North Korea has signed protocols to implement this project that will grant unprecedented access to that

country to foreign engineers and specialists including South Koreans who are necessary to implement the projec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U.S. is not contributing financially to the multi-billion dollar construction cost for the LWRs. But as I said before, our continued funding of our KEDO obligations in the sum of \$25 million we have asked the Congress for this year, remains an indispensable symbol of our leadership and the viability of the project.

Very briefly, another aspect of the agreed framework and one where we are still awaiting the results we desire is to spur government to government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this has not been satisfactorily accomplished, KEDO nuclear reactor project has helped to foster a growing indirect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North-South contacts at the technical level stemming in large part from the selection of South Korean prime contractor for the project. And as I said with ground breaking on the project -- we hope later this year -- there will be even greater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But to spur the DPRK to directly engage the Republic of Korea in dialogue, Presidents Clinton and Kim in a summit meeting in Korea in April announced a joint proposal inviting the north to participate in a four-party process of talks and negotiations with the U.S., the ROK, and China to discus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the ROK continue to encourage the North to participate in the four-party talks and we remain hopeful that eventually Pyongyang will accep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note that Pyongyang has not rejected this proposal and continues to explore it.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lso have evolved as Pyongyang has met its obligations under the agreed framework and moderated its behavior to begin to meet international norms. An important example of such engagement is the historic talks we have begun with the North Koreans on their missile program.

North Korea has also begun to address our concerns on terrorism. But perhaps the most striking element of all in this new relationship is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U.S. and North Korean military personnel worked together in July to recover remains of American soldiers from the Korean war in DPRK territory.

The 20-day joint mission resulted in the return to the U.S. of the remains of one American soldier. But we intend this to just be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The second joint recovery operation is scheduled to begin later this month. The U.S., as Congressman Hall explained, has also made a humanitarian gesture of its own towards the DPRK.

The U.S. government has joined with oth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st notably Japan and the ROK, in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o deal with the famine resulting from the floods in the country.

We have contributed about \$8.5 million over the last year. And our humanitarian agencies, AID,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Relief Agencies are in North Korea monitoring the distribution of this food.

And we are confident that this assistance is reaching its intended civilian beneficiaries. Many of whom are children.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s far as the future of U.S.-DPRK contacts is concerned, the agreed framework states

that the two sides, the U.S. and the DPRK,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over time.

Of course, the pace of change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the degree to which the DPRK is prepared to move further along the positive path on which it embarked with the signing of the agreed framework.

In terms of diplomatic representation, the U.S. and the DPRK have continued to 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liaison offices in Washington and Pyongyang. This would be a very practical benefit to both sides, but especially to the United States now that more and more American citizens are visiting the DPRK as journalists, academics, humanitarian workers, and specialist in the canning, remains, and fuel monitoring projects.

In summary, I would like to note again that the positive effect of all this diplomacy over the last several years has been to pull the Korean peninsula away from confrontation and the threat of war, to prepare the atmosphere necessary for achieving a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to create conditions conducive to greater North-South contact, eventually allowing the Korean people themselves to reunify their country, their land, by peaceful means.

Thank you very much.

THOMAS: Thank you.

Admiral Wright.

WRIGHT: Mr. Chairman, it's a pleasure to be before you and represent the Department of Defense. Mark has given a good broad summary, and I'll take, if I may, just those elements of my statement that deal with the military aspects of this because I think that's fundamental to underwriting the successes that

we've had in the last few years in the diplomatic front.

That fundamental truth that the U.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powerful success story. It continues to be an extremely solid relationship. And I believe an relationship from all becomes possible.

The peace and stability fostered by our close security ties have greatly benefited both countries and contributed to an economic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largely, South Korea has risen from the devastation of the Korean War to become a global and regional model.

The need for a combined U.S.-ROK military command and forces to protect our common interest is more compelling today than ever before.

North Korea's larg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continues to pose a challeng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wo-thirds of its 1.1 million military personal are positioned within a hundred kilometers of the DMZ. With a substantial artillery force posed and capable of striking Seoul without any warning whatsoever.

In addition, North Korea possess missile and other weapons programs that heighten concern over its intention.

Without a close defens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e would not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se challenges to our security interests.

It's also a critical time of transition and uncertainty that we give no signals to North Korea that we have somehow changed the calculus of the U.S.-ROK security relationship.

It has served us so well for the last 43 years, that we can't give any indication of change. We must also strongly counter any perceptions in the North that it can drive a wedge between ourselves and our ROK allies.

Our overriding focus on the peninsula, simply put, is to sustain that deterrence and being prepared to respond in the event of a provocation or attack from the North.

The ROK commitment of resources to defense has been truly impressive. But nearly 21 percent of the most recent government budget devoted to the military, including nearly \$1 billion in purchases from U.S. defense contractors.

The ROK maintains two-thirds of million of personnel in uniform and has pledged more than a \$1 billion in material support for U.S. forces on the peninsula over the next three years.

In short, there has not been and never will be any complacency or relaxing of our guard on the peninsula.

General Telele Sink (ph) and his staff are constantly working with his ROK counterparts and colleagues to strengthen our combined deterrent, to talk about every eventuality.

The tight coordination between U.S. and ROK military establishments from fighting positions along the DMZ to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offices of Washington and Seoul ensure the readiness will not be compromised.

The bedrock of peace is, and will remain, a vigilance. And in maintaining that peace, the U.S. and ROK will insist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that ended the hostilities of 1953, remain in effect until a new peace regime is conclud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tempts by the North to undercut the armistice and negotiate a separate bilateral peace treaty with the U.S. should continue to fail.

Thank you very much.

THOMAS: Thank you.

Mr. Minton, what kind of diplomatic relationships do we have beyond the framework agreement?

THOMAS: That one is fairly easy to ascertain but frankly, you talk as if there's a lot of other things going on and what is our diplomatic relationship, and whom is it with?

MINTON: Mr. Chairman, we have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DPRK at this point. If we were able to establish liaison offices, that would be a first very modest step.

However, as a product of the diplomacy of the last several years, as I indicated, we are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on many subjects of interest to the United States -- missiles, remains, of course as you n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Our hope is that, as envisaged in the agreed framework, that over time, the DPRK will take steps which will allow us to engage in a process of normalization with the DPRK -- first liaison offices and then maybe beyond that.

But to get there,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DPRK to continue to alter its international behavior and to address issues of concern to the United States, such as the ones I



mentioned.

THOMAS: The framework agreement is pretty specifically about the control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light water reactor. But beyond that, it doesn't seem as if we have much going. Is that a fair statement?

MINTON: I think, Mr. Chairman, that the agreed framework and its successful effor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was the beginning of a process. The actual agreed framework document -- understanding -- does, in fact, have language on North-South contact, and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t's very general and it allow us to fill in the blanks as we see fit, and it allows us to proceed on a schedule of our own making in the future.

THOMAS: Yes.

MINTON: But it is an opening, and it's an opening we can...

THOMAS: Yes. Has Japan and South Korea agreed to the investment in the light water reactor?

MINTON: Yes.

THOMAS: Their legislative bodies?

MINTON: No, we have not had a formal assignment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ut it is understood that...

THOMAS: But they have not had a formal agreement or understanding or committed the funds?

The funds have not been.... run through their legislative...

his been in effect? saged that and funds, and we're approaching that point now.

And so both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are preparing to submit legislation to their national assemblies.

THOMAS: How long did we commit to provide the oil, heavy oil, and so on?

MINTON: We will provide heavy oil until the light water reactors come on line.

THOMAS: If it's 20 years from now, why, we'll do that.

MINTON: Well, it's not -- we do not plan for it to be that long.

THOMAS: I hope not, too.

MINTON: And I certainly hope not -- don't expect it to be.

THOMAS: But it does -- I guess there is a legitimate question as we've gone. We've talked and we've talked and we've spent money. We've looked at whether the oil is being diverted and all those things, and still the light water reactor is not even committed to in terms of funding.

MINTON: Well, but as I said, we are on schedule. We never...

THOMAS: I see.

MINTON: ... planned to do that until we reached the point of breaking ground. And we're approaching that now.

THOMAS: What -- what is the progress on the four-way talks? Where do you feel that is?

MINTON: I think that the -- it's -- it would be a big step to accept that for the North Koreans, and I think they are taking their time to explore the possibility. We've had a number of diplomatic contacts about it. They have not rejected the proposal. They haven't, of course, accepted yet.

They keep on asking us about the proposal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have offered a thorough joint briefing on the negotiations to the DPRK, and we are awaiting their response about setting up such a joint briefing, which would be a preliminary step to actually engaging in the negotiations themselves.

That's where we are at this point.

THOMAS: I -- you know, I don't -- seem to be critical about the lack of movement but I think sometimes we are a little overly optimistic about -- why is it that Kim has not assumed the official title of his father's post?

MINTON: Well, the reason they give is that the traditional Confucian, Korean 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a great figure, and of course, it will be next summer three years, the three-year anniversary of the death of Kim Il Sung. I see no reason to question that explanation that the North Koreans give us.

I'm sure of one thing, however. Someone is making decisions in Pyongyang, and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leadership is unstable.

Someone decided to sign the agreed framework. Someone has said yes to the joint remains mission to recover Americans lost in North Korea. And someone has said yes to missile talks. And so we're dealing with a leadership there.

THOMAS: Are you a little disappointed in 20 days in one turn?

MINTON: No, I'm not disappointed, Mr. Chairman, because that was only the first mission, and it's an extraordinarily difficult thing, as I understand it -- maybe Admiral Wright will have more to say to get the...

THOMAS: Admiral, what do you think the -- do you think the military has an increasing role in the decision-making in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WRIGHT: I would say, in getting back to the new leader, Kim Jong Il, the one title that he has assumed is the supreme leader of the military. I think there is an important and even pivotal role of the Korean -- North Korean -- military in the regime's survivability. But I think there still probably exists a degree of balance and Pyongyang between civilian leadership and the military. So it's not...

THOMAS: Really. Why do you suppose he assumed that title and only appears -- basically only appears at military installations?

WRIGHT: If I were about to assume the leadership of a country that was in the condition that it's in, I think I'd want to be very sure that the 1.1 million military personnel were working for me.

THOMAS: And you might be influenced greatly by the military?

WRIGHT: Yes, sir. I think that's true.

THOMAS: Yes, I guess that's my point.

What -- now the military is in this food problem that's going

on. Do they have to sustain themselves? Are they provided with food? Are they paid? Are they still susceptible to the discipline of a good military force?

THOMAS: Or do they begin to go into the countryside looking for food? What's the situation?

WRIGHT: Mr. Chairman, this has been the difficulty in North Korea all along, and that is having ground truth. I know your committee had a chance to talk to some of the intelligence folks earlier in a closed session. I can just say here that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military, which had enjoyed almost an exclusive and special position, is probably also having some degree of -- is being impacted by the economic degradation.

They will begin to see in discipline, perhaps, infractions. They have had a special position so there's obviously a rub between them and the people of the country. So without a lot of sort of detailed intelligence-type, and mostly anecdotal -- I think, generally, you can say that, as this continues to go on, there will be cases of military poor discipline and things like that.

As they continue to struggle...

THOMAS: Yes.

WRIGHT: ... looking after their own families and their own survival.

THOMAS: You mentioned the fact that most of the troops are located at least in the vicinity of the DMZ, some on the border and this and that.

Do you still believe, however, that they have the capacity and so on to be an attack force for Seoul and South Korea?

WRIGHT: Yes, sir. I do, simply because of the sheer volume of striking capability. We can speculate on readiness and we can speculate on the success of such an attempt, but the raw capability of some 10,000 artillery tubes and thousands of rocket launchers that have an ability to be able to range on Seoul tells me that they can certainly clear a path and start an offensive movement.

It's our belief, with the effective deterrent that we've assembled on that -- on that peninsula that we would be successful in containing that devastation, and eventually winning out over it.

But it doesn't give me any feeling that they're not able to pull off a pretty devastating offensive strike.

THOMAS: Is it likely that -- or less likely -- that, you know, being driven to sort of an economic crisis would cause military action to be sort of a resolution or a solution to the economic problem?

WRIGHT: There is certainly going to be a degree of desperation, perhaps, with the severe economic stress. To the extent that the deterrence of the U.S. and ROK forces is maintained in a high, impeccable and formidable manner, it seems to me that even in a real condition of almost lashing out, there may be some rational thought that this is a losing proposition.

WRIGHT: So I see today keeping that deterrence and our focus on deterrence is more important perhaps than when it wasn't quite as clear, but they're undergoing some economics trauma...

THOMAS: One of the concerns is that what they do might not be a result of rational thought.

WRIGHT: Understood. I think the measures that Mark was talking about in which we began to get a bit of a look and opening up that closed society, began to perhaps bring to their minds a degree of rationality, or at least removed this isolation that...

THOMAS: Somewhat of a maybe difficulty in maintaining it in tone. Why would they then have these intrusions into the DMZ and the repudiation of the arms agreement?

WRIGHT: I think that this is -- personal opinion -- I think it is part of an attempt to drive a wedge between ourselves and the ROK. They are essentially checking our reaction. They want us to engage them bilaterally in some form of follow-on peace accord. And of course that's not the right route to a final solution on the peninsula. So I think it's a test.

THOMAS: Checking our reaction seems to be a sort of a worldwide phenomena here lately, doesn't it?

WRIGHT: Sure.

THOMAS: What would be your guess as to the long-term maintenance, maintainability and sustenance of the communist regime in North Korea?

MINTON: Do you mean in terms, Mr. Chairman...

THOMAS: Do you think it's liable to be sustained? Do you think it's liable to be able to persist? Do you think it will continue given the economic problems that are there? All those kinds of things.

I'm sure you don't know, but you may have...

MINTON: (OFF-MIKE) I don't know.

THOMAS: Of course.

MINTON: But I think our policy is geared toward the reality we face, and I think it's well designed for that, so that no matter what the eventuality, I think we are, the combination of strong military deterrence and giving the North Koreans diplomatic options to deal with their problems and to open to the outside world is a good strategy, no matter what happened.

THOMAS: It says in the paper, very confidential stuff in the newspaper, say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concludes that North Korea's communist regime is unlikely to persist."

MINTON: Well, that's one of many opinions about what might happen. (OFF-MIKE), Mr. Chairman.

THOMAS: I understand that. I understand that. Thank you very much.

I think it's very important really, and personally, in the case of North Korea, as in the case of anywhere else where there's an instability, that we do try to stay in touch with what's happening, that the Congress is kept up to date on what's happening, and obviously that you are, and that's one of the purposes here. And I suspect we'll do this again as this continues so that we can stay in touch.

Thank you very much, both of you. Appreciate it.

Now, let's see. I'll go back where I was trying to go before here with panel one.

THOMAS: Panel two, Ambassador Lille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Mr. Stanley Roth the Director of Research and Studies for the U.S. Institute of Peace; Ambassador Robert Galucci who



now is the Dean of Foreign Service, Georgetown University.

Ambassador Lilley, I understand you have some time constraints. And so, if you would begin we'd be grateful.

LILLEY: Thank you, Mr. Chairman. I will try not to be confrontational on this to start off with. But, I do think the record has to be set straight on some of the testimony you've just had. I got the impression that the world started on January 20, 1993.

I would like to advise people that it did not. That in 1991, '92 that there was considerable movement on a North Korean problem. I'd like to remind people that the first political talks did take place in January, 1992. That two very significant agreements were sign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1991 on reconciliation and denuclearization including the banning of reprocessing.

That inspections were carried out. That inventories were received. And that North Korea had ratified a safe guards agreement which it resisted since it joined the NPT which it did previously.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that fact that the agreed framework was part of our continuing process that started quite a bit earlier.

Number two, I would like to comment that I was given the privilege of going to North Korea in January 1995. My impressions were not exactly the same as Congressman Hall. I certainly discovered an oasis of opulence. That there was a huge socialist structure in that city that the military to me looked well fed. There was grim poverty-stricken areas, lack of goods, and the military presence was everywhere.

Third, I would just like to just comment briefly on a number of conversations I've had with my Chinese friends in the PRC.

I do have friends there. And that the Chinese assure me that North Korea will not collapse in either the short or mid term. That the political control there is very strong and that Kim Jong Il is on top. I might say the Chinese did predict the food crisis as early as 1993.

They are very aware of what happens when you have a very failed agricultural structure combined with natural disasters. They had this in 1959, '60 and '61 the Great Euford (ph) where they lost many, many people for very stupid, lunatic, social engineering projects. But, they recovered. They did not get aid. They recovered on their own. And they eventually established a sensible agricultural policy in 1978.

The Chinese comment that their diplomats are isolated and that if you feel that human contacts are going to change a socialist state, I think this is probably in a number of cases.

LILLEY: In a number of cases it is not true. Certainly, Saddam Hussein's Iraq and Rafsanjani's Iran are indications that person to person contact do not change a regime. China's a different case.

Again, I would not want to be ever considered as a ghoul who tries to take food from the mouths of starving children. Our goals, I think, are shared in the Korean peninsula -- peace and stability, no war, no nuclear weapons, n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ventual unification, and of cours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leading to drawdowns in conventional forces including our own. I think those are common objectives of ourselves, China and South Korea and Japan.

What I've heard recently is that the corn crop is coming in, the rice crop comes in next month. And that the farming system has gone back to a very primitive nature. It was flawed in the beginning because of its emphasis on collectivization. But,

it's going back to -- let's say -- primitive village-type agriculture. They don't have mechanization. They have to oxen.

And they really have got a continuing problem because it will come back to haunt them next spring. They probably will get through the fall with these two harvests with malnutrition.

Again, I would say that in dealing with North Korea on the food situation, it has been my experience -- and I would defer to my State Department colleagues on this one -- that they have come in with some very exorbitant demands for food in order to meet certain political objectives.

In other words, if you want them to join the four-power talks, they've got a very high material price for it. But, I defer to them. This is things I hear people say. And of continuing demand for inputs that is fed -- wetted by, let's say -- the numbers of grain that we have already given them.

Now just let me run through quickly what my position is. I do think we have given quite a bit of money to North Korea. We are, again, supplying the oil, 500,000 tons a year at considerable cost. We put money into the POW/MIA. We put money into food, humanitarian. We put money into the spent fuel rods. It all adds up, roughly, to \$50 million.

What I'm concerned about is how they use the money they have. And I've put in a few pictures -- bad pictures -- into my testimony because I think this tells you what these people are doing with their money. It's not only that they take 25 percent of their GNP and put into their military and have these artillery pieces and rockets aimed at the South -- with a constant threat that they will use this if they're crossed.

It's the huge socialist structures that they build. The idiotic 150,000-man empty stadium. The 105-story building. The

huge mausoleum to their victory in the Korean War which is a monument of hate against the American Imperialist Fascists.

And you have to read the Pyongyang paper to see this drumbeat of very, very hostile propaganda against us that goes on despite what we do with them on a diplomatic level.

I know that some people say just let them shoot off their mouths, this is sort of funny and cute. It's not, given the track record. They have a very bad track record, as you know, in terms of their past. They have carried out terrorism -- less so recently, and I think that's all to the good.

But I am concerned about bargaining techniques with the North, and I noticed that in the agreed framework there's a very closely built-in quid pro quo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at's why I think KEDO and the agreed framework have been reasonably successful and that's why I support it.

But when you throw money at them in terms of food and you don't have it conditional, as you did, let's say, in the Hoover Commission to Russia after the starvation of Ukraine where we controlled it very closely and saved millions of lives, I just don't see that happening here. Even under Stalin we had that sort of control of the program because Hoover would not tolerate anything else.

The other aspect that's disturbing, and of course you can blame this on weather and you can blame it on faulty economic structure, but they aren't going anywhere. Agriculturally they have not taken the key moves that you have to take to reform agriculture. As somebody said, to put in food now you're just keeping the hemorrhaging going because you'll have the problem next year, they will not have solved any of the problems. So that's why I'm a little bit hesitant on that.

Let me say this. I think it's a good idea that we establish liaison offices under the right condition. I think we should do it soon, because I was in the first liaison office in Beijing, and although we were very isolated I think it paid off in later years -- certainly in terms of today.

I think we should certainly consider lifting some of the economic sanctions. The North Koreans are using this as an excuse for many of their difficulties. They're blaming it on our sanctions in much the way Cuba does, and for their own failures.

Lifting up economic sanctions puts the North Koreans in touch with, I presume, tough, hard headed businessmen that will strike deals -- magnazite, for money, that kind of thing. And I don't see anything wrong with that because I think that opens up the right areas.

I think we have to watch very closely what we do with them on the missile. I'm glad we're having talks with them, but these people, as far as we know, and it's very hard to track, are still exporting SRBMs to the Middle East, and this is a very bad situation, it doesn't help anybody.

Finally, I certainly agree with Admiral Wright and Mr. Minton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key factor in this and that the eventual solution lies in a reconstructed North-South dialogue leading to a major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the refurbishing and reform of North Korea.

I think President Kim Young Sam, as Congressman Hall has pointed out, this \$350,000 move towards North Korea is a good symbolic step, but somehow you have to get a more reciprocal situation, and I don't think we've quite reached that point yet.

Thank you very much.

THOMAS: Thank you, sir.

Roth.

ROTH: I want to begin by thanking you for this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oday's hearing, and also to commend the subcommittee not only for focusing on these important issues, but for inviting people to testify who disagree with each other. And you'll become clear where some of my strong disagreements are with Ambassador Lilley.

Let me, though, begin with just a disclaimer about my own remarks. The Institute of Peace does not take policy positions. Its statute, Congressionally passed statute, does emphasize and stress that we should testify before the Hill, but any policy recommendations that I offer today are my own, not the Institute's. I offer them in a personal capacity.

Second, in my statement, I try to stay away from some of the immediate issues of the day, four-party talks, KEDO and the like, and focus more on bigger issues, as will become apparent in a minute. But I did want to say in passing that I want to strongly support the State Department and Defense Department's call for full funding of the KEDO agreement.

That in addition to the obvious, that if the nuclear agreement falls apart, that we're going to be back in a potential crisis situation that will dwarf the costs of the heavy fuel itself. There's also the point of principle, if we renege on a point in agreement with the North, it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to pressure the North to implement its own agreement.

And at a time when we're trying to get the North to the negotiating table in four-power talks, it makes little sense to

suggest to them that even if they negotiate something, but that we're not going to implement it. I think we have to look at the spill-over effects if we don't fund that agreement. Having said that, with the two great experts, Ambassadors Gallucci and Bosworth here on the nuclear issue, I won't make any additional comments on the nuclear scene.

I think the beginning of wisdom where you need to start from in thinking through North Korean problems these days is to recognize the changed dynamic of the geopolitical landscape. What we are talking about now is a weak North Korea, not a strong North Korea.

Instead of talking about invasion with a realistic chance of North Korean success, something that Ambassador Lilley had to cope with in a real sense much of his career, we're now arguing mostly about whether they're going to collapse, and how soon, and what does it mean. It doesn't mean collapse, by the way, is inevitable. Doesn't mean can predict it. But it's certainly possible.

But what I'm basically arguing is that we can't be on intellectual auto pilot. We can't only be focused on the scenarios of the past. In the past, we have focused on, of course, military deterrence. We've focused on peaceful reunification and North-South dialogue as the means to that.

Well, if North Korea collapses, North-South dialogue, by definition, becomes irrelevant. I'm not saying we should give up on North-South dialogue, but we have to consider new contingencies, new scenarios.

So, in a sense, the situation has become much more complex, because we have to do at least two major things at once. We have to try to achieve the best outcome, the best outcome being a negotiated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at

leads to peace, that leads to economic reform. And in the context of that, economic reform leads to significant assistance from Japan, Korea, business community to the North, and an agreement that leads to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ultimately to peace.

That's the best outcome, and of course, we're right to try to achieve it. But at the same time, the U.S., the ROK in Japan, need to spend a lot of time preparing on contingencies. What if North Korea does collapse? What does it mean? Are we ready for it?

My second point that I emphasize in the paper is that from a security perspective, a weaker North Korea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greate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counter-intuitive as that may seem. I think you were right to focus in your questioning upon is there a threat of an attack out of desperation?

The point, I think, is not that North Korea can have any expectation of launching an attack now against the South and succeeding, i.e., conquering it. They have to know, with no international port, with no economic base, they don't have fuel.

They don't have food. They don't have any means of quick, logistical support. They can't win a war. But they could achieve a much different objective if they make the miscalculation that by launching an attack with their still significant military capabilities and seizing a piece of territory, that they can then hold South Korea, the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hostage somehow for economic benefit.

In other words, they could launch an attack, not based on the premise of victory in terms of conquering South Korea, but rather on getting benefits in exchange for returning to peace. I'd say it's a ridiculous scenario in a sense, it seems



implausible, we certainly hope the North doesn't make those decisions, but we've seen other dictators and dictatorships spectacularly miscalculate. Calling the invasion of Kuwait comes to mind, is another scenario that made no sense but happened. And so I think we have to see what can we prevent the north from reaching this decision.

Part of the key to that is deterrence and I strongly support Admiral Wright's statements about maintaining deterrence. But the other part of the equation is trying to -- considering whether we can take steps to make the north not reach that sense of desperation. Or, to put it in better English, do we want to see North Korea start starving? And it's at that degree of desperation at which point they might conclude that they have nothing to lose by going to war.

So I think we have to deal with these issues. In addition to the question of a deliberate decision to attack, I think we also have to do a lot of thinking about contingencies where we could have inadvertent conflict. And here the institute has held a lot of sessions trying to help the administration thing through what are some of the new contingenc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we never had to worry about before.

What are the threats to peace? For example, if North Korea starts starving and refugee flows are generate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o China or to Japan, this is a potentially very dangerous scenario. What if refugees approach the DMZ and North Korean troops start shooting at them? Does the South intervene? Does the U.S. intervene. Do they intervene together? Does that lead to a full scale conflict? That is a scenario that I don't consider necessarily farfetched.

What if a North Korean military unit fell short of food, decides to attach another unit's move to intercept them? Once again, do we intervene? All I'm suggesting -- I'm not saying --

we can all invent unlimited scenarios -- but the point is we have to think through some contingencies that could lead to conflicts and be prepared for them.

The third main point I would like to make concerns the objective of our policy vis-a-vis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agreed on what we call a soft landing as the desirable goal. Meaning that, rather than trying to collapse the North Korean regime, bring it down sooner, the fear is that both because this might be violent and because it might be extraordinarily costly it would be better to try to stretch out the period for unification, negotiate with the north for economic reforms, in the context of those reforms provide assistance to raise up their level and then achieve an agreement on reunification, i.e., a soft landing. That is our stated goal, our policy.

Of course, people are free to disagree with it. Some people think the sooner we bring them down the better. But once again, recognize the risk. No guarantee that a collapse scenario for North Korea will be peaceful.

But then, fourth point, we have no guarantee that a soft landing is achievable. Here I find myself in agreement with Ambassador Lilley. I mean, the North has shown no willingness to undertake fundamental economic reform, and thus far no willingness to negotiate with the south. In that context we're not going to provide significant aid. It's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American public, the South Korean public or anybody else to do it without some benefit coming from it.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alternative? Is it a hard landing? Is it the collapse? And then the last major point I try to make in my paper is that we may end up at an interim stage. I use the peculiar phrase a softer hard landing. And what I really mean is buying time. We may end up having to do

something -- we may decide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o provide North Korea with food if they do indeed face starvation next year. Not only on a humanitarian basis, but rather because we think that failing to provide food could lead them to make the desperate decision to attack the South. So we have to think through the food issue as a national issue, not just as a humanitarian issue.

Two points on that: One, obviously it would have to be monitored. We cannot just give the food to North Korea. If we do we would have every expectation that it would be diverted for significant portions of the military. If they don't agree to the monitoring we shouldn't give it.

And finally, I don't envision the United States being the main donor. I would like to think our humanitarian impulses might let us contribute more, but I would think Japan, Korea and China would be certainly the main participants. To the extent possible it should be a multilateral effort. But the point is, I argue in my paper, that it's not in our interest to let the North Koreans start starving.

I distinguish sharply between food aid and all other economic aid, where Ambassador Lilley and I are in agreement. They have waste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f not billions. They do spend too much on defense. I would not throw away good money after bad on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y reform. But I think food is different.

Thank you.

THOMAS: Thank you very much.

Ambassador Dean, whichever. At any rate, it's very nice to see you again and I appreciate very much your coming. If you would comment, please.

DEAN: Thank you, Mr. Chairman,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this morning. I'd like please for the written statement I've provided to be made part of the record.

THOMAS: Absolutely.

DEAN: Mr. Chairman, before looking ahead to policy prescription about where we ought to be going, I'd like to just look back over my shoulder just for a minute about where we have come from. It seems to me that in the last two years since September of '94 a lot has changed and in a way a lot has happened and maybe more than we had any right to expect in terms of progress. But on the other hand, certainly less has happened than we might have hoped in those two years.

In September of '94, just two years ago, before we negotiated the agreed framework, the North Koreans were still on the course of withdrawing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y were still saying they would never ever accept special inspections to clear up their past nuclear activity. They had spent fuel in the pond that we estimated contained maybe 30 kilograms of plutonium, enough for five nuclear weapons.

They had a five megawatt reactor that they are just preparing to refuel. They had a 50 megawatt reactor which they could finish, we thought, in about a year or two. And they had a 200 megawatt reactor which was a little more problematic, but maybe could be finished in three, four or five years.

In other words, we were looking at a nuclear program which we estimated could be producing about 150 kilograms, or maybe 30 nuclear weapons worth of plutonium each year by the end of the decade. Moreover, we had no obvious way to stop that program from proceeding, short of military action. We were headed on a course, if the negotiations failed, of sanctions, but we

certainly weren't absolutely conflict -- excuse me -- absolutely confident that sanctions would have the desired effect.

The president had essentially said that he would not tolerate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so the alternative to a negotiated outcome seemed to be the military action which had the prospect also of expanding into a wider conventional war with the prospect of large casualties, civilian and military. None of that happened.

It's been two years and in that two year time the North Koreans have put aside their intent to withdra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y have committed to do everything the IAEA says that they have to do including special inspections before they get the significant components for those light water power reactors that they are supposed to get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ey've frozen construction on the five megawatt -- excuse me, on the 50 and the 200 and operation of the 5 -- they've frozen every element of that nuclear program, even their processing plant. The freeze is monitored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at spent fuel, which contained the plutonium which could be the source -- nearest term source of nuclear weapons material -- is being canned right now by us and them together for eventual shipment out of the country.

So on the one hand it seems a lot has changed in two years. But there are two hands and certainly the threat that North Korea poses to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o our 36,000 Americans who are deployed in Sou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heir forces are still forward deployed. The artillery can still range on Seoul.

The possibility of continued ballistic missile component exports or even range ballistic missile exports in the future

threaten not only Asia, but other regions, particularly the Middle East. And there does not seem to be much prospect of changing the conventional situation unless there are North-South talks.

And here of course we come to what I guess I would call the key failure so far in producing the change we all hoped would come about as a result of the step of the agreed framework. And that failure is the failure on the part of the North to proceed with the dialogue with the South, which is of course part of the agreed framework.

We have had some contacts. We've had some small steps taken between North and South.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has South Korean nationals on their senior staff and when KEDO negotiates the supply contract, for example,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e associated protocols,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are essentially negotiating with one another and there is contact.

Indeed, the site preparation work at Sinpo in the North for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is going to involve by this time next year maybe more than 100 South Koreans, engineers working in the North. South Korean firms have been allowed by the Kim government, the ROK, to do some business in the North. So there have been some North-South contacts, but these don't add up to the political level dialogue that we all talk about when we use the phrase North-South dialogue.

Looking ahead, I'd like to make five points briefly. The first is about the agreed framework. It seems to me that we need to make sure that as we proceed and try to get the dialogue going and do other things in our dealings with the north that we preserve and in fact insulate the agreed framework. That that's worthwhile doing because we do not wish to have the nuclear issue rise again. We've put that in essentially cryogenic

arrest and it's a good place to keep it. And we ought to be careful about that, I think. We have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but I think we should try to make sure that the agreed framework stays in place.

And the second part of that of course is that that means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for our part we do what we have agreed to do.

And that means that we need to continue to encourage our European and Asian and other allies -- and I would also say the United States Congress -- to provide the funds necessary so that heavy fuel oil that's to be delivered is, in fact, delivered on time.

That's a pretty good deal I still think. And also, of course, when the agreements are in place, it will be importa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 South Korea and Japan proceed with the financing of the steps so that the light water reactor project continues to proceed on schedule.

I'd also make sure that the North understood how seriously we would view any export of extended-range ballistic missiles. Indeed, how seriously we view development of extended-range ballistic missiles. But, export is a special problem.

A third point here is North-South dialogue itself.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expect to continue have to play some role in promoting that dialogue as we have joined South Korea in proposing the four-party talks.

We have to recognize as we do that, that this presents not insignificant problems for Kim Il Sung's government. That in South Korea, the politics of this are such that the government can expect to be charged with weakness for entering negotiations, charged with making confessions when mutual

compromise is, in fact, more to the point.

In short, I think a serious amount of political courage is going to be required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I hope and pray they're up to that. I think the United States should continue to be in a position of promoting this dialogue, taking the initiative when necessary and confident that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indeed, very solid based as it is on mutual self interest.

A fourth point about the current impasse. The nexus of food aide and relief from sanctions -- U.S. sanctions on commercial dealings with North Korea and the talks, those three pieces coming together. It seems to me that linkage with respect to humanitarian assistance is just about always a bad idea.

It's bad ethically, morally and it's bad politically. And I would argue that we assess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respond to it on humanitarian grounds. And that we, the Japane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and ideally,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but certainly, at least, ourselves -- ought to respond on humanitarian grounds without any linkage to political issues.

With respect to sanctions relief, however, I am less worried -- would be less critical -- of linkage of sanctions relief to the initiation of talks. Now that linkage can take any number of forms. But, I think we should be expecting the North to go ahead and say "yes" and engage in talks with the South. And I think, in the course of that, we should be prepared to give some more sanctions relief.

Finally, more generally, looking for some way to characterize what I would like to see in American policy towards the North, I guess I'd call it patient engagement with a military posture



unambiguously strong in defense and deterrence.

By patient engagement I mean not ignoring the North. I think ignoring the North or adopting even a policy of containment would be a mistake. The North Korean system, political, economic, has flat-out failed. Everybody knows that, I think including the North.

The Republic of Korea, the South has won in the old contest between North and South. The only question now is how change will come about. I really do believe that inevitably, North and South will become integrated and unified. The question is, how that happens.

And we, in the South and others, I think, need to work to have that happen in a non-violent way ove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ank you, Mr. Chairman.

THOMAS: Well, thank you very much. The three of you have covered it very well.

Mr. Gallucci, do you think the framework agreement, which I think obviously is fairly limited in its scope, is used by the Koreans as leverage to do other things? In other words, we're not going to play with the framework unless you do this and unless you do that?

GALLUCCI: I anticipate -- I have not been involved in, since I left government, with the issue, with the North directly. But I think we should expect the North Koreans to use every bit of leverage they can think of. I mean, Ambassador Lilley referred to the attempt to insist on food aid before proceeding with talks. I wouldn't be at all surprised if they attempted to use the agreed framework in their compliance with it.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in my experience, negotiators. And what we have to be careful of is exactly what position we take. I'm very interested in preserving the framework. I'm not interested in being blackmailed.

And I think we have to avoid that, certainly, and there's no reason why we can't. We are in a very strong position and they are in a very weak position.

THOMAS: What do you mean by when you say if there are missiles being exported that we would forget your words? But look at that very seriously. What does that mean? Is that diplomatic talk?

GALLUCCI: It is intended to be diplomatic talk, because I don't think I should be more specific than that. I think, clearly, we should go ahead...

THOMAS: Excuse me for interrupting.

GALLUCCI: Please.

THOMAS: You said, we would go ahead with everything we've agreed to, despite the fact that they continue to do something we don't agree with? Is that serious?

GALLUCCI: No, what I would -- first of all, I don't know that it is a terrific idea to put out on the table exactly what our response would be were North Korea to export extended-range ballistic missiles. I'm not going to speak for the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will speak for itself.

My own view is that that is a qualitative -- were that to happen, and I have no information that it has happened, that would be a qualitative change. We need to discourage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 that extended-range ballistic missiles, exported to the same countrie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in the past exported components of ballistic missiles to, if we can sort out that sentence, would be very unfortunate in terms of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we have to make sure that doesn't happen.

THOMAS: It's always a puzzle, I think, for us non-diplomats to understand some of these things. And I guess I try to recognize the fact that you can't be too precise about something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But on the other hand, it seems to me that that's what foreign policy ought to be, is sort of being able to enunciate to someone what they can expect from us if they do certain things.

GALLUCCI: I think -- Mr. Chairman, I think at certain times that's exactly what happens, and at other times, there's an ambiguity that's left for very good reasons.

But I think certainly there have been times when some very specific red lines have been drawn.

THOMAS: Yes. Well, it's confusing and always on the news or the TV, someone saying we'll look at that very seriously.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I don't understand that.

Ambassador Lilley, what would you do -- and I think you stated kind of how you would formulate policy somewhat. Would you do that a little more in terms of -- I guess there's a little difference of view here in the humanitarian versus the longer-range thing. Would you comment on that a bit more in terms of how you would enunciate your policy so people would know where we are?

LILLEY: Certainly, I think that three points are important. Namely, you support the framework. You meet your commitments

under the agreed framework. That is something that is important. KEDO is one of our accomplishments. It's moving ahead. It was constructed so there was a built in quid pro quo. It was a -- it was done in that way, and I think that deserves our support.

The second thing is I do think that we have to negotiate the lifting of sanctions on the economics of North Korea. This is an area where I do think policy fails when you try to isolate this country from some of the simple moves you could make to make the economy work. And we have got very little to lose on this one.

And I think the third aspect, of course, and here I respect Ambassador Gallucci's negotiating talents very much. But I do that in terms of separating so-called food aid from what they do, in my experience, is not a very effective move. Because if you do this with the North Koreans, they will not respect you, because they can't understand anybody who they vilify the way they do us and use the military blackmail, as is articulated here by Stan Roth and Admiral Wright. If they use that, they really don't get it when you give them food. And they've shown you these disgusting mausoleums that they built that thumbs their nose in your face.

And if -- and what it has resulted in is these obscene requests for more, and these linkages that they make in their own system. Why, I would say in this particular case, you might have the North Korean exception in how you managed your gifties (ph) to them.

It seems to me the important player in this operation, in my view -- South Korea, of course, Japan -- for its purposes, is China. And China has a very high stake in what happens in North Korea. And the flood of activity that's taking place across that northwest border is really something now.

seriously.

THOMAS: What if they agreed to peacefully be two Koreas?

ROTH: The Korean people -- the leaders of the Korean people choose two separate Koreas, that's you know, a perfectly acceptable outcome to us. I hope it would be accompanied by other steps such as the enormous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genuine trade, tension reduction -- measures of that in not merely replicating the current unsatisfactory, unstable regime.

So, I don't believe that is the wish of either side of the peninsula.

But, anyway, if you can't get the maximum goal -- and I'm dubious that the North is willing -- I think the North is terrified of absorption. I think it's thinking East Germany constantly.

And to me that's the reason, I think, they haven't come to the table despite the fact that the South has openly said President Kim's very forthcoming speech August 15 said if they come to the table the South can provide very generously which the North desperately needs.

Yet they're not willing to do it yet. And they may never be willing to do it. And I think it's this fear of absorption, don't bring any strength to it. In that case, I think we have an obligation to, at least, think through, you know, what are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this.

One implication is that the North by virtue of its failed policy -- and here Ambassador Lilley and I agree the North has failed -- in about every way, economically, politically it's internationally isolated, pretty unsuccessful record. And in that case, there is a real risk that they will collapse.

We have to decide it that's dangerous. If so, how we want to respond to it. I guess the reason you characterize my thinking as softer because I come out for the unconditional food aid. And I've done that because I believe it's not only a humanitarian gesture -- and I hope I'm as humanitarian as Bob -- but also because I think it'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at I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of a desperate North Korea. I think they're is a risk of starvation next year. Not a certainty. China may bail them out. But, it may not. And I don't think it's in our interests to find out what a desperate North Korea will do. Binding the humanitarian and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 would just as soon see us go ahead with food. But, hang tough for conditionality on the rest.

THOMAS: You would apply that humanitarian aid to any place in the world, then, that needs it? Our responsibility is to provide for that?

ROTH: Well, I'm not saying unilaterally. I'm talking about an international effort. I think the track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s to that. We've provided food aid under many different administrations for some very despotic regimes. But, I would accept, eagerly -- and that's under the condition it has to be monitored -- we can't be in the business of feed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THOMAS: Thank you gentlemen. Appreciate it very much.

Well, our third panel end, if you please, Dr. William Taylor. Senior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mbassador Gregg, Chairman of the Board, The Korea Society.

In terms of the trade that's going on, in terms of the food that China's pumping into them. Because they know that if this thing blows apart, there are going to be probably hurt as much as anybody. And it's very great concern to them. They've spelled this out very carefully, and they have their game plan of how they work out their tactical moves in the North.

Namely, they do feel it's in their interest to have this buffer zone up there, surviving and gradually reforming over the next 10 or 20 years. And they do see that a socialist state up there is to their interest. They don't really want 60 million Koreans looking down their throat into Manchuria.

But they do agree with us on the strategic objective.

DEAN: And in this case, it seems to me they will go their own way, they will ac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s they always have. And they won't attach themselves to what they consider some rather questionable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They always disagreed with sanctions, passionately almost. They make other criticisms of what we do but basically they understand what we're trying to achieve.

The last thing that they want is chemical, biological, long 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ecause they know them much better than we do. And this gives us, it seems to me -- over time, understanding their peculiar characteristics -- real leverage in managing the soft-hard landing or in establishing a negotiating framework with the North where you bring to bear your maximum leverage to get things done. Because the North Koreans do understand when they face superior force and they are inclined to make the compromises. We have case after case after case of that all through the negotiating period since 1953, or even in '53.

I would just say -- make one more point, I just was reading a paper by Ms. Weathersby (ph) of Florida and whose gotten access to the Stalinist archives during the Korean war. And she points out based on Soviet archives that the North Koreans and the Chinese wanted out of that war after they began to be chewed up by Matt Ridgeway (ph) and they'd had enough. But it was Stalin himself that kept that war going because of his own strategic problems with the United States.

So, North Korea -- and I just point this out -- North Korea knows when it has enough, has had enough. And I don't think they're as irrational as people say they are. They are very cunning, very calculating, very oriented towards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and I think that's what we have to base our policies on.

THOMAS: Mr. Roth, I suppose there are differences of view on policy. As I hear you all talking one is the peace on the peninsula is really the issue and so that would mean if the peace remained we would be fairly passive about what's going on rather than aggressively seeking change.

You seem to have a little softer view maybe than the others in terms of our position. What would be your goal? What would be your policy goal in terms of North Korea in the 10 to 15 year period?

ROTH: I would like to do two things simultaneously. The more desirable outcome is to see if we can do what we've always tried to do, ge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not just a wish of the Korean people but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because it would end the threat to peace. The means of doing that, of course, by negotiation, that's the desirable goal.

As I pointed out, the North doesn't seem willing to engage



seriously.

THOMAS: What if they agreed to peacefully be two Koreas?

ROTH: The Korean people -- the leaders of the Korean people choose two separate Koreas, that's you know, a perfectly acceptable outcome to us. I hope it would be accompanied by other steps such as the enormous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genuine trade, tension reduction -- measures of that in not merely replicating the current unsatisfactory, unstable regime.

So, I don't believe that is the wish of either side of the peninsula.

But, anyway, if you can't get the maximum goal -- and I'm dubious that the North is willing -- I think the North is terrified of absorption. I think it's thinking East Germany constantly.

And to me that's the reason, I think, they haven't come to the table despite the fact that the South has openly said President Kim's very forthcoming speech August 15 said if they come to the table the South can provide very generously which the North desperately needs.

Yet they're not willing to do it yet. And they may never be willing to do it. And I think it's this fear of absorption, don't bring any strength to it. In that case, I think we have an obligation to, at least, think through, you know, what are the possible implications of this.

One implication is that the North by virtue of its failed policy -- and here Ambassador Lilley and I agree the North has failed -- in about every way, economically, politically it's internationally isolated, pretty unsuccessful record. And in that case, there is a real risk that they will collapse.

We have to decide it that's dangerous. If so, how we want to respond to it. I guess the reason you characterize my thinking as softer because I come out for the unconditional food aid. And I've done that because I believe it's not only a humanitarian gesture -- and I hope I'm as humanitarian as Bob -- but also because I think it's a national security issue.

That I worry about the consequences of a desperate North Korea. I think they're is a risk of starvation next year. Not a certainty. China may bail them out. But, it may not. And I don't think it's in our interests to find out what a desperate North Korea will do. Binding the humanitarian and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I would just as soon see us go ahead with food. But, hang tough for conditionality on the rest.

THOMAS: You would apply that humanitarian aid to any place in the world, then, that needs it? Our responsibility is to provide for that?

ROTH: Well, I'm not saying unilaterally. I'm talking about an international effort. I think the track record of the United States is to that. We've provided food aid under many different administrations for some very despotic regimes. But, I would accept, eagerly -- and that's under the condition it has to be monitored -- we can't be in the business of feed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THOMAS: Thank you gentlemen. Appreciate it very much.

Well, our third panel end, if you please, Dr. William Taylor. Senior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for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mbassador Gregg, Chairman of the Board, The Korea Society.

And Mr. Steve Bosworth, Executive Director of KEDO.

Thank you very much gentlemen. Again, your full statements will appear in the record. So this is nearly eight, to make them all here. Could we start with you Dr. Taylor.

TAYLOR: Thank you, Mr. Chairman. I, too, have a prepared statement and can keep my remarks less than the ten minutes I was instructed to take. I do start with two bottom lines.

There is a fundamental fact that is behind everything that we do in our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same fundamental fact explains their basic pattern of behavior, which is Brinkmanship.

The fact is that even though in any type of North-South Korean war,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would win that war in two to four months of mid to high intensity conflict. Under present circumstances, Seoul would be totally obliterated in two to four days. And the North Koreans know it. They know, the South Koreans know it, and they know we know it. And that's where that weak country with an economy falling apart, it's people approaching starvation, gets its leverage.

How can this be? Because there is no missile defense of Seoul. And you can ask the question, wait a minute, Taylor, there's seven patriot batteries in South Korea. Well, they're not there to defend Seoul. They're elsewhere to defend the ports and airfields over which we'd reinforce.

Number two, the air defense of Seoul is inadequate.

Number three, counter battery radars used to detect incoming North Korean artillery fire and multiple rocket launch fire are inadequate. You pick up an incoming round, you get on the ASMA

(ph) from which that round came in the distance and you fire salvos back and knock out the North Korean multiple rocket launchers or artillery, we don't have an up on them.

Why is this? Because we have a traditional argument about whose going to pay for it. Iraq (ph) government thinks we will, we won't, and we think they should and they aren't. But the North Koreans get a great deal of leverage in being able to go repeatedly to the brink because they know we all understand this fact. And one of my bottom lines is we should give -- we should provide the capability if not to totally defend Seoul, at least to limit damage to Seoul.

That begins to take away the North Korean ace in the hole, it's another way to say this. Pyongyang ace in the hole is its bear hug on Seoul.

(UNKNOWN): That's got a nice ring to it.

TAYLOR: Number two,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pending famine in North Korea is not our fault, it's not the South Koreans fault, it's the fault of that government. And its lousy agricultural system, a command economy that removes all incentives for high productivity under the workers. They're doing it to their own people. If they opened up their society, if they re-entered North-South dialogue, all

kinds of good things would happen to their people. So, the famine is their fault and we ought to keep that in mind.

Now, I don't happen to think -- we do need to have quid pro quos for the North Koreans for everything that we do. And I think that part of that package should b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I know there are ethical problems with that but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one thing. It's hard ball, it's pain pure and simple, that is their style of negotiating

and action.

Now, ask yourself a question, what could be worse than starvation for all these people. Let me tell you what it could be: Concentration camps, hundreds of them in North Korea with probably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 in anywhere in the world, worse than China, worse than any country in Africa.

CSIS has undertaken a study of North Korea and human rights. We've had several reports. We've been working with Amnesty International. We worked with the international Red Cross. I've just come back from a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Northeast Asia. Their record is terrible. But what do we do about it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We write reports in the State Department and every report talks about the North Korean closed society and how little we know, which sort of undermines what the report says about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But we don't bring any pressure against the North Koreans for their human rights. Why don't we? I've been to North Korea four times -- a week each time -- I've traveled all over the country except for the Chinese border by plane, train, automobile. I've had hundreds of hours of discussions with their senior leadership, including seven hours with Kim Il Sung in two separate three and a half hour meetings before he died. With the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Kim Young Sam, hours and hours with him. With member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such as General Kim Jong Uw (ph).

I know what I don't know. It worries me to hear comments from people who may have spent a day or two or three in North Korea coming away and talking about the inter-working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who was in control because they haven't the foggiest idea, none, I don't.

Nobody goes anywhere in North Korea except where the North Koreans want them to go. Nobody goes anywhere in North Korea unless you're escorted by a translator, read: Intelligence agent.

Three, nobody can talk to a North Korean especially in Korean without that translator intelligence agent being at hand. The North Koreans will not let you see anything they don't want you to see. Conversely, they want you to see lots of things. For example, the worst cases of starvation in the North to make their case best for getting as much as they can ou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hey're very, very good at this. We have to realize what we don't know. Who is ruling North Korea Kim Il Sung is ruling North Korea from the grave. How can that be? Kim Il Sung is a hero to his people and the North Korean people do revere that man, his memory and his embalmed body in Pyongyang.

Every adult in Korea wears a Kim Il Sung pin. Every child in North Korea wears an emblem, a Kim Il Sung flower. His image is everywhere. The bronze statues in downtown Pyongyang. His portraits painted on big concrete slabs at major intersections.

The people hear nothing but the great exploits of the great leader who beat the Japanese occupation -- brutal occupation -- of 1910 to 1949. They're taught that in school. They hear it day after day on the one pre-set channel radio, which is government controlled propaganda.

The more privileged in the cities who have television, watch propaganda of the old man Kim Il Sung day after day, on the two government controlled channels.

And the workers working in the field, hear the propaganda of

Kim Il Sung blaring all day. Every morning at 6:00 am -- you don't need a wakeup call in downtown Pyongyang. At 6:30 am every morning, no matter where you're staying, these mobile units with loud speakers go by blurting out the Kim Il Sung -- and the propaganda and the greatest are their son, their dear leader.

It's a perverse way to say this, but Kim Il Sung is the George Washington on North Korea. That's the best way for them to say it. But people revere him.

The military and the central committee and politburo know that they need Kim Jong Il the son because the old man said that succession would go to his son. The son is the living symbolism of his father. The son is the image of *juche* philosophy which i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at entire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They need the son there.

On the other hand -- I'm guessing -- why they don't give him the title of president and general secreta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 because if even half of the rumors about that kid are true, he is an embarrassment to them. And if you haven't heard the litany, you're missing something. But they don't want that guy with those titles.

If and when they ever decide to go back into a North-South dialogue in a summit, you're not going to have that guy meeting with Y. S. Kim of the South, or the next president of South Korea. The guy is loony bins according to many of the rumors. If even half of them are true, we ought to worry about that.

I've heard so much about the nuclear agreed framework, and praise for it. I don't like it. I think it's a bad agreement. I think it's a major giveaway program to North Korea. I think it's fundamentally flawed in two aspects.

Number one, the clause in that agreement says the North Koreans will go back in the North-South dialogue, "when the atmosphere is appropriate."

Guess who's going to determine when the atmosphere is appropriate? That agreement has been around since October 21, 1994 -- 22 months -- and there hasn't been one bit of movement toward North-South dialogue. And don't expect it to happen any time soon.

Number two, that agreement says that when light water reactors are 70 percent complete.

Then North Korea will open up its two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in Pyongyang. I'm here to suggest that they won't. Now, how would I know that? Because Kim Il Sung told me so personally. And so did Secretary Kim Yong Sung (ph); so did General Kim Yong Wu (ph) every time I raised this issue.

The answer was always prefaced by the nuclear question, oh, Dr. Taylor, they said the same thing all the time, sang off the same sheet of music. Oh, Dr. Taylor, why do you talk about nuclear weapons? We're a small country, what would we do with a couple weapons?

I always tried to answer and tell them, but they didn't listen. And you keep talking about two nuclear waste disposal sites in Youngbyon and that we should open those up. They are military facilities, Dr. Taylor, and like every other sovereign country, we keep military secrets. We will never open those facilities for inspection.

And yet, the agreement envisions about five years from now, when the light water reactors are about 75 percent complete, they're going to open them up. I don't think they will.



But let's look down the road five years hence. Two light water reactors, 75 percent complete, with the North Koreans then stonewalling and not doing everything they said they would do. And yet, maybe having the option of getting startup technology for those two light water reactors elsewhere. Where? Maybe Russia? Maybe China? Both of whom, from the very beginning have wanted to put the light water reactors in North Korea. I just don't think it's a very good deal.

THOMAS: Can you sort of come to the conclusion here, please?

TAYLOR: The bottom line is I think we ought to do certain things. One, reinforce Seoul now -- get over who's going to pay for it. That'll take away their ace in the hole that gives them the capability for brinksmanship.

Number two, we ought to give them a date certain for reentry into North-South dialogue and tell them that everything depends on the restart of North-South dialogue. If they do it all kinds of good things will come their way -- a continuation of the nuclear-agreed framework; the oil; humanitarian supplies; and much more. If they drop out of North-South dialogue the goodies stop until they reenter.

Thank you, Mr. Chairman.

THOMAS: OK, sir. Thank you very much. OK. Ambassador Gregg, if you will, sir.

GREGG: Mr. Chairman, thank you for holding this hearing. I recall a hearing in the spring of 1994 where the discussion was how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get them back into the MPT and there was a discussion by an atomic scientist from Lawrence Livermore Lab of how we ought to threaten the North Koreans with bombing if they did not go back into the MPT. So I think a certain amount of progress has been made.

My paper makes two fundamental points. One, I think we really need to restore full funding to KEDO and let me tell you why I think that. I think that not restoring full funding to KEDO sends the worst possible signal to both North and South Korea.

To North Korea, it would confirm their own tendency not to live up to most of their agreements. The KEDO framework is one of the few agreements that they have lived up to. In many of the other things, they have not.

And so for them to see us renege on an agreement we have signed with them would confirm to them their own worst tendencies.

With the south, it would be a signal of U.S. inconsistency. It would call into question our seriousness about the framework agreement, which the South Koreans are now realizing is working better than they thought it would.

sts for both impact in North and South Korea to restore full funding to KEDO as soon as possible. I applaud the Senate for having voted to restore full funding, and I wish you luck in the conference with the House.

Secondly, I think we ought to pay a little more attention than we have to the speech made by President Kim Young Sam on the 15th of August. Somebody has said earlier today that it's difficult for the south politically to reach out to the north, but I think in that speech he really did.

He said -- quote -- "North Korea's economic problems can be resolved only through genuine consultation with the south. More than anyone else, we have a strong desire and the capabilities to help North Korea."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statement, and I think we ought to pay attention to it.

Following that statement, President Kim laid out three principle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First, he said no efforts should be made to destabilize North Korea by taking advantage of its economic problems. Second, that Nor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move out of isolation and join the world community. Finally, that reunification of the Korea people should take place without either side imposing its will on the other.

I think that's a very good template for engagement with the north. I think it's one that we should support. And I think we should be very careful not to distract North Korea from the inevitable fact that it has to come to deal with South Korea inevitably.

The problem with North Korea at this point is that they are still looking for a cost-free way to get out of the deep pit into which they

have dug themselves by years of misrule. History does not allow cost-free options to a failed regime. They have not yet come to realize that.

I recall in contrast to that a conference -- a contact I had with a Russian scientist in Moscow in 1988, where he laid out in stark terms what he knew his country was going to have to face -- admission of 70 years of failure, admission that all sacrifices had been in vain, calling on the people to go in a new direction and then admitting to them that things were going to get worse before they got better.

All those things have come true in the Soviet Union. All those things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have go through, but

they cannot and will not admit it to themselves at this point.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are hoping very much that we will save us from themselves.

We cannot do that. We cannot and should not do that. We have to encourage them to walk through the door of reconciliation which Kim Young Sam holds open for them.

Finally, on sort of an irreverent note, I've been dealing with North Korea for a long time, going back to the Korean War and to the Pueblo seizure in 1968, and I always sort of think of an image that would sort of describe what dealing with North Korea is like.

And listening to Bill Taylor, I guess I come down on the fact that dealing with North Korea is sort of like -- what do you do when a skunk has wandered into your basement? You want to get him out. If you take too desperate measures, the skunk can do awful things to your basement.

And so, I think that's sort of the image that I have. We have no particular ill will to the skunk, but it's in territory where it has no business being and we ought to encourage it to get out without having it take its last desperate measures.

Thank you, sir.

THOMAS: Thank you very much.

OK. Let's see here.

Mr. Bosworth, I think, we'll hear from you, sir.

BOSWORTH: Thank you very much, Mr. Chairman.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appear before the

subcommittee.

I am here, of course,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As an employee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 am distinctly not a U.S. government official.

I did not bring a prepared statement. But in lieu of a prepared statement, I brought you a highly informative copy of our annual report -- reporting on KEDO's first year's activities.

I would like to make a few comments, however, which are aimed in the direction of where KEDO is going.

We are still a very new organization. We have been in actual existence for about one year, although our charter was actually signed in March of 1995.

This is not a normal commercial project, to say the least. We are attempting to do some very difficult things in a very difficult politic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We are formally charged with arranging the financing for and providing two 1,000-megawatt light water reactors to North Korea. And we are formally charged with assuring the flow to North Korea of 500,000 metric tons of heavy fuel oil each year.

We have made, I think, very considerable progress since our establishment. We have put in place nearly all of the basic political agreements with the North Koreans that will be required for us to launch work in North Korea at the designated site for the reactors, which is on the northeast coast.

We signed our fundamental supply agreement with the North Koreans last December and we have been in virtually continual

negotiations with that regime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on a series of implementing protocols.

In fact, we are hoping to conclude two protocols that ar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in New York.

These protocols -- we have completed three, one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for KEDO personnel and the employees of our contractors in North Korea, secondly one on transportation arrangements in and out of North Korea for the project, and third on communications for KEDO and its contractors into North Korea.

We are currently negotiating a protocol on the takeover of the site and on services arrangements -- the arrangements under which our contractors will contract for services from North Korea, primarily laborers.

When those two are completed -- and as I say, I expect that to happen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 it will then be in a political position to move forward, establish a KEDO office at the reactor site in North Korea, and begin with our prime contractor -- KEPCO, the Korean Electric Power Company -- to mobilize men and material there to begin pre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some infrastructure work and the construction of housing.

We would then go into the preparation of the site, which involves the leveling of a substantial quantity of dirt, and the actual construction of the reactors themselves.

I would hope that we a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before the onset of harsh weather this winter so that we will, as of some time within the next several weeks, have a permanent KEDO establishment in North Korea.

We have also been delivering the heavy fuel oil to the North Koreans, and by the 21st of October, which is the end of our heavy fuel oil year, I expect that we will have delivered the 500,000 metric tons which are required to be provided in the course of this fuel oil year.

Unfortunately, there is no respite because in November and December, we have to begin delivering the oil that is required next year.

I might say in passing that arranging the financing for the heavy fuel oil has, in many ways, been a more daunting challenge than working with the North Koreans to put the framework in place to proceed with the light water reactors.

Money for heavy fuel oil remains a constant source of concern for KEDO and its member governments. We now have a total of 10 countries who are formal members of KEDO, and we expect applications for membership from several others within the next several months, including I would hope an application for membership from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ctively at this point considering join KEDO.

I might say a few words, Mr. Chairman, about our relationships with the North Koreans. On the whole, I would characterize those relationships as businesslike.

We have, as I said, been in virtually continuous negotiations with them for about 12 months. We probably, as an institution, have had more contact on the outside with the North Koreans than anyone around.

The issues that we are negotiating are very difficult ones and they are not easy to negotiate.

It is not easy to negotiate with the North Koreans, particularly since in the case of KEDO we negotiate as unified entity representing the common but not always similar interests of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 that we expend a good deal of energy coordinating our own positions before we actually begin negotiating with the North Koreans.

But I would say that thus far all the commitments that they have made to us, all of the agreements that they have reached with us, they have met very meticulously. It is clear that their continued compliance with these agreements are -- is contingent upon our continued compliance with the commitments we have made to them.

These mutually reinforcing commitments are totally reciprocal and they are very tightly tied together. They take one step, we take another. We take one step, they take another.

But within that context, within that kind of description I would characterize our rel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s very businesslike. There has been a virtually complete absence of political dialogue, political diatribe and polemic. At this point they give indication of wanting this program to go forward.

So, I would be very happy, Mr. Chairman, to respond to any questions that you might have. And I will, of course, provide copies of our annual report to the subcommittee staff.

Thank you.

THOMAS: Thank you very much. I've forgotten now. What's the size of the light water reactor plant -- output?

BOSWORTH: We are building, we will be building two reactors, each capable of generating 1,000 megawatts of electricity. So,



the total program would be 2,000 megawatts.

THOMAS: Which is not a huge output.

BOSWORTH: It's not a huge, relative to electricity usage in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By North Korean standards it's a sizable percentage of their current electricity.

THOMAS: Yes. I have an idea. You always, and properly say they're adhering.

What about transparency?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of which they do not, which you do have access to pending the completion of these plants, isn't that true?

BOSWORTH: Well, they are subjecting themselves at the moment to IAEA safeguards and they're obviously subject to intense scrutiny by other entities including entities of various...

THOMAS: But not all of their facilities? Not their storage facilities.

BOSWORTH: No. Not the waste storage facility at this point. No. That, as Mr. Taylor indicated is subject to a so-called special inspection when we reach a point of significant completion on the LWR project.

That point of significant completion is designed as the point at which, before which any nuclear components are introduced into the project.

THOMAS: You indicated that -- and as you know, I have supported this framework agreement, and so on. You said it's easier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s in some of these things. The fact is that we're the ones that are providing everything at the moment, aren't we?

What are they doing except accepting what we're preparing to give them?

BOSWORTH: Well, they are adhering to their commitments under the framework agreement, they have frozen their program.

THOMAS: I understand. We're the ones that are providing the oil. We're the ones that are providing the light reactors. We'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build it.

We're doing all of those things, are we not?

BOSWORTH: We being KEDO, yes, sir.

THOMAS: Yes. And they're just accepting it.

BOSWORTH: Well, their mere acceptance goes beyond acceptance because in order for us to do what we have to do, they have to agree to very substantial revision and modification of the way in which they would normally do business and the way in which they would normally treat outsiders.

We, for example, are sending, we, for example, are sending missions from KEDO almost on a constant basis into North Korea. Those missions include South Korea, for the North Koreans have not differentiated among the nationalities which make up the KEDO missions.

They are going to be receiving in North Korea when the project gets going hundreds, if not indeed thousands of South Korean engineers and workers. We are going to have the right for independent communication out of North Korea to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going to have...

THOMAS: With respect to your project.

BOSWORTH: Right. We are going to be able to bring a ship from South Korea directly up to North Korea to bring personnel and material up there. So they have to change the way in which they would normally do business, but you are quite correct, they are receiving things.

THOMAS: I guess my point is that we're dealing with a relatively narrow aspect of the total activities of the nation.

BOSWORTH: Without question.

THOMAS: Yes.

Mr. Gregg, or Ambassador Gregg, couple of points on funding. You indicated there's support for it. What is there -- do you have a time limit in your mind? What if it takes 10 years, 20 years?

GREGG: Well, I, my point, sir, was that we ought to live up to our immediate obligation of restoring the \$26 million requested and not cutting it back to \$13 as the (OFF-MIKE).

THOMAS: Sure. I understand.

GREGG: You see, I think what's going to happen, Senator, is that as North Korean life is opened up -- and KEDO is one way that is opening it up, South Korean investment will be another way that it is opening up -- things are going to change. The North Koreans are desperate to avoid that, but they can't.

So I think it's almost impossible to spell out what is going to happen except that they are going to be forced to change in ways that they don't even envision at this point.

THOMAS: If I understand generally, you're suggesting that

sort of a containment/engagement thing, and over time they will be internally forced to change the way they do things.

GREGG: Yes. And in the meantime, KEDO, the reason I refer to the hearing of the spring of '94, that was a tense time. And my friends 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went through a very tense time. And the KEDO framework has removed that option from the North Korean contingency file.

THOMAS: Yes.

Very briefly, Dr. Taylor, if in fact the United States provided, as you suggest, some sort of a missile defense, whatever, for Seoul, how do you see things, what would you see, how would the atmosphere change?

TAYLOR: Mr. Chairman, I think they'd lose their leverage. I think they will come to the understanding that brinksmanship cannot work the way it has in the past. And I don't see the costs being all that high of doing these things that I'm talking about. But I think the whole diplomatic negotiating atmosphere would change for the North Koreans.

THOMAS: Senator Robb, I'm glad you could drop in. I know you've been busy, and this is our last panel. But certainly if you have a statement or any questions here we welcome you.

ROBB: Thank you, Mr. Chairman. I apologize. We've had hearings that were both a matter of some urgency in both this subcommittee of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as well as the full committee of the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we had former Secretary of State Jim Baker talking about Iraq.

And I guess it's a good sign that in choosing today the situation in Iraq seemed to be more urgent tha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so I opted to remain there and wait for the

questioning.

Because you have had four distinguished panels, and I know and have a very high regard for those who have testified, and certainly the panel before us right now, I will rely on the record for the information from this particular hearing and not take the distinct risk of overlapping the questioning that you have already put to these distinguished witnesses. But I thank you. I think it's a very important.

I have had occasion to meet with some of your witnesses individually and get testimony from them, and certainly their professional writings and input to this committee and to the Congress remain extremely valuable and I appreciate your calling the hearing for this purpose, particularly so that we could have a public discuss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we continue to discuss and raise concerns about privately.

THOMAS: Well, I appreciate it. And I thank all of you. I think it's important from time to time, even though we don't have a crisis -- and hopefully we won't -- to continue to stay up to date as to where we are. The statement from Amnesty International, from the Heritage Foundation, will be made a part of the record, as will all of your statements.

So, gentlemen, we thank you, and adjourn the subcommittee.



*Rajin-Sonbong Will Keep Its Door  
Open To Investors At Any Time*

By Kim Jong U.(북한의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위원장)

1996. 10.

이 자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입수된 자료  
로써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촉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우가 나진·선봉지구의 개방정책과 전망을  
홍보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el.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Rajin-Sonbong Will Keep Its Door Open To Investors At Any Time

Kim Jong U, Chairman

Committee for Promotion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CPEEC)

---

On behalf of the Committee of External Economic Cooperation (CPEEC)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 would like to extend our warm welcome to foreign guests and overseas Korean compatriots who have come here after a long journey across continents and oceans with deep interest and enthusiasm for investment in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FETZ) as well as to distinguished gues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 are giving us strong support and actively cooperating with us in the development of the FETZ.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deep thanks to UNDP Tumen Secretariat and UNIDO for all their efforts to organize this significant forum.

The Rajin-Sonbong area in the DPRK is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 of the Tumen River area, which is being called "Golden Triangle" by the world. On the basis of correct analysis of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ur country, the position of the Rajin-Sonbong area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and the trend of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decided to develop this area into a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and made it public.

We are planning to develop the Rajin-Sonbong area into a multi-functional free zone as an international transport base, export-oriented industrial area and a center of tourism and financial service. Our development objectives are very ambitious



and therefore require an enormous amount of fund for their realization.

Estimates made by experts show that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of infrastructure in the zone will require billions of dollars. While receiving investment by the state, we are relying on large capital investment from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as well as overseas Korean compatriots as the means to achieve our goal.

Therefore, this are will become a large capital investment market which can absorb an enormous amount of capital. Mutual cooperation is a prerequisite for capital investment, which is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transaction. Success of failure of capital investment depends on joint effort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investor and the host country.

## I. Policy

Following is an outline of the major policies which have been pursued by the DPRK Government for the last four years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FETZ with a view to create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for foreign investors and overseas Korean businessmen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the FETZ.

1. It has endeavored to take practical measures aimed at improving access for foreign investors to the FETZ. A typical example is the introduction of visa-free system for investors coming directly to the zone without passing through any other part of our country.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ystem since the zone has no airport nor border crossing point where investor can come across.

However, our country and China have recently agreed, after some negotiations, on allowing investors to come across the

Wonjong Bridge (a border crossing point between the FETZ and China.) Apart from this, an international helicopter flight will be operated very soon between Rajin and Yanji (China) to be followed by ferry service to the FETZ.

An airport will also be constructed in Sonbong in near future.

As new routes of entry/exit become available to foreign investors, the visa-free system will be enforced more satisfactorily to provide conveniences for their travel to and from the FETZ.

2. Measures have been taken to simplify all formalities related with investment as far as possible. The zone authority has been vested with a great measure of power in relation to foreign investment and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been improved to ensure that all investment-related formalities be undertaken in a timely and convenient way.

A "one-stop" system is now in practice in the FETZ whereby all investment-related formalities are completed inside the FETZ itself.

The zone authority has been given the major powers to deal with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the powers to lease land, screen and approve business applications and invite foreign delegations to the zone. The formalities and procedures related with investment into the Rajin-Sonbong area will be further simplified in keeping with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and increase in foreign investment in the FETZ.

3. We have made all efforts to enable foreign investors to carry out economic activities freely without external restrictions. We have guaranteed investors freedom of choice with regard to methods of business management and operation. We have ensured that regulatory mechanisms be removed such as administrative interference in investors' lawful economic activities so that they can carry out business activities with a sense of security. As a result, there is no restriction as to the method of business

management and operation to be adopted in the zone; one may choose either capitalist market mechanism or socialist method of operation.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law, foreign investors will not be subject to any administrative interference as to their business operation including production, pricing, product sale, materials purchasing, selection of market, etc. As well as its properties invested by them.

With a view to provide businesses with necessary conditions for free operational activities, we have converted the Rajin-Sonbong Zone into an area governed by a special system and order distinct from those applicable in the other parts of the DPRK and are treating joint ventures as tertiary businesses.

Thanks to the above mentioned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this area has become a free zone in the true meaning of the word where investors can undertake business activities free from any non-economic restrictions and interference.

4. Flexible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for businesses by adapting the overall institutional framework and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in the zone in keeping with the specific features of a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We are taking measures aimed at adjusting the pricing and currency circulation systems in the zone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a free zone and establishing a system of smooth distribution between local enterprises and foreign-invested ones through market-mechanism. A pricing and currency circulation system based on market prices and floating exchange rate will enable investors to do business on the principle of free competition and provide them with access to local markets to sell their products and purchase materials.

5. The state is increasing its support with regard to legislation dealing with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Rajin-Sonbong FETZ and investment promotion, training of personnel,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and so on.

Over the past four years, we have drafted and promulgated about 40 laws and regulations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zone and investment promotion through mobilization of experts and other staff on a nationwide scale. Additional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promulgated as may be required by the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the zone.

With a view to develop human resources in a far-sighted way, we are training by ourselves hard-core personnel to manage and operate the zone at national universities and colleges; at the same time, we are also dispatching students and trainees to foreign countries.

On this basis, we are proceeding with the work of establishing local training network in the Rajin-Sonbong area including professional and vocational training. Apart from this, we are pushing ahead with the work of upgrading and improving infrastructure in the zone by mobilizing national investment and construction enterprises.

It is roughly one and half years since we started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in the zone, during which period, the state has invested 150 million Won to improve infrastructure including highway, telecommunication, railway and hotels.

6. We are maintaining the invariable position of mutual cooperation in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for the Rajin-Sonbong FETZ and endeavoring to grant treatment to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s that being granted to bodies corporate of the DPRK and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ormer.

In the FETZ, enterprises will benefit from a low income tax rate (11% lower than in the other parts of the DPRK), longer tax breaks and low wage level. A number of other professional treatments will be granted including fixing property rents and utility fees and fares lower than those prevailing in the neighboring countries. These preferential treatments will be granted in greater measure to priority projects and pioneer investors. Many experts and investors agree that our preferential treatments are more competitive compared to those being granted by the neighboring countries.

We believe that the foregoing policies pur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coupled with the unique geo-political attraction of the Rajin-Sonbong area, will get a great number of foreign investors and overseas Koreans interested in investing in the zone. You will see from such policies and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is firmly determined to push ahea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 II. Prospect

We have already open the door for foreign investors and overseas Korean businessmen to invest in the zone and is going to open it wider by further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therein.

Some people have had a prejudice against our country, talking about so-called "economic closedness". It is well known throughout the world that we have been subjected to constant economic sanctions and blockades imposed by external forces for the past 50 years. Even under such unfavorable external circumstanc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and develop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in the whole course of economic construction.

The reality shows that we have been closed by outside forces rather than closing the door by ourselves as some people say. Opening the door for foreign investors and overseas Korean businessmen to invest in the Rajin-Sonbong FETZ does not mean a new change in policy in our country. We have always kept the door open to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have constantly improved its form and method in keeping with the changing situation.

A typical example was the adoption of the Joint Venture Law in 1980 to keep abreast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was followed by active promotion of joint ventures with foreign countries.

At present,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shows the tendency towards rapid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and further increase in the degre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individual national economies.

In view of such tendency,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ll intensify in a diversified way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world as well as overseas Korean businessmen including joint ventures and bonded processing trade, irrespective of ideology, ideals, political system and existence of diplomatic relation.

The development of the Rajin-Sonbong FETZ was initiated by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who instructed us, during his lifetime, to accelerate its development. In his effort to follow the instruction left by the great leader, the dear leader Comrade Kim Jong Il is giving wise guidance with regard to the development of the zone.

No matter how the situation may change in future, we will continue to vigorously push ahea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ajin-Sonbong FETZ and, by doing so, continue to expand and

develop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The Rajin-Sonbong FETZ is a development project of international significance which reflects the common interests of our country and the rest of the world.

I am sure that you businessmen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its development and make strenuous efforts to make an efficient and successful investment in reply to the aspiration of the peoples for common prosperity in a peaceful world.

The Government of the DPRK will always welcome foreign investors to the Rajin-Sonbong FETZ.

Thank you.

-----  
Pyongyang, October 4 (KCNA) - The tourism in the Rajin-Sonbong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lled a "golden triangle", is promising.

The 120 kilometer long seashore of the Rajin-Sonbong zone which has 8 bays and 10 coves commands an excellent view. The beach is 30 kilometers long and 30 sections of strange cliffs stretch out 40 kilometers. 21 islands, large and small, in harmony with the shore cut a conspicuous figure.

The zone has some lakes, including Lake Sobon, the largest of Korea's natural lakes. These lakes swarming with oyster and some kinds of fishes provide people with good conditions for rest. Among the popular tourist objects are the Sonbong Al Islet Sea Bird Reserve, the Uam Game Reserve, cherry trees on Mt. Uam and other natural monuments of national value and primitive relic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pushing ahead with the work to build the zone into an international tourist resort by using the uniqu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rich tourist resources of the zone.

The Yanbian Xian Tong Group of China, many investors and businessmen of many countries and areas have already signed investment contracts concerning tourism in the zone and are making efforts to carry them into practice.



The Washington times

*Washington and Seoul :*

*An Alliance That Works*

By James T. Laney

1996. 11.

본 자료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11.3)지에  
게재된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의 “원만  
한 한·미관계”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0-6659

정 보 분 석 실

(자료조사담당관실)

## 원만한 한·미 동맹

주로 한국의 보도매체에 바탕을 둔, 최근의 일부 미국언론 보도는 어느 한 동맹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어둡게 묘사했다. 어떤 보도는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정부를 포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기까지 했다.

이것은 난센스 - 위험성이 잠재한 난센스이다. 한·미동맹의 군사력은 그 절대 수준에 있어서나, 규모 외에는 눈길을 끌만한 점이 없는 북한 군사력에 비해서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다. 우리 양국 정부의 대북한 전략은 하나이며 그 어느 측도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기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러한 주장들은 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미국 측의 허약한 결의와 일관성 없는 논리에 주로 비난이 몰리고 있다. 결의에 관해서 말하자면, 서울에서나 워싱턴에서나 북한의 핵계획으로 인해 긴장이 매우 심각하던 1994년 봄에, 클린턴 행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대포대 레이더, 야간 전투능력을 갖춘 아파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몇몇 조치로 주한미군 군사력을 증강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이러한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거나, 아니면 이후의 대한 군사판매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차없이 비판했다. 한·미 연합사령관 개리 렉 장군과 본인이 건의한 이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조치 덕택으로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사상 최고에 달했다.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의 군사력은 대폭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한미군 군사력 증강이 한·미연합 군사력 강화의 주된 요인이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추구하려는 우리의 용의와 군사력을 배치하려는 우리의 준비태세는 '북·미 기본합의서'가 우리의 단호함과 협상을 통해서 생긴 것임을 입증한다.

우리의 대북한 접근방식은 "회유적"이며, 한국정부는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1994년 제네바에서 서명된 '북·미 기

본합의서'는 "남한을 팔아치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 기본 합의서의 관건이 되는 요소, 즉 북한에 일련의 경수로를 건설하자는 제의는 '북·미 기본합의서'가 서명되기 약 두 달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었다. 제네바의 미국측 협상자들은 북한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공약, 즉 북한의 모든 기존 핵계획을 엄격한 국제감시하에 동결하고 마침내 폐쇄한다는 공약을 얻어내기 위해 김대통령의 이 제안을 이용했다. 오늘날, 북한의 핵계획은 여전히 동결상태에 있으며, 지금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플루토늄으로 재처리될 만한, 영변 원자로에서 나온 연료봉의 절반은 서로 협력하는 미국 및 북한 요원들에 의해 안전한 장기 저장소에 투입되었다.

지난 4월 제주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공동 제안한 4자회담 개최안에 관해 말하자면, 이것은 마지못해 하는 한국정부에게 강요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김대통령은 8개월 전에 자신이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원래 한국 측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우리 양국은 4자회담이 북한을 현재의 고립상태로부터 끌어내 우리와 국제사회에 협조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 우리 양국은 이 제안을 명백하게 하고, 이 제안을 수락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각 단계에서 협력해왔다.

미국과 한국은 또한 북한정부가 자신의 진로를 대폭 변경하지 않는 한,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이 붕괴된 이래, 북한 경제는 미국의 '대공황'에 맞먹는 불황을 겪어왔다. 북한의 공장들은 고작해야 약 30 퍼센트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북한 도로 위의 대부분의 자동차나 트럭들은 고장나 있으며, 공공 운송수단은 연료부족으로 겨우겨우 가동되고 있다. 가장 긴박한 문제는 농업경영의 실수, 비료 및 농약 부족, 악천후 등이 겹쳐서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아사지경에 빠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영양실조는 유엔 전문기관 및 적십자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방문객들에 의하여 도처에서 확인되었다.

북한의 견잡을 수 없는 붕괴가 야기할 혼란은 틀림없이 동북아시아의 안정 및 번영에는 물론, 미국의 이해에도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위협성에는 인재·난민의 대량 유입·정치 공백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약화되었지만 군사력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성은 군사적 위협성도 포함하고 있다. 노후화 되었지만 아직 쓸모 있는 북한의 포병대와, 조잡하지만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무력화 되기에 앞서 남한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계획된 공격으로 남한을 유린하고 공산화할 수 있는 위협성은 줄어들었지만 자포자기한 나머지 모종의 무모한 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위협성이 있다.

한·미의 북한 끌어 들이기는 결코 나약한 정책이 아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평양 정권으로 하여금 그 정권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보도록 하고 -- 평양 정권은 굳이 무시하려고 드는 현실이지만 --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대한민국 및 기타 국가들과 협조적으로 교류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한국 및 기타 지역에서, 일부 비판자들은 미국정부가 이러한 끌어 들이기 정책과 강력한 전쟁 억제책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그릇된 이분법이다. 끌어 들이기와 전쟁 억제책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 쪽으로는 협조 유인을 제공하며 다른 한 쪽으로는 대결을 줄이는 유인을 제공한다.

요즘 서울의 분위기는 분노와 우려의 분위기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지난 달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무장 침투원을 보낸 것은 비록 제한된 침투였지만,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이자 적대적 군사행동이었다. 잠입자 및 잠수함 승무원 22명과 북한 간첩들을 체포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8명의 한국민이 사망했다. 남침 북한군의 사망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북한측 위협은 우스꽝스러울 만큼 적반하장 격이지만,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의 분노와 염려를 함께 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은 클린턴 대통령,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유엔군사령부, 그리고 기타 미국측 대변인들의 공식 성명에서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항의를 받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적(사

적)인 메시지들에서도 이러한 항의는 강화되었다. 윈스턴 로드 국무 차관보의 최근의 한국 방문 또한 우리의 공약의 힘을 입증하고, 우리의 동맹의 단결을 강조했다. 우리는 북한이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설득하고 단념시키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쟁 억제책이 실패할 경우 우리는 확고하게 한국 편에 설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의 임무가 어떠한 위협성을 제기했을지라도 그 임무는 실패했으며, 그것도 그 잠수함을 파견한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잠수함의 발견은 북한의 위협에 둔감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주는 암시를 제공했다. 결국, 위협성은 그것이 가장 명백하지 않을 때에 가장 위험하다.

우리의 행동과 언사는 북한의 도발 및 위협도에 맞춰 신중하고 단호해야 한다. 또다시 말하지만, 단호함과 온건함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 선동적인 언사는 쉽고, 감정적으로는 만족을 주지만, 대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지닌 회초리가 크고 치명적이라면 굳이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 금언을 알지 못하는 몇몇 비판자들은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은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단지 자중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군사전략의 목표는 항상,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유엔안보리 이사국이자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며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자 바야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번째 아시아 회원국이 되려하는 한국에게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우리의 군사적인 전쟁억제책은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그 목적을 달성해왔으며, 종전보다도 더욱 강력하다. 북한에 대한 한·미의 발전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접근방식의 목표는 군사적인 전쟁억제력을 끌어 들이기와 협조로써 보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양국이 함께 하고 있는 이해에 대한 위협을 한 층 더 낮추고, 그리고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의 전망을 열려는 데에 있다. 한국의 지도자

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접근방식의 타당성은 최근의 잠수함 사건에 의하여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은 우리가 (북한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